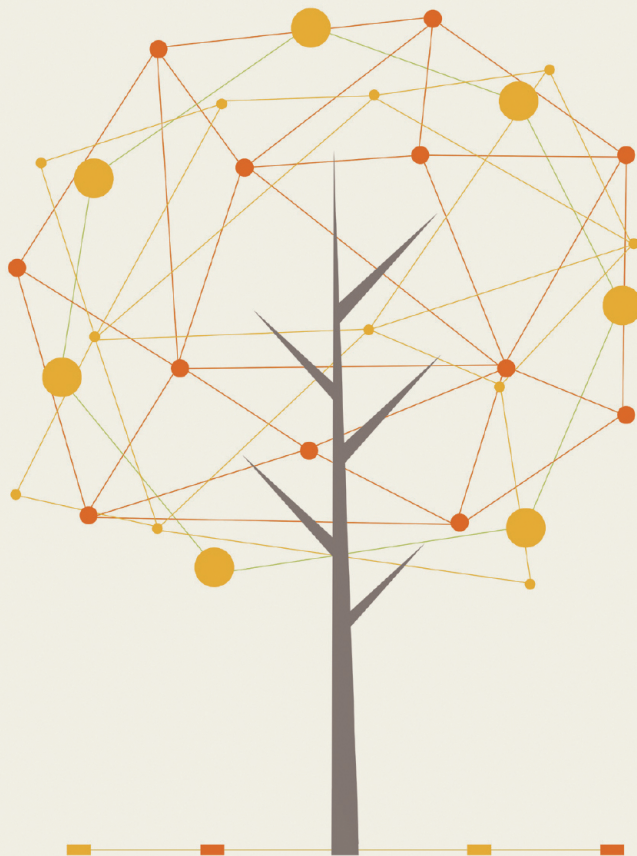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8. 8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8. 8.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제1부 총괄1

제1장 경제여건의 변화와 지역경제 동향 3

제1절 2017년의 국내외 경제 3

1. 세계경제 3

2. 국내경제 4

제2절 2017년 지역경제동향 6

1. 지역경제동향 개관 6

2. 생산동향 7

3. 수출동향 9

4. 고용동향 10

제2장 지역발전정책 추진실적 13

제1절 제2차 지역발전5개년계획의 지역발전정책 13

1.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13

2. 비전 및 추진전략 15

3. 주요 추진시책 17

제2절 지역발전정책 추진실적 20

1. 지역발전정책의 총괄 실적·성과 20

2. 정책 부분별 주요 추진실적·성과 22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예산·평가 체계 33

제1절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및 주요 내용 33

1.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33

2.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절차 34

3.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주요 내용 37

제2절 지역발전사업의 평가체계 39

1. 평가목적 및 방향 39

2. 평가 대상사업 및 평가등급 40

3. 평가체계 및 절차 42

4. 평가결과 및 활용 44

제2부 부문별 시책49

제1장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49
제1절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51
1. 지역간 자율적인 협력체계 구축·강화	51
2. 창조적 마을 만들기	55
3. 지역공동체 활성화	63
제2절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77
1. 생활체감 도시 인프라 정비	77
2. 농어촌 및 취약지역 정주환경 개선	90
3.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실현	102
4. 안전한 지역환경 만들기	113
제3절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119
1.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119
제4절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132
1. 전국 간선도로망 및 대도시권 교통완화를 위한 도로 구축	132
2. 전국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망 구축	146
3. 항만 인프라 개선	153
4. 교통·물류 원활화 지원	159
제2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162
제1절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162
1.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162
제2절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200
1.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200
제3절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205
1. 노후산단 창의·혁신공간 전환	205
2. 입주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정주여건 조성	214
제4절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220
1.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지역 확산	220
2. 지역 R&D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222
3.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244
제5절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252
1. 과학기반 혁신거점지구 조성	252
2. 행복도시를 명품도시로 조성	254
3. 혁신도시를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	260
4. 새만금 기반시설 조기 구축 및 개발 가시화	264
5. 기업도시 활성화로 지역경제 기여	270
6. 국제자유도시 조성지원으로 외자유치 촉진	271

제6절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274
1.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6차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274
2.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286
3. 도농상생 및 귀농·귀어·귀촌을 통한 농어촌 활력 증진	337
제3장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339
제1절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339
1.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339
2.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강화	345
제2절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351
1.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351
제3절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355
1.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355
2. 인문학 진흥 강화	360
제4장 지역 문화 육성, 생태 복원	363
제1절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363
1. 지역 고유자원의 재발견 및 재창조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363
제2절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369
1. 생활문화 및 공동체 지원	369
2.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371
3. 문화소외 및 취약지역 문화접근성 향상	376
제3절 지역 관광산업 육성	377
1.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관광거점 육성	377
2. 창조적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383
3. 생태·역사·문화 콘텐츠 중심의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	387
제4절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	395
1. 도시 생태자원의 복원·확충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395
2. 하천-산림생태 보전·복원으로 융합적 가치 창출	396
3.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경제적 기반 및 환경 개선	399
제5장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	403
제1절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403
1.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403
2. 지역수요를 반영한 주민체감형 건강증진사업 강화	409
제2절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414
1. 수혜자 특성을 고려한 주민지원 시책 확대	414
2.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421

제3절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424
1.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취약지 해소	424

제3부 지역별 시책429

제1장 서울특별시 431

제1절 서울특별시 경제 현황	431
1. 일반 현황	431
2. 산업 현황	432
3. 혁신활동 현황	434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435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36
1. 발전비전	436
2. 추진전략	437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438
1. 지역생활권 활성화	438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40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442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복원	444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446

제2장 부산광역시 447

제1절 부산광역시 경제 현황	447
1. 일반 현황	447
2. 산업 현황	448
3. 혁신활동 현황	450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451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53
1. 발전비전	453
2. 추진전략	454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455
1. 지역생활권 활성화	455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57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459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 복원	460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461

제3장 대구광역시	463
제1절 대구광역시 경제 현황	463
1. 일반 현황	463
2. 산업 현황	464
3. 혁신활동 현황	466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67
1. 발전비전 및 추진배경	467
2. 추진전략	468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469
1. 지역생활권 활성화	469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71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472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473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474
제4장 인천광역시	475
제1절 인천광역시 경제 현황	475
1. 일반 현황	475
2. 산업 현황	476
3. 혁신활동 현황	478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479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80
1. 발전비전	480
2. 추진전략	481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483
1. 지역생활권 활성화	483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85
3.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487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488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489
제5장 광주광역시	490
제1절 광주광역시 경제 현황	490
1. 일반 현황	490
2. 산업 현황	491
3. 혁신활동 현황	493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494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95

1. 발전비전	495
2. 추진전략	496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498
1. 지역생활권 활성화	498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00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01
4. 지역 문화 융성·생태 복원	503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05
제6장 대전광역시	507
제1절 대전광역시 경제 현황	507
1. 일반 현황	507
2. 산업 현황	508
3. 혁신활동 현황	510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11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13
1. 발전비전	513
2. 추진전략	514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15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15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18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20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521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22
제7장 울산광역시	524
제1절 울산광역시 경제 현황	524
1. 일반 현황	524
2. 산업 현황	525
3. 혁신활동 현황	527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28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29
1. 발전비전	529
2. 추진전략	530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31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31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33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35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536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37
제8장 세종특별자치시	539
제1절 세종특별자치시 경제 현황	539
1. 일반 현황	539
2. 산업 현황	540
3. 혁신활동 현황	542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43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44
1. 발전비전	544
2. 추진전략	545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46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46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48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50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551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52
제9장 경기도	553
제1절 경기도 경제 현황	553
1. 일반 현황	553
2. 산업 현황	554
3. 혁신활동 현황	556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57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59
1. 발전비전	559
2. 추진전략	560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62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62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63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65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565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66
제10장 강원도	568
제1절 강원도 경제 현황	568
1. 일반 현황	568
2. 산업 현황	569

3. 혁신활동 현황	571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72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73
1. 발전비전	573
2. 추진전략	574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75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75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77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78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579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80
 제11장 충청북도	 581
제1절 충청북도 경제 현황	581
1. 일반현황	581
2. 지역산업현황	582
3. 혁신활동 현황	584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85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86
1. 발전비전	586
2. 추진전략	587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88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88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90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93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594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95
 제12장 충청남도	 597
제1절 충청남도 경제 현황	597
1. 일반 현황	597
2. 산업 현황	598
3. 혁신활동 현황	600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01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02
1. 발전비전	602
2. 추진전략	603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604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04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06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09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610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11
제13장 전라북도	613
제1절 전라북도 경제 현황	613
1. 일반 현황	613
2. 산업 현황	614
3. 혁신활동 현황	616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17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18
1. 발전비전	618
2. 추진전략	619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620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20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23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25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627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29
제14장 전라남도	631
제1절 전라남도 경제 현황	631
1. 일반 현황	631
2. 산업 현황	632
3. 혁신활동 현황	634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35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36
1. 발전비전	636
2. 추진전략	637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638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38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40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42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644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46
제15장 경상북도	648

제1절 경상북도 경제 현황	648
1. 일반 현황	648
2. 산업 현황	649
3. 혁신활동 현황	651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52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53
1. 발전비전 및 추진배경	653
2. 추진전략	654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656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56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58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59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659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61
제16장 경상남도	663
제1절 경상남도 경제 현황	663
1. 일반 현황	663
2. 산업 현황	664
3. 혁신활동 현황	666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67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68
1. 발전비전 및 추진배경	668
2. 추진전략	669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670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70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72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74
4.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675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76
제17장 제주특별자치도	677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현황	677
1. 일반 현황	677
2. 산업 현황	678
3. 혁신활동 현황	680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81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83

1. 발전비전 및 추진배경	683
2. 추진전략	684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685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85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89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91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692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94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 효과697

제1장 공공기관 이전 효과	699
제1절 개관	699
제2절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효과	700
1. 인구·고용 증대효과	701
2. 산업·경제적 성장효과	703
3. 국내외 교류촉진효과	706
4. 지역사회 기여효과	707
제3절 평가와 방향	708
제2장 부산 혁신도시	710
제1절 개관	710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11
1. 추진 현황	711
2. 특기사항	711
3. 애로 및 건의사항	712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712
1. 추진 현황	712
2. 특기사항	712
3. 애로 및 건의사항	713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713
1. 추진 현황	713
2. 특기사항	714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714
1. 추진 현황	714
2. 특기사항	715

제6절 향후 추진계획	715
제3장 대구 혁신도시	716
제1절 개관	716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17
1. 추진 현황	717
2. 특기사항	717
3. 애로 및 건의사항	717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718
1. 추진 현황	718
2. 특기사항	718
3. 애로 및 건의사항	718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719
1. 추진 현황	719
2. 특기사항	719
3. 애로 및 건의사항	720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720
1. 추진 현황	720
2. 특기사항	720
3. 애로 및 건의사항	721
제6절 향후 추진계획	721
제4장 광주/전남 혁신도시	722
제1절 개관	722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23
1. 추진 현황	723
2. 특기사항	723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724
1. 추진 현황	724
2. 특기사항	724
3. 애로 및 건의사항	724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725
1. 추진 현황	725
2. 특기사항	725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726
1. 추진 현황	726
2. 특기사항	727

제6절 향후 추진계획	727
제5장 울산 혁신도시	728
제1절 개관	728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28
1. 추진 현황	728
2. 특기사항	729
3. 애로 및 건의사항	729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730
1. 추진 현황	730
2. 특기사항	730
3. 애로 및 건의사항	730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731
1. 추진 현황	731
2. 특기사항	731
3. 애로 및 건의사항	731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732
1. 추진 현황	732
2. 특기사항	732
제6절 향후 추진계획	733
제6장 강원 혁신도시	734
제1절 개관	734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35
1. 추진 현황	735
2. 특기사항	735
3. 애로 및 건의사항	735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736
1. 추진 현황	736
2. 특기사항	736
3. 애로 및 건의사항	736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737
1. 추진 현황	737
2. 특기사항	737
3. 애로 및 건의사항	738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738
1. 추진 현황	738
2. 특기사항	739

3. 애로 및 건의사항	739
제6절 향후 추진계획	739
제7장 충남 이전기관	740
제1절 개관	740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40
1. 추진 현황	740
2. 특기사항	741
3. 애로 및 건의사항	741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742
1. 추진 현황	742
2. 특기사항	742
3. 애로 및 건의사항	742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743
1. 추진 현황	743
2. 특기사항	743
3. 애로 및 건의사항	744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744
1. 추진 현황	744
2. 특기사항	745
제6절 향후 추진계획	745
제8장 충북 혁신도시	746
제1절 개관	746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46
1. 추진 현황	746
2. 특기사항	747
3. 애로 및 향후계획	747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748
1. 추진 현황	748
2. 특기사항	748
3. 애로 및 향후계획	748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749
1. 추진 현황	749
2. 특기사항	749
3. 애로 및 건의사항	750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750
1. 추진 현황	750

2. 특기사항	750
제6절 향후 추진계획	751
제9장 전북 혁신도시	752
제1절 개관	752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52
1. 추진 현황	752
2. 특기사항	753
3. 애로 및 건의사항	753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754
1. 추진 현황	754
2. 특기사항	754
3. 애로 및 건의사항	754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755
1. 추진 현황	755
2. 특기사항	755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756
1. 추진 현황	756
2. 특기사항	756
제6절 향후 추진계획	757
제10장 경북 혁신도시	758
제1절 개관	758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59
1. 추진 현황	759
2. 특기사항	759
3. 애로 및 건의사항	759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760
1. 추진 현황	760
2. 특기사항	760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761
1. 추진 현황	761
2. 특기사항	761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762
1. 추진 현황	762
2. 특기사항	762
제6절 향후 추진계획	762

제11장 경남 혁신도시	764
제1절 개관	764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65
1. 추진 현황	765
2. 특기사항	765
3. 애로 및 건의사항	765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766
1. 추진 현황	766
2. 특기사항	766
3. 애로 및 건의사항	767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767
1. 추진 현황	767
2. 특기사항	768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768
1. 추진 현황	768
2. 특기사항	769
3. 애로 및 건의사항	769
제6절 향후 추진계획	769
 제12장 제주 혁신도시	 770
제1절 개관	770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771
1. 추진 현황	771
2. 특기사항	771
3. 애로 및 건의사항	771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772
1. 추진 현황	772
2. 특기사항	772
3. 애로 및 건의사항	772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773
1. 추진 현황	773
2. 애로 및 건의사항	773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774
1. 추진 현황	774
2. 특기사항	775
3. 애로 및 건의사항	775
제6절 향후 추진계획	775

표 목차

제1부 총 괄

<표 1-1-1> 주요 세계 경제지표.....	3
<표 1-1-2> 주요 국내 경제지표.....	5
<표 1-1-3> 지역별 생산동향.....	7
<표 1-1-4> 지역 내 주요 제조업종별 2017년 생산동향.....	8
<표 1-1-5> 지역별 수출동향.....	9
<표 1-1-6> 지역 주요 품목별 2017년 수출.....	10
<표 1-1-7> 지역별 고용동향(취업자).....	11
<표 1-1-8> 지역 산업별 2017년 취업자.....	12
<표 1-2-1>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14
<표 1-2-2> 2000년대 이후 지역발전정책 비교.....	14
<표 1-2-3> 주요 추진시책(6대분야 17대 추진과제).....	17
<표 1-2-4>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5대분야 - 20개 실천과제’	22
<표 1-2-5>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분야의 주요 성과(2017년 실적).....	23
<표 1-2-6>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분야의 주요 성과(2017년 실적)·	24
<표 1-2-7>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분야의 주요 성과(2017년 실적).....	25
<표 1-2-8> ‘지역문화 육성, 생태복원’ 분야의 주요 성과(2017년 실적).....	26
<표 1-2-9>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의 주요 성과(2017년 실적).....	27
<표 1-2-10>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2017년 선정결과(35개).....	29
<표 1-2-11> 새뜰마을사업의 대상지의 신규 선정결과(2017년).....	31
<표 1-2-12> 2015~2017년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선정 현황.....	32
<표 1-3-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전)와 지역발전특별회계(현재)의 편성체계 비교·	33
<표 1-3-2> 포괄보조사업 지원 대상.....	35
<표 1-3-3>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37
<표 1-3-4>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계정별).....	38
<표 1-3-5>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분야별).....	38
<표 1-3-6> 2017년 지역사업 평가제도의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40
<표 1-3-7> 경제계정 평가대상 - 부처별 사업수 및 예산.....	41
<표 1-3-8> 생활계정 평가대상.....	41
<표 1-3-9> 생활계정 평가 결과.....	46
<표 1-3-10> 생활계정 시도별 포괄보조사업 최종평가 결과 (단위: 개).....	47

제2부 부문별 시책

<표 2-1-1>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52
<표 2-1-2>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현황.....	52
<표 2-1-3>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연도별 지원 시·군 현황.....	53
<표 2-1-4> 성장촉진지역 지정 현황(2014년 9월 25일 기준).....	56
<표 2-1-5> 공모사업개요	57
<표 2-1-6> 주민만족도.....	58
<표 2-1-7>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지역 현황.....	58
<표 2-1-8> 2017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실적.....	60
<표 2-1-9> 2018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	60
<표 2-1-10> 연도별 국비지원 현황 및 2017년 신규사업 예산 내역.....	61
<표 2-1-11> 2017년 신규 선정사업 현황(28개).....	61
<표 2-1-12>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현황.....	64
<표 2-1-13> 농촌공동체회사 유형	64
<표 2-1-14> 농촌 현장포럼 추진 마을 수	66
<표 2-1-15> 추진성과 성과.....	70
<표 2-1-16> 연도별 유형별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수.....	71
<표 2-1-17>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 경제적 효과(한국수산물 수산정책연구소, 2016)...	
<표 2-1-18>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72
<표 2-1-19> 마을기업 현황.....	75
<표 2-1-20>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유형별 지원 현황.....	78
<표 2-1-21>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현황.....	79
<표 2-1-22> 재정비촉진지구 현황(80개 지구).....	80
<표 2-1-23> 입체화사업 추진 현황.....	81
<표 2-1-24> 최근 4년간 추진성과.....	82
<표 2-1-25> 연도별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투자현황(국고).....	83
<표 2-1-26> 지역별 광역상수도 공급현황.....	84
<표 2-1-27> 연도별 마스터플랜 수립 개소.....	85
<표 2-1-28> 연계사업 추진성과.....	86
<표 2-1-29> 지자체 한옥공공건축물 지원 현황.....	88
<표 2-1-30> 저장버스 도입보조 추진성과(2014~2017년).....	89
<표 2-1-31>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추진성과(2014~2017년).....	89
<표 2-1-32> 유통구조 비교(LPG용기 vs LPG소형저장탱크).....	90
<표 2-1-33> 2013년~2016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실적.....	91
<표 2-1-34> 용자 지원 절차 및 사업규모/지원 조건	92
<표 2-1-35> 도시가스 보급 추이.....	93
<표 2-1-36> 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현황.....	94

〈표 2-1-37〉 도·농간 상수도 보급률 비교.....	95
〈표 2-1-38〉 점경권 발전지원 사업 추진현황.....	97
〈표 2-1-39〉 전국의 연안여객선 기항지 현황.....	97
〈표 2-1-40〉 최근 6년간 기항지 점안시설 개선사업 현황.....	98
〈표 2-1-41〉 연도별 화장물 변동 추이.....	99
〈표 2-1-4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현황.....	101
〈표 2-1-43〉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현황.....	102
〈표 2-1-44〉 가축분뇨자원화율 현황.....	103
〈표 2-1-45〉 연안정비사업 추진.....	104
〈표 2-1-46〉 방치선박 정리 추진실적(2013~2017년).....	105
〈표 2-1-47〉 하수도 보급률 현황.....	106
〈표 2-1-48〉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2017).....	106
〈표 2-1-49〉 하수도 보급률 현황.....	108
〈표 2-1-50〉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2017).....	108
〈표 2-1-51〉 하수도 보급률 현황.....	109
〈표 2-1-52〉 클린하우스 설치현황(06~'17년).....	110
〈표 2-1-53〉 도·농간 상수도 보급률 비교.....	112
〈표 2-1-54〉 지방도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13
〈표 2-1-55〉 도시침수 대응 하수도인프라 확충 사업비 계획.....	114
〈표 2-1-56〉 고령인구 비중.....	115
〈표 2-1-57〉 농업안전보건센터 찾아가는 무료보건서비스 확대.....	115
〈표 2-1-58〉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현황.....	116
〈표 2-1-59〉 최근 3년간 사업효과.....	117
〈표 2-1-60〉 최근 3년간 사업효과.....	118
〈표 2-1-61〉 주민만족도.....	120
〈표 2-1-62〉 연도별 예산 지원액.....	122
〈표 2-1-63〉 도시활력증진지역 현황(143개 시·군·구).....	122
〈표 2-1-64〉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현황(2017년도).....	125
〈표 2-1-65〉 광역도로 현황 및 소요사업비(총68개).....	132
〈표 2-1-66〉 광역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33
〈표 2-1-67〉 국가지원지방도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34
〈표 2-1-68〉 제주도 구국도 건설 연차별 투자비 현황.....	134
〈표 2-1-69〉 광주순환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35
〈표 2-1-70〉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36
〈표 2-1-71〉 거제-마산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37
〈표 2-1-72〉 부산순환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37
〈표 2-1-73〉 압해-암태, 화양-적금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38
〈표 2-1-74〉 월전-중군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38

<표 2-1-75>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추진현황.....	139
<표 2-1-76> 춘천(동홍천)-양양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40
<표 2-1-77>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40
<표 2-1-78> 함양-울산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41
<표 2-1-79> 화양-소라 국가지원지방도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41
<표 2-1-80> 교통혼잡비용 추이.....	142
<표 2-1-81> 대도시권 혼잡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42
<표 2-1-82> 구 특정지역 지정현황.....	144
<표 2-1-83> 안성-구리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45
<표 2-1-84>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45
<표 2-1-85> 광역철도 제도개선 주요내용.....	147
<표 2-1-86> 광역철도사업현황.....	147
<표 2-1-87> 원주-강릉 철도건설 예산투입 현황.....	151
<표 2-1-88> 도시철도 개통현황.....	152
<표 2-1-89> 추진성과 성과.....	161
<표 2-1-90> 추진성과 성과.....	161
<표 2-2-1>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163
<표 2-2-2> 추진성과.....	165
<표 2-2-3> 수혜기업 지원현황.....	168
<표 2-2-4> 추진성과.....	168
<표 2-2-5> 추진성과 성과.....	169
<표 2-2-6> 시·도 경제협력권산업 선정결과(17개).....	170
<표 2-2-7> 세부사업 유형별 추진내용.....	171
<표 2-2-8> 내역사업 유형별 추진방안.....	173
<표 2-2-9> 2013~2015년 SW융합기술고도화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현황.....	175
<표 2-2-10>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의 네트워크 구축현황.....	176
<표 2-2-11> 추진성과 성과.....	182
<표 2-2-12> 연도별 선박관리척수.....	183
<표 2-2-13> 지역동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186
<표 2-2-14> 중소기업청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정책 변천과정.....	186
<표 2-2-15> 창업보육센터 운영 주체별 지정 현황.....	188
<표 2-2-16> 창업보육센터 지역별 지정 현황.....	188
<표 2-2-17> 창업보육센터 계속입주기업 운영성과.....	189
<표 2-2-18>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 내역사업주요 내용.....	193
<표 2-2-19> 중앙투자사업 2단계 심사 결과 주요 내용.....	198
<표 2-2-20> 일자리 창출 효과.....	199
<표 2-2-21>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200
<표 2-2-22> 2017년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지원 내용.....	203

<표 2-2-23> 2010~2017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신고기준).....	203
<표 2-2-24> 전국 산학연협의체 현황(Mini Cluster : MC).....	206
<표 2-2-25> R&BD 공동 협력과제 지원현황.....	206
<표 2-2-26> 기업성장지원센터 지원현황.....	206
<표 2-2-27> 연도별 예산 지원액.....	208
<표 2-2-28> 전국 노후산업단지 현황 (준공 후 20년 경과, 2017년말 기준).....	210
<표 2-2-29> 노후산단 재생사업 지구별 현황.....	211
<표 2-2-30> 산업단지 재생사업 절차도.....	212
<표 2-2-31>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사업 추진 현황.....	215
<표 2-2-32> 종합 비즈니스센터 건립 표준모델.....	216
<표 2-2-33>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	217
<표 2-2-34>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217
<표 2-2-35>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연도별 지원 현황.....	218
<표 2-2-36>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연차별 사업비(국고) 현황.....	219
<표 2-2-37>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분야별 지원 예산 현황.....	222
<표 2-2-38>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운영 현황.....	223
<표 2-2-39>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국토교통 R&D 우수성과 선정 현황(2014~2017년).....	224
<표 2-2-40> 증입자가속기 기술개발 지원현황(2014~2018년).....	225
<표 2-2-41> 증입자가속기 기술개발 주요 성과 (논문 및 특허).....	225
<표 2-2-42> 대단위다목적 전자선실증연구센터 지원현황(2014~2018년).....	228
<표 2-2-43> 성과지표 달성 현황	229
<표 2-2-44> 추진성과.....	230
<표 2-2-45> 성과지표 달성 현황.....	232
<표 2-2-46> 추진성과.....	232
<표 2-2-47> 성과지표 달성 현황.....	234
<표 2-2-48> 지역별 전략사업.....	235
<표 2-2-49> 논문 실적 우수성 관련 지표별 실적(2017년 기준).....	236
<표 2-2-50>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240
<표 2-2-51> 연도별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예산 추이.....	241
<표 2-2-52> 연구개발특구 주요 통계.....	241
<표 2-2-53> 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의 세부내용.....	242
<표 2-2-54>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 지원 사업 주요내용.....	243
<표 2-2-55> 대학 TMC (TLD) 연도별 기술이전 실적.....	245
<표 2-2-56> 대학 TMC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 실적.....	245
<표 2-2-57>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실적.....	246
<표 2-2-58>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 현황.....	249
<표 2-2-59> 연구개발지원단 지원규모.....	251

<표 2-2-60> 연구개발지원단 주요 기능별 성과(2017년).....	251
<표 2-2-61> 행복도시 광역도로 건설사업 성과.....	255
<표 2-2-62> 추진성과.....	255
<표 2-2-63> 추진성과.....	256
<표 2-2-64>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261
<표 2-2-65> 시·도별 이전기관 배치결과(전체 153개 기관).....	261
<표 2-2-66> 혁신도시 입지선정현황.....	262
<표 2-2-67>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추진성과.....	266
<표 2-2-68>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연차별 투자비.....	266
<표 2-2-69>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268
<표 2-2-70> 새만금 신항만 개발 현황.....	268
<표 2-2-71> 최근 3년간 지역 기여도.....	270
<표 2-2-72>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 프로젝트 추진현황 사업별 추진 실적.....	273
<표 2-2-73> 농식품 ICT 결합형 모델.....	274
<표 2-2-74> 2016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주요 추진 성과.....	276
<표 2-2-75> 농촌관광 방문객 현황.....	279
<표 2-2-76> 농촌축제지원 현황.....	279
<표 2-2-77> 연도별 예산 지원액(제주포함).....	280
<표 2-2-78> 연도별 예산 지원액.....	281
<표 2-2-79> 자연휴양림 이용객 추이 (2008~2017년).....	281
<표 2-2-80> 치유의 숲 이용객 추이 (2009~2016년).....	283
<표 2-2-81> 추진성과 성과.....	286
<표 2-2-82>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성과.....	287
<표 2-2-83> 과실전운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성과.....	288
<표 2-2-84>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추진성과.....	289
<표 2-2-85>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추진 현황.....	290
<표 2-2-86>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추진성과.....	291
<표 2-2-87> 농업기반정비사업 내역사업별 주요내용.....	292
<표 2-2-88>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성과.....	293
<표 2-2-89> 친환경농업지구 신규조성 현황.....	294
<표 2-2-90>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신규조성 현황.....	295
<표 2-2-91> 인센티브 지원 현황.....	295
<표 2-2-92> 임대농기계 이용률 현황.....	296
<표 2-2-93>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현황.....	298
<표 2-2-94>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추진성과.....	300
<표 2-2-95> 지역전략식품산업 사업단 매출액 조사결과.....	301
<표 2-2-96>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 지원현황.....	304
<표 2-2-97> 2017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주요 추진 성과.....	304

〈표 2-2-98〉 제주지역 국가어항 기반 조성 실적.....	305
〈표 2-2-99〉 연도별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 실적.....	305
〈표 2-2-100〉 수산자원조성 지역 단위노력당 어획량(CPUE).....	306
〈표 2-2-101〉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연도별 국고 지원현황.....	307
〈표 2-2-102〉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연도별 국고 지원현황.....	308
〈표 2-2-103〉 수산어업행정지원 실적.....	309
〈표 2-2-104〉 어업인교육훈련(제주) 지원실적.....	310
〈표 2-2-105〉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사업의 주요 성과.....	310
〈표 2-2-106〉 2017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사업 추진실적.....	314
〈표 2-2-107〉 지역별 2017년 사업예산.....	318
〈표 2-2-108〉 2017년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 현황.....	322
〈표 2-2-109〉 2017년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	323
〈표 2-2-110〉 2017년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 예산 및 연구기반 구축 건수.....	325
〈표 2-2-111〉 2017년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주요 성과.....	325
〈표 2-2-112〉 2016년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 성과분석.....	326
〈표 2-2-113〉 목재문화체험장 이용객 (2014~2017년).....	327
〈표 2-2-114〉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현황 (2014~2017년).....	327
〈표 2-2-115〉 2018년 입도시설 추진계획.....	329
〈표 2-2-116〉 연안정비사업 추진(지자체 보조).....	331
〈표 2-2-117〉 최근 5년간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원 예산 현황(국비기준).....	332
〈표 2-2-118〉 연도별 예산 지원액.....	333
〈표 2-2-119〉 사업시행체계.....	333
〈표 2-2-120〉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실적(2014~2017년).....	334
〈표 2-2-121〉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에처리 실적(2014~2017년).....	334
〈표 2-2-122〉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현황(2014~2017년).....	335
〈표 2-2-123〉 연도별 예산 지원액(제주포함).....	335
〈표 2-2-124〉 연도별 예산 지원액.....	337
〈표 2-2-125〉 전국 로컬푸드직매장 운영현황.....	338
〈표 2-3-1〉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주요성과.....	340
〈표 2-3-2〉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지원 현황.....	340
〈표 2-3-3〉 BK21 플러스 사업 지원 현황.....	341
〈표 2-3-4〉 BK21 플러스 평가구조 개편.....	341
〈표 2-3-5〉 BK21 플러스 참여인력 연구역량 향상.....	342
〈표 2-3-6〉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한 지방대학원생의 취업률.....	342
〈표 2-3-7〉 BK21 플러스 사업 참여 중인 지방 대학원생의 만족도 조사 결과.....	342
〈표 2-3-8〉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 특성화분야 여건 개선 현황.....	344
〈표 2-3-9〉 NASEL을 활용한 교수 학습 역량 진단 (교육개발원 측정).....	344
〈표 2-3-10〉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지원 현황.....	345

<표 2-3-11> 1기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4년제) 주요 성과.....	345
<표 2-3-12> 2기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주요 성과.....	346
<표 2-3-13> 2기 1차년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역 간 협업 우수사례.....	346
<표 2-3-14> 2016년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주요성과.....	347
<표 2-3-15> 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주요성과.....	348
<표 2-3-16>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지원 현황.....	349
<표 2-3-17> 2014년도 ACE 선정 대학 대학생 핵심역량 향상도(K-CESA).....	350
<표 2-3-18> ACE 사업 참여 대학 학생들의 교수와의 교류에 대한 질적 만족도.....	350
<표 2-3-19> 학교기업 지원사업 지원 현황.....	352
<표 2-3-20> 학교기업 매출액 및 현장실습 학생 수 현황.....	353
<표 2-3-21>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연구인력양성 현황.....	354
<표 2-3-22>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주요성과.....	354
<표 2-3-23>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355
<표 2-3-24> 지역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축 자치단체 수.....	357
<표 2-3-25>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	357
<표 2-3-26>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 사업 추진 경과.....	359
<표 2-3-27>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전환내용.....	359
<표 2-3-28>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전환 내용.....	359
<표 2-3-29>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 사업 성과.....	360
<표 2-3-30>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 성과.....	360
<표 2-3-31> 대학의 평생교육지원체제 사업 성과.....	360
<표 2-3-32> 연도별 인문학대중화 세부사업별 지원현황.....	361
<표 2-3-33> 연도별 인문사회분야 성과확산을 위한 일반시민 참여자 수 현황.....	362
<표 2-4-1>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주요시설.....	365
<표 2-4-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지원 현황.....	367
<표 2-4-3> 2017년 국제영화제 현황.....	368
<표 2-4-4> 2017년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지원 현황.....	369
<표 2-4-5> 공공 스포츠클럽 공모요건.....	374
<표 2-4-6> 클럽운영과정.....	374
<표 2-4-7> 생활체육 광장 운영장소 : 전국 385개소.....	375
<표 2-4-8> 생활체육 광장 연도별 실적.....	375
<표 2-4-9> 연도별 작은영화관 지원 현황.....	376
<표 2-4-10> 산업관광 육성 사업 지원 규모.....	377
<표 2-4-11> 박람회장 방문객 및 수익.....	380
<표 2-4-12> 연도별 기항지 크루즈 관광객 입항 현황.....	381
<표 2-4-13> 관광두레 조성사업 지원 현황(2017.12월 현재).....	384
<표 2-4-14> 최근 5년간 해안누리길 활성화 사업 지원 현황(국비기준).....	386
<표 2-4-15> 연차별 투자금액 현황(국비기준).....	386

<표 2-4-16> 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 실적.....	392
<표 2-4-17> 생태하천복원 조성사업 추진성과.....	396
<표 2-4-18> 국가하천정비사업 투자현황.....	397
<표 2-4-19> 지방하천정비사업 투자현황.....	398
<표 2-4-20> 경관직불보전제 연차별 사업추진 내역.....	399
<표 2-4-21>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한 지역축제 등 방문객 현황.....	399
<표 2-4-22> 방문객 현황.....	400
<표 2-4-23> 국가농업유산지정 지정 현황.....	400
<표 2-4-24> 생태관광지역 지정 현황.....	401
<표 2-4-25> 추진성과.....	402
<표 2-5-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내용.....	404
<표 2-5-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지원 추진성과.....	406
<표 2-5-3> 연도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실적.....	407
<표 2-5-4> 2018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410
<표 2-5-5>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연도별 추이.....	413
<표 2-5-6>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시설 수, 이용아동 수 및 지원 예산.....	416
<표 2-5-7>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내용.....	417
<표 2-5-8> 연령별 이용아동 현황('17.12월 말 기준).....	417
<표 2-5-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요.....	420
<표 2-5-10>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17년 12월 31일 기준).....	421
<표 2-5-11> 2018년도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지원현황.....	421
<표 2-5-1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도서비스 운영 실적(2013~2017).....	423
<표 2-5-13> 예산 투입 내역(2012~2017).....	423
<표 2-5-14> 연도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현황.....	425
<표 2-5-15> 연도별 의료취약지 사업 선정 및 지원 현황.....	427
<표 2-5-16> 연도별 분만취약지 사업 선정 및 지원 현황.....	428

제3부 지역별 시책

<표 3-1-1> 서울특별시 경제 일반현황.....	431
<표 3-1-2> 서울특별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32
<표 3-1-3> 서울특별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33
<표 3-1-4> 서울특별시 혁신활동 현황.....	434
<표 3-2-1> 부산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447
<표 3-2-2> 부산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48
<표 3-2-3> 부산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49
<표 3-2-4> 부산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450
<표 3-3-1> 대구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463

〈표 3-3-2〉 대구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64
〈표 3-3-3〉 대구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65
〈표 3-3-4〉 대구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466
〈표 3-4-1〉 인천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475
〈표 3-4-2〉 인천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76
〈표 3-4-3〉 인천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77
〈표 3-4-4〉 인천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478
〈표 3-5-1〉 광주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490
〈표 3-5-2〉 광주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91
〈표 3-5-3〉 광주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92
〈표 3-5-4〉 광주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493
〈표 3-6-1〉 대전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507
〈표 3-6-2〉 대전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08
〈표 3-6-3〉 대전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09
〈표 3-6-4〉 대전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510
〈표 3-7-1〉 울산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524
〈표 3-7-2〉 울산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25
〈표 3-7-3〉 울산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26
〈표 3-7-4〉 울산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527
〈표 3-8-1〉 세종특별자치시 경제 일반현황.....	539
〈표 3-8-2〉 세종특별자치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40
〈표 3-8-3〉 세종특별자치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41
〈표 3-8-4〉 세종특별자치시 혁신활동 현황.....	542
〈표 3-9-1〉 경기도 경제 일반현황.....	553
〈표 3-9-2〉 경기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54
〈표 3-9-3〉 경기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55
〈표 3-9-4〉 경기도 혁신활동 현황.....	556
〈표 3-10-1〉 강원도 경제 일반현황.....	568
〈표 3-10-2〉 강원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69
〈표 3-10-3〉 강원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70
〈표 3-10-4〉 강원도 혁신활동 현황.....	571
〈표 3-11-1〉 충청북도 경제 일반현황.....	581
〈표 3-11-2〉 충청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82
〈표 3-11-3〉 충청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83
〈표 3-11-4〉 충청북도 혁신활동 현황.....	584
〈표 3-11-5〉 선도사업 연계·협력 프로젝트 현황 및 성과(2017 신규).....	589
〈표 3-12-1〉 충청남도 경제 일반현황.....	597
〈표 3-12-2〉 충청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98

<표 3-12-3> 충청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99
<표 3-12-4> 충청남도 혁신활동 현황.....	600
<표 3-13-1> 전라북도 경제 일반현황.....	613
<표 3-13-2> 전라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14
<표 3-13-3> 전라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15
<표 3-13-4> 전라북도 혁신활동 현황.....	616
<표 3-14-1> 전라남도 경제 일반현황.....	631
<표 3-14-2> 전라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32
<표 3-14-3> 전라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33
<표 3-14-4> 전라남도 혁신활동 현황.....	634
<표 3-15-1> 경상북도 경제 일반현황.....	648
<표 3-15-2> 경상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49
<표 3-15-3> 경상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50
<표 3-15-4> 경상북도 혁신활동 현황.....	651
<표 3-16-1> 경상남도 경제 일반현황.....	663
<표 3-16-2> 경상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64
<표 3-16-3> 경상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65
<표 3-16-4> 경상남도 혁신활동 현황.....	666
<표 3-17-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일반현황.....	677
<표 3-17-2> 제주특별자치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78
<표 3-17-3> 제주특별자치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79
<표 3-17-4> 제주특별자치도 혁신활동 현황.....	680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표 4-1-1> 광역지자체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 및 직원 수.....	700
<표 4-1-2> 이전 공공기관 직원 수 현지 정착자 수 추이.....	701
<표 4-1-3>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급별 현지 채용자 수 추이	702
<표 4-1-4>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별 지방세 납부 현황.....	704
<표 4-1-5> 이전 공공기관의 유관기관 지역 내 유치 건수.....	705
<표 4-1-6>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산업 협력 건수.....	706
<표 4-1-7> 이전 공공기관의 국내외 교류사업 유형 및 성과.....	707
<표 4-2-1> 부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710
<표 4-2-2> 부산 혁신도시 일자리 창출 현황.....	712
<표 4-2-3> 부산 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현황.....	713
<표 4-2-4> 부산 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714
<표 4-3-1> 대구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716
<표 4-3-2> 대구혁신도시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717

<표 4-3-3> 대구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 현황.....	719
<표 4-3-4> 대구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720
<표 4-4-1> 광주/전남 혁신활동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722
<표 4-4-2> 광주/전남 혁신활동도시 일자리 창출 현황.....	723
<표 4-4-3> 광주/전남 혁신활동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현황.....	725
<표 4-4-4> 광주/전남 혁신활동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726
<표 4-5-1> 울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728
<표 4-5-2> 울산혁신도시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729
<표 4-5-3> 울산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 현황.....	730
<표 4-5-4> 울산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732
<표 4-6-1> 강원 혁신활동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734
<표 4-6-2> 강원 혁신활동도시 일자리 창출 현황.....	736
<표 4-6-3> 강원 혁신활동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현황.....	737
<표 4-6-4> 강원 혁신활동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738
<표 4-7-1> 충남 이전공공기관 현황	740
<표 4-7-2> 충남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762
<표 4-7-3> 충남 지역혁신역량 제고 현황.....	743
<표 4-7-4> 충남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744
<표 4-8-1> 충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746
<표 4-8-2> 충북혁신도시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747
<표 4-8-3> 충북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 현황.....	748
<표 4-8-4> 충북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749
<표 4-9-1>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752
<표 4-9-2> 전북혁신도시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753
<표 4-9-3> 전북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 현황.....	755
<표 4-9-4> 전북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756
<표 4-10-1> 경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758
<표 4-10-2> 경북혁신도시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759
<표 4-10-3> 경북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제고 현황.....	760
<표 4-10-4> 경북혁신도시 국내외 교류 현황.....	761
<표 4-11-1> 경남 혁신활동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764
<표 4-11-2> 경남 혁신활동도시 일자리 창출 현황.....	766
<표 4-11-3> 경남 혁신활동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현황.....	767
<표 4-11-4> 경남 혁신활동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768
<표 4-12-1> 제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770
<표 4-12-2> 제주 혁신활동도시 일자리 창출 현황.....	771
<표 4-12-3> 제주 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현황.....	773
<표 4-12-4> 제주 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774

그림 목차

제1부 총괄

<그림 1-2-1> 지역발전정책(HOPE)의 비전과 추진전략.....	16
<그림 1-2-2> 2단계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의 중점 추진방향 및 과제.....	19
<그림 1-3-1>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예산 편성 절차(2017년 기준).....	34
<그림 1-3-2> 부처편성사업 예산편성 절차.....	36
<그림 1-3-3> 지역발전사업 평가체계.....	42

제2부 부문별 시책

<그림 2-1-1> 농촌형 교통모델 개념도.....	54
<그림 2-1-2> 마을사업 추진 체계.....	66
<그림 2-1-3> (2017-2021)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16.11.21)).....	70
<그림 2-1-4> 전국 슬레이트 용도별 현황 및 주택등록 현황('13.12월).....	95
<그림 2-1-5> 사업추진절차.....	111
<그림 2-1-6>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개요.....	120
<그림 2-1-7>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현황(68곳).....	124
<그림 2-1-8>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선도.....	151
<그림 2-2-1> 지역산업육성정책 추이.....	163
<그림 2-2-2> 지역특성산업육성(기술개발) 추진체계.....	165
<그림 2-2-3> 지역특성산업육성(비R&D) 추진체계.....	167
<그림 2-2-4> 세부사업 구성 및 지원대상(비즈니스협력형).....	171
<그림 2-2-5> 세부사업 구성 및 지원대상(경제협력형).....	172
<그림 2-2-6> 신산업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 사업 기획보고서 중.....	174
<그림 2-2-7> SW융합기술지원센터 조감도 및 층별 활용계획.....	174
<그림 2-2-8> 2016년도 SW융합기술고도화 기반조성 사업 주요성과현황.....	175
<그림 2-2-9> 지역소프트웨어산업 발전기여도 및 파급효과.....	177
<그림 2-2-10> 창업인프라 사업 프로그램.....	189
<그림 2-2-11>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추진체계.....	191
<그림 2-2-12>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추진체계.....	192
<그림 2-2-13>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추진체계.....	194
<그림 2-2-14>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 추진체계.....	197
<그림 2-2-15> 지방이전투자 지원과 지방 신·증설투자 지원 비중.....	201
<그림 2-2-16> 수도권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지원실적 비중.....	202

<그림 2-2-17>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현황.....	220
<그림 2-2-18> 중입자가속기구축지원사업 주요 성과 (장치 및 시설).....	226
<그림 2-2-19> 대단위다목적전자선실증연구센터 주요 성과(2017년).....	228
<그림 2-2-20> 사업 추진체계.....	229
<그림 2-2-21> 사업 추진체계.....	231
<그림 2-2-22> 사업 추진체계.....	234
<그림 2-2-23>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체계.....	248
<그림 2-2-24> 연구개발지원단 선정·운영 현황.....	250
<그림 2-2-25>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지원 체계.....	250
<그림 2-2-26> 새만금 농생명용지 이용계획도.....	267
<그림 2-2-27> 스마트팜 도입농가 생산성 분석(2016년 11월).....	275
<그림 2-2-28>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례.....	282
<그림 2-2-29> 2017년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추진성과.....	313
<그림 2-2-30> 2016년 사업 생활 만족도 및 프로그램 참여도.....	316
<그림 2-2-31>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 추진 절차.....	324
<그림 2-2-32> 전남 나무은행 운영 사례(가로수, 도시숲, 도시공원).....	328
<그림 2-2-33> 직거래 일반 및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자·소비자 효용.....	338
<그림 2-3-1> 학교기업 지원사업 1단계(* 10~ '14) 사업 성과.....	353
<그림 2-4-1> 추진체계.....	374
<그림 2-4-2> 사업추진 체계도.....	375
<그림 2-4-3> 해안누리길 BI.....	385
<그림 2-5-1> 지자체와의 협력 추진체계 구축.....	406
<그림 2-5-2>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체계.....	411
<그림 2-5-3> 정신건강 종합대책('16.2.25).....	413
<그림 2-5-4>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체계 및 서비스지원 절차 등.....	414
<그림 2-5-5>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사업 추진체계.....	426

제3부 지역별 시책

<그림 3-1-1> 서울특별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36
<그림 3-1-2> 서울특별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438
<그림 3-2-1> 부산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453
<그림 3-2-2> 부산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455
<그림 3-3-1> 대구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467
<그림 3-3-2> 대구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469
<그림 3-4-1> 인천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480
<그림 3-4-2> 인천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483

<그림 3-5-1> 광주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495
<그림 3-5-2> 광주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498
<그림 3-6-1> 대전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513
<그림 3-6-2> 대전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15
<그림 3-7-1> 울산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529
<그림 3-7-2> 울산광역시 공간별 창조도시 추진전략.....	530
<그림 3-7-3> 울산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31
<그림 3-8-1> 세종특별자치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544
<그림 3-8-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46
<그림 3-9-1> 경기도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559
<그림 3-9-2> 경기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62
<그림 3-10-1> 강원도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573
<그림 3-10-2> 강원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75
<그림 3-11-1> 충청북도의 발전 비전 및 목표.....	586
<그림 3-11-2> 충청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88
<그림 3-12-1> 충청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02
<그림 3-12-2> 충청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04
<그림 3-13-1> 전라북도 발전 비전 및 목표.....	618
<그림 3-13-2> 전라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20
<그림 3-14-1> 전라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36
<그림 3-14-2> 전라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38
<그림 3-15-1> 경상북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53
<그림 3-15-2> 경상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56
<그림 3-16-1> 경상남도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668
<그림 3-16-2> 경상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70
<그림 3-17-1>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683
<그림 3-17-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85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효과

<그림 4-1-1> 남부 대상 이전 공공기관의 세금 유형.....	703
--------------------------------------	-----

제1부 총괄

제1장 경제여건의 변화와 지역경제 동향

제2장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및 실적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예산·평가 체계

제1장 경제여건의 변화와 지역경제 동향

제1절 2017년 국내외 경제¹⁾

1. 세계경제

2017년은 세계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인 한해였다. 미국, 유로지역이 내수가 호전되며 2%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일본은 투자 및 수출이 살아나는 등 선진국 경제는 전년보다 0.5%p 늘어난 2.3%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신흥국 경제도 중국이 소비와 수출 성장세로 전년 성장률을 상회하였고, 브라질 등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글로벌 투자 회복세와 중국 및 자원수출국의 수입수요 확대로 세계교역 신장세는 전년 수준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 원유가격은 셰일오일 생산 증가로 상반기에는 하락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글로벌 수요 증가, 주요 산유국의 감산합의 재연장 등으로 크게 상승한 결과, 연평균으로는 2016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표 1-1-1 주요 세계 경제지표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경제성장률 (%)	전 세계	3.4	3.2	3.7
	선진국	2.2	1.7	2.3
	미국	2.9	1.5	2.3
	유로지역	2.1	1.8	2.4
	일본	1.4	0.9	1.8
	신흥국	4.3	4.4	4.7
	중국	6.9	6.7	6.9
	브라질	-3.5	-3.5	1.1
	인도	8.0	7.1	6.7
세계교역신장률(%)		2.8	2.5	4.7
원유가격(\$/bbl)		51.2	41.2	53.2

자료 : IMF, 한국은행 「2017년 연차보고서」에서 재인용

1) 한국은행의 「2017년 연차보고서」(2018년 3월) 내용을 많은 부분 참조하였다.

2. 국내경제

2017년 중 우리 경제는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고정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소비와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높은 3.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수요부문별로 살펴보면 최종소비는 정부소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민간소비의 약진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다. 민간소비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개선 정도가 커져 2.6%의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소비심리의 개선과 일자리 추경을 비롯한 정부정책 등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고정투자는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데 힘입어 전년대비 8.6%의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되었다.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7.6% 증가하였으나 연말로 갈수록 성장세는 둔화되었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으로 IT부문 투자가 크게 늘면서 전년대비 14.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지식재생산물투자도 IT 부문의 R&D 투자를 중심으로 늘어났다. 재화 이외에 서비스를 포함한 총수출은 전년대비 1.9% 늘어났는데, 특히 IT기기 고사양화와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이 재화수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화학제품과 기계류 수출도 글로벌 경제의 개선과 동반한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호조를 보였다. 반면 사드(THAAD) 문제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여행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수출은 크게 감소하였다. 재화 및 서비스 수입은 국내 설비투자 확대의 여파로 자본재 수입이 늘고 민간소비의 양호한 흐름으로 소비재 수입이 늘어난데 힘입어 전년보다 높은 7.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성장세가 확대되고 건설업이 호조를 보인 반면 서비스업 성장세는 둔화되었다. 제조업은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확대된 4.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반도체 생산호조를 중심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 성장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반도체 부문에 대한 설비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밀기기와 기계 및 장비 등도 동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조선업 구조조정 지속 및 자동차 수출 부진으로 운송장비 업종은 전년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건설업은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서비스업은 보건·사회복지업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중국인 관광객 감소의 여파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크게 타격을 받아 전년과 비교해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취업자 수는 건설경기 호조와 정부 일자리 정책 등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었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에 이어 줄어든 반면, 정부 일자리 정책에 힘입은 공공행정 부문 증가로 서비스업 취업자가 늘었고 건설경기 호조로 건설업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실업률은 전년 수준과 동일한 3.7%를 기록하였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및 농축수산물가격 등 공급측 요인이 물가상승을 압박하였으나, 수요측 물가압력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년 수준을 소폭 상회하는 2.0%의 상승률에 머물렀다.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큰 폭의 오름세로 전년보다 높아진 1.5%의 상승률을 나타내었다. 국제수지에 있어서 상품수지는 세계 수입수요 증가 및 주력 품목의 호조로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1,199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반면 근래 해외여행객 증가세로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서비스수지는 2017년 들어서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국내 해운업 구조조정이 맞물려 전년 수준보다 늘어난 34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표 1-1-2 주요 국내 경제지표

(단위 : %, 억달러)

구분		2016	2017				
			연간	I	II	III	IV
국민 소득 ¹⁾	국내총생산	2.9	3.1	2.9	2.8	3.8	2.8
	최종소비	3.0	2.8	2.2	2.5	3.0	3.5
	민 간	2.5	2.6	2.1	2.4	2.6	3.4
	정 부	4.5	3.4	2.4	2.8	4.3	4.1
	고정투자	5.6	8.6	11.0	10.0	9.2	5.0
	건 설	10.3	7.6	11.3	8.5	8.0	3.8
	설 비	-1.0	14.6	16.1	17.9	16.3	8.6
	수 출	2.6	1.9	3.7	0.3	4.4	-0.6
	수 입	4.7	7.0	10.1	6.6	7.4	4.1
산업 생산 ¹⁾	제 조 업	2.4	4.4	4.8	3.6	6.4	2.7
	건 설 업	10.1	7.1	12.4	8.3	7.1	2.7
	서 비 스 업	2.5	2.1	1.7	1.8	2.5	2.4
고용	취업자 수 ¹⁾	0.9	1.2	1.4	1.4	1.0	1.0
	실 업 률	3.7	3.7	4.3	3.8	3.4	3.2
물가	소비자물가 ¹⁾	1.0	1.9	2.1	1.9	2.3	1.5
	주택매매가 ²⁾	0.7	1.5	0.1	0.5	0.6	0.4
국제 수지	상 품 수 지	1,189.0	1,198.9	273.1	295.6	347.5	282.7
	서 비 스 수 지	-177.4	-344.7	-86.6	-67.5	-85.0	-105.6

주 : 1) 전년 또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전기말월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2017년 연차보고서」, 한은경제통계시스템(ECOS)

제2절 2017년 지역경제동향

1. 지역경제동향 개관

2017년 수도권 지역경제는 생산·수출·고용이 증가세를 보이며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기계장비·의복 등 지역 주력 업종의 호조로 수도권 모든 지역의 생산이 전국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도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였다. 다만 고용 부문에서는 임금근로자 증가폭이 컸던 경기 지역의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서울과 인천은 각각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감소로 고용 실적 증가세는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충청권은 충북과 충남 지역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의 생산과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증가하였다. 충남은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생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글로벌 호황에 맞물려 충북과 충남의 반도체 수출도 급증하였다. 두 지역 모두 제조업 취업자 증가세는 부진하였으나,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 고용성고가 양호하였다. 반면 대전은 생산과 수출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상황도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호남권은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전북의 생산은 전년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회복 정도는 크지 않고 전남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수출도 모든 지역에서 전년 수준보다는 늘어났으나 증가세는 크지 않았다. 고용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광주 지역이 양호한 성과를 기록하였으나, 전북과 전남은 건설업과 서비스업, 제조업 취업자가 각각 줄어들어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경권과 동남권은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생산·수출은 대체로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미약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역 내 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기타 운송장비 생산 감소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년의 극심한 감소로 인한 기술적 반등과 선박 인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경남 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권역 내 타 지역의 수출 실적의 개선이 크지 않다. 울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산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고용 상황도 악화되거나 크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다.

강원과 제주는 주력업종인 식·음료품을 중심으로 생산이 크게 늘고 수출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고용 상황은 타 지역보다 월등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생산동향

2017년 들어 전국 광공업생산은 3분기까지는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4분기 들어 감소로 전환되어 연간 기준으로 전년보다 둔화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강원(21.6%), 충남(15.1%), 제주(8.9%) 등은 전년에 이어 생산 증가세가 지속되며 그 폭도 크게 확대되었다. 그 외 충북(4.0%)과 세종(2.8%) 그리고 수도권 지역 인천(7.4%), 경기(3.8%), 서울(2.3%)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1-1-3 지역별 생산동향

(단위 : %)

구 분	2016	2017				
		연간	1/4	2/4	3/4	4/4
전국	2.3	1.9	4.7	2.2	4.6	-3.8
서울	5.8	2.3	1.0	-1.1	9.6	0.2
부산	3.3	-6.6	-6.4	-7.5	-2.9	-9.6
대구	1.4	1.5	2.7	2.4	5.5	-4.5
인천	3.7	7.4	8.2	5.7	10.8	5.0
광주	-0.9	1.2	7.1	-0.2	11.2	-11.9
대전	9.7	0.2	4.2	-1.0	5.4	-7.3
울산	-6.3	-1.0	-2.8	-0.3	6.6	-6.3
세종	-1.7	2.8	5.1	5.0	8.7	-6.6
경기	6.8	3.8	9.2	0.8	4.8	1.1
강원	6.5	21.6	8.6	37.7	36.1	3.6
충북	12.5	4.0	13.6	6.1	7.4	-8.6
충남	6.1	15.1	16.1	16.9	19.3	8.8
전북	-2.3	1.4	1.9	3.3	9.1	-7.5
전남	2.3	-1.6	-1.8	1.8	-3.0	-3.5
경북	-4.8	-5.6	-10.0	-8.6	-0.8	-2.4
경남	-2.0	-1.4	2.3	1.0	1.7	-10.1
제주	2.1	8.9	8.6	10.6	11.1	5.8

주 : 지역별 광공업생산지수(2015=100) 총지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반면 전년에 생산 증가세가 비교적 높았던 부산(-6.6%)은 감소세로 반전되었고, 경북(-5.6%)은 전년의 생산 부진이 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과 더불어 경남(-1.4%), 울산(-1.0%) 등의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4분기 들어 대부분의 지역의 생산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이들 지역의 생산 부진은 보다 확대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7년 광공업 생산이 늘어난 강원은 자동차(부품) 생산이 줄어 들었으나 음료품(75.5%), 비금속(6.2%) 등 지역 주력업종 호조가 큰 폭의 생산 증가세를 견인하였다. 충남은 전자부품(30.6%)과 화학제품(9.0%), 제주는 음료품(9.0%)과 비금속제품(10.0%), 인천은 기계장비(10.1%)와 전자부품(13.1%) 등이 각각 지역 생산 호조세에 기여하였으며, 충북은 주력 업종인 전자부품(-9.4%)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화학제품(28.9%) 생산 증가세가 지역 생산을 지탱하였다. 반면, 산업생산이 비교적 호조세를 보인 지역들에서는 부산은 기계장비(-2.2%)와 1차금속(-8.8%)의 생산 부진이 컸고 경북에서는 지역 내 비중이 높은 전자부품(-20.0%) 생산이 급감하였다. 한편 울산과 경남은 조선 산업 불황 여파로 인한 기타운송장비 생산 부진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표 1-1-4 지역 내 주요 제조업종별 2017년 생산동향

(단위 : %)

	업종명	증감률	업종명	증감률	업종명	증감률	업종명	증감률
서울	의복	3.1	전자부품	-3.4	인쇄	4.4	기계장비	3.3
부산	기계장비	-2.2	자동차	3.8	1차금속	-8.8	금속제품	-8.8
대구	자동차	-3.4	금속제품	2.3	기계장비	15.7	섬유제품	-6.4
인천	기계장비	10.1	자동차	-8.0	전자부품	13.1	금속제품	3.3
광주	자동차	-2.2	전기장비	2.7	기계장비	19.7	전자부품	-4.6
대전	기계장비	9.0	화학제품	-14.4	전자부품	14.3	고무플라스틱	-6.0
울산	자동차	-3.5	화학제품	5.8	석유정제	2.5	기타운송장비	-16.3
경기	전자부품	0.2	자동차	-1.2	기계장비	40.6	고무플라스틱	-4.4
강원	비금속	6.2	식료품	9.3	음료품	75.5	자동차	-3.8
충북	전자부품	-9.4	식료품	2.1	화학제품	28.9	전기장비	5.6
충남	전자부품	30.6	자동차	3.2	화학제품	9.0	1차금속	0.8
전북	자동차	-0.2	화학제품	5.1	식료품	12.3	1차금속	1.7
전남	화학제품	4.9	1차금속	-0.6	석유정제	1.3	기타운송장비	-35.1
경북	전자부품	-20.0	1차금속	3.8	자동차	-4.7	고무플라스틱	0.9
경남	기타운송장비	-23.4	기계장비	8.9	금속제품	-5.8	자동차	-0.4
제주	음료품	9.0	식료품	-2.4	비금속제품	10.1	고무플라스틱	0.2

주 : 1) 지역별 산업생산지수(2015=100)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주요업종'은 생산지수 가중치 4위내 업종.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3. 수출동향

전년에 줄어들었던 수출은 2017년 들어 전년대비 15.8% 늘어난 5,737억불의 실적을 기록하여 2015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경기 지역은 전년대비 26.5%나 늘어난 1,241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고, 경남(31.4%), 충북(25.0%), 충남(20.6%) 등의 순으로 실적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서울, 부산, 광주, 울산, 전북 등은 여전히 2015년 수출 실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전년대비로 수출 실적이 개선된 경기, 충북, 충남은 전년에 부진하였던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이 2017년 들어 크게 늘어났으며, 경남은 호주 등 대양주 수출이 실적 개선에 큰 몫을 담당하였다. 시기별로는 3분기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4분기에는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울산, 광주 등은 전년동기비 감소하였다.

표 1-1-5 지역별 수출동향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수출 금액	지역 간 비중	전년 또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연간	1/4	2/4	3/4	4/4
전국	526,757	495,426	573,694	100.0	15.8	14.6	16.7	24.0	8.4
서울	60,273	53,428	57,386	10.0	7.4	-5.6	-6.9	29.6	17.0
부산	15,579	14,074	15,064	2.6	7.0	1.8	8.6	17.9	0.8
대구	7,090	6,915	7,213	1.3	4.3	1.9	3.0	5.1	7.0
인천	31,198	35,819	39,287	6.8	9.7	3.8	7.5	19.5	7.8
광주	15,305	14,699	14,951	2.6	1.7	3.7	-4.9	15.4	-5.8
대전	4,307	4,163	4,454	0.8	7.0	19.0	-0.8	10.4	-0.3
울산	72,907	65,259	66,700	11.6	2.2	17.5	-3.1	12.1	-14.6
세종	929	1,012	1,024	0.2	1.2	10.8	0.6	2.4	-7.3
경기	105,908	98,091	124,129	21.6	26.5	29.9	30.1	31.1	16.8
강원	1,881	1,660	1,783	0.3	7.4	5.1	2.6	17.0	4.9
충북	15,210	16,004	20,001	3.5	25.0	30.2	22.2	24.9	23.3
충남	67,123	66,211	79,842	13.9	20.6	27.4	21.0	17.4	18.0
전북	7,952	6,291	6,309	1.1	0.3	-18.0	12.1	3.7	8.0
전남	30,494	27,880	31,054	5.4	11.4	17.4	7.1	14.6	6.8
경북	43,458	38,518	44,870	7.8	16.5	19.4	21.3	18.2	8.2
경남	47,020	45,274	59,474	10.4	31.4	2.4	60.1	59.8	2.3
제주	121	129	155	0.0	20.4	1.9	20.8	32.7	26.8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요 품목별 2017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수출 신장세가 가장 컸던 경기, 충남, 충북은 글로벌 호황과 맞물려 반도체(각각 75.0%, 91.6%, 30.4%)가 지역 수출을 주도하였으며, 경남은 전년에 큰 폭으로 줄어든 선박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되지 못한 지역 중에서 울산은 선박(-35.9%), 서울은 자동차부품(-14.7%), 광주와 전북은 자동차(각각 -0.6%, -2.0%) 수출이 줄어들어 주로 수송 장비가 지역 수출 실적의 개선에 걸림목이 되고 있다.

표 1-1-6 지역 주요 품목별 2017년 수출

(단위 : %)

	품목명	비중	증감률	품목명	비중	증감률	품목명	비중	증감률
서울	자동차부품	8.7	-14.7	합성수지	8.0	30.2	반도체	7.7	16.2
부산	자동차	19.3	31.0	철강판	7.0	26.0	철강관및철강선	5.8	31.6
대구	자동차부품	16.3	2.9	인조장섬유직물	6.2	-4.3	공구	4.2	10.8
인천	반도체	14.1	-6.5	자동차	11.7	1.0	철강판	8.7	32.2
광주	자동차	39.2	-0.6	반도체	29.4	9.8	냉장고	7.0	-5.3
대전	기호식품	15.7	15.2	건전지및축전지	9.7	26.9	원동기및펌프	9.6	4.9
울산	석유제품	24.9	33.9	자동차	21.4	0.8	선박및부품	10.2	-35.9
세종	기구부품	16.1	-12.2	평판디스플레이	15.5	71.6	자동차부품	8.9	12.6
경기	반도체	30.0	75.0	자동차	8.2	8.0	무선통신기기	7.5	27.4
강원	전자응용기기	20.5	24.0	합금철선철및고철	14.0	28.9	자동차부품	12.0	-6.0
충북	반도체	40.9	30.4	건전지및축전지	8.4	13.8	플라스틱 제품	6.1	9.4
충남	반도체	44.0	91.6	평판디스플레이	15.7	4.4	석유제품	7.1	35.5
전북	자동차	14.4	-2.0	자동차부품	9.6	6.8	합성수지	9.4	25.3
전남	석유제품	29.1	24.3	합성수지	25.1	17.3	철강판	10.9	7.8
경북	무선통신기기	22.5	15.0	철강판	18.4	16.2	평판디스플레이	12.0	5.5
경남	선박및부품	52.4	76.5	자동차부품	5.0	-1.2	원동기및펌프	3.3	14.1
제주	반도체	46.5	97.6	어류	18.0	-9.2	기호식품	5.3	-18.1

주 : MTI 3단위 기준으로 지역 내 수출금액 순위 3위내 품목

자료 : 한국무역협회

4. 고용동향

2017년 전국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2% 늘어난 2,673만 명을 기록하였다. 지역별 취업자 수 증가율 기준으로 제주(5.4%), 강원(5.4%), 경기(2.8%), 충남(3.6%), 충북(1.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²⁾ 다만 제주, 경기, 충남, 충북은 고용안정성이 큰 상용근로자 중

심으로 증가폭이 컸던 반면 강원은 임시근로자수 증가폭이³⁾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고용 개선의 질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한편 전북(-2.1%), 대전(-1.3%), 전남(-0.8%)은 취업자가 줄어든 가운데, 전북은 경기침체로 인한 자영업자 감소가 크게 작용하였으며, 대전과 전남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표 1-1-7 지역별 고용동향(취업자)

(단위 : 천명, %)

구분	2015	2016	취업자 수	지역간 비중	2017 전년 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연간				
					1/4	2/4	3/4	4/4	
전국	26,178	26,409	26,725	100.0	1.2	1.4	1.4	1.0	1.0
서울	5,165	5,146	5,153	19.3	0.1	0.2	0.4	0.5	-0.6
부산	1,685	1,686	1,685	6.3	-0.1	-0.2	0.5	0.1	-0.6
대구	1,246	1,247	1,239	4.6	-0.6	1.1	-0.2	-1.7	-1.8
인천	1,488	1,521	1,533	5.7	0.8	0.6	0.7	0.0	1.9
광주	733	730	744	2.8	1.8	1.8	1.5	1.8	2.3
대전	770	774	764	2.9	-1.3	-0.5	-1.4	-1.8	-1.4
울산	573	576	584	2.2	1.3	1.9	2.1	0.5	0.9
경기	6,393	6,504	6,684	25.0	2.8	2.7	2.5	2.6	3.3
강원	741	750	790	3.0	5.4	4.9	6.1	6.7	3.8
충북	839	845	861	3.2	1.9	0.5	2.6	2.6	1.8
충남	1,199	1,226	1,270	4.8	3.6	3.4	4.1	3.3	3.5
전북	923	940	921	3.4	-2.1	0.0	-2.0	-3.8	-2.4
전남	963	964	957	3.6	-0.8	0.2	-0.8	-2.0	-0.3
경북	1,433	1,443	1,447	5.4	0.2	0.6	0.3	0.5	-0.5
경남	1,691	1,704	1,723	6.4	1.1	1.3	1.9	0.8	0.5
제주	339	355	374	1.4	5.4	6.4	7.1	5.3	3.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충남은 2017년부터 통계가 분리되어 작성되기 시작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수치임.

산업별로 전체 취업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과 서비스업 취업자는 늘었으나,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어들어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취업자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지역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제조업 취업자 수가 증가한 지역은 광주(11.4%), 대

2) 충남은 2017년부터 세종이 분리되어 통계가 작성됨에 따라 충남 별도의 취업자 수는 시계열 단절 현상이 발생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충남과 세종의 취업자 수를 합쳐서 살펴본다.

3)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고용계약 미설정 시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 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임시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고용계약미설정시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에 해당된다.

전(7.1%), 전북(4.0%), 대구(4.0%) 등인 반면, 전남(-14.7%), 울산(-8.0%), 제주(-5.5%), 충북(-4.3%), 충남(-2.6%) 등은 감소하였다. 건설업 취업자는 제주(18.5%), 부산(17.8%), 경북(11.3%) 등은 증가한 반면 인천(-2.4%), 전북(-1.5%), 강원(-1.3%) 등에서는 줄어들었다.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도 지역 간에 차이가 있는 가운데, 제주(6.6%), 울산(6.5%), 강원(6.4%)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전북(-4.3%), 대전(-2.5%) 등의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줄어들었다.

표 1-1-8 지역별·산업별 2017년 취업자

(단위 : 천명,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지역내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지역내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지역내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전국	4,566	17.1	-0.4	1,988	7.4	6.3	18,871	70.6	1.1
서울	453	8.8	-6.4	366	7.1	6.3	4,325	83.9	0.3
부산	297	17.6	-1.6	147	8.7	17.8	1,227	72.8	-1.7
대구	261	21.1	4.0	97	7.8	2.4	861	69.5	-2.2
인천	358	23.3	3.0	130	8.5	-2.4	1,040	67.9	0.6
광주	115	15.5	11.4	70	9.3	-0.4	545	73.3	0.7
대전	90	11.8	7.1	61	8.0	-1.2	604	79.1	-2.5
울산	192	32.9	-8.0	48	8.2	11.0	334	57.2	6.5
경기	1,330	19.9	2.7	489	7.3	7.8	4,746	71.0	2.3
강원	52	6.6	-2.8	58	7.3	-1.3	584	73.9	6.4
충북	173	20.0	-4.3	60	7.0	9.1	537	62.4	2.3
충남	283	22.3	-2.6	87	6.8	11.6	768	60.4	4.5
전북	124	13.4	4.0	64	7.0	-1.5	589	64.0	-4.3
전남	106	11.1	-14.7	79	8.3	1.6	571	59.7	4.1
경북	291	20.1	-1.8	101	7.0	11.3	836	57.8	-0.4
경남	430	25.0	-0.6	95	5.5	8.0	1,036	60.1	1.7
제주	13	3.5	-5.5	37	9.8	18.5	269	71.9	6.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충남은 2017년부터 통계가 분리되어 작성되기 시작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수치임.

제2장 지역발전정책 추진실적

제1절 제2차 지역발전5개년계획의 지역발전정책

1.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한 지역발전정책은 크게 200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2000년대 이전은 다시 1960~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60~1970년대에는 빈곤의 탈피와 자립경제의 기반구축을 위해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추진되면서 특정지역에 국가산업단지 및 수출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1980년대에는 경제발전과정에 나타난 지역간 불균형 발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는 한편 지방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1990년대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한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생산적·자원절약형 국토형성과 국토환경의 보전이 강조되었다.

국내에서 지역발전정책이 특별법, 특별회계, 추진체계(대통령 자문위원회 등)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0년대 들어 참여정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핵심적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혁신주도형 발전과 다극분산형 발전을 위해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추진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라는 인식하에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화 정책과 지방분권 정책을 도입하였다.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체감형 지역발전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하는 한편, 지역의 자율과 연계,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였다.

지난 지역발전정책을 돌이켜 보면, 초기에는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성장의 기반 구축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 간 균형발전, 사회통합,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발전정책의 방향과 전략

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표 1-2-1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시기	배경·목표	주요정책
1960~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의 악순환 탈피 · 자립경제기반 구축 · 공업화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년) · 지방공업개발법 제정(1970년) · 공업단지 및 수출산업단지 조성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과 복지의 조화 · 수도권 집중억제 · 지방중소도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1984~1996년)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산형 국토골격 형성 · 생산적·자원절약형 국토형성 · 국토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년) ·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년)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법(1994년) · 8개청 3개 기관을 대전청사로 이전
2000 년대	참여 정부 (2003 ~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균형발전으로 국민통합 · 혁신주도형 발전 · 다극분산형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2004년)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 및 수정계획(2006~2020년) ·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04~2008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균형정책
	이명박 정부 (2008 ~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 · 광역화와 연계협력 활성화 · 특화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09) · 지역발전5개년계획 수립(2009~2013년)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 · 광역경제권·기초생활권·초광역개발권 3차원 정책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사무국) 구성·운영
	박근혜 정부 (2013 ~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 · 행복한 삶의 기회 균등 보장 · 자율적 참여와 협업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4) ·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년) 수립 ·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 · 지역(행복)생활권 및 경제협력권 도입 · 포괄보조금 확대 등 지역자율성 제고

표 1-2-2 2000년대 이후 지역발전정책 비교

구분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정책주도	중앙정부 주도	주민·지자체 주도
정책단위	5+2 광역경제권	지역행복생활권
추진방식	하향식 정책	상향식·주민체감 정책
지원방식	부처별 산발적 지원	맞춤형·패키지 지원(부처협업)

2. 비전 및 추진전략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비전 및 추진전략은 2013년 7월 18일에 개최된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시되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지역희망 프로젝트는 주민이 현실 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하고(Happiness), 행복한 삶의 기회를 고르게 보장받고(Opportunity), 자율적 참여와 협업(Partnership)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Everywhere)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최근에는 문화, 스포츠,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지만, 국내적으로 보면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인 지방도시와 농촌이 함께 쇠퇴하면서 성장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삶의 질 분야에서 지역간의 발전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중후장대형 발전사업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업과 행정구역을 넘어서 전개되는 통근, 통학, 여가, 쇼핑 등 생활권에 토대를 둔 지역사업에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와 기존에 추진했던 지역발전정책의 평가를 토대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게 되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맞춤형·패키지 지원, 지역주도 및 협력 강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전략은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전략으로서, 지역행복생활권은 마을, 읍면, 도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기초 인프라부터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 고차수준의 서비스까지 충족되는 생활공간을 의미한다. 시·군이 인구분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생활권을 설정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맞춤형·패키지 지원 전략으로서 중앙정부는 주민·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행복과 희망증진 효과가 높은 과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부처의 시책을 조정하여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전략은 지역주도 및 협력강화 전략으로서 사업기획, 집행의

과정에서 지역의 자율과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림 1-2-1 지역발전정책(HOPE)의 비전과 추진전략



3. 주요 추진시책

(1) 지역발전의 6대 분야 17개 추진과제

이러한 비전과 추진전략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시책으로 6대 분야 17개 추진과제가 제시되었다. 첫 번째 분야는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으로서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주민체감 생활환경 개선, 지역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을 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분야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서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지역산업정책의 전환,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 농어촌 일자리 확충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세 번째 분야는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으로서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지방대학 특성화, 지역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을 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네 번째 분야는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 복원으로서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생태·자연환경 보전·활용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 분야는 사각 없는 지역의 복지·의료로서 지역 맞춤형 복지 지원,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를 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여섯 번째 분야는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지속 추진으로서 혁신도시·세종시의 보완 발전, 지역공약 이행 지원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표 1-2-3 주요 추진시책(6대 분야 17개 추진과제)

①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①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② 주민체감 생활환경 개선 ③ 주민 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	②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④ 일자리 창출중심의 지역산업정책 전환 ⑤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⑥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 ⑦ 농어촌 일자리 확충
③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⑧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⑨ 지방 대학 특성화 ⑩ 지역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	④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 복원 ⑪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⑫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⑬ 생태·자연환경 보전·활용
⑤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⑭ 지역 맞춤형 복지 지원 ⑮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	⑥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⑯ 혁신도시·세종시 보완 발전 ⑰ 지역공약 이행 지원

(2) 2단계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

2013~2014년 기간동안 박근혜정부는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에 근거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주민의 행복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지역발전정책의 토대가 되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자체 자율로 63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이들 생활권별로 지역행복생활권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동시에 지역경제, 교육, 문화, 복지·의료 분야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시·도별로는 지역특성과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2015년에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7월 22일)를 끝으로 전국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설치가 완료되어 창조경제의 지역별 실행 기구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도의 상향식 지역발전방식이나 정부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충분히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지역행복생활권을 통해 각 지자체가 주변 지역과 연대하여 상생하려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 당초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지역발전위원회는 2015년 하반기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지역발전정책의 장점은 살리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단계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를 마련하였다.

지역발전위원회는 2단계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의 실현을 위해서 행복생활권 정책 고도화를 통한 ‘국민행복체감시대의 실현’, 창조경제 확산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 국민통합과 공동체의식 회복을 통한 ‘선진한국 기반 확립’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9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국민행복체감시대의 실현’을 위해 (과제 ①) 국민들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확대하고 그 성과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과제 ②)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선정·추진(Top-Down)되었던 지역발전사업을 재편하여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및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Bottom-Up)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과제 ③) 지역발전사업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범위와 운용방식을 재정비하는 등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과제 ④) 창조경제기반의 지역특화발전 추진, (과제 ⑤) 지역문화와 산업·기술의 창조적 융합, (과제 ⑥)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의 교두보로 육성, (과제 ⑦)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생활권 사업 간 협업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였다.

‘선진한국 기반 확립’을 위해 (과제 ⑧)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낙후지역 지원 강화 및 지역격차 해소를, (과제 ⑨) 도시와 지역 간 유대감 강화를 위한 「고향희망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단계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는 2016년부터 국정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정책추진을 통해 성과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림 1-2-2 2단계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의 중점 추진방향 및 과제



제2절 지역발전정책 추진실적

1. 지역발전정책의 총괄 실적·성과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2017년 지역발전정책의 전체적인 성과를 투입부문과 산출부
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입부문의 실적은 지역발전의 6대 분야 17개 추진과제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
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 2017년에 9조 8,219억원을 지원하였다. 2017년 지역
발전특별회계는 생활기반계정 4조 6,645억원, 경제발전계정 4조 7,288억원,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3,260억원, 세종특별자치시계정 1,026억원으로 구성되었다.

산출부문의 전체적인 성과는 제2차 지역발전5개년계획(2014~2018년)이 비전으로
제시한 ‘국민에게 희망을, 지역에 희망을’과 연계된 ‘주민 행복도’라 할 수 있다. 주민
행복도는 2015년에 지역발전위원회가 조사·발표한바 있지만, 2017년에는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적인 성과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발전
의 6대 분야 중에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혁신도시·세종시, 지역공약)’을 제외
한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성과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행복생활권 기반확충 분야는 생활권 선도사업의 확대(‘16년 139개, ‘17년 174
개)로 지역주도의 협력사업 실천을 촉진하는 한편, 도시가스 보급률(‘16년 81.9%, ‘17
년 83.1%), 슬레이트지붕 철거(‘16년 26,721동, ‘17년 27,807동), 새뜰마을 사업(‘16년
151개소, ‘17년 202개소) 등을 통해 낙후오지의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주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분야는 무엇보다 2017년 7월, 정부 조직개
편에 따라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과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중소기업 육성을 담당하
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게 되었고, 최근 4차 산업혁명, 개방형 혁신 등 산업여
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10월 지역경제위원회를 통해 기존 제조업 중심의 63
개 주력산업을 융·복합 중심의 48개 주력산업으로 전면 개편한 점이 주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함께, 지역특화산업의 사업화 매출액 증대(‘16년 2,507
억원, ‘17년 3,277억원), 지방투자 신규고용 확대(‘16년 34,481명, ‘17년 34,846명), 공공

기관 혁신도시 이전('16년 143개, '17년 147개), 산학융합지구조성('17년 20개 대학, 41개 학과)등을 통해 지역대표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교육여건 및 창의적 인재양성 분야는 4년제 특성화 분야 졸업생 취업률 제고('16년 77.0%, '17년 77.3%), 전문대 LINC 산학협력 가족회사수 증대('16년 20,648개, '17년 23,575개), 지역혁신 창의인력 지역내 취업률 향상('16년 57.1%, '17년 65.1%) 등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 및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지역인재의 양성에 기여하였다. 특히, 최근 수명연장에 따른 100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평생학습도시와('16년 143개, '17년 151개), 행복학습센터를('16년 92개, '17년 129개) 확충하였다.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복원 분야는 지역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16년 12개, '17년 44개), 소외계층 문화순회공연('16년 3,100회, '17년 4,773회) 등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동북아 해양관광레저특구 방문객 확대('16년 304만명, '17년 359만명)로 지역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생태놀이터 조성('16년 54개소, '17년 73개소), 생태하천복원('16년 65.9%, '17년 70.8%)을 통해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는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새롭게 추가된 분야로서 최근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을 고려할 때 정책적 시급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주민정신건강 증진센터 확충('16년 225개소, '17년 243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16년 201개, '17년 373개) 등을 통해 주민 체감형·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낙후·오지지역에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수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16년 4개소, '17년 5개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확대('16년 108개, '17년 127개)로 전국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응급의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였다.

2. 정책 부분별 주요 추진실적 · 성과

(1)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5대 분야별 추진실적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 따른 2017년도 부문별 시행계획(21개 중앙부처의 5대 분야, 20개 실천과제, 251개 단위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부처간 협업 추진을 통해 달성한 2017년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4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5대분야 - 20개 실천과제'

5대 분야	20개 실천과제	주관부처	협업부처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행자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국토부	농식품부, 행자부 등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국토부	농식품부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국토부	행자부, 해수부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산업부	미래부, 고용부, 해수부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산업부	-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산업부	국토부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미래부	국토부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국토부	미래부, 인행부, 농식품부 등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농식품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교육부	-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교육부	-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교육부	-
지역문화 육성, 생태복원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지원	문체부	문화재청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문체부	-
	지역 관광산업 육성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문화재청
	생태·자연환경 보전·활용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 산림청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복지부	-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복지부	여가부 등
	취약계층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복지부	-

①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분야

지역 주민의 실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행복 증진에 필수적인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하기 위한 분야로서 세부적으로는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주민체감 생활 생활인프라 구축',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등 4개의 실

천과제를 추진하였다.

동 분야의 2017년도 주요 성과로는 첫째,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35개 신규 선정, 사회서비스 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53개 등을 통해 마을기업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였다. 둘째, 도시가스 보급률 83.1%, 가축분뇨 자원화율 91.0% 등을 실현하였고, 저상버스 755대 도입, 주차환경개선지원 58개소 등을 통해 농어촌 및 취약지역의 주민체감 생활인프라를 대폭 개선하였다. 셋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18개소 신규 지정(누적 50개소), 새뜰마을사업 51개소 신규 선정(누적 202개소) 등을 통해 지역중심지의 활력을 증진하였다. 넷째, 광역도로 42개 사업(177.2km) 완료, 도시철도 18.2km 신규 확충 등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을 통해 주민 편의가 증진되었다.

표 1-2-5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분야의 주요 성과(2017년 실적)

실천과제	주요 성과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생활권 선도사업 선정 확대(누적) : ('16) 139개 → ('17) 174개(35개 증)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및 확산 : ('16) 18개소(17개시군 → ('17) 18개소(18개시군)
	마을기업 매출액 : ('16) 1,266억원 → ('17) 1,599억원
	사회서비스 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 ('16) 24개 → ('17) 31개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수 : ('16) 1,160개소 → ('17) 1,170개소
	저상버스 도입대수 : ('16) 768대 → ('17) 755대
	주차환경개선지원 : ('16) 58개소 → ('17) 58개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실적 : ('16) 247개소 → ('17) 295개소
	도시가스 보급률 : ('16) 81.9% → ('17) 83.1%
	슬레이트지붕 철거실적 : ('16) 26,721동 → ('17) 27,807동
	가축분뇨 자원화율 : ('16) 90.6% → ('17) 91.0%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추진 : ('16) 32개소 → ('17) 50개소
	새뜰마을사업 선정(누적) : ('16) 151개소 → ('17) 202개소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광역도로 : '17년까지 68개 사업(323.1km) 중 42개 사업(177.2km) 완료
	도시철도망 확충 : ('16) 674.4km → ('17) 692.6km

②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

지역의 특성과 산업생태계를 고려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분야로서, 세부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농산

어업 경쟁력 강화’ 등 6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하였다.

2017년도 주요 성과로는 첫째, 지역대표산업 육성을 통해 신규고용은 1,686명, 사업화 매출액은 3,277억원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둘째,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투자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2017년까지 지방투자 기업(593개)을 통해 고용 34,846명, 총 투자 11조 694억원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셋째, 산업단지를 개방형 창조경제 혁신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통해 산업단지로 이전한 대학/학과/학생 수가 2017년까지 20개 대학, 41개 학과 7,580명으로 증가하였다. 넷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한 지역별 특화모델을 통해 2017년 창업보육 기업 수와 투자유치액이 5,859개사, 7,736억원에 이를 정도로 성과 창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섯째, 농식품 ICT 결합형 모델개발 29개소(누계), 농촌관광 방문객 1,050만명 등을 농촌의 활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1-2-6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분야의 주요 성과(2017년 실적)

실천과제	주요 성과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 고용창출(R&D사업) : ('16) 1,542명 → ('17) 1,551명
	지역특화산업 사업화매출액(R&D사업) : ('16) 2,507억원 → ('17) 3,277억원
	경제협력권산업 성과 : ('17) 사업화매출 580억원, 신규고용 창출 135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매출증가율(평균) : ('16) 33.4% → ('17) 40.5%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고용증가율(평균) : ('16) 20.3% → ('17) 18.7%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지방투자 유치 기업(누적) : ('16년) 585개 → ('17) 593개
	지방투자 유치 총투자금액(누적) : ('16년) 10조 9,415억원 → ('17) 11조 694억원
	지방투자 신규고용 창출(누적) : ('16년) 34,481명 → ('17) 34,846명
	FDI 유치 : ('16) 213억 달러 → ('17) 229억 달러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산학연협의체(MC)수/참여자(누적) : ('16) 85개/9,582명 → ('17) 91개/9,532명
	산학융합지구 : '17년까지 20개 대학 41개 학과 7,580명, 기업연구소 228개소 이전완료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누적) : ('16) 540km → ('17) 640km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지원 기업 수 : ('16) 3,870개 → ('17) 5,859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유치액 : ('16) 4,329억원 → ('17) 7,736억원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 ('16) 10개 → ('17) 14개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수출실적 : ('17) 7개사, 257만 달러
	세종테크노밸리 산업용지 공급 : 수도권 기업 등 43개사(기관) 유치
	공공기관(154개) 혁신도시 이전(누계) : ('16) 143개 → ('17) 147개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농식품 ICT 결합형 모델개발(누계) : ('16) 21개 → ('17) 29개
	농촌관광 방문객수 : ('16) 917만명 → ('17) 1,050만명
	자연휴양림 이용객수 : ('16) 1,524만명 → ('17) 1,671만명
	치유의 숲 이용객수 : ('16) 1,144천명 → ('17) 1,275천명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10a당 생산액 : ('16) 2,813천원 → ('17) 4,206천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매출액 : ('16) 241억원 → ('17) 246억원
	친환경농업지구 신규조성 : ('16) 15개소 → ('17) 13개소
	중자산업기반구축사업의 국산품종 점유율(화훼) : ('16) 30.1% → ('17) 30.7%
	바다숲 조성실적 : ('16) 3,064ha → ('17) 3,043ha

③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분야

지역의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의 혁신을 통해 인재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을 위해 일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분야로서, 세부적으로는 ‘창의적 인재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의 3개 실천과제를 추진하였다.

2017년도 주요 성과로는 첫째, 지방의 대학(전문대) 및 대학원의 교육·연구 역량 제고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BK21플러스 지원 대학 및 사업단은 각각 41개교, 239개로 증가하였다. 둘째, 산학협력 선도대학의 기술이전 수입료는 2016년 295.5억원에서 2017년 309.3억원으로 향상되었고, 특성화대학의 취업률이 2016년 77.0%에서 2017년 77.3%로 소폭 증가하였다. 둘째, 지역혁신창의인력의 지역내 취업률이 2016년 57.1%에서 2017년 65.1%로 상승하였다. 셋째, 지역사회 구성원의 평생학습 욕구충족과 평생교육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2016년 143개에서 2017년 153개로 확대되었고, 행복학습센터는 2016년 92개에서 2019년 129개로 대폭 확대되는 등 지방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1-2-7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분야의 주요 성과(2017년 실적)

실천과제	주요 성과
창의적 인재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BK21 플러스 지원 대학/사업단 : ('16) 41/233 → ('17) 41/239
	(4년제) 특성화 분야 졸업생 취업률 : ('16) 77.0% → ('17) 77.3%
	(4년제) LINC 기술이전 수입료 : ('16) 29,547백만원 → ('17) 30,927백만원
	(4년제) LINC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 ('16) 38.8% → ('17) 42.5%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전문대) LINC 산학협력 가족회사 수 : ('16) 20,648개 → ('17) 23,575개
	지역혁신창의인력 지역내 취업률 : ('16) 57.1% → ('17) 65.1%
	지역혁신창의인력 사업화수/매출액 : ('16) 687/1,143백만원 → ('17) 737/1,140백만원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구축	학교기업 매출액 : ('16) 194.3억원 → ('17) 130.9억원
	평생학습도시 지정수(신규) : ('16) 143개 → ('17) 153개
	행복학습센터 운영수 : ('16) 92개 → ('17) 129개

④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분야

지역의 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별 특화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맞춤형 문화서비스와 생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이며,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지원’,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지역 관광산업 육성’, ‘생태·자연환경 보전·활용’ 등의 4개 실천과제를 추진하였다.

2017년도 주요 성과로는 첫째, 문화도시·문화마을 지원을 통해 문화특화지역 조성으로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였고, 국제영화제(2017년 307개국 1,146편 상영) 등을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재발견 및 재창조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둘째,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44개 지역 등을 통해 문화 소외지역의 생활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 기존 문화시설 및 유희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 공간을 확충하였다. 셋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관광거점 육성, 창조적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및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 등을 추진한 결과, 동북아 해양관광레저특구의 방문객 359만명, 크루즈 관광객 39만명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넷째, 다양한 생태자원의 보전·복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7년까지 생태놀이터 73개소 조성 등을 통해 도시 생태자원을 복원·확충하였고, 2017년까지 생태하천 복원 비율 70.8%, 국가생태문화탐방로 2,004km 조성,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 등 하천-산림생태를 보전·복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표 1-2-8 ‘지역문화 육성, 생태복원’ 분야의 주요 성과(2017년 실적)

실천과제	주요 성과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지원	국제영화제 상영편수 : (‘17) 307개국 1,146편(6개 영화제)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지원 실적 : 청주(산업단지), 부산·경기 등 5개소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 (‘16) 27개 지역 → (‘17) 44개 지역
	지방문화원 지원실적 : (‘16) 8개 시도 14개 → (‘17) 5개 시도 9개
	작은영화관 지원실적 : (‘16) 14개소 → (‘17) 13개소
	소외계층문화순회 공연횟수 : (‘16) 3,100회 → (‘17) 4,773회
지역 관광산업 육성	동북아 해양관광레저특구 방문객 : (‘16) 304만명 → (‘17) 359만명
	크루즈 관광객 입항실적 : (‘16) 195만명 → (‘17) 39만명
	등대해양문화공간 방문객 : (‘16) 3,944,708명 → (‘17) 3,807,364만명
생태·자연 환경 보전·활용	생태놀이터 조성(누적) : (‘16) 54개소 → (‘17) 73개소
	생태하천복원 비율 : (‘16) 65.9% → (‘17) 70.8%
	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환경 기술지원 수혜업체수 : (‘16) 1,006개 → (‘17) 986개
	국가중요 농업유산 지정(누적) : (‘16) 7개소 → (‘17) 9개소

⑤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

전국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의

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분야로서 세부적으로는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 3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하였다.

2017년도 주요 성과로는 첫째,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4만여개 창출하였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1,899명 신규 충원, 읍면동 단위 인적 안착망의 구성 완료(229개 시군구) 등을 통해 주민밀착형 찾아가는 서비스 및 촘촘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였다. 둘째, 수혜자 특성을 고려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14만 4,289명의 취약계층 아동이 서비스 수혜를 받았으며, 지역아동센터 4,189개소, 방과후 아카데미 250개소 등을 확대 운영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셋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형 산부인과 35개소(외래→분만전환 2개소), 응급의료기관 127개소 등을 통해 취약지역의 생활의료 기반 강화에 기여하였다.

표 1-2-9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의 주요 성과(2017년 실적)

실천과제	주요 성과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시군구) : ('16) 228개 → ('17) 229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 : ('16) 3,467개 → ('17) 3,488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신규) 확충 : ('16) 2,578명 → ('17) 1,899명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누적) : ('16) 225개소 → ('17) 243개소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드림스타트 수혜 아동·임산부 수 : ('16) 134,853명 → ('17) 144,289명
	지역아동센터 지원 : ('16) 4,054개소 → ('17) 4,189개소
	방과후 아카데미 : ('16) 250개소/9,745명 → ('17) 250개소/9,773명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건수 : ('16) 201개소 → ('17) 373개소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다문화가족 언어발달교육 참여 확대 : ('16) 15,379명 → ('17) 14,630명
	분만산부인과(누적) : ('16) 35개소 → ('17) 35개소(외래→분만전환 2개소)
	필수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 ('16) 4개소 → ('17) 5개소(신규 1개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 ('16) 108개소 → ('17) 127개소

(2) 주민체감형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추진실적

①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박근혜정부는 이전 정부의 기능 분산형 균형발전정책(세종시 건설, 혁신도시·기업도

시 건설 등)과 광역경제권 정책(30대 선도프로젝트,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 등)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양극화 등 지역 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HOPE프로젝트(2013.7월)을 통해 주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6대 중점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17개 실천과제가 확정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지역 주민이 어디서나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기초인프라를 확충하고, 일자리, 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행복생활권’ 즉, 인접한 기초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구성한 생활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2014.3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중추도시권 20개, 도농연계권 14개, 농어촌권 21개, 수도권시범생활권 8개 등 63개 지역행복생활권의 구성을 완료하였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종전 ‘5+2 광역경제권’처럼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지자체 간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즉 시·군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인근 지역 및 시·도 협의를 거치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으로 구성되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은 기초지자체가 발굴한 주민 불편해소 과제를 중점 지원함에 있어서 기존의 개별 부처별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협의를 통해 각종 사업을 조정, 패키지 지원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 추진주체 또는 지원내용에 따라 ①지역생활권과제(기초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기초지자체 단독사업), ②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③새뜰마을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사업선정 및 지원을 직접 수행하며, 2013년부터 5대 중점분야(NIMBY 해소, 응급의료, 주민안전, 일자리 연계, 상하수도·가스 등의 생활인프라)를 중심으로 각종 시설·서비스연계, 지역자원의 공동 개발·관리 등을 포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지자체간 장벽을 허물어 주민에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 32개, 2014년 35개, 2015년 42개, 206년 30개 과제를 선정·지원하였고, 2017년에도 35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2017년 말까지 총 174개 과제를 선정·지원하였다.

표 1-2-10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2017년 신규 선정결과(35개)

시도명	사업명	참여 지자체
부산	스마트 기술 활용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구축	부산/김해·양산·울주
대구	ICT기반 마음톡톡(Talk Talk) 행복지원 프로젝트	대구/동구·경산
인천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	인천 남구/동구·부평구, 경기 부천
광주	무등산권 지질공원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	광주/담양·화순
	남도청년 장돌뱅이	광주/화순, 담양, 장성, 함평
대전	힐링 SONG 의료관광 연계 프로젝트	대전 서구/옥천·논산·금산
울산	산업단지 안전사고 "0"생활권 조성	울산/경주·밀양·양산
세종	시대를 잇는 융복합관광 플랫폼 구축	세종/공주
경기	창의지성 체험프로그램 공유	오산/화성
	4通 3安 경원축 안전생활 시스템 구축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
	하늘킴터 장사시설 공동활용	의왕/군포
강원	횡성·원주간 지역주민 상생협력 통합 가로환경 개선	횡성/원주
	강원북부 접경지역 청소년을 위한 취약한 교육환경 개선	화천/양구·철원
	동해바다 여족자원 활용 주민생활 행복 및 일자리 창출	강릉/동해·삼척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	속초/고성·양양
충북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	제천/단양
충남	오감만족 새싹들의 체험교육	음성/증평·진천·괴산
	천안·아산 버스정보시스템 연계 구축	천안/아산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홍성/예산
전북	FunFun 와봐유, 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보령/서천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정읍/고창·부안
	불가사리 발효액비 자원화	부안/고창·정읍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	임실/남원·순창
	무진장 경계지역 농업기반 상호 협력 보완	장수/진안·무주
전남	평생누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강진/장흥·영암
	미생물을 활용한 살기 좋고 잘사는 구곡담 만들기	구례/담양·곡성
	낙도 해상교통 불편해소 인프라 구축	완도/고흥
경북	삶의 현장, 청년들의 행복한 JAB 만들기	구미/김천·칠곡
	농(農)·테크 상생 교육 프로젝트	영천/경산·청도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조성	고령/성주
경남	청정바다 친환경 해양보전	남해/사천·하동
	통영-거제(한산해역) 해상안전 시스템 구축	통영/거제
	웰니스 관광, 상생 일자리 창출(향노화 wellbeing, happiness, fitness)	거창/산청·함양·합천
제주	관광을 통한 주민행복 맞춤사업	제주/서귀포
	제주 서남권 마을행복센터 사업	서귀포/제주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 보도자료(2017.2월)

② 새뜰마을사업

새뜰마을사업(전국민 대상의 명칭 공모전(2015.5월)을 통해 기존의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프로젝트'를 새뜰마을사업으로 변경)은 박근혜정부의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일환으로서 위험잠재지역(건물,

축대 등의 노후붕괴 위험지역, 산사태, 상습침수 등 자연재해 우려지역), 생활환경이 비위생적인 지역, 생활인프라가 미흡한 지역(상하수도, 소방도로, 급경사, 재래식 화장실 등의 문제가 있는 지역) 등 주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전국 354개의 달동네, 쪽방촌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2013년, 지역발전위원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결과, 128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같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은 주거환경, 생활인프라, 안전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대한 주민 체감도 제고 차원에서 취약지역(농어촌지역에 1,200개, 도시지역에 350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 지원을 강화·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제10차 지역발전위원회(2014.9월)’에서 지역행복생활권·특화발전프로젝트와 함께 새뜰마을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이후 동 프로젝트의 대상지 선정 등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였다.

새뜰마을사업의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지역행복생활권 내 ‘취약지역’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제안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자체가 제안된 지역(농어촌지역, 도시지역) 중에서 일정한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국고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국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 생활·위생인프라, 일자리·문화, 복지 등 휴먼케어, 집수리 지원, 주민역량 강화 등과 관련한 사업 예산을 일정 기간(도시지역 4년, 농어촌지역 3년) 지원한다. 취약지역별로 최고 70억원 이내(사업비의 70%, 지방비 30% 매칭)에서 마을(가구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200가구 이상 지역 최대 70억원, 100가구 최대 35억 원 등)하고, 사업의 세부 내역별로 지원한다(예: 농어촌지역의 빈집 철거 시, 일반주택은 동당 1백만원 이내, 슬레이트주택은 동당 2.4백만원)를 적용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새뜰마을사업 대상지로 2015년에 85개소(농어촌 55개소, 도시 30개소), 2016년에 66개소(농어촌 44개소, 도시 22개소)를 선정하였고, 2017년에는 51개소(농어촌 35개소, 도시 16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2017년 새뜰마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의 특징을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읍면소재지와 거리가 먼 낙후 마을이나 섬 지역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과 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그 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어 주변과 생활 격차가 커졌던 마을(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단양군 매포읍 하사리,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완도군 노화읍 구목리, 신안군 암태면 당사리,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문경시 가은읍 죽문리,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함양군 휴전면 월평리 등)들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군사시설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제한으로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던 곳(화천군 간동면 오음리)과 도계(道界) 혹은 시·군계에 위치해 행정 지원이 미흡했던 마을(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옥천군 안내면 방하목리 등)도 선정되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게 됐다.

표 1-2-11 새뜰마을사업 대상지의 신규 선정결과(2017년)

시도	대상지역	
	농어촌(35개소)	도시(16개소)
서울(1)	-	금천
부산(3)	-	북구, 사상, 사하
대구(1)	-	남구
인천(1)	-	동구
광주(1)	-	남구
강원(5)	정선, 화천	속초, 영월, 태백
충북(4)	단양, 보은, 옥천, 제천	-
충남(5)	예산, 금산, 서천	보령, 홍성
전북(7)	무주, 고창, 임실, 순창, 완주, 장수	김제
전남(8)	완도, 장흥, 해남, 신안, 곡성, 여수, 무안, 강진	-
경북(7)	의성, 고령, 문경, 군위, 영양, 영덕	영주
경남(8)	함양, 거창, 의령, 사천, 하동, 창녕	김해, 밀양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 보도자료(2017.3월)

한편, 도시 지역의 경우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 등에 의해 조성된 산비탈 달동네(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2동 대티고개마을, 강원 속초시 중앙동 일원 등)가 많으며, 공단이나 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마을(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철길마을, 경남 김해시 불암동 양장골마을 등)도 선정됐다. 아울러, 도심의 지하철, 철도, 터미널 인근 소규모 불량주거지로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안전·방범의 사각지대인 지역(부산광역시 북구 구포2동 구포마을, 충남 보령시 명천동 일원 등)도 포함됐다.

2017년에 선정된 51개소를 비롯한 전국 202개 새뜰마을에 대해서 지역발전

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농식품부와 국토부가 각각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 대상지별 취약요소와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 확보, 생활·위생인프라 확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표 1-2-12 2015~2017년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선정 현황

시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계	202	55개소	30개소	44개소	22개소	35개소	16개소
서울	2		1				1
부산	10		4		3		3
대구	3	1	1				1
인천	6	1	2	1	1		1
광주	4		2		1		1
대전	1		1				
울산	3		1		2		
세종	1		1				
경기	4	1	2	1			
강원	26	7	4	7	3	2	3
충북	19	7	1	5	1	4	-
충남	15	5	1	3	1	3	2
전북	26	8	2	6	3	6	1
전남	31	10	2	8	3	8	-
경북	25	8	1	7	2	6	1
경남	26	7	3	6	2	6	2
제주	1		1	-	-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 보도자료(2017.3월)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예산·평가 체계

제1절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및 주요 내용

1.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5.1.1. 시행) 이후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등 4개의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다. 생활기반계정은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되며, 경제발전계정은 부처편성사업으로 이루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경우 제주자율편성사업, 특별지방행정기관이관사무수행경비사업, 부처편성사업 등 3개 사업군으로 구분하고,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경우는 세종자율편성사업, 부처편성사업 등 2개 사업군으로 구분하여 종전 시·도자율편성사업과 부처편성사업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지자체의 재정부담 자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표 1-3-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전)와 지역발전특별회계(2017년)의 편성체계 비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	사업	계정	사업
지역개발계정	① 시·도자율편성사업 ② 시·군·구자율편성사업	생활기반계정	① 시·도자율편성사업 ② 시·군·구자율편성사업
광역발전계정	③ 부처편성사업	경제발전계정	③ 부처편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계정	④ 제주자율편성사업 ⑤ 특행기관 이관사무 ⑥ 부처편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계정	④ 제주자율편성사업 ⑤ 특행기관 이관사무 ⑥ 부처편성사업
(신설)		세종특별자치시계정	⑦ 세종자율편성사업 ⑧ 부처편성사업

2.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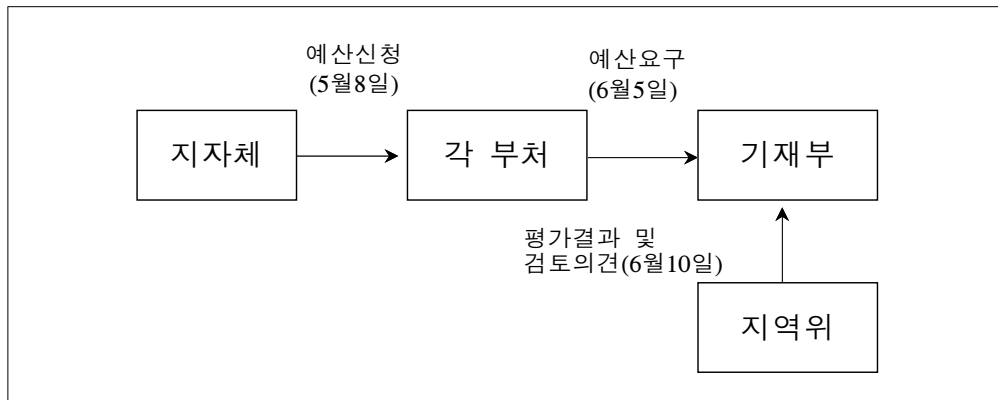
(1)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생활기반계정의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제주계정의 제주자율편성사업, 세종계정의 세종자율편성사업은 지자체가 사전에 주어진 예산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시·도 협의를 거쳐 시·도/시·군·구별 예산신청한도를 결정·시달하고, 시·도는 신청 한도 내에서 관할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신청사업의 우선순위를 명시한 예산신청서를 소관 부처에 제출한다.

각 부처는 지자체의 예산신청(안)에 대하여 국가정책과의 정합성·중복성 및 사업타당성을 점검하고,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및 지역발전위원회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지자체와 협의·보완 후 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그림 1-3-1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예산 편성 절차(2017년 기준)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은 37개의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는데 그 중 31개 포괄보조사업은 시·도 자율편성, 낙후지역 개발 등과 관련된 6개 사업은 시·군·구 자율편성으로 운영된다. 시·도는 신청한도 내에서 31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하여 자원배분

을 하며, 시·군·구는 신청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별 기초생활권 개발사업 등을 선택하여 재원 배분을 하게 된다.

표 1-3-2 포괄보조사업 지원 대상

	부처	포괄보조 사업명	내역사업(예시)
시·도 자율 편성 사업	문체부	①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 박물관, 문예회관 등
		② 관광자원 개발	· 관광지 개발 등
		③ 체육진흥시설 지원	· 생활체육공원 등
		④ 지역문화산업기반 지원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
		⑤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문화재청	⑥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 지역문화유산 개발
	농식품부	⑦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농촌체험관광 지원 등
		⑧ 농업기반정비	· 밭기반 정비 등
		⑨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향토산업육성 등
	해수부	⑩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어촌체험 관광지원 등
		⑪ 어업기반정비	· 지방어항 등
		⑫ 해양 및 수자원 관리	· 연안정비 등
		⑬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농진청	⑭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산림청	⑮ 산림경영자원 육성	· 임산물 수출촉진 등
		⑯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 숲길 조성·관리 등
		⑰ 임도시설(국유림 제외)	· 임도시설
	산업부	⑱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등
	중기청	⑲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물류 기반지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여가부	⑳ 청소년시설 확충	· 청소년시설 확충
	환경부	㉑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㉒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 지역생태계 복원 등
		㉓ 생태하천복원	· 생태하천 복원
		㉔ 노후상수도 정비	· 노후 상수관망·정수장
	국토부	㉕ 대중교통 지원	· 하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등
		㉖ 지역거점 조성지원	·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㉗ 주차환경개선지원	· 공영주차장건설지원
	새만금청	㉘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 새만금 공업용수도 건설
	행자부	㉙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고용부	㉚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국토부	㉛ 성장촉진지역 개발	· 지역개발 지원 등
		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 주거지경 개선 등
	행자부	㉝ 특수상황지역 개발	·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농식품부	㉞ 일반농산어촌 개발	·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㉟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 63개 행복생활권 대상 등
	안전처	㊱ 소하천정비	· 소하천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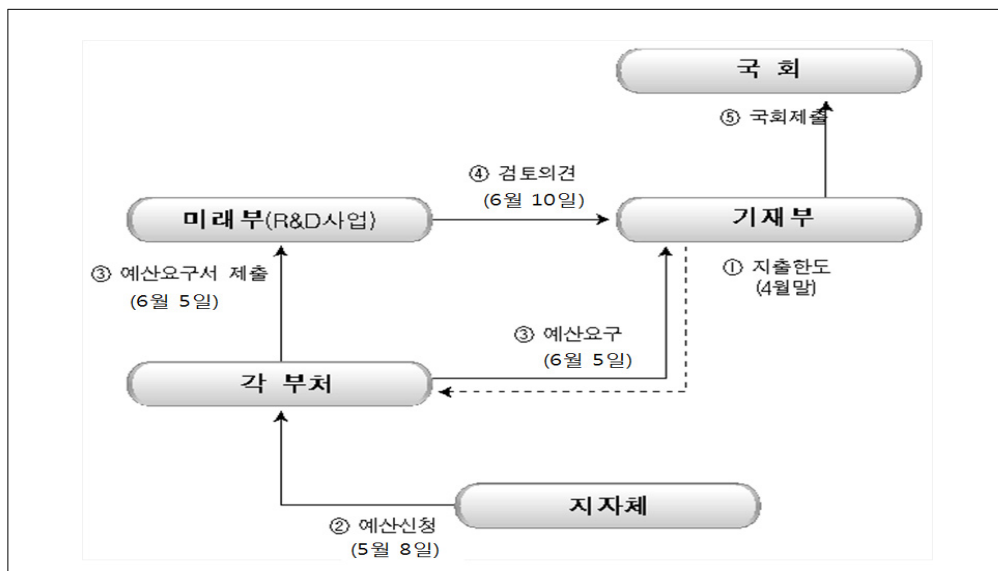
(2) 부처편성사업

경제발전계정 및 제주·세종계정의 일부 사업(부처직접편성사업)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총액 한도를 부여하고, 한도 내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한다.

기획재정부는 부처별로 지출한도를 결정하여 시달하고, 지자체는 자체 계획을 토대로 5월 8일까지 소관 부처에 예산을 신청한다. 각 부처는 사전에 주어진 한도 내에서 지자체 예산신청을 검토하여 작성한 예산요구서를 6월 5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R&D예산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에도 예산요구서를 6월 5일까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에 대해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지역발전위원회는 종전의 예산안 사전검토 대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8조제4항에 의거하여) 지역발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전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를 5월 31일까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6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림 1-3-2 부처편성사업 예산편성 절차



3.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주요 내용

(1)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

2017년 세입은 주세(33.9%), 일반·특별회계 전입금(59.0%)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주세 세입은 3조 3,338억 원으로 전년대비 1.3% 증가(32,921→33,338억원)하였고, 일반·특별회계 전입금은 5조 7,989억원으로 전년대비 2.9% 감소(59,743→57,989억원)하였다. 부담금 등 기타 수입은 6,892억원으로 전년대비 2.6% 감소(7,076→6,892억원)하였다.

표 1-3-3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 : 억원)

구분	2016년 예산	구성비	2017년 예산	구성비	증감	%
합 계	99,739	100.0	98,219	100.0	△ 1,520	△ 1.5
주세 100%	32,921	33.0	33,338	33.9	417	1.3
전입금(일반+특별)	59,743	59.9	57,989	59.0	△ 1,754	△ 2.9
개발부담금 등 기타	7,076	7.1	6,892	7.0	△ 184	△ 2.6

(2)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생활기반계정 4조 6,645억원, 경제발전계정 4조 7,288억원, 제주특별자치도계정 3,260억원, 세종특별자치시계정 1,026억원 등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5% 감소한 9조 8,219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주요 특징을 보면 경제발전계정이 3.9% 감소한 반면에 생활기반계정은 1.6% 증가하였다. 한편, 분야별로는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등 6개 분야의 투자가 증가한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국토 및 지역개발, 통신 등 6개 분야는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가장 많은 증가는 보건 분야로 24.7% 증가(2016년 490억원 → 2017년 611억원)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도 5.9% (2016년 7,964억원 → 2017년 8,436억원)하였다. 반면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3%(2016년 2,716억원 → 2017년 2,32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7%(2016

년 11,199억원 → 2017년 10,002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7%(2016년 14,521억원 → 2017년 13,543억원) 감소하였다.

농림수산 분야가 전체 세출의 21.5%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 및 물류(16.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3.8%) 등의 순이다.

표 1-3-4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계정별)

(단위: 억원)

구분	2016년 예산	구성비(%)	2017년 예산	구성비(%)	증감	
						%
합 계	99,739	100.0	98,219	100.0	△ 1,520	△ 1.5
생활기반계정	45,901	46.0	46,645	47.5	744	1.6
경제발전계정	49,184	49.3	47,288	48.1	△ 1,896	△ 3.9
제주특별자치도계정	3,618	3.6	3,260	3.3	△ 358	△ 9.9
세종특별자치시계정	1,037	1.0	1,026	1.0	△ 10	△ 1.0

표 1-3-5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분야별)

(단위: 억원)

구분	2016년 예산	구성비(%)	2017년 예산	구성비(%)	증감	
						%
합 계	99,739	100.0	98,219	100.0	△ 1,520	△ 1.5
일반·지방행정	2,338	2.3	2,352	2.4	14	0.6
공공질서 및 안전	2,716	2.7	2,328	2.4	△ 388	△ 14.3
교육	8,830	8.9	9,106	9.3	277	3.1
문화 및 관광	7,964	8.0	8,436	8.6	472	5.9
환경	8,387	8.4	8,825	9.0	437	5.2
사회복지	3,875	3.9	3,998	4.1	123	3.2
보건	490	0.5	611	0.6	121	24.7
농림수산	20,857	20.9	21,139	21.5	282	1.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4,521	14.6	13,543	13.8	△ 978	△ 6.7
교통 및 물류	16,945	17.0	16,347	16.6	△ 598	△ 3.5
국토 및 지역개발	11,199	11.2	10,002	10.2	△ 1,197	△ 10.7
과학기술	1,554	1.6	1,475	1.5	△ 79	△ 5.1
통신	65	0.1	59	0.1	△ 6	△ 9.8

제2절 지역발전사업의 평가체계

1. 평가목적 및 방향

지역발전사업 평가는 지역발전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주체의 바람직한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4년 추진실적에 대한) 2005년의 첫 평가 이후 매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있다. 동 평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12조~제14조의 2)에 근거하여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함으로써 지역발전사업을 정기적·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데 의의가 있다.

2017년에는 2016년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존 평가제도의 틀이 일부 개편되었다.

첫째, 생활계정의 경우, 과거 기획·과정 중심에서 성과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기획(30점)·집행(30점)·성과(40점)에서 기획(20점)·집행(30점)·성과(50점)으로 개선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한편,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공통 성과지표(총괄관리지표)를 도입하여 성과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유사·중복 평가지표는 간소화, 즉 기존 6개 평가지표(하위 15개 점검항목)를 4개 평가지표(하위 7개 세부항목)으로 개편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둘째, 경제계정은 전년도에 도입된 통합재정사업평가 제도에 따라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사업(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즉 일반재정사업, 연구개발사업, 지역사업 등)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수행부처의 지역사업 자체 평가에 대하여 메타(상위)평가를 실시하였다. 다만, 부처 수행 자체평가지표를 기존 4개 지표에서 3개 지표로 간소화하였고, 결과 지표에 대한 평가점수를 상향조정(기존 60점 → 개편 70점)하여 성과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셋째, 평가일정 관련하여 지자체의 예산편성, 공무원 인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역위 평가를 2주 정도 앞당겨 실시하고, 차년도 예산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종 평가결과의 지자체 통보를 5월초에 실시하였다.

넷째, 사업단위 평가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지역발전정책 분야 단위의 종합성

과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제언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발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을 전년도에 이어서 2017년에도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표 1-3-6 2017년 지역사업 평가제도의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추진전략	2016년 평가제도	2017년 평가제도
평가효율화 및 평가 조기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부처 자체 평가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 결과 단계의 4개 지표 - 관리(40), 결과(60) ▪ [생활]기획·집행·성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30)·집행(30)·성과(40) - 6개 평가지표, 15개 점검항목 ▪ [생활]평가일정과 기재부 예산편성 시기 일부 중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평가결과 제출(2월말) - 지역위 평가(3~4월말) - 예산신청(4월말), 최종결과 확정(5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부처 자체 평가지표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 결과 단계의 3개 지표 - 관리(30), 결과(70) ▪ [생활]성과중심 평가체계 개선 및 자체 평가지표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20)·집행(30)·성과(50) - 3개 지표, 7개 세부항목 (유사·중복지표 통폐합) ▪ [생활]지자체 예산편성, 인사시기 고려하여 평가일정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평가결과 제출(2월초) - 지역위 평가(2~4월) 및 최종결과 지자체 통보(5월초) * 약2주 당겨 평가결과 통보
피평가자 부담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세부사업 기준으로 평가(58개) ▪ [경제]성과보고서와 자체 평가보고서 별도 작성·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평가대상 사업단위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사업 기준으로 상향(44개) ▪ [경제]성과보고서와 자체 평가보고서 통합(통합성과보고서)
환류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지출구조조정 목표 일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평가대상사업 예산의 1%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지출구조조정 목표 차등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평가대상사업 예산의 (우수부처) 0.8% 이상 (보통부처) 1% 이상 (미흡부처) 1.2% 이상

2. 평가 대상사업 및 평가등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 대상은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으로서 시행계획에 담긴 모든 사업(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 지방비 및 비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나, 평가의 중복 방지, 평가 일정, 평가 실익 등을 고려하여 2016년 지특회계(경제계정, 생활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로 지원된 사업에 한정하

였다. 다만, 사업단위 평가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지역발전정책 분야 단위의 종합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부문별 시행계획의 경우는 20개 실천과제 단위, 시도 시행계획의 경우는 시도별 5대 분야 단위를 대상으로 점검 및 컨설팅을 함께 실시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평가대상사업을 2017년에는 지특회계로 지원된 부문별·시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들로 경제계정, 생활계정, 제주계정 및 세종계정의 4개 계정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하였다. 사업체계는 2017년 지특회계 예산작성지침(2016년 4월)의 체계에 따라 경제·제주계정은 단위사업 단위로 총 44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생활·제주·세종계정의 시·도 자율편성 30개 포괄보조사업과 시·군·구 자율편성 5개 포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가 수행하는 828개 포괄보조사업(세부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등급은 3단계(우수, 보통, 미흡)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예산기준으로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 등으로 평가등급을 강제 부여하도록 하였다. 경제·제주계정은 소관 부처별 평가대상사업 간 비교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였고, 생활·제주·세종계정은 지자체 내 포괄보조사업 간 비교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였다.

경제계정 사업 중 착수 2년 이하 신규사업, 종료사업(평가연도 포함 이전 완료사업), 지역발전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기관운영지원사업, 제주계정 사업 중 특별행정기관 위임사무 관련 사업 등 평가 실익이 낮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1-3-7 경제계정 평가대상 - 부처별 사업수 및 예산

구 분	미래부	교육부	행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사업수(개)	3	7	3	2	1	5	3	9
예산(억원)	1,363	8,874	695	2,418	77	9,491	319	17,876
구 분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새만금청	안전처	복지부	
사업수(개)	1	2	2	2	1	1	1	
예산(억원)	173	476	706	1,836	7	244	568	

표 1-3-8 생활계정 평가대상

구 분	시·도 자율편성	시·군·구 자율편성	합 계
사업수(개)	397	431	828
2017년 예산(억원)	30,041	16,265	46,306

3. 평가체계 및 절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2009년 4월) 이후 지역발전사업 평가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평가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평가계획 수립, 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 등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종합평가(메타(상위)평가)를 총괄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은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지자체는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평가자문단(2017년 150명 - 경제계정 43명, 생활계정 107명)은 지역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 평가 자료를 토대로 종합평가하도록 하였다. 전문평가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지역위 종합평가 및 관련 기관 자체평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림1-3-3 2017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체계



평가방법의 경우, 2016년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는데, 첫째, 경제계정 평가의 경우, 통합재정사업평가 제도에 따라 ①부처별 자체평가, ②부처별 통합성과보고서(기존 사업별 자체평가보고서와 부처 단위 성과보고서의 통합) 작성, ③지역위 메타평가(지역발전사업 분야의 평가), ④메타평가협의회(기재부(일반예산사업) · 미래부(국

가R&D사업)·지역위(지역발전사업) 등 3개 메타평가부처로 구성)를 통한 지역사업 분야 메타평가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부처별 자체평가는 사업관리의 적절성,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기타 가점(지역일자리 창출, 연계협력 등 지역발전 성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는 부처의 평가대상사업 전체에 대해 ‘예산규모 기준’ 및 ‘사업수’ 모두를 적용한 상대평가, 즉 우수(20% 이하), 보통(65% 내외), 미흡(15% 이상) 3단계로 등급화하였다. 지역위 메타평가는 부처의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에 대해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지출구조조정의 적정성 등 3개의 평가항목, 6개 평가지표⁴⁾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사업별 확인·점검은 실시하지 않고) 분야별 메타평가 점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생활계정 평가의 경우, ①지자체의 포괄보조사업별 자체평가보고서, 시·도별 종합보고서 작성, ②지자체의 자체평가(시·도 자율편성사업은 점수·등급 부여,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등급 없이 점수만 부여), ③지역위 상위·종합평가(시·도 자율편성사업에 대해서는 상위평가,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등의 기존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지자체의 자체평가(시·도 자율편성사업)는 시도별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기획, 사업집행, 사업성과 등 3개의 평가부문 아래 7개의 평가지표⁵⁾의 기준을 일부 개편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는 지자체별 평가대상사업 전체에 대해 ‘예산 규모 기준’으로 상대평가, 즉 우수(지자체별 예산기준 20% 이하), 보통(지자체별 예산기준 65% 내외), 미흡(지자체별 예산기준 15% 이상)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였다. 다만,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는 시·군·구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별 점수를 부여하고, 자체평가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시·도 자율편성사업에 대한 지역위의 상위평가는 지자체별 자체평가에 대해 평가과정, 평가결과 등 2개의 항목 아래 6개의 점검항목⁶⁾을 기준으로 배점의 70% 이상인 경우는 자체평가를 ‘적절’한 것으로, 70% 미만인 경우는 ‘부적절’로 판단하였다. 지자체의 자체평가가 ‘적절’하고, 사업별 확인·점검 결과도 ‘적절’하

4) (1-1)자체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1-2)자체평가 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2-1)성과계획에 따른 평가실시 여부, (2-2)상대평가 준수여부, (3-1)지출구조 조정규모 달성도, (3-2)지출구조조정 내역의 적정성

5) ①포괄보조사업의 계획 수립의 적절·구체성 ②사업주체간 합의과정의 충실성 ③포괄보조사업의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⑤제시한 성과목표의 달성도 ⑥과급효과, 연계협력 사례·성과 등의 적절성 ⑦포괄보조사업 대표 우수성과의 적절성

6) ①포괄보조사업 성과평가체계 및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②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③평가 배점의 적절성 ④평가등급과 평가의견과의 부합성 ⑤등급개분 기준 준수 여부 ⑥전략적 왜곡 가능성

다고 판단되면 자체평가 결과로 상위평가 결과를 같음하였으며, 자체평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 해당 지자체의 사업 전체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별 점수 및 평가등급을 조정하였다. 한편,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지역위가 포괄보조사업별로 지자체간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별 점수 및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셋째, 2015년도 지역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정책진단)의 경우, 사업단위 평가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지역발전정책 분야 단위의 종합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제언을 강화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성과목표⁷⁾ 달성도(자체평가결과)를 정성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부문별 시행계획의 평가는 20개 실천과제별 2016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도를 점검하였고, 시·도 시행계획 평가는 17개 시도별 전체 및 5대 분야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점검하였다.

평가 절차의 경우, 경제계정 평가는 ‘부처 자체평가 → 지역위 메타평가(1차 평가 → 1차 이의제기 → 2차 평가)’, 생활계정 평가는 ‘지자체 자체평가 → 지역위 상위평가(1차 평가 → 1차 이의제기 → 2차 평가 → 2차 이의제기 → 3차 평가)’ 등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이후 2016년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는 정책기획·평가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확정된 평가결과는 사업별 성과 및 개선의견, 중점이슈 사항을 중심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평가결과 평가대상 사업별 등급을 공개하였다.

4. 평가결과 및 활용

2016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부처·시도별 자체평가는 비교적 적절하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부합하는 주민체감형 성과가 창출되도록 종합적 성과관리 및 포괄보조단위의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7) 2015년 시행계획 수립 시, 실천과제 및 시도 단위의 성과목표·지표를 최초로 설정하였으나, 평가의 준거로 활용하기에는 적정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어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2016년 시행계획에 반영된 성과목표·지표를 2015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준거로 활용하기 위해) 성과목표·지표 점검을 사전에 실시하였다.

경제계정의 경우, 통합재정사업평가 지침에 따라 성과중심의 자체평가를 적절히 이행하였으며, 전략적 왜곡 없이 지출구조조정 목표액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반적으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상대평가 기준 및 지출구조조정 규모 준수 등은 우수하였으나, 예산집행 및 사업시행 과정상 발생한 문제와 관련한 외부 지적 사항 미기재, 성과목표 달성에 대한 근거자료 미제시, 성과계획서상 지표 미반영 등에 대한 성과관리 제고 방안 등이 향후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처의 자체평가 평가점수는 84.3점이며, 등급별 비율은 ‘우수’ 15.9%(7개), ‘보통’ 54.5%(24개), ‘미흡’ 29.6%(13개)로 평가되었으며, ‘미흡’ 사업(13개) 관련하여 7개 부처에서 총 297.3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계획(8개) 및 성과관리개선 대책(4개)을 제시하였다⁸⁾.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교육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국토교통부), 연구개발특구육성(미래창조과학부),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보건복지부), 산림경영자원육성(산림청),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산업통상자원부), 환경기술개발(환경부) 등 7개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평가되었다.

지역위의 메타평가 결과, 대부분의 부처가 ‘통합재정사업 평가지침’을 양호하게 준수하였으며, 15개 부처의 메타평가 평균점수는 71.6점⁹⁾으로 평가되었다. 부처별로는 농촌진흥청과 보건복지부가 85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행정자치부(80점), 국민안전처(80점), 농림축산식품부(80점) 순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메타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위에서는 지역분과 운영 부처(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5개) 중 최고 점수를 받은 교육부를 우수부처로, 전 부처 메타평가 최하위 점수를 받은 중기청을 미흡부처로 추천하였다. 이후 메타평가협의회의 지역사업분야 메타 평가에서 우수부처는 교육부, 미흡부처는 중소기업청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생활계정의 경우, 포괄보조사업 단위에 기반한 사업기획·추진이 강화되었으며, 지역주도의 사업추진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 등의 성과가 도출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사업기획 단계에서 지역특성을 반영, 사업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실적 등이 향상되었다. 다만,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시 사전에 성과지표·목표를 수립·확정함으로써 사

8) 미흡사업 중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교육부)의 경우는 2017년 일몰사업이라 지출구조조정 계획 및 성과관리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9) 메타평가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5개 항목 80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도 자율편성사업 자체평가에 대한 적절성 점검결과, 경북, 대구, 대전,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등 9개 시·도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적절로 판단하여 자체 평가등급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그 외 부적절로 평가된 8개 시·도에 대해서는 사업별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자체평가 '부적절'로 평가된 8개 시·도의 포괄보조사업(총 178개)에 대해 기획·집행·성과의 세부 평가지표별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도 자체평가의 평균점수 79.0점이 지역위 1차 평가 및 이의신청 평가 결과 68.8점으로 10.2점(12.9%) 하락하였다.

최종적으로 자체평가 '적절'로 인정받은 9개 시·도의 사업(219개)과 '부적절'로 재평가를 받은 8개 시·도의 사업(178개)을 모두 합한 397개 사업의 평균점수는 69.5점으로 평가되었다. 평가등급별로는 우수 65개(16.4%), 보통 244개(61.5%), 미흡 88개(22.2%)로 최종 확정되었다.

표 1-3-9 생활계정 평가 결과

자체평가의 적절성 점검결과		사업별 평가결과(등급별 비중 및 사업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적절 시·도 (9개)	대구, 대전, 세종, 인천,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자체평가 결과	17.9% (4개)	64.8% (14.3개)	17.3% (6개)
부적절 시·도 (8개)	광주, 부산, 서울, 울산, 강원, .경기, 경남, 충남	상위평가 결과	9.2% (2.5개)	68.4% (13.5개)	22.4% (6.3개)

* 시·도 등급별 평균 예산비중 및 사업수 기준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자체평가에 대한 상위평가는 평가에서 총 431개 사업을 기획, 집행, 성과의 각 세부 평가지표별로 지자체의 자체평가 결과를 검토¹⁰⁾한 결과, 지자체의 자체평가 결과는 평균 90.2점이었으나, 1차 평가 및 이의신청 평가 결과 평균 73점으로 17.2점(19.1%) 하락하였다. 평가등급별로는 우수 82개(19%), 보통 273개(62.9%), 미흡 76개(18.1%)로 최종 확정되었다. 대구는 수행 중인 모든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이 '보통' 등급(100%) 이상인 반면, 광주·대전·서울·세종 모두 '보통' 이하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10) 평가지표별로 1차 검토 후, 사업별로 지표별 검토결과를 취합하여 종합평가결과를 작성하였다(지표 담당위원과 사업별 담당위원 Cross-Check).

표 1-3-10 생활계정 시도별 포괄보조사업 최종평가 결과 (단위: 개)

시·도 자율편성사업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시도	우수	보통	미흡	합계	시도	우수	보통	미흡	합계
서울		6	4	10	서울		5	3	8
부산	2	18	4	24	부산	5	6	3	14
대구	4	13	3	20	대구	4	5		9
인천	1	18	3	22	인천	1	8	4	13
광주	2	11	7	20	광주		3	2	5
대전	4	8	5	17	대전		2	3	5
울산	2	13	3	18	울산	2	2	2	6
세종	6	8	2	16	세종		1	1	2
경기	4	14	9	27	경기	7	34	12	53
강원	5	14	8	27	강원	8	27	3	38
충북	3	17	5	25	충북	7	15	5	27
충남	4	16	8	28	충남	8	22	10	40
전북	3	15	12	30	전북	10	25	2	37
전남	5	14	10	29	전남	11	42	8	61
경북	5	18	4	27	경북	4	44	9	57
경남	2	15	10	27	경남	14	27	7	48
제주	4	19	7	30	제주	1	5	2	8
합계	56	237	104	397	합계	82	273	76	431

2016년도 지역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정책진단)의 경우,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부문별 시행계획은 첫째, 부처간의 협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계획 수립 시 주관부처와 협업부처간 협의·조정 과정이 필요하나, 협업부처 시행계획이 단순 취합되는 한계를 드러내 향후에는 시행계획 수립 전 연계사업 및 유사사업 주체간 협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점검되었다. 둘째, 성과지표·목표의 불일치가 확인되었다. 일부 부처에서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목표와 시행계획서상의 성과지표·목표가 상이하여 성과 측정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에는 시행계획의 성과지표·목표 설정시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목표와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점검되었다. 셋째, 부적절한 성과지표 설정이 확인되었다. 성과목표 달성도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설정시, 결과(Outcome)지표를 사용해야 하나 단순 투입·과정(Input·Process)지표 중심의 성과지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견되어 향후에는 성과지표 설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요구되며,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사업을 대

표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점검되었다.

시·도 시행계획은 첫째, 두 가지 경우에서 성과지표·목표의 불일치가 확인되었다. 성과계획서와 시행계획서간의 불일치와 부처와 시·도간의 불일치가 그 경우로, 향후에는 일치된 사업목적 달성과 원활한 성과달성도 측정 등을 위해 반드시 성과지표·목표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점검되었다. 둘째, 성과목표의 일관성 결여가 확인되었다. 성과목표 설정시 목표치가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연도별로 일관성 없는 목표치가 설정된 것으로, 향후에는 성과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목표치 설정시 일관성·연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점검되었다.

제2부

부문별 시책

제1장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제2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제3장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제4장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제5장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

제1장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제1절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1. 지역간 자율적인 협력체계 구축·강화

(1)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과거 외형 중심의 지역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위주로 한 HOPE 프로젝트 제시로 2013년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하였다. 2014년부터는 박근혜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주요 사업으로서 행정구역을 넘어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 기본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확대·개편하였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은 지자체 주민의 생활권 관점에서 단일 시·군 내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산업·복지·교통·관광 등의 서비스 확충을 위해 2개 이상 지자체간 공동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근 시·군 간의 연계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56개 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자체간의 협력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확산·촉진을 위한 시드 머니(Seed Money)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생활권 내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한편 지원 분야에 있어서 생활권사업으로서의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이로 인해 기초 인프라 등 생활권에 꼭 필요한 ‘주민체감형’ 사업이면서 생활권 협력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다. 특정 생활권 및 생활권 내 특정 시·군을 중점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생활권 내 균형적으로 지원하였다.

동 사업은 시·군구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으로 3개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자유롭게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예산사업에 없는 창의적인 사업, 다(多)부처적 사업 등 주민 복지 증진이 가

능한 사업을 우선 지원하였으며, 지역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사업 관련 부처들이 컨설팅-모니터링 등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였다.

표 2-1-1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 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주민만족도	81.1	81.8	82.1	82.4

표 2-1-2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현황

시도	생활권 구성 현황
서울(1)	서울+의정부+남양주+양주+구리+고양+파주+부천+성남+하남
부산(1)	부산+김해+양산+울주
대구(1)	대구+영천+경산+군위+청도+고령+성주+칠곡+합천
인천(1)	인천+부천+김포
광주(1)	광주+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대전(1)	대전+옥천+금산+계룡+논산
울산(1)	울산+양산+경주+밀양
세종(1)	세종+공주
경기(11)	고양+파주+김포 / 안산+시흥 / 군포+의왕 / 안양+과천 / 성남+용인+광주+하남 / 수원+용인 /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 / 평택+안성 / 광주+이천+여주+양평+가평 / 오산+화성 / 포천+연천+강원철원
강원(5)	춘천+홍천+화천+철원+양구 / 강릉+동해+삼척+태백 / 영월+평창+정선 / 속초+고성+양양 / 인제+양구 /
충북(5)	청주+증평+보은+괴산+진천 / 충주+제천+음성 / 제천+단양 / 옥천+보은+영동 / 음성+진천+증평+괴산
충남(6)	천안+아산 / 홍성+예산 / 당진+서산+태안 / 공주+부여+청양 / 논산+계룡+금산 / 보령+서천
전북(4)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 정읍+고창+부안 / 남원+임실+순창 / 무주+진안+장수
전남(6)	목포+무안+신안+해남+진도 / 여수+순천+광양+보성+고흥 / 나주+화순 / 영암+장흥+강진+완도 / 장성+영광+함평 / 담양+곡성+구례
경북(11)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 구미+김천+칠곡 / 안동+예천+의성+청송+양양 / 영주+봉화 / 상주+문경+예천 / 경산+청도+영천 / 의성+군위 / 성주+고령 / 울진+영양+영덕 / 김천+충북영동+전북무주 / 영주+충북단양+강원영월
경남(5)	창원+김해+함안 / 진주+사천+남해+하동 / 통영+거제+고성 / 창녕+의령+밀양+합천 / 거창+함양+산청
제주(1)	제주+서귀포(특광역시+제주 분과)

2013년도에 33개 사업을 선정하여 3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35개 사업

선정 및 650억원을 지원하여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을 통한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다. 2015년도에는 생활권을 63개로 확대하고, 42개 사업을 선정하여 650억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30개 사업을 선정하여 650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35개 사업을 선정하고 650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기초인프라 등을 확충하여 생활권 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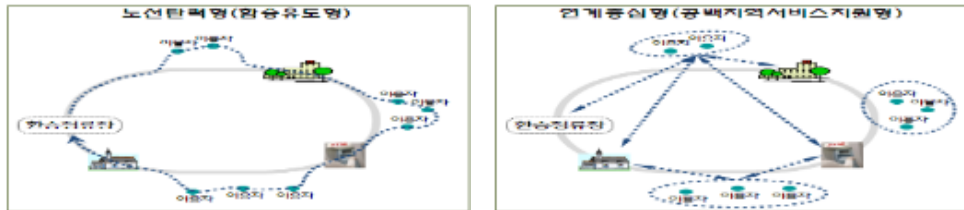
(2)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은 버스노선이 폐지되거나 감축되어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 또는 집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멀어 이동이 불편한 배후마을의 주민 등이 읍면 거점지역의 의료·문화·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적·대체적 대중교통 수단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도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시범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지역공동체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서비스 거점과 배후마을 간 접근성 향상 및 지역 활력 창출을 통해 주민의 체감복지를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표 2-1-3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연도별 지원 시·군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3개소 (12개 시·군)	21개소 (20개 시·군)	18개소 (17개 시·군)	18개소 (18개 시·군)
계속지원	버스형	-	양평군, 춘천시, 완주군, 순천시, 예천군, 울진군	창녕군, 청주시, 홍천군	보성군, 순천시, 춘천시, 정선군, 여주시
	택시형	-	안성시, 부안군, 완주군, 무안군, 의성군, 성주군, 함양군	고창군, 봉화군, 의령군, 해남군, 합천군	성주군, 천안시, 포항시, 청주시, 아산시
신규지원	버스형	양평군, 춘천시, 완주군, 순천시, 예천군, 울진군	창녕군, 청주시, 홍천군	보성군, 순천시, 춘천시, 정선군, 여주시	양평군, 횡성군, 해남군
	택시형	안성시, 부안군, 완주군, 무안군, 의성군, 성주군, 함양군	고창군, 봉화군, 의령군, 해남군, 합천군	성주군, 천안시, 포항시, 청주시, 아산시	전주시, 임실군, 봉화군, 합천군, 함안군

그림 2-1-1 농촌형 교통모델 개념도



도로망+수요+통행행태+배후지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

2014년도에 선정한 12개 시·군에 이어 2015년도에 8개 시·군을 추가로 선정하여,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의 버스환승 정류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환승거점 연계형 15개소, 농산물 직거래·농촌관광 등과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경제활동 지원형 2개소, 보건소, 목욕탕, 병원, 우체국 등 거점 복지시설과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복지서비스 접근형 4개소 등 총 20개 시·군 21개소 사업을 지원하였다. 2016년도에는 2015년 선정한 8개 시·군에 대한 지속 지원과 함께 신규로 선정한 9개 시·군까지 총 17개 시·군 18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2016년 선정한 10개 시·군에 대한 지속 지원과 함께 신규로 선정한 8개 시·군까지 총 18개 시·군 18개 사업을 지원하였다.

2014년부터 그해 지원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매해 농촌형 교통모델 이용객 대중교통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여, 사업 시행 이후 대중교통 만족도가 각각 2014년 88.6점, 2015년 89.1점, 2016년 90.5점, 2017년 91.5점으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7년도 추진성과로는 농촌형 교통모델 이용객의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도입전 41.6점 → 도입후 91.5점)가 2배 이상 증가하고 버스정류장까지 접근 보행시간(도입전 평균 32.8분 → 도입후 4.5분)과 버스 대기시간(도입전 평균 18.9분 → 6.2분)이 각각 86.3%, 67.2% 감소되는 등 교통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농촌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향상시켰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2015년 제작하여 배포한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사례집 및 가이드북 등을 통해 농식품부 주관 지원 사업 외에 지자체 자체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꾸

준히 늘고 있어 2014년 9개이던 자체 도입 운영 시·군이 2017년에는 121개로 크게 늘어났다.

2. 창조적 마을 만들기

(1) 성장축진지역 개발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낙후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기준으로 성장축진지역 70개 시·군을 지정하였다('09년). 2014년에는 지역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성장축진지역 재지정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홍천군, 태안군이 새롭게 성장축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정선군, 무안군은 지정 제외되었다.

한편 성장축진지역은 과거 신발전지역, 개발축진지구, 도서종합개발계획제도 등 제도로 별도 개발 및 지원되어 왔으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5.1.1시행) 되면서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발전축진형 지역개발과 도서종합개발계획제도에 따른 도서개발사업으로 통합 지원되고 있다.

발전축진형 지역개발계획은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제주를 제외한 각 도에서 10년 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획을 승인한다. 2017년말 기준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7개도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각 지자체는 이 계획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관광지 개발 등 각종 지역개발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포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에 2015년 1,506억원, 2016년 1,369억원, 2017년 1,392억원의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성장축진지역 내 187개 개발대상도서의 경우,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개발계획과 별도로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생활기반시설·소득증대시설 건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2016년 동안 연평균 600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되었으며,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08~’ 17)이 완료되는 2017년도에는 192개사업에 대해 699억이 지원되었다. 2018년도에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18~’ 27)이 수립·시행됨으로써 낙후 지역 도서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표 2-1-4 성장축진지역 지정 현황(2014년 9월 25일 기준)

시·도	성장축진지역
강원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홍천군 양양군(7)
충북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5)
충남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6)
전북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10)
전남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16)
경북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영천시 영주시(16)
경남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밀양시(10)
합계	70개 시·군

또한 2015년부터 성장축진지역 발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역 간 경쟁을 통한 양질의 지역개발사업 발굴을 도모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및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을 시행하였다.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는 대규모 SOC사업 위주에서 탈피,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창조융합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사업이 선정될 경우, 20억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된다. 2015년 26개, 2016년 22개, 2017년 19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투자선도지구 공모는 민간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지역개발 또는 신규 추진 지역개발사업을 선정·지원하여 지역 발전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성장축진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발전축진형과, 그 외 지역에서 시행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되며(수도권, 제주 제외) 사업이 선정될 경우 규제특례, 부담금 감면 등이 제공된다. 특히 발전축진형 투자선도지구의 경우 조세특례와 100억원 내의 국비가 추가 지원된다. 2015년 발전축진형 2개, 거점육성형 2개, 2016년 발전축진형 2개, 거점육성형 3개, 2017년 발전축진형 3개, 거점육성형 2개를 선정하였다.

표 2-1-5 공모사업 개요

구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투자선도지구
대상지자체	성장촉진지역	수도권, 제주지역 제외
사업개요	기반시설(H/W)과 문화 콘텐츠 등 S/W(타부처 사업 연계가능)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수도권·제주를 제외한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
지원방식	단일 시·군 사업은 최대 약 20억원, 복수 시·군 사업은 최대 약 30억원 지원(보조율 100%) * 고령친화형 공간정비사업은 최대 2억원	해당 지역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73종 규제특례, 세제 감면 및 재정지원* 등 * 발전촉진형 중 성장촉진지역에 한해 70~100억 원 이내
사업예시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생활복지 기반조성사업, 체험·관광시설 조성사업 등	2018년 7월 19일산업단지 및 물류·유통단지 조성, 관광단지 및 관광휴양시설, 역세권 사업 등

(2) 일반농산어촌개발(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제외)

2009년까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하여 각 부처별 특성에 따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행정 구역단위 분산투자, 중앙부처의 과도한 간섭, 지역 간 유사·중복사업 추진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 117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9년 이전에 각 부처에서 시행하던 15개 세부사업을 포함하는 4개 사업유형으로 개편하였다. 4개 사업유형은 첫째,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둘째,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셋째, 신규마을 조성사업, 넷째,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농촌생활환경정비, 농어업기반정비, 지역창의아이디어) 등이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4개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유형별 사업의 목적을 살펴보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읍·면소재지를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을 갖춘 농산어촌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서

비스 기능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이며,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농촌 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함이며,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은 일반농산어촌의 종합적인 정비,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용수 확보 및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지역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도시민들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시·도, 시·군에서 수립하는 시·도발전계획,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2015~2019년)[중전의 시·군단위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서 예산한도 내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고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기획·시행하도록 하였다.

표 2-1-6 주민만족도

(단위: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비고
주민만족도	81.1	81.8	82.1	82.4	

표 2-1-7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지역 현황

구분	123개 시·군
경기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강원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북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여주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울릉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경남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합천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세종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 사업이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참고자료 제공, 계획수립 및 사업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을 통해 시·군의 사업추진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2012년 120개 시·군, 1,114개 내역사업에 9,304억원, 2013년 117개 시·군, 1,151개 내역사업에 9,182억원, 2014년 117개 시·군, 1,381개 내역사업에 8,723억원, 2015년 116개 시·군, 1,515개 내역사업에 8,733억원, 2016년 123개 시·군, 1,548개 내역사업에 8,723억원, 2017년 123개 시·군, 1,632개 내역사업에 8,72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123개 시·군, 1,738개 내역사업에 8,794억원을 지원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기초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3) 특수상황지역 개발지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남북분단 및 도서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 도입(2009년 4월)에 따른 포괄보조금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소관부처에서 개별법에 의해 단위사업별로 추진해오던 사업을 관할지역별 부처가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15개 시·군과 성장촉진지역을 제외한 개발대상 186개 도서를 대상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사업별 중장기계획에 따라 국토의 불균형발전에 의한 소외·낙후지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기반 조성에 주력하였다. 2017년에는 276건의 사업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총 2,615억원을 투자하였다.

표 2-1-8 2017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건 수	사 업 비			
		계	국비(균특회계)	지방비	기타
계	276	261,534	189,401	72,133	
기초생활기반확충	152	174,458	127,045	47,413	
지역소득증대	85	64,082	44,414	19,668	
지역경관개선	32	21,431	16,692	4,739	
지역역량강화	7	1,563	1,250	313	

2010년 이후 특수상황지역(접경, 도서)에 꾸준한 예산투자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2017년 12월 특수상황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업만족도가 83.57%(매우 만족 39.13, 조금 만족 44.44%)로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2,523억원을 투자하여 279건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특수상황지역의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각종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특성화·차별화된 사업추진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표 2-1-9 2018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건 수	사 업 비		
		계	국비(균특회계)	지방비
계	279	252,307	189,401	62,906
기초생활기반확충	181	169,972	124,851	45,121
지역소득증대	71	62,760	49,398	13,362
지역경관개선	23	19,142	14,806	4,336
지역역량강화	4	433	346	87

(4) 창조지역 사업

창조지역사업은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하여 창의적 발상으로 주민의 참여하에 경제·사회·문화적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 발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소규모 사

업으로 광의적이면서 동태적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창조성과 지역보유자원을 기초로 지역이 주도하는 내발성·주민참여·상향식 사업추진 등을 특징으로 한다.

창조지역사업은 2011년도부터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의 포괄보조 신규예산(지역계정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일부를 활용하여 매년 40억원 내외 규모로 20여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여 왔다. 사업대상은 문화예술, 자연자원, 첨단산업, 스포츠 이벤트, 관광자원, 농식품 등 ‘새로우면서 차별성이 있고 독특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지역개발에 적용시키는 일체의 지역개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선정기준은 사업 적합성(20%), 내용의 창조성(30%), 효과성(25%), 타당성(15%), 추진체계(10%) 등이며, 제외되는 사업의 경우는 하드웨어사업 비중이 30% 이상 사업, 주민참여가 전혀 없거나, 미미한 관 주도 사업, 창조성·차별성이 낮은 사업(지역내 또는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 경쟁이 심하고,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정부 보조금 종료 후에 사업 지속가능성 및 파급효과가 적은 사업을 들 수 있다.

국고예산 지원현황은 2017년말 기준으로 142개 사업에 국비 759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3개 사업, 2012년 16개 사업, 2013년 18개 사업, 2014년 27개 사업, 2015년 21개 사업, 2016년 19개 사업, 2017년 28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표 2-1-10 연도별 국비지원 현황 및 2017년 신규사업 예산 내역

구 분		연도별 창조지역사업 국비예산 지원내역							
		'11	'12	'13	'14	'15	'16	'17	합계
신규사업(건수)		13	16	18	27	21	19	28	142
지원금 (억원)	신규	42	56	54	59	43	24	32	310
	계속	-	33	81	115	104	74	42	449
	합계	42	89	135	174	147	98	74	759

표 2-1-11 2017년 신규 선정사업 현황(28개)

사업구분	소관부처	선정건수	'17년 지원액(3년간 지원액)
특수상황지역개발	행정안전부	3건	4.5억원(7.6억원)
일반농산어촌개발	농림축산식품부	20건	23억원(91.2억원)
도시활력증진	국토교통부	5건	4억원(4억원)
합 계		28건	31.5억원(102.8억원)

권역별		사업명	비고
수도권	서울	중구	을지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Renewal 을지로”
	경기	양평군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헬스투어운영 사업
		김포시	김포시 역사자원(조강, 애기봉, 덕포진) 화창조사업
강원권	강원	화천군	다문화·저소득 청소년과 함께하는 『꿈나눔 오케스트라』 사업
		평창군	계촌 클래식 마을 육성
		영월군	친환경에너지 체험마을 육성
충청권	충북	보은군	농촌 휴면(休眠)공원 창조적 콘텐츠 재생사업
		충주시	“자전거 타고, 자유학기路 사업
		제천시	300년 찬우물 소나무숲 자연치유 명소화 프로젝트
	충남	논산시	논이랑 산이랑 자연담은 밥상공동체 육성사업
		금산군	예(藝)들아 금산 가자!
		태안군	곰섬마을, 치유의 불로장생을 다 담다
		홍성군	사회적 농업 특구 !! 큰별 홍성
호남권	전북	순창군	생산농가 원스톱 통합마케팅 플랫폼 구축사업
		고창군	천년의 보물찾기 팜팜! 스테이션
		광주	광산구
	전남	담양군	생생지락, Again 청춘
		고흥군	천년담양, 인문학으로 디자인하다
		장성군	고흥 이야기(설화) 천국 창조 사업
		완도군	공정의 컬러마케팅! ‘노란예술마을’ 감성여행
		목포시	온 가족이 즐기는 바다의 향 ‘싱싱완도’ 사업
영남권	경북	상주시	숨으로 덮인 섬 고하도 여행
		고령군	시의전서 전통음식 명품 산업화 사업
		봉화군	360°로 보고 즐기는 대가야고령 VR콘텐츠화 사업
	울산	울주군	神을 매료시킨 마법의 꽃 소득화사업
		경남	울주군
		밀양시	전통 웅기마을 6차산업 프로젝트
제주권	제주	서귀포	“날 좀 보~소” 밀양아리랑 세계화 콘텐츠 개발사업
		서귀포	‘보명, 알명’ VR로 만나는 제주의 설화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2017년에도 2월 평창에서 지자체 및 관계부처 담당공무원들과의 워크숍을 실시하고, 3월 부터는 신규 사업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별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방향, 효과적 추진방안 제언 등을 컨설팅을 실시 하였다. 이러한 워크숍,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모범이 될 만한 사례도 여러 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창조지역사업으로 2013년에 전북 완주군이 추진한 ‘두레농장사업’은 농촌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마련해 드림으로써 소득 증가뿐 아니라, 건강과 자신감까지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완주군의 ‘두레농장사업’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돼 오던 농장을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농작물의 독자 브랜드화를 실현하였고, 공동포장재 및 CI 개발, 공동 마케팅을 통한 직거래 판로 확보를 통해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해 가고 있다.

2014년에 충남 금산군이 추진한 ‘목조건축문화학교’ 사업은 금산 산림문화타운 및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한 차별화된 목조건축 체험·교육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도시민의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 증진과 귀농귀촌에 대한 대안 제시, 목조건축의 전문인재 양성,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지역주민 및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주거, 직업, 교육 등 관련 문제를 해소하고 삶의 행복을 지향하고 있다. 성인 및 청소년 대상 5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지원, 각종 경시대회 수상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성공사례들이 축적되고 각종 경험 공유의 자리들이 마련되면서 창조지역사업의 이념과 철학에 대해 공감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실생활과 맞닿은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다만, 지역발전위원회와 부처 간 이원화된 추진체계로 인한 비효율 발생과 관리 소홀 우려가 지적됨에 따라 ‘18년 신규 사업 부터 농식품부 등 부처가 선정을 주관하고, 위원회는 사업선정 심사 지원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일원화된 사업 추진체계 및 적정한 예산 확보 보다 중요한 과제는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발전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창의적인 소프트웨어를 콘텐츠로 하는 지역발전사업 추진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발전시키고 공감대를 더욱 넓혀나가는 일이라 할 것이다.

3. 지역공동체 활성화

(1)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농정 패러다임 역시 중앙정부 주도에서 주

민 참여 중심으로 전환되는 정책 환경의 변화에서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등에 따른 농촌 활력 저하에 대응하고자 2011년부터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을 지원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11~2013년까지 지자체를 통해 우수 농촌공동체회사를 공모하여 매년 54개소를 선정하였고, 개소당 5,000만원(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을 시제품개발, 홍보 등의 용도로 지원하였다. 2013년 11월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서비스 부족 등 지역 복지문제의 주민주도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를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방향을 개편하였다. 이에 2014년 우수 농촌공동체회사 사업 공모 시 소득사업유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을 구분하여 선정하였고, 신규 농촌공동체회사의 경우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만 선정함으로써 2013년 1개소에서 2014년 13개소를 발굴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표 2-1-12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현황

(단위:개소)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60	60	62	58	236
(사회서비스유형 지원)	(13)	(17)	(24)	(31)	(55)

표 2-1-13 농촌공동체회사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자원부족, 접근성 등으로 인한 농촌의 사회서비스 공급 부족 등 농촌사회문제해소를 위하여 복지·교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유형
복합형		사회서비스제공형과 소득사업유형의 사업을 함께 수행
소득사업유형	농식품 산업형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영농 지원 및 식품산업 육성 활동
	도농 교류형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도시민의 농촌 방문·체류 촉진 활동
	지역 개발형	생활 환경개선, 지역역량강화, 향토자원 발굴·상품개발 등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활동

2014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양적·질적 확대를 가져왔다. 우선 소득사업 유형과 사회서비스 유형을 합쳐 60개소(전년대비 6개소 증가)를 지원하였고, 소득사업

에 치중되었던 지원을 사회서비스제공형 회사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복지서비스를 주민주도로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2015년에는 2014년과 동일하게 60개소를 지원하였는데, 사회서비스제공형의 확대, 역량강화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대형 유통채널 진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질적 확대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2014년 13개소였던 사회서비스제공형 회사를 2015년도에는 17개소 발굴하였고, 2014년 13개소를 지원한 경영컨설팅을 22개소로 확대하였으며, 농촌공동체회사 및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농촌공동체회사의 발전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촌지역주민 5인 이상 참여하고, 지역 주민의 50% 이상 참여한 법인 또는 단체로 농촌공동체회사의 지원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 지역 활력 증대라는 사업 목적에 맞는 농촌공동체회사를 발굴·지원하게 되었다.

2016년에는 62개소의 농촌공동체회사를 지원하고, 그 중 사회서비스 제공형(복합형 포함) 농촌공동체회사 24개소를 발굴·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공동체회사를 육성·확대하는 정책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초기 영세하고, 체계화되지 않은 농촌공동체회사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함으로써 농촌공동체회사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였다.

2017년에는 58개소의 농촌공동체회사를 선정하고 그 중 53개소를 지원하였다.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컨설팅도 새로이 추진하였다.

향후 농촌에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농촌지역 고령화와 소득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 고령자를 고용하는 농촌공동체회사를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맞춤형 역량 제고를 위해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및 홍보 지원 등을 통해 농촌공동체회사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농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여러 부처에서 다양하게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재원을 지역에 투입하여 마을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되고 마을리더, 전문가 및 시·군 담당공무원 등 일부

의 주도하에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일부 마을의 경우 사업 추진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 추진 후에도 주민들의 관심 및 참여 부족으로 인해 일부 시설물이 방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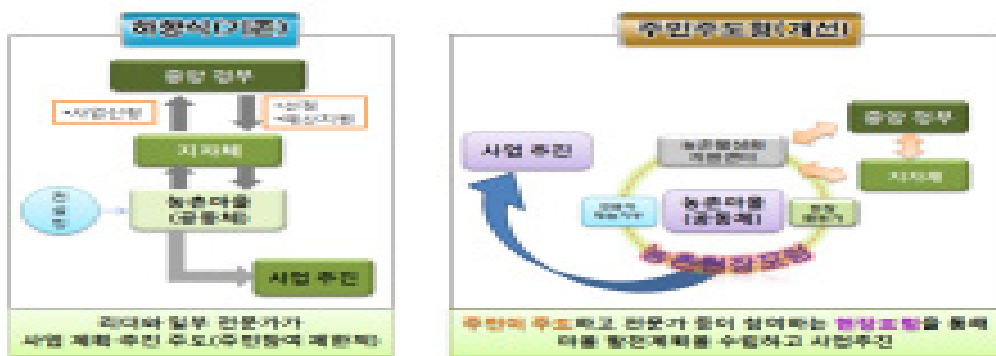
이를 개선하고자 2011년부터 도농상생과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농촌마을을 마을마다 특색이 살아있는 색깔마을로 가꾸어 나가도록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핵심과제 중 하나가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이고,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농촌 현장포럼이다.

표 2-1-14 농촌 현장포럼 추진 마을 수

(단위 : 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농촌현장포럼 추진 마을 수	37	234	350	418	418	417	1,874

그림 2-1-2 마을사업 추진 체계



농촌 현장포럼이란 주민이 현장활동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마을이나 권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과 역량을 분석·진단하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마을의 발전계획이나 마을에 필요한 자율적 결과물 도출을 목표로 한 주민 참여형 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이자 주민협의 프로그램이다. 2012년 37개 마을 시범운영을 거쳐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하여 농촌 현장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개발사업을 기존의 하향식 마을개발사업에서 주민이 주

도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포럼을 통해 마을 공동과제 수행으로 주민결속 및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여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마을 개발사업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촌 현장활동가란 농촌현장포럼 기획 등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지자체 정책 기획, 마을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행정 전문인력으로 마을만들기 업무 관련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육성 및 관리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초급과정 18회 348명, 심화과정 2회 22명이 수료하였으며, 고급과정 수료자에 대해서는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현장밀착형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색깔있는 마을 육성 등 농촌지역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학과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도별 1개소씩 총 9개소의 농촌 활성화지원센터를 구축하였다.

(3) 귀농귀촌 정착지원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외환위기·IMF, 경기침체, 전원생활 등 사회·구조적 변화,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재인식에 따라 귀농귀촌이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사회 트렌드가 됨에 따라, 정부는 2009년 4월과 2012년 2월에 당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본격적인 귀농귀촌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7.21시행)」을 마련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17-2021)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16.11.21)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인구 유입 위주의 양적 확대 정책에서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촌활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귀농·귀촌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2013년부터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사전 준비단계에서는 정보제공·상담·교육을, 실행단계에서는 농업·농촌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조성을 추진 중이며, 정착단계에서 이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농

지 확보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산업 창업도 본격적으로 정책화하고 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다.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조기퇴직, 은퇴 등으로 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하는 도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농식품산업 관점에서는 타 산업분야의 경험과 지식·기술·자본력을 보유한 유능한 인력의 유입을 통해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농지·멘토-멘티 사업 우선·우대 지원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의 관점에서는 고령화·노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인구 유입을 통해 문화, 관광, 서비스 분야 등 파생효과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활력 증진에 기여하는 바 크다.

청년, 도시민 등 (예비)귀농·귀촌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14.7월, 수원→서울)를 이전하여 콜센터 상담원 확대, 교육시설 확충 등 귀농·귀촌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 농지, 주거, 창업자금 등 귀농·귀촌 관련 정보·상담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한편, 귀농·귀촌아카데미, 소그룹 강의, 찾아가는 귀농·귀촌 one day 특강, 지자체의 상담·교육 운영 등을 통해 귀농·귀촌에 관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귀농·귀촌종합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1년 이래 매년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를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다양한 정보와 상담·체험 기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컨설팅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을 통한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으로 지자체 인구가 증가하여 폐교 위기의 학교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경력과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공동체의 리더 역할 수행 사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효율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 유형별·단계별로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귀농·귀촌 교육체계를 개편(2017년)하였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정책과 귀농인의 집 등 귀농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2017년)하였다.

교육 효과성 제고 및 교육생 동기부여를 위해 30% 수준의 자부담 비율은 유지하되 교육생 여건 및 환경에 따라 교육생 자부담 비율을 차등 지원하였으며, 2030세대 젊은 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한, 교육기관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상담·체험 및 홍보를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2007-2009) 후 2010년부터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을 확대(22개 시·군 → 58개 시·군)하는 등 도시민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시·군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 활성화 워크숍 및 현장점검 등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가족과 함께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농촌적응, 영농교육·실습, 농촌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8개소 건립을 목표로 2017년까지 금산, 제천, 영주, 홍천, 구례는 완공되어 운영중이고, 나머지 영천, 고창, 함양 3개소는 2018년 준공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다. 2014년 3월 금산센터가 처음 준공된 이후 입교자 모집·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 홍천, 구례센터가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입주자들에게 일손부족 농가를 중심으로 농가실습교육을 알선하고 이를 마을 주민과의 자연스러운 교류 확대로 이끌어 해당 지역의 정착을 유도하였다.

귀농 초기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하여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였다. 지원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구입, 시설건립 등 영농기반 마련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총 융자 규모 2,000억→3,000억)하였다.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15.1.20)하였다. 동 법률의 제정으로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귀촌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체계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든든한 초석을 마련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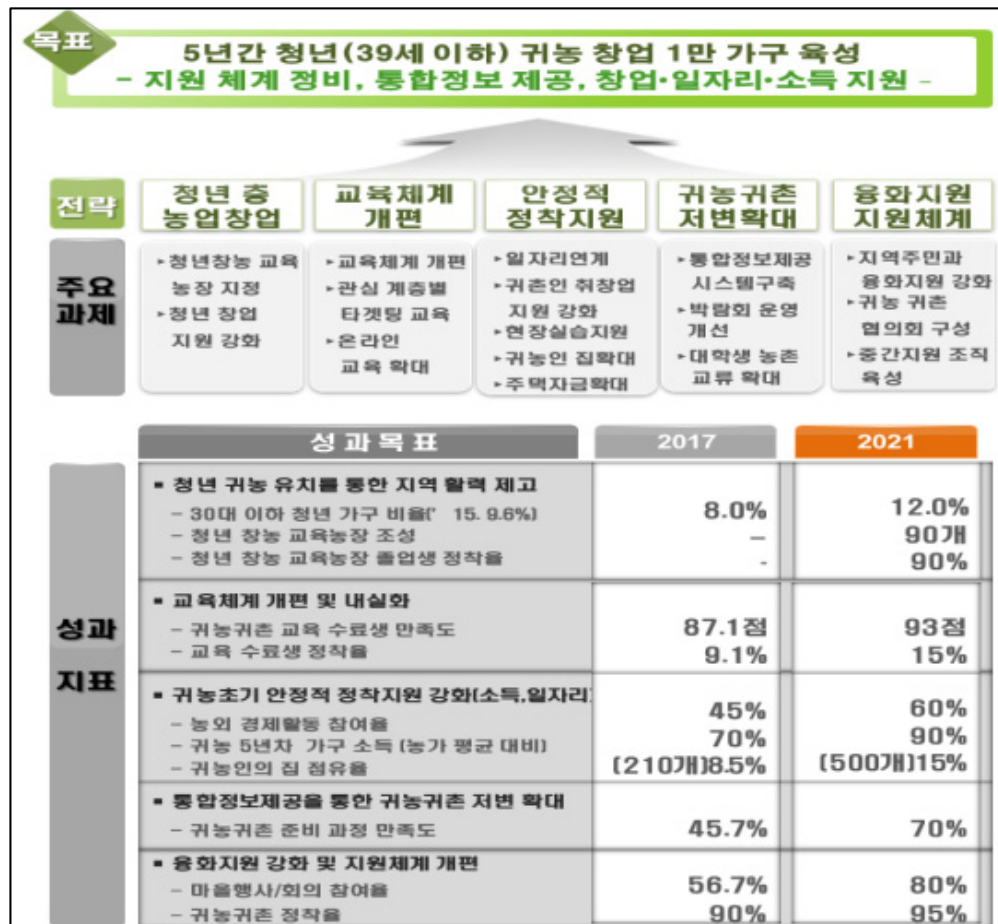
귀농·귀촌 관련 정부의 정책 지원은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귀농·귀촌 실행 전에 충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농업·농촌의 신규 인력 확보와 농촌지역 농식품산업 활성화,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가치 추구 경향 확산 등으로 귀농·귀촌 추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지원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정보 제공, 교육·장기실습, 자금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확대·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표 2-1-15 추진성과 성과

(단위:%)

구 분	2014	2015	2016	2017	비 고
귀농 가구수 증가율(목표)	5.5	2.0	8.2	4.5	'17년 실적은
실 적	0.4	9.0	8.5	(4.5P)	'18.6월말 통계청에서
달성율	7.3	450.0	103.7	100.0	발표 예정

그림 2-1-3 (2017-2021)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16.11.21)



(4)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 자체규약을 정해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을 통해 수산자원 및 어장환경 관리 역량, 어업 경영 능력 제고 및 어촌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을 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사업 신청 후에 자체 규정을 근거로 하여 금어기 및 금지채장 등을 실천하여 자원을 조성하고 해안가 쓰레기 줍기, 폐어구 자체 수거 등을 통해 어장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매년 이러한 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받아 최종적으로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경우 인센티브 형식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정부 주도의 수산자원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자율관리어업은 2001년 63개의 공동체로 시작하여 2017년에는 총 1,170개 공동체로 증가하는 양적 성장을 보였다.

표 2-1-16 연도별 유형별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수

구분	'11	'12	'13	'14	'15	'16	'17
공동체(개소)	932	989	1,039	1,086	1,131	1,160	1,170
(전년대비 증가율, %)	(8.0%)	(6.0%)	(5.0%)	(5.0%)	(4.1%)	(2.5%)	(0.9%)
마을어업	465	490	502	518	539	551	554
- 양식어업	89	96	98	98	102	102	105
- 어선어업	175	183	200	207	219	224	227
복합어업	153	165	176	189	193	199	201
내수면어업	50	55	63	74	78	83	83
참여어업인(명)	63,860	66,410	67,687	69,098	70,672	71,762	72,626
(전년대비증가율, %)	(4.8%)	(4.0%)	(2.0%)	(2.0%)	(2.3%)	(1.6%)	(1.2%)

그동안 자율관리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대회 개최(2003년), 자율조정협의회(2004년), 자율관리 공동체 등급화 도입(2005년), 자율관리어업 평가위원회(2006년) 운영 및 민간건설턴트, 명예홍보위원 제도 도입(2007년) 등을 하였다. 2009년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어업의 자율관리 지원)를 제정하였고, 2011년에는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2014-177)을 제정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수산자원의 공유자원적 성격으로 인한 관리체계인 규제와 처벌에서 탈피하여 어업인 스스로 자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의식개혁 등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확산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자발적으로 조업질서를 형성하고 불법조업을 예방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과 수산자원관리에도 상당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브랜드화, 생산물 판매망 구축, 자체자금 적립 등 경영개선을 통해 약 1,002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7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 경제적 효과(한국수산업 수산정책연구소, 2016)

구분	최소	최대	중간값
합계	862억 원	1,142억 원	1,002억 원
어장관리	55	102	79
자원관리	269	495	382
경영개선	528	528	528
질서유지	10	17	14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크게 육성사업비 지원,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 확산교육비 지원으로 나뉘며 2017년 전체 사업비(국비 기준)는 6,929백만원이다. 개별 공동체가 자체적인 자율관리 규약에 따라 자원을 관리 조성하면 매년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동체 등급(선진·자립·모범·협동·참여) 부여 및 육성사업비가 지원된다. 2017년에는 11개 지자체 90개소의 우수공동체에 총 11,018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 지원되었다.

표 2-1-18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사업명	'13	'14	'15	'16	'17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13,563	13,564	13,869	7,592	6,929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자율관리어업의 지속적인 참여 독려 및 의식 개

선을 위해 1,01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홍보 사업을 민간기관(한국수산회, 수협)에 위탁 실시하고 있으며 성공사례 현장방문, 차기지도자양성, 소식지 발간 및 신문 잡지 홍보, 전국대회 개최, 컨설턴트 운영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140백만원을 확보하여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실시를 통해 참여 공동체의 확산과 내실화를 유도하여 공동체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그동안 자율관리어업은 수산자원의 공유자원적 성격으로 인한 관리체계인 규제와 처벌에서 탈피하여 어업인 스스로 자발적 노력을 통한 자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의식개혁 등 양적성장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기존의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우수공동체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잘하는 공동체는 육성사업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미흡한 공동체는 정상화를 유도하여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가점수(500점 미만)를 기준으로 부진공동체를 별도로 관리하여 현장 방문형 1:1컨설팅 및 전문분야 교육을 실시하고 개선여력이 없는 공동체의 경우 공동체 등록을 취소하여 성과중심으로 자율관리 공동체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우수공동체 성공요인, 위기극복 방법 등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체 고령화 정도 및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라는 당초 정책 목적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평가항목을 재조정하여 제도적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5) 어촌 6차산업화지원

어촌특화란 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그간 어촌경제는 어업생산 활동 중심의 단순구조였으나, 최근 수산물 가공, 어촌관광 등 어촌경제구조 다변화 시도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어촌 6차산업화를 위한 정부재정지원을 통해 어촌의 수산물, 우수한 경관을 이용한 산업화 지원·유도로 어업 외 소득 증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촌특화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어촌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와 역량에 따라 지역자원을 최

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과 구역의 지정, 어촌특화위원회 구성,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상향식 자율적 어촌발전 모형 유도를 위해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어촌특화발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2014년부터 2년간 전국 5개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당 총 사업비 10억원(국비 50%)을 지원하여 수산물 가공·판매, 어촌관광 산업화 추진을 위한 ‘어촌 6차산업화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16년부터는 ‘어촌 6차산업화 2차 시범사업’으로 전국 5개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3년간 마을 당 총 사업비 15억원(국비 50%)을 지원하여 어촌 6차산업화에 필요한 수산물 가공·판매, 어촌체험시설 등 필수 기반시설과 사업역량 제고,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브랜드개발 등의 S/W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자원 발굴, 자원지도 만들기, 어촌마을 리더교육, 선진지역 견학, 어촌특화사업계획 구상과 수립 등 어촌 6차산업화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어촌특화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어촌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자생적으로 성공적 어촌특화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창업·경영컨설팅, 어촌특화상품 연구개발, 판매·유통·홍보지원, 교육연수 등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 전담기구인 ‘어촌특화지원센터’ 4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 6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전국 10개 연안·내수면 광역·시·도 단위로 운영할 계획이다.

어촌 6차산업화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낙후되고 고령화된 어촌과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으며, 어촌 고유의 역사, 문화, 경관 등을 통해 조성된 관광어촌에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힐링과 소비의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어업 외 소득 증대를 통한 어촌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6) 마을기업 육성사업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와 재정건전화 기조 속에서 새로운 대안 및 블루오션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간 마을만들기 사업 등은 관 주도 지원방식으로 추진되어 불요불급한 사업추진 및 서비스 과잉공

급 등을 초래하였다. 행정에서는 간접적으로만 지원하고 주민주도로 내실있는 경영을 통해 지역문제와 과제 해결을 위한 유도가 필요하였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2011년도부터 시행하였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2017년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442개의 마을기업이 육성되었다.

표 2-1-19 마을기업 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마을기업 수(누적)	787개	1,119개	1,249개	1,342개	1,377개	1,442개
국비	100억	175억	99억	89억	75억	67억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고용인원	6,533명	10,177명	10,281명	11,513명	16,101명	16,056명
(평균고용)	(8.3명)	(9명)	(8명)	(8.6명)	(11.7명)	(11.1명)
매출액	492억	737억	1,003억	1,183억	1,266억	1,599억
(평균매출)	(62.5백만원)	(65.8백만원)	(80백만원)	(88백만원)	(92백만원)	(111백만원)

마을기업은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최대출자자 지분 30%미만)을 대상으로 최장 2년간 8천만원 한도(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였다(국비50%). 다만, 우수한 마을기업이 보다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간과 지원액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2018년부터는 최장 3년간 1억원 한도(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3차년도 2천만원)로 확대하였다. 예비마을기업은 1천만원 별도 지원한다. 지정절차는 시·군·구에서 마을기업 신청기관 적격검토, 시·도에서 심의 및 행안부 추천, 행안부에서 최종심의 및 지정으로 이루어진다.

마을기업은 2017년말 기준으로 16,056명의 일자리와 1,599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마을기업 1·2차 지원 종료 후 우수마을기업을 선정·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2011년도부터 총 90개를 선정하여(매년 10여개, 1천~7천만원) 제품 품질개선 및 브랜드화, 경영능력 제고 등 마을기업 질적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였다. 마을기

업의 매출 증대와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2012년도부터 마을기업 박람회를 추진하였다('12년 경북 문경, ' 13년 전남 순천, ' 14년 경남 진주, ' 15년 강원 춘천, ' 16년 세종시). 2017년에는 경남 김해에서 6번째 박람회를 개최하여 228개 마을기업이 참여하였고, 방문객은 12만명에 달했다.

마을기업의 온·오프라인 판로지원을 강화하였다. 마을기업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유통형 마을기업을 2014년도부터 설립 추진하였고,('14년 전남 순천, ' 15년 경기 화성, '16년 충남 아산). 2016년 이베이코리아, 농협중앙회에 이어 2017년에는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협약식을 개최하고 마을기업 판로개척에 노력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6개 시도(세종, 광주, 경기, 강원, 전남, 경북)에서 1~2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비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였다. 2017년부터는 행안부에서 준비된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비마을기업을 선정·지원하였다.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마케팅 및 컨설팅 등 마을기업 설립 준비 등을 지원한다.

2017년은 마을기업에 있어 전환점을 맞은 시기라 할 수 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포함되고 그 후속조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 수립되면서 마을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활성화 방안에는 마을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확보 및 홍보·마케팅, 금융지원, 인력양성 등을 위한 추진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연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업무개선과 내실화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사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보조금 규모 확대 및 보조기간 연장, 신규마을기업 지정시기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 하였다.

제2절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1. 생활체감 도시 인프라 정비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정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되,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규제로 도시주변이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완화하고 지원 및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주민지원사업에는 ①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 복지증진 및 생활비용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과 ② 개발제한구역 여가공간 확충을 위한 누리길, 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 ③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관리를 위한 훼손지 복구사업이 있다. 주민지원사업은 2001년 생활편익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소득증대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5,397㎢가 지정되었으나 현재는 제도개선을 통한 구역조정에 의해 14개 시·도에 3,846.3㎢(2017년 12월말 기준)가 유지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시설 등의 무분별한 입지를 억제하고, 보존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한 부담금은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거나 주민지원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역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토지를 국가가 매수하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를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7년 12월까지 정부는 6,6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679필지, 25.2㎢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매입한 토지는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맞게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토지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가녹지조성 사업 등에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매수사업 외에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규제로 도시주변이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편익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누리길, 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을 통해 구역 내 주민들과 인근 도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자금 및 각종 공과금 등 구역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비용 보조를 통해 생활보장 대책 마련 및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고 있다. 2017년까지 총3,071건, 10,19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원항목별 집행건수는 생활편익사업 2,583건(7,932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환경·문화사업 294건(1,654억원), 복지증진사업 96건(281억원), 소득증대사업 58건(179억원), 연구조사사업 6건(12억원)이며,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5,801세대(35억원)를 지원하였다.

표 2-1-20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유형별 지원 현황

(단위:억원)

구분		합계		2001-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071	10,191	2,311	7,131	197	766	166	751	156	719	243	824
생활 편익	소계	2,583	7,932	2,085	6,232	117	452	96	371	101	400	184	479
	도로	1,284	4,620	1,089	3,723	46	219	53	258	43	197	53	223
	상하수도	75	139	72	133	-	-	-	-	1	1	2	5
	하천및교량	278	665	217	458	16	60	16	53	14	50	15	44
	농배수로	605	894	479	651	37	80	17	29	32	66	40	69
	소공원	68	520	48	349	5	61	1	9	4	42	10	59
	노후주택개량	36	6	-	-	-	-	-	-	-	-	36	6
	LPG 소형탱크	21	34	-	-	-	-	-	-	-	-	21	34
복지 증진	기타	216	1,054	180	918	13	32	9	22	7	44	7	39
	소계	96	281	74	215	10	20	4	10	5	23	3	14
	마을회관	78	219	59	168	10	20	3	5	4	20	2	6
소득 증대	어린이놀이터	18	62	15	47	0	0	1	5	1	3	1	8
	소계	58	179	26	78	11	24	13	47	5	16	3	14
	공동작업장	48	131	20	57	11	24	10	24	4	12	3	14
환경 문화	자연생태마을	10	48	6	21	0	0	3	23	1	4	-	-
	소계	294	1,654	120	572	39	220	52	318	43	276	40	268
	여가녹지	81	531	35	189	12	69	13	86	9	87	12	100
	누리길	125	638	51	230	14	81	21	113	20	99	19	115
	경관	74	414	27	121	10	58	14	92	14	90	9	53
연구조사	전통문화	14	71	7	32	3	12	4	27	-	-	-	-
	연구조사	6	12	4	11	0	0	0	0	2	1	-	-
	생활비용	5,801	35	4,657	23			615	5	529	3	0	4
생활공원	생활공원	33	95			20	50					13	45

* 생활비용보조는 1건으로 집계

(2)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시재정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를 개정하여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와 해당 시·군·구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인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낙후된 구시가지의 낙후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주된 목적인 것이다.

특히, 2014~2017년까지 재정비촉진지구 60개 지구 중 서울시 노원구 상계지구 등 25개 지구에 국비 지원(2,458억원)을 하였으며, 2017년에는 국비 및 지방비를 활용하여 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공사(33,866㎡) 및 보상(63,686㎡)을 시행하였다. 2018년도에는 국비 12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8개 지구에 예산을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개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표 2-1-21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세부내용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지구 수	32
국비 지원 금액	5,901
사업 기간	2009년 ~ 계속
지원 비율	10 ~ 5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표 2-1-22 재정비촉진지구 현황(60개 지구)

시·도	지 구	최종면적 (천 m ²)	최종 유형	지구지정일
서울시	① 은평 은평	3,492	주거지형	'06.10.19
	② 성북 길음	1,249	"	"
	③ 용산 한남	1,110	"	"
	④ 노원 상계	473	"	"
	⑤ 은평 수색·증산	793	"	"
	⑥ 서대문 북아현	900	"	"
	⑦ 영등포 신길	1,469	"	"
	⑧ 동작 흑석	897	"	"
	⑨ 관악 신림	529	"	"
	⑩ 송파 거여·마천	1,043	"	"
	⑪ 동대문 이문·휘경	830	"	"
	⑫ 성북 장위	1,873	"	"
	⑬ 중랑 상봉	505	중심지형	"
	⑭ 광진 구의·자양	385	"	"
	⑮ 강동 천호·성내	275	"	"
	⑯ 종로·종구 세운	438	"	"
	⑰ 중랑 중화	510	주거지형	'06.12.21
	⑱ 양천 신정	640	"	"
	⑲ 강서 방화	361	"	"
	⑳ 동작 노량진	737	"	"
	㉑ 동대문 전농·답십리	813	주거지형	'08.12. 2
	㉒ 강북 미아	938	"	'08.12.11
	㉓ 동대문구 청량리	370	중심지형	'09.09.10
	㉔ 서대문구 가재울	1,078	주거지형	'09.12.10
	㉕ 영등포구 영등포	144	중심지형	'10.01.21
	㉖ 마포구 합정	297	"	'10.01.21
	㉗ 마포구 아현	768	주거지형	'10.08.19
	㉘ 서대문구 홍제	200	중심지형	'10.12.16
	㉙ 강동 천호	409	주거지형	'14.07.31
	㉚ 종로 돈의문	167	주거지형	'15.06.11
	㉛ 성동 왕십리	337	중심지형	"
	㉜ 성북·강북 미아중심	478	"	"
부산시	㉝ 금정구 서·금사	722	주거지형	'07.05.23
	㉞ 진구시민공원주변	901	중심지형	"
	㉟ 영도구 영도제1	590	주거지형	"
대구시	㊱ 동구 신암	766	"	'07.05.21
	㊲ 서구 평리	689	"	'10.11.22
인천시	㊳ 동구 동인천역	235	중심지형	'07.05.21
	㊴ 남구 주안 2,4동	1,136	주거지형	'08.05.26
대전시	㊵ 동구 대전역세권	887	중심지형	'06.12.29
	㊶ 대덕구 상서·평촌	2,595	"	'07.07.31
	㊷ 서구 도마·변동	2,219	주거지형	'07.08.31
	㊸ 중구 선화·용두	743	"	'07.11.09
	㊹ 유성구 유성시장	338	중심지형	'07.12.28
	㊺ 대덕구 신탄진	468	"	'07.12.31

시·도	지 구	최종면적 (천 m ²)	최종 유형	지구지정일
경기도	46 동구 신흥	678	주거지형	'08.03.28
	47 유성구 도룡	501	"	'08.09.12
	48 구리 인창·수택	2,073	주거지형	'07.06.04
	49 광명 광명	2,281	"	'07.07.30
	50 고양 원당	1,130	"	'07.09.10
	51 고양 능곡	663	"	'07.11.05
	52 남양주 덕소	636	"	'07.11.26
	53 고양 일산	118	"	'07.12.31
	54 남양주 지금·도농	326	중심지형	'08.06.02
	55 김포 재정비	2,008	주거지형	'09.01.16
강원도	56 춘천 약사	728	주거지형	'08.08.29.
	57 춘천 소양	856	주거지형	'08.08.29.
충남도	58 아산 온양중심상권	208	중심지형	'07.12.10
전남도	59 목포 서산·온금	390	주거지형	'09.11.27
경북도	60 포항 동빈내항복원	96	주거지형	'09.02.12

(3) 철도건널목 입체화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하는 건널목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널목개량촉진법 제6조(건널목개량의 실시)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이 건널목개량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1-23 입체화사업 추진 현황

평면건널목	입체화대상	기시행(17년까지)	추진중	잔여
965	85	26	2	57

주: 미사용 또는 입체화사업 완료로 인해 평면건널목은 36개소가 폐지되었으며('16년:1,001개소 → '17년:965개소) 건널목 교통량 및 현장여건 등을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입체화가 가능한 개소에 대하여 개량건널목 지정 추진

열차운행빈도 증가 및 속도향상 등 대외여건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열차의 안전운행 및 도로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로관리청)는 재정상황 열악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를 구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철도 건널목입체화사업의 활

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적정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추진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을 통하여 건널목 사고요인이 근원적으로 제거되므로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는데 동 사업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광역버스 정보체계 구축

2001년 이래, 버스이용 확대 및 ICT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버스정보시스템(BIS : Bus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였으나, 개별 지자체 단위로 추진되어 버스정보서비스 제공 지역이 당해 행정구역에만 국한되는 한계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부터 ‘광역BIS 지원’ 사업을 통해,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노선과 관계되는 모든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실시간 대중교통정보를 공유·제공할 수 있도록 BIS의 광역적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까지 112개 지자체에 대하여 76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각 지자체가 생산·제공하는 대중교통정보를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AGO)와 연계하여 민간(인터넷포털사, 이동통신사)에게 제공하고 국민에 개방하는 등 대민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표 2-1-24 최근 4년간 추진성과

(금액 :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광역BIS 사업 추진	38	35	31.5	25.2	129.7

(5)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1970년대 이후 경제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용수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자체들이 재정부족 등으로 자체 상수원을 확보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1973년 팔당호를 취수원으로 하여 서울, 성남, 부천, 인천 등 4개 도시에 120만㎥/일의 용수를 공급하는 수도권(Ⅰ)광역상수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광

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였다.

최근에는 새로운 수원개발 어려움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시설의 개발보다는 기존시설 여유량을 전환·공급하는 급수체계조정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 중에 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8개의 광역상수도 건설 및 급수체계조정 사업에 1,9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일최대 205만톤의 공급능력을 확보 중에 있다.

표 2-1-25

연도별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투자현황(국고)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개수	투 자 액
2014	대청(III)광역, 금강북부권(2차) 급수체계, 진안계통 급수체계, 한강하류2차 급수체계, 한강하류3차 급수체계	5	23,058
2015	대청(III)광역, 낙동강강변여과수,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 진안계통 급수체계, 한강하류2차 급수체계, 한강하류3차 급수체계	6	64,382
2016	대청(III)광역, 영남내륙(2차)광역, 낙동강강변여과수,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 진안계통 급수체계, 한강하류2차 급수체계, 한강하류3차 급수체계	7	60,308
2017	대청(III)광역, 영남내륙(2차)광역, 낙동강강변여과수,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 한강하류2차 급수체계, 한강하류3차 급수체계	6	50,792
총 계			198,540

참고로, 2017년 말 국토교통부에서 관리중인 광역상수도는 35개 시설로 시설용량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계통(수도권광역 I~VI, 일산권)이 8,535천㎥/일로 전체 시설용량의 61.6%를 차지하고, 기타 지역이 38.4%를 차지한다. 급수량측면을 보면 전체 급수량 8,270천㎥/일 중 수도권계통(수도권광역 I~VI, 일산권)이 54.8%, 기타 지역에서 45.2%를 공급하고 있다.

표 2-1-26 지역별 광역상수도 공급현황

(단위 :천㎥/일)

사업명	시설용량				공 급 량			
	소계	원수	정수	침전수	소계	원수	정수	침전수
광역상수도	13,866	6,488	6,596	782	8,270	3,218	4,542	510
수도권광역(Ⅰ ~Ⅵ)	8,285	5,246	2,688	351	4,384	2,213	1,957	214
구미권광역(Ⅰ,Ⅱ)	400	33	218	149	233	-	172	61
태백권광역(광동,달방)	110	40	70	-	34	9	25	-
대청권광역(Ⅰ,Ⅱ)	1,010	-	754	256	800	153	496	151
남강댐광역(Ⅰ,Ⅱ)	325	-	325	-	189	-	189	-
일산권광역	250	-	250	-	146	3	143	-
섬진강광역	90	-	90	-	39	-	39	-
부안댐광역	87	-	87	-	65	-	65	-
금호강광역	376	320	56	-	302	261	41	-
주암댐광역(Ⅰ,Ⅱ)	596	496	100	-	323	281	42	-
보령댐광역	285	-	285	-	257	-	191	66
전주권광역	700	-	700	-	468	-	468	-
충주댐광역	250	-	250	-	198	-	195	3
밀양댐광역	150	-	150	-	102	-	102	-
포항권광역	161	99	62	-	144	97	47	-
감포댐광역	5	5	-	-	4	4	-	-
동화댐광역	52	-	52	-	28	-	28	-
원주권광역	100	-	100	-	82	-	82	-
울산권광역	220	220	-	-	180	180	-	-
전남남부권광역	150	-	150	-	116	-	116	-
전남서부권광역	30	-	30	-	31	-	31	-
영남내륙권광역	44	-	18	26	36	-	21	15
충남중부권·금강광역	163	29	134	-	92	17	75	-
금산무주광역	27	-	27	-	17	-	17	-

(6) 건축문화 진흥

①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2007년 「건축기본법」 및 「경관법」이 제정되어 경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여건은 마련되었으나, 그동안의 경제성·기능성 위주의 토지이용 등으로 국가 위상에 비해 국토 경관 형성 및 관리는 열악한 수준이었다. 또한 경관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품격 높은 공간 환경을 조성하여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의 연계를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구상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은 계획수립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통합마스터플랜 수립과 디자인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지자체당 1.5억원의 국비를 정액지원하고 있다. 지원사업 대상 선정은 경관개선 효과가 크고, 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고려하여 진행한다.

2009년부터 지원사업을 진행해온 결과, 2009년 마스터플랜 10개소 수립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39개 지자체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표 2-1-27 연도별 마스터플랜 수립 개소

(단위 : 개소)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9	10	6	2	4	3	4	6	3	1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시공비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타부처 또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신청시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한다. 현재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지자체의 연계사업 추진성과는 아래와 같다.

표 2-1-28 연계사업 추진성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지 자 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연계사업 추진 성과	
		마스터플랜 수립	내용	투입 예산
'09	대구 남구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미군부대가로환경 정비사업(100, '09)	▶ 앞산 맛둘레길 사업('10~'14) ▶ 문화·예술 생각대로 사업('11~'15)	10,000
	대전 중구	대전 문화호름 "중교통" 조성 사업(100, '09)	▶ 산소충만 생생도시 재창조 문화호름 중교로 조성사업('11~'14)	9,080
	전남 목포	목포 근대역사문화타운 내 신파의길 시범가로 조성사업(200, '09)	▶ 근대역사문화 예술공원 조성사업('11~'12) ▶ 유달산 주변 구도심 공폐가 활용 예술인마을 조성('14~'17)	11,300
	경기 안산	공공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의 상록수(100, '09)	▶ 상록수역 공공디자인사업	200
	경북 영주	새롭게 열리는 역사의 통로(200, '09 / 500, '10)	▶ 1940~50년대 형성된 근대시장(후생시장, 중앙시장)과 舊 철도역사 주변 재생	10,000
	강원 춘천	경춘선 철도교량 하부 녹색 공간 조성(200, '09)	▶ (경춘선)하부공간 소공원 조성사업	7,000
	충북 충주	도심 속 녹색생활공간 조성 사업(200, '09)	▶ 충주생태하천 복원사업('10~'15)	42,000
'10	강원 철원	자연과 소통하는 청정 철새마을 문화기반 시설조성 시범사업(150, '10)	▶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 조성사업 ▶ DMZ 철새평화타운 조성사업('13~'15)	3,000
	경남 김해	호계천 주변 창의적인 네트워크 사업(200, '10)	▶ 가야 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사업('10~'15)	15
	경북 포항	해양강국으로 가는 느낌표! 국립 등대박물관 및 호미곶 주변일대 Redesign 사업(150, '10)	▶ 호미곶 해맞이광장 경관디자인 명소화 사업	2,500
	부산 중구	영주동 '오름길 문화 만들기'('150, '10)	▶ 중구 오름길 문화만들기 실시설계 - 중구 오름길 모노레일 설치('14.06.12. 준공)	2,194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워터프런트 디자인 리노베이션 프로젝트(200, '10)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1차~3차)	173
	충북 청주	빛이 흐르는 아름다운 경관조명 사업(150, '10)	▶ 관아지 옛길 정비사업	78
'11	경남 거창	공공건축 · 공공공간 네트워크 창조도시 거창조성 사업(150, '11)	▶ 아카데미파크 조성 실시설계('14.06~) ▶ 201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거창여고, '14~'15)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15~'17)	8,489
	충남 홍성	역사도시 홍성도심 활성화 계획(150, '11)	▶ 천년아문길정비사업('13~'14)	150
'12	경북 울진	울진 보부상 옛터의 재조명(150, '12)	▶ 울산보부상 문화거리 조성사업 ▶ 전선지중화 사업('14~'15)	10,200

			▶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14~'15)	
	부산 동래	부산 고(古) 도심의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통합 재생정비 방안을 통한 동래 재창조(100, '12)	▶ 동래 고도심 재창조 동래방래 사업('13~'15) ▶ 도시재생 R&D 복합개발형 테스트베드 사업('13~'15)	10,391
	경기 안성	역사 문화의 정체성과 조화되는 주거지 경관 형성(150, '12)	▶ 일죽·죽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13~'16)	7,000
	경남 하동	공공공간·공공시설을 활용한 도심의 중심성 활력강화 프로젝트(150, '13)	▶ 서부권 개발사업 균형발전사업('14~'23)	42,000
'13	전북 완주	신택리지 고산만들기 사업(150, '13)	▶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14~'17) - 택리지신도시사업 설계 용역('14.08 완료 예정)	6,300
	부산 대청로	부산 대청로 지역대표거리 조성사업(200, '13)	▶ 용두산공원 스텝가든 및 문화오름길 조성	300
	경북 김천	대한민국 행복중심 김천 업문화특화가로 조성(150, '14)	▶ 김천 시립도서관주변 유해환경개선사업('15~'16)	430
'14	경기 수원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150, '14)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16~'19)	6,000
	충남 공주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마을“송산마을” 만들기(150, '14)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15~'18)	2,857
	경기 고양	지역자산을 활용한 시경계부 활력창조 네트워크 만들기 (150, '15)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17)	43,700
'15	전남 강진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동부지구 활성화 프로젝트(150, '15)	▶ 간판개선 시범사업('16)	400
	경남 밀양	산수(山水)도시 밀양 RE-디자인을 위한 “2+2” 네트워크 플랜(150, '16)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17)	60,600
'16	인천 옹진	통일한국과 해양관광시대를 준비하는 백령 평화마을 만들기(150, '16)	▶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17)	50
'17	경북 고령	대가야읍 중심지 발전구상 마스터플랜(150, '17)	▶ 지역수요 맞춤형지원사업('17~)	1,200

② 한옥건축지원사업

최근 우리 고유 건축인 한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고가의 건축비 등으로 국민들의 생활 속 건축양식으로 널리 자리잡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동본 사업은 한옥 건축물의 확산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한옥을 보다 쉽게 체험하고 그것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옥건축지원사업에서는 가급적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한옥을 즐길 수 있도록 한옥 공공건축물 조성 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사업비 규모는 사업 당 약 1~2억원으로, 이는 일반 건축물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한옥의 건축비를 감안하여 그 추가비용을 보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36개소의 지자체에 54.8억원의 한옥공공건축물 조성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정부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짓도록 유도하여 한옥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및 한옥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표 2-1-29 지자체 한옥공공건축물 지원 현황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54.8억원 (36개소)	2.5억원 (2개소)	5억원 (5개소)	5억원 (2개소)	5억원 (3개소)	9억원 (5개소)	8억원 (5개소)	8.5억원 (6개소)	7.3억원 (5개소)	3억원 (2개소)	1.5억원 (1개소)

(7)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①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

국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확대를 추진 중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저상버스는 지자체 재정여건, 교통약자 수요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2014 ~ 2017년 기간 동안 국비 1,316억원을 지원하여 2,936대를 도입하였다. 2017년말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는 총 7,579대로 전국 시내버스 33,796대의 22.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좁고 굽은 도로가 많은 농어촌마을버스 지역 운행에 적합한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을 2017년 12월에 개발 완료하였으며, 지자체 수요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표 2-1-30 저상버스 도입보조 추진성과(2014~2017년)

(단위 : 백만원, 대,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국비 지원액	31,627	33,987	33,994	31,973
도입대수	688	725	768	755

②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사업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국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시·군별로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의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4 ~ 2017년 기간 동안 국비 202억원을 지원하여 1,024대를 도입하였으며, 2017년말 기준, 전국의 특별교통수단은 총 2,932대로 법정 기준대수 2,327대의 126%를 도입하고 있으나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59개 시·군에서 법정 기준대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는 2019년 7월로 계획된 장애등급제의 폐지 일정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및 이용대상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표 2-1-31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추진성과(2014~2017년)

(단위 : 백만원, 대,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국비 지원액	5,488	5,800	5,228	3,660
도입대수	277	290	264	193

(8) 주차환경 개선지원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및 세종계정, 제주계정의 포괄보조사업으로 각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실정과 주민수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맞춤형 주차장 조성 및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①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②노상무인주차기 설치 지원, ③실시간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 ④이륜차 및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등이 있다.

2015년에 11개 시·도 29개소에 224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에 14개 시·도 58개소에 515억원, 2017년에는 14개 시·도 58개소에 5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15개 시·도 68개소에 65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 농어촌 및 취약지역 정주환경 개선

(1)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취사 및 난방용 연료로 경제적이고 편리한 도시가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전국 단위 주배관망의 연장과 주배관망에 접속되는 공급배관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므로 지리상 도시가스 공급이 극히 곤란하거나 인프라 투자비용이 과다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많다. 이와 같이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지 않은 지역은 공급지역에 비해 주민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취사·난방용 연료는 더 비싸고 불편한 용기 LPG, 등유, 화목 등을 사용하고 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소득 역진적 연료비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벌크로리로 LPG를 공급받는 형태로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과 농어촌 마을은 그 초기투자 비용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비용을 보조할 필요가 있다.

표 2-1-32 유통구조 비교(LPG용기 vs. LPG소형저장탱크)

LPG용기		LPG소형저장탱크	
3단계 (수입·생산→용기 충전→판매)	(유통단계)	2단계 (수입·생산→벌크충전)	
잔량 부족시 수시 교체	(공급빈도)	사전계획에 따라 가끔 대량 배송	
교체하는 동안 사용 중단	(중단여부)	중단 없이 계속 사용	

정부는 2013년 사회복지시설, 2014년 농어촌 마을 단위에 대하여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LPG 소형저장탱크와 옥내·외 배관 설치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다(사용자 부담은 20%). 농어촌 마을의 경우 30세대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공동 LPG소형저장탱크와 마을 내 지하매설 배관망 설치비용 50% 범위 내에서 마을 당 최대 1.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지방비 40%, 사용자부담 10%).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공모된 사업수행기관에서,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은 각 지자체에서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주민의견 수렴, 시공업체 선정, 시공 감독·관리, 가스공급자 선정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 노인·장애인·아동 사회복지시설 295개소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옥내·외 배관 시공을 완료하여, 사업을 시작한 2013년 이래 총 1,417개소(2013년 339개소, 2014년 151개소, 2015년 385개소, 2016년 247개소, 2017년 295개소)를 지원하였다. 한편 농어촌마을은 2014년 18개 마을에 이어 2015년 47개 마을, 2016년 31개 마을, 2017년 20개 마을에 공동 소형저장탱크, 지하매설 배관망 등을 시공 완료하여 총 116개 마을을 지원하였다.

2018년에는 사회복지시설 225개소와 함께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농어촌 20개 마을을 지원할 예정이다.

표 2-1-33 2013년~2016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실적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예정)
사회복지시설 지원	339개소	151개소	385개소	247개소	295개소	225개소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	-	18개 마을	47개 마을	31개 마을	20개 마을	20개 마을

(2) 도시가스공급배관 용자사업

농어촌, 지방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조기 구축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도시가스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 효율이 낮

아 정상적인 배관 투자가 곤란한 고지대·재래시장 등 소외지역에도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반 수요자를 위한 서민가게 안정화 및 에너지 복지 확대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시설(공급배관 등) 구축은 사업 초기 시설투자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며, 자본 회임기간이 길고, 각 수요처의 시설 설치를 위한 투자 부담으로 민간기업인 도시가스사업자는 자체 자금에 의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융자금으로 지원해주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도시가스 신규 보급가구에 대한 사용자시설(보일러, 내부 배관 등) 설치비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확대에 힘쓰고 있다. 2015년에는 750억원, 2016년에는 650억원, 2017년에는 356억원을 각각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31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7년말 기준으로 도시가스배관 총연장이 44,054km, 전국 도시가스 수요가구수가 18,566천개, 도시가스 공급량은 23,596백만 m^3 (11)가 공급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83.1%(2017년말)를 달성함으로써 서민들의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표 2-1-34 융자 지원 절차 및 사업규모/지원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 지원 절차 (공급배관 건설) 지침 수립(산업부) → 융자신청·추천(도시가스사업자, 시·도) → 지원대상 선정(산업부) → 융자추천서 발급(도시가스협회) → 융자대여(시중은행) (사용자시설설치비 지원) 지침 수립(산업부) → 융자신청·추천서 발급(사용자, 시·군·구) → 융자대여(농협) • 2017년 사업규모 (공급배관 건설, 332억원) 도시가스사의 배관 건설 총 투자비의 일부(약 6.5% 수준)를 지원 (사용자시설 설치비, 24억원) 도시가스 신규 사용가구의 시설 비용(가구당 4백만원 수준)을 지원 • 지원조건: 융자 대출 (공급배관 건설) 대출 이자율(변동)은 국고채 3년물 대표금리-1.25%P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이자율(고정)은 1.5%
--

11) 도시가스 용도별 공급량 총계

표 2-1-35 도시가스 보급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p)
수요가수(천개)	15,160	15,760	16,379	16,883	17,392	17,971	18,566
공 급 량(백만 m³)	22,951	24,605	24,942	23,027	21,587	22,229	23,596
사업권역내보급률(%)	74.9	76.5	78.6	79.4	80.8	81.9	83.1
배관연장(km)	34,520	36,344	38,087	39,696	41,235	42,712	44,054

주 : 1) 보급률은 주민등록세대수(행자부 자료) 기준

2) p는 잠정치

(3)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민 1인당 GDP 3만불 시대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도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낙후마을이 전국 곳곳에 많이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러한 낙후마을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2014년 9월 제10차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서비스 향유 및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낙후마을의 기초생활인프라를 정비하는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을 지역행복생활권 내역사업으로 반영하여 2015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국고 550억원)하였다.

본 사업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여건개선 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주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슬레이트 지붕 주택 개량, 집수리, 재래식화장실 정비, 담장정비, 마을안길정비, 마을주변 위험경사지 보강, 상하수도 정비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기초생활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참여가 필요함에 따라 주민주도·체감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율·책임하에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역량 강화를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주민부담·연계사업을 융복합화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의 전

통·문화·생활관습을 담은 특색 있는 마을만들기가 되도록 전문가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5년에는 처음으로 총 85개 지구(농어촌 55, 도시 30)를 선정하여 국비 550억원(농어촌 300, 도시 250)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였다

2016년도에는 2015년도에 시작한 85개 지구에 국비 500억원(농어촌 275, 도시 225)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 이어 신규지구로 66개 지구(농어촌 44, 도시 22)를 선정하여 200억원(농어촌 110, 도시 90)을 지원하여 기본조사·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7년도에는 2015년과 2016년도에 공사를 착수한 151개 지구(농어촌 99, 도시 66)에 대해 79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며, 신규지구 51개 지구(농어촌 35, 도시 16)를 선정하여 100억원(농어촌 60, 도시 40)을 지원하여 기본조사·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등 공사착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본 사업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하는 만큼 지역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특성화·차별화된 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표 2-1-36 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농어촌 취약지역사업 목표달성율(누적) (총1,400지구)	-	3.9% (55개 소)	7.0% (99개 소)	9.6% (134개 소)	9.6% (134개 소)

(4)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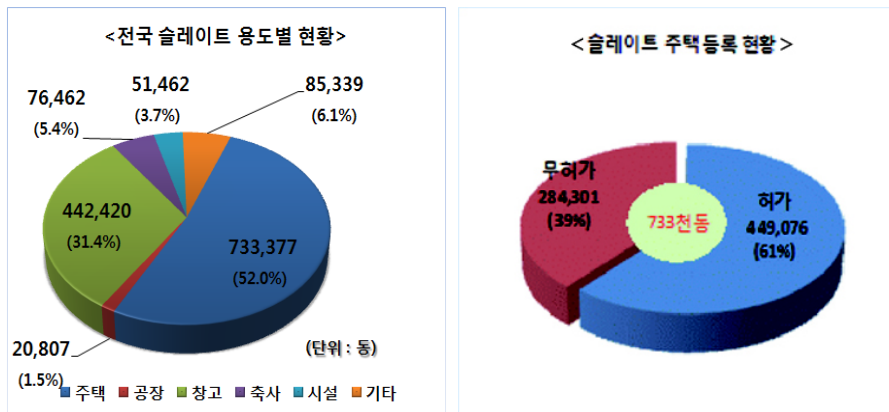
정부는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 가능성이 증대되고, 처리비용 과다로 처리지연 및 불법처리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슬레이트의 조속한 철거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1년~2021년)’을 수립함으로써 슬레이트 처리기반을 마련하였다.

환경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석면

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11년 9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슬레이트 지붕의 조속한 철거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을 통해 2011년에 국고 28억원을 투입하여 2,372동,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고 55억원을 들여 8,290동, 2013년에는 국고 192억원을 투입하여 17,942동, 2014년에는 국고 288억원을 들여 22,320동, 2015년에는 국고 369억원을 투입하여 27,746동, 2016년에는 국고 343억원을 들여 26,721동, 2017년에는 국고 341억원을 들여 27,807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였다. 또한, 2018년에도 국고 341억원을 지원하여 20,300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예정이다.

그림 2-1-4 전국 슬레이트 용도별 현황 및 주택등록 현황('13.12월)



(5) 농어촌 상수도시설 확충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은 2016년 기준으로 특별·광역시의 경우 99.6%, 시지역은 99.0%에 이르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면지역 및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은 72.7% 수준에 불과하여 일시적인 가뭄에도 상습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다.

표 2-1-37 도·농간 상수도 보급률 비교

(단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도시지역(A)	98.8	98.9	99.1	99.1	99.3	99.0
농어촌(面)지역(B)	58.8	62.2	65.9	68.6	70.9	72.7
차이(A-B)	40.0	36.7	33.2	30.5	28.4	26.3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생활용수공급 확대를 위해 1994년부터 2017년까지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총 5조 6,574억원(국고 3조 9,602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농어촌 및 도서지역 1,514개소(농어촌생활용수개발 1,191개소, 도서지역상수원개발 323개소)에 상수도 시설 설치를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56개소(신규 62, 계속 194)에 국고 272,938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23개소(신규 5, 계속 18)에 국고 25,581백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보급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6) 접경지역 성장기반 조성

DMZ 인근지역은 역사·안보·생태 자원이 우수한 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높고,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제·사회적 통합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제반 여건 속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접경지역 주민들이 개선된 환경 하에서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년)」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접경지역 신성장 동력기반 구축사업인 ‘국회의정연수원 진입도로 개설사업(국비 109억)’이 2017년 완료되어 접근성 개선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으며, 포천·연천·철원 3개 시·군에 걸쳐있는 한탄강 지역의 원형 그대로 간직한 현무암 협곡 주상절리, 판상절리, 그루브 등 다양한 지질체험 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국비 265억원)’이 2017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착공하였다. 202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119km 중 단절구간 43.7km를 조성하여 한탄강 주변 인문자원 및 관광콘텐츠, 스토리 발굴 등을 활용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강화에서 고성까지 10개 시·군 총연장 551km로 조성되고 있는 ‘평화누리길 조성사업(국비 1,050억원)’은 2017년 현재 87.3%(48.1km)

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강화에서 고성까지 9개 시·군 총연장 57.9km(국토부 구간 66.4km)로 조성되고 있는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사업(국비 1,675억원)’은 2017년 현재 59.5% 추진 중으로 행안부 구간 14.2km, 국토부 구간 34.7km 연결을 완료하였다.

표 2-1-38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평화누리길	동서녹색평화도로	한탄강 주상절리길	비 고
기 간	2011~2021년	2012~2022년	2017~2020년	
대 상 (규모)	접경지역 10개 시군 (551km)	접경지역 9개 시군 (252km 중 57.9km)	접경지역 3개 시군 (119km 중 43.7km)	
사업비	1,500억원(국비 1,050)	2,395억원(국비 1,675)	379억원(국비 265)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을 통해 교통망이 열악한 접경지역의 동·서 중심 교통축이 확충되고 생태·안보·역사 관광자원과 연계된 탐방로 조성이 완료되면 DMZ 일원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관광객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7)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

전국의 연안여객선 기항지는 육지와 도서지역을 포함하여 총 340개소이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항만 내 35개소, 어항 내 135개소, 그 외 「항만법」 및 「어촌어항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항포구 170개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지자체 등이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항포구는 전체 기항지의 5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관심 및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접안시설 등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표 2-1-39 전국의 연안여객선 기항지 현황

(단위: 개소)

합계	항만		어항			소규모 항포구
	무역항	연안항	국가	지방	어촌정주	
340	16	19	33	48	54	170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도서민 등 여객선 이용객의 승하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의를 증진하고자 2012년부터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2년 장자도(군산) 및 가사도(진도)의 접안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34개소, 173억원을 지원하여 낙후된 접안시설을 개선하였다.

표 2-1-40 최근 6년간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 현황

구 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개소	34	2	4	8	6	7	7
사업지역	장자도 등 27개소	장자도, 가사도	말도, 쉬미, 옥도, 백아도	굴업도, 광도, 격포, 연화도, 위도, 옥도, 관매도, 저동	삼목, 울도, 관사, 하노대, 동거차, 성남도	미법, 소이작, 연흥, 송고, 산등, 하왕등, 수치도	하리, 죽도, 동좌, 비산도, 모도, 장병도, 기도
지원예산(억원)	173	10	30	33	31	29	40

또한,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은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 및 이용객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도서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여 관광객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낙후된 소규모 항포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도서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도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접안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8)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로 묘지관리 후손의 부족 등 가족 중심의 묘지 관리의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방치되는 묘지가 증가하고 있고, 묘지가 가지는 국토 잠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장례문화가 점차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결과, 화장률은 그간 급속히 증가하여 2016년 말 기준 82.7%를 기록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1~2%p 정도의 증가폭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2022년에는 약 9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41 연도별 화장률 변동 추이

구 분	1970년	1991년	2001년	2002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화장률(%)	10.7	17.8	38.5	42.5	58.9	61.9	65.0	67.5	74.0	76.9	79.2	80.8	82.7

이러한 화장수요 충족을 위한 공설 화장시설 및 봉안당 신축, 화장로 개보수 및 자연장지 조성 등 화장시설 확충 및 시설물 현대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화장시설 신·증축에는 m^2 당 150만원을, 화장로 신·증설에는 기 당 3억 6,000만원을, 자연장지 조성은 m^2 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장사시설 개소수는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공설·법인묘지 494개소, 화장시설 58개소(화장로 342로), 봉안시설 414개소, 공설·법인자연장지 106개소, 장례식장 1,100개소이다.

화장시설은 전체 사망자 대비 수급은 부족하지 않으나, 지역별 편차 등으로 이동거리 및 타지역 이용자의 비용부담 차별 문제 등으로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반발과 설치기간의 장기화(2~3년) 등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전체 화장시설 중 41%가 1990년대 이전에 설치되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오염방지시설 및 편의시설 등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화되고 오염방지시설이 미비한 화장시설의 재건축 및 설비보완 등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을 수립(2018.3월)하여 생활권역을 고려해 장사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장사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법령을 개정하여 광역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장사시설 설치 시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묘지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자연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장지 조성 면적 및 구역 등에 대하여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증문중 자연장지 조성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2013년 2월)하였고, 개인·가족 자연장지에 한하여 일반주거지역 등 일부 지역에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설치제한 지역을 완화(2013년 6월)하였으며,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의 표지 면적을 확대(2015년 7월)하였고,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에서는 그 편의시설 등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정 규모의 수목장림을 설치·조성할 수 있도록(2016년 1월) 개정하였다. 그리고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장년, 노인층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교육 등을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에서 이용자에게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유업인 장례식장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일정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2016년 1월) 개정하였다.

(9)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

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역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의 상권이 대형마트의 확산과 소비자의 구매형태 변화 등 유통산업 환경변화·시설 노후화 등으로 위축되고 있어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상권의 위축 방지 및 상권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착수하여 2017년까지 1,246개 시장에 대하여 아케이드, 주차장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 국비 2조 304억원을 지원하여 4,141건의 시설을 개선하였다. 2017년에는 285개 시장에 안전시설 67건, 아케이드 73건, 진입로 10건, 안전시설, 고객편의시설 26건 등 754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1-4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현황

(단위 : 억원, 건)

구 분	2002~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지원 금액	6,564	1,968	1,749	1,572	1,660	1,606	1,430	1,388	805	808	754	20,304
지원 건수	1,117	281	261	259	383	330	308	330	303	284	285	4,141

2017년 지원성과를 살펴보면 시설현대화를 실시한 시장의 매출이 18.9% 증가하였고, 반면, 미개선 시장의 경우는 매출이 0.3%로 소폭 증가하였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을 근본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시장 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전략을 추진하여 상인, 고객, 정부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경쟁력 있는 시장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②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성

유통구조의 개선 및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정부는 2003년부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라 함)의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다가 2009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으며, 대부분이 지역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다. 건립비용은 정부·지자체·민간이 6:3:1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2009년 5월 이전, 3:4:3 매칭비율→2009년 5월 이후, 6:3:1)

물류센터에 대하여는 도매배송장, 검품장, 보관창고, 저온창고 등 유통시설 및 장비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화 시스템 등을 1~3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37개소에 총 790.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김해, 포항 신규 2곳과 서산, 고흥 계속 2곳, 증축 2곳에 4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는 부산, 제주 등 전국에 35개소가 운영 중이며 고흥, 서산 등 4개소가 현재(2018년 4월) 건립 중이다.

표 2-1-43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2003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금 액	254	13	3	25	140	125	161	34	17.5	7.8	10	790.3

센터를 통해 기존의 복잡한 유통구조(제조업체, 대리점, 중소유통업자 등)를 공동구매와 직거래로 개선하였고, 이를 통해 저렴하게(3.5%)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수는 약간 감소(' 16 : 16,400명 → ' 17 : 15,682명)하였으나, 2017년도 실태조사에서 1년 이상 운영 중인 센터의 전체 매출액은 3,42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정도 증가하였다.

향후 물류센터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활용성을 높이고 지역 확충을 통해 가격경쟁력 제고 등 물류기능의 효율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3.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실현

(1)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2012년 1월 1일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따른 육상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개별농가의 가축분뇨처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추가로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 개선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사업과 기존 퇴액비화 공동자원화에 에너지화를 연계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축협 등을 대상으로 100톤 기준 퇴액비시설은 톤당 6,400만원(국비 40%, 지방비 30%, 융자30%), 에너지시설은 톤당 9,200만원(국비 50%, 지방비 20%, 융자 20%, 자담 10%)한도 내에서 가축분뇨를 1일 70톤 이상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 처리할 수 있는 시설·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님비 현상 등으로 설치가 지연되는 등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사업자부터 환경영향평가 통과 등 인허가를 득한 사업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공동자원화사업은 다수의 가축분뇨(주로 양돈분뇨)를 수거하여 충분한 부숙을 거쳐 퇴비·액비를 생산하여 농경지에 환원하는 자연순환농업 체계이다. 따라서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환경오염 방지 등을 가능하게 하고, 농업부문에서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생산량 증대, 품질향상 등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퇴액비화시설 121개소, 에너지시설 16개소를 선정하여 퇴액비화시설 90개소, 에너지시설 5개소를 설치·완료하였으며, 2030년까지 퇴액비화시설 135개소, 에너지시설 29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표 2-1-44 가축분뇨자원화율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가축분뇨자원화율 (자원화 물량/전체가축분뇨 발생량) × 100	89.2	89.5	90.2	90.6	91.0

(2) 쾌적한 연안공간 조성사업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연안의 지표가 깎이거나 모래 등이 유실되는 등 훼손된 연안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보전·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연안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연안침식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이상 고파랑의 내습 증가, 연안개발에 따른 인공구조물 설치 증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 공통현상이기도 하다. 연안정비사업은 이러한 연안침식의 심각성이 다각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관광자원인 연안을 보전하고 국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꾸준히 시행하여 왔다.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및 조정, 지역별 사업계획 검토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립된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10~2019년) 및 제2차 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2010~2019년)에 근거하여, 2014년도에는 543억원(일반회계 499억원, 책특회계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원 속초해수욕장 등 15개소, 2015년도에는 575억원(일반회계 522억원, 책특회계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등 19개소, 2016년

도에는 659억원(일반회계 606억원, 책특회계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울진 월송지구 등 21개소, 2017년도에는 641억원(일반회계 6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릉 영진·교항지구 등 18개소에 대한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1-45 연안정비사업 추진

(단위: 억원, 개소)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예산	543	575	659	641
정비사업	15	19	21	18

2017년도까지 13개소(강릉 남항진리,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서천 선도지구 등)에 대한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이 완료되어 대형 태풍 등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유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연안정비사업은 통상 수년에 걸쳐 비교적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8년에도 670억원(일반회계)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지구 등 17개소에 대한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면밀한 연안침식 원인분석과 적절한 대응방안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연안정비사업을 통하여 연안침식 피해가 최소화되고 연안공간의 유실이 방지되어 국민이 소중한 연안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방치선박 정리 지원사업

연안 해역 및 해안가에 장기간 방치되어 해양오염을 유발하거나 선박의 안전항해를 저해하고 있는 선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방치선박 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치선박은 주로 선령이 오래되거나 어획부진 등으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선박을 처리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스스로 폐선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 선명 및 어선표지판 등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시설이 없어 소유자 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방치선박을 처리함에 있어 소유자가 확인된 것은 소유자에게 제거명령을 내려 자체 처리토록 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방치선박을 처리하고 있다.

2013년도에 21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로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방치선박 200척을 처리하였으며, 2014년에는 212백만원을 투입하여 170척을, 2015년에는 200백만원으로 178척, 2016년에는 212백만원으로 196척, 2017년도에는 204백만원을 투입하여 215척을 처리하였다. 또한 2018년도에는 204백만원을 투입하여 5개 광역지자체에서 방치선박 200여척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방치선박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방치선박 실태를 조사하여 데이터를 관리하고, 수협에서 실시하는 어업인 교육 등을 이용하여 선장 및 어선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방치선박 발생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표 2-1-46 방치선박 정리 추진실적(2013~2017년)

(단위 : 백만원, 척)

구 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비	1,038	170	-	-	-	-	100	150	530	-	50	38
처리척수	959	90	12	15	37	2	30	107	578	13	54	21

* 지방청 실적 포함

(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1991년부터 국고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물환경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계별로 수질보전의 필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다. 2017년말 기준 전국에 105개 시설(12.1천 m³/일)이 가동되고 있고, 46개 시설(6.0천m³/일)이 신·증설 중에 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2017년에는 수질오염물질(BOD기준) 54,455톤/년을 유입처리하여 54,325톤/년을 제거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물질 저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5)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 마을단위별 소규모 공공하수처

리시설(시설용량 500톤/일 미만)을 설치하여 농어촌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초기단계에서 정화함으로써 하천·상수원 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을 77%까지 제고시키기 위해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농어촌 및 도서지역 하수도 정비사업에 국고 2조 6,615억원(신·증설 1,033개소, 개량 1,901개소)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하수도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총 국고 2조 8,468억원(1995년부터 2004년까지 지방양여금 4,877억원,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국고보조금 2조 3,591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3,282개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도시설(시설용량 500톤/일 미만, 2015년말 기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 하수도보급률이 67.1%(2015년말 기준)로 제고되었다.

표 2-1-47 하수도 보급률 현황

(단위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국평균	88.6	89.4	90.1	90.9	91.6	92.1	92.5	92.9	93.2
시 지 역	92.5	93.4	93.8	94.2	94.6	94.9	95.0	95.1	95.5
농어촌 평균*	49.1	52.6	56.0	59.5	62.1	63.7	65.9	67.1	68.7
읍지역	76.1	73.5	77.9	82.2	83.5	84.6	84.7	85.0	85.3
면지역	25.1	29.3	38.1	38.7	41.9	44.0	47.3	49.0	50.6

* 농어촌 평균 : 읍·면지역 (군지역 읍, 면지역)

2017년에는 강원도 고성군 등 13개 시·도에 347,848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1-48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2017)

(단위 : 백만원)

계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347,848	6,817	8,381	2,195	2,955	21,661	23,792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5,328	28,162	57,848	75,032	46,658	46,019	3,000

(6)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1994년에 농업정책심의회(농어촌생활여건개선분과위)에서 농어촌의 공업화에 대비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를 촉구하면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을 공포하여 농어촌특별세지원 대상사업에 “농어촌폐기물처리 지원사업”을 포함하였으며, 1995년도에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3년에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이 개정되어, 사업기간을 2014년까지 연장하였으며,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중 농수산물부 등 소관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07년 1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이 폐지되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 관련 사업들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승계되었다.

2017년에는 농어촌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 총 14개소에 71억원의 국고를 지원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단위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지원하여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7)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2015년 기준으로 도시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95.1%이고,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은 67.1% 수준이다. 그 중 특히, 면지역은 하수도보급률이 49.0%에 불과하여 하천 수질오염 등에 취약한 실정이다. 본 사업은 UR협상 타결에 따라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1995년부터 농어촌특별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촌지역의 면지역에 하수도설치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면단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500톤/일 이상)을 설치하여 농어촌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초기단계에서 정화함으로써 하천·상수원 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면단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 제고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존치시점(2024년)까지 하수도 확충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① 단위사업 전체의 추진 경과(현황) 및 성과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하수도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먼 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국고 총 1조 3,870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면지역의 하수도보급률이 49.0%(2015년말 기준)로 제고되었다.

표 2-1-49 하수도 보급률 현황

(단위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국평균	88.6	89.4	90.1	90.9	91.6	92.1	92.5	92.9	93.2
시 지 역	92.5	93.4	93.8	94.2	94.6	94.9	95.0	95.1	95.5
농어촌 평균*	49.1	52.6	56.0	59.5	62.1	63.7	65.9	67.1	68.7
읍지역	76.1	73.5	77.9	82.2	83.5	84.6	84.7	85.0	85.3
면지역	25.1	29.3	38.1	38.7	41.9	44.0	47.3	49.0	50.6

* 농어촌 평균 : 읍·면지역 (군지역 읍, 면지역)

② 각 시·도별(또는 광역권별) 지원 현황 및 성과

2017년에 먼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경기도 파주시 등 8개 시·도에 100,980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1-50 먼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2017)

(단위 : 백만원)

계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00,980	4,366	13,074	1,258	17,237	20,383	18,230	20,160	6,272

(8)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제주)

2015년 기준으로 도시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95.1%에 이르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은 67.1%(읍면지역) 수준에 불과하여 하천 수질오염 등에 취약한 실정이다. 본 사업은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시설 확

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사업내용이 같으며,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 계정)로 편성되는 사업이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제주)에 마을단위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500톤/일 미만)을 설치하여 농어촌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초기단계에서 정화함으로써 하천·상수원 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간의 하수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수도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① 단위사업 전체의 추진 경과(현황) 및 성과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하수도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도 지역에 총 국고 299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말 기준 제주지역 하수도보급률이 91.4%로 제고되었다.

표 2-1-51 하수도 보급률 현황

(단위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국 평균	88.6	89.4	90.1	90.9	91.6	92.1	92.5	92.9	93.2
농어촌 평균*	49.1	52.6	56.0	59.5	62.1	63.7	65.9	67.1	68.7
제주도 평균	82.0	84.8	87.1	88.0	89.2	89.5	91.1	91.4	92.4

* 농어촌 평균 : 읍·면지역 (군지역 읍, 면지역)

② 각 시·도별(또는 광역권별) 지원 현황 및 성과

2017년에 하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제주) 사업에 제주도 2개 시·군에 3,000백만원(서귀포시 1,686백만원, 제주시 1,314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하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였다.

(9)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설

치사업을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써, 쓰레기의 위생적·안정적 처리기반을 조성하여 국민 복지를 증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도시의 쓰레기 처리시설 확보로 대도시의 위생적인 조성을 목표로 1997년에 소각 시설 확충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1998년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매립지정비 등 총 31개소에 913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10)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제주)

클린하우스 사업은 200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하여 2017년말 기준 비가림 클린하우스 1,557개소, 거치대 848개소를 설치·운영하였다. 이후,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설치 전('01~'05) 48%에서 설치 후('17) 57%로 증가하였다. 또한, 재활용도움센터 및 클린하우스 설치로 일자리 창출, 배출시간 연장을 통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생활환경이 쾌적해져 주택지역의 미관 개선 및 주민들의 환경 복지가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주민 만족도도 92%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2-1-52 클린하우스 설치현황(06~17년)

(단위:개소)

구분	클린하우스 설치현황			CCTV 설치현황
	계	비가림시설	거치대	
계	2,405	1,557	848	1,153
제 주 시	1,871	1,103	768	642
서귀포시	534	454	80	511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은 폐비닐 방치에 따른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을 방지하여 건전한 토양과 쾌적한 농촌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010년 1월 1일 농어촌폐비닐 수거지원사업 업무 이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으로 폐기물 적정 수거 처리를 위한 국고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17년에도 4,657

톤을 수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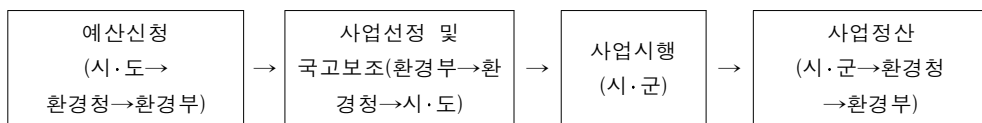
농어촌·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률 향상 및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정부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제주도에 중앙 정부의 차별화된 적극적 지원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 제고에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과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1) 비점오염저감사업

하천 환경변화,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강우특성 변화 등으로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 및 농촌지역, 도로 등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하천 수질개선과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강우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점오염저감시설(자연형·장치형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도시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하여 사전예방 차원에서의 발생원 관리방법인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한 물순환선도도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림 2-1-5 사업추진 절차



2017년에 비점오염저감시설 83개소 설치를 지원하여 도시, 농촌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통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공공청사 등 13개소에 그린빗물인프라 사업을 추진하여 강우유출 저감을 통해 비점오염원을 관리함으로써 물순환구조를 개선하고 경관가치를 향상하는 데 기여하였다.

앞으로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도시지역의 물순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토양 침투 및 수질 정화를 거쳐 유출되는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한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대전시 등 5개 지

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12)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은 2016년 기준으로 특별·광역시외의 경우 99.6%, 시지역은 99.0%에 이르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면지역 및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은 72.7% 수준에 불과하여 일시적인 가뭄에도 상습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다.

표 2-1-53 도·농간 상수도 보급률 비교

(단위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도시지역(A)	98.8	98.9	99.1	99.1	99.3	99.0
농어촌(面)지역(B)	58.8	62.2	65.9	68.6	70.9	72.7
차이(A-B)	40.0	36.7	33.2	30.5	28.4	26.3

이에 정부는 농어촌지역의 생활용수공급 확대를 위해 1994년부터 2017년까지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총 5조 6,574억원(국고 3조 9,602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농어촌 및 도서지역 1,514개소(농어촌생활용수개발 1,191개소, 도서지역상수원개발 323개소)에 상수도시설 설치를 추진하였고, 2017년에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56개소(신규 62, 계속 194)에 국고 272,938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23개소(신규 5, 계속 18)에 국고 25,581백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보급 확충사업을 추진하였다.

(13)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고온현상 등으로 인해 조류 개체수가 증가하여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고도정수처리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의 영세성, 비전문성으로 인한 도·농간 서비스 불균형도 해소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9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제주계정)로 지방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총 사업비 1,489억원(국고 479억원)을 지원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5개소)을 실시하고 있다.

4. 안전한 지역환경 만들기

(1)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급커브, 급경사, 노폭협소 등 구조적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지방도로 구간에 대하여 선형개량, 경사완화, 도로 폭 확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0개년 중장기 사업계획(제1차 2004~2013년, 제2차 2014~2023년)에 따라 2004년부터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다.

제1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라 전국 1,692개소의 위험한 지방도로에 1조 7,484억원을 투자하여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 제2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총 715개소에 1조 3,836억원을 투자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17년에는 600억원(국비 300억원)을 투입하여 91개소의 위험한 지방도로를 개선하였고 2018년에는 508억원(국비 254억원)을 투입하여 71개소의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 2-1-54 지방도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계	2004~2017년 실적	2018년 계획	2018년 이후
사업량		2,407	1,777	71	559
사업비	합 계	31,320	20,306	508	10,506
	국 비	15,660	10,153	254	5,253
	지방비	15,660	10,153	254	5,253

(2) 도시침수 대응사업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나 하수관거 용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

하여 매년 도시침수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0년간 연간 강수량은 17% 증가하였고, 향후 2050년까지 15.6% 증가할 전망이다. 본 사업은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하수도시설을 정비하여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습침수 지역에 대해 우수관로와 펌프장 등을 확충하여 통수능력을 확보하고 하수관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하수저류시설을 설치, 침수 예방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주여건 제공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대책을 마련하고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중점 지원하여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이다.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2017년까지 64개 지역을 지정

표 2-1-55 도시침수 대응 하수도인프라 확충 사업비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사업비 규모	8,623	1,458	1,764	1,801	1,800	1,800

* '14~'17년 까지 도시침수대응 사업으로 총 7,993억원 기투자

* '18년도 이후 사업비는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산출

(3)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농업인의 고령화 추세 및 안전사고 증가 등으로 의료복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농업종사자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 등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업은 3대 위험산업(광업>농어업>건설업)에 속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용 지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작업과 만성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며 사전예방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표 2-1-56 고령인구 비중

(단위: %)

구 분	2010년	2017년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	31.8	42.5
전체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	11.3	13.8

자료출처 : 통계청 '2017 농림어업총조사'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와 예방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지정하여 지원(개소당 약 3억원)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농업인 농약중독 질환과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조사연구가 실시되도록 2개소를 추가 지정하였고, 2015년에는 농업인 손상 발생에 대한 연구를 위해 1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찾아가는 무료 보건서비스’를 실시하여 총 306개마을 농업인 9,400명에게 체감 복지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7년까지 농업인 전문 질환에 대한 연구결과 과수농가의 상지근골격계 질환 유병률 등 특정분야 농업인 질환의 유병률 및 농작업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성과를 달성함은 물론, 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촌에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에도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및 예방교육 활동 등과 더불어 농촌지역 고령농업인을 위한 진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농업안전보건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표 2-1-57 농업안전보건센터 찾아가는 무료보건서비스 확대

(단위:마을, 백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농업안전보건센터 ‘찾아가는 무료보건서비스’ 확대	지원마을	-	-	131	166	297
	지원인원	-	-	44	49	93

표 2-1-58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현황

지정기관	연구 주제	지정시기
강원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작업 허리질환	2013년
조선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 무릎골관절염 질환	2013년
경상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 상지 근골격계 질환	2013년
단국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약중독 질환	2014년
제주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 손상감시체계 구축	2015년

(4)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를 심층적으로 분석, 원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도로구조,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대시설물 등 주변 교통환경을 정비·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해 왔다.

제1~5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결과, 13,865개소를 개선하였고, 2012년부터 시작된 제5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계획에 따라 2012년에 272개소(279억원), 2013년 267개소(299억원), 2014년에 148개소(114억원), 2015년에 72개소(48억원), 2016년 52개소(66억원), 2017년에는 106억원을 투입하여 105개소를 개선·정비하였다. 2018년부터 제6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계획에 따라 103개소(96억원)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부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불필요하게 신호대기 시간이 길고 신호통제성이 낮은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2010년 87개소(172억원), 2011년 97개소(250억원), 2012년 85개소(184억원), 2013년 96개소(260억원), 2014년 54개소(146억원), 2015년 24개소(67억원), 2016년 18개소(50억원), 2017년 23개소(65억원)를 설치하였으며, 2018년에는 40억원을 투입하여 14개소의 회전교차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표 2-1-59 최근 3년간 사업효과

(단위: 건, %)

세부추진과제	‘15년			‘16년			‘17년		
	개선 전	개선 후	효과	개선 전	개선 후	효과	개선 전	개선 후	효과
교통사고 잦은 곳	3,579	2,020	43.6	2,116	1,338	36.8	1,491	1,043	30.1
회전교차로 설치	100	52	48	65	27	59	91	45	50.5

②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보·차도 분리, 보도 단절구간 연결, 보행 장애물 제거 등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565억원(국비 2,283억원)을 투자하여 191개소를 정비하였다.

2013년에는 52개소에 618억원(국비 309억원)을 투자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특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2012년 8월)에 따라 보행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업방식을 기존의 선개념에서 지구개념으로 전환하고 공모를 통해 ‘보행환경 개선지구 시범사업’ 10개소를 추진하였다. 공모사업은 교통·안전·도시계획·시민단체 등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보행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객관성, 전문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하였다.

2014년에는 378억원(국비 189억원)을 투자하여 공모사업 18개소, 일반사업 2개소를 정비하였고, 2015년에는 308억원(국비 154억원)을 투자하여 공모사업 10개소, 일반사업 4개소를 정비하였다. 2016년에는 246억원(국비123억)을 투자하여 공모사업 14개소를, 2017년에는 106억원(국비53억)을 투자하여 공모사업 8개소를 정비하였다. 2018년에는 85억원(42.5억)을 투자해 공모사업으로 지정된 8개소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지구로 정비할 계획이다.

표 2-1-60 최근 3년간 사업효과

(단위: 건, %)

세부추진과제	‘15년			‘16년			‘17년		
	개선 전	개선 후	효과	개선 전	개선 후	효과	개선 전	개선 후	효과
안전한보행환경조성	263	162	38.4	37	28	24.3	148	106	30.1

(5) 소하천정비

소하천은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하천 중 평균하폭 2미터 이상, 연장 500미터 이상의 하천이 지정 대상이며, 전국적으로 22,823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수해위험이 높은 미 정비된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4,221억원(국비 2,115, 지방비 2,106)을 투입하여 506개소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다.

소하천정비는 과거 치수중심의 단면 확장 및 제방축조로 자연하천 고유기능 상실, 획일적 소하천 직선화 정비로 하류지역 홍수피해 부담 가중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0년부터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전국에서 공모한 55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1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서면심사, 현장심사, 최종심사)를 거쳐 14개 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표창과 2018년 소하천 정비에 필요한 국비 1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공모전을 통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을 선정하여 이를 홍보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천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과 생활공간이 조화된 소하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1.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1)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중심지¹²⁾에 대한 정책은 1972년부터 소도읍가꾸기, 소도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던 행정자치부가 2003년부터 읍급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을 도입하면서 본격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을 도입함에 따라 이원적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2010년부터 기초생활권 발전정책과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반농산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지역유형별 주관부처에 의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 중심지 정비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일반농산어촌지역에 있어서 농촌중심지 관련 정책·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읍(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308지구를 추진하여 읍·면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였다. 다만, 사업이 농촌중심지 체계상의 위계 및 기능과 관련성이 낮고, 도로 및 시가지 정비 등 H/W 중심 추진으로 활성화의 한계에 부딪혔다. 또한, 新지역발전 핵심시책인 중심지 활력 증진 등을 통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과 농촌 지역개발정책 개편(2013년 12월)을 통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정책화하였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촌 중심지를 그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 중심지를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기능은, ①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중심지, ② 배후 농촌마을의 발전을 선도하는 발전 거점, ③ 도시와 농촌을 매개하는 교통·정보 결

12) 농촌 중심지 :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의 읍·면소재지 중에서 주민들에게 교육·문화·복지 등 일상생활 서비스의 공급 중심지 및 경제활동과 지역공동체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절, ④ 학교·지역사회단체·공공시설 등이 집중된 지역공동체 활동의 거점이다.

표 2-1-61 주민만족도

(단위: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비고
주민만족도	81.1	81.8	82.1	82.4	

그림 2-1-6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개요



농촌 중심지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생활권 구현을 목표로 하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4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농촌 주민의 생활서비스의 원활한 충족, ② 농촌 경제활동의 다각화 및 새로운 경제 활력 창출, ③ 공동체 활동 거점기능의 강화, ④ 고유 자원의 보전 및 활용 등이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추진방식은, [추진체계]→[계획수립]→[통합적 접근]→[투자 효율성]→[계획적 투자]의 단계로 추진되며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추진체계]거버넌스(읍면발전협의회, 추진위원회, 총괄계획가)의 확장 및 역할강화, ② [계획수립]주민주도형 농촌 중심지 활성화 계획 수립, ③ [통합적 접근]타 사업·계획과 연계한 장소중심 통합적 접근, ④ [투자 효율성]개별 중심지별 테마 중심으로 투자 집중, ⑤ [계획적 투자]선택과 집중으로 중심지 선정 및 계획 반영 등이다.

2015년도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개편한 후 처음으로, 선도지구 15개 지구 11,374백만원, 일반지구 63개 지구 31,131백만원을, 2016년도에는 선도지구 32개 지구 29,833백만원, 일반지구 131개 지구 73,679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선도지구 50개 지구 51,469백만원, 일반지구 202개 지구 155,50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

년도에는 선도지구 67개 지구 167,388백만원, 일반지구 283개 지구 230,807백만원을 지원하여 농촌 주민의 생활서비스 증진 및 경제 활력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2)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그 동안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2007년부터 매년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자체나 마을에 사업비의 50%를 보조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시범도시 7개소, 시범마을 16개소 및 성공모델지원사업 3개소에 144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관련 지역발전위원회(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광역화·특성화를 기조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수립·추진하였다(균특법 개정, 2009년 4월 22일).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국토교통부 소관사업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여 타 부처에서 추진해 오던 전원마을 조성, 농촌생활환경정비, 어촌종합개발 사업 등 17개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을 통합하여 국토교통부 책임 하에 “포괄보조금 지원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지자체 스스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 99개 지자체(특별·광역시 군·구, 인구 50만 이상 시지역 등)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도시 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함으로써 도시환경의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활력증진 및 지역 커뮤니티 복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도시활력증진지역에 연평균 약 1,000억원을 지원하였다.

2016년부터 도시활력증진지역 대상을 143개 지자체(특·광역시 군·구 및 일반시, 도농복합시의 동지역)로 확대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4년부터 추진하던 도시재생사업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과 통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내역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일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5개로 개편하고, 2016년 및 2017년에 각각 1,452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1-62 연도별 예산 지원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96,400	96,396	108,597	103,167	104,167	145,167	145,192
계속사업	83,608	85,996	91,850	84,862	91,788	135,550	137,346
신규사업	12,792	10,400	16,747	18,305	12,379	9,617	7,846

표 2-1-61 도시활력증진지역 현황 (143개 시·군·구)

구 분	개수	도 시 명
서울	25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	16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	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	8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	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5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	22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강원	6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충북	3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충남	8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전북	6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	5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경북	10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경남	8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세종	1	세종시
제주	2	제주시, 서귀포시

도시재생사업 중 경제기반형 사업은 공공의 선투자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발하여 민간 합동으로 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주변 노후 도시지역 등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사업은 원도심 등 중심시가지의 행정·업무, 상업, 역사·문화·관광, 공공복지, 도심주거 등의 기능 증진과 회복을 위한 사업이며, 일반

근린형 사업은 낙후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이다.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은 소규모 마을단위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거주환경개선, 골목상권 개선 등과 함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며,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 주민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향상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 모두에게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의 틀과 질적 측면의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경제성·효율성만을 중시한 도시정책에서 탈피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하였으며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발전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주민 차원에서는 주민참여형 정책 추진으로 수요자 지향형 도시정책을 촉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설치 위주 지원사업을 넘어 지역자산(수변공간, 공폐가, 특산물 등)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활력증진사업으로 전환하여 주민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였다.

2017년에 들어서며, 도시재생사업은 전환점을 맞게 된다. 국가적 문제인 ‘도시 쇠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내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신설(‘17.6월)하고,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였다.

조직 신설 이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모를 거쳐 68곳의 시범사업을 최종 선정(‘17.12월)하였으며,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들이 주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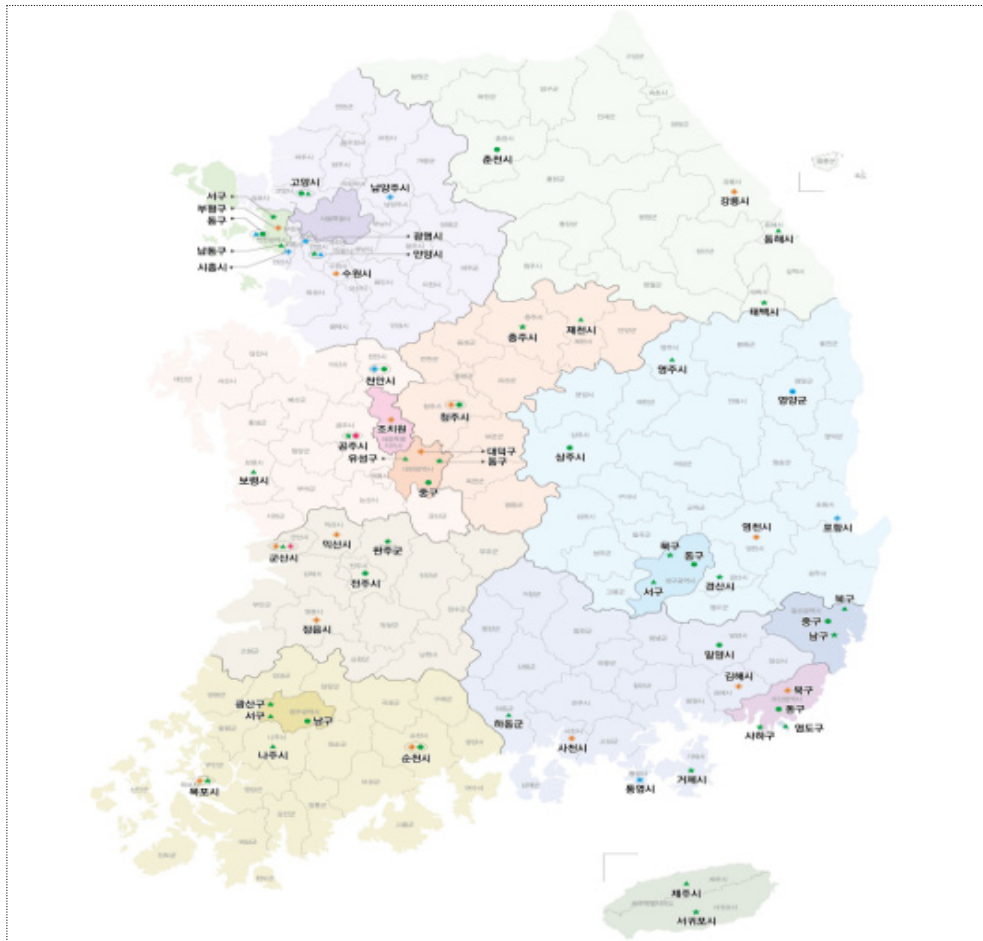
< 사업별 주요 특징 사례 >

- * (경남 통영)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하여 관광·해양산업의 거점으로 조성
- * (전남 목포) 300여개의 근대건축물을 활용해 근대역사 체험길 조성 등
- * (경남 하동) 섬진강 인근 폐철도 공원과 송림공원을 연계해, 광평역사문화 간이역을 조성
- * (경기 광명) 무허가건축물 밀집지역과 상습침수 지역에 순환개발주택 및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84호 조성
- * (인천 부평) 미군부대 반환 부지에 알자리센터, 먹거리 마당, 혁신오피스 등 융복합 혁신플랫폼 조성 등

동 시범사업은 현재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으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타 지역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17.12월)하여 상생협약의 근거를 마련한 만큼, 상생협약 체결을 활성화하고 공공임대상가 공급도 지원해 ’ 따듯한 재생 ‘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림 2-1-7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현황(68곳)



[중앙 선정 (15)/공공기관 제안 (9)]				[광역지자체 선정 (44)]			
시·도	대상지역			시·도	대상지역		
부 산 (1)	북 구			부 산 (3)	동 구	사하구	영도구
인 천 (2)	부평구	동 구		대 구 (3)	동 구	북 구	서 구
대 전 (1)	대덕구			인 천 (3)	동 구	서 구	남동구
세 종 (1)	조치원읍			광 주 (3)	남 구	광산구	서 구
경 기 (5)	수원시	시흥시	남양주시	대 전 (3)	중 구	동 구	유성구
	광명시	안양시		울 산 (3)	중 구	남 구	북 구
강 원 (1)	강릉시			경 기 (3)	고양시	안양시	고양시
충 북 (1)	청주시			강 원 (3)	춘천시	태백시	동해시
충 남 (1)	천안시			충 북 (3)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전 북 (3)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충 남 (3)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전 남 (2)	목포시	순천시		전 북 (3)	전주시	완주군	군산시
경 북 (3)	영천시	포항시	영양군	전 남 (3)	순천시	목포시	나주시
경 남 (3)	사천시	김해시	통영시	경 북 (3)	상주시	경산시	영주시
				경 남 (3)	밀양시	거제시	하동군
				제 주 (2)		서귀포시	제주시

표 2-1-64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현황(2017년도)

구분	세부사업	지역		'17예산 액 (백만원)
		시도	시군구	
	합 계			145,192
경제기반형	수도권 창조경제의 거점 부천 허브렉스	경기	부천시	2,500
경제기반형	"경제·교통·문화 Hub"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	대구	서·북구	1,480
경제기반형	원도심쇠퇴의상징에서희망의공간으로	대전	중·동구	1,480
경제기반형	부산역일원 창조지식 플랫폼 사업	부산	동구	5,008
경제기반형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도시재생사업	서울	노원·도봉구	1,480
경제기반형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인천	중·동구	1,480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 사업	충북	청주시	5,000
근린재생형(일반)	춘천시 도시재생사업	강원	춘천시	435
근린재생형(일반)	태백시 도시재생사업	강원	태백시	1,833
근린재생형(일반)	성주산을 품은 주민이 행복한 마을	경기	부천시	1,413
근린재생형(일반)	언덕 위 태평성대	경기	성남시	77
근린재생형(일반)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	경기	수원시	412

근린재생형(일반)	송정역세권재생사업	광주	광산구	435
근린재생형(일반)	오천마을재생프로젝트	광주	서구	465
근린재생형(일반)	꿈을 이야기하다, 대명 행복 문화마을 조성사업	대구	남구	700
근린재생형(일반)	오늘의 신화와 문화가 살아있는 원고개 날뫼마을	대구	서구	435
근린재생형(일반)	신장로일원 도시재생사업	부산	강서구	435
근린재생형(일반)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부산	서구	502
근린재생형(일반)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부산	중구	471
근린재생형(일반)	G-valley를 품고 더하는 마을 가리봉	서울	구로구	507
근린재생형(일반)	해방촌도시재생사업	서울	용산구	435
근린재생형(일반)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원점지역 재창조사업	울산	동구	435
근린재생형(일반)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되살리기	울산	북구	435
근린재생형(일반)	왕의길을중심으로한 강화문화가꾸기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인천	강화군	435
근린재생형(일반)	나주시 도시재생 사업	전남	나주시	435
근린재생형(일반)	순천시 도시재생 사업	전남	순천시	1,200
근린재생형(일반)	남원시 도시재생사업	전북	남원시	435
근린재생형(일반)	도시재생선도사업	충남	공주시	1,200
근린재생형(일반)	도시재생	충남	천안시	400
근린재생형(중심)	가야문화와 세계문화가 상생하는 문화평야 김해	경남	김해시	822
근린재생형(중심)	천년항구 마산포 르네상스 사업	경남	창원시	2,000
근린재생형(중심)	자생과 상생으로 다시뛰는 심장, 김천 원도심	경북	김천시	822
근린재생형(중심)	재생두레를 통한 안동옹부 재창조계획	경북	안동시	822
근린재생형(중심)	영주역전역전사업	경북	영주시	1,967
근린재생형(중심)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광주	동구	1,500
근린재생형(중심)	목도노포전수방, 창업실험방, 주거전통산업재생방, 주거지소통방	부산	영도구	824
근린재생형(중심)	창신송인도시재생선도사업	서울	종로구	2,000
근린재생형(중심)	울산, 중구로다(中具路多)	울산	중구	822
근린재생형(중심)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전남	목포시	3,000
근린재생형(중심)	군산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전북	군산시	2,000
근린재생형(중심)	전주시 도시재생사업	전북	전주시	822
근린재생형(중심)	같이 두드림 다시 올레	제주	제주시	822
근린재생형(중심)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충북	제천시	822
근린재생형(중심)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약	충북	충주시	822
도시생활환경개선	빈집정비사업	강원	동해시	20
도시생활환경개선	햇빛 어울거리 조성	강원	동해시	389
도시생활환경개선	이사부문화마을만들기사업	강원	삼척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제3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금호3지구)	강원	속초시	535
도시생활환경개선	사람을 그리워 하는 아바이 마을 희망가꾸기	강원	속초시	300
도시생활환경개선	역사와 문화를 어우르는 향교 도시문화마을	강원	원주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소하동 구도심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	경기	광명시	763
도시생활환경개선	남양주 그린베이스조성사업	경기	남양주시	566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심속군장마을 활활 재생 프로젝트	경기	남양주시	558
도시생활환경개선	원도심문화복합기초시설'판타박스'조성	경기	부천시	475
도시생활환경개선	사람중심도시 문화플랫폼 조성사업	경기	부천시	800
도시생활환경개선	부천시원미공원(역곡지구) 조성	경기	부천시	242
도시생활환경개선	행복 UP 활력 UP "DAN(丹)"	경기	성남시	658
도시생활환경개선	이웃과 함께 만들어 가는 수진2동 '오래뜰 마을'	경기	성남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경기	수원시	457
도시생활환경개선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경기	수원시	852
도시생활환경개선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경기	수원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재생,도시에활력을불어넣다	경기	시흥시	817
도시생활환경개선	ART&ECOCUBEProject	경기	시흥시	660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일, 그 되살림의 이야기	경기	시흥시	691
도시생활환경개선	희망마을 상상놀이터만들기 및 지하주차장조성	경기	안산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나"로부터 시작하는 건강한 인덕(仁德)마을	경기	안양시	1,103
도시생활환경개선	테마가 있는 오외장터 만들기	경기	오산시	717
도시생활환경개선	남촌마을 맞춤형정비사업	경기	오산시	137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 마평1구역	경기	용인시	1,196
도시생활환경개선	살기좋은금천마을만들기	경기	의왕시	79
도시생활환경개선	추동 '웰빙 공원' 조성사업	경기	의정부시	96
도시생활환경개선	제역마을 맞춤형정비사업	경기	평택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기계화경작로확포장	경기	화성시	150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경기	화성시	1,892
도시생활환경개선	소규모용수개발	경기	화성시	378
도시생활환경개선	어촌종합개발사업	경기	화성시	189
도시생활환경개선	조선산업 배후도시 활력증진사업	경남	거제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진영소도읍재활사업	경남	김해시	1,032
도시생활환경개선	진영좌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경남	김해시	935
도시생활환경개선	행복의창 만들기	경남	창원시	720
도시생활환경개선	एको뮤지엄시티진해	경남	창원시	390
도시생활환경개선	월영광장조성사업	경남	창원시	1,320
도시생활환경개선	월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경남	창원시	567
도시생활환경개선	창원들넉지표수보강개발사업2단계	경남	창원시	324
도시생활환경개선	Blossom "여좌"	경남	창원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함께사는 역사문화마을 황금동 조성사업	경북	김천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구성 노인안전 돌레마을 조성사업	경북	영주시	600
도시생활환경개선	역사도심 문화테마 마을조성	경북	영천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포항원도심재생사업	경북	포항시	1,475
도시생활환경개선	기계화경작로확포장	경북	포항시	565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경북	포항시	1,374
도시생활환경개선	송림마을 다음길 조성사업	경북	포항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기계화경작로확포장	광주	광산구	47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광주	광산구	184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광주	광산구	290
도시생활환경개선	지표수보강개발	광주	광산구	135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산7통 주거환경개선사업	광주	광산구	480
도시생활환경개선	서동주거환경개선사업	광주	광산구	240
도시생활환경개선	용보촌살기좋은마을만들기	광주	광산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양림학강)	광주	남구	1,089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광주	남구	76
도시생활환경개선	월산덕림 주거환경개선사업(달외 공동체 마을 조성)	광주	남구	300
도시생활환경개선	주월동 서민정주여건 개선사업	광주	남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4구역)	광주	동구	1,065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광주	동구	168
도시생활환경개선	지표수보강개발	광주	동구	36
도시생활환경개선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광주	동구	525
도시생활환경개선	천지인문화소통길조성	광주	북구	94
도시생활환경개선	광주역의 역전(逆轉),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광주	북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지표수보강개발	광주	서구	73
도시생활환경개선	마록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광주	서구	812
도시생활환경개선	2000배행복마을만들기	대구	남구	1,018
도시생활환경개선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 행복마을	대구	남구	1,153
도시생활환경개선	"레드블록"젊음과다문화를담은원룸촌재창조	대구	달서구	199
도시생활환경개선	미로마을 조성 사업	대구	달서구	357
도시생활환경개선	Red & Green carpet project [성서아울렛타운 활성화 사업]	대구	달서구	566
도시생활환경개선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	대구	달서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대구	달성군	265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달성군)	대구	달성군	840
도시생활환경개선	도동북한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력화 "창조문화바람 High-five(5) 현풍"	대구	달성군	733
도시생활환경개선	하빈PMZ평화기념마을 조성	대구	달성군	754
도시생활환경개선	락.경.청 선비문화 허브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대구	달성군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동구)	대구	동구	100
도시생활환경개선	안심창조밸리조성사업	대구	동구	705
도시생활환경개선	천연기념물 ONE 도동문화마을 조성사업	대구	동구	839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북구)	대구	북구	134
도시생활환경개선	연암 서당골 여·행	대구	북구	715
도시생활환경개선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	대구	북구	780
도시생활환경개선	행복한날외골만들기	대구	서구	635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수성구)	대구	수성구	109
도시생활환경개선	수성 명품단독주택지 조성사업	대구	수성구	345
도시생활환경개선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대구	수성구	1,387
도시생활환경개선	동산·삼덕지구 생태문화 골목길 조성사업	대구	중구	2,687
도시생활환경개선	남산 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	대구	중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장동,육골구역-계속)	대전	대덕구	318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대동3구역)	대전	동구	270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홍도구역)	대전	동구	445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대전	유성구	171
도시생활환경개선	봉명지구 명물 카페거리 조성사업	대전	유성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보문3구역)	대전	중구	1,337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보문1구역)	대전	중구	691
도시생활환경개선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대전	중구	735
도시생활환경개선	금수현거리조성사업	부산	강서구	536
도시생활환경개선	금정구 부산대학교 일원 주거지 재생사업	부산	금정구	792
도시생활환경개선	3세대가 함께하는 안전한 풍당풍당 마을 만들기	부산	금정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부산	기장군	349
도시생활환경개선	문현터널 상부공간 연결 공원화 사업	부산	남구	1,535
도시생활환경개선	가마와마을 재생사업	부산	동구	644
도시생활환경개선	동래고도심재창조동래방래사업	부산	동래구	91
도시생활환경개선	온통,온나, 온천장으로 온정 365 프로젝트	부산	동래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수정터널상부공간연결사업	부산	부산진구	837
도시생활환경개선	범천2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산	부산진구	293
도시생활환경개선	당감 행복한 마을 만들기	부산	부산진구	381
도시생활환경개선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 빌리지 조성사업	부산	부산진구	804
도시생활환경개선	해피투게더공창마을환경정비사업	부산	북구	132
도시생활환경개선	사상광장로 가로환경개선사업	부산	사상구	195
도시생활환경개선	온골마을 철로변 소통 프로젝트	부산	사상구	270
도시생활환경개선	엄궁동 통통길 조성사업	부산	사상구	382
도시생활환경개선	감전동 감동 365 프로젝트	부산	사상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지성이면감천문화마을조성사업	부산	사하구	1,901.5
도시생활환경개선	다대동 창조 커뮤니티 존 조성	부산	사하구	532.5
도시생활환경개선	아미4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산	서구	1,732
도시생활환경개선	산복마을 계단공동체 남일이네 활력사업	부산	서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응답하라! 수영 팔도 이야기 : 좌수영성 일원 재창조 사업	부산	수영구	1,291
도시생활환경개선	현여울 문화마을 재생 프로젝트	부산	영도구	414
도시생활환경개선	원도심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사업	부산	중구	1,039
도시생활환경개선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	부산	중구	285
도시생활환경개선	반여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	부산	해운대구	588
도시생활환경개선	살기좋은 개화마을 만들기	서울	강서구	531
도시생활환경개선	오류 행복마을 조성사업	서울	구로구	367
도시생활환경개선	경의선(선형의 숲)공원 조성사업	서울	마포구	942
도시생활환경개선	홍제권 리빙랩기반 의료산업특화 및 주민건강증진사업	서울	서대문구	327
도시생활환경개선	샬터, 쉼터, 공동체가 공존하는 살기좋은 안전마을	서울	성북구	600
도시생활환경개선	중심도심거리 활극	서울	중구	1,369
도시생활환경개선	선암지구 생활환경개선사업	울산	남구	931
도시생활환경개선	방어진항 국제건축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울산	동구	335
도시생활환경개선	호계지구 주거지재생	울산	북구	658
도시생활환경개선	어촌종합개발사업	울산	울주군	181
도시생활환경개선	학성육성프로젝트	울산	중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계양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	인천	계양구	426
도시생활환경개선	인천 남구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사업	인천	남구	350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조성사업 (문화서로, 용천로)	인천	남동구	372
도시생활환경개선	화수부두 주변 수산 관광발전 기반시설 확충	인천	동구	24
도시생활환경개선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	인천	동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	인천	부평구	218
도시생활환경개선	신현동 회화나무주변구역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인천	서구	444
도시생활환경개선	가재울마을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	인천	서구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원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	인천	연수구	565
도시생활환경개선	아시아누들타운조성사업	인천	중구	377
도시생활환경개선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인천	중구	2,347
도시생활환경개선	불꽃 튀는 너른 마당 광영조성사업	전남	광양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만호구역)	전남	목포시	186
도시생활환경개선	근대역사테마길조성	전남	목포시	878
도시생활환경개선	동외동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전남	순천시	150
도시생활환경개선	인제C지구 도시생활 환경개선	전남	순천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전통을 품은 생생 향교마을	전북	남원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천사마을가꾸기사업	전북	전주시	67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강당재구역)	전북	전주시	487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풍남초교인근)	전북	전주시	659
도시생활환경개선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사업	전북	전주시	924
도시생활환경개선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	전북	전주시	900
도시생활환경개선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전북	전주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시민창안 300거리 프로젝트	전북	정읍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중문동 회수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제주	서귀포시	727
도시생활환경개선	이호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제주	제주시	759
도시생활환경개선	해피바일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제주	제주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원도심아이가머무는동네만들기	충남	당진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장면)	충남	천안시	158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풍세면)	충남	천안시	458
도시생활환경개선	중앙거리 활성화 조성사업	충남	천안시	667
도시생활환경개선	성황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	충남	천안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안덕별 예술의거리 상권활성화 사업	충북	청주시	829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영운구역)	충북	청주시	954
도시생활환경개선	문화예술특성화를위한중앙동상권활성화사업	충북	청주시	180
도시생활환경개선	남주 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사업	충북	청주시	200
도시생활환경개선	녹색쉼터 서흥 창조적 마을만들기	충북	충주시	220
지역역량강화	도롱골 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강원	태백시	253
지역역량강화	「과천에서 행복하게 더 살지」프로젝트	경기	과천시	133
지역역량강화	마을활력발전소'학습등대'	경기	남양주시	50
지역역량강화	사이좋은 사2동 마을만들기	경기	안산시	304
지역역량강화	세월호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경기	안산시	120
지역역량강화	사람중심의 소프트파워로 날자	경기	안양시	8
지역역량강화	배우면서가르치는숨쉬는교육도시조성	경기	오산시	250
지역역량강화	행복한다문화가족구현	경기	오산시	70
지역역량강화	우리동네 꿈지락	경기	의왕시	50

지역역량강화	용평 창조적 마을만들기	경남	밀양시	220
지역역량강화	구미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경남	사천시	66
지역역량강화	마을학교 운영	경남	창원시	30
지역역량강화	U-Line project	경북	포항시	50
지역역량강화	광산구더하기지구사업	광주	광산구	96
지역역량강화	생생지락, Again 청춘	광주	광산구	80
지역역량강화	지역경제순환형 공동체 일자리 창출 및 CB&마을 디자인 축제	광주	남구	42
지역역량강화	공감누리온마을만들기	광주	북구	50
지역역량강화	벚꽃만개 향기로운 농성동	광주	서구	50
지역역량강화	달성3색 문화창조 도시브랜드 구축	대구	달성군	34
지역역량강화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행복한 갑천 만들기	대전	서구	85
지역역량강화	미디어 이바구마을 만들기 사업	부산	동구	50
지역역량강화	구포2동 구남마을 주민대학운영	부산	북구	50
지역역량강화	Urban Health City Community	서울	중구	58
지역역량강화	을지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Renewal 을지로"	서울	중구	80
지역역량강화	금곡마을 '활력' 가득 사업	울산	울주군	66
지역역량강화	연양알프스시장문화장터 창조사업	울산	울주군	50
지역역량강화	전통 웅기마을 6차산업 프로젝트	울산	울주군	80
지역역량강화	울산동백이 피는 온새미로 마당	울산	중구	121
지역역량강화	생태창조체협의 메카, 유유낙락 향림골 만들기	전남	순천시	60
지역역량강화	100년 철도 역사를 활용한 우리동네 이야기	전북	익산시	50
지역역량강화	원도심 지역공동체 주민주도 활성화계획 수립	전북	전주시	36
지역역량강화	마을기자와 한지붕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전북	전주시	50
지역역량강화	도시활력 네트워크 300+(플러스)	전북	정읍시	50
지역역량강화	'보명, 알명' VR로 만나는 제주의 설화	제주	서귀포시	80
지역역량강화	주민참여도시재생, 온천천을 물들이다	충남	아산시	50
지역역량강화	300년 찬우물 소나무숲 자연치유 명소화 프로젝트	충북	제천시	80

제4절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1. 전국 간선도로망 및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로 구축

(1) 광역도로 건설

광역교통권역인 시·도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지역간 접근이 편리하도록 도로기능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시·도간 이권 및 예산부족으로 도로확장, 개설, 포장 등 개선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시·도간 접근성 편의를 제공하고 이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시·도간 연결도로의 확장 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1997년 4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단계별로 광역도로를 지정, 지자체간 의견을 조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총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국비를 지원하는 등 광역도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2-1-65 광역도로 현황 및 소요사업비(총 68개)

구분	사업 수	연장거리	사업비
수도권 1차(1999~2003년)	17	58.3km	18,020억원
수도권 2차(2004~2008년)	11	43.7km	13,696억원
지방권 1차(2002~2006년)	16	97.7km	15,097억원
대도시권광역교통 1차(2007~2011년)	12	59.8km	9,537억원
대도시권광역교통 2차(2012~2016년)	7	37.9km	5,390억원
대도시권광역교통 3차(2017~2020년)	5	25.7km	7,541억원

광역도로로 지정된 총 68개 사업(323.1km)중 42개 사업(177.2km)을 2017년 12월 현재 완료하였고, 15개 사업(79.7km)은 2022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연차별 설계 및 공사를 시행중에 있다. 현재 미착수중인 11개 사업(66.2km)은 국가재정 및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 지역의 여건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될 경

우 연차별로 착수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업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준공 예정사업과 추진이 원활한 사업에 예산을 적극 지원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광역교통권역인 시·도간 연결도로 중 교통정체 발생 등 서비스 수준이 저하된 도로에 대하여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광역도로를 지정하고,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서비스 수준 향상, 이동시간 단축,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실현되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표 2-1-66 광역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광역도로	2,472	1,492	1,483	1,322	779	826	663	769

(2)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국가지원 지방도는 지방도 중 주요 도시, 공항, 항만,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1996년 처음 도입되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노선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조사설계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건설재원의 경우 2015년 신규로 건설되는 사업부터 국가에서 공사비의 70%(2015년 이전 100%),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비의 30%와 보상비 및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도로법에 의거한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16~’20)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1996년 사업을 착수한 이후 2015년까지 총 190건, 1,345km를 완료하였고, 2016년도에는 61건, 516km에 4,95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며, 2017년도

에는 61건, 526km에 4,69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2-1-67 국가지원지방도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1996~ 2005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국지도	25,073	6,039	5,865	6,285	5,943	6,072	6,404	5,442	5,450	4,951	4,697	

(3) 제주구국도건설

제주지역 구국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2006년 7월)된 국도로서, ‘국도 대체우회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1997년 9월)’ 및 ‘제2차 국도건설 5개년(2006~2010년) 계획수립(2003년 12월)’에 의거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교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제주지역 시내권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제주 구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건설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0년까지 2,998억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신촌-함덕 등 3개 사업(21.7km)에 2,350억원을 투자하여 준공개통하였으며, 아라-회천 등 2개 사업(8.0km)에 1,14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2-1-68 제주도 구국도 건설 연차별 투자비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998	752	803	536	519	220	243	35
제주구국도건설	2,998	752	803	536	519	220	243	35

(4) 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고속도로는 국가 간선교통망의 중추로서, 전국 차원에서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충족

하고, 국민 이동성 보장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국가교통시설이다. 고속도로 건설은 1968년 경부선 건설 이래 국가 및 한국도로공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조사설계를 국가가 수행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건설재원은 국가에서 공사비의 40%, 보상비의 100%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공사비의 60%를 부담하고 있다.

광주순환 고속도로는 급증하는 대도시권 교통량의 효과적인 수용 및 혼잡비용 감소를 통한 광주의광역시역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7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된 본량-진원 구간(B/C=1.05), 총 16.15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한 국가도로종합계획(10년)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5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순환 고속도로는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6R(6개 대도시 순환망)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4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다.

표 2-1-69 광주순환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예 산	2,307 (4,625)	694 (957)	502 (685)	303 (440)	807 (2,543)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5)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대구순환 고속도로는 급증하는 대도시권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도시교통과 지역간 교통을 분리하여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B/C=1.14)한 후 지천-상매 구간 총 32.4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6R(6개 대도시 순환망)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3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다.

표 2-1-70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예 산	7,428 (13,201)	4,552 (7,442)	1,000 (1,376)	579 (579)	1,208 (3,870)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6) 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 구축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간 연계성과 보완성이 부족하여 연계·환승 거리가 길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며, 특히 주요 환승 발생 지점 중심의 연계·환승 교통체계 구축이 미흡하여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간 빠르고 편리한 환승이 이루어지도록 주요 환승 발생 지점에 교통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있다.

서울 도봉산역(2013년), 경기 산곡2교(2013년), 부산 덕천역(2013년), 경기 송내역(2015년), 경기 수원역(2017년), 경기 오산역(2017년) 환승센터를 완공하였으며, 부산 1개소를 구축 중에 있다. 이들 환승센터가 완공되면 통행자의 통행시간 및 환승시간 감소, 대중교통 이용객 흡수, 개인교통수단의 도심지 진입 억제 등으로 교통수요를 감소시켜 교통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7) 거제-마산 국도

2006년 7월 경상남도는 지역균형발전과 남해안 관광산업활성화 차원에서 국도 5호선 연장조정을 건의하였으며, 2008년 11월 국도 5호선에 거제시 연초면~마산 월영동 구간을 포함하여 541.6km 연장 계획하였다.

2008년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마산-창원-거제를 연결하는 Ring Road를 구축하여 지역 연계 개발을 강화하고 산업클러스터 형성 등의 목적으로 본 사업을 광역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하였다.

거제-마산 구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 6월에서 2012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표 2-1-71 거제-마산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장래
계	374,035	151,353	45,461	39,660	137,561
거제-마산2	183,894	82,355	21,775	19,850	59,914
거제-마산3	190,141	68,998	23,686	19,810	77,647

(8) 부산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대도시권의 광역화, 부산 신항 개발에 따른 교통량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진영-기장 구간 총 48.8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6R(6개 대도시 순환망)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0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 일부구간 개통(11.5km), 2018년 2월에 완전 개통하였다.

표 2-1-72 부산순환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예 산	12,623 (23,001)	8,721 (13,691)	2,212 (5,320)	1,478 (3,684)	-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9) 서남해안 연륙교(압해-암태, 화양-적금)

신안군 도서지역 연결을 위한 국도 미개통구간의 연도교 건설로 해상에서 육상으로의 교통수단 전환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운행거리 및 시간단축을 도모하고자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

압해-암태 구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 3월에서 2010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 사업 착공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다.

화양-적금 구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0년 12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표 2-1-73 압해-암태, 화양-적금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장래
합 계	938,622	478,425	135,833	159,248	165,116
압해-암태	563,869	313,900	72,029	98,834	79,106
· 1공구	261,275	165,618	29,411	36,855	29,391
· 2공구	302,594	148,282	42,618	61,979	49,715
화양-적금	374,753	164,525	63,804	60,414	86,010
· 1공구	73,591	30,774	11,731	9,670	21,416
· 2공구	102,581	40,255	16,162	17,976	28,188
· 3공구	143,321	67,654	26,136	19,677	29,854
· 4공구	55,260	25,842	9,775	13,091	6,552

(10) 월전-중군 국도

국도2호선 여수-순천간 국대도이며,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배후도로로서 목포-광양 고속도로, 여수-순천 도로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고자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

월전-중군은 월전-세풍, 세풍-중군 2개 구간으로 나눠 추진되었으며, 월전-세풍은 2001년 착공, 2011년 준공하여 현재 개통 중에 있다.

세풍-중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년 7월에서 2005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다.

표 2-1-74 월전-중군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장래
계	417,782	356,384	18,281	24,738	18,379
월전-세풍	122,938	122,938	-	-	-
세풍-중군	294,844	233,446	18,281	24,738	18,379

(11)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수도권 광역화에 따라 급증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 정체가 심해지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대체하는 순환축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김포-파주 구간 등 총 12개 구간 254.2km,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6R(순환2축)에 해당되는 노선이며, 구간별로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2-1-75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추진현황

(단위: 억원)

노 선 명	현 황	노 선 명	현 황
오산-봉담	공용 중(민자, '09개통)	파주-포천	착공 (재정, '17)
봉담-송산	공사 중(민자, '17)	포천-화도	협상 중 (민자)
송산-안산	공용 중(민자, '13준공)	화도-양평	공사 중(재정, '14착공)
안산-인천	계획 중	양평-양평	공용 중(재정, '12개통)
인천-김포	공용 중(민자, '17개통)	양평-이천	실시설계 중(재정)
김포-파주	설계 완료(재정, '17)	이천-오산	공사 중(민자, '17)

(12) 춘천-양양고속도로 건설사업

춘천-양양 고속도로는 강원권 관광사업 발달에 따른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간선도로망 구축이 더딘 강원 북부권을 연결하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3년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B/C=1.44)한 후 춘천-양양 구간 총 88.8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동서 8축(인천-양양)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04년 착공한 춘천-동홍천 구간은 2009년 개통하였고, 2008년 착공한 동홍천-양양 구간은 2017년에 개통, 운영중에 있다.

표 2-1-76 춘천(동홍천)-양양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예 산	11,586 (24,182)	9,225 (18,351)	1,649 (4,110)	650 (1,644)	-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13) 포항-영덕고속도로 건설사업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동해안 종축 노선 구축을 통해 동해안권 도로망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포항-영덕 구간 총 30.9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남북 7축(간성-부산)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5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하반기 착공하여 건설 중에 있다.

표 2-1-77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예 산	6,175 (11,872)	836 (1,507)	879 (879)	393 (538)	3,870 (8,751)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14)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사업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간선도로망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경남 북부 내륙과 동해권을 연결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남 북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함양-울산 구간 총 107.6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동서 2축(함양-울산)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밀양-울산 구간은 2014년 착공, 창녕-밀양 구간은 2016년 착공하였으며, 함양-창녕 구간은 2017년 착공하여 건설 중에 있다.

표 2-1-78 함양-울산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예 산	26,904 (60,503)	5,014 (7,882)	2,143 (3,138)	1,601 (3,256)	18,446 (46,526)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15) 화양-소라간 국지도확포장사업

화양-소라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국지도22호선으로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에서 소라면 덕양리를 연결하며 현재 공사 시행중인 국도77호선 화양-적금 국도 확포장공사와 연결되는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2009년 10월에 착공하였다.

화양-소라간 사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5년 12월에서 2008년 8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 전라남도에서 2개 구간(화양-나진 10.24km, 나진-소라 11.64km)으로 사업 발주하여 착공하였다.

2009년 사업 착공 이후 2016년까지 국비 157,174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27,000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2-1-79 화양-소라 국가지원지방도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총사업비 (국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장래
계	200,035	16,600	23,976	23,600	24,785	22,600	14,400	27,000	22,235	20,626
화양-나진	107,716	8,300	11,279	9,500	11,785	14,500	8,100	18,000	12,977	11,168
나진-소라	92,319	8,300	12,697	14,100	13,000	8,100	6,300	9,000	9,258	9,458

(16) 대도시권 혼잡도로 건설

고속도로, 국도 등 광역 교통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지역 간 교통난은 완화되고 있으나, 도시부 교통난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 교통혼잡 비용의 63.8%가 도시부에서 발생 중이며, 도시부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표 2-1-80 교통혼잡비용 추이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가율 (%)
전국 교통 혼잡비용 (십억원)	계(A)	23,540	24,621	26,172	26,903	27,706	28,509	29,097	30,315	31,420	32,385	33,350	3.54
	지역간	9,094	9,180	9,684	9,881	10,064	10,436	10,742	11,130	11,418	11,737	12,057	2.86
	도시	14,446	15,441	16,488	17,022	17,641	18,073	18,355	19,185	20,002	20,647	21,293	3.96
GDP(B, 조원)		919.8	966.1	1,043.3	1,104.5	1,151.7	1,265.3	1,332.7	1,377.5	1,428	1,483	1,542	5.30
GDP 대비 비중 (A/B, %)		2.56	2.55	2.51	2.44	2.41	2.25	2.18	2.20	2.20	2.18	2.16	-

자료 : 2015년 전국교통혼잡비용 산출과 추이분석(교통연, 2015년)

이에 따라 2004년 7월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도시권 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또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수립 연구용역(2004년 1차(2006~2010년), 2009년 2차(2011~2015년), 2016년 3차(2016~2020년), 교통연)을 시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및 예산당국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동 기본계획에 따라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을 위하여 자치단체에 국고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0년 1건(대구-포항고속도로 진입로), 2011년 1건(유등천좌안도로), 2013년 1건(상인-범물), 2014년 1건(신천좌안도로(상동교-가창)), 2015년 4건(울산국가산업단지 진입로, 울산대교, 일곡~용전, 제2창원터널), 2016년 1건(계백로우회도로), 2017년 2건(하남산단외곽도로, 옥동-농소2)을 준공, 2017년 실시설계 6건(문전교차로, 식만-사상, 삼화맨션-과정교차로, 상무-첨단, 용두-담양, 월전동-무진로), 예타 3건(상화로, 정림중~버드내교, 엄궁대교)을 추진 중에 있으며 15개 사업을 시행 중이다.

표 2-1-81 대도시권 혼잡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7년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	311	335	456	1,158	1,290	1,423	778	950	835

(17) 거점지역(구 특정지역) 개발사업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근거하여 최초의 특정지역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994년 1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광역권개발계획 및 개발촉진지구제도가 도입되고, 특정지역제도는 폐지되었다.

이후 지방자치제의 발전으로 지역 간 연계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문화·관광분야 등에서 지역개발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성장거점방식의 광역권 개발계획, 낙후지역 개발수단인 개발촉진지구만으로 지역개발수요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발생하였고, 이에 2002년 1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지역제도를 재도입하였다. 재도입 후 지역의 역사문화, 경관자원 활용과 특정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최초 10개의 특정지역을 지정하였으나, 지정 기간 만료 및 개발계획 미수립 등으로 인해 최종 8개의 특정지역이 지정되었다.

2015년 특정지역제도는 지역개발지원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거점형 지역개발계획으로 전환되었다. 거점형 지역개발계획은 각 도별로 수립하는 것으로, 산업·문화·관광 등 인근지역과의 관계에 중심이 되는 거점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종합적·체계적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제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법 개정 시 기존 특정지역개발계획 및 특정지역을 지역개발지원법 상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구역으로 의제하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더불어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신규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에 기존 특정지역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 말 기준 강원, 충남, 경남, 전북, 전남이 거점형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충북, 경북은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각 도는 수립된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향후 10년간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2-1-82 구 특정지역 지정현황

명 칭	지정지역	면적 (km ²)	지정일 (사업기간)	총사업비	주 요 사 업
계		6,819.34		- 7조 9,925.2억원 · 국비 3조 5,999.3 · 지방비 2조 5,152.9 · 민자 1조 8773	- 총 275개 사업 · 역사문화자원정비(120) · 관광레저개발(77) · 기반시설 확충(67) · 정신문화창달 등 기타(11)
강원도	충남 서산·보령·홍성·예산 ·당진·태안·서천·아 산	1,036.73	'04.12. 9 ('05 ~ '20)	- 6,404억원 · 국비 2,320 · 지방비 3,958 · 민자 125	- 총 63개 사업 · 정신문화창달(6) · 역사문화유적정비(41) · 관광휴양시설확충(6) · 기반시설확충(10) - 총 42개 사업
영산강 유역고 대 문화권	전남 나주·담양·화순·해남 ·영암·무안·함평·장 성	809.38	'05.12.30 ('06 ~ '15)	- 1조 1,301억원 · 국비 5,304 · 지방비 5,542 · 민자 455	· 문화재정비(9) · 문화유적 전승(10) · 관광휴양시설 확충(16) · 기반시설 설치(7)
해양농 경 역사 문화권	전북 김제·정읍·부안·고창	1,066.43	'09.12.21 ('09 ~ '19)	- 7,213억원 · 국비 2,874 · 지방비 2,203 · 민자 2,136	- 총 30개 사업 · 역사문화자원정비(11) · 관광레저개발(17) · 기반시설 확충(2)
중원 문화권	충북 충주·제천·단양	975.75	'09.12.23 ('09 ~ '19)	- 1조 7,404억원 · 국비 8,617 · 지방비 3,756 · 민자 5,031	- 총 29개 사업 ·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8) · 관광자원 정비·조성(8) · 정주환경개선(2) · 기반시설(11)
동남내 륙 문화권	울산 울주 경남 양산·밀양	693.70	'10.6.17 ('10 ~ '19)	- 1조 536억원 · 국비 3,566 · 지방비 3,389 · 민자 3,581	- 총 25개 사업 ·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10) · 관광자원 정비·조성(5) · 정주환경개선 및 자연보전(3) · 기반시설 설치(7)
가야 문화권	대구 달성 경북 고령·성주 경남 거창·합천·의령 ·창녕·함안	931.90	'10.12.24 ('10 ~ '19)	- 9,062억원 · 국비 6,541 · 지방비 2,330 · 민자 191	- 총 37개 사업 ·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16) · 관광자원 정비·조성(9) · 기반시설 설치(12)
설악단 오 문화권	강원 강릉·속초·고성·양양 ·인제	536.94	'11.7.27 ('11 ~ '20)	- 1조 2,120억원 · 국비 4,073 · 지방비 1,283 · 민자 6,764	- 총 18개 사업 · 역사문화자원복원·정비(3) · 관광자원 정비·조성(5) · 도로·교통기반시설 설치(10)
임진강 평화문 화권	경기 김포·파주·연천 ·포천·동두천	768.51	'14.10.13 ('14 ~ '23)	- 5,886.2억원 · 국비 2,704.3 · 지방비 2,691.9 · 민자 490.0	- 총 31개 사업 · 역사문화자원복원·정비(12) · 관광자원 정비·조성(11) · 도로·교통기반시설 설치(8)

(18)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의 기능을 보완하여 수도권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주요 신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효율적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8년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되었으며,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하여 타당성을 확보(B/C 1.19)하였다. 이후 2017년 착공하여 건설 중에 있다.

표 2-1-83 안성-구리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예 산	14,302 (55,983)	- (283)	1,000 (2,163)	2,430 (4,533)	10,246 (48,079)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19)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동서간 교통망을 구축하고 새만금 개발사업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연장 55.1km, 4차로 신설 사업이다. 2010년 새만금-대구 구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새만금-전주 구간만 타당성이 확보 (B/C 1.11, AHP 0.640)되어 2017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착공 예정에 있다.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중 동서 3축에 해당되는 노선이다.

표 2-1-84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예 산	8,868 (19,241)	443 (554)	50 (71)	837 (1,089)	7,528 (17,502)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2. 전국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망 구축

(1) 광역철도 건설

수도권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도시 생활권이 확대됨에 따라 교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장기 종합계획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07년 1월)을 통하여 5년 단위의 대도시 광역교통 시행계획수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계획과 지자체 계획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도로와 더불어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 틀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광역철도의 지원대상은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인천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의 주민이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지정하며 사업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국토교통부가 사업주체가 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분을 분담하는 구조인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간 사업비 분담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며, 광역화 추세에 미치지 못하는 표정속도와 획일적인 광역철도 연장 제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대적 여건에 맞게 광역철도 건설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년 12월 30일 개정, 2014년 3월 31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2014년 3월 28일 개정, 2014년 3월 31일 시행)을 개정하여 광역철도 사업비 분담비율을 개선하고, 광역철도 지정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표 2-1-85 광역철도 제도개선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사 업 비 분담비율 개 선	○ 국가시행 - 국비 75%, 지방비 25% ○ 지자체시행 - 국비 60%, 지방비 40% (서울은 국비 40%, 지방비 60%)	○ 국가시행 - 국비 70%, 지방비 30% ○ 지자체시행 - 국비 70%, 지방비 30% (서울은 국비 50%, 지방비 50%)
광역철도 속 도	○ 표정속도 - 40km/h 이상	○ 표정속도 - 50km/h 이상
광역철도 지정범위	○ 연장 - 전체 구간이 50km 이내	○ 범위 - 대도시권의 중심지*로부터 반경 40km이내일 것 * 수도권은 서울시청 또는 강남역, 부산·울산권, 대구권 등은 광역시청

앞으로도 광역철도는 단계별로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주변의 광역철도망을 구축하여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향상시킴으로써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심화된 교통체증을 해소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광역철도로 지정된 사업은 중앙선(청량리-덕소) 등 19개 사업이며, 2022년까지 국비 13조 1,884억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539.6km를 구축할 계획으로 2017년까지 7조 3,129억원을 집행하는 등 광역교통난이 심각한 수도권을 위주로 광역철도 교통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광역철도 사업은 1993년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005년 12월 개통한 중앙선(청량리~덕소, 18.0km)을 시작으로 2006년 12월 경원선(의정부~동안, 22.3km)을 개통하여 경기 동북부 지역인 동두천, 남양주, 양주시 권역을 전철 통근지역으로 넓혀 나갔다.

표 2-1-86 광역철도사업현황

(단위 : km, 억원)

사 업 명	연장(km)	사업기간	총 사업비	기투입	2017년 예산	2018년 이후
계	539.6		131,884	73,129	6,019	52,736
청량리~덕소 복선전철	18.0	1993-2010년	5,724	5,724	0	0
의정부~동안	22.3	1995-2007년	6,090	6,090	0	0

사 업 명	연장(km)	사업기간	총 사업비	기투입	2017년 예산	2018년 이후
복선전철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1.8	2000-2012년	5,192	5,192	0	0
망우~금곡 복선전철	17.9	1997-2013년	4,653	4,653	0	0
신분당선(강남~정 자)	20.8	2005-2011년	1,913	1,913	0	0
오리~수원 복선전철	24.5	2000-2014년	8,905	8,905	0	0
용산~문산 복선전철	48.6	1996-2016년	18,051	18,051	0	0
수원~인천 복선전철	52.9	1995-2019년	13,193	11,874	1,319	0
신분당선(정자~광 교)	12.8	2011-2016년	2,477	2,477	0	0
신안산선 복선전철	43.6	2006-2023년	12,408	324	350	11,734
별내선 복선전철	12.9	2007-2022년	7,286	1,408	705	5,173
신분당선(용산~강 남)	7.8	2008-2024년	4,730	53	95	4,582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43.6	2014-2023년	12,371	65	50	12,256
진접선 복선전철	14.8	2012-2020년	6,959	2,000	1,030	3,929
하남선 복선전철	7.7	2011-2020년	3,689	2,138	1,330	221
삼성~동탄 복선전철	9.8	2014-2022년	5,346	1,932	502	2,912
신분당선(광교~호 매실)	11.1	미정	4,632	4	0	4,628
도봉산~옥정	15.0	2014-2023년	4,488	0	70	4,418
논산~계룡	83.1	2016-2023년	1,307	40	100	1,167
안심~하양	8.7	2015-2021년	1,871	101	290	1,480
구미~경산	61.9	2016-2021년	599	185	178	236

주 : 사업비는 국비 기준임

2009년 7월에는 용산~문산 복선전철 DMC~문산 구간(40.6km)을 우선 개통하여 파주,

고양시의 광역교통 편의를 제공하였고, 2010년 10월에는 수도권 동부지역인 경춘선 망우~금곡(17.9km)구간을 개통하였다.

2011년 12월에는 오리~수원 복선전철 사업 죽전~기흥 구간(5.9km) 및 신분당선(강남~정자) 등을 개통하여 분당, 용인, 수원지역까지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였다.

2012년에는 수인선 복선전철 오이도~송도구간(13.1km) 및 왕십리~선릉 복선전철(6.8km), 오리~수원 복선전철 사업의 기흥~망포(7.4km), 용산~문산 복선전철의 DMC~공덕구간(6.1km)을 각각 개통하였다. 2013년 12월에는 오리~수원 복선전철의 망포~수원 구간(5.2km)을 개통하여 분당선 전 구간을 개통하였으며, 2014년 12월에는 용산~문산 복선전철의 용산~공덕구간(1.9km)을 개통하였고, 2016년 1월에는 신분당선(정자~광교) 복선전철 정자역~광교역(12.8km)을 2016년 2월에는 수원~인천 복선전철의 송도~인천 구간(7.3km)을 개통하였다.

(2) 대곡-소사-원시 간선철도

① 대곡-소사

대곡~소사 복선전철은 소사~원시구간과 연계 운행하는 노선으로 수도권 서북부지역(고양시, 서울시 강서구, 부천시)을 남북방향으로 연계하고, 장래 남북철도망 연결에 대한 간선철도 기능수행을 목적으로 추진 중으로, 사업구간은 고양 대곡~김포공항~부천 소사, 총 18.36km(고양시 6.00km, 서울시 5.97km, 부천시 6.39km)이며 총사업비 1조 634억원(2009년 6월 기준 불변가)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원래 일반철도로 계획되었고, 2005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후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시 예산이 광특회계로 편성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광역철도사업으로 고시되었다. 이후 2008년 BTL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해 같은 해 1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고시되었다. 그간 관련 지자체는 이 사업이 대곡~군산을 연결하는 일부구간이므로 일반철도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일반철도사업으로 고시되었고, 2014년까지 예산안 편성협의를 진행하여 2015년 12월 18일 실시협약

을 체결 후 2016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2017년 12월 기준으로 공정률은 8.6%에 이르고 있다.

② 소사-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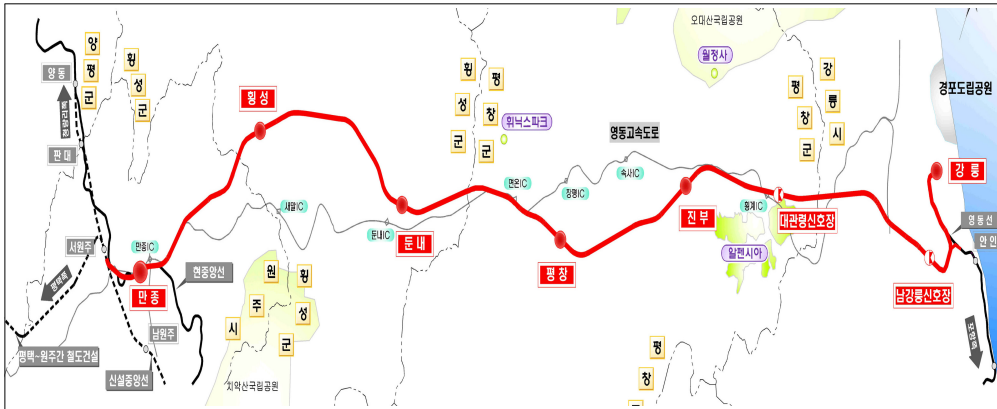
소사-원시 복선전철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남서부와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인선·안산선 환승 및 대곡~소사선·신안산선·서해선과 직결되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연장 23.3km, 1조 7,88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2002년 7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2011년 4월에 착공하였으며, 2017년 12월 기준으로 공정률은 95.9%에 이르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방식(BTL)으로 국고 2,387억원, 민간자본 1조 5,495억원이 투입되었다.

(3) 원주-강릉 철도건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중부~동부간을 횡축으로 하는 철도망 구축 및 강원도 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추진 중인 원주~강릉 복선철도(120.7km, 3조 7,669억원) 건설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2010년 8월~2012년 12월)하고, 2012년 6월 평창~강릉 구간을 우선 착공하여 총 14개 공구로 분할 발주 및 전 공구 노반 공사 정상 추진 후 궤도, 시스템, 건축 등 후속공정을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2017년 6월 완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안전 검증을 위한 종합시험운행(2017.7월~11월)을 진행한 후 2017년 12월 22일 최종 개통 완료하였다.

그림 2-1-8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선도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은 원주에서 강릉까지 총 120.7km 복선전철(전 구간 설계속도 250km/h)과 6개 역사(만중, 황성, 둔내, 평창, 진부, 강릉)를 건설한 사업으로 2012년 6월 착공한 이후 총사업비 3조 7,669억원을 투입하여 5년 6개월 만에 개통하게 된 것이다. 또한 원주~강릉 철도 개통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기간 수송수단 역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주말, 명절의 만성적인 강원권 도로정체 해소 및 수도권과 강원권을 고속으로 연결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완성하게 되었다.

표 2-1-87 원주-강릉 철도건설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예 산	37,669	25,058	8,807	3,040	764

(4) 도시철도

도시철도는 도시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운송수단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철도는 1974년 8월 15일 개통된 종로선(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구간이다. 이후 도시철도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1979년 4월 지하철건설촉진법이 제정되었으며, 지자체 중심의 도시철도 사업을 국가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하철

건설촉진법은 1990년 도시철도법으로 개정되었다.

이후 도시철도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반복하다가 2014년 1월 보다 체계적인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도시철도 내 각종 부대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철도시설의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전부 개정되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도시철도에는 43조 4,412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전국 총 24개 노선으로 총연장은 692.6km에 이른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총 331.6km로 총연장의 47.8%를 차지하며, 부산 115.2km, 대구 82.9km 등이 뒤를 잇는다.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차량은 5,799량(2017년 기준)으로 연간 36억명(수송인원, 2017년 기준)을 실어 나르고 있으며 2011년 30억명에서 지속적으로 수송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송분담률 또한 공로 88.5%(승용차 포함) 다음인 8.1% 수준(2015년 기준)으로 승용차 등 차량을 제외한 교통수단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수송하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 외 철도의 분담률인 3.2%의 2.5배에 이르고 있어 도심교통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총 11개 노선 총 177.6km(총사업비 11조 9,534억원)의 도시철도가 건설 또는 설계 중에 있으며,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종합운동장~보훈병원) 건설 사업은 2018년 10월에 개통할 계획이다.

표 2-1-88 도시철도 개통현황

구분	노 선	연 장 (km)	역수	구 간	사업비 (억원)	개통일 (최초)
합계	24개	692.6	674		434,412	
서울 (9)	소 계	331.6	307		172,797	
	1호선	7.8	10	서울역~청량리	984	'74.08.15
	2호선	60.2	50	성수~성수	11,171	'80.10.31
	3호선	38.2	34	지축~오금	13,798	'85.07.12
	4호선	31.7	26	당고개~남태령	8,315	'85.04.20
	5호선	52.3	51	방화~상일, 마천	30,215	'95.11.15
	6호선	35.1	38	응암~봉화산	25,496	'00.08.07
	7호선	57.1	51	장암~부평구청	39,676	'96.10.11
	8호선	17.7	17	암사~모란	8,502	'96.11.23
	9호선	31.5	30	개화~종합운동장	34,640	'09.07.24
부산 (4)	소 계	115.2	114		77,904	
	1호선	39.9	40	노포~다대포해수욕장	19,341	'85.07.19
	2호선	45.2	43	장산~양산	28,552	'99.06.30
	3호선	18.1	17	대저~수영	17,395	'05.11.28
	4호선	12.0	14	안평~미남	12,616	'11.03.30
대구	소 계	81.2	89		56,247	

(3)	1호선	28.4	32	설화명곡~안심	17,555	'97.11.26
	2호선	31.4	29	문양~영남대	26,147	'05.10.18
	3호선	23.9	30	동호~범물	14,913	'15.04.23
인천	소 계	58.9	56		48,910	
(2)	1호선	29.4	29	계양~국제업무지구	24,320	'99.10.06
	2호선	29.1	27	검단오류~운연	24,590	'16.07.30
광주	1호선	20.5	20	녹동~평동	16,658	'04.04.28
대전	1호선	20.5	22	관암~반석	18,931	'06.03.16
부산-김해	부산-김해	23.2	21	사상~가야대	13,241	'11.09.17
의정부	의정부	11.1	15	발곡~탑석	6,767	'12.07.01
용인	용인	18.1	15	기흥~전대	7,278	'13.04.26

3. 항만 인프라 개선

(1)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

서귀포항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입항하는 크루즈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친수문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군기지 기능과 국제관광을 연계한 크루즈항 기능이 조화롭게 개발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는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에는 총사업비 601억원이 투입될 계획에 있으며, 2011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3년 4월 실시계획을 공고, 2014년 6월에는 공사에 착수하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 진입도로 개설 등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였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정추진이 부진하였으나, 다각적인 노력과 주민설득 끝에 2016년 3월 공사가 재개되어 현재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크루즈터미널 조성 사업은 2018년 5월에 완공되어 운영될 계획이다. 서귀포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되면 제주 남부지역의 크루즈관광 거점지역으로 발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제주항 건설

제주항은 제주지역의 연안화물 및 국내외 해상여객 운송을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

이자, 관광 및 수산물 유통 등이 이루어지는 지역 경제의 거점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으로 제주도내 항만물동량의 7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제주항은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 착수한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를 2015년 7월 준공·개장하였고, 외항 지역에는 연안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2011년 12월부터 시행한 '철재부두 축조공사' (2만톤급/1선석)가 2015년 3월에 준공되었으며, 화물부두 2선석(2만톤) 및 해경전용 부두를 확충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부터 타당성재조사(KDI)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또한, 탐동지역의 월파피해 방지를 위한 방파제건설(L=1,100m)을 위해 2014~2015년에 기본설계를,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향후 제주항 건설이 마무리되면 제주경제 발전의 전략거점 및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권역의 관광 거점항만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항만 재해예방사업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이상 파랑의 발생으로 우리나라의 항만 및 배후지역의 침수 피해가 우려되며, 설계파고 증가로 인하여 외곽시설(방파제 등)의 취약성이 대두됨에 따라 항만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해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해취약시설(침수피해방지시설, 방파제 보강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2011년)하고, 단계별 보강 계획에 따라 2030년 완료 목표로 2012년부터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침수피해방지사업은 2030년까지 22개 항만의 25개소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침수방지시설 중 1개소 준공(마산항 구항 방재언덕 사업), 군산항 침수방지시설 등 5개소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1단계로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10개 항만에 대하여 2020년까지 우선 정비하고 2030년까지 잔여 항만 12개를 완료할 예정이다.

방파제 보강사업은 32개 항만의 71개소 방파제에 대하여 보강계획을 추진 중이며, 보강사업 중 완도항 남방파제 등 41개소 준공, 부산항 조도방파제 등 12개소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항만구역 내 재해발생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뿐 아니라,

산업시설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 방지 등 재해에 안전한 항만을 구축할 계획이다.

(4) 항만 친수시설 조성사업

“항만친수공간”이란 항만구역 내에 존재하는 개방적인 수변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상시 접근이 가능한 여가공간으로 해상구역과 육상구역을 포함하는 공간을 말한다. 마산, 목포, 제주, 광양 등의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국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동시에 해양관광지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산항 가포B지구 친수문화공간 조성사업’은 2011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2년 10월 공사 착공, 2014년 6월에 공사 준공하였고, ‘목포북항 친수문화공간 조성사업’은 2011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 2012년 4월 공사 착공, 2014년 8월 공사 준공하였다. 제주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8년 5월 공사 준공하여 운영 중이며, ‘광양항 친수시설 부지조성사업’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고, 2015년 1월 공사 착공, 2019년 1월 공사 준공할 예정이다. 또한,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사 조성사업’은 2011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 9월에 완료하였으며 2017년 6월 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 5월 준공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양문화·관광·친수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5) 부산항 특화 개발

부산항 신항은 국제 경쟁력 차원의 국가중심 항만으로서의 부산항 역할 제고, 기존 항만의 확장만으로는 급증하는 물동량 처리에 한계가 있어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1995~2030년까지 19조 3,015억원(정부 8조 4,972억원, 민자 10조 8,043억원) 투자 계획으로, 2018년 5월 현재 ‘컨’ 부두 22선석(1,403만TEU), 일반부두 1선석을 운영 중에 있다.

부산항 신항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서 “컨” 부두(2-5단계) 5선석을 201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9,092억원(BPA), 남 “컨” 부두(2-4단계) 3선석을 2015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4,409억원(민자) 투자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부산항 신항 발생 준설토 적기처리를 위하여 2014년 12월부터 송도 준설토 투기장 조성(호안 2.65km)에 1,231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 4월 완료하였다.

선박대형화에 대비하여 18천TEU급 이상 선박의 상시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신항 전수역 중심(2단계) 준설(15→17m)을 2014년 12월부터 566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10월, 항로확장 준설을 2015년 4월부터 213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12월 완료하였으며, 토도 제거 사업은 3,031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9월 착공하여 2020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2014년까지 1,472억원을 투입하여 주간선도로(안골대교) 및 2017년 1월에는 3,499억원이 투입된 제2배후도로를 완료하였다.

장래에는 “부산항 신항 3단계 개발 사업”을 통한 세계 2대 환적 거점항 도약을 위해 2030년까지 부산항 신항에 전용터미널을 단계적으로 37선석까지 확충하고 잡화 등 일반부두 등(6선석)도 수요에 맞춰 개발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생산 유발 7조 5,870억원, 부가가치 유발 2조 5,500억원, 고용창출 효과 4만 4,000명이 발생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산북항 재래부두를 국제적 해양관광, 비즈니스·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개발을 2008년 12월 착공하여 국제여객부두(크루즈부두 포함) 및 국제여객터미널 개장(‘15.1) 등을 통해 국제관광 거점항만 조성기반을 마련하였고, 향후 2019년 12월까지 부산북항 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북항 내 항만시설 보호와 항만기능 제고를 위해 노후된 조도 및 오류도 방파제 보강을 2013년 3월부터 1,825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에 완료할 계획이며, 크루즈 선박 대형화 추세에 대비하고 글로벌 크루즈 시장에서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삼 크루즈부두 확충을 2015년 4월부터 322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감천항의 경우에도 입·출항 선박 대형화 및 이용선박 증가에 따라 이용도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감천항 정온도 향상 외곽시설 설치공사를 2013년 12월까지 1,188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외해에 노출되어 있는 다대포항의 정온도 확보를 위한 다대포항 외곽방파제 축조공사는 2015년 11월까지 1,064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다.

(6) 광양항 특화 개발

광양항은 수심 20m의 천연수로와 산과 섬으로 구성된 자연 방파제에 둘러싸여 있어 정온수역을 유지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항만이나, 배후산업기반과 항만 연관

산업 취약, 정기항로 부족 및 한진해운 법정관리(‘16. 9. 1 → ’17.2.17 파산 선고) 등의 영향으로 항만시설 능력 대비 물동량 처리실적이 미흡(2017년 223만 TEU 처리)하였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광양항 특화 발전전략을 수립(‘15.10)하여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광양항을 산업 클러스터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춘지구 항만매립지를 조기 개발하고 묘도 준설토 매립지를 미래 신소재 산업, 복합에너지 물류 및 발전시설 등이 집적되는 신성장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있으며, 광양항을 국제 자동차 환적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컨테이너 부두를 자동차 부두로 전환하는 등 광양항만의 특화된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컨테이너부두 등 29선석과 항만배후단지 527만㎡를 구축하여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물동량 창출기반이 강화되도록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추진 성과로는 광양항 친수시설 부지 조성공사(‘15.1~‘17.12), 울춘2산단 전면항로 준설토공사(‘13.3~‘15.10) 및 묘도 준설토 매립지를 신소재 산업으로 개발하기 위한 묘도 재개발 진입도로 건설공사(‘14.4~‘17.6)를 완료하고, 광양항 특정해역 준설토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16.4) 받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17.5)하였으며, 광양항 선박에 대한 역무서비스 강화를 위한 여수신북항 외곽시설(‘15.5~‘19.5) 및 계류시설(‘16.3~‘21.3) 축조공사, 울춘1산단 지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항행안전 및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광양항 울춘1산단 진입항로 준설토공사(‘16.9~‘18.12), 광양항 항만배후 지역의 원활한 배수 및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광양항 동서측배수로 정비사업(‘17.3~‘21.7) 및 광양항 동측배후단지에서 광양시 성황도이지를 연결하는 성황고가교 건설공사(‘17~‘22)를 추진하고 있다.

(7) 울산항 특화 개발

울산항을 동북아 오일허브 거점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항 북방파제를 2014년 8월에 완공하였고, 남항 2단계 외곽시설을 2013년 12월부터 지속 추진 중이며, 신항 남항지구(1단계)에 유류부두 등 9선석을 구축하였으며 신항 북항지구 및 남항지구(2단계)에 2,413만 배럴 규모의 저장시설 등 오일허브 구축사업계획을 2013년부터 수립하여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오일허브 1단계 북항지구 항내 정온수역 확보를 위한 북방파제(2.2km, 3,789억원)는

2008년 12월에 착공하여 2014년 8월에 완공하였고, 북항 방파호안(0.6km, 965억원)은 2016년 4월에 착공하여 2019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신항 남항지구의 오일허브 2단계와 민자부두(5선석)사업의 원활한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남항 2단계 외곽시설을 총 사업비 1조 401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남방파제 2단계(3.1km) 1공구(0.9km)는 2013년 12월 착공하여 2017년 9월 완공하였고 2공구(1.3km)는 2017년 7월 착공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3공구(0.9km)는 2018년 3월 기초조사용역을 착수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공사 발주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신항 남측에서 내습하는 파랑을 차단하기 위한 남항 방파호안(1.4km)도 2016년 11월 착공하여 2021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동북아 오일허브 거점항 육성을 위한 오일허브 1단계(하부시설) 사업은 1,064억원을 투자하여 접안시설 6선석 개발을 2013년 11월 착수하였고 항만배후단지를 2020년 5월까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장래 오일허브 2단계 사업도 2017년 3월말 석대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통과되고 2017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2020년까지 완료하여 하부시설(부두 및 부지조성)을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8) 인천항 특화 개발

인천항은 수도권 산업단지 수출입 지원 및 유통기지 역할과 현재의 對 중국교역 거점항만, 향후의 남·북 경협활동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신항 「컨」 부두를 6선석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전체 12선석(최대 4천TEU급) 건설을 추진하고, 「컨」 부두 개장에 따른 부족한 복합물류단지 조성 및 국내·외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항만 물동량 창출을 위한 항만배후단지(1단계) 조성사업을 2017년 공사에 착수,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내항 및 남항지역 항만기능 재정립을 통한 시민 친수공간(내항 1·8부두) 및 크루즈·국제전용부두 확보(남항) 사업을 2012년 착수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추진 성과로는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 준공('17.3), 남항 항만배후단지(아암물류 2단지) 배후교통망(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 건설공사 준공('17.12), 신항「컨」대형선박(8천TEU급) 유치를 위한 항로중심(14→16m) 준설 완료('17.5) 하였으며, 남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16.12~'19.5), 북항 배후단지('18.7~'19.12) 및 청라투기장 배후교통망 확보를 위한 남청라 연결도로('15.10~'18.11)를 추진하고 있다.

(9) 연안항 인프라 개선

전국 연안항에 종합적인 중장기 항만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경제성장에 따른 전국 각 권역별 연안물동량의 증가추세에 대비한 물류유통기지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연안여객 수요변화에 따른 해상교통 중심기지 및 어업근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도서민 정주기반구축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중국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해양영토 수호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13.12)을 통해 전국 11개 국가관리연안항을 조기에 구축하고, 5천톤급 대형 해양경비선 등 해경 전용부두 및 국가어업지도선 부두 조성을 통해 해양주권의 거점기지화 하고 지속적인 안보위협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보안부두를 확충하고 있다.

4. 교통·물류 원활화 지원

(1) 교통물류 원활화(BRT 구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는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버스체계에 철도시스템의 운영 도입으로 통행속도, 정시성 등의 서비스를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시킨 저비용·고효율의 새로운 대중교통시스템이다. BRT가 도입될 지역의 범위에 따라 2개 사도 이상을 연결하는 광역BRT와 단일 도시 내에 구축되는 도시BRT로 구분하고 있다.

2005년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특히 2011년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광역BRT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2014년도에는 효율적인 BRT 구축을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광역BRT는 2013년 7월 인천 청라~서울 강서(L=19.8km) 구간을 개통하였으며, 2016년 7월 세종시와 연결되는 대전 대전역~와동IC(L=11.51km) 구간도 개통하였다. 도시BRT는 서울경기 지역에 30.5km를 개통하였으며, 2017년 12월 부산 내성~송정 1단계 구간(L=7.4km)을 개통하였고 2단계 구간은 공사 중에 있으며, 부산 내성~서면 구간(L=6km)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BRT 개통 결과, 버스통행속도 증가 및 정시성 확보 등 버스서비스의 고급화로 버스이용객이 증가하였으며, 버스이용객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화물차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도로변, 주택가에 불법 주차차 문제가 심각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와 교통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영세한 화물운송업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4년에 ‘화물차 공영·공동차고지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2014년에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보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다.

2005년 2개 지역(대구, 제주)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12개 시도 26개 지역(부산 노포·회동, 대구 금호·신서, 인천, 대전, 광주 진곡·북구, 강원 춘천, 전북 고창·정읍·남원·전주, 전남 광양·순천·목포(용해, 대양산단)·강진·나주·구례, 경남 진해·거창·진주, 제주, 충남 서천, 경북 경주)에 1,611억원을 지원하였다. 2009년 3월 제주에 공영차고지가 준공된 이후 2016년에는 전남 광양 등 15개소를 준공·운영 중에 있다. 2017년에는 인천 계양IC, 대구 달성, 경기 수원, 충남 아산, 전남 장성 등 신규사업(5개소)을 포함하여 총 10개소에 155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4~2017년 동안 총 20개소에 국비 1,321억원을 지원(9개소 준공) 하였다.

표 2-1-89 추진성과 성과

(단위: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국비지원 비 (지원개소) * 준공개소	550 (부산 노포·회동, 광주, 서천, 고창, 정읍, 남원, 광양, 나주, 진주, 거창) * 광주 진곡	290 (광주, 서천, 고창, 정읍, 남원, 광양, 나주, 진주, 거창, 전주, 대구) * 부산 회동	326 (부산, 대구, 광주, 서천, 정읍, 남원, 전주, 나주, 목포, 구례, 경주, 진주) * 부산 노포, 대구 신서, 전북 정읍·고창	155 (인천, 대구, 수원, 아산, 전주, 나주, 목포, 구례, 장성, 경주) * 충남 서천, 전북 고창·남원	1,321

(3)대중교통지원(군산 물류단지 진입도로)

군산 물류단지는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서 군산권은 광양권과 함께 호남권에서 물류단지 공급이 최우선적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권역으로 선정되었고, 2014년 2월 확정 발표된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 상 전북 중추도시권으로서 새만금 국가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지역교통 물류망개선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2014년 4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위원회를 통과한 물류단지 규모는 전북 군산시 개사동 일원 392,452㎡이며, 단지조성 사업비는 약 838억원, 그 중 물류단지 진입도로의 사업비가 48억원이며, 연장 0.767km, 폭원 8~24m로 진입도로가 조성된다. 2016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말 현재 3.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20년 12월까지 물류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표 2-1-90 추진성과 성과

(단위: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군산 물류단지 진입도로 조성	-	-	3	9	12

제2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제1절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1.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1)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부문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산업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1999년부터 수립된 지역전략산업진흥계획(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시·도, 시·군·구에 특화된 산업분야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신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업이다.

1995년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하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이 종료(1999~2012년)됨에 따라 이를 계승한 新특화산업육성사업(2013~2014년), 주력산업육성사업(2015년~)으로 지속 개편하여 추진하고 있다. 개편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기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원된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은 유지하되, 광역 시·도 단위의 수요와 집적도, 특화도 및 육성의지를 반영하여 선정된 지역주력산업 지원 비중을 점차 확대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7년 7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과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중소기업 육성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게 되었으며, 최근 4차 산업혁명, 개방형 혁신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10월 지역경제위원회를 통해 기존 제조업 중심의 63개 주력산업을 융복합 중심의 48개 주력산업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그림 2-2-1 지역산업육성정책 추이

구 분	1999~2002년 (국민의 정부)	2003~2007년 (참여정부)	2008~2012년 (이명박정부)	2013~2016 년 (박근혜 정 부)	2017~ (문재인 정부)
시 · 도	4개 지역 1단계 (1999~2003년)	4개 지역 2단계 (2004~2008년)	Post 4+9 지역 전략산업	新특화	특화 (주력산업)
		9개 지역 1단계 (2002~2007년)			
시 · 군 · 구			지역 특화산업(2004년 ~)		특화 (지역연고산업)

표 2-2-1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대전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대구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충남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경북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부산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경남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 부품, 에너지신산업, 정색청정환경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전북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제주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또한 2015년부터 지역별 주력산업분야에 창의성을 접목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창의융합R&D’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중소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제품화까지 지원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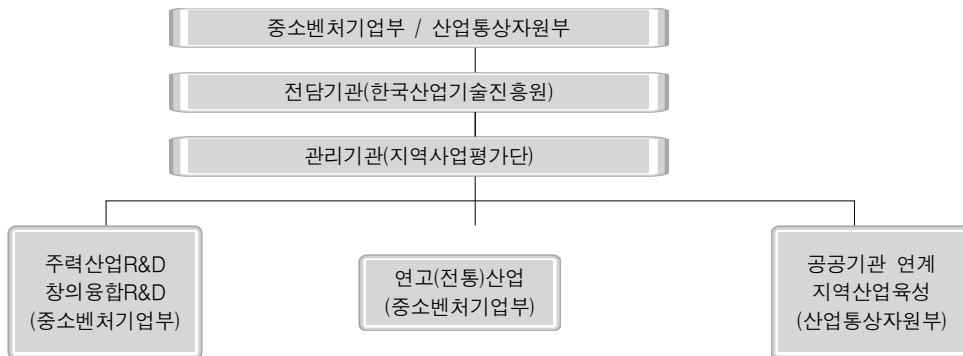
한편 정부는 2014년부터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등 지역혁신주체를 연계한 지역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일부로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과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으나,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어 산업부에서 사업을 계속 운영 중에 있다. 지방이전 지역산업육성사업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최초의 R&D사업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과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전제로 기술개발·기업지원·인력양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기술개발은 구매조건부R&D, 공공기관-기업간 공동R&D, 기술이전형R&D등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간의 협력촉진과 지역협력과제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충남 등 12개 사·도의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조선업종 침체에 따라 2017년부터는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지역 중소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를 지원하는 ‘위기업종 지원사업’도 신규 편성하여, 위기업종의 신속한 구조조정도 지원 중에 있다.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중앙-지역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지역 성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처-전담기관-관리기관-수행기관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6년 12월, 연간 지역산업육성사업 시행계획인 ‘2017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정부는 주력산업 기술개발 413개 과제(883억원), 창의융합R&D 161개 과제(252억원), 풀뿌리기업육성 64개 과제(277억원), 지역연고산업육성 12개 과제(63억원), 지역혁신센터조성 10개 과제(45억원), 공공기관 연계육성 28개(74억원), 위기업종지원 23개 과제(50억원) 등 총 711개(1,726억원)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였다.

그림 2-2-2 지역특화산업육성(기술개발) 추진체계



한편, 2017년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으로 신규고용 3,315명(사업기여율을 반영한 신규고용은 1,551명)을 창출하였으며, 당해 사업화매출액은 3,277억원으로 정부 지원금 10억원당 18.9억원의 사업화 매출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표 2-2-2 추진성과

(단위: 명, 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총계
순 신규고용(명)	1,464	1,542	1,551	4,557
사업화매출액(억원)	2,156	2,507	3,277	7,940

(2)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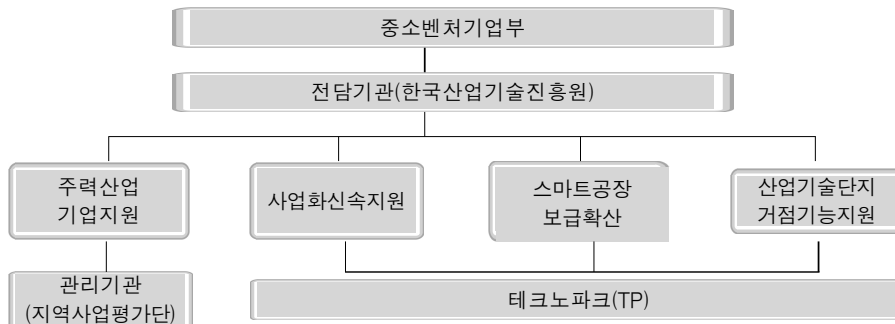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은 지역에 구축된 인프라 및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특화산업분야 지역기업에 기술지원·지도, 사업화지원(디자인, 마케팅 등), 인력양성(전문가 교육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의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04년 대구, 부산, 광주, 경남 등 4개 지역에 실시된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부터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광역 시도 차원에서 추진되던 지역전략산업이 2012년에 종료됨에 따라 지역 내 기업 지원에 대한 높은 수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는 新특화산업육성사업, 2015년부터는 주력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해왔으며, 2017

년 이후부터는 지역성장속도와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산업 개편을 추진하여 본격 적용하였다.

또한 미래성장동력 배양을 위해 시·도별 발전비전과 전략에 부합하는 ‘특화발전프로젝트’를 시·도별로 1개씩 선정하여 2015년부터 연관 산업분야 기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중점 지원 중에 있다. 2015년부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이 신속히 사업화될 수 있도록 기업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화 신속지원사업’이 추가되어 지원 중에 있다. 2017년은 지역기업의 수출유망제품 지원을 위해 수출전문가 컨설팅, 전문무역상사 활용 해외바이어 연계 등 사업화신속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지원서비스 내에 수출친구맺기, 수출새싹기업육성 등을 도입하여 지역기업의 수출다변화 및 해외판로개척 등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지역기업이 당면한 위기극복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2016년부터 발생한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조선산업 사업다각화를 사업화신속지원에서 함께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조선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운영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도 지역별 주력산업 전·후방 연관기업을 대상으로 ICT기술을 접목한 공정혁신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산업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의 정책기획 기능과 지역산업지원사업을 총괄 연계·중개하기 위한 기업지원 플랫폼 기능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정책기획 및 기업지원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18개 테크노파크를 거점으로 지역산업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통계자료로 지역기업 채용 및 구직정보, 지역인력양성정보 등의 지역혁신자료를 조사·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 활동 전주기를 지원하는 등 지역별 전략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R&D 지원사업 연계 및 신규사업기획 등 지역강소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2-2-3 지역특화산업육성(BIR&D) 추진체계



2016년 12월, 연간 지역산업육성사업 시행계획인 2017년 지역산업진흥계획¹³⁾을 수립하였다. 이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정부는 주력산업 기업지원 271개(584억원), 사업화신속지원 17개(102억원), 스마트공장보급확산 5개(22억원),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 35개(127억원) 등 총 328개(835억원) 기업지원 과제를 지원하였다.

주된 성과로, 2017년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신규고용 3,744명(사업기여율을 반영한 신규고용은 1,264명)이 창출되었으며, 사업기여율을 반영한 신규고용인력 1,264명 중 정규직 96.0%(1,213명), 청년 41.8%(528명), 여성 32.4%(410명)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802억원의 사업화매출액과 사업화성공률 50.8%¹³⁾, 특허출원 330건, 등록 48건, 기타 산업재산권 272건, 기술인증 248건 등의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에 정부 지원 전·후 기업성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지역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을 구축하였고, 2017년부터 RIPS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업지원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업지원서비스 통합공고’를 시행하여 기업 친화적인 원스톱 온라인 신청·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 연간 성과분석 시 효율적인 자료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3) 연도별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사업화성공률(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 중기부) 31.3%

표 2-2-3 수혜기업 지원현황

(단위: 명, 억원)

연도	구분	전체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역량강화	패키지
'15	전체(개)	4,101	685	1,044	-	2,372
	지원금액(억)	431.1	95.4	91.2	-	244.5
	지원건수(건)	12,011	2,812	2,489	-	6,710
'16	전체	5,515	1,989	1,522	856	1,148
	지원금액	332.3	174.9	85.9	8.8	62.7
	지원건수	7,360	2,677	1,938	1,472	1,273
'17	전체	4,620	2,071	1,401	60	1,088
	지원금액	395.9	229.1	99.1	3.3	64.4
	지원건수	7,928	3,541	2,280	70	2,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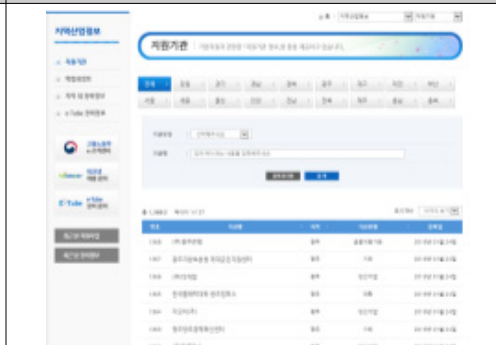
RIPS 공고현황 및 박람회 정보	지역별 지원기관 및 역할정보
	

표 2-2-4 추진성과

(단위: 명,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순 신규고용(명)	1,203	1,340	1,465	1,264	5,272
사업화매출액(억 원)	-	564	665	802	2,031

(3) 지역특성화산업육성(포괄보조금사업)

지역특성화 자원을 활용한 산업구조 고도화, 유망기업 투자유치, 지역 제조업 및 융·복합 산업 기반 육성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속적인 특성화 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도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예산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크게 경상적 지원인 경상보조사업과 자치단체에 자본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자본보조사업(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하면 지역 특성화 자원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 마케팅지원 사업, 지역 내 특성화 자원을 활용한 전시회 개최 등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개최 행사 지원 사업, 지역 특성화산업 생산 단계에서 제품의 부가가치 창출 및 신기술의 제품화 제고 등 사업화 지원 사업,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구축으로 연구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있다.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하여 전 부처 회계 내에 200여개의 개별 시도 포괄보조사업을 운영하였고, 201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200여개 개별 사업을 22개 사업으로 통폐합 추진하였다. 산업부는 지역산업마케팅지원 등 개별사업을 지역특성화산업육성사업으로 통합하였고, 2015년에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로 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신설하여 세종시 사업을 분리하는 등 사업 개편을 추진하였다. 2017년 지역특성화산업육성 사업은 16개 지자체에서 140여개의 경상·자본보조 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의 특성화 역량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표 2-1-5 추진성과 성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지역특성화산업육성 -경상보조-	41,626	65,101	63,845	75,380	245,952
지역특성화산업육성 -자본보조-	11,860	21,990	23,450	6,450	63,750
소계	53,486	87,091	87,295	81,830	309,702
지역특성화산업육성(제주)	379	340	355	637	1,711
지역특성화산업육성(세종)	-	200	150	200	550
합계	53,865	87,631	87,880	82,667	311,963

(4)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R&D)

정부는 시도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구성된 경제협력권 내 핵심 대표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부터 경제협

력권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2013년 7월 ‘HOPE 프로젝트’에서 인위적 광역경제권을 탈피하여 자율·협력·융합에 기초해 지역산업을 육성기로 결정한 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4년 1월)으로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경제혁신3개년계획(2014년 2월)을 통해 시·도 간 협력사업을 선정·지원기로 결정하였다.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2014년 3월)의 의결을 거쳐 14개 시·도간 자율협의를 통해 산업생태계를 반영한 총 17개 경제협력권(시·도별 3개 이내)이 선정되었다.

표 2-2-6 시·도 경제협력권산업 선정결과(1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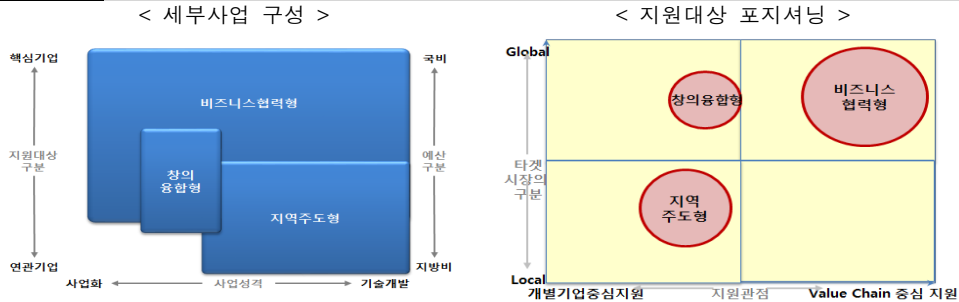
경제협력권산업	협력시도		경제협력권산업	협력시도	
	주관	참여		주관	참여
① 조선해양플랜트 I	경남	전남	⑩ 이차전지	충남	충북
② 조선해양플랜트 II	부산	울산	⑪ 기능성화학소재	대전	충남
③ 화장품뷰티	충북	제주	⑫ 지능형기계	경북	대구, 대전
④ 의료기기	강원	충북	⑬ 에너지부품	광주	전북
⑤ 기계부품	충남	세종	⑭ 바이오활성소재	전남	전북, 강원
⑥ 광·전자융합	광주	대전	⑮ 자동차융합부품	경북	대구, 울산
⑦ 기능성하이테크섬유	대구	경북, 부산	⑯ 차량부품	부산	경남
⑧ 친환경자동차	전북	광주	⑰ 나노융합소재	울산	경남, 전남
⑨ 휴양형 MICARE	제주	강원			

동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2~3개의 시·도가 1개의 협력산업을 선정하여 공동 육성하는 17개 경제협력권으로 구성된다. 협력권 내 산업생태계 육성 및 지역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 기업에게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서비스(시제품제작·디자인·마케팅 등)를 병행 지원하고 있다.

협력시도는 각 시도별 산업생태계조사와 혁신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력산업 내 중점 지원대상인 유망품목을 선정하다. 유망품목에 속하는 제품개발을 위해 5개 내외의 연관 기업이 참여하는 비즈니스협력형 과제,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창의융합형 과제,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주도형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비즈니스협력형 과제는 개발제품의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기업 및 사업화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비즈니스협력컨소시엄(Supply-Chain)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창의융합형 과제는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협력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지방비로 지원되는 지역주도형 과제는 기업 밀착형 지원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

한 지역주도형 과제를 지원한다.

그림 2-2-4 세부사업 구성 및 지원대상(비즈니스협력형)



2015년은 1,642억원(국비 1,234억원, 지방비 408억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282억원이 증가된 1,924억원(국비 1,434억원, 지방비 490억원), 2017년에는 25억원이 증가된 1,949억원(국비 1,456억원, 지방비 493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2017년에는 629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194개의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비즈니스협력형 과제를 지원하였다. 145개의 지역기업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54개의 창의융합형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지역 내 433개 중소·벤처기업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175개의 지역주도형 과제를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2017년에는 1,151명의 신규고용 성과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단계 사업 개편을 통하여 2018년부터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수 있는 6개 신산업, 14개 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시도 매칭을 통해 협력 효과를 제고하고, 지역 내 고용 및 매출 등 성과 창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표 2-2-7 세부사업 유형별 추진내용

유형	사업목적	지원사항	출연금
기술개발	비즈니스 협력형 (지정공모)	비즈니스 협력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유망품목의 개발·사업화 ▶ 과제당 연차별 10억원내외 ▶ 3년 이내 지원 ▶ 중소·중견기업 컨소시엄	국비 100%
	창의 융합형 (자유공모)	시도간 협력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여 제품화 및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 개발 ▶ 과제당 연차별 3억원내외 ▶ 3년 이내 지원 ▶ 중소·중견기업 컨소시엄	
	지역 주도형 (자유공모)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지원을 통한 지역강소기업 육성 ▶ 과제당 연차별 4억원내외 ▶ 3년 이내 지원 ▶ 중소·벤처기업 컨소시엄	지방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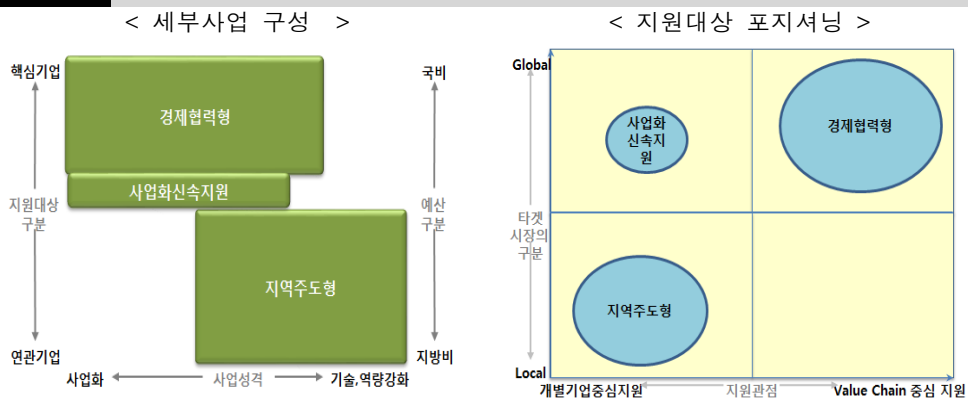
(5)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비R&D)

동 사업은 17개 경제협력권 내 산업생태계 육성 및 지역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 기업에게 기업지원서비스(시제품제작·디자인·마케팅 등)를 지원한다.

협력시도는 각 시도별 산업생태계조사와 혁신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력산업 및 협력산업 내 중점 지원대상인 유망품목을 선정하였다. 협력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 기업의 사업화·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내 혁신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경제협력형 과제,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신속지원 과제, 기술 및 재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주도형 과제를 지원한다.

경제협력형 과제는 협력산업 전·후방 연관기업의 제품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화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화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사업화신속지원 과제는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속히 사업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비로 지원되는 지역주도형 과제는 지역 기업의 기술 및 인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그림 2-2-5 세부사업 구성 및 지원대상(경제협력형)



2015년은 741억원(국비 457억원, 지방비 284억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추경 20억원이 증가된 761억원(국비 477억원, 지방비 284억원), 2017년에는 58억이 감소된 703억원(국비 419억원, 지방비 284억원)을 지원하여 협력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 56개의 기업지원 과제를 통하여 896개의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1,378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1,538개의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2,492건의 기술 및 사업화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1,788개의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2,712건의 기술 및 사업화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580억원의 사업화매출과 135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단계 사업 개편을 통하여 2018년부터는 지역기업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성과관리 전담과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성고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표 2-2-8 내역사업 유형별 추진방안

유형		사업목적	지원내용	출연금
기업지원	경제협력형 (지정공모)	협력산업 관련 타겟 기업군 중심으로 지원하고, 전후방 연관기업에 대한 포괄지원	▶ 과제당 연차별 8억원내외 ▶ 3년 이내 지원 ▶ 2개 내외 컨소시엄	국비 100%
	사업화 신속지원 (정책지정)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속히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별기업 맞춤형 지원	▶ 과제당 연차별 6억원내외 ▶ 1년 이내 지원	
	지역주도형 (지정공모)	협력산업 연관기업 지원,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 기업수요에 따른 합리적 예산규모 ▶ 3년 이내 지원	지방비 100%

(6) 신산업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 고도화

본 사업은 예타 신청전 기획부터 진행된 과제로서¹⁴⁾, 기획단계부터 2017년 SW융합산업 5대강국 진입을 비전으로 설정(2012년 사업착수 기준)하였다. 이를 위하여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 및 SW융합 기반 및 응용·상용화 R&D 계획을 추진하여 지역내 SW융합거점을 구축하고, 핵심 중소기업 육성 및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는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본 산업을 통하여 SW산업의 서울편중 문제해결 및 SW산업규모 확대를 위하여 전략산업을 보유한 지역내 SW융합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중소SW기업 대상 관련 인프라 및 R&D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내 SW융합 新시장 및 일차

14) 예비타당성 조사결과(2012년 9월 20일, KISTEP), B/C는 1.03, AHP는 0.705였다.

리 등 창출 기여를 위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림 2-2-6 신산업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 사업 기획보고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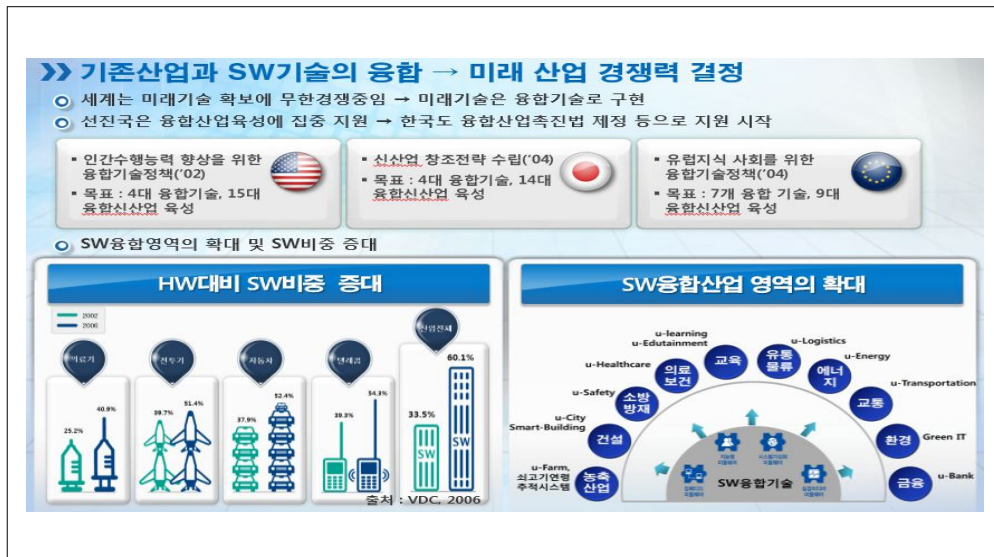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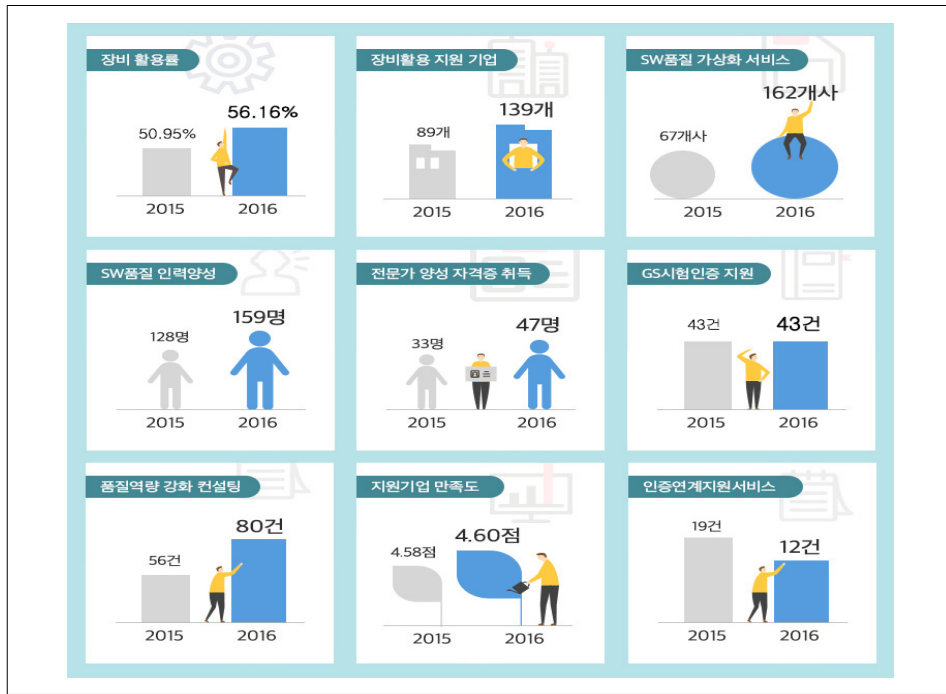


그림 2-2-7 SW융합기술지원센터 조감도 및 층별 활용계획



2016년 SW융합기술고도화 주요 사업 성과로는 첫째, 지역 전통산업에 SW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지역거점 기반의 융합 SW 품질 보증 등 요구 해소를 위해 SW융합 기반이 우수한 대구 지역에 SW융합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을 통해 장비 활용률 56.16%, SW 테스트 139개사, GS인증 43건, 품질시험 가상화서비스 162개사, SW품질컨설팅 80건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그림 2-2-8 2016년도 SW융합기술고도화 기반조성 사업 주요성과현황



두 번째 성과로는 2013~2016년까지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지역 중소SW기업 대상으로 SW융합 기반기술에 지역산업을 융합한 기술개발 지원(44개 과제)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 304명, 사업화율 53%, 논문 30건, 특허 76건, SW등록 40건, 기술이전 3건 등의 지역SW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표 2-2-9 2013~2015년 SW융합기술고도화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현황

(단위 : 억원, 개, 명, %,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과제 지원	지원과제수	6	25	30	20
	지원금액	29.5	96	113.5	82.19
주요성과	신규고용	-	115	189	115
	사업화율	-	24	53	50
	논문	-	20	30	28
	특허	-	16	76	49
	SW등록	-	7	40	30

본 사업은 2014년 지역발전사업 평가 A등급(지역발전위원회), 2015년 통합재정사업 (구)미래부 자체평가 우수(9개사업중 2위) 등 지역 SW산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신시장, 신산업을 계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성과제고 노력에 주력할 것이다.

(7) 지역SW산업진흥지원

지역SW산업진흥지원 사업은 정부의 지역 소프트웨어(이하 SW)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1998년부터 소프트웨어 기업의 창업 지원을 위한 지역소프트웨어융합센터, SW품질역량센터 등을 설치하고, 소프트웨어 및 멀티미디어 공용장비를 지원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06년 이후부터는 단순지원 사업에서 벗어나 성과·기업 중심 사업으로 개편하여 지역 SW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해외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제품 상용화 등 다방면으로 지원영역을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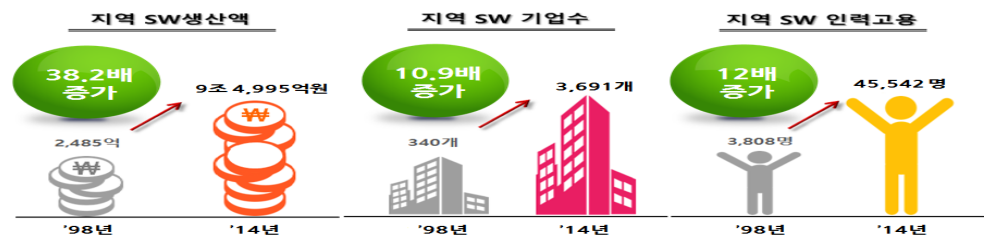
표 2-2-10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의 네트워크 구축 현황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센터	IT특화연구소	지역SW품질 역량센터	
19개 지역 IT·SW산업진흥/기업 전문 지원	지역내 기반산업과 연계한 IT·SW융합 R&D 지원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테스팅 지원 기능	
1998년 ~ 계속	2006 ~ 2012년	2011년 ~ 계속	

이러한 지원정책을 펼친 결과로 지역 내 SW산업은 1998년 대비 생산액 38.2배, 기업수 10.9배, 고용 12배 등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다. 이러한 성장으로 서울과 지역 간 격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W산업은 서울에 편중되어 있어(생산액 74.7%, 기업수 55.2%, 고용 71.8%) 인프라 구축을 넘어 관련 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정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SW산업 육성 정책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2-9 지역소프트웨어산업 발전기여도 및 파급효과

(단위 : 억원, 개, 명)



구분	1998년			2014년		
	서울	지역	전체	서울	지역	전체
생산액	42,979 (94.5%)	2,485 (5.5%)	45,464	280,184 (74.7%)	94,995 (25.3%)	375,179
기업수	1,768 (83.9%)	340 (16.1%)	2,108	4,556 (55.2%)	3,691 (44.8%)	8,247
종사자수	41,623 (91.6%)	3,808 (8.4%)	45,431	115,907 (71.8%)	45,542 (28.2%)	161,449

자료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KEA), 2014년 ICT산업실태조사

이에 19개 지역의 지자체 및 지역소프트웨어융합센터와 협력하여 SW기업들이 창업,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의 기반산업과 연계하여 SW융합 활성화 중심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다. 세부 분야로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지역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 지역SW품질 경쟁력 강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사업은 지역 내 중소 SW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력양성, 마케팅, 기술지원, 네트워크 등 지원하고 있으며,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한 SW융합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제품화를 위한 33개 과제를 발굴·지원하였다. 나아가 기업의 SW품질관리 체계와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지역

SW품질역량센터에서는 테스트, 컨설팅, 인증취득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책기획·집행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SW정책 로드맵 수립, 지역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정책·기술 최신동향 정보제공, 지원과제의 품질관리 지원 등을 실시함으로써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상의 사업을 통해 2016년에는 국비 149억원을 투자하여 19개 지역의 636개 중소 SW기업을 지원, 수혜기업 매출 2.06조원(전년대비 12.7% 증가), 신규고용 1,235명, 전문인증 259건, 소프트웨어인력양성 프로그램 1,675명 수료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8)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지방화·분권화 추세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된 고용·능력 개발정책으로는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2006년부터 실시했는데, 지역고용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 간 고용기회의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책임성 및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민간단체 보조방식을 자치단체경상보조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역고용위기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 단계별로 대응계획을 수립(2014년 1월)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축진특별구역(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통영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2015년)하였다. 특히 2016년도부터는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을 신설, 중앙과 지역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대규모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는 혁신 사업을 발굴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지역의 전반적 고용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법인(또는 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축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다양한 사업으로 이루어진다. 취업준비생, 퇴직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중심의 ‘일반사업’, 정부부처 합동공모로 산업단지 내 기숙사 임차, 통근버스 임차지원 등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고용환경개선사업’, 고용위기 업종 및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구조조정 지원사업’, 광역자치단체 주도로 대규모 인적·물적자원을 투입하여 종합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혁신프로젝트 사업’ 등이 있다.

2017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사업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인구·고용·산업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고용실천전략’의 수립이다. 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고용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거쳐 발굴·수립한 10대 핵심과제는 지역의 중·장기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논의의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지역고용실천전략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 사업기획·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능력개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고용관련 주체 및 전문가의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지역고용주체들의 사업수행 역량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 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지역의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시장이 확대되었다. 2017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전체 14,966명이 훈련에 참여, 80% 이상이 수료(12,623명)하고 50% 이상이 취·창업에 성공(7,711명)하는 등 그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 취업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취업하는 사례도 많아(17,553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 자치단체 내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9)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란 자치단체장이 임기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공시하면 중앙정부가 그 대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에 대한 지역의 관심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지역고용활성화 전략이다.

2010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2009년 12월) 및 제1, 3차 국가고용전략회의(2010년 1월 3일)에서 대통령께 보고함으로써 도입되었고, 2011년 들어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참여한 자치단체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단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였다. 한편,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 개최(2011년 8월 30일, 2012년 9월 5일), 지역 일자리정책 한마당’ 개최(2012년 3월 13일, 2013년 3월 28일)를 통해 수상한 자치단체의 사기진작 및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에 이바지하였다. 2012년부터 전국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광역시 17, 기초 226)가 참

여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고용노동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2013년부터는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 명칭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로 변경하여 개최(2013년 9월 4일)하였고, 2014년도에는 ‘지역일자리 정책한마당’ 명칭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으로 변경하여 개최(2014년 3월 12일, 2015년 5월 20일)하여 지역고용정책이 전국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심의회(지역노사민정협의체), 지역고용전략 협의체 등 지역 내 고용관련 기구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 언론, 자치단체 홈페이지, 주민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공시한다. 이때 일자리 목표는 고용률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 통계 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공통 목표와 함께 일자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목표를 수립하게 된다. 고용부에서는 자치단체가 공시한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차년도 예산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수상한 자치단체의 사례를 한데 모아 발간·배포하는 등 우수사례 전파·공유 및 교육의 기회로 활용한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도입된 이후 자치단체는 공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우수 인력을 보강하고, 일자리 관련 예산을 확대하거나 직원들에게 승진, 성과급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역 일자리 부문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가 증가하였다.

또한 자치단체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사업추진 관련 인프라가 늘어나고, 일자리 업무 담당자의 역량이 향상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영향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을 근거로 판단컨대, 2014년도에 고용률이 최초로 65%대를 넘어 서고(65.3%) 2016년도에 이어 2017년도에도 고용률이 지속 상승(66.1%→66.6%)하는 등 지역의 전반적인 고용률 상승, 실업문제 해소에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지난 민선6기의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상 문제점 및 성과를 연구·분석하고 평가체계 등을 개선함으로써, 민선7

기 출범에 따른 지역일자리 목표 수립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컨설팅도 병행하여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10) 사회적기업육성(포괄보조금사업)

우리나라에 사회적기업이 등장하게 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고용 없는 성장과 그로 인한 실업문제의 구조적 고착화,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면서부터이다.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었고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라 사적영역에서 제공되던 돌봄서비스의 사회화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급확대를 통한 적극적 고용창출 전략으로 2003년부터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시 추진된 공공근로사업이나 자활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사회적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럽형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이 논의되었다. 그 결과 2007년 1월3일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으며, 2007년 7월1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2007년 10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사회적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등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그간 자치단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시작한 이래 3,210개소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발굴·지정하였고 그 중에서 1,133개소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였다. 또한, 작년 한 해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1,359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참여하여, 저소득 가정, 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 6,412명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하였고, 그 결과 자치단체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을 시작한 이래 사회적기업에서 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이뤘다.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기업 종사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54%('10년)에서 0.143%('16년)으로 높아졌고,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035%('10년)에서

0.158(* 16년)으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비중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60.9%이고,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비율이 60.5%임을 감안할 때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통합문제와 사회서비스 배제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패러다임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표 2-2-11 추진성과 성과

(단위 명)

구 분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일자리창출사업 추진현황(지원인원)	6,412	7,551	8,998	11,983	11,725	12,384

(11) 선박관리산업 육성 지원

선박관리산업은 선원관리, 선용품 공급, 선박수리, 금융, 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다른 연관 해운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이다. 따라서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산업의 육성·발전기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선박관리산업육성 사업의 목적이다.

최근 세계 해운업의 경향은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에 대한 소유와 관리를 분리하고 있는 추세로서 선진 해운국인 유럽과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은 다양한 해운 정책과 제도를 통하여 선박관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은 선진 해운국에 비해 영세한 수준이며 국제화가 미흡한 실정으로 1984년 선박관리업이 도입된 이후 2017년말 기준 420개의 선박관리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가 중소기업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2년 7월 국내 선박관리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선박관리산업 발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현재 추진 중인 선박관리산업 육성지원은 선박관리전문가의 양성을 통한 전문역량강화, 복잡다양한 선원 및 선박 등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영비용 절감 및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해외시장 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능동적인 대처와 선박관리 업무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양질의 선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시급함에 따라 2012년 선박관리산업협회를 교육기관으로 지정, 교육과정을 양성과정(7개 세부과정)과 심화과정(7개 세부과정)으로 구분하여 2013년부터 매년 약 180명의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금융기관의 선박보유량 증가와 국제협약의 복잡성으로 해운업이 소유와 경영으로 분리되는 추세에서, 선박관리산업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선박유치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중소형 개별기업이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해외마케팅 활동 추진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3년과 2015년, 2016년에는 일본, 2014년과 2017년에는 그리스 등 상선을 많이 보유한 해운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설명회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7년말 기준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체의 선박관리척수 1,988척 중 1,206척의 외국적 선박관리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우리나라 선박관리 선박 수의 60.7%를 차지한다. 2018년에는 국내에서 해외 주요선주들을 초청하여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선박관리산업은 향후 조선산업과 연계되거나 해운S&P(Sale and Purchase)산업 등과도 연계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인적역량 강화, 해외진출 활성화 및 선진 선박관리 시스템 구축 등 산업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표 2-2-12

연도별 선박관리척수

(단위: 척,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선박관리척수	2,020	2,048	1,946	1,985	2,015	1,988
(외국선박비율)	(57.9)	(58.3)	(57.6)	(56.8)	(60.9)	(60.7)

(12) 해외 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

동 사업은 글로벌 이동통신사 및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로부터 해외 인증 권한을 국에서 획득하여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세계적 수준의 인증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수출형 모바일 융합 디바이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웨어러블, 사물인터넷(IoT), 미래이동통신(5G)등 관련 산업 지속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 위주의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지원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럽, 중국 등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이동통신사 전용 디바이스에 대한 노키아, 차이나 모바일 인증랩을 구축하고 인증권한을 획득하여 시험인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 6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2020년 5월까지 세계 Top 네트워크 장비사업자인 노키아 인증랩 구축을 시작으로 이동통신사업자 시험인증 교두보를 마련하고,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인 차이나모바일 인증랩 구축 및 유럽·중국 스마트 디바이스 및 다양한 IoT 기기 시험인증 서비스를 지원 할 계획이다.

2016년 7월 노키아 2G(GSM) / 3G(WCDMA), 2017년 5월 노키아 4G(LTE) 시험인증장비 구축 완료 및 전문 기술교육을 통한 시험인증권한을 획득하여, 현재 노키아 2G, 3G, 4G에 대한 시험인증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5월 차이나 모바일 4G(LTE) 시험인증 장비를 구축하였으며, 2018년 5월 4G(LTE) 인터로밍(중국내 이동통신사업자간 연동) 시험인증 장비구축 및 2018년 6월 시험인증 권한을 획득하여 차이나모바일 4G 시험인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통신사업자(노키아) 시험인증을 통해 2017년(2017년6월~2018년5월) 기준 19건의 시험인증 지원을 하였고, 이에 해외 시험인증 대비 약 32억의 인증비용이 절감되었다. 장기 대기 및 부적합 시 추가 소요기간 2~3개월 최소화를 통한 제품 개발 기간 단축, 제품 출시 전 해외 현지 인증 시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 및 핵심 기능 정보 유출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 내 산업기반인 정보통신, 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재도약을 추진, 향후 전후방산업 연계효과를 통한 스마트 기기 산업 시장 확대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들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역 출신 시험인증 전문 인력 채용 등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기대된다

(13) 지역공동체일자리(포괄보조금사업)

행정안전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저소득 노인, 다문화 가정, 장년 실직자 등 소득 및 재산기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취약계층에게 단기 지원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안정 및 생계를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의 휴업·폐업이 증가하고, 취약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서민생활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민생경제를 정상화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실시된 희망근로사업에는 약 35만 명의 취약계층을 참여시켜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급격한 고용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는 2010년 하반기 5만 명, 2011년 5만 명, 2012년 3만 명, 2013년 3만 명, 2014년 2만 명, 2015년 1만6천 명, 2016년 1만3천 명이 참여하는 등 2016년까지 약 20.9만 여명이 참여하였다.

2017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총사업비 42,344백만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하여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를 참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인원 8천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3월부터 10월까지 상·하반기 각각 4개월씩 나누어 실시한 결과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쪽방촌 주민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1,638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하였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전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한편, 취약계층이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과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역현안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에도 생산성·지속성·공동체성 제고를 위한 주민 공동작업장 육성(마을공방, 공동작업장) 강화를 통하여 기술습득 및 민간취업 기반을 마련하고, 참여자의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하여 중소기업 참여자 지원금 개선을 통한 임금인상,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표설정 등 청년 참여 확대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표 2-2-1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단위:명,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포괄보조사업, 국비)	20,080 (28,616)	16,226 (23,952)	13,402 (22,152)	11,638 (21,172)	61,346 (95,882)

(14)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우수인력, 장비 등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현장애로기술을 해소하고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1993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사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올해로 26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산학연 사업은 현재까지 특허출원 건수 5천여건, 기술개발 3만여건 등을 지원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R&D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고 매출증대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표 2-2-14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정책 변천과정

구분	주요제도 및 세부내용
1993	「공업발전법」에 의거 사업 시행(4년제 지방대학만 참여)
1996	중소기업청 개청으로 사업 이관
1998	전국컨소시엄제도 신설 : 사업참여 대상을 전문대학, 연구기관까지 확대
2004	주관기관 자체평가제도 도입 : 과제선정시 자체평가 20% 반영
2005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산학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신청·접수 기관을 대학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전환 대학 실험·실습실을 [산학연협력실]로 지정하여 기술개발과 취업연계를 통한 인력양성을 시범 추진
2007	현장애로 과제와 기술혁신형로 구분 지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개선

구분	주요제도 및 세부내용
2008	단기 위주의 현장애로 과제의 단계적 축소 및 선도형 과제 도입 국제산학연협력 R&D과제 신설
2009	선 기획 - 후 지원과제 도입 전자협약시스템 도입(처리기간 단축 30일→ 10일)
2011	창업기업(창업 5년 이내) 전용 R&D신설
2012	지역과제를 “창업”, “첫걸음”, “일반”과제로 개편하여 진행
2013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저변확대형으로 개편됨에 따라 전국과제 및 기업부설연구소 사업 폐지 “첫걸음”과 “도약”과제로 개편 연구마을 사업 시범운영
2014	자율편성형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첫걸음, 도약) 시행 기업부설연구소 사업 부활
2015	자율편성형 예산 배정 확대 연구마을 신청자격 기존의 대학에서 연구기관으로 확대
2016	주관기관 변경 : 대학·연구기관 → 중소기업 기술바우처 제도 도입 사업화 지표 강화(사업성의 고용지표, 수출지표 설정)
2017	“첫걸음”, “도약”, “전략”협력 내역사업으로 개편 전략협력 내 “지역 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사업 편입

2013년 중소기업청 R&D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개편을 실시한 결과, 산학연공동기술 개발사업과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이 통합되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R&D역량을 강화하는 첫걸음R&D와 연구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도약R&D 사업이 신설되었다.

2014년에는 국가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확대 및 산업별로 특화된 연구기관의 참여를 위한 산연전용과제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763억원, 616개 과제를 지원하였고 묶음예산 지원방식을 통해 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성과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자체 R&D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이를 집적하는 형태의 연구마을 사업을 2013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695억원, 834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지역별, 산업별 분포등을 고려한 26개 거점형 연구마을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R&D특성화를 추진하였다.

2016년 하반기부터는 수요자 중심의 산학연 R&D 수행을 위해 주관기관을 대학·연

구기관에서 중소기업으로 개편하였고,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바우처제도를 시범 도입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R&D에 있어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은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이 공동R&D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R&D 수행이나 한 단계 높은 정부R&D로 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사업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밑거름이 되도록 계획 중이다.

(15) 창업인프라지원

정부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취약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에게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통한 보육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98년부터 창업보육(Business Incubating)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말 전국에 262개 창업보육센터(대학 195, 연구소 16, 정부/지자체 10, 기타 등 41)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기술창업의 산실 및 창업지원의 핵심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표 2-2-15 창업보육센터 운영 주체별 지정 현황

(단위:개)

합 계	대 학	연 구 소	정 부/지 자체	공 공 기 관	기 타
262	195	16	10	11	30

표 2-2-16 창업보육센터 지역별 지정 현황

(단위:개)

구 분	서울	경기	인천	세종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광주	울산	부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계
BI수	33	51	5	3	14	15	15	12	12	1	17	17	22	12	15	14	4	262

2017년에는 9개 BI를 신규지정 하였으며, 5개 BI에 일반건물의 BI전환, 노후시설 개

선(리모델링) 등의 30억원을 지원하여 보육공간 확충 및 환경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한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비 등 운영비 103.6억원과 창업보육센터별 보육역량 강화 및 입주기업의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교육, 멘토링, 마케팅, 제품화 지원 등 자율 보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80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결과 2017년 262개 BI에 입주한 계속기업(5,907개)은 평균 매출액 40.5% 및 평균 고용인원 18.7%가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표 2-2-17 창업보육센터 계속입주기업 운영성과

(단위:개,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 입주기업	3,140	3,718	4,089	3,915	4,147
평균 매출 증가율	27.9	34.7	42.3	33.4	40.5
평균 고용 증가율	14.1	20.3	21.9	20.3	18.7

아울러, 창업보육센터의 운영내실화를 위해 평가체계 재정비를 통한 창업보육센터 간 경쟁력 향상을 유도, 운영이 부실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또는 지원중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육과 투자를 연계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액셀러레이터 전환을 촉진하여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역량강화 및 선진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림 2-2-10 창업인프라 사업 프로그램



(16)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산업 창출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창의 관련분야(바이오, 나노, 에너지, 기계, 로봇, 자동차, 항공, 전자전기 등) 산업경쟁력 향상의 지원기반이 되는 지역산업기술거점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의 창의 신산업 육성 및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기술 개발과 기반조성의 두 분야로 구성되며,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공모를 통한 지역 신산업·주력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화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기반조성의 경우에는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에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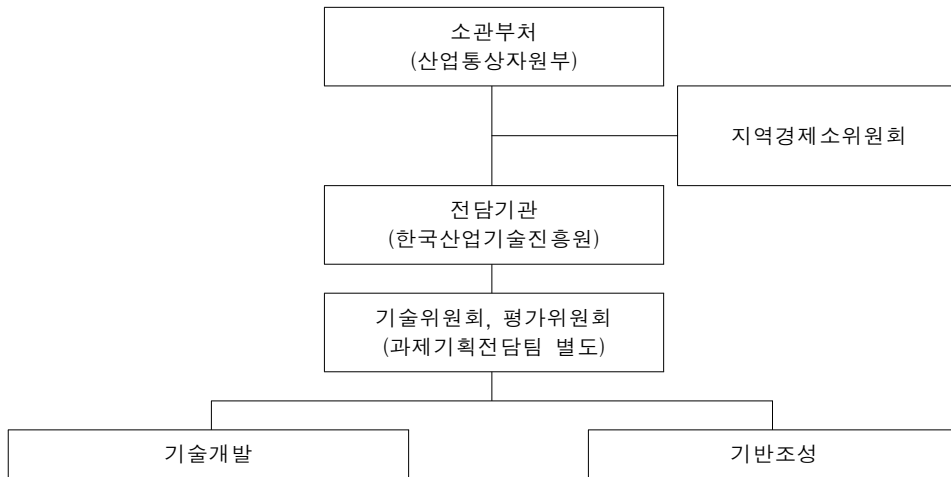
2016년부터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단위사업) 내 R&D 예산 과목 구조가 산업 분류와 사업유형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해 3개 세부사업(창의, 시스템, 소재)으로 재편되어 추진되었다. 2017년 기준으로 28개 내역사업에 796억원 투자하였다.

기술역량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에 장비 등의 인프라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성과 제고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센터 건축을 토대로 구축된 장비를 활용하여 기업지원 및 애로기술 해결, 연계협력 강화, 사업화 지원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화를 활성화하였다. 그리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기술역량 확보와 제품화 및 시장진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매출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였다(2017년 192명).

향후에도 기반조성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지원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지속성장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별·분야별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방안, 사업 추진방향, 사업간의 연계성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림 2-2-11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추진체계



(17)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은 소재부품 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이 되는 연구기반시설을 지역거점센터를 통해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혁신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은 지역산업 거점기관 조성을 통해 연구시설, 장비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프라의 독자적 구축이 어려운 소재부품 관련 중소기업에게 시제품 제작, 시험, 인증 등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한다.

2014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비 지원을 받고 있던 지역성장기반구축사업,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등 출연연 수행사업(일반회계)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이관 후, 2016년 사업의 목적성 및 추진관리의 체계성 제고를 위해 사업구조가 산업유형별로 통합 재편되어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으로 재편되었다. 2017년에는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12개 내역사업에 434억원의 국고를 투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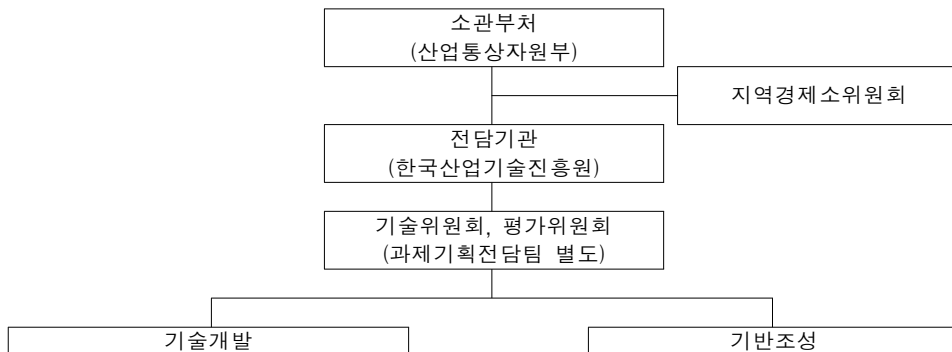
그간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지역에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업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우수한 성

과를 거두었다.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장비구축으로 구축장비 활용이 증대되고, 기업지원 활동이 다각화, 활성화되어 기업 성장 및 경쟁력 제고 및 제품화에 기여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장비공동활용기관수와 장비가동률은 2014년 대비 각각 205% 및 35%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간 기술개발과제를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제품화 및 시장진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매출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향후 내역사업의 다양한 성과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성과목표의 효율성 검토 및 지역 및 전국의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이 구축된 장비를 적극 활용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활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림 2-2-12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추진체계



(18)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은 국가기간산업인 시스템 분야(기계, 로봇, 자동차, 항공, 전자·전기, 조선, 해양플랜트 등) 산업경쟁력 향상의 지원기반이 되는 지역산업기술거점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의 시스템 신산업 육성 및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의 두 분야로 구성된다.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공모를 통한 지역 신산업·주력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화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기반조성의 경우에는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에 연구 및 시생산

등을 위한 시설을 건축하고, 지역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시설물에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으로 기업을 지원한다.

2016년부터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단위사업) 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해 3개 세부사업(창의, 시스템, 소재)으로 재편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은 2017년 기준으로 19개 내역사업에 719억원 투자하였다.

표 2-2-18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내역사업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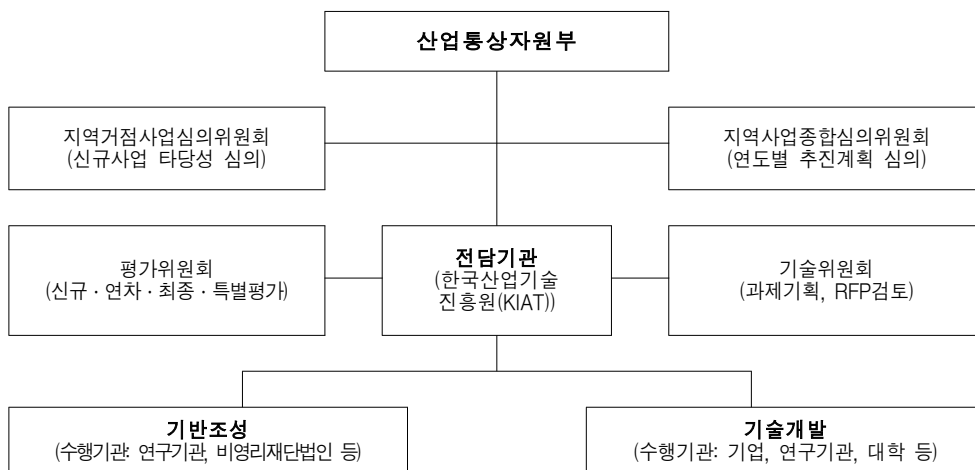
1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	13,040
2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	29,440
3	High-Tech 베어링산업 기반구축	5,000
4	3D 휴대용 스캐너 개발	2,000
5	차세대 조선·에너지부품 3D프린팅 제조공정 연구센터 구축	1,000
6	에어가전(ACE) 혁신지원센터 구축	2,000
7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 기반구축	754
8	항공분야 극한 전자기 환경 극복 기술 시험평가 기반 구축	2,000
9	IoT기반 해양도시관리 실증 클러스터 구축	1,500
10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	1,440
11	차세대 정형외과용 생체이식 융합의료기기산업 지원 센터 구축	2,480
12	지능형기계 기반 메디칼 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1,033
13	4D 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1,500
14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강화	1,425
15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플랫폼 구축	2,200
16	글로벌 EV 폐배터리 재활용센터 구축	2,000
17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	1,500
18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기반구축	1,500
19	엔지니어링설계지원센터 구축 적정성 조사	100

기술역량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에 장비 등의 인프라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성과 제고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센터 건축을 토대로 구축된 장비를 활용하여 기업지원 및 애로기술 해결, 연계협력 강화, 사업화 지원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화를 활성화하였다. 그리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기술역량 확보와 제품화 및 시장진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매출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특히 지역 일자리 창출에 있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2014년 70명, 2015년 171명, 2016년 185명, 2017년 376명). 또한, 지역내

대학과 관련분야 및 재직자 재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설·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이익 등 상생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도 기반조성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지원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지속성장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별·분야별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방안, 사업 추진방향, 사업간의 연계성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림 2-2-13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추진체계



(19)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구축

석유화학 산업은 생산액 132.6조원(2016년 국내제조업 3위), 무역흑자 63억 달러(2017년 3/4분기)를 기록한 국가 기간산업으로써 우리 경제·산업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업계의 안전사고는 수출 및 무역흑자에 치명적 손실로 직결된다. 최근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의 잇따른 발생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 안전·예방’ 실현이 대두되고 있고, 화학분야 기술인력은 부족률 3.5%(평균대비 1.5배),

부족인원 4,483명(평균대비 2배)으로 12대 주력산업 중 인력공백이 심각한 편에 속해, 현재 석유화학산업의 중심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정년퇴직에 대비하여 체계적 교육을 통한 숙련인력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구축사업은 이러한 석유화학산업분야의 숙련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정운전 안전사고 예방과 중소기업 중심 전문인력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2015년 5월부터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가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9년 4월까지 총 4년간 사업비 250억원(국비 150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담금 1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교육센터 및 장비 구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당초 지원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인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내에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구축사업(R&D)’으로 추진되었으나, 2016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R&D사업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인 ‘산업기반시설안전관리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재편되었다.

현재 조선산업 위기로 지역 경제 위축이 우려되어 석유화학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 조기 구축을 추진 중이며, 현재 교육센터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기 구축된 교육훈련장비를 이전 설치 예정중에있다. 향후 장비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개발이 완료되는 2019년 3월 정식개원 예정으로, 2020년부터는 신규인력 年 300명, 재직자 교육 年 1,000명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분야의 관련 교육기관이 전무한 상황에서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구축을 통해 우수한 자질과 역량을 보유한 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 기술인력 순력도 제고를 통한 플랜트 대형사고 예방 및 기업체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지원 등 종합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20)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R&D)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은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산업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소연료전지차(FCEV)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Hub 구축, 운전자 관여 없이 차량이 가속, 조향, 제동을 모두 수행(level3) 하기 위한 자율주행의 핵심부품 개발 및 이를 적용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의 두 분야로 구성된다. 기술개발은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핵심기술 및 사업화 개발을 지원한다. 기반조성의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시장으로 진입을 위한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에 부품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연구 및 평가장비를 설치하여 테스트베드, 평가지원, 기술개발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17년부터 2개 내역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17년 기준 2개 내역사업에 145.5억원을 투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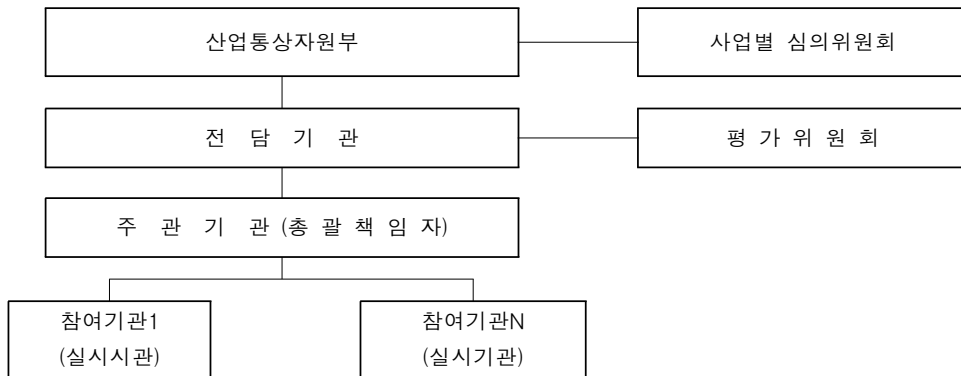
표 2-2-18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 내역사업 (단위: 천원)

1	자율주행자동차핵심기술개발	8,882,000
2	수소연료전지차부품실용화및산업기반육성	5,667,000
합계		14,549,000

국가 주력산업인 자율주행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기술개발 역량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지원 및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투자 촉진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기술개발을 지원(자율차 11개 과제, 수소차 17개)하여 특허출원 10억원당 1.58건, 신규 고용 인력 10억원당 5.15명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특히 충남 지역소재 기업의 신제품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 및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대구 지역 내 미래자동차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기업들의 대구 지역으로의 이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에도 자율주행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지원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지속성장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동 사업을 통해 글로벌 완성차들의 수소연료전지차 양산 계획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자동차의 자율주행차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핵심부품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기업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한다.

그림 2-2-14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 추진체계



(21)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2016년 6월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였다. 조선업체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조선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도 함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그 지표의 하나로 지정 당시 울산, 경남, 부산, 전남 등 조선업이 밀집된 4개 시·도의 전년대비 수출 감소폭이 타 시·도보다 월등하게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조선업 의존도가 큰 울산에 대한 지역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조선해양산업활성화기반을 위한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을 지원하게 되었다.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기업이 입지해 있는 산업도시로서 이들 기업과 관련한 전시·컨벤션 산업 수요가 큰 편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울산광역시시는 2013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고, 2015년 10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중앙투자사업 1단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¹⁵⁾, 2016년 설계 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2016년7월~2017년7월), 이후 2017년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앙투자사업 2단계 심사를 통과하여, 2017년 12월 시공 계약을 체결하여 착공을 하게 되었다.

15) 2015년 제4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결과 알림(2015.10.30. 행자부→울산시),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체결 이전에 2단계 심사 이행’의 조건부 의견을 통보함.

표 2-2-19 중앙투자사업 2단계 심사 결과 주요 내용

사업기간	사업 규모	재원조달계획(억원)	심사결과
2016 - 2020	- 부지 43,000㎡ - 연면적 42,982㎡ - 지상3, 지하1 - 전시장, 컨벤션홀, 주차장 등	- 계 1,678 - 국비 280 - 시도비 1,298 - 지방채 100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반영 - 동 센터의 운영시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시설임대, 다양한 전시사업 개최 등 구체적인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등 구체적인 조직 및 인력운용 방안 마련

동 사업에 대해 설계와 공사는 울산시가 주관하고 보상(부지매입)은 울산시와 울산도시공사 간 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시컨벤션센터의 조직·인력 운용은 울산시가 울산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계획하여, 2020년 12월 준공, 2021년 운영계획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한편, 동 사업에 대해 울산시가 2012년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¹⁶⁾에 따르면, 순현재가치 41억원, 편익/비용 비율 1.02, 내부수익률 5.76%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2-19 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 결과

(단위:백만원)

총비용의 현재가	총편익의 현재가	순현재가치 (NPV)	편익-비용비율 (B/C ratio)	내부수익률 (IRR)
191,058	195,169	4,111	1.02	5.76%

또한 2017년 8월 울산시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중앙투자심사 신청 자료에 의하면, 동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4,552명으로서, 사업추진시 고용효과 1,312명, 향후 운영시(30년간) 고용효과 3,240명으로 조사되었는 바, 동 사업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16) 조사기관 :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조사기간 : 2012.2.~7.(5개월간)

표 2-2-20 일자리 창출 효과

구분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효과	향후 운영에 따른 고용효과(30년간)
예산액(억원)	1,236	2,034
총고용(명)	1,312	3,240
10억원당 고용명	11	16
고용 효과 산출 내역	<p>□ 고용효과: ① + ② = 1,311.7명</p> <p>① 직접고용효과</p> <p>- (전시컨벤션센터 건축 관련 지출항목에 인건비가 일괄 포함) 0.0명</p> <p>② 간접고용효과</p> <p>- (공사비, 용역비, 감리비, 기타비용) 1,311.7명</p> <p>※ 토지 보상비 등(442억원)은 고용효과 분석에서 제외</p>	<p>□ 고용효과: ① + ② = 3,239.8명</p> <p>① 직접고용효과</p> <p>-</p> <p>(인건비(30년간)=상용임금+복리후생비+퇴직급여 +기관부담금) 1,294.0명</p> <p>② 간접고용효과</p> <p>- (관리운영비, 기타경비) 1,945.8명</p>

제2절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1.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1) 지역투자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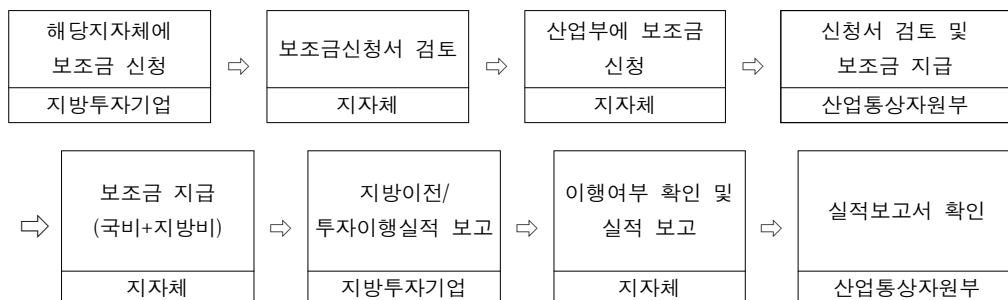
1) 기업 지방이전 촉진

1999년부터 세제·금융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시행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흡하였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적 분업구조 형성과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 간 동반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지원기준을 근거로 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기업으로서(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은 제외)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한다.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 종류는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이 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593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치하기 위해 총 5,827억원(국비)의 지방이전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11조 694억원의 지방투자액과 34,846명의 신규고용(계획기준)을 창출했다.

표 2-2-21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지원 등 지원대상에 구분없이 동일한 절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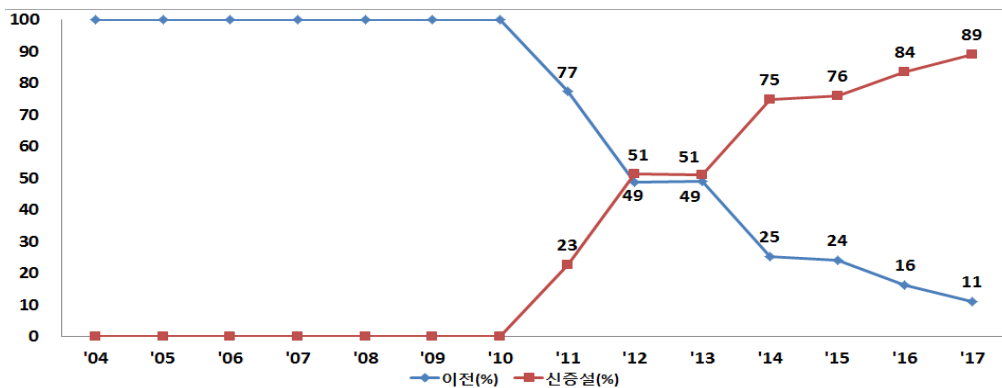
2) 지방 신·증설기업 지원

종전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전보조금, 법인세 감면, 종전부지 매입지원,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으나, 지방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부족하여 투자 및 고용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지방기업에 대해서도 신규투자를 통한 고용을 창출한 경우 신·증설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산증대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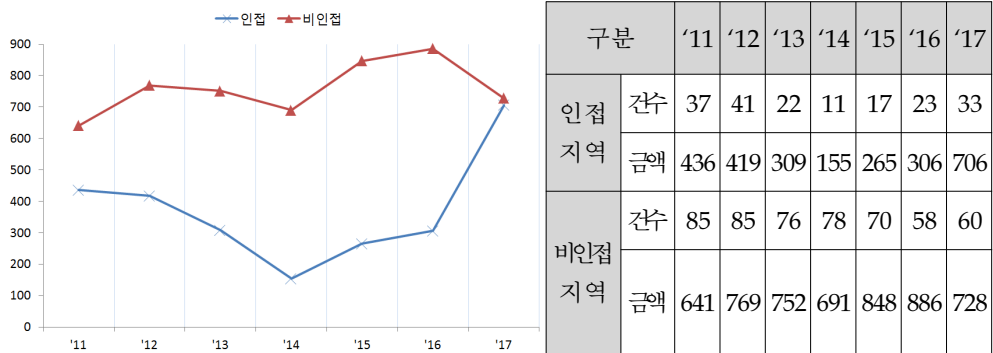
2011년부터 2017년까지 405개 지방 신·증설기업에 4,643억원(국비)을 지원함으로써 8조 7,404억원의 투자를 유도하고, 16,243명의 신규고용(계획기준)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림 2-2-15 지방이전투자 지원과 지방 신·증설투자 지원 비중



또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이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기업의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한 지원은 그 외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져 수도권 인접지역과 그 외 지역간 지원규모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림 2-2-16 수도권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지원실적 비중



3) 국내복귀기업 지원

2012년 하반기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U턴 기업)에 대해서도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에서 해외사업장에서의 상시고 용인원 30명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017년까지 39개 국내복귀기업에게 199억원(국비)을 지원하여 1,774억원의 지방투자를 유치하고, 2,154명의 신규고용(계획기준)을 창출했다.

(2) 투자유치기반 조성

투자유치기반 조성사업은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첨단기술 도입, 일자리 확보 등의 효과를 창출하여 우리나라 산업기반 고도화 및 지속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1994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토지매입, 현금지원, 투자유치활동 등을 지원한다. 외투기업의 높은 지가부담을 완화하여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 제공하고, 고도기술 수반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적 프로젝트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한상의 간담회, 외투기업 경영실태 조사,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유치 현황을 점검, 이를 제도 개선 및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표 2-2-22 2017년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지원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금액	시행기관	지원형태
부지매입비	41,474	산업통상자원부	직접수행
현금지원	4,126	산업통상자원부	민간보조
투자유치활동비	6,488	KOTRA,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등	민간보조
임대료지원	11	산업통상자원부	자치단체보조
국내복귀기업지원	300	KOTRA 유턴기업지원센터 등	민간보조
정책연구구비 등	241	산업통상자원부	직접수행
합 계	52,640		

2017년에는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총 526억원이 지원되었다. 분야별로는 외투기업의 지가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415억원, 전략적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현금지원 41억원, 투자유치단 파견, 투자가 초청, 투자환경 개선 등 투자유치활동비로 65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정책연구용역 및 국내복귀기업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의 결과로 2017년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29억 불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이는 기존 최고 실적이었던 2016년 213억 불 대비 7.7% 증가한 성과이다.

표 2-2-23 2010~2017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신고기준)

(단위 : 백만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3,071	13,673	16,286	14,548	19,003	20,909	21,299	22,943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4차산업혁명” 관련 투자 확산, 국내 대기업과의 가치사슬(Value-chain) 형성을 위한 합작투자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고위급(장차관) IR 등 적극적 투자유치활동이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자 간담회, IKW(Invest Korea Week), 외국기업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외투기업의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증액투자를 유인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

평가할 수 있다.

2018년에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금리인상 추세 등 투자유치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특히, AI·클라우드·빅데이터·로봇·바이오시밀러 등 4차산업혁명과 연관된 외국인투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유망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외국인투자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은 외국인투자의 국내경제 기여도 한층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대비 투자자 타겟팅 및 소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며, 지속가능한 외투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3)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촉진 한시지원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남북관계 영향과 같은 외부적 환경요인에 따라 생산활동이 중단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에 백업공장 구축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력사업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 중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2014년부터 시작하여 당해연도에는 1개 기업이 11억원을 지원받았다.

2016년 2월에는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국내 대체투자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개성공단 중단조치 당시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123개 기업의 국내 대체투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작되었다. 이 보조금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더 높은 보조율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투자도 지원대상으로 허용하였다. 이 보조금을 통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0개 기업에 265억원(국비)을 지원하여 1,668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645명의 신규고용(계획기준)을 창출하였다.

제3절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1. 노후산단 창의·혁신공간 전환

(1)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선진국을 따라잡는 형태인 기존의 Catch-up 전략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어 공정 혁신, 자체 기술개발 등을 통한 기술집약 제품을 생산하는 혁신주도형 성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원천적인 기술·지식을 창출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과 이런 기술·지식을 실제로 제품에 적용하는 산업현장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즉, 산·학·연이 서로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혁신이 창출되는 혁신클러스터 공간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산업단지가 생산중심의 공장 등이 밀집되어 생산기능은 뛰어난 반면 연구개발 역량은 매우 취약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R&D역량 강화와 산업주체간 연계를 통해 산업단지를 지식, 정보가 교류되고 창조혁신이 선순환되는 혁신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 시작되었다.

2005년 4월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등 7개 단지를 시범단지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2007년 말에 남동, 오창, 성서, 녹산, 대불 등 5개 단지가 추가 지정된 후, 2010년 4월부터는 5+2 광역경제권 정책에 따라 전국의 산업집적지로 사업범위를 확대되었다. 최초에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다가 광역경제권 개편 이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R&BD 네트워크 구축·운영, 산단 기업성장지원센터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2017년 예산 594.8억원).

R&BD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산학연협의체인 미니클러스터(Mini-Cluster, MC)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니클러스터란 업종별·기술 분야별로 기업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협의체로서 문제인식을 통해 애로 및 해결사항을 발굴해 과제화하고, 이를 MC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통해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7년 12월말 전국에 총 91개의 미니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으며, 9,532명의 산학연 관계자가 활동하고 있다. 교류활동을 통해 발굴된 과제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사업비 지원을 통해 협력과제로 진행하며, 2017년 기준 921건의 공동 협력과제를 진행하였다.

지난 10여년 이상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에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으로 변신, 확대해 온 동 사업은 이제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IoT, 스마트공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부 핵심사업으로 다시 한번 재도약을 위한 변신을 해야 할 때이다.

표 2-2-24 전국 산학연협의체 현황 (Mini Cluster : MC)

(단위: 개사,명)

구 분	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합계	비 고
개사(명)	8,220	600	279	433	9,532	91개 MC

표 2-2-25 R&BD 공동 협력과제 지원현황

(단위:건)

연도	R&D	시제품	산재권	마케팅	교육	기타	기관연계	합계
'16	223	76	222	226	15	87	153	1,002
'17	204	155	260	147	23	2	130	921

표 2-2-26 기업성장지원센터 지원현황

(단위:개사,건)

집중 육성기업 지원				입주기업 지원(육성기업 외)			
구 분	'16	'17	합계	구 분	'16	'17	합계
육성기업수	84	85	169	지원기업수	1,411	1,502	2,913
컨설팅건수	381	420	801	컨설팅건수	1,783	1,563	3,346

(2) 산학융합지구조성

2011년부터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산업단지에 대학과 기업연구소를 유치하여 청년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산학융합지구)을 조성하고, 조성된 산학융합지구를 중심으로 산업현장에서 맞춤형 교육과 R&D, 취업활동

이 연계·선순환되는 산업인력 양성의 선도모델을 만드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산업단지 내에 대학 캠퍼스 조성 및 산업단지 관련 학과를 직접 산업단지로 이전하여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직장생활과 대학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先취업-後진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 해결 및 기업활성화에 도움이 됨을 물론,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확대 및 QWL(Quality of Working Life)를 향상시켜 산업단지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도에는 반월·시화(경기), 구미·왜관(경북), 군산새만금(전북), 2012년도에는 대불(전남), 오송(충북), 울산, 2013년도에는 당진(충남), 2014년에는 창원(경남), 2015년에는 부산, 여수(전남), 2016년에는 제주, 인천, 나주(전남)를 선정하였다.

동 사업은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추진 중에 있으며, 양 부처는 대학의 산업단지 이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학융합지구 지정을 통해 지구 조성비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민간자금과 매칭하여 지원하고, 교육부는 대학이 산업단지에 캠퍼스를 조성할 경우 토지 및 시설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까지 시화·군산·구미·대불(전남)·오송·울산, 당진, 창원 등 8개 지구에서 총 20개 대학 41개 학과 7,580명, 기업연구소 228개소가 이전을 완료하여 대학중심으로 산학공동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학공동연구 성과로 R&D 325건, 기업기술애로 해결 329건 등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혁신과 더불어 총 1,596명의 학생이 참여기업 취업에 성공하였다. 아울러, 기 재직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계약학과 32개 학위과정에 1,005명이 참여하여 174명 학위 취득, 비학위 136개 과정을 통해 2,582명에게 현장 직무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2014년 9월 산업단지 50주년 행사를 통해 발표된 「노후산단의 스마트혁신단지化」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산학융합을 통해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근로자평생학습, 기업지원 등 산업단지 내 대학에서 이론교육과 현장실무를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3)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지원사업

과거 1980~90년대 이전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산업중흥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 하였으나, 조성 후 오랜 기간 경과에 따라 노후화되어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과 지원·편의시설 부족으로 생산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도시 확산으로 산업단지가 도시 내부로 편입되어 주거지 등과 인접하면서 공해·소음으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노후화된 산업단지들이 새로운 기업 수요 및 도시기능에 맞게 현대화된 산업단지로 재생될 수 있도록 산업기능과 기반시설 등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으나, 기반시설의 설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자체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업종 전환, 기반시설 정비, 지원시설 확충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첨단 산업단지로의 재정비 및 도시 기능의 종합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실태조사, 그리고 재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09년에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같은 해 9월 시범사업지구 4개소(대전, 대구, 부산, 전주)를 선정하였다.

201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재생사업에 산업단지 주변과 공업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산업단지와 같이 재생사업단지도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토록 하였으며, 산업단지 지원지침을 개정(2011년)하여 재생단지 내부도로 등 국비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재생사업에는 시행계획 수립비, 도로·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 비용의 50%를 국비 지원하였다.

표 2-2-27 연도별 예산 지원액

(단위 : 백만원)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	3,000	-	-	4,000	4,300	27,500	38,500	26,900	27,000	21,450

2009년도에 선정된 시범사업지구 4개소에는 사업완료(2026년)까지 국비 3,200억원을 투자하여 낙후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첨단 업종의 산업단지로 개편할 계획이다.

2014년도에 선정된 2차 사업지구 4개소(춘천, 안산, 구미, 진주) 및 2015년도에 선정된 3차 사업지구 10개소(성남, 인천남동, 청주, 광주하남, 익산, 양산, 대구성서, 서울온수, 순천, 대구염색)는 2016년부터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재생지구 지정(2017~2018년, 7개소 지정 완료) 및 사업 타당성 검증을 거쳐 순차적으로 재생사업비에 대한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에도 4차 사업지구 5개소(천안, 원주, 여수, 시흥, 창원)를 선정하여 재생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노후 산업단지의 경제적 중요도, 혁신역량, 기반시설 노후도, 기업 및 근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후한 산업단지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젊은 인재가 모이는 활력있는 산업단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한편, 재생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이고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공모 재생사업 도입,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강화 등을 골자로 2015년 8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국고보조사업 등 제한적 지원과 공공·민간 투자수단이 부족하여 제도 활성화가 촉진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주택도시시기금에서 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투·융·자할 수 있도록 2018년 3월 개정된 「주택도시시기금법」을 이용하여 투자촉진을 유도하는 등 노후산단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28 전국 노후산업단지 현황 (준공 후 20년 경과, 2017년말 기준)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단지 수	입주 기준 업체 수									
	단지명	개발년도	입주업체	단지명	개발년도	입주업체	단지명	개발년도	입주업체	단지명	개발년도	입주업체											
국가 산단	여수	69	290	구미1* 한국수출 익산1* 창원*	73 74 74 79	1,344 11,375 205 2,754	옥포	80	1	울산-미포 포항2차* 남동2차* 대덕연구1 시화반월*	91 92 92 93 93	860 104 4,545 549 18,018	23	43,490									
							고정	85	1	온산	94	358											
							광양(연관)	89	152	군산	95	197											
							보은(1차)	89	1	구미2,3	95	370											
							진해(1공구)	89	3	북평	95	54											
							남동1단*	89	1,957	남동3차* 대불	97 97	0 351											
							일반 산단	대구3*	68	2,513	원주우산 인천기계 서울운수* 인천 대전1* 사상* 대구검단 성남* 서대구* 대전2* 대전주변 지역	70 71 71 73 73 75 75 76 78 79 79			19 178 193 466 130 2,818 557 3,190 2,360 100 111				신평장림 (협업) 송탄 하남1-3 (3차)* 문막* 신평 조치원 천안2* 상수 성서2* 왜관 (기존) 안성2 충주1 상봉암 평택 경산1 강화화점 완주 외동 문발1 현도 고령1 정읍2 부강 공도 인천서부 도하 건천1 가울 원곡 익산2 동향 마성 대풍 미양2 덕산 장원1 학운 영주 개진 아산현대무 리츠밸리	90 91 91 91 91 92 92 92 92 92 92 93 93 93 93 94 94 94 94 95 95 95 95 95 96 96 96 96 96 96 96 97 97 97 97 97 97 97	480 150 525 20 5 19 72 10 1,075 274 54 44 5 63 194 15 88 22 15 4 68 69 13 4 255 1 7 2 6 167 14 74 10 6 14 10 27 38 35 1	75	20,535
																			양산*	81	105		
정읍1	81	7																					
진주상평*	81	515																					
소 촌	83	45																					
달성1차	83	351																					
강릉중소	83	45																					
하남1-3 (1차)*	83	198																					
오천*	83	49																					
본 촌	83	155																					
송 암	83	66																					
신평장림 (기존)	84	144																					
향남제약	85	50																					
안성1	85	52																					
순천*	86	33																					
전주2	87	21																					
반월도금	88	102																					
대구염색*	88	125																					
성서1*	88	903																					
하남1-3 (2차)*	89	337																					
문평	89	7																					
청주*	89	422																					

합계	4		3,018	15		25,800	28		5,848	51		29,361	98	64,025
----	---	--	-------	----	--	--------	----	--	-------	----	--	--------	----	--------

*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산업단지

- 개발년도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망 산업단지 준공일(부분준공포함) 기준으로 산정(97년 12월말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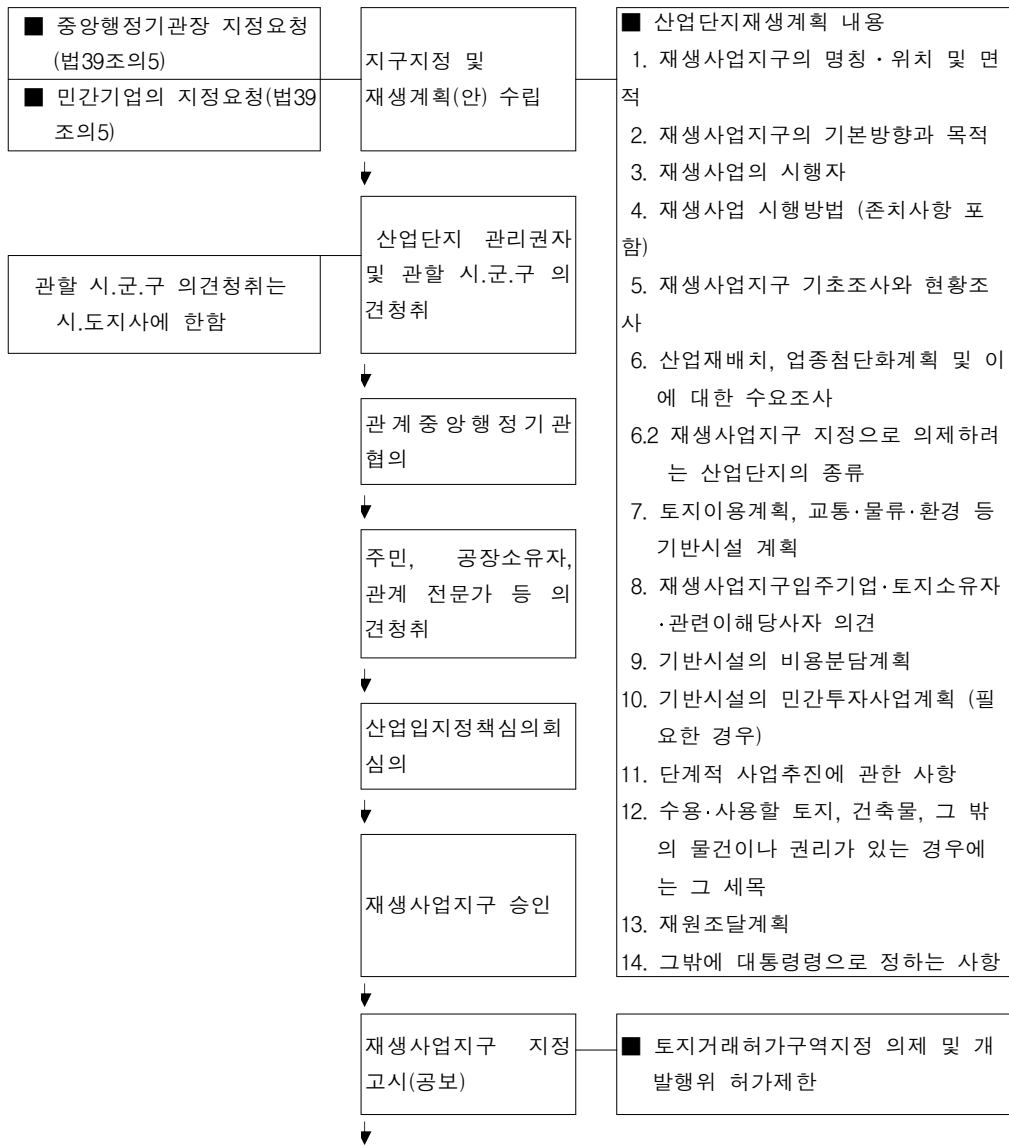
- 입주업체 : 산업통상자원부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017년 9월말 자료 중 입주계약업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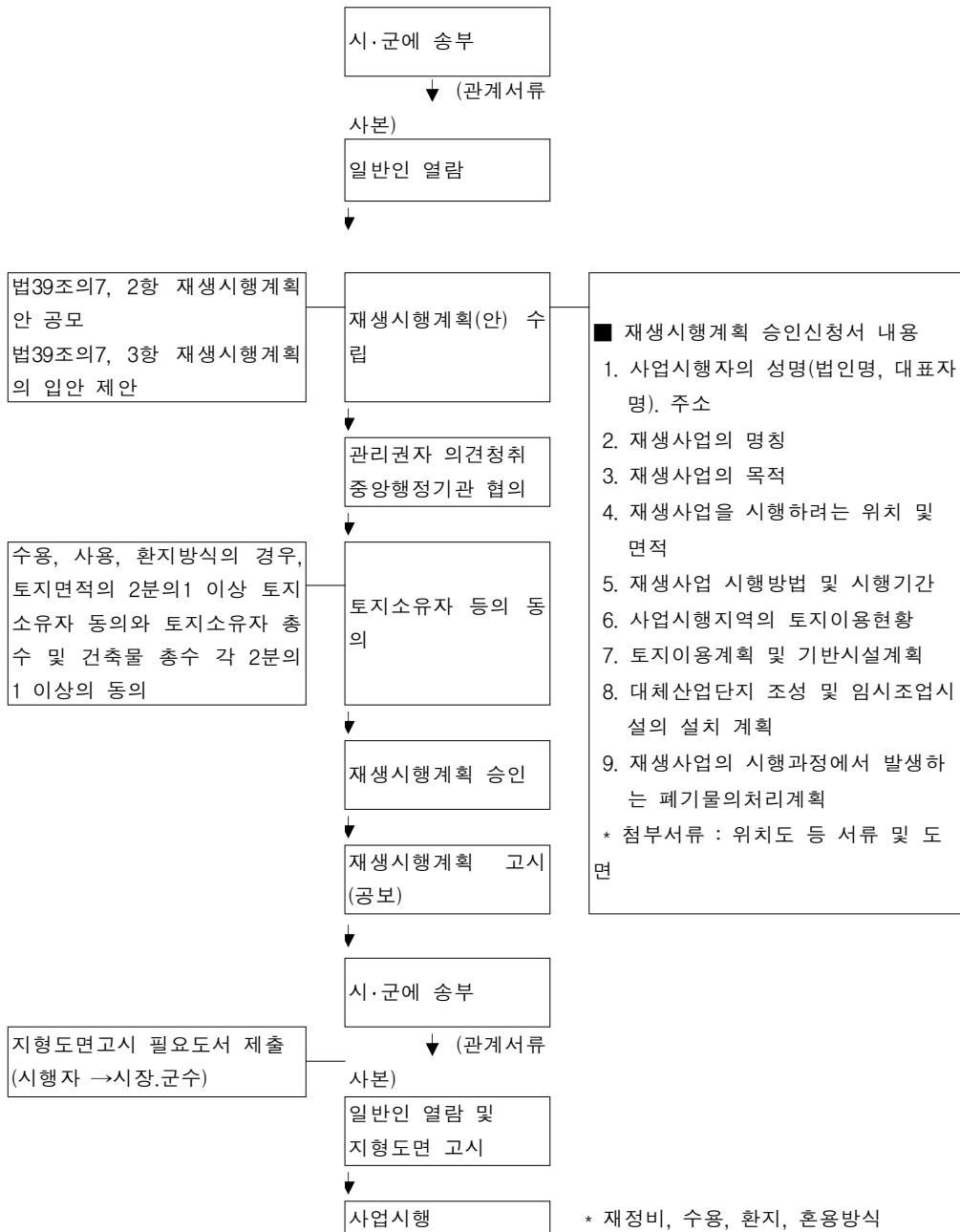
표 2-2-29 노후산업 재생사업 지구별 현황

명칭	지구지정/조성기간	규모(천㎡)	주요 사업 내용(안)	비고
【 1차 지구 】				
대전1·2	'12.9 / '10~'20	2,313	· 기존 핵심산업(기계·장비) 집적화, · 성장유망업종(컴퓨터·정밀기계) 유치, ·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 환경유해업체 이전 유도, · 선도사업구역 개발(LH)	· 기반시설 공사중
대구	3공단	'13.12 / '09~'24	· 기존 우세업종 고도화, · 신성장동력산업(뿌리산업 그린복합지구, IT·융합부품, 안경·광학 등) 유치, ·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 기반시설 공사중
	서대구	'13.12 / '09~'21	· 기존 핵심산업 첨단화(신소재 섬유, 차세대 기계·금속 등) ·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 선도사업구역 개발(LH)	· 기반시설 공사중
전주 1	'12.6 / '10~'20	1,805	· 기존 전략산업(탄소)과 연계하여 첨단업종(전자·전기 등) 유치, · 행복주택 및 지원시설용지 조성, ·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 기반시설 공사중
부산사상	'15.4 / '10~'20	3,021	· 기존업종(금속가공, 신발제조 등) 집적화, · 특화업종(IT, 전자부품, 정밀기계, 출판, 영상 등) 유치, ·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 시행계획 수립중
【 2차 지구 】				
춘천후평	'17.3 / '15~'25	444	· 도로확충 및 녹지 확보, · 바이오연구소 유치 · 지식산업 · 물류센터 건립	· 시행계획 수립중
안산반월	'18.1 / '15~'25	5,755	· 융·복합단지 조성, · 노후 수도관,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 공원 및 지원시설 조성	· 시행계획 수립중
구미 1	'18.2 / '14~'24	10,223	· 성장유망산업(IT융합, 탄소섬유, 기계, 그린에너지 등) 유치 · 주차장 및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 도로 정비, 자전거도로 설치	· 시행계획 수립중
진주상평	'18.상 / '14~'25	2,135	· 도시형첨단업종, R&D 산업 도입, · 컨벤션, 지식산업센터 건립 · 도로 확장, 주차장 확충, 공원 조성	· 재생계획 수립중
【 3차 지구 】				
성남일반	'18.상 / '15~'25	1,513	· 디자인산업을 테마로 하여 지식산업 중심의 도심형 복합 산업단지로 재편	· 재생계획 수립중
남동국가	'18.하 / '15~'25	2,872	· R&D역량 강화 및 노후화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융복합 창조산업의 메카로 육성	· 재생계획 수립중
청주일반	'17.3 / '16~'24	1,252	· Inno-Square(혁신지원공간)와 Eco-Square(산업집적공간) 조성을 통해 오송·오창·세종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	· 시행계획 수립중
하남일반	'17.11 / '16~'21	4,970	· 기업지원, 문화·편의시설 확충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청년이 중심이 되는 창의혁신기반 구축	· 시행계획 수립중
익산국가	'18.하 / '16~'21	1,336	·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유망 신산업 창출을 위한 혁신 플랫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재생계획 수립중
양산일반	'18.1 / '16~'27	1,528	· 주변지역을 산단에 편입시켜 교통체계 효율화 및 부족한 산업공간 추가 확보하고 혁신역량 강화	· 시행계획 수립중
성서1·2	'18.3 / '16~'20	4,938	· 교통·물류기반 확충, 유망산업 등의 집적화를 통해 지역경제 혁신거점으로 육성	· 시행계획 수립중
서울온수	'18.상 / '16~'25	158	· 제조업 기반의 기술(ICT) 융합형 산업단지(Industry 4.0)로의 점진적 고도화	· 재생계획 수립중
순천일반	'18.상 / '16~'20	582	· Green Network 구축 사업과 住·商·工 거점 개발을 연계하여 산단 활력 증대	· 재생계획 수립중
대구염색	'18.상 / '16~'21	893	· 염색업체 집적화 및 공동시설(물류센터, 발전소, 폐수처리장) 확충을 통해 염색산업 첨단화	· 재생계획 수립중
【 4차 지구 】				
천안일반2	'18.하 / '17~'22	823	· 진입도로 확장 등 재생사업과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구조고도화사업으로 경쟁력 강화	· 재생계획 수립중
원주문막	'18.하 / '17~'28	410	· 산단주변 도로정비 및 주차장 개선, 어린이집 등 지원시설 설치 등으로 근로환경 개선	· 재생계획 수립중

명칭	지구지정/조성기간	규모(천㎡)	주요 사업 내용(안)	비고
【1차 지구】				
여수오천	'18.하 / '17~'23	220	· 산단도로 확장, 체육시설,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 재생계획 수립중
시화국가	'18.하 / '17~'22	16,121	· 차로정비, 주차빌딩 설치, 소공원설치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	· 재생계획 수립중

표 2-2-30 산업단지 재생사업 절차도





2. 입주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정주여건 조성

(1)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

2017년도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남동국가산업단지, 부평주안국가산업단지, 성서일반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의 유희부지에 산업통상자원부 재원(600억원)을 시드머니로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총 3,378억원(민간 2,778억원)의 신규투자를 창출하였다. 이로써 7년간(2011~2017년) 정부예산 2,010억원을 마중물로 근로자용 지식산업센터 및 기숙사, 근로자 오피스텔, 복합시설(지식산업센터+복지·편의시설(업무, 문화집회, 근생)) 등 16개 사업에 총 9,699억원의 펀드재원을 조성하여 투자 중에 있다. 펀드사업으로 투자 중인 시설들은 산업단지 입주 희망업체에 대한 입지 제공 및 근로자들의 근로·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도부터 창업R&D시험인증 등 혁신지원기관을 산업단지 내로 집적화하여 지원중인 혁신지원센터사업은 부평, 창원, 대불, 여수, 양산, 하남의 6개 산업단지에 산업통상자원부 출연금 240억원(각 센터별 40억원/3차년도 사업)에 지방·민간비 등의 매칭자금(304억원) 등 총 504억원 규모의 지원중에 있다. 동 사업은 지역별 특화산업의 육성과 기업성장 지원 등을 통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업종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단지 내 부족한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해 추진한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2014~2015년)은 서울디지털 및 창원, 대불, 반월시화, 구미,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근로자 기숙사 7개와 주차장 확충 및 교통체계 개선 3개 등 총 10개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 출연금 165억원에 지방·민간비 등 333억원을 매칭하여 총 498억원 규모로 추진중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산업단지 내로 청년 인력의 취업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경쟁력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부 부처별 산업단지 지원 사업들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합동공모방식으로 지원 중에 있다. 2017년도에는 39개 산단(43건)에 4개 부처(고용부, 산업부, 국토부, 문체부) 9개

사업(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산재예방시설,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등)으로 국비 110억원을 지원하였다.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의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가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청년 친화형 공간으로 재탄생되고, 혁신적인 기업입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2-2-31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사업 추진 현황

구 분	산업단지	총 투자액(정부 투자금)	투자 대상
2011년	반 월	606억원(150억원)	호텔 및 오피스텔
2012년	시 화	394억원(160억원)	PCB·도금업종 집적화공장
2013년	창 원	428억원(100억원)	근로자 오피스텔
2014년	구 미	580억원(130억원)	근로자 오피스텔
2015년	시 화	521억원(100억원)	근로자 오피스텔
	부 평	512억원(85억원)	공장, 업무시설 등 복합시설
	성 서	461억원(85억원)	지식산업센터 및 기숙사
2016년	창 원	909억원(150억원)	복합지식산업센터
	익 산	554억원(220억원)	지식산업센터, 호텔&컨벤션
	남 동	522억원(80억원)	복합지식산업센터
	청 주	834억원(150억원)	복합지식산업센터
2017년	여 수	350억원(100억원)	유류·가스저장탱크 등
	성 서	604억원(150억원)	지식산업센터 및 기숙사
	창 원	492억원(150억원)	복합문화센터
	남 동	1,541억원(130억원)	지식산업센터
	주 안	391억원(70억원)	지식산업센터
소 계		9,699억원(2,010억원)	16개 사업

(2) 종합비즈니스센터

최근 들어 산업생산 패러다임의 변화로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산업환경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으나, 1980년대 이전에 조성되어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생산기능 위주의 단순 공업집적지에 불과해 기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단지 내에서 제공받기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는 기업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기능을 개별 기업들이 자체적으

로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생활의 편리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산업단지 내의 후생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산업단지 근로자 이·퇴직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입주기업의 인력난 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문화복지기능 확충을 통해 근로 불안요소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산단 내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쾌적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업지원 서비스,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목적 복합시설인 종합비즈니스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센터의 기능상 공공서비스, 창업보육, 시험·연구시설, 회의장 등 기업지원을 위한 비수익성 사업이 대부분으로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공익성을 감안하여 최소범위에서의 정부 자본보조를 센터 당 40억원 정액으로 자치단체 지원과 자치단체 지방비 40억원이상 1:1매칭을 통해 센터 당 총사업비가 최소 80억원 이상 200억원 내외 규모로 건립하여 자치단체가 운영한다.

종합비즈니스센터는 표준모델을 준용하여 기업지원 및 문화복지시설 등을 조성한다. 산단 내에 부족한 기업지원기관, 편의시설 입주, 회의공간 마련 등으로 해당 산업단지 내에 기업 및 근로자 지원 기능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표 2-2-32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표준모델

구 분		내 용
공공시설	컨벤션	· 국제회의장, 세미나실, 전시·홍보관
	창업·R&D, 교육·연수	· BI, 기업연구소, 유아보육시설, 근로자지원센터 등
	주차장	· 주차장
기업지원시설	공공서비스	· 출입국, 환경, 노동사무소, 중진공 등
	컨설팅 서비스	· 법무사, 세무사, 공증인, 회계사 등
	지식기반 서비스	· 정보통신서비스, SW, 전자상거래, 광고 등
문화복지시설	숙박시설	· 게스트하우스
	체육문화	· 피트니스, 수영장, 공연장
상업시설	금융 등	· 은행, 증권사, 보험사, 창투사
	근린시설	· 스카이라운지, 구내식당, 레스토랑, 매점 등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인천, 구미, 시화, 대구, 군산, 김해, 청주, 울산, 광

주, 익산 10개 센터가 완공되어 운영중이며, 2018년 5월 제주 센터 완공을 끝으로 총 11개 센터가 건립되어 사업이 종료된다.

표 2-2-33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

(단위 : 억원)

종합비즈니스센터 (국비/지방비/민간)		'07~'11	'12	'13	'14	'15	'16	'17	계	비고
		185	43.5	46.5	57	29	39	40	440	
인천	370(40/330/0)	40	-	-	-	-	-	-	40	준공
구미	87(40/47/0)	40	-	-	-	-	-	-	40	준공
시화	231(40/90/101)	40	-	-	-	-	-	-	40	준공
성서	196(40/49/107)	40	-	-	-	-	-	-	40	준공
군산	180(40/140/0)	25	13.5	1.5	-	-	-	-	40	준공
김해	313(40/273/0)	-	20	20	-	-	-	-	40	준공
청주	125(40/40/45)	-	10	5	25	-	-	-	40	준공
울산	120(40/80/0)	-	-	10	15	15	-	-	40	준공
광주	80(40/40/0)	-	-	-	5	6	29	-	40	준공
익산	175(40/40/95)	-	-	10	7	1	5	17	40	준공
제주	113(40/40/33)	-	-	-	5	7	5	23	40	공사중

(3)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 및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1997년부터 국가산업단지 및 50만㎡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진입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2005년부터 산업용지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고지원 대상을 국가산업단지 및 30만㎡ 이상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1997년 사업에 착수한 이후 2016년까지 총 176건, 540km를 완료하였고, 2017년에는 3,821억원을 투자해 65건, 100km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표 2-2-34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단위: 억달러)

구 분	2014까지	2015	2016	2017	총계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80,716	7,961	4,948	3,821	97,446

(4) 지역거점조성지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역거점조성지원사업은 국가경쟁력 높이기(10%) 일환으로 지방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 사업비를 국고로 지원하여 산업단지 분양가를 인하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인 용수공급시설(용수공급관로, 배수지, 정수장 등)을 1998년부터 국고로 전액 지원하여 설치중이며, 사업시행은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2017년까지 171개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도건설지원(국고지원 11,656억원)을 하였고, 2018년에는 41개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도건설지원(국고지원 581억원)을 추진 중이다.

표 2-2-35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지원단지수	사업비	누계사업비
1998	9	15,500	15,500
1999	12	21,383	36,883
2000	10	21,383	58,266
2001	11	20,641	78,907
2002	7	1,898	80,805
2003	8	6,775	87,580
2004	8	10,742	98,322
2005	10	15,970	114,292
2006	11	37,180	151,472
2007	12	34,320	185,792
2008	16	47,064	232,856
2009	22	50,684	283,540
2010	49	101,234	384,774
2011	63	155,971	540,754
2012	68	135,708	676,453
2013	64	119,134	795,587
2014	51	106,563	902,150
2015	51	89,065	991,215
2016	44	87,616	1,078,831
2017	39	86,764	1,165,595
2018	41	58,090	1,223,685

(5)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사업은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시설물(배수지 및 배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공업용수를 제공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시설물 설치 시 지역 내 자재·장비·인력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본격적인 입주가 예상되는 산업단지 준공(2018년) 전 공업용수도 건설을 완료하기 위해 2013년 사업을 착수한 이후 2015년에 배수관로(2.5km)를 우선 완료하였으며, 2017년에는 배수지 1개소($V=32,000\text{m}^3$)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표 2-2-36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연차별 사업비(국고)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13년	2014년	2015년	2015년	2017년	2018년
예산	239	54	35	40	50	36	25

제4절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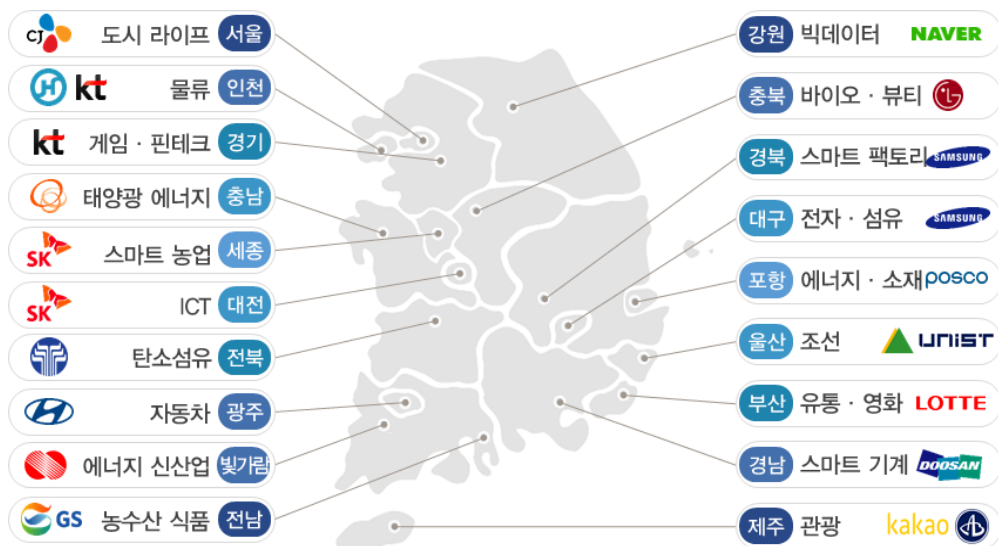
1.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지역 확산

(1)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가 구축되었다. 이전에도 민·관이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창업 기반을 확대해 왔으나,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되기 위한 지역별 창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했다. 또한, 그간 지역에서의 꾸준한 투자를 통해 갖추어진 지역 혁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발전 모델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의 부족한 역량 보완을 위해 생산·마케팅 역량과 자금·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지역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촉매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었다.

2015년 1월에는 민간자율형 혁신센터 모델이 기획되어 포스코가 참여하는 에너지, 환경, 소재 분야의 혁신거점으로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을 개시하였다.

그림 2-2-17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현황



혁신센터는 대기업·중소기업·창업기업 간 유기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지역유관기관·지역주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 사업화·창업 및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 허브로서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또한, 혁신센터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청년일자리 매칭 등을 지원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매김하였다. 또한, 모든 지역별로 창업생태계 및 지역 혁신의 거점이 마련되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혁신센터를 방문하여 상품 개발에서부터 투자지원, 판로개척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10월에는 혁신센터의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플랫폼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주요 특화기능 강화, 대규모 창업거점 구축, 전담기업 체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센터 맞춤형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특화 기능별로는 부산·충남센터를 중심으로 혁신센터 상품에 대한 국내 판매에서 해외 수출까지 국내외 종합 판로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동 상품발굴, 국내외 판로 개척 다양화 등을 지원하고, 경기센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다. 대규모 창업거점 구축을 위해 서울은 민간 창업지원과 연계·협업, 경기도는 판교창조경제벨리의 중심 거점 기관화, 대구는 옛 제일모직 부지에 건설된 ‘(가칭)대구삼성창조캠퍼스’를 활용한 대규모 창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권역별로 창업 거점화한다는 내용이다.

전담기업 체제 강화를 위해 인천센터에 KT(2016년 12월), 울산센터에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2016년 12월)을 전담기관으로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였다. 2017년 2월에는 한국전력이 참여하는 두 번째 민간 자율형 혁신센터로 전남 나주에 에너지신산업 분야 혁신거점인 ‘빛가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였다.

2017년 말 기준, 혁신센터는 5,859개에 달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여 7,736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창출하였고, 2018년 2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방성·자율성·다양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창업 정보와 아이디어가 교류하는 창업 놀이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을 재설계하였다.

2. 지역 R&D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1)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R&D)사업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舊 지역기술혁신사업)은 지역간 연구인프라 격차 해소 및 지역 국토교통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이다. 동 사업 내 지역의 자연재해, 기후변화, 환경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의 낙후된 국토교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2005년~2015년) 및 지역 내 국토교통분야 현안 발굴, 전문인력 양성, 연구 네트워크 구축, 연구성과 홍보,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의 국토교통 R&D 허브” 구축을 위한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분야(2013년~현재)로 구성하여 추진되었다.

표 2-2-37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분야별 지원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분 야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지역특화기술개발	52,766	3,864	1,310	-	-	-	57,940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1,104	4,136	6,572	8,670	8,163	14,648	43,293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 579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였다. 동 분야에서 2014~2015년 기간 중 3개 과제를 통하여 특허 등록 19건 및 석/박사 학위취득자 31명을 배출하여 지역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였으며,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 중 유일하게 ‘우수’ 등급(2015년 5월)을 획득하여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는 2015년도 최종지원을 끝으로 2016년도에 종료되었으며, 이후 지역에 특화된 국토교통 기술개발은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분야를 통하여 추진되었다.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는 강원권·동남권·충청권·대경권·제주권·호남권 등 수도권권을 제외한 전국 6대 권역에서 운영중으로, 권역별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에서는 지역의 산업발전과 연계한 특성화주제를 발굴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지

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8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장기계속사업 일몰제 적용으로 2019년도 사업 일몰이 확정되어 2020년 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표 2-2-38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운영 현황

착수연도	구분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2013년	강원권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강현찬
	동남권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윤경구
	충청권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박형근
2014년	대경권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화중
	제주권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고기원
	호남권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영상

2014년~2017년 중 학술지게재 논문, 특허 등급, 기술사업화효과 등 사업 성과목표를 대체로 상회하여 달성하였으며, 특히 연구성과 지역활용·적용 및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사업 성과목표의 최근 4년간 달성도는 연평균 120%로,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의 실제적 활용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성과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국토교통 R&D 우수성과”에 꾸준히 선정되는 등 지역 현안해결 관련 다양한 분야의 우수성과를 창출하여 왔다.

특히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의 “높은 파도에 따른 해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중 구조물 개발” 과제에서 개발된 인공리프 기술은 속초·양양 연안정비사업의 설계에 시범 적용되어 약 3.1억의 현장적용 비용절감 효과를 창출하였고, 강원권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에서 개발한 기후대응형 기능성 콘크리트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 트랙 건설에 적용(2015년 2월)된 바 있다.

그밖에도 동남권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건설재료 개발, 충청권 수재생 지하저류조를 이용한 스마트 관수 공급시스템 개발, 대경권 하이테크 섬유를 접목한 건설재료 개발, 제주권 지질주상도 작성매뉴얼 및 제주도 하천의 홍수범람 예측 자동화 기술 개발, 호남권의 새만금 지역 기후변화로 인한 수재해 대응 기술 개발 등 각 권역별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표 2-2-39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국토교통 R&D 우수성과 선정 현황(2014~2017년)

선정년 도	분야명	성과명	연구기관(연구책임자)
2015년 (3개)	지역특화기술 개발	높은 파도에 따른 해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중 구조물 개발	경북대학교(김화중)
		수해양 문화 공간을 위한 정주형 플로팅건축 설계기술	군산대학교(문창호)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산악지역 기능성 콘크리트 적용 기술 개발	강원대학교(윤경구)
2016년 (2개)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수재생 지하저류조를 이용한 스마트 관수공급시스템 개발	충북대학교(박형근)
		지역소도시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센서기술 기반 차량/인명상호인식 기술 개발 및 현장적용	충남대학교(이민재)
		Bottom Ash의 미연탄소 에너지화 및 친환경 건설재료 생산 시스템 개발	동아대학교(강현찬)
2017년 (4개)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지열시스템용 고열전도·고유동성 속채움재 개발	전남대학교(김영상)
		수재생 지하 저류조를 이용한 스마트 관수공급시스템 개발	충북대학교(박형근)
		지역소도시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센서기술 기반 차량·인명 상호인식 기술 개발	충남대학교(이민재)

(2) 중입자 가속기 기술개발(한국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는 중이온(헬륨, 탄소, 질소, 우라늄 등)을 전자기 힘으로 가속하는 장치로서 핵물리, 전자, 생명과학 등의 접목에 의한 융합기술 분야로 의료용, 분석용, 연구용 및 산업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중입자가속기 개발은 선진국 중에서도 일부만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는 첨단 기술로서 원자력의 의료적 응용분야인 암 치료에 적용하여 국민에게 의료 혜택과 국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기술이다. 중입자가속기의 암 치료는 헬륨, 탄소 등 무거운 원소의 원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한 뒤 그 에너지 빔을 암세포에 조사(照査)하는 치료기기이다.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은 430MeV/u 규모의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개발 및 중입자치료시스템을 통합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개발을 통해 난치성 암(두경부암, 폐암, 간암 등 8대암)을 치료하여 암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세계적 증가 추세인 암환자의 국내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의료산업 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난치성 암환자에 대한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와 부산시가 2010년부터 주관기관이 750억원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부산시 기장군에 중입자가속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본사업은 주관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분담금 미확보 문제로 2016년 8월부터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가 진행중이다. 2017년 9월에는 중입자가속기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서울대병원, 부산시 등 관계기관이 MOU를 체결하여 주관 기관 분담금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서울대병원 참여로 주관기관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완료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주관기관 변경하여 사업정상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중입자가속기의 핵심장치인 이온발생장치(ECR)의 빔인출 테스트를 완료한 후 2016년도에 부산 기장 현장으로 이전 설치하였다. 또한 저에너지부터 고에너지까지의 빔 수송 라인에 필요한 다양한 빔 진단 장치 중 주요 항목에 대한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중입자치료시스템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주요연구개발 결과, 로봇치료대,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 실시간 빔 모니터링 등 치료시스템의 시제품 개발과 각 시스템의 통합연계성에 관한 연구 성과를 확보하였다. 2016년도에는 중입자치료센터를 완공하였으며 2017년에는 중입자치료센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향후 중입자치료센터 성공적 개원을 목표로 중입자가속기 및 치료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난치성 암치료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2-40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 지원현황(2104~2018년)

(단위: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10~'17)		165.5	60	-	-		225.5
중입자가속기구축지원('18~'20)		-	-	-	-	24	24
사업비 구분	국비	64.5	30	-	-	24	118.5
	지방비	101	30	-	-	-	131

표 2-2-41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 주요 성과 (논문 및 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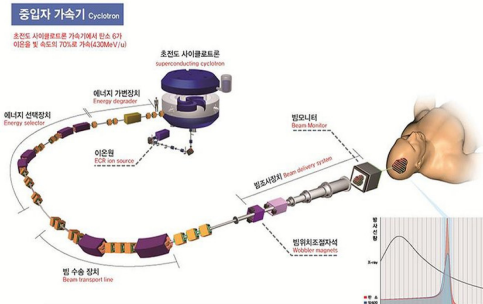
(단위: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계
논문	SCI	1	3	3	4	4	9	24
	비SCI	4	8	8	7	13	6	46
	계	5	11	11	11	17	15	70
특허	출원	-	1	1	-	10	-	12
	등록	-	-	-	-	-	5	5
	계	-	1	1	-	10	5	17

그림 2-2-18 증업자가속기구축지원사업 주요 성과 (장치 및 시설)



< 치료센터 전경 >



< 중입자가속기 치료 시스템 >

(3)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한국원자력연구원)

최근 국내 의료 및 산업분야의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은 매년 증가(환자 치료 10%, 산업분야 20%)하고 있으나,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수입은 세계 생산 연구로의 노후화로 인해 수입단가 상승, 수입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로 해외수출(요르단 JRTR)을 계기로 해외 연구로 노후화(전세계 연구로 65%)로 형성될 연구로 수출시장 진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은 의료 방사성동위원소(Mo-99)의 안정적 국내 공급과 해외 수출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로의 실증 건설을 통해 연구로 수출 추진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사업지인 부산 기장군 동남권 과학단지를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활용, 대전력반도체 연관 연구 및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2010년 전국 지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부지를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2012년 4월에 사업 착수하였다. 2015년 3월에 신형연구로 계통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11월 사업 규모의 객관성과 효율성 확보 위한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착수하여 2017년 9월 완료하였다. 현재 규제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요구한 경주 및 포항지진에 대한 지진안전성 평가보고서를 2018년 4월 제출하였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 심의를 거쳐 2018년 내 건설허가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4월 세계최초로 U-Mo(우라늄 몰리브덴) 판형 핵연료집합체의 조사시험에 성공하였다. 이는 국내 개발 신형연구로(수출용신형연구로)의 핵연료를 미국의 고성능 연구로 ATR에서 국제검증시험으로 성능과 건전성을 확인하는 성과였다. 핵연료 조사 시험에서 획득한 결과는 수행되고 있는 조사후시험의 결과와 함께, 수출용신형연구로의 인허가 취득용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4)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 실증연구센터 지원(한국원자력연구원)

제1차 방사선진흥계획('12 ~ '16) 수립에 따라 방사선산업단지의 운영 활성화 및 방사선 기술의 실용화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대단위다목적 전자선실증연구센터 구축이 기획되었다. 대단위다목적 전자선실증연구센터 사업은 국가 방사선융합 원천기술의 개발성과를 바탕으로 시제품제작·가공·조립·성능시험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제품의 신뢰성 및 질적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연구센터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자선 가속기는 그 에너지에 따라 고·중·저에너지로 구분되며 각 에너지별로 재료에 대한 투과력이 달라 그 에너지 범위에 맞는 각기 다른 연구영역 및 산업 적용분야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전자선 가속기 구축을 통해 기업체 맞춤형 실증 연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2014년 6월에 착수하여 전자선실증연구센터 건물의 기본설계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 12월 핵심장비인 10MeV 전자선발생장치 계약완료, 2016년 6월 건물 상세설계완료 및 7월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10월에 건설공사 착공을 하였다. 2016년 6월에 2.5MeV 전자선 발생장치 제작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및 2016년 12월에 대형 조사채이송 및 조사공정을 위한 자동화설비 제작을 착수하였다. 2017년 12월에 10MeV, 2.5MeV 전자선발생장치 등의 제작이 완료되어 시설·장비구축을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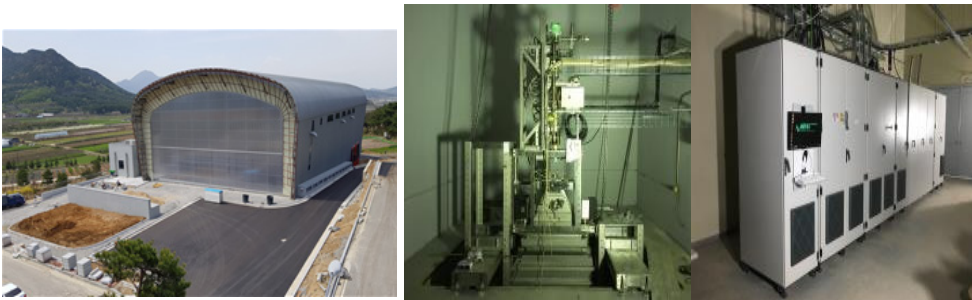
2018년까지 전자선 실증연구센터 건설과 전자선 조사시설 구축 완료를 목표로 2017년에는 기초콘크리트 공사와 철골구조물 공사, 차폐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허가 획득 및 조사시설인 10Mev, 2.5Mev 전자선가속기를 설치 완료하였다. 본 센터의 건설로 복합공정 설계 및 대형 이송장치 구축으로 대형구조물 처리가 가능하고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기업체의 방사선융합기술 사업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래 산업 수요를 고려한 부품소재의 양상 가능성을 실증하여 기술이전 및 방사선기술의 전략적 조기 산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42 대단위다목적 전자선실증연구센터 지원현황(2104~2018년)

(단위: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대단위다목적 전자선실증연구센터	국비	10	25	25	35	35	130
	지방비	-	-	-	60	-	60
소계		10	25	25	95	35	190

그림 2-2-19 대단위다목적전자선실증연구센터 주요 성과(2017년)



< 전자선실증연구센터 전경 >

< 10MeV 전자선가속기 시스템 >

(5) 제조업 ICT융합지원동 건립(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 지역은 자동차, 기계, IT, 전자부품 등 국가 주력산업 부품 소재의 최대공급기지로 제조업 육성의 최적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월 생산액 2.3조원(2013년 11월)으로

전국 52개 산업공단 중 7위이며, 지역전체 산업생산금액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1만명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으며, 반월(17만명), 서울디지털(16만명)에 이어 전국 공단지역 중 3위의 높은 고용 현황을 나타내는 등 일자리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기존 제조업은 기계화, 자동화, 집중화로 성장하였으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제조업의 서비스화, 디지털화로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첨단제품 및 부품 제조기업이 밀집된 시화·반월공단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으로의 진화를 지원하는 제조업 ICT융합지원동 건립을 추진하고, 이후 생산방안 최적화, 공정장비 고도화, 에너지 사용 효율화, 생산공정 모니터링을 중점으로 지원활동을 전개해 중소제조기업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노동생산성 및 자원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그림 2-2-20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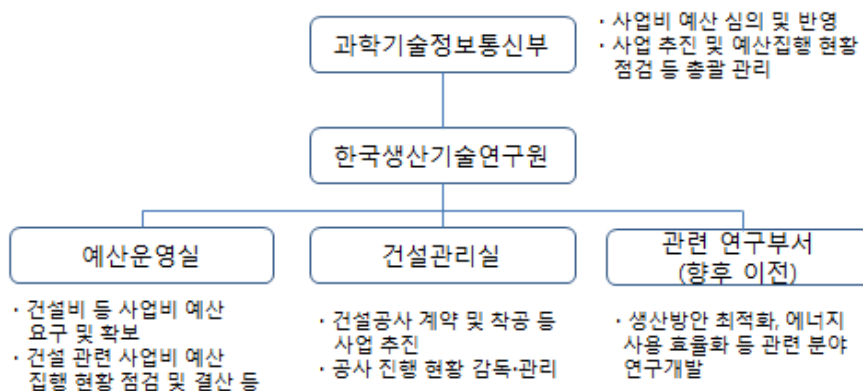


표 2-2-43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성 과 지 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달성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제조업 ICT융합지원동 건립사업 공정률	예산 총액대비 집행률	목표	-	5	22	100
		실적	-	5	22	100
		달성률	-	100	100	100

800여개의 에너지 과소비형 기업에 에너지 절감형 공정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연간 1,000억 원의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8천여 기업 대상기업 중 20%인 1,600여개 기업에 대해 ICT융합화를 지원해 800억원의 경제효과 달성이 기대된다.

(6) 광주바이오에너지연구센터 지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표 2-2-44 추진성과

구 분	2015	2016	2017	2018
광주바이오에너지연구센터 공정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설계 완료('15. 6) ○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15. 12) *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발주 및 착공('16. 6) ○ 기초·지하층 철근콘크리트 공사('16. 12) (공정율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조공사('17. 2) ○ 외장·유리 공사('17. 6) ○ 준공('17. 10) (공정율 100%) 	-

광주지역 선도사업으로서 에너지저장 및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과 산업클러스터 R&D 중핵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을 사업 목표로 하였다.

2012년 06월 설립계획 승인을 승인받고, 2013년 07월 광주 지역조직 사업부지 확정 후, 2014년 03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년 06월 공사에 착공하여 2017년 10월 준공 후 2018년 03월 개소식을 가졌다.

동 사업은 이·불용 없이 2013~2017년 출연금 전액(132억원) 교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당초 추진계획에 따라 건설계획 수립 및 설계 → 공사발주 및 계약, 착공 → 준공(2017년 10월)을 통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였다.

광주 바이오에너지연구센터의 개소에 따라 향후에는 에너지저장 및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원천·핵심기술개발 및 산업화기술개발을 통해 광주지역의 차세대 그린에너지산업 선도에 기여할 것이며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수행을 통해 에너지저장 및 바이오에너지 분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 인력양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의 효과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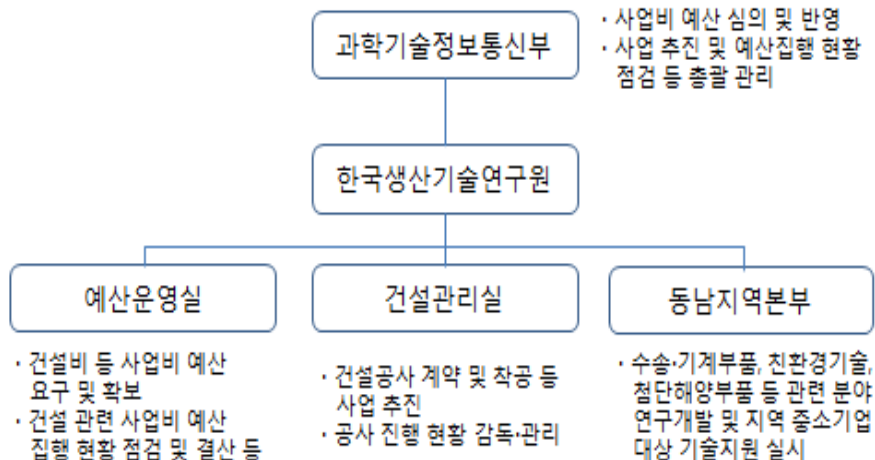
또한 광주 바이오에너지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산·학·연이 연계된 기술분야 파급 효과 기대, 국내·외 에너지정책의 대응기반을 마련함으로써 2042년까지 생산유발효과 2,504.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55.1억원, 고용유발효과 1,524명 예상된다.

(7) 부산동남권지역본부이전(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산 동남권역의 2009년 제조업체 수는 11,144(19.2%)개, 출하액은 323조(28.8%)로 수도권에 이어 국내 2번째로 큰 산업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으나, 이를 지원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2개에 불과하여 제조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동남권 제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뿌리산업의 육성과 미래산업을 리딩선도하기 위하여 동남권 지역연구본부 설립·이전이 필요하다.

동남권지역내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R&D전문연구기관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수송기계부품, 친환경청정기술, 첨단해양부품 등 지역특화산업 관련 지역기업체의 R&D지원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한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본부의 설립(규모 확대) 및 이전을 추진하였다.

그림 2-2-21 사업 추진체계



사업기간은 총 6년(2012년 1월 ~ 2017년12월)으로 부지조성공사(2014년4월 ~ 2015년5월), 건축공사(2015년6월 ~ 2017년7월)를 거쳐 신청사 사용승인(2017년 8월1일) 후 동남권 지역연구본부 이전을 완료하였다.

표 2-2-45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달성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부산동남권지역 본부 이전사업 공정률	예산 총액대비 집행률	목표	-	20	62.1	100
		실적	-	20	62.1	100
		달성률	-	100	100	100

부산동남권 지역본부는 수송기계·융합부품·친환경청정기술·첨단해양부품등의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향상하고 미래성장산업으로의 변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전략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매년 5%의 제조업성장과 5조이상의 매출증대효과가 예상되며, 매년 200억 이상의 연구비 투자로 인한 5년간 총 3,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1,000명의 간접적인 고용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동남권지역본부를 거점으로 부산권, 울산권, 창원·거제권, 서부경남권 등과 단계적 교류 확대로 동남광역경제권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8) 광주전력변환연구시험센터 지원(한국전기연구원)

표 2-2-46 추진성과

구분	2015	2016	2017	2018
광주전력변환연구 시험센터 지원사업 공정율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승인('15.10) ○ 그린벨트 해제 및 산업단지 조건부 승인('15.12)	○ 도시첨단 산업단지 실사계획 승인('16.09) ○ 설립승인(65회 이상)회 및 설계용도 신청·조달청('16.12)	○ 전기연구광주시 간 부지사용 대부협약 체결('17.07) ○ 총사업기간 연장 승인(기재부, '17.10) ○ 기본설계 완료('17.12)	○ 실시설계 완료('18.03)

사업목적은 한국전기연구원의 핵심기술을 이용하여 대전력 중전기 분야 연관 산업 육성 및 국내외 기업유치 기반 구축과 대용량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 등 관련 산업 육성이다.

사업기간은 2015 ~2019년(5년)이며, 2013년 06월 광주지역조직 설립계획 승인(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받은 후 2014년 09월 광주시와 광주지역조직 설립 협약서가 체결되었고, 2015년 10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승인(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되었다. 2015년 12월 그린벨트 해제 및 산업단지 조건부 승인(국토부)후 2016년 9월 도시첨단 산업단지 실시계획이 승인(국토부 고시 제2016-630호)되었다. 2017년 7월 전기연-광주시 간 부지사용 대부협약 체결된 후 2017년 12월 기본설계 완료되고, 2018년 03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

그동안 이월액 및 불용액 없이 2015~2017년 출연금을 전액 교부하여(약 35억원)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이 건축설계 및 공사발주 계약 등 계획된 공정을 차질 없이 수행 하였다.

향후 2018년 말까지 출연금 2,507백만원 교부 예정이며 연내 전액 집행될 예정이다. 광주전력변환연구시험센터는 2019년 8월 완공예정인바, 완공 후에는 광주 산업의 생산 파급효과 187.01억원, 수입파급효과 7.94억원, 부가가치 파급효과 84.40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9) 제주분원 설치(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에서는 「2014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제주지역에서는 건강뷰티소재 산업, 천연자원 가공산업, 풍력·전기차 서비스 산업, 문화디지털컨텐츠 산업 등 4개의 지역특화산업 및 17개의 세부산업 등 145억 예산을 투자하여 해당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그런데 2011년도 기준으로 제주도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 18.1%(전국 2.7%), 2차 산업 3.9%(전국 31.6%), 3차 산업 22.0%(전국 65.7%)으로 제조산업 기반이 매우 열악하다. 실제로 제주지역에는 제조관련 R&D 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며, 지역의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R&D 및 관련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R&D 전문 연구기관이 설립이 되지 않을 경우, 국가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육성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당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제주지역의 제조산업 기반 조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각 분야의 경쟁력 있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본부를 설립·운영해 제조기반이 미흡해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제주지역의 미래제조혁신산업 기반 연구지원 및 지역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림 2-2-22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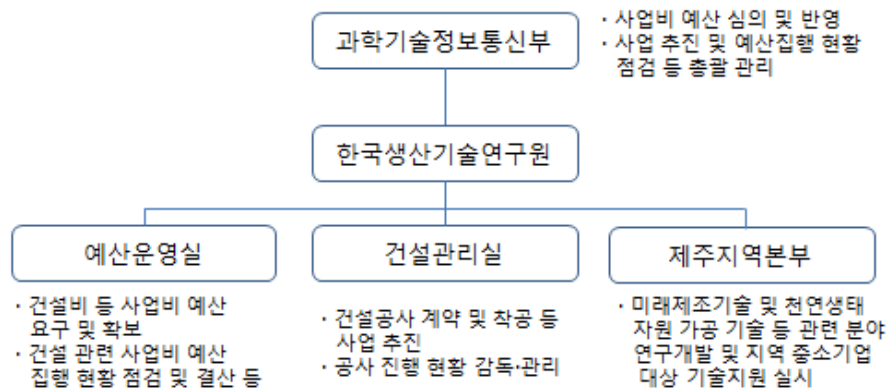


표 2-2-47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성 과 지 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달성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분원 설치 공정률	예산 총액대비 집행률	목표	-	3.8	20.8	35
		실적	-	3.8	20.8	35
		달성률	-	100	100	100

제주 분원 설립을 통해 제주지역의 신성장동력원 육성(천연생태자원 가공 및 기능성 제품 생산고도화, 해수활용 핵심기술 등)과 중소기업체 기술실용화 지원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유발효과 122,751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6,785백만원, 취업유발효과 851명, 좋은 일자리 연간 500개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 기업의 아이디어 및 기술기반 창업 촉진을 위해 시도별로 구축되어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 실증 등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기획 및 지원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표 2-2-48 지역별 전략산업

지역	전략산업	지역	전략산업
대구	① 자율주행 자동차 ② IoT 기반 헬스산업	경남	① 지능형기계 ② 항공산업
대전	① 첨단센서 ② 유전자약	강원	① 스마트 헬스케어 ② 관광
전북	① 탄소산업 ② 농생명	충남	① 태양광 ②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경북	① 스마트기기 ② 타이타늄	전남	① 에너지신산업 ② 드론(무인기)
광주	① 친환경자동차 ② 에너지신산업	제주	① 스마트관광 ② 전기차인프라
충북	① 바이오의약 ② 화장품	세종	① 에너지 IoT
부산	① 해양관광 ②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울산	① 친환경자동차 ② 3D 프린팅

주 : 밑줄은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사업과 연관된 산업(2개중 1개 이상 연계)

동 사업은 2017년 7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소관부처가舊미래창조과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 바 있으나,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전략산업분야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시제품 고도화 등 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되 창업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모델개발, 권리화 지원, 시장검증까지 병행지원하고 있다.

신규사업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2017년 지역의 창업·혁신기업 총 164사를 발굴·지원하였다. 이러한 결과 신규고용(34개사, 67명), 매출증가(2016년 대비 19%), 투자유치(3개사, 6.4억원)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산업육성사업 체계 개편과 연계한 사업 효율화 등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지역의 창업·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계획 중이다.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 구축 및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고, 세부 내역사업은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및 건립, 중이온가속기 구축, 거점지구 조성 및 기능지구 지원 등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및 건립의 경우, 기초과학연구원은 기존 대학이나 출연(연)이 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기초과학 연구를 장기적·안정적으로 수행하여 새로운 과학지식을 창출하기 위해 설립한 국내 유일의 기초과학 전담 연구기관이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2012년 5월, 1차 연구단장 선정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28개의 기초과학 분야 연구단을 선정하여 구성·운영 중으로, 세계 최고 1% 과학자 250명(누계) 등 세계 정상급 과학자들의 연구 참여, 수월성 중심의 질적 평가 원칙 등을 바탕으로 논문 피인용, Nature Index 등 논문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에서 세계 수준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표 2-2-49 논문 질적 우수성 관련 지표별 실적(2017년 기준)

구 분	인용영향력	전체 논문대비 고피인용논문 비중	논문1편당 피인용수	피인용 논문 비중
기초과학연구원(한국)	1.88	7.70%	13.6	79.2%
막스플랑크(독일)	1.87	4.62%	14.3	77.3%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미국)	1.87	5.32%	15.7	75.3%
이화학연구소(일본)	1.44	3.50%	11.6	72.8%
서울대(한국)	1.32	1.82%	7.2	63.9%

주 : 인용영향력은 논문당 인용수를 주제분야, 출판연도, 논문종류를 고려해 정규화한 값으로 1이 세계평균을 의미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Nature Index 순위 (기초과학연구원)	500위 미만	426위	244위	209위	175위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적 과학저널인 Nature가 선정한 ‘세계 100대 떠오르는 별’ (지난 4년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100대 연구기관) 중 11위에 선정(2016년 7월) 되는 등 기초과학연구원의 빠른 성장이 세계적으로 집중 받고 있다.

또한, 독일 막스플랑크, 영국 왕립학회, 일본 이화학연구소 등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연구교류 정례화, IBS 컨퍼런스 개최(2016년 6회 개최, 국내외 연구자 1,200여명 참석 / 2017년 6회 개최, 국내외 연구자 1,250여명 참석)를 통해 해외 석학들과 국내 기초연구계를 연계하는 지식 교류와 확산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Nature 특별판 ‘Science Cities’ 에서 대전을 세계 10대 과학도시로 소개하며 기초과학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대전 엑스포의 영광을 재현하려 한다고 분석하는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글로벌 기초연구 거점으로서 국제적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 건립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차세대 연구리더 육성기반 구축, 국내외 우수한 연구인력 유치 등을 위하여 2017년 12월 본원 1차 건립공사가 준공되어 현재 기초과학연구원이 입주하였고 2018년 4월 개원식을 진행하였다.

부지 문제로 공사 지연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3년 (구)미래부와 대전시 MoU를 통해 대전시에서 구)엑스포 과학공원을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로 무상 제공하기로 합의되었고, 이후 기초과학연구원 건립사업 중 1단계인 본원 1차에 대해 2015년 실시설계 완료, 2016년 6월 착공 및 2017년 12월 준공하였다. 2018년 현재 캠퍼스 연구단(KAIST 연합, POSTECH) 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단계 건립사업을 추진 예정이다.

둘째, 중이온가속기 구축의 경우, 과학벨트의 핵심 거대연구시설인 중이온가속기 구축을 위해 2011년 12월 기초과학연구원 내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을 구성하고 2012년 1월 수립된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가속기 구축에 착수하였다. 이후, 가속장치 및 실험장치의 개념설계를 시작으로 국제자문위 자문결과 등을 반영하여 상세설계를 완료(2013년 6월) 하였으며, 2014년 12월 중이온가속기의 핵심부품인 초전도가속관(QWR, HWR) 국산화 성공 및 2017년 12월 SCL Demo빔 인출 등 핵심 R&D 기술 확보를 바탕으로 2018년 현재 주요 핵심 장치 본 제품 제작 및 구매 발주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이온가속기 사업점검(어떡할래) TF’ 를 운영하여, 핵심장치 리스크 관리 및 사업 구조조정 등 2021년까

지 성공적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중이온가속기 시설건설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2014년 5월 「중이온가속기 시설건설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12월 중이온가속기 시설건설 기본설계 완료한 후 2017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9월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8월 시설건설공사 준공 예정이다.

셋째, 거점지구 조성 및 기능지구 지원 관련하여, 과학벨트 거점지구는 2011년 5월 대전 신동·둔곡·도룡(2013년 10월 추가) 지역을 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9월에 신동·둔곡지구 개발계획(2012년 11월 고시)을 변경·고시하고, 동년 12월에 실시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그 중 신동·둔곡지구는 중이온가속기를 중심으로 정주환경을 갖춘 글로벌 첨단연구·산업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2014년 12월 사업시행자로 LH공사를 선정하였고, 토지보상(2015년 4월~2016년 8월)을 완료하고, 2016년 1월부터 본격적인 개발 단계인 부지조성 및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시작하였다.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성공여부가 얼마나 많은 우수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여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산업으로 연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인식 하에, 2015년 6월 대전시, LH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기정통부(구, 미래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첨단기업·연구소 유치단을 발족하고, 유치 대상 우수 연구소·기업 발굴, 제도적 인센티브 등 지원방안 마련, 유치설명회, KTX 홍보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까지 2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과학벨트 거점지구 기반공사가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2017년 9월 우수한 첨단기업·연구소 선정에 필요한 입주심사 계획을 마련하고, 1차로 연구·산업용지의 첫 분양을 시작하였다. 분양 결과, 산업용지의 경우 약 6:1의 경쟁률(223개 기업)을 보이는 등 첫 분양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특히, 2017년 12월 223개 분양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재정능력, 사업계획, 기술력, 투기목적 여부 등을 종합적·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31개사를 거점지구 1차 입주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과학기반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업기반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학벨트 거점지구 기반공사는 2019년 12월 완료될 예정이며, 이에 맞추어 기업과 연구소도 2019년 12월부터 연구소 건물과 공장의 건립을 시작하여 2021년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거점지구의 기초연구활동을 배후 지원하고 기초과학 연구성과를 사업화하

고자 지정된 기능지구(천안, 청주, 세종)는 당초 목표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 및 특화 분야 중심의 공동연구개발,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 인력양성(PSM) 등 혁신역량 강화에 중점 지원하였다. 공동연구법인 및 대학 사업화 사업 결과 10건의 기술이전을 하였고 미국 PSM 협회로부터 PSM 프로그램 공식 인증을 획득(2017년 11월) 하였다. 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예비창업자 멘토링 및 사업계획 작성 등 컨설팅을 통해 전공기반 신규 창업(8건)을 지원하였다. 특히 기능지구 산학연 융합의 공간기반이 될 SB(Science-Biz) 플라자는 2016년 12월에 착공하여 2018년(세종·청주 7월, 천안 11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기능지구 기업·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R&D 지원(2017년 73억원) 등을 통해 과학기반 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12) 연구개발특구육성(R&D)

연구개발특구는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토대로 신산업을 창출하여 지역에 새로운 기업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2005년 지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대구연구개발특구, 2012년 부산연구개발특구 및 2015년 전북연구개발특구를 추가 지정하여 특구별 비교우위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확산,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도약, 일자리 창출, 국가·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과학기술역량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표 2-2-50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구 분	대덕특구	광주특구	대구특구	부산특구	전북특구
지정연도	2005년 7월	2011년 1월	2011년 1월	2012년 11월	2015년 8월
범 위	대전시 유성구·대덕구 일원	광주시 광산구·동구·북구 및 전남 장성군 일원	대구시 동구·북구·달서구 ·달성군 및 경북 경산시 일원	부산시 강서구·금정구·남 구·영도구·사하구 · 부산진구·연제구 일원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및 정읍시 일원
면 적	총 67.4km ²	총 18.7km ² (광주 15.0km ² , 장성 3.7km ²)	총 22.2km ² (대구 16.2km ² , 경산 6.0km ²) ·스마트 IT	총 14.1km ²	총 16.3km ²
특화분야	·IT 융복합 ·바이오메디컬 ·나노융복합 ·신재생에너지	·광기반 융복합 ·차세대전지 ·친환경 자동차 부품 ·스마트케어가전	·융합기기 ·의료용 융복합기기 ·그린에너지 융복합 ·메카트로닉스 융복합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조선해양플랜트기자 재 ·그린해양기계	·융복합소재부품 ·농생명융합

연구개발특구는 공공기술의 공급, 활용 측면에서 국가 R&D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추진하는데 최적화된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특구별로 집적화된 혁신자원을 활용, 공공 연구성과의 창업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은 특구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과 상호협력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창업을 지원하여 국가기술 혁신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특구법 제1조).

이를 위해 「연구성과 사업화 기반 미래성장 선도지역으로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i)특구 성장 환경 최적화, (ii)전략적 공공기술 사업화, (iii)지역의 성과확산 체계 구축’을 3대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표 2-2-51 연도별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 연구개발특구육성(R&D)	7,508	13,800	24,070	25,517	34,110	33,116	33,116	34,706	34,706	38,706	40,706	81,725	83,000
1.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	4,500	9,880	18,500	20,982	26,325	26,416	27,216	28,906	28,206	32,406	35,726	63,425	62,000
2 연구소기업·창업 성장지원	3,008	3,910	5,570	4,535	7,785	6,700	5,900	5,800	6,500	6,300	4,980	18,300	21,000
□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R&D)	-	-	-	-	-	-	10,000	14,000	27,000	30,000	30,200	-	-
1.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	-	-	-	-	-	-	9,200	12,450	24,000	26,000	27,500	-	-
2 특구창업 지원	-	-	-	-	-	-	800	1,550	2,940	3,940	2,700	-	-
□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 지원	2,492	11,224	25,980	35,983	31,880	10,602	13,502	29,046	52,909	17,839	20,711	27,306	24,494
1. 특구기반시설 구축	-	6,000	19,000	30,000	25,500	4,000	5,000	20,740	42,880	8,000	10,650	15,800	11,409
2 특구재단 운영·지원	2,492	5,224	6,980	5,983	6,380	6,602	8,502	8,306	10,029	9,839	10,061	11,506	13,085
□ 특구 기술사업화 투자지원	-	-	-	-	-	-	-	10,000	10,000	5,000	-	-	-
계	10,000	25,024	50,000	61,500	66,000	43,718	56,618	87,752	124,615	91,545	91,617	109,031	107,494

연구개발특구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서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특구가 지정된 2005년 입주기업수는 687개에 불과했으나 2016년말 4,804개로 약 599%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2.5조(2005년)에서 44.6조(2016년)로, 코스닥 상장 기업수는 2005년 11개에서 2015년 78개로 약 609%가 증가하는 등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하였다. 혁신역량 측면에서도 연구개발비 투입규모가 1.8조원(2005년)에서 10.0조원(2016년)으로 약 456% 확대되었으며, 연구인력은 16,759명(2005년)에서 72,791명(2016년)으로 약 334% 증가하였다.

표 2-2-52 연구개발특구 주요 통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16년	증 감(%)
입주기업 수 (개)	687	4,804	599
입주기업 매출 (조원)	2.5	44.6	1,684
연구개발비 (조원)	1.8	10.0	456
연구인력 (명)	16,759	72,791	334

한편 정부는 특구의 우수한 공공 R&D 역량을 활용,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될 수 있는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발굴·이전매칭→출자(이전) 및 창업→사업화 및 성장지원’에 이르는 차별화된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유망 공공기술의 적시 사업화 및 사업화 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표 2-2-53 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의 세부내용

구 분	사 업 명	세부내용
연구개발특구육성 (R&D)	특구연구성과 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수요·공급자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찾기 사업, 기술매칭·설립 컨설팅 등 연구소기업 발굴 기획, 혁신주체 네트워크 운영 우수 공공기술을 기술이전 받아 상용화하기 위한 특구 내 기업 및 연구소기업 대상 R&BD과제 지원
	연구소기업 · 창업 성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조기정착 유도 및 사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거점대학 활용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발굴 및창업아이템 검증, 기술창업 지원·컨설팅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특구기업의 글로벌 해외진출 도모, 개도국 대상 한국형 과학단지(K-STP) 모델 교육 등 해외교류 협력

*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R&D)은 2011년 추가특구(광주·대구) 지정과 함께 신설된 사업으로, 기존 대덕특구의 연구개발특구육성(R&D)과 사업구조 및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으로 2016년부터 해당 2개 사업을 통합·운영 중

사업지원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과와 파급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글로벌 지원의 경우 지난 12년(2005~2017년)간 5,960억원을 지원하여 기술이전금액 1,928억원을 달성하였다.

특히, 공공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특구만의 고유한 모델이자 과학기술 기반 혁신창출의 성과로 주목받고 있는 연구소기업 설립이 크게 증가하여 2017년까지 520개(신설 181개)를 등록했고, 제1호 연구소기업인 콜마BNH가 연구소기업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2015년 2월, 시가총액 1조 276억원)되었고, 제28호 연구소기업인 수젠텍은 국내 최초로 미국 FDA 승인 및 유럽CE 인증을 받은 디지털임신·배란테스트기를 개발하여 코

넥스(2016년 11월, 시가총액 350억원)에 상장하는 등 연구소기업의 성공사례가 본격적으로 창출되고 있다.

기술사업화 투자지원의 경우 2012년 10월, 1,250억원 규모의 2차 펀드를 조성하여 2016년말까지 총 78개 기업에 투자를 집행하였으며 2016년~2017년 3차 펀드를 조성하여 총 36개사에 190억원의 투자를 추진했다. 또한 2008년~2017년까지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STP 모델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교육훈련을 총 18회(69개국, 351명 참여) 실시, 3개국을 대상으로 전략컨설팅을 지원했고, 해외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특구기업의 해외투자유치(2015~2017년 5개사, 169.5만 달러 투자유치) 및 글로벌시장 진출(2017년 7개사, 257만 달러 수출계약)을 지원하여 지속성장 및 성공가능성을 제고하였다.

(13)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 지원

연구개발특구 지원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 및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연구개발기능과 생산기능이 결합된 혁신클러스터 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2-54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 지원 사업 주요내용

구 분	사 업 명	세부내용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 지원	특구기반시설 구축	▪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효율적 인프라 제공으로 기업환경 개선 등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	▪ 특구의 효율적 육성관리를 위한 기관운영 및 기관고유사업 추진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이후 특구정책 및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광주, 대구, 부산 및 전북특구 등 총 5개 특구를 지정했다.

또한 산학연 혁신주체간 교류 및 연구개발성과의 비즈니스 연계를 위한 인프라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대덕특구의 대덕테크비즈센터와 연구생산집적시설, 광주특구의

광주이노비즈센터가 준공되어 활용중이며, 부산·대구·전북특구의 관련시설도 각각 착공(부산,대구) 및 설계(전북)단계에 있다. 이를 통해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여 특구내 벤처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3.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1) 산학연협력 활성화(대학 보유기술 이전 및 직접 사업화 촉진, TMC)

정부는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의 민간으로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커넥트 코리아(Connect Korea)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TLO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 산학협력단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을 설치하여 지식재산권의 창출, 유지 관리 등 지식재산권 관리와 관련된 업무 및 우수 기술의 발굴, 마케팅, 기술이전 등을 포함한 기술사업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까지는 교과부와 지경부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사업관리체계 단순화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대학 TLO 지원사업은 교과부(현재 과기정통부)가 전담토록 조정하였다.

2013년부터는 자체적인 TLO조직 구성 및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존 TLO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E-TLO(External Technology Licensing Office)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대학의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대학 보유기술의 직접사업화 촉진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대학의 직접사업화 기반 구축 및 역량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한 제1기 대학 기술지주회사 지원사업을 통해 11개 기술지주회사를 지원하였고, 제1기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제2기 대학 기술지주회사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 7개 기술지주회사 및 후발 기술지주회사를 지원하였고, 2015년부터는 15개 기술지주회사 및 후발 기술지주회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2016년부터는 (구)미래창조과학부의 대학 TLO 지원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지

주회사 지원사업을 통합·개편하여 대학의 기술이전 및 직접사업화 촉진을 위해 대학 TMC(Technology Management Center)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여 (구)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토록 조정하였다. 19개 대학 TMC 및 후발 TMC 공동지원사업 지원을 통해 64개 대학, 48개 기술지주회사를 지원하여 기술이전·사업화 거버넌스를 체계화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간소화하는 등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역량을 극대화하였다.

대학 TMC를 통해 이루어진 대학 보유기술의 기업이전 건수 및 기술료 수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6년에는 기술이전 3,426건을 기록하였고, 기술이전 수입료 역시 높은 비율로 성장하여 2016년도에는 647억원을 기록하였다.

표 2-2-55 대학 TMC(TLO) 연도별 기술이전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제1기 TLO(2006~2010년)					제2기 TLO(2011~2015년)					TMC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314	507	564	680	693	1,123	1,152	1,295	1,605	1,953	3,426
수입료	64	118	181	205	249	376	447	370	400	490	647

또한,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편입 및 성장 지원을 통해 2016년도에는 기술지주회사 12개와 자회사 155개를 신규 설립(편입)하였고, 743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다.

표 2-2-56 대학 TMC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 실적

(단위 : 건, 누적)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술지주회사	16	23	26	35	36	48
자회사	74	118	145	201	271	426

(2) 산학연협력활성화 지원(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은 산·학·연 및 관련 기술전문가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정보교류, 과제기획활동 등을 통해 핵심융합아이템을 발굴하여 후속 R&D를 지원하는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002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기업연구클러스터사업’으로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클러스터’에서 도출된 과제가 기술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핵심애로기술개발’을 추가

하고 일반회계의 민간연구기관 맞춤형 R&D 컨설팅 사업을 통합하여 ‘산학협력력 우수연구실 사업’으로 확대하였다.

2013년에는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의 세부사업으로 2009년부터 추진된 ‘산학협력 연계망구축사업’을 통합하여 산학연 연구협력 네트워크인 ‘지식클러스터 지원’과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으로 구성·운영되었다.

‘지식클러스터 지원’을 통해 2개 이상 기술분야의 산·학·연 및 관련 기술전문가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술정보교류, 기업수요의 단기 애로기술 개발 및 기술로드맵 구축, 융합아이템 및 단기사업화과제 발굴을 지원하였다. 또한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으로 지식클러스터 활동을 통해 발굴한 융합아이템 및 단기사업화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지원하여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업주도의 자발적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표 2-2-57 산학협력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실적

연도 지원 분야		2002~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예산(백만원)		10,440	2,400	2,400	2,400	2400	2102	22,142
지식클러스터 지원	지원과제(개)	324	16	18	20	20	18	416
	과제기획(건)	2,668	81	67	150	85	107	3,158
	정부사업(건)	878	124	85	85	81	82	1,335
	공동연구 등(건)*	1,031	116	65	144	99	80	1,535
	기술로드맵(건)	-	14	14	7	9	8	52
핵심융합기술개 발 지원	지원과제(개)	49	5	7	8	8	9	86
	지식창출**	-	26	36	32	32	45	171
	논문(건)	-	11	18	20	15	18	82
	특허(건)	-	15	18	12	17	27	89
맞춤형 R&D컨설팅***	지원과제(개)	219	-	-	-	-	-	219
	컨설팅(회)	1,240	-	-	-	-	-	1,240

* 협동연구, 기술지도, 기술이전, 개발용역, 단기애로기술해결 등

** 지식창출(논문, 특허) 수행기간: 2013년~계속

*** 맞춤형 R&D컨설팅 수행기간: 2009~2012년(UNITEF)

(3) 산학협력활성화 지원(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지원)

대학·출연(연)이 연구개발 성과물 중 71%는 사업화되기에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고,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상용화 가능한 기술로 개발하고 사업화를 지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들은 창업 후 3~4년 이후의 주력제품 발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핵심 원천기술과 장기적인 R&D 투자 수행 여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학·출연(연)기업이 함께 공동연구법인 설립을 설립함으로써 기초·원천기술의 활용·확산 강화, 기업의 신산업 발굴, 전주기적 R&D 투자 효율성 제고, 기술지주회사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활성화를 통한 산학협력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출연(연)이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여 사업화까지 연결하는 연구개발 전문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을 견인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동법 제17조(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 국정과제 17(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 기능 강화)을 근거로 하여, 2011년 ‘산학연공동연구법인 기본계획’을 수립(11.7)하였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14개의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을 설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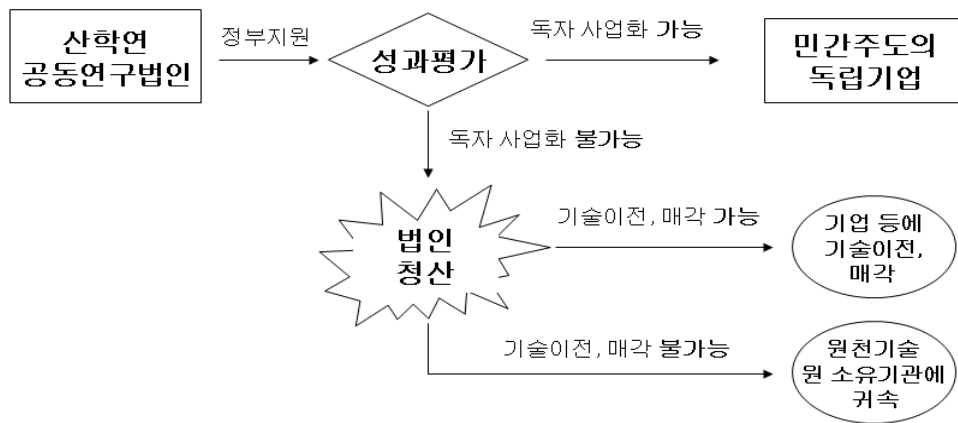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은 대학·출연(연),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 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대학·출연(연)은 미래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우수 기초·원천 기술 및 연구장비 시설 등을 현물로 출자하고, 추가 R&D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며, 기술의 사용자인 기업은 성공적인 기술 상용화를 위해 현금 및 현물을 투자 하고 공동연구에 참여 하고 여 향후 기술 마케팅을 통한 본격적인 사업화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공동연구법인의 후속연구개발비를 출연금 형식으로 지원함으로써 후속 R&D를 통한 중장기 관점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

산학연공동연구법인사업의 과정은 Tech-BM 검증지원 사업에서 시작된다. 대학·출연(연)이 제출한 BM에 대한 사업화 타당성 검증을 통해 1차 후보과제를 선정하고, 이후 후보과제의 BM고도화 작업을 거쳐 상용화 가능성 및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 우수 BM과제를 선정한다. 이후 제안된 사업화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이 설립되면 정부는 후속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사업완료 후에는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용화에 성공하였거나 성공가능성이 높은 경우 민간 주도의 독립적 계속기업으로 전환(M&A, IPO 등 포함), 단독으로 사업화 추진이 곤란할 경우 연구성과물을 민간기업에 기술이전 또는 매각 추진, 기술이전·매각이 불가능할 경우 원천 기술의 원 소유기관 귀속 등 3가지 방안으로 후속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림 2-2-23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체계



본 사업을 통해 2012년에는 아이씨엠(주)(연세대), ㈜인지바이오(광주과학기술원), 2013년에는 ㈜지안산업(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이노캠텍(충남대), 2014년에는 ㈜탑앤씨(한밭대), 2015년에는 ㈜커넥슨(울산과기원), 쓰리디아이즈(주)(서울과기대) 2개의 공동연구법인이 설립되었고, 2016년에는 ㈜원프레딕트(서울대), ㈜큐바이오센스(광주과기원), ㈜이신테크놀로지(충남대) 등 3개, 2017년에는 ㈜센트라(전자부품연구원/전남대학교), ㈜네오세스텍(한양대학교), ㈜케스트(한국생산기술연구원), ㈜티맥(한국생명공학연구원) 총 4개의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이 설립되었다.

14개의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4개, 광주광역시 4개, 대전광역시 4개, 울산광역시 1개, 전북지역 1개이다. 공동연구법인은 최대 5년의 후속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며, 후속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

로 법인 14개 운영을 통해 투자유치 6,500백만원, 매출액 1,810백만원, 신규고용인력 45명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을 통해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활용, 고용창출, 중소·중견 기업 이익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학협력 촉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정부는 법인의 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 및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표 2-2-58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 현황

연도	법인(기술출자기관)
2012	아이씨엠(연세대), 인지바이오(광주과기원)
2013	지안산업(전북연합), 이노캠텍(충남대)
2014	탐앤씨(한밭대)
2015	쓰리디아이즈(서울과기대), 커넥슨(울산과기원)
2016	원프레딕트(서울대), 큐바이오센스(광주과기원), 이신테크놀로지(충남대)
2017	(주)센트라(전자부품연구원/전남대학교), (주)네오세스텍(한양대학교), (주)케스트(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티맥(한국생명공학연구원)

(4) 산학연협력활성화(연구개발지원단 육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생적 생애주기 선순환 형태의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R&D 역량의 강화가 요구된다. 지역의 R&D역량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2007년 7월 ‘지역별 R&D 전담 추진기구 설치·운영 방안’을 수립·추진하였고, 연구개발지원단이 설립되었다.

연구개발지원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50 대 50 비율의 매칭 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내 R&D 사업의 조사·분석, 지역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 지원, 지역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07년 12월 부산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연구개발지원단을 지

정·육성하고 있다.

그림 2-2-24 연구개발지원단 선정·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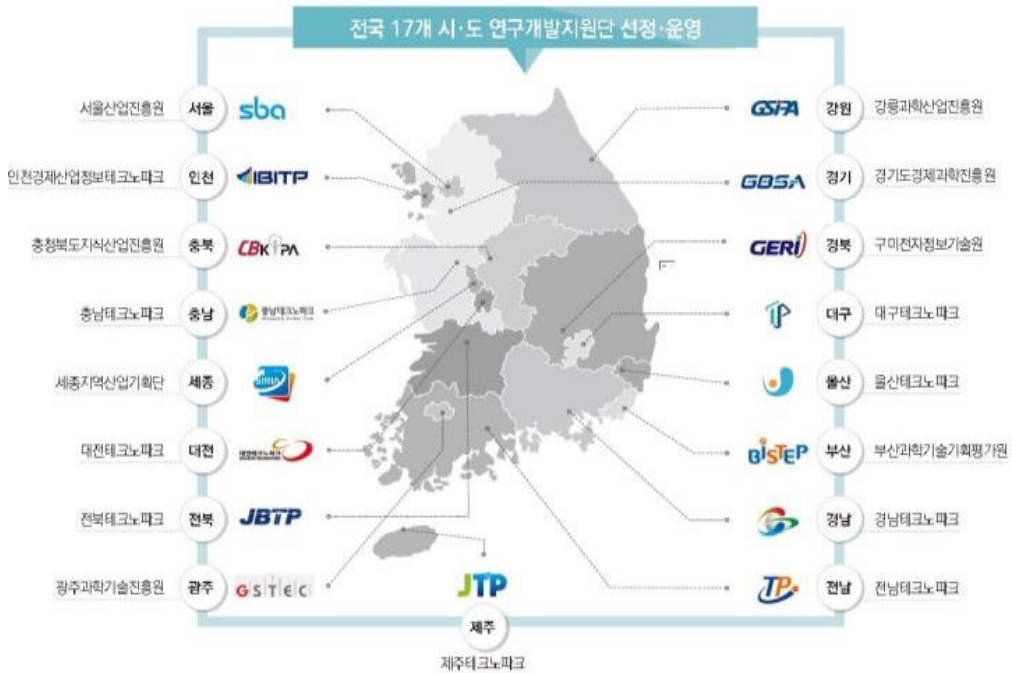


그림 2-4-25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지원체계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의 지원규모는 2017년 국비 기준으로 32.5억 원으로,

각 연구개발지원단별로 국비가 약 2억원 지원되며, 매년 평가 실시 후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지원하고 있다.

표 2-2-59 연구개발지원단 지원규모

(단위: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비고
3,200	3,100	3,250	3,250	지방비 100% 이상 매칭 별도

지역의 연구개발지원단별로 지역의 혁신기관 현황 조사, R&D조사·분석, R&D와 관련한 사업기획·정책지원, 평가관리, 네트워킹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2015년 9월에는 전국 연구개발지원단 협의회를 발족하여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지자체 등이 협업하여 지역연구개발 활성화 및 가속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또한, 연구개발지원단은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R&D 역량강화 및 지역 R&D 이슈와 정책추진 방향 제안을 위한 세미나, 포럼 및 교육훈련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 이후 매년 지역 R&D 투자에 대한 표준화된 조사·분석을 통해 전국 17개 지역별 R&D 투자현황을 분석한 공동 조사·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17개시·도 과학기술 인프라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과학기술 가이드 맵(guide map)을 발간·배포하여 지역 R&D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다.

표 2-2-60 연구개발지원단 주요 기능별 성과(2017년)

(단위:건)

조사·분석	발굴기획	정책지원	평가관리지원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네트워크 구축/운영	계
57	150	68	45	18	136	474

향후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의 R&D 싱크탱크로서 기능하기 위해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안건 발굴·운영 지원, 지자체의 과학기술진흥 계획 수립지원, 지역의 R&D관련 거버넌스 운영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제5절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1. 과학기반 혁신거점지구 조성

(1)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단지의 지정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05년 10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 방침이 결정되고, 2008년 3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적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09년 8월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 등 2개 지역을 복수로 선정하였으며, 2010년 1월 2개의 단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특성화 될 수 있도록 의료산업의 중점 육성분야와 지역의 산업 역량 및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성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2010년 12월 각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법인으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였으며 2011년 3월에는(제7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핵심시설 건립,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우수한 연구인력(기관) 유치 및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첨단의료 복합단지 1차 종합계획(2010~2013년)을 수립 추진하였다. 또한 시설, 장비, 제도 등 인프라 조성에 주력했던 1차 종합계획과 달리 2차 종합계획(2014~2016년)에서는 첨단단지 안정화를 위해 우수인재 및 기관 유치, R&D지원 확대 및 기획기능 강화를 중점 추진 내용으로 포함하여 추진하였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일원 105만㎡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113만㎡ 부지에 기업·대학 등이 보유하기 힘든 핵심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공동연구개발체계를 마련하여 첨단제품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단지 내에는 핵심인프라 구역과, 연구지원시설구역, 연

구기관입주구역, 편의시설구역이 조성되었다.

첨단제품 개발과정의 가장 취약한 인프라를 제공하게 될 핵심인프라 구역에는 신약 후보물질 평가-최적화,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첨단의료기기 설계·시제품 제작·성능평가를 위한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동물자원 및 임상시험시료 공급을 담당하게 될 연구지원시설 구역에는 실험용 동물사육·관리 및 동물실험을 지원하는 실험동물센터와 임상 시험용 신약을 생산·공급하게 될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가 건립되어 있다. 연구기관 입주구역에는 국내외 연구기관, 연구중심 벤처기업 등이 입주하게 되고, 편의시설 구역에는 연구원들의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편의시설 등이 제공 된다.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약의 경우 합성신약, 의료기기의 경우 IT기반첨단 의료기기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약의 경우 바이오신약, 의료기기의 경우 BT기반첨단의료기기로 각각 특성화하였고, 특성화 방향에 따라 시설, 장비 등을 구축하되 필요시 타분야 연구개발 및 융·복합 연구지원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시설 건립을 위해 총 4,375억 원을 투자, 2011년 10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12월 완공하였으며, 2014년부터 핵심연구지원 인프라의 본격 가동을 통해 신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6년 1월에는 첨단의료단지법을 개정함으로써, 단지 내 생산시설 설치 허용, 입주심의절차 간소화, 생산센터 수탁사업범위 확대 등 단지활성화 및 재단 재정자립화의 기반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첨복단지 제3차 종합계획(2017~2019)’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기(1차, 2011~2013) 및 정착기(1차, 2014~2016)의 성과를 기반으로 수요자 맞춤형 연구개발과 제품화 지원, 전략적 기업 지원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운영을 효율화하여 자립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에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단지조성 및 첨단제품 연구개발 기반을 활용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이 가능한 첨단제품 개발을 뒷받침하며, 궁극적으로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첨단의료산업 분야 최고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단지별 특성화에 적합한 인프라를 지원하고 응용연구 중심의 공동 R&D

를 강화하여 시장선점형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재단의 우수 시설·인력·기술을 활용한 산·학·연·병 협력을 통해 응용연구에서 전임상·임상에 이르는 전주기적 연계 지원을 강화하여 의료산업 클러스터로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단지 내외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선진 클러스터와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내외 우수한 연구기관과 기술공유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국내외 컨퍼런스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운영성과를 활용하고 전파해나갈 예정이다.

2. 행복도시를 명품도시로 조성

(1) 행복도시 광역도로 건설사업

행복도시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행복도시와 수도권, 영·호남권 등 주요 도시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주요 교통거점을 연결하는 18개 광역도로망(118km)을 단계적으로 건설 추진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수행한다.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이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용지 보상을 통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 말에는 행복도시 광역교통망 노선 구축을 위해 행복도시~공주(1구간) 연결 도로를 개통하여 행복도시와 공주시와의 접근성 및 이동성 강화로 인적 및 물적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행복청은 공주(2구간) 연결도로 6.3km 구간을 6차로로 추석연휴 전 조기 개통하여 도로이용자의 편의 제고 및 지역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광역도로망을 구축하였다.

2018년도에도 행복도시~부강역 도로건설공사 등 7개 구간을 공사 시행 중이며, 공사 추진 시 품질 및 안전점검 강화, 현안사항(민원 등) 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표 2-2-61 행복도시 광역도로 건설사업 성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2017년 목표	검증방법
행복도시~공주(1구간) 도로 확장공사 개통	보상 집행율	100%	집행비 / 총사업비
	공사 진행율	100%	집행비 / 총사업비

(2) 행복도시 국가행정시설

정부세종청사 기능보완과 방문객·이전공무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건립하는 복합 편의시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건립하는 사업으로 3개 공사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제1공사(주차장)는 공사발주(2017년 5월) 후 2017년 9월에 착공하여 공사중으로 2019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제2공사(주차장+문화시설)는 공사발주(2017년 3월) 후 2017년 7월에 착공하여 공사중으로 2019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제3공사(주차장+체육시설)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어 2017년 11월에 업체선정 후 우선시공분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공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 하반기에 설계완료 및 본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표 2-2-62 추진성과

(단위:억,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2014~2015년에 기본계획 수립·변경을 거쳐, 2016년 설계, 2017년 공사착공하여 공사중	-	-	91	202	293

(3) 행복도시 도시행정시설

중앙행정기관·국책연구기관 이전 등으로 행복도시 내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입주공무원 및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편의를 위해 선관위·경찰서·세무서 등 도시행정시설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건립 추진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특화하여 추진중인 선관위 청사는 설계완료(2017년4월)이후 2017

년 6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 청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을 취득(2017년6월)하였고, 2017년 10월에 ‘2017년 대한민국 스마트건축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경찰서는 설계공모작품 선정(2017년9월)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세무서는 설계공모 전 사전기획용역 실시로 우수한 설계공모작품을 선정(2017년11월)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세무서 청사는 전문가·사용자·발주자의 의견 및 만족도를 반영하는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우수한 디자인 및 공간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2-2-63 추진성과

(단위:억,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선관위) 설계완료 및 공사 중					
-(경찰서) 설계 중	-	-	75	97.5	
-(세무서) 설계 중					

(4) 행복도시 문화시설

국가의 문화균형발전과 도시 상징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대를 기대하고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행복도시 문화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아트센터는 그 동안 협의 중이었던 규모조정 완료 이후 실시설계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아트센터는 행복도시가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 오페라, 뮤지컬, 콘서트, 클래식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향유·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연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예술문화시설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수행으로 건립하고 있다. 아트센터는 설계과정에서 국회, 지역주민, 언론 및 공연예술전문가 등의 적정규모 확대 요구 및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 등을 고려하여, 건립규모를 확대를 위해 운영기관인 세종시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6년 10월 대형 기획 공연이 가능하도록 건립규모 조정(대극장 700석→ 1,000석)과 총사

업비 조정(857억 → 905억)을 완료하였다. 또한 인근 도시상징광장과 독락정 역사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중앙공원, 박물관 단지를 아우르는 연계설계를 통해 35천㎡ 부지 위에 이용에 편리한 최적의 공연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2017년도에는 기본설계를 완료(2017년3월)하였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행복도시 세종의 위상에 걸 맞는 복합공연이 가능한 대형공연 전문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0년 조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5) 행복도시 주민편의시설

행복도시의 행정,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공공편의·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 생활의 편의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2006년부터 2030년까지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광역복지지원센터의 건립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기초생활권 16개소, 지역생활권 6개소 등 총 22개소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주민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복지센터, 문화의집, 지역아동센터, 체육관 등의 시설을 복합화하였고, 지역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기초생활권의 주요시설에 경찰지구대, 우체국, 119안전센터, 수영장 등을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복지지원센터는 지역생활권별로 각 1개소를 건립하며 총 6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며 각 지역마다 종합복지형, 가족복지형, 보건복지정보형, 장애인복지형, 의료재활형, 청소년복지형으로 특성화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은 2017년까지 총 22개소 중 8개소 완료, 6개소 공사 및 설계를 진행 중이며, 광역복지지원센터 사업은 총 6개소 중 2개소 완료, 1개소 설계 중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2017년도에는 3-1생활권(대평동) 주민의 종합행정·문화·체육·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3-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2017년10월)를 완공하였고, 2018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1-1(B)·2-2·3-3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였다. 또한 4-1·6-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기본설계를 착수, 2-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향후 해당생활권 주민 공동체 등 커뮤니티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정보형으로 특성화된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의 실시설계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향후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실현토록 할 계획이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공편의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2017년 12월 기준 654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에도 활력을 제고하고 있다.

(6)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사업

수도권 과밀완화와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건설되는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유치 지원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수행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종테크밸리 산업용지 공급을 통해 첨단기술을 보유한 IT·BT·ET 기업을 유치하고, 공동캠퍼스 등 대학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캠퍼스 건립 방식을 제공하여 우수대학을 유치하고 병원, 공공기관, 편의시설 등 주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도시기능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을 개정(2013년 8월)하여, 핵심 자족시설에 대한 건축비(25%) 지원 등 인센티브(자족시설 유치지원 기준) 규정을 제정하였다(2014년 8월). 도시 내 앵커시설에 대한 탄력적 토지공급방안을 마련(2013년 6월)과 주택특별공급대상인 ‘기업’ 범위를 확대(2013년 12월) 하였다. 행복도시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제고하고,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기업유치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행복도시 세종박람회’ (2014년 11월)를 개최하였다. 행복도시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4생활권을 대상으로 ‘산학연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2014년 9월)하고, BT·ET·IT 융복합 중심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거점 마련을 위하여 4생활권 일부(약 75만㎡)를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2015년 6월)하고, 첨단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입주 및 창업 지원 등을 위하여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의 건축공사를 발주(2016년 12월)하였다. 기업 종사자 및 대학생 등을 위한 도심형 임대아파트인 행복주택 건립(1,500호)에 착수하였다(2015년 6월 사업승인, 2019년 입주). 또한 공동캠퍼스의 조성 근거를 행복도시특별법에 마련하였다(2017년 10월 개정, 2018년 4월 시행)

자족시설 유치를 위해 우선 기업과 관련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기업 설명회

개최 등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을 거쳐 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용지를 3차에 걸쳐 분양(2016-2017년)하여 바이오 전문기업인 마크로젠 등 강소기업과 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기업지원기관을 포함해 43개사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학은 카이스트, 서울대 등 다양한 대학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현재까지 국내외 19개 대학과 행복도시 입주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중 카이스트와는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입주를 전제로 하는 MOA를 체결할 계획이다.(2018년)

외국대학·연구기관으로는 아일랜드 국립 Tyndall 연구소 및 Cork 대학과 산학연클러스터 내 생명과학 협력 등의 MOU를 체결(2015년 10월)하였으며, 행복청-코크대 약대-고려대 약대 간 연구개발 협력 등에 대한 MOU도 체결(2016년 3월)하였다. 미국 코넬대에서 뇌과학연구, 헬스케어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LOI를 제출(2016년 1월)받았다. 산학연클러스터의 산학융합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서울대 공과대학(3월) 및 행정대학원(10월), KAIST 창업원(9월) 등과 MOU를 체결(2016년)하였으며, 아일랜드 트리니티대(7월), 오스트리아 프로이드대(9월), 체코 브르노예술원(9월)과도 공동학위 개설 및 산학협력 등의 MOU를 체결(2016년)하였다. 2017년부터는 싱가포르 외국인투자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해외투자 유치도 현실화하고 있다.

또한 행복도시 최초의 대기업으로 한화에너지와 MOU를 체결(2016년 7월)하여 본사가 이전을 완료(2017년 1월)하였다. 행복도시내 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세종 Bio-IT융합 미니클러스터를 결성(2016년 6월)하여, 기업성장 및 산업단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민간분양형 지식산업센터 분양승인을 통해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여 기업 및 기업지원기관, 연구소, 대학 산학협력단 유치 현실화하고 있다.

병원은 입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세종충남대병원과 토지공급 계약(2015년 5월)을 체결하고 2018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공기관 및 청사는 4개소가 이전을 완료하였고, 4개소의 입주가 확정되었으며 향후 복합업무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의 추가 입주수요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정주인구 부족, 산업기반 열악 등 도시 초기의 부족한 투자유치 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기반을 마련하였으나, 향후에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능동적 활동이 필요하다. 세종테크밸리 우수 기업 유치, 공동캠퍼스 조성 등 창조형 캠퍼스 구축, 국

내외 투자유치 네트워크 확보와 연계한 맞춤형 투자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3. 혁신도시를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

(1) 혁신도시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우리나라는 과거 일극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 경제를 지역 특화발전을 통해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정부는 2005년 이후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11개 광역시·도에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6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방침을 발표하고 2004년 4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제도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2004년 8월 공공기관 이전방안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와 12개 시·도지사간의 ‘중앙·지방간 기본협약’(2005년 5월) 및 ‘노·정간 기본협약’(2005년 6월) 체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전 대상기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2005년 6월 24일) 발표 당시 전체 공공기관(409개)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345개)을 대상으로 기관의 성격 및 수행기능 등을 분석하여 수도권 잔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기관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75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농촌진흥청과 수도권에 신설·분리된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4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개 개별이전기관이 추가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의 내부조직 성격이 강한 23개(위원회 12개, 내부조직 성격 11개) 정부 소속기관이 제외되었다. 또한, 2008년 8월에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에 따른 통폐합 등으로 12개 기관이 감소되었고, 2012년과 2013년, 2014년에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등 7개 기관이 추가되었으며, 2014년에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통합되어 최종적으로 153개 기관이 지방이전대상 기관으로 확정되었다.

표 2-2-64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이전대상기관 (합계)	지방이전대상		
	혁신도시	개별이전	세종시
153개	115	19	19

자료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기관별 직제개편전 기준)

표 2-2-65 시·도별 이전기관 배치결과(전체 153개 기관)

지역	이전기관	지역	이전기관
부산 (13)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등 13개 기관	대구 (11)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11개 기관
광주/ 전남 (16)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한국전력거래소 등 16개 기관	울산 (9)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9개 기관
강원 (12)	한국광물자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12개 기관	충북 (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11개 기관
전북 (12)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국민연금공단 등 12개 기관	경남 (11)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방기술품질원 등 11개 기관
경북 (12)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12개 기관	개별 이전(19)	국방대학교, 경찰대학, 경찰수사연구원 등 19개 기관
제주 (8)	한국국제교류재단,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공무원연금공단 등 8개 기관	세종시 (19)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19개 기관

자료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2005.6.24) 이후, 공기업선진화방안(2008.8) 등으로 인하여 일부 기관들은 통폐합되고 이전 지역 등이 변경되어 이전기관은 153개로 확정되었음.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각 시·도에 구성된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2005년말 10개 혁신도시의 입지선정을 마무리하고, 혁신도시별로 특색있고 차별화된 혁신도시건설을 위해 혁신도시 개발 기본구상을 수립(2006년 2월~12월)하였다.

표 2-2-66 혁신도시 입지선정현황

강 원	원 주	경 남	진 주
충 북	진천·음성	대 구	동 구
전 북	완주·전주	울 산	중 구
광주·전남	나 주	부 산	해운대구 등
경 북	김 천	제 주	서귀포

자료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 특별법」 이라 함)을 제정·시행(2007년 2월 12일)하였으며, 이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 시행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법 제47조의 2, 2007년 10월) 하였다.

정부는 혁신도시건설을 위해 관련 절차를 거쳐 10개 혁신도시를 모두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확정, 고시하였으며(2007년 3월~4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개발절차를 모두 수립 완료(2007년 5월~2008년 12월)하였다. 이와 함께 10개 혁신도시의 용지보상은 2014년 10월에 마무리 되었다. 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는 혁신도시별로 2~9개 공구로 구분하여 공사를 발주하여, 혁신도시별로 우선 1공구 조성공사에 대해 2007년 9월 제주와 경북을 시작으로 2009년말까지 10개 혁신도시 42개 전공구를 착공하여 2017년 12월말 강원을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등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전체 준공됨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되어 2017년까지 147개(96.1%)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혁신도시에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전기관이 이전지역 인력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법 제29조의 2, 2013년 3월)되었으며,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에 지역이전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가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2017년 9월19일 제41회 국무회의에서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방안’을 보고하였으며, 2017년10월24일에는

개정안이 공포되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 되었다.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지역별 합동채용설명회를 매년 시행중에 있으며, 2017년에는 총 8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결과 2012년에 2.8%로였던 지역인재 채용률이 2015년에는 12.4%, 2016년에는 13.3%, 2017년에는 14.2%로 점차 증가하였다.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 153개 공공기관 중 나머지 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201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혁신도시별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전직원 가족 및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 정주여건인 주거·교육시설과 생활서비스 시설인 각종 의료·어린이집·행정시설·편의시설 등을 적기 공급하고, 생활가이드 앱 개발·보급 등으로 생활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2)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있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혁신도시에 유치하여 혁신도시를 지방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중에 있다. 2012년까지 지자체 중심의 혁신도시별 특화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4년에는 이전기관과 연계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 산업 위주로 수요를 분석하고 유치전략을 검토하여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정·보완하였다.

2014년 5월에는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하여 혁신도시내 입주하는 연구기관, 국제기구, 대학, 종합병원에 건립비 지원, 고용보조금 등 우선지급,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감면규정 완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2014년 12월에는 세제혜택 등을 위해 클러스터 부지의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을 완료(대구, 충북)하였다.

2015년 12월에는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목적에 적합한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입주승인, 양도제한, 승인취소 등 사전·사후적 관리방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정부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각 혁신도시

별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과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 혁신도시와 인근지역간의 연계발전, 지역 및 관련 기관간 자율적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혁신도시 소재 시·도별로 담당공무원으로 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5월에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센터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현재 충북과 경북혁신도시가 센터를 건립·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혁신도시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개 혁신도시 11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에 306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였으며,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혁신도시 지역성장거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2단계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 전체 용지 분양률(2016년 12월 기준 92.0%)에 비해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2017년 12월 기준 62.1%)은 다소 저조하나 클러스터 조성은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따라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용지 분양률을 높이고, 입주기업들에게 저렴한 입주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클러스터를 활성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센터가 이전기관·유치기관 간 네트워크의 장이자 유치기업 입주 공간 제공 등도 담당할 수 있도록 타 혁신도시도 센터건립을 지원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의 산학협력·R&D사업, 지자체의 지역발전사업 등을 혁신도시에 적극 유치해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4. 새만금 기반시설 조기 구축 및 개발 가시화

(1) 새만금 내부개발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 ~ 고군산군도 ~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9km를 축조하고, 40,900ha에 달하는 공유수면을 대규모 간척농지 29,100ha와 담수호 11,800ha로 개발하기 위해 1991년 착수한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이다.

방조제공사는 1991년 착공이후, 총사업비 2조 9,420억원을 투입하여 33km에 달하는

제방과 신시, 가력 배수갑문 2개소 등 주요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고 2010년에 준공식을 가졌다.

사업착수 이후 내부개발 토지이용계획(기본구상)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몇차례 변화가 있는데, 2007년에는 「새만금 내부토지 개발 신구상」을 통해 농지 72%, 산업·관광 28%로 변경하였고,

2008년에는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는 계획에 따라, 농지 면적은 72% → 30% 축소되고 복합도시용지 70%는 산업·관광, 복합도시, 신재생에너지, 생태환경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이 변경된 바 있다.

2011년에는 2010년에 수립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문가 간담회, 새만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2013년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2014년 9월 새만금 내부토지를 농생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연구용지, 관광·레저용지, 생태·환경용지 등 6대 용지로 활용하는 「새만금기본계획」 수립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 계획에는 내부토지의 조기 개발을 위해 한중 경험단지 조성,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 조성(관광명소화), 새만금 기반시설(동서2축, 남북2축, 신항만 등) 조기조성, 글로벌 수준의 규제 완화, 새만금 수질 관리 및 만경강·동진강 하천정비, 공공부문의 선도적 참여 추진, 사업추진을 촉진할 거점별 선도사업 추진, 농생명용지의 차질 없는 조성 등을 8대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특히, 동 계획에서 새만금 내부토지(29,100ha)의 30%에 해당하는 농생명용지 9,430ha와 농생명용지 구간 방수제 62.1km를 2020년까지 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수제와 농생명용지 개발에 필요한 총사업비(2조 4천억원 수준)를 2009년에 확보한 이후, 방수제 공사를 그해 10월에 착수하여 54.2km를 2017년까지 완료하고, 2018년 현재 7.9km추진 중에 있다.

표 2-2-67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추진성과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방수제 (62.1km)	계속 54.2	계속 4.2 준공 50.0	준공 4.2	신규 5.4	신규 : 5.4km 준공 : 54.2km 미착수 : 2.5km
농생명용지 (9,430ha)	계속 1,513	신규 3,522 계속 1,513	계속 5,035	신규 2,359 계속 3,522 준공 1,513	계속 : 3,522ha 준공 : 1,513ha 미착수 : 2,036ha

농생명용지는 선도공구인 5공구를 2013년 착수한 이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7,394ha를 추진하여 2017년말 1,513ha를 준공(전체 농생명용지의 16% 수준)하고 2018년에는 5,881ha를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2,036ha는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2018년 하반기 이후에 착수할 계획이다.

표 2-2-69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연차별 투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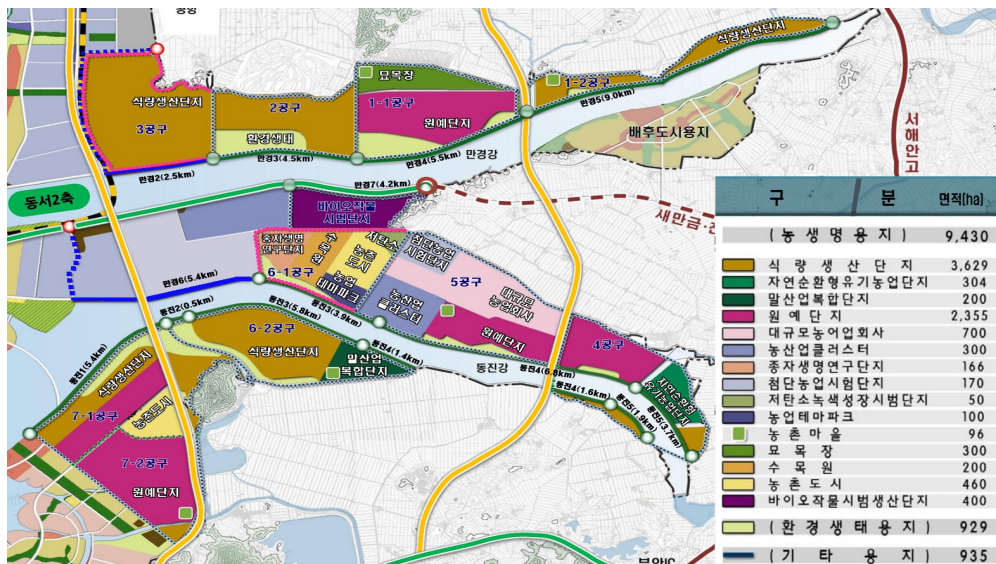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2017년까지	%	2018년 계획	%	2019년 이후
계	24,154	13,818	57	1,880	8	8,456
○ 순공사비	21,408	12,070	56	1,688	8	7,650
- 방 수 제	10,692	8,412	79	394	4	1,886
(연장, km)	62.1	신규 5.4 준공 54.2	87	신규 2.5 계속 5.4	13	계속 7.9
- 농생명용지	10,716	3,658	34	1,294	12	5,764
(면적, ha)	9,430	신규 2,359 계속 3,522 준공 1,513	16	신규 2,036 계속 5,881	25	계속 7,917
○ 기타공사비	312	218	70	41	13	53
○ 보상비	291	167	58	24	9	100
○ 시설부대경비	2,143	1,362	64	127	6	654

준공된 간척농지는 농학계 대학 시험포(170ha) 및 농업특화단지(700ha), 농산업 클러스터 단지(300ha) 및 자연순환형 축산에 필요한 조사료단지(242ha)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017년 9월 농업특화단지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농업법인 등)를 선정함으로써 향후 임대 후 본격 영농이 시행될 전망이다.

향후 조성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드론 및 항공방제 등 ICT기술이 접목된 첨단농생명단지, 저탄소·저투입의 자연순환형 농업에 의한 고품질 친환경농업생산단지, 농업생태 및 농촌관광자원이 융·복합화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림 2-2-26 새만금 농생명용지 이용계획도



(2)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

새만금복합단지와 고군산군도를 연계한 국제해양 관광벨트화 및 도서지역 주민 등으로 이용자의 교통편의제공,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는 익산방국토관리청에서 2008년2월~2009년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개 구간으로 나눠 2009년도에 착공하였다.

2016년도에 2개 공구가 준공하여 개통 중에 있으며, 나머지 공구는 2017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 진행중에 있다.

표 2-2-69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장래
계	296,777	259,542	25,746	7,609	0
고군산군도1	49,122	44,448	4,674	0	0
고군산군도2	117,974	117,974	0	0	0
고군산군도3	129,681	97,120	21,072	7,609	0

(3)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새만금 신항은 서해 중부권 물류 거점항으로 새만금 배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 처리를 위해 2030년까지 총 2조 6,187억원(재정 1조 4,807억원/민자 1조 1,380억원)을 투자하여 안벽 18선석, 호안 16km 등을 단계적으로 건설해 하역능력 17,291천 RT/년을 확보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국제적인 항만의 비즈니스 및 물류, 관광레저 등의 복합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표 2-2-70 새만금 신항만 개발 현황

구 분	선박규모	총 계		2020년(1단계)		2030년(2단계)	
		선석수	계획연장	선석수	계획연장	선석수	계획연장
자 동 차	2만 DWT	1	225	1	225	-	0
일반잡화	2만 DWT	14	2,970	2	420	12	2,550
컨테이너	2천 TEU	2	515	1	265	1	250
크 루 즈	8만 GT	1	405	-	-	1	405
합 계	-	18	4,115	4	910	14	3,205

새만금 신항 개발은 2011년 항내 정온 수역을 확보하기 위한 방파제 축조공사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약 3,36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11년12월~2016년11월까지 총 사업비 2,884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3.1km를 완공하였다

2017년 12월 새만금 내부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공사와 가호안 및 매립호안축조공사 착공으로 새만금 신항만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는 환경적 측면 등을 고려한 인공섬 형태의 새만금 신항만과 기존 방조제를 연결하기 위한 진입도로 0.7km와 외해로부터 파랑 차

단을 위한 호안 2.4km를 축조하는 공사로서 공사비 1,145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 11월 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공사’는 진입항로 준설 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매립을 위한 호안 2.9km를 축조하는 공사로서 공사비 817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 3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새만금 신항만 1단계 건설로 인해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D)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항만 건설투자와 항만운영의 지역경제효과로서 2조 1,729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고용 유발효과는 1만 5,822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의 2단계 사업에는 8만톤급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전용부두를 건설할 계획임에 따라 신시도 고군산 마리나 항만, 고군산 군도를 비롯해 새만금 방조제 등을 연계한 물류와 관광이 복합된 항만으로 건설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환경해권 경제 공동체의 중심지로서 국가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새만금 관광활성화 지원

새만금 복합도시용지 등 내부개발에 선행하여 새만금 상설·부대공연 등 이벤트 개최, 새만금 대표축제인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새만금 생태체험공간, 생태탐방로, 어린이 생태체험 학습랜드 조성사업 등을 통해 새만금을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있다.

2017년에는 새만금 관광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상설공연 141회 개최, 방조제 거점거리공연 30회를 실시하여 방문객 41,000여명을 동원하였다. 해당 사업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지역브랜드 제고, 지역관광사업 발전 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한 6/2~4일 3일간 야미도리 새만금오토캠핑장에서 열린 캠핑형 축제인 제1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에는 총 200캠프(내국인 100캠프, 외국인 100캠프) 2천여명의 관람객이 참가, 축제 만족도 5.4점(7점 만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축제 만족도 평균(5.2점)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SNS 누적 조회수 11만 건을 달성하였다.

표 2-2-71 최근 3년간 지역 기여도

(단위 : 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4.08(81.6점)	5.95(85점)	4.44(88.6점)
문화향유 기회 제공	4.23(84.6점)	질문내용 변경	4.43(88.6점)
지역 브랜드 제고	4.12(82.4점)	6.00(85.7점)	4.49 (88.7점)
지역관광사업 발전기여	4.23(84.6점)	6.04(86.3점)	4.44(88.8점)

* 「2017년 새만금 상설공연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중 발체(2015년, 2017년 5점 척도, 2016년 7점 척도)

5. 기업도시 활성화로 지역경제 기여

(1)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

해안·내륙권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발전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거점 권역을 선정하여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등의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남해안권 8개 시·군에서 추진한 연계 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방식을 여타 지역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 선정(2016년6월30일)된 전남-경남 연계권역에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업 기본구상을 수립(2017년11월)한 다음, 후속 사업으로 지역계획 시범사업 신규 예산 50억원을 편성,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 시행방안 연구 등 9개의 실행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고(예산 24.5억원), 추가로 7개 신규 권역의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예산 16.5억원)도 수립 중에 있다.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발굴이 미흡하고, 교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곤란하므로,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간 연계 협력을 기초로 발전거점형 지역계획시범사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고, 중앙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로 국토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6. 국제자유도시 조성지원으로 외자유치 촉진

(1)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 무사증(한달간 비자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 입국 대상을 190개 국가로 확대하였으며, 투자진흥지구 도입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을 조성하였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및 지방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해외자본 유치를 위하여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도입하여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3년 또는 5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하여 부동산의 간접투자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2년 제주공항과 항만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였고, 2005년에는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2006년에는 평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평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도 전역을 국제회의 개최 도시로 지정하였다.

정부는 위와 같은 다양한 시책의 지속 추진뿐 아니라 새로운 시책 발굴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IT·BT 등 첨단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제주도를 금융과 물류가 결합된 종합적 대외거점이자 동북아시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국제 비즈니스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홍콩, 싱가포르 같은 국제적인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 중인 사업의 단지 외 기반시설(진입도로) 건설비를 지원을 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인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주지역의 첫 번째 산업단지로서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원활한 단지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용수 시설 약 25억원, 진입도로시설에 총사업비 약 400억원(L=4.4km, B=20m)을 투입하여 2013년에 완공하였다. 현재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산업시설용지는 100% 분양 완료되었

으며 카카오, 이스트소프트 등 133개 기업이 입주하였다.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은 국내외 기업유치 및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으로서 글로벌 의료 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1단계)에 약 144억원(L=3.24km, B=20~24m)을 투입하여 2017년에 완공하였다. 또한 2017년말 부터는 진입도로(2단계)에 약 140억원(L=1.19km, B=20~24m)을 투입하여 2021년 완공목표에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사업은 2013년 9월 중국 람정그룹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 A지구, 2016년 H지구 건축공사를 착공, 2017년 R지구(콘도, 테마스리트 등) 개장, A지구(테마파크 일부, 컨벤션 등) 개장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귀포관광미항 조성사업은 국가지정 항만인 서귀포항을 비롯한 주변지역을 정비·개발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는 총사업비 약 280억원(L=2.6km, B=20~25m)을 투입하여 2016년에 완공하였다. 영어교육도시는 1단계 시범학교 개교에 맞춰 2013년까지 사업비 약 283억원(L=8.2km, B=20~27m)을 투입하였고, 2017년말부터는 진입도로(2단계)에 약 250억원(L=4.2km, B=25m)을 투입하여 2021년 완공목표에 있다. 현재 영어교육도시에는 3개 국제학교가 개교하여 운영 중이며, 4번째 국제학교 SJA Jeju도 2017년 10월에 개교하여 운영중이다. 2021년까지 약 9천여명의 학생 수용과, 완전한 도시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 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 ECO 개발사업 등 신규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추진하고, 국제학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등 규제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72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 프로젝트 추진현황 사업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 규모	기반시설 국고지원	추진실적
영어교육도시 (2008~2021년)	19,256억원 3,791천㎡	28,3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 09월 : NLCS 및 KIS 국제학교 개교 2012년 10월 : BHA 국제학교 개교 2012년 12월 : 1단계 부지조성공사 준공 2013년 08월 : KIS 고등학교 개교 2014년 07월 : 영어교육센터(교육부) 및 119센터(제주도)개소 2016년 05월 : SJA 국제학교 착공 2017년 10월 : SJA Jeju 국제학교 개교
헬스케어타운 (2008~2021년)	15,674억원 1,539천㎡	13,0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 12월 : 부지조성공사 착공 2012년 10월 : 녹지그룹(中) 본계약 체결 2012년 11월 : 1단계 건축공사 착공 2014년 08월 : 1단계 건축공사 준공 2014년 10월 : 2단계 건축공사(의료시설 포함) 착공 2016년 04월 : 외국인 의료기관 건축공사 착공 2016년 09월 : 부지조성공사 준공
신화·역사공원 (2006~2021년)	24,129억원 3,985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03월 : 부지조성공사 준공 2013년 09월 : 람정그룹(중) 투자계약 체결 2014년 04월 : 항공우주박물관 개관 2015년 02월 : A지구 건축공사 착공 2016년 12월 : H지구 기숙사 착공 2017년 4월 : R지구(콘도,테마스트리트 등) 개장 2017년 12월 : A지구(테마파크 일부, 컨벤션 등) 개장
첨단과학기술단지 (2005~2021년)	5,800억원 1,099천㎡	42,4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년 10월 : 국가산업단지 지정 2005년 06월 : 부지조성공사 착공 2010년 01월 : 부지조성공사 및 지원시설 준공 2016년 12월 : 133개 기업 입주(시설용지 100%분양) 2017년 12월 : 공공임대주택 착공 추진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2014~2021년)	2,195억원 848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 05월 :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 2015년 06월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16년 12월 :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국가산업단지 지정승인
서귀포미항 진입도로 (2006~2016년)	2,223억원 232천㎡	26,2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6년 05월 : 문화재청 기본계획 승인 2007년 12월 : 기반시설공사 착공 2009년 10월 : 1단계사업 준공 2012년 04월 :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지정

제6절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1.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6차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1) 농식품ICT융복합추진

우리농업이 가진 개방화와 고령화, 영세한 영농규모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를 농업에 융복합하여 농산업을 첨단화·과학화하여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0년부터 농업·농촌분야에 현장 적용이 가능한 ICT 융복합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생산, 유통, 소비, 농촌분야 등에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여 왔다. 농업·농촌분야의 ICT 융복합 모델개발은 지자체와 농업경영체, 관련기업,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지역에서 ICT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여왔다.

또한, 기 추진한 과제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산이 가능한 모델을 발굴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시설원예·과수·축산분야에 ICT를 융복합하여 농장을 PC나 모바일을 통해 원격으로 자동 조절하여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스마트 팜 확산사업을 추진하여왔다. 스마트 팜은 농가에서 ICT 장비를 통해 축적된 농장의 환경정보와 생육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자기 농장에 맞게 적용하여 생산량 증가, 품질향상 및 노동력 절감 등의 성과를 통해 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2017년에 스마트 팜 도입농가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도입 후 생산량이 30.1% 증가하고 고용노동비가 8.6% 감소하였으며 1인당 생산량도 36.9%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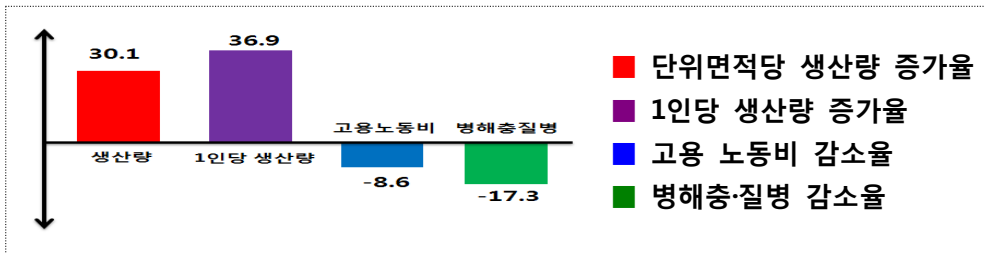
표 2-2-73 농식품 ICT 결합형 모델

(단위: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ICT 결합형 모델 개발	7	7	7	8

그림 2-2-27 스마트팜 도입농가 생산성 분석(2016년11월)

(단위 : %)



(2)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시장개방 등으로 농어업 분야의 ‘생산 위축→일자리 축소→농어촌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단순한 농외소득 증대 차원을 넘어 지역의 다양한 부존자원을 산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농어촌 지역 부존자원의 융복합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종전에 개별사업으로 시행하던 13개사업(①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②농어촌테마공원조성, ③농공단지조성, ④어촌관광개발, ⑤복합낙시공원조성, ⑥완전미브랜드파워현대화시설, ⑦한우명품화, ⑧FTA대비 축산업경쟁력제고, ⑨전통발효식품전용공장건립, ⑩향토산업육성사업, ⑪특화품목육성사업, ⑫김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 ⑬고효율 어류사료생산 공장건립)을 1개의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하여 농어촌의 다양한 부존자원을 기반으로 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을 다각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에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수산분야는 해양수산부로 이관하고 사업명칭을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으로 변경하였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농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농산물가공업체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국고에서 50%, 지방비와 자부담을 합하여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사업비는 농촌 자원의 융복합화를 위한 농산물의 생산·유통·제조·가공 기반 구축은 물론, 농촌 체험·관광기반 구축 및 농공단지 조성 등 농촌 산업 집적화 기반 조성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재원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여된 재원 한도 내에서 자체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설계하는 포괄보조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앙부처는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포괄보조금 통합 첫해인 2010년에는 16개 내역사업에 대하여 2,359억원, 2011년에는 17개 내역사업에 대하여 2,435억원, 2012년에는 13개 내역사업에 대해 2,031억원, 2013년에는 6개 내역사업(유형)에 2,280억원(수산물야 174억원 포함), 2014년에는 1,763억원을 각각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는 6차산업화지원 유형을 추가하여 7개 내역사업에 1,578억원, 2016년에는 1,567억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농촌공동체우수사업지원을 추가하여 8개 내역사업에 1,563억원을 지원하여 총 매출액 1조 1,609억원, 총 고용인원 5,438명 등 농촌지역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였다. 다만 종전의 여러 개별사업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부사업은 목표와 내용이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고 있다.

표 2-2-74 2016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주요 추진 성과

구 분	총 매출액	총 고용인원
2016년 실적	1,160,897백만원	5,438명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참여한 제도가공업체에 대한 매출액과 고용인원임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2011년에는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취지 및 사업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원가능한 사업내용을 ①농수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 지원, ②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③체험·전시 지원, ④농어촌체험·관광지원, ⑤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지원 등 5개의 사업 유형으로 재구성하여 사업의 정체성 확립을 기하였다. 2012년에는 지역별 산업화 대상 부존자원의 유형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실제로 사업화가 가능한 다양한 산업화 사업모델(모형)을 개발·보급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다.

2013년에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이 해양수산부의

수산부문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부문으로 분리되어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이원화되었다. 2013년부터 ①농촌산업화기획·평가체계 구축 지원, ②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지원, ③농산물제조가공지원, ④농산물 체험·전시지원, ⑤농촌 체험·관광지원, ⑥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개보수 지원 등 6개의 사업 유형으로 재구성하여 지자체에 대한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사업추진 역량 제고와 사업비 집행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컨설팅·모니터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4년에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시행지침 및 모니터링 지침 등을 개정하여 지자체 사업담당자 교육을 하였고, 예산집행 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우수사례(8개) 선정 및 사례집을 발간하여 지자체의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공유함으로써 포괄보조사업의 조기 정착을 유도 하였다.

(3)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우리 농촌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1995년 957만명→2015년 939만명) 농가소득 수준이 정체(2005년 31백만원→2016년 37백만원)되며, 도농간 소득격차가 12.9%p로 확대(2003년 76.4%→2016년 63.5%)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도모하며, 농업의 6차 산업을 중심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다.

농촌관광은 그동안 양적 성장 단계(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현황 : 2011년(550개소)→2017년(1,002개소)에서 질적 발전단계로 접어들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자원의 서비스 품질수준을 제고하고 특색 있는 농촌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농촌관광사업 등급제를 통한 농촌관광 사업주체들의 자발적인 서비스 수준 제고를 도모하고, 계절별·테마별 홍보콘텐츠 발굴로 주변을 확대하였으며, 체험마을 공동협의체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해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게 되었다. 이로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방문객은(2015년 8.7백만명→2017년 10백만명) 연평균 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농촌관광사업 등급제는 농촌 관광사업을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를 통

해 시설 및 서비스 등 수준을 차별화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품질개선 유도를 통한 수익창출을 도모하고 소비자에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도입되었다. 2013년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정에 따라 2013년 118개, 2014년 286개소, 2015년 349개소, 2016년 453개소, 2017년 484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 등급을 결정하였다.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 4개 부문에 대해 1~3등급과 등급 외를 부여하며, 4개 부문 1등급인 마을에 대해 으뜸촌(2014년 15개소, 2015년 8개소, 2016년 28개소, 2017년 16개소)으로 지정하여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07년 웰촌포털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모바일 시대에 적합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주요 SNS채널(카카오톡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등)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지역자원과 연계된 농촌관광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트렌드 분석을 통해 월별로 테마를 정하여 매월 5개 내외의 농촌관광자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였다.

2006년부터 역량 있는 지역인재를 활용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경영을 통한 농촌체험휴양마을 발전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제도를 운영(국비·지방비 각각 50%)하고 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역량강화 교육(2017년 1,124명 대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촌체험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및 배포하고 체험 및 화재 보험 등에 대해 지원(국비·지방비 각 50%·30%, 자부담 20%, 2014년 체험 432개소·화재 304개소→2015년 체험 689개소·화재 531개소→2016년 체험 750개소·화재 633개소→2017년 체험 805개소·화재 717개소)하고 있다.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코레일 및 민간여행사와 협업하여 철도 인프라와 지역 관광자원, 농촌관광을 연계한 여행 상품을 개발(2017년 70종)하여 운영하였다.

농촌관광 방문객 수는 2013년 823만명에서 2017년 1,050만명으로 체험형 관광 및 환경친화적 관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촌관광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농촌자원과 융복합한 패키지 상품 개발과 지역주도의 발전체계 구축, 온라인 예약결제 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표 2-2-75 농촌관광 방문객 현황

(단위:만명,개소)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농촌관광 방문객 수(만 명)	823	829	871	917	1,050
농촌관광 등급평가 개소수(개소)	200	300	350	453	511

(4) 농촌축제지원사업

문화관광축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 마을·권역단위의 축제를 지원하여 농촌지역 활력 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2008년부터 농촌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촌의 생활·전통·경관·체험 등을 소재로 한 마을·권역단위 축제 지원을 통해 도농교류 촉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유도하고 있으며, 축제 개최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 개발, 운영·홍보·컨설팅 및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3년 38개, 2014년 41개, 2015년 42개, 2016년 54개, 2017년에는 57개 선정하여 매년 농촌축제 10억원(국고 50%, 지방비 50%)을 지원하여 개최하였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축제에 대해 농촌축제자문단 등의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축제 콘텐츠를 보완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였으며, 축제 전반에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축제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라는 농촌축제 지원 취지가 확산되었다.

앞으로도 전문가 컨설팅 및 타 사업 연계·협력 등을 통해 축제의 품질을 높이고, 기획·준비·실행 등 축제 전반에 가급적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주민 중심의 농촌축제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표 2-2-76 농촌축제지원 현황

(단위:개소)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농촌축제지원 사업량(개소수)	38	39	41	54	57

(5)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최근 어촌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 2차, 3차 산업을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복합(6차)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2013년도부터 지자체 포괄보조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 지자체에 교부하여 지자체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다. 어촌체험관광지원, 수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수산물유통시설건립, 6차산업화지원 등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48억원을 지원하여 어촌 지역의 부존자원 발굴과 산업화에 필요한 생산, 유통, 제조, 가공, R&D, 유통, 마케팅 등의 기반 구축과 향토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기반 조성을 지원하였다.

표 2-2-77 연도별 예산 지원액(제주포함)

(단위 :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7,463	17,329	16,819	20,979	32,263

향후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명회 개최 및 포괄보조사업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사업자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침체된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과 어촌자원의 다양한 산업화를 통해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6) 국가어항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개발하는 국가어항은 1972년 최초로 62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에 착수한 이후 111개항을 지정하여 개발 중에 있다. 2017년까지 4조3,471억원을 투입하여 102개 항을 완공하여 91.9%의 완공률을 보이고 있다.

향후 어항시설의 투자 방향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기 시설물 보수·보강, 신규 어항 개발과 소득 창출형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함으로써 투자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표 2-2-78 연도별 예산 지원액

(단위 :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39,958	140,300	168,400	181,380	190,005

(7)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1)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산업화 도시화 등 경제성장과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고속철도 확충 등 시간 및 공간 이용 패턴의 변화로 야외휴양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휴양치유, 숲 체험, 산림교육 등 다양한 영역으로 복합적인 산림휴양서비스에 대한 국민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1988년 자연휴양림을 최초 개장한 이래 2017년까지 166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었으며, 2017년에는 전 국민의 30%가 넘는 1천 6백만명 이상이 자연휴양림을 방문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민여가 활용의 대표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1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개소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한편 다양화되는 국민수요에 대응하여 숲속야영장,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 다양한 유형의 산림휴양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79 자연휴양림 이용객 추이 (2008~2017년)

(단위 : 만명)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용객	763	869	944	1,060	1,161	1,278	1,359	1,562	1,524	1,671

2) 지자체 도시숲 조성

도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숲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정화 및 기후조절, 소음감소, 정서함양, 도시생태계 보전 등의 효과가 있다. 2017년에는 1,244억원을 투입하여 녹색쌈지숲(127개소, 65ha), 산림공원(50개소, 109ha), 생활환경숲(84개소,

62ha)과 가로수(767km), 명상숲(84개소) 등을 조성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1,309억원을 투입하여 전국에 녹색쌈지숲, 산림공원, 생활환경숲 등 188개소 245ha, 가로수 618km, 명상숲 107개소 등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그림 2-2-28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례



3)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산림 식물자원의 체계적인 수집·보존·증식 및 연구·이용 촉진을 위해 지방수목원과 산림박물관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100억원을 투입하여 지방수목원 31개소(조성 10, 보완 21) 및 산림박물관 6개소(보완 6)에 대한 연차별 사업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10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4) 지역 생태숲 조성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생태숲으로 지정하여 산림식물자원의 자생지내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연학습 및 생태 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7년에는 14억원을 투입하여 총 5개소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24억원을 투입하여 7개소를 지원,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다양성의 유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5) 지자체 치유의 숲 조성

현대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만성질환 및 아토피·천식 등 환경질환이 증가하여

건강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환경이 각종 질병의 원인인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심리안정 및 각종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사례들이 소개되면서 잘 가꾸어진 산림자원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산림치유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산음 치유의 숲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47개소의 국·공립 치유의 숲이 조성되어 운영 중이며, 2017년 한해에만 전국적으로 1,257천명이 방문하였고, 최초 운영을 시작한 이래 9년간 6,065천명이 치유의 숲을 방문하였다. 2017년에는 전국 36개소 치유의 숲 조성 3개소 보완 사업에 232억원을 투입하였고, 2018년에는 31개소의 조성 1개소의 보완을 위해 2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표 2-2-80 치유의 숲 이용객 추이 (2009~2016년)

(단위 : 천명)

연 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용객	4,807	1	76	158	315	787	1,153	1,173	1,144	1,275

현재, 질 높은 산림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산림치유지도사 제도를 운영 중이며, 국립 치유의 숲의 경우 배치기준에 따라 1개소 당 3명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산림복지법」 제정에 따라 전문업 등록제¹⁷⁾ 운영 등 산림치유지도사의 장기일자리 전환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6) 지자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산림휴양 패턴 또한 단순 휴양 위주에서 가족 및 동호회 중심의 모험·체험 산림휴양 수요와 산악레포츠, 생태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수준 높은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생태·휴양문화·교육 등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2008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까지 부산, 경북, 전북, 전남, 강원, 충북, 충남에 7개소를 조성하였고, 2018년 경기, 경남 등 4개소에 대

17) 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산림복지 전문업으로 등록한 단체를 통해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전문가를 상시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프로그램 운영 용역 등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기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도입하는 제도

하여 조성 중에 있다.

7) 지자체 숲길조성·관리

여가시간 증가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증가하는 국민의 산행수요에 부응하고 산악사고 예방 및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훼손 등산로를 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산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평적 개념의 새로운 산행문화 변화와 참여계층의 다양화로 트레킹, 산림레포츠, 휴양·치유 등 이용자의 수요에 맞추어 즐길 수 있도록 숲길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조성하고 있다. 2017년에는 298억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정비 1,217km, 트레킹길 조성 342km, 등산로 연결 사업 3개소 등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29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8) 지자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국민소득의 증가로 여가활동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레저 스포츠 참여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연지형의 특성을 활용하여 모험·체험 또는 극기 등 색다른 체험과 활동을 추구하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레포츠 활동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여건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산림레포츠를 한 곳에서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44억원을 투입하여 산림레포츠시설 3개소에 대한 연차별 사업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7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9) 지자체 유아숲체험원 조성

유아숲체험원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로써 2012년 8개소 조성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전국에 146개소의 국·공립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되어 운영 중이다. 최근 들어 산림교육의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유아숲체험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2017년 한 해에만 1,618천명이 유아숲체험원을 방문하였다. 2017년에는 3,670백만원을 투입하여 36개소를 조성·운영하였으며 2018년에는 3,665백만원을 투입하여 30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10) 지방정원 조성

삶의 질에 대한 인식변화로 다양한 정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되고 정원을 통한 교육·체험·휴양·치유 등 新 패러다임의 서비스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원을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 기여할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정원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2016년 3개소를 시작으로 2017년 2개소를 추가 조성 중에 있다. 개소당 10ha이상의 공유지와 6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서, 1년 설계 3년 조성으로 총 4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예산의 투입은 4년간 배분하여 투입하게 되고 2016년에는 536백만원, 2017년에는 3,505백만원으로 총 4,041백만원이 투입되었다.

정원인프라 확충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관심을 유도할 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하여 정원문화가 생활 속에 내재화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조성이 완료된 지방정원에는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전문가 2명과 정원관리사 30명을 배치하여 전문성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8) 숲길네트워크 구축

국민소득 수준 향상과 여가시간 증가로 매년 늘어나는 산행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등산·트레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훼손된 등산로 정비, 트레킹길 조성 등 숲길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등산로 정비

등산수요의 증가로 등산객이 집중되는 생활권 등산로와 백두대간, 정맥 등의 등산로는 훼손상태가 심각해지고 있어 산림생태계 복원 및 안전한 산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인위적 구조물은 최소화하는 등 산림생태계 및 경관보전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국고 31억원을 투입하여 등산객 증가로 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백두대간·정맥 등산로 정비사업 108km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11억원을 투입하여 훼손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의 등산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2) 트레킹길 조성·관리

등정(登頂) 및 주능선 종주에서 탈피하여 수평적 개념의 새로운 산행문화 변화에 따라 등산로에 집중되는 이용자 분산을 통한 산림생태계 훼손 완화와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마을과 마을을 잇는 트레킹길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숲길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2017년에는 국고 19억원을 투입하여 백두대간 트레일, 한라산둘레길 등 국가 트레킹길 13km 조성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26억원을 투입하여 농·산촌 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험중심의 건전한 산행문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국가 트레킹길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조성된 트레킹길을 보전하고 안전과 편의가 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리산둘레길 등 주요 숲길 6개소는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행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복지인프라로서 숲길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고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산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숲길조성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2-2-81 추진성과 성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숲길 조성관리 투자액	5,090	3,362	6,643	5,052	20,147

2.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1)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우리나라는 칠레(2004년 4월 1일), EU(2011년 7월 1일), 미국(2012년 3월 15)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었으며, 캐나다, 호주, 콜롬비아, 중국과는 협상이 타결되어

세계 50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이처럼 FTA확대로 RCEP(중국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6개국 중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15개국과 모두 FTA발효 또는 체결한 상황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산 과실과 수입산 과실과의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더불어 국내 과수 생산·유통구조는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편되고 있어 정부의 과수산업 발전 방향도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개방 하에서도 지속 가능한 과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FTA 과수경쟁력제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와 앞으로 진행될 각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응하여 과수농가에 대한 FTA 보완대책을 수립(과수산업발전대책, 2011년 5월)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외국산과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과수농가의 생산시설을 현대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확보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을 구축해 왔다.

특히, 고품질의 과실생산과 유통체계 정착 등 과수 생산·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여건반영, 투융자 효율성 제고 등 사업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가 수립한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엄격히 심사하여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방자율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학·연 전문가로 「민간평가단」을 구성하고, 2단계 평가를 통해 성공가능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사업의 지원조건에 따라 우량품종갱신, 지주시설, 비가림시설 등 고품질생산, 생산비·에너지절감 시설 및 장비, 방풍·관수 등 재해예방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에는 65,232백만원, 2014년에는 53,741백만원, 2015년에는 53,624백만원, 2016년에는 51,822백만원, 2017년에는 48,668백만원을 연도별로 지원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고품질시설현대화 83,000ha(2017년까지 67,900ha지원)를 목표로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표 2-2-82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성과

(단위:천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10a당 생산액 및 증가율(%)	-	2,818	2,813	4,206
	(신 규)	70%	42%	346%

* 과실생산액 산정방법 변경으로 생산액 통계가 변경되었고, '17년 실적은 변경된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수치로 목표치

를 초과달성하게 됨

(2)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우리나라의 과수농가 호당 경영규모는 0.8ha 수준으로 1ha미만이 81.2%를 차지하며, 전체농가 중 61%(122천호)가 60세 이상 고령농가로 기술개발이나 자본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에 비해 경영규모가 적어 기계화가 어렵고, 경사지 경작로 등 기반정비가 미흡하여 노동력 소요가 많은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과수 생산단지 육성을 목적으로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을 통해 용수 개발, 농작업로 확·포장 등 과수 생산·유통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품목별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에 필요한 핵심 재배법을 확대하고 적정 규모의 영농규모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실천하며, 생산조직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업농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사업은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30ha 이상)를 대상으로 관정, 양수정 등 용수원을 개발하고, 진입로 및 경작농로 확·포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 등 시장개방 대응 및 과수산업 기반유지를 위해 2015년도부터 사업지원범위를 최소 10ha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사업시행주체는 시·도지사(시장·군수)로 기반조성비는 국고 80%, 지방비 20%이며, 사업기간은 2년으로 1년차에 30%, 2년차 70%를 지원한다. 연차별로는 2013년 119억(567ha), 2014년 137억원(413ha), 2015년 141억원(604ha), 2016년에는 143억원(603ha), 2017년에는 167억원(700ha)을 지원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과실전문생산단지 11,600ha(2017년까지 7,954ha) 기반조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2-2-83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성과

(단위:천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10a당 생산액 및 증가율(%)	- (신규)	2,818 70%	2,813 42%	4,206 346%

(3)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다국적기업(Sunkist, Dole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대표과실브랜드를 육성하고 지역단위 군소브랜드를 통합한 과실주산지 중심의 지역 공동브랜드를 육성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과실브랜드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을 통해 생산자를 조직화·규모화 하여 계획적인 생산과 품질 관리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춘 과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합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마케팅 능력과 시장 교섭력을 증대하여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과수 소비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사업시작 전년도에 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브랜드 경영체의 적합성, 생산·유통 혁신 실적 및 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은 사업비 조정 등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이 시작된 2007년에는 전국공동브랜드(Sunplus) 1개와 7개의 지역공동브랜드 지원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3개 브랜드경영체(전국, 밀양, 김천)에 975백만원, 2014년에도 3개 브랜드경영체(전국, 밀양, 김천)에 905백만원, 2015년에는 3개 브랜드경영체(전국, 전북, 김천)에 875백만원, 2016년에는 4개 브랜드경영체(전국, 전북, 전남, 경북)에 1,145백만원, 2017년 4개 브랜드경영체(전북, 전남, 경북, 제주)에 1,41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017년까지 21개 과실브랜드를 육성하였으며, 과실브랜드 경영체의 유통비율은 16.8%를 차지하였다. 2025년까지 브랜드경영체 28개소를 육성하고, 과실 유통량 중 브랜드경영체의 유통비율을 30%까지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난립하고 있는 과실 브랜드를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광역 또는 시·도단위 브랜드경영체에 한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2-2-84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추진성과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브랜드 유통비중(%)	-	18.3	18.4	16.8

표 2-2-85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사업비(국고)	15,447	2,227	2,507	2,256	1,847	1,375	1,335	975	905	875	1,145	1,415
브랜드경영체 수	20	8	3	1	2	1	1	1	-	1	2	1
(당해연도 국고 지원)		(8)	(11)	(12)	(7)	(5)	(5)	(3)	(3)	(3)	(4)	(4)

(4)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과수 생산과 유통을 주도할 품목 조직을 육성하고, 산지유통체계를 개선하는 등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과수 주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거점산지유통센터(APC) 건립을 지원해왔다. 특히, 한·미 FTA 등 추가 시장개방에 따라 국내 피해 과수농가의 안정된 영농보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수 주산지에 집하, 선별, 포장, 저장 등이 가능한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산지농가 조직화와 유통 규모화 및 시장교섭력 제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과 교섭력을 높이고, 상품화 시설 및 위생시설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년으로 1년차 40%, 2년차 60%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 지원 사업 규모를 현행 APC규모(처리물량 1~2만톤)와 병행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중형 규모(5천톤~2만톤)의 APC 건립 지원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활성화 하였고, 공공유형보다 일반유형(생산자단체 등) 위주로 지원하여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총 23개소에 1,278억 원을 지원, 건립하여 산지유통의 중심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 66억원, 2014년 62억원, 2015년 67억원, 2016년 69억원, 2017년 42억원을 건립 및 보완사업으로 지원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거점산지유통센터 35개소 건설하여 주요과실 전체 유통량의 30%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표 2-2-86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추진성과

(단위: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매출액 및 증가율(%)	-	239 76.5%	241 77.9	246 80.9

(5) 농업기반정비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개발 여건이 양호한 논,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안전·편의영농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국제 곡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국내 곡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논에서의 밭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기반시설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재해에 취약한 시·군 관리 노후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하고, 상습 침수 농경지에 대한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2010년부터 광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재원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지자체별로 부여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지자체 특성에 따라 농업 생산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설계·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는 포괄보조제도의 취지에 따라 최소한의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법정 계획 수립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 지원조건은 국고 80%, 지방비 20%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개별사업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 보조율을 적용하고,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부터 변경된 보조율(국비 80%)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 2-2-87 농업기반정비사업 내역사업별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사업 주요내용
발기반 정비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 구축, 발작물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
대구획 경지정리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한 우량농지를 재정비하여 대형기계화 영농 기반 조성으로 토지 및 노동의 생산성 증대와 농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보전, 관리기반 조성
논의발작물 재배기반지원	기존 용·배수체계 활용이 가능한 집단화된 논을 대상으로 암거배수, 송수관로, 농로개선 등을 정비, 논에 발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국제곡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곡물자급률 제고
시·군수리시설개보수	노후·손괴 등으로 기능상실 및 재해취약한 시·군관리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편의 제공
소규모 배수개선	50ha 미만의 상습 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침수피해 방지

발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2009년까지는 개별사업으로 추진해오다 2010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수산분야를 포함한 광특회계 농어업기반정비사업으로 추진하였다. 2012년에는 농어업기반정비사업에 논에 발작물 재배유도를 위한 논의발작물 재배기반지원사업을 신설하였다. 2013년에는 재해예방을 위한 시·군관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새로이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조직개편에 따라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에서는 수산 분야를 제외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50ha 미만 상습 침수 농경지에 대해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침수피해 예방으로 안전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에는 9개 내역사업에 국고 1,915억원을 지원하였다. 계정별로 분류해 보면, 지역개발계정(일반 시·도)으로 발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 논의발작물재배기반지원, 시·군수리시설개보수, 소규모배수개선 등 5개 내역사업에 국고 1,709억원을 지원하였고, 제주계정(제주특별자치도)으로 발기반정비, 소규모배수개선, 농업인교육훈련, 농업경영컨설팅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 원원종 및 원종생산 등 6개 내역사업에 19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세종계정(세종특별자치시)으로 시·군수리시설개보수 등 1개 내역사업에 10억원을 지원하였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총 1조 3,113억원(국비)을 투자하여 농업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 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발기반정비사업은 집단화된 밭 180천ha를 대상으로 1994년도부터 2017년까지 115.8

천ha(64.4%)를 추진하여 가뭄에 대응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 기계화 영농 기반 구축 및 농산물 운송을 위한 접근성 제고 등 발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한편, 농업기반정비사업은 생산기반 지원을 통해 소득 증대 측면도 있지만, 가뭄, 태풍, 집중호우, 해일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목적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2-2-88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성과

(단위: 천ha, %)

구 분	총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이후
발기반정비 실적(누계, 천ha)	180	105.9	109.4	112.6	115.8	64.2
발기반정비율(%)	100	58.8	60.8	62.6	64.4	35.6

(6) 친환경농업기반구축

1)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은 생산·인증·유통과 소비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지는 정부차원 친환경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본 사업은 정책추진의 세부분야 중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목적을 갖는 생산부문에 해당한다. 사업의 목적은 친환경 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대상자는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이다.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 친환경농업 교육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사업규모에 따라 지구당 1~3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자연경관과 농업환경을 유지·보전하며,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도록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5년부터 미생물배양시설, 퇴비장,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시설

등의 주요시설을 지원하며 마을 단위 10ha 이상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해왔고, 2017년에는 지구 13개소 63억원(국고)을 지원하여 2017년말 지구내 친환경 인증면적이 63.2%로 전국 평균(4.9%) 보다 13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등 친환경농업기반구축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크게 기여 하는 등 사업대상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및 전국에 대한 파급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7년말 현재 1,186개소를 설치·완료하였으며, 2022년까지 매년 18개소 이상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2-2-89

친환경농업지구 신규조성 현황

(단위:개소)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친환경농업지구 신규조성	35	28	18	15	13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은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경종(耕種)과 축산을 연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지화·규모화 하여 단지 내에서 자원순환형 농업이 이루어지도록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저탄소 자원순환형 모델 구축을 하기 위함이다.

사업대상자는 지역 농·축협 또는 농업법인으로 사업면적 200ha 이상 확보가 가능한 조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은 벼, 채소, 과수, 축산 등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가능한 모든 작물이다. 또한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시설·장비, 농축순환자원화시설 등을 지원하며 개소 당 20 ~ 100억원(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을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3개년(1년차 10%, 2년차 50%, 3년차 40%)간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다. 1년차에는 사업계획 수립, 설계, 장비구입, 시설 착공 등을 지원하고, 2년차에는 주요시설·장비의 설치, 3년차에는 사업 마무리를 통해 완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목표를 위해 본 사업에서는 200ha 이상의 경지에서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하며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향후 국내 친환경 농업의 이상적 모델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였다. 그동안,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농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여 농업환경개선, 친환경 농업육성, 자원순환형 농업단지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 정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2017년말 단지내 친환경 인증면적이 24.4%로 전국 평균(4.9%)보다 5배 정도 높고, 가축분뇨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보전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등 친환경 농업 인프라 구축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2017년말 현재 48개소를 선정·지원하였으며, 민원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축순환자원화센터는 2014년부터 신규지원을 중단 하였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내실화를 위해 2015년부터 광역단지·마을단위지구사업의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지구사업’으로 통합, 중·소규모지구(곡류는 50ha이상, 원예 등 10ha이상 집단화된 농지구역을 우선 선정) 집중 육성을 위한 사업구조 개편을 실시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사업성과가 우수한 단지에 대하여 시설·장비 확충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을 도입하여, 2015년에 3개소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2017년 3개소 15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기반구축을 통해 친환경농업이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표 2-2-90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신규조성 현황

(단위:개소)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신규조성	2	4	-	-	-

표 2-2-91 인센티브 지원 현황

(단위:개소)

구 분	2015	2016	2017
인센티브 선정·지원	3	-	3

(7) 농기계임대사업

농업기계 공동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발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 2014년 336개소에서 2017년 443개소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지속 확대하였으며, 발작물 주산지에는 파종(이식)부터 수확까지의 농작업을 기계화 할 수 있도록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을 2017년 20개소 지원하였고 2022년까지 총 1,478개소(누계)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이 증가에 따라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여성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도 79개소를 지원하였고 향후 전국의 임대사업소에 연간 60개소씩 지원 확대할 계획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확대로 이용농가수도 2014년 190천호에서 2017년 251천호로 증가하였으며 농기계당 이용일수도 10.5일에서 12.5일로 이용효율이 증가하여 기계화가 미흡한 분야의 기계화를 촉진시켜 기계화영농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아울러 농기계 이용으로 힘든 농작업에서 벗어나게 하여 농업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간접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표 2-2-92 임대농기계 이용률 현황

(단위:일/대)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임대농기계이용률(일/대)	10.5	11.5	12.0	12.5

(8)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인삼은 역사적으로 왕실이나 국가의 중요한 재원으로 국가가 전매제도를 통해서 독점 관리한 중요한 농작물이었다. 1899년 대한제국 궁내부 내장원에 삼정과를 설치하여 관리하였으며, 1908년 홍삼전매법(대한제국 법률 제14호)을 제정하여 국가에서 직접 경작, 홍삼을 제조하여 유통·판매한 이후로, 오랫동안 정부에서 직접 산업을 관리하여 오다가 1996년 농림수산부로 이관되면서 홍삼전매제를 폐지하고, 자율경쟁체제로 산

업이 전환되었다. 이후 산업 자율화의 영향으로 인삼 생산(1996년 10,147톤 → 2017년 23,310) 및 수출(1996년 113백만불 → 2017년 158백만불)이 크게 증가되는 등 국내 인삼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삼산업은 오랜 전매제 실시의 영향으로 낙후된 생산·유통구조를 보이고 있다. 인삼은 포전매매, 자가출하 형태로 금산군 인삼시장을 통해 위탁판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공용 인삼은 계약재배를 통해 인삼공사 등 가공업체로 유통되고 있다. 또한 인삼의 종류별로 홍삼은 인삼공사 또는 인삼농협으로, 백삼은 금산지역 제조업체 중심으로 생산·유통되는 등 다양하고 복잡한 유통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다수가 영세한 제조·가공업체는 낙후된 시설과 개별 브랜드로 인해 개별업체의 수출시장 개척 및 제품개발 등에 한계가 있어 산업 전체적인 경쟁력이 높은 편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협상(2012년) 결과 현행 고율관세(222.8 ~ 754.3%)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등 시장개방 가속화, 경기침체·건강기능식품 등 대체 상품과의 경쟁으로 인한 내수 부진과 수출 정체, 경작자·생산액 감소 등으로 인해 인삼산업에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필요성에 대한 업계의 요구와, 인삼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 등으로 인해, 인삼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마련하고, 국내 인삼산업의 규모화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관된 산업체계 구축을 통해 조직화·규모화·브랜드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인삼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대상자는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인삼 전문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식품사업, 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농업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등 인삼 생산·유통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인삼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의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관련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을 위해 개소당 21억원(생산·유통시설현대화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국고 30%, 지방비 60%, 자부담 10%)의 규모로 2년간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삼류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정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국정검사기관인 농협경제지주 한국인삼검사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인삼류에 대한 검사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국정검사기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검사장비를 교체하고 검사항목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분석장비 등 시설 현대

화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선정은 인삼 주산지 지역의 인삼 산업여건 및 전망, 사업별 목표 설정, 농가조직화 및 조직원에 대한 교육, 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추진 방안 등 지자체의 종합적인 인삼산업 육성전략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의 심사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더불어 사업대상자의 투명한 운영과,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 사항 해결 등을 위하여 마케팅·컨설팅과 관련한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표 2-2-93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연 도	개소수	사업 대상자		예산액(국비)
2010년	4개소	신규 4 (1년차)	경기 화성시(화성인삼영농조합법인)	420
			강원 홍천군(강원인삼농협)	420
			충남 금산군(금산인삼농협)	420
			충남 부여군(백제인삼농협)	420
2011년	5개소	계속 4 (2년차)	경기 화성시(화성인삼영농조합법인)	420
			강원 홍천군(강원인삼농협)	420
			충남 금산군(금산인삼농협)	420
			충남 부여군(백제인삼농협)	420
		신규 1	충남 금산군(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	415
2012년	3개소	신규 3 (1년차)	경기 안성시(안성인삼농협) *단년사업	630
			충남 서산군(서산인삼농협)	315
			경북 영주시(중앙인삼영농조합)	315
2013년	6개소	계속 2 (2년차)	충남 서산군(서산인삼농협)	315
			경북 영주시(중앙인삼영농조합)	315
		신규 3 (1년차)	경기 포천시(포천홍삼영농조합법인)	315
			충북 괴산군(괴산홍삼영농조합법인)	315
			충남 금산군(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	407
2014년	3개소	계속 2 (2년차)	경기 포천시(포천홍삼영농조합법인)	315
			충북 괴산군(괴산홍삼영농조합법인)	315
		신규 1	충남 금산군(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	500
2015년	3개소	신규 2 (1년차)	경기 이천시(경기동부인삼농협)	315
			경북 영주시(풍기인삼영농조합법인)	315
2016년	2개소	계속 2 (2년차)	경기 이천시(경기동부인삼농협)	315
			경북 영주시(풍기인삼영농조합법인)	315
2017년	3개소	신규 2 (1년차)	충북 증평군(충북인삼농협)	315
			경북 영주시(풍기진생영농조합법인)	315
		신규 1	충남 금산군(농협경제제주 인삼검사소)	650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생산권역별 생산자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인삼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농가를 조직화하고 해당 지역의 인삼산업 여건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과 차별화 방안, 소비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인삼의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불어 지자체에서 인삼자원을 연계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된 인삼전문생산단지는 11개소로, 권역별 전문생산업체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인삼제품 생산을 통해 소비 확대 및 새로운 시장 개척에 기여하여 2010년 수출시장이 77개국에서 2017년 현재 10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주요 인삼 거점지역의 사업추진은 완료되었으나, 기존 생산유통시설의 노후화, 시설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인삼전문생산단지 조성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9)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종자는 농산물의 생산성 및 시장성 등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로 국가의 농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다. 또한, 종자산업은 종자주권 및 식량안보 확보와 직결된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육성이 필요한 산업이다.

현재 다국간 FTA 체결로 국가 간 무역 개방이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종자시장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는 다국적 종자 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출에 따라 농업인들의 로열티 지급액 증가 등 국내 종자산업 타격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도부터 주산지 지자체 위주로 우량종자 증식·보급시설을 지원하여 종자생산 단가를 낮추고 지역에서 자급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씨감자, 버섯종균, 약용작물, 마늘종구, 종묘삼, 딸기원묘 등 12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7개소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88개소 지원을 통해 지자체 종자산업기반 구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2년 1,150톤 규모로 생산되던 씨감자 보급량이 매년 증가(2013년 1,300톤 → 2014년 1,900톤 → 2015년 2,094톤 → 2016년 2,259톤 → 2017년 2,512톤)하였으며, 딸기의 국산품종 점유율(2013년 75% → 2014년 86.1% → 2015년 90.8% → 2016년 92.9% → 2017년 93.4%), 화훼분야(국화) 국산품종 점유율(2013년 24.5% → 2014년

27.9% → 2015년 29.7% → 2016년 30.6% → 2017년 31.6%), 장미 국산품종 점유율(2013년 26.9% → 2014년 29.0% → 2015년 28.8% → 2016년 29.5% → 2017년 29.8%) 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또한, 종자가격 안정을 통한 농업 생산비 절감으로 농산물 가격 경쟁력 확보와 종자확보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으며, 우수종자 보급을 통해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안정적 농산물의 공급으로 물가 불안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향후 종자공급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현장 요구에 맞는 사업내역 조정(보조비율, 지원품목 등) 등을 통해 국내 농업 및 종자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표 2-2-94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추진성과

(단위:톤,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기반구축사업지구의 씨감자 생산량(톤)	1,300	1,900	2,094	2,259	2,512
국산품종 점유율(딸기)(%)	75.0	86.1	90.8	92.9	93.4
국산품종 점유율(화훼)(%)	25.7	28.4	29.3	30.1	30.7

(10)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FTA/DD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농업경영체 및 지역농산업의 잠재력, 내생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에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시스템농업을 구축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새로운 농업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2004년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 시 지역농업 발전계획의 하나로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포함하였고, 이후 지역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 첫해인 2005년에는 20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2007년까지 3년간 지원하였고, 2008년에는 22개 본 사업단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이런 가운데 지역단위의 분산·중복투자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간 연계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시·군 단위 클러스터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에서 추진하고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광역클러스터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역할을 정립하여 2009년에 12개 사업단, 2011년에 13개, 2014년에 10개, 2015년에 2개, 2017년에 3개 사업단을 선정하였다.

그 동안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단의 매출액이 사업추진 첫 해와 비교하여 각각 2.5배(2005년선정), 5.5배(2008년선정), 1.9배(2009년선정), 3.5배(2011년선정), 15.2배(2014년선정)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생산 위주의 농산업 정책에서 벗어나 2, 3차 산업으로 폭넓게 성장한 결과로 평가된다.

표 2-2-95 지역전략식품산업 사업단 매출액 조사결과

(단위 : 억원, %)

구분	2005년	20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B)	비율 (B/A)
‘05년선정 사업단	1,081 (A)	3,659	2,779	2,969	2,661	2,119	4,539	2,670	2,863	2,726	2.5
‘08년선정 사업단			250 (A)	515	731	1,195	2,823	1,418	1,319	1,386	5.5
‘09년선정 사업단					519 (A)	1,220	3,407	2,123	1,162	1,031	1.9
‘11년선정 사업단							35 (A)	48	63	123	3.5
‘14년선정 사업단								5(A)	27	76	15.2
‘15년선정 사업단									14(A)	13	0.9

그간 ‘클러스터사업단’의 명칭은 참여주체와 시설의 지리적 집중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으나, 지리적 집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2010년 4월 미래 농산업을 주도할 전략적 농수산물 관련 주체(산·학·연·관)가 협력하여 식품산업을 육성한다는 의미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으로 개칭함과 아울러, 사업단 선정시 단순 생산 및 유통 위주의 사업단은 선정을 배제하는 등 사업추진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였다. 2011년 사업단 선정부터 산·학·연·관, 생산-유통-가공-판매-소비 등 관련 주체간 네트워킹 및 R&D, 마케팅 등의 시너지 효과 창출 이외에 식품산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 식품산업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하였고, 그 결과 13개소가 선정되었다.

2013년까지는 지원 전년도 하반기에 사업단이 선정되어 사업단 구성, 사업방향 설정 등에 1차년도를 소비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2014년 선정 사업단부터는 지원 전전년도에 예비사업단을 선정하여, 1년 동안 컨설팅 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농업과 연계한 농식품경영체 육성을 목적으로 1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지자체 자율편성사업(포괄보조사업)으로 이관하여 신규사업 선정, 예산편성 권한 등을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추진방식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으로 채택하였다. 중앙부처는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농산업을 혁신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건실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11)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개발하고 다양한 1·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역특화사업 내의 세부사업 형태로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신설하였다. 2005년 제1차, 2006년 제2차 향토자원 발굴조사를 통해 선정한 49개(2005년 19개, 2006년 30개) 자원에 대해 ‘시·군별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제시된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07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부터는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향토자원 발굴 형태의 사업에서 공모형태의 사업(정부편성)으로 변경하였으며, 신규 선정한 사업대상 30개 향토자원에 대한 산업화 지원을 위해 사업설명회,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지역의 사업추진 역량 강화와 사업추진 마인드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또한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사업평가를 통해 환류되도록 하였고,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통해 성과관리도 강화하였다. 또한 2012년, 2013년도에는 농촌 부존자원에 대한 가치 및 산업화 가능성 등의 분석에 기초한 향토산업 등 농촌 산업화 지원을 위해 161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원일제조사 및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1,011개의 자원을 발굴하였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 정부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 중인 6차산

업화를 위해 농촌의 향토자원을 지역 핵심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내 향토 자원의 산업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등), 하드웨어(생산시설, 판매시설 등) 분야를 포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 평가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지자체 자율편성사업(포괄보조사업)으로 이관하여 신규지구 선정부터 예산편성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추진방식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으로 채택하였다. 중앙부처는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2014년도 도입한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되는 R&D분야에 대해 외부로부터 사전 사업성 평가를 받도록 조치하는 등 제품 등의 연구개발이 사업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의 부존 향토자원 230개를 발굴하여 산업화를 추진하고, 2017년 현재 추진중인 향토산업육성사업 61개 지구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동안 농업 생산 위주의 1차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산·학·관·연의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상품화 기술개발, 농업의 융복합 산업화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 1·2·3차산업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광역사업단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표 2-2-96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지원현황

(단위:개소, 억)

구 분	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지원대상(개소) (최종사업지구)	242	18	28	28	28	29	26	24	19	14	16	12
예산 (억원,국비)	3,184 (322)	43 (43)	90 (90)	286 (136)	344 (53)	406 (0)	409 (0)	438 (0)	397 (0)	328 (0)	224 (0)	219 (0)

* 2007~2008년도 선정지구에 대한 마무리 사업비까지는 군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에서 지원하고, 2009년도 신규 선정 분부터는 군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에서 지원, 2015년부터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 및 제주계정에서 지원

** ()는 군특 또는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지원액

표 2-2-97 2017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주요 추진 성과

(단위:억, 명)

구 분	사업참여기업매출액 (사업지구당)	일자리 창출실적 (사업지구당)
2017년 실적	48억원	37명

* 2014~2017년 착수지구(6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

(12) 국가어항(제주)

제주지역 국가어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어선의 안전정박·수용으로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수산물 생산, 유통 등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발전 핵심기반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양수산부의 지원(국비 100%)을 받아 직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은 신양항, 모슬포항, 도두항, 김녕항, 위미항에 219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보강 포함) 및 물양장을 건설하였으며, 2017년 말까지 제주 국가어항에 총 2,454억원을 투자하였다. 2018년에도 신양항 등 5개항에 2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표 2-2-98 제주지역 국가어항 기반 조성 실적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예산(억원)	182	223	223	219
지원 항	신양항, 모슬포항,	신양항, 도두항, 위미항, 하효항	신양항, 모슬포항, 도두항, 김녕항, 위미항	신양항, 모슬포항, 도두항, 김녕항, 위미항

(13)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하여 남획, 지구온난화 등으로 고갈되어가는 수산자원을 회복·증강시키고 갯녹음(바다사막화) 등으로 황폐해져가는 연안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우리 바다를 풍요롭고 건강하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1년 1월에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은 갯녹음 개선을 위한 바다숲 조성(2030년까지 54,000ha 조성),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연안바다목장 조성(2022년까지 50개소 조성) 등의 적극적 자원조성과 총허용 어획량 조사사업 등이 있다.

2013년에는 총 695억원을 지원하여 바다숲 1,388ha, 바다목장 20개소 조성, 연어 등 건강종자 7,695천 마리를 생산·방류하였고, 2014년에는 총 632억원을 지원하여 바다숲 2,574ha, 바다목장 24개소 조성, 연어 등 건강종자 22,517천 마리를 생산·방류하였다. 2015년에는 총 700억원을 지원하여 바다숲 3,236ha, 바다목장 19개소 조성, 연어 등 건강종자 16,847천 마리를 생산·방류하였다. 2016년에는 총 689억원을 지원하여 바다숲 3,064ha, 바다목장 19개소 조성, 연어 등 건강종자를 18,763천 마리 생산·방류하였다. 2017년에는 총 766억원을 지원하여 바다숲 3,043ha, 바다목장 19개소 조성, 연어 등 건강종자를 14,633천 마리 생산·방류하였다.

표 2-2-99 연도별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 실적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바다숲(ha)	2,574	3,236	3,064	3,043
바다목장(개소)	24	19	19	19

주요성과로는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연안바다목장 조성으로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획량 증가 및 낚시객 등 체험관광 증가로 지역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바다목장 조성지역 어업인 설문조사 결과, 어업인 소득증대 증가율이 조성전과 비교 시 7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자체평가보고서).

표 2-2-100 수산자원조성 지역 단위노력당 어획량(CPUE)

(단위:kg/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72	3.11	3.2	3.76	3.5

수산생물은 해양환경의 영향으로 기관통제가 어렵고 먹이 생물량의 한계 등으로 어획량의 지속적인 증가는 불가능하나 수산자원조성 지역 단위노력당어획량(CPUE)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다소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로지스틱 곡선)¹⁸⁾. 2018년에는 735억원을 지원하여 바다숲 3,108ha, 바다목장 20개소 조성, 연어 등 8,200천마리 생산·방류, 수산자원의 서식장·산란장 조성 등을 통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4)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영세한 지역 수산가공업체의 설비 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을 통한 수산물의 고부가치 산업화와 수산식품의 안정성 확보 도모를 위해 본 사업은 1987년부터 추진되었다.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해 2014년에 71개소의 수산물 가공시설에 23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산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고부가가치의 수산식품으로 가공하여 지역 가공업체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2015년에는 84개소에 248억원, 2016년에는 77개소에 224억원, 2017년에는 95개소에 239억원을 지원하여 지역 수산가공 인프라 등을 확충을 통한 수산식품의 수출확대 및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견인하였다.

18) 로지스틱 곡선(Logistic curve, 개체군 성장곡선) : 환경 저항에 의한 환경수용 능력 한계에 따라 지속적 증가가 제한되는 생물 성장곡선

2018년에는 총 62개소의 수산물 가공시설에 18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산지가공시설사업 58개소에 163억원을,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4개소에 17억원을 지원하여 수산 가공시설의 확충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해 수산물의 고부가가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수출확대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표 2-2-101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연도별 국고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합 계	71	28,310	84	24,758	77	22,426	95	23,906
수산물산지가공시설	52	19,117	73	18,607	72	18,343	83	17,809
수산물처리저장시설	10	6,143	4	1,751	5	4,083	12	6,097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9	3,050	7	4,400	-	-	-	-

(15)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지역별로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품질의 수산식품개발, 브랜드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4년까지 총 807억원을 지원하여 부산 수산식품가공산업산학연구센터, 목포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 여수 수산물종합센터, 부안 수산물종합유통물류기반시설, 영광 염산항화도바다매체타워 총 5개소가 완공되었다. 2015년에는 군산 수산물연구가공단지, 영덕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가 완공되어 총 7개소가 조성되었다. 2016년에는 고창 풍천장어웰빙센터, 포항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 2개소가 추가로 완공되어 총 9개소가 조성되었다.

2017년에는 울진 붉은대게식품산업단지가 완공 되어 총 10개소가 조성되었으며, 신규 2개소(화성, 태안)를 포함한 거점단지 5개소에 국비 128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기존 거점단지의 시설 활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및 상품화 사업 1개소에 5억원을 지원하였다. 2018년에는 공모를 통해 거점단지 1개소를 추가 구축함으로써 지역별 특화된 수산식품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가 조성되면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산물가공업과 지역의 문화·관광산업의 연계 발전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표 2-2-102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연도별 국고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	사업개요	'10까지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이후
합계	18개소	20,015	14,360	16,750	15,400	14,235	15,496	12,548	13,750	30,839
부산	수산식품기공산업산학연구센터('09~'10)	1,650	-	-	-	-	-	-	-	-
목포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08~'11)	5,772	5,350	-	-	-	-	-	-	-
여수	수산물종합센터('09~'13)	3,984	2,000	5,000	3,516	-	-	-	-	-
영광	염산항화도바다매체타워('09~'13)	1,500	1,000	1,500	1,000	-	-	-	-	-
부안	수산물종합유통물류기반시설('09~'12)	1,500	1,000	2,450	-	-	-	-	-	-
고창	풍천장어웰빙센터('10~'15)	250	1,760	1,000	1,100	100	3,290	-	-	-
군산	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12~'14)	0	-	300	4,484	4,966	-	-	-	-
영덕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11~'14)	0	250	4,500	2,500	5,250	-	-	-	-
포항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09~'15)	5,359	3,000	2,000	2,100	2,144	4,300	-	-	-
울진	붉은대게식품산업단지('13~'16)	-	-	-	300	700	3,406	3,273	-	-
충북	충북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13~'16)	-	-	-	400	700	3,050	4,060	-	-
속초	속초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14~'17)	-	-	-	-	375	1,000	-	6,125	-
보령	보령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15~'17)	-	-	-	-	-	450	3,965	-	4,381
남해	남해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16~'18)	-	-	-	-	-	-	375	3,375	3,583
화순	화순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16~'18)	-	-	-	-	-	-	375	3,000	3,625
화성	화성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17~'19)	-	-	-	-	-	-	-	375	7,125
태안	태안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17~'19)	-	-	-	-	-	-	-	375	4,625
신규	신규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18~'21)	-	-	-	-	-	-	-	-	7,500
포항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및 상품화('16~'17)	-	-	-	-	-	-	500	500	-

(16) 수산어업행정지원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 이후, 수산어업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수산사무소의 업무, 조직(30개 수산사무소)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2009년 5월)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이관된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청사·지도선 운영비 및 행정정보화 비용 등을 2010년부터 지원하였다.

수산사무소는 신지식어업인, 수산업경영인, 어업인 기술교육훈련(순회기술교육 등), 어업경영지도(양식품종 경영분석 등)등의 수산전문인력 육성 및 경영관리, 수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한 양식어장 항생제 및 위해물질 안전관리,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수산종묘 방류사업(방류용 종묘검사), 양식어장 관리 및 적조대응을 위한 자연재해예방 지도, 양식어장 질병관리, 적조 예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수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교습어장 운영, 어업인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원활한 수산어업지원업무를 위해 2013년도부터 2015년도 까지 매년 22,87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개의 수산사무소(태안사무소) 청사를 신축하여 23,521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수산사무소 청사 3개소(군산, 목포, 거제사무소)를 신축하여 25,52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로도 수산어업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표 2-2-103 수산어업행정지원 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22,871	22,871	23,521	25,521	22,871
인건비	18,944	18,944	18,944	18,944	18,944
기본경비	2,265	2,265	2,265	2,265	2,265
청사·지도선 운영	1,263	1,263	1,913	3,913	1,263
행정정보화	399	399	399	399	399

(17) 어업인교육훈련(제주)

1981년부터 선진수산기술 전파와 수산전문인력 육성,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확산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제주지역의 어업인이 전문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해 어업인후계자 및 자율관리공동체의 역량강화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자율관리공동체 확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도부터 2016년

도까지 매년 12백만원을 지원하여, 2014년에 60명, 2015년에 79명, 2016년에 95명, 2017년에 55명의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8년에는 100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향후에도 제주지역 어업 전문인력 육성과 선진수산기술 전파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표 2-2-104 어업인교육훈련(제주) 지원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어업인교육훈련(제주)	12	12	12	12	48
교육인원	60	79	95	55	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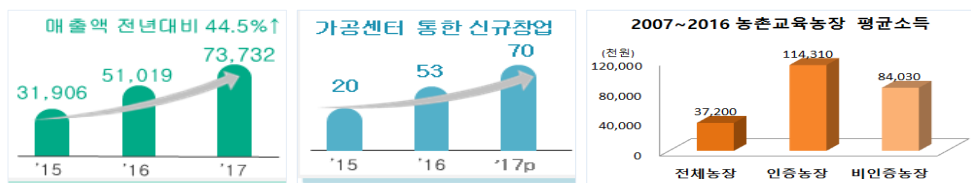
(18)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은 지역농산물 가공 및 농업인 창업 등의 소득활동을 지원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증진 및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지원, 전통식문화계승활동지원, GAP활용할랄식품자원화, 농가형가공상품마케팅기술지원, 농촌교육농장육성, 농촌자원 활용체험시범, 6차산업수익모델시범사업으로 사업비는 14,836백만원이다. 농업인의 농외소득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자가 생산 또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외식·체험·마케팅기술 등을 지원하여 시범사업 참여 경영체의 매출액 증가 및 농업인 창업,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표 2-2-105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사업의 주요 성과

2017년도 주요성과

- 시범사업 경영체 매출액 증가 : (2016년) 51,019천원 → (2017년) 73,732천원, 44.5%
- 지역 일자리 창출 : 526명(상시 229, 비상시 297), 농업인 신규창업 : (2017년) 70명
-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 ('17) 57(누계 300), 인증농장 평균소득: 114,310천원



주요성과를 보면, 시군농업기술센터의 가공창업 역량을 강화하여 농업인 창업보육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조성(2017년, 69개소)하고 운영 매뉴얼 배부(500부)하였으며 시제품 개발(223건), 가공기술이전(101건), 창업코칭(1,320건)을 실시하였다. 가공상품 개발(68건), 특허등록·출원(5건), 상표등록(20건), 홍보(153건)를 지원하였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을 34개소 지원하였고 3년차 사업장(2015년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장당 평균 매출액은 10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4.5% 증가하였다. 농업경영체에서 생산한 가공상품의 판로확보를 지원하여 체감성과를 높이기 위한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사업을 10개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였다.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기초한 올바른 식생활문화를 전 국민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한국전통식문화 및 지역 향토음식에 특화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강사양성 9명, 창업 8명, 자격증 취득 4명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그리고학교 교과과정과 농업·농촌의 자원을 연계하여 현장 체험학습 공간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을 48개소에 추진하여, 2017년까지 총 621개 농장을 조성하였다. 2017년도 성과는 방문인원 43,910명(농장평균 1,097명), 농장소득 3,845,305천원(농장평균 80,111천원)이며 체험프로그램 만족도 89.4%로 나타났다.

지역 내 자원(지역생산 농산물, 역사·문화자원, 지역 협력 공동체 등)을 활용하여 1차×2차×3차 산업을 융·복합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6차산업수익 모델시범사업으로 참여농가 자체교육 및 컨설팅(308회), 경영체간 연대·협력체계 구축(45건)으로 시범사업 조직 역량을 강화하였고 농업인 창업지원(8개소) 등 지역 일자리 창출(상시 44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19)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은 시·군 여건에 맞는 주요품목(사업)을 소득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교육·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시군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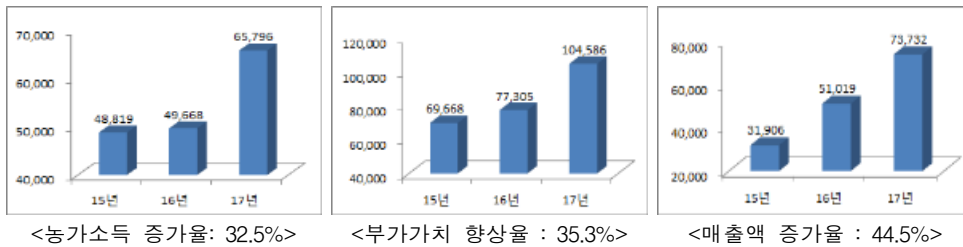
선정하고 사업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세부사업은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비교우위품목경쟁력제고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지역 특화품목 육성 기반조성, 사업추진 전담조직 및 지역협의체 운영, 참여 농업인단체 교육, 생산·가공·유통·체험분야 연구성과 현장기술지원 등 1·2·3차산업 연계 지원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지역농업 특성화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2017년 지역농업특성화시범사업의 사업량은 59개소(경제계정 1년차 25, 2년차 30, 제주계정 4)이며 사업비(국비)는 9,714백만원이며 개소당 사업비는 사업계획 및 추진결과 평가에 따라 135~205백만원씩 차등 지원하였다. 한편 비교우위품목경쟁력제고사업은 8개소에 국비 800백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별 비교우위 품목 육성을 위한 품질인증, 생력화기술, 상품화, 품질유지 기술 등을 투입하였다.

사업단계별(계획-실행-성과) 성과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2017년 신규시군 공모(2016년7월~9월, 서면·발표심사), 사업 추진 전 시군별 사업계획서 컨설팅, 사업 중간단계 추진현황 모니터링(연중) 및 1년차 시군의 중간평가(2017년9월, 서면·발표심사), 추진결과를 통한 2차년도 사업비 차등배정, 우수시군 시상(2017년12월)으로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사업 참여 농업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가 현장 컨설팅·교육(825회)을 추진하고 센터·농가·대학·연구자와 함께 지역내 협의체 구성하여 사업 참여조직 인력화를 구성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1,034회)하는 등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특화품목 재배, 상품성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 등 R&D 연구개발 기술투입(114건), 지자체·정책사업 연계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대내외협력 추진(87건),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상품 개발(224건), GAP·HACCP 등 품질인증(24종)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사업 주요 추진성과는 농가소득이 전년대비 3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지자체 역점사업의 추진체계 구축으로 고품질 재배기술 향상, 특화품목 생산·유통·판매 등을 통한 시장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하여 농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29 2017년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추진성과



2018년도에 지역농업특성화사업 29개소 4,850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을 통해 육성된 지역특산품목을 활용한 융복합산업을 추진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농업인 실질 소득을 창출하고 우수 경영체 육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 지역농촌지도활성화지원

1)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농작업과 관련된 작업자세 개선, 중량물 운반작업의 개선, 작업능률 향상, 특정 신체 부위에 의한 반복 및 과도한 힘이 필요한 작업의 개선 및 생물학적·화학적 유해요인의 개선 등을 위한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작업부하 경감, 작업능률 향상 그리고 인간공학적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수행하였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여성화로 농작업 재해 증가 및 건강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의 만성질환 중에서도 농작업과 관련이 깊은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서 농업인 종사자가 비농업인의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농업활동으로 인한 작업 위험요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계화되기 어렵고 신체에 무리가 오기 쉬운 농업활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사업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였다.

사업비는 개소당 50백만원(국비·지방비 각각 50%)을 지원하여 해당 작목의 농작업 여건 파악과 필요 편이장비의 조사, 선정, 보완 및 개발, 평가 등 전문가 컨설팅을 통

해 지역별·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의 보급, 편이장비 사용 전·후 작업특성 조사·분석 및 작업자 만족도 평가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7년 전국 138개소 3,495(남성 2,628, 여성 867)명이 편이장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다. 참여인원에 대한 남녀성비의 차이가 가장 적은 곳은 경기지역(남자 58%, 여자 42%)이었고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충북지역(남자 92%, 여자 8%)이었다. 전국에 보급된 편이장비는 총 9,797점으로 방제기(24.2%), 동력운반차(15.2%), 손수레(15.1%), 작업의자(6.1%)와 전지가위(4.8%) 순이었으며 작목별로는 과수(사과, 복숭아, 딸기 순), 채소, 식량작물 및 특용작물(주로 버섯류) 순이었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 및 각종 농부 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 농작업 피로회복 교육과 컨설팅 등을 수행하였는데 경기 용인에서는 화훼 유통 및 활성화 방안, 농작업 재해예방·농기계 안전사용의 내용으로 화훼분야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추진하였다.

편이장비의 사용효과는 전국 평균 4.56점(5점 척도)으로 충남이 4.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 경남과 전북이 4.6점 순이었다. 충남은 전반적 만족도(4.8), 작업능률개선도(4.8), 피로개선도(4.9), 사업추진성과(4.8), 사업지속여부(4.8) 모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06 2017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사업 추진실적

도	사업 량 (개소)	사업 참여 인원 (명)	보급 장비 (점)	사업성과 분석(%)						
				사용 효과 (점)	농작업 부담율(%)			안전성		생산성
					OW AS	RE BA	RU LA	피로증상 감소율 (%)	통증 감소율 (%)	
계	138	3,495	9,797	4.56	60.3	67.8	63.5	66.4	66.1	64.3
경기	12	239	566	4.52	61.5	72.9	57.1	62.9	55.8	60.7
강원	16	465	3,043	4.44	68.4	74.1	72.1	72.6	75.0	58.1
충북	13	183	351	4.60	67.8	71.9	72.4	59.4	81.3	77.6
충남	12	451	1,288	4.82	45.1	79.6	80.3	52.3	67.3	59.1
전북	11	207	212	4.62	61.7	68.1	56.6	65.2	65.0	59.2
전남	21	774	2,155	4.40	57.5	59.6	38.6	62.1	58.8	52.8
경북	18	356	463	4.64	57.1	60.0	59.3	67.9	59.0	69.2
경남	25	575	1,484	4.64	65.2	60.1	58.5	61.1	62.3	61.2
제주	4	106	126	4.39	60.0	64.0	60.0	80.8	79.1	74.8
광역	6	139	109	4.54	58.4	67.8	80.0	79.5	57.3	70.5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련 OWAS(정적인 자세 평가-허리, 팔, 다리, 하중)의 경우 편이장비 도입 전 전국 평균 3.29에서 도입 후 1.30으로 전국 평균 6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가능한 빨리 작업자세를 교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작업자세에 아무런 조치도 필요치 않은 상황으로 감소한 것이다. REBA(단순반복작업, 신체부담작업 평가)의 경우 도입 전 8.29에서 도입 후 2.64로 67.8%, RULA(불편한 자세, 근육 사용 평가)의 경우 도입 전 6.12에서 도입 후 2.26으로 63.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로증상 호소율과 통증호소율은 각각 66.4%와 66.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표준작업시간 감소율(농작업효율개선도)은 편이장비 도입 전 578.3시간에서 도입 후 276.6시간으로 평균 64.3%(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전국 평균 62.2%, 제주지역 74.4%, 세종특별자치시 88.3%)가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나 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작업 환경개선을 통한 농업노동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실적과 사업성과를 홍보하고 지난 10년 동안 보급된 편이장비 목록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편이장비 목록집은 국내의 편이장비를 작업유형별로 구분하고 정리한 것으로 작업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관련 사업담당자와 농업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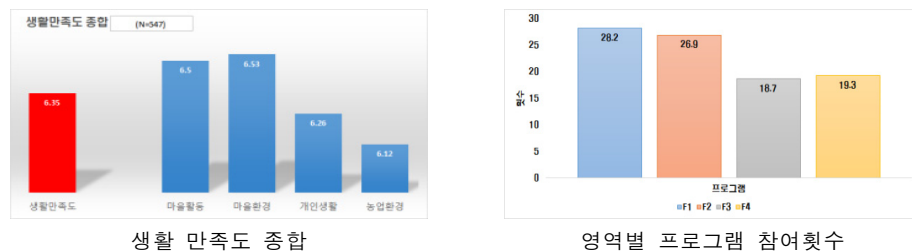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농촌노인의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안전생활·환경정비, 소득·경제활동 등 4개 사업 영역을 지원하여 농촌노인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활력있는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장수마을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833개소 마을을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2년차 64개소, 3년차 32개소 총 96개소에 개소당 40~50백만원씩을 지원하여 48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였다. 영역별 주요 활동을 보면 건강관리 영역에서는 원예치료, 건강체조, 노래교실, 미술치료, 힐링교실, 배드민턴교실, 식생활개선 등을 하였고 학습사회활동 영역을 보면 마음나누기, 효축제, 작은음악회, 문화체험행사, 천연소품 만들기, 도자기교실, 현장체험교육, 민요교실, 한지공예, 풍물교육 등이 있었다. 환경정비 영역은 마

을쓰레기 정리, 꽃길조성, 도로변청소, 화단조성, 마을간판 설치, 쉼터 조성 등 생활환경을 이롭게 하였고, 소득활동 영역은 지역농특산물 판매장, 바른먹거리, 매실청 만들기, 농산물 재배, 농산물 건조, 염색체험, 농식품 가공, 전통주 제조 등의 생산적 활동들을 하였다.

2017년 사업 대상으로 외부전문기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을 통한 마을활동, 마을환경, 개인생활, 농업환경 4가지 요인에 대한 생활만족도가 90.8점으로 ‘매우 만족’ 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해 86.0점보다 5.6%가 높게 나타나 농촌노인의 생활 활력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마을활동 개선 프로그램(경로잔치, 노래교실, 요가, 풍물교육 등), 마을환경 개선(쉼터 조성, 소공원 조성, 산책길 조성 등), 개인생활 개선(건강교육, 웃음치료, 건강체조, 역량강화 교육 등), 농업환경 개선(공동경작지, 수확작물 판매, 농업장비 및 기구 도입 등) 등을 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그림 2-2-30 2016년 사업 생활 만족도 및 프로그램 참여도



농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립적인 공동생활의 터전을 만들고, 농촌지역주민 간 협동심과 마을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마을(n=700)과 일반마을(n=300)의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마을의 종합적인 생활 만족도는 “매우 만족” 하는 수준인 86.0으로 지난해 80.7점보다 7%가 높게 나타났으며, 요인별 만족도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업으로 인한 농촌생활 활력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되어가고 있고 특히 고령화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농촌 환경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체감하는 정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사업과 연계하여 농촌노인들이 생산적인 여가활동으로 지역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고와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농촌노인의 생활서비스 지원단」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농촌노인 SMS(Short Message Service) 활용 교육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농촌노인의 보유기술, 솜씨 등의 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화로 공동체 문화 조성 등 농촌노인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업과 전통문화 영역에서 생산적 복지 활동지원으로 알찬 노년생활을 만들기 위해 2017년 신규사업으로 13개소 추진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촌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솜씨와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노동력 투입이 적은 농작물 생산, 공예품 제작, 단순 가공 등의 소일거리 사업화 지원으로 공동체 활동 및 생산적 복지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지역에서 13개 마을에 731명이 참여하여 소일거리 사업화, 공동체 문화 조성 등을 위해 마을주민교육(115회 2,256명), 마을회의(102회 1,518명)를 추진하였다. 지역별 추진내용으로 충북 보은은 감자·배추 공동경작포를 운영하여 감자 50상자, 배추 1,800포기 생산 및 판매하였고, 충남 서천은 해바라기씨유, 웰빙강정 등 가공제품을 제조·판매하여 1인당 22만원 이상의 소득과 노인일자리 20명 창출하였고, 전북 정읍은 농촌노인 중심의 시루떡카페를 운영하여 월 평균 2백만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전남 고흥은 전통손두부 판매 및 체험 운영으로 소득 27백만원을 창출하였다.

향후 농촌의 고령화 및 생활인프라 부족으로 삶의 질 여건 악화와 농촌노인의 사회적 관계 증진이 시급하며, 보유기술을 활용한 소득창출 사업화, 지역특성을 반영한 고령농 비즈니스 지원 매뉴얼 개발, 농촌노인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구구팔팔 마음 더하기’ 프로그램 보급 등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소외, 우울예방 및 경제·사회적 지원을 위한 생산적 복지 실천 확산으로 건강한 노년 삶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4)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우량종자 및 종묘, 생산기술개발 및 지역실증시험 등 기초기술의 중점보급으로 지역전략작목의 규모화·명품화를 추진하고,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품목

의 우량종자 보급과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생산기반조성과 농업인이 개발한 우수과제(농업인개발과제)의 확대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2017년도 시·도에서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지도기관별 사업계획을 심의하여 최종 137개 사업에 18,64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로 우량종자보급과 지역의 중점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작목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 성과로는,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작목을 중심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품목별 우량종자 보급과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생산기반을 조성하였다. 2017년도 사업 추진 시·군 중 소득조사가 가능한 41개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종합한 결과 사업 전 대비 소득은 26.6%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군별 추진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화성은 기상변화 대응한 포도 과원환경 개선을 통해 약제살포 감소 등 비용 절감 및 품질 향상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를 보였으며, 강원 철원은 여름재배 고품질 과채류 수출단지 조성을 통해 시범사업 전보다 소득이 46.0% 향상 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충북 진천은 지역활력화를 위한 과채 생산단지 조성에 힘쓰고자 수박 신품종(패션수박)을 도입하는 한편, 병해충 방제 시스템 구축과 병해충 진단 기술 향상에 노력해 수박 생산성은 4%, 소득은 12% 상승했다. 또한 최고 품질 멜론 품질향상 단지를 조성하여 사업 전 대비 소득이 9% 이상 증가했다. 경북 상주는 오이를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오이 연작장해 개선으로 상품화율과 생산성을 증가시켜 15% 소득증가와 고품질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의 성과를 제고했다.

앞으로도 지역별 농업인이 개발한 우수한 과제를 확대 보급토록 하여, 지역의 중점 기술을 투입하여 대농민 교육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 작부 체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표 2-2-107

지역별 2017년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국비기준)

시·도·별	시·군·별	2017년 사업내역	사업비
계		137개 사업	18,645
경기	용인	곤충 6차산업화 모델구축 시범	20
	화성	포도과원 기상변화 대응 기반 조성	40
	광주	도시근교 딸기체험형 농장 생산기반조성	20
	여주	고구마 생력재배 기반 조성	20
	양평	곤충산업 전문화 단지조성	20

시도별	시군별	2017년 사업내역	사업비
강원	춘천	과채류 수출단지 생산기반조성	150
	원주	로컬푸드용 딸기재배 시범	60
	강릉	산마늘 생산단지 기반조성	150
	동해	웰빙 산채단지 육성	73
	태백	고랭지 사과 신품종 과원조성	150
	속초	겨울시설딸기 체험단지 조성	100
	삼척	삼척마늘 고품질 경쟁력 제고	100
	홍천	고랭지 대체작목 부추재배단지 조성	150
	횡성	명품토마토 생산단지 조성	150
	영월	강원도형 사과재배모델과원 조성	100
	정선	사과 주력품종홍금보급시범	126
	철원	여름재배 고품질 과채류 수출단지	150
	화천	양념채소 생산·가공·유통 기반조성	100
	인제	씨없는 포도 재배단지 조성	85
	고성	블루베리 안정생산 기반조성	94
	양양	고품질 버섯재배 기반조성	140
충북	청주	청남대 돌레길 3색 포도단지 조성	53
		친환경 토마토 공선 · 출하 기반구축	
	충주	약용 오미자 가공유통센터 조성	50
		우량 품종보급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괴산	시설하우스 친환경 인산 안정생산	150
	보은	명품대추 전국제일 특화작목 육성	240
	옥천	민속채소 6차산업화 활력화 사업	170
	음성	과수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	200
충남	천안	표고버섯 톱밥배지 공동생산기반조성	100
		딸기 우량육묘 생산시설 조성	50
		천안포도 수출기반조성	100
	보령	명품포도 생산기반조성	100
	서산	달래 수경재배 기반조성	100
	논산	미니수박 특화단지 조성	50
		토경딸기 미생물 자동관비 시범	50
	당진	축성딸기 우량육묘 생산기반 조성	80
		고품질 고구마묘 생산기반 조성	100
	금산	특화작목 수확후 관리 부가가치 향상기술	100
		3농혁신 품목별 FTA 경쟁력제고	1,200
	부여	천적이용 친환경 생물적 방제	50
		딸기 우량묘 생산기반 조성	300
	서천	기능성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	100
	청양	수박, 멜론 저온극복 안전생산시범	50
	홍성	클로렐라 시비 과수생산성 향상기술보급	200
		고품질 딸기 안정생산 및 체험시설 기반조성	100
	예산	사과 과원관리 생력화 사업	65

시도별	시군별	2017년 사업내역	사업비
	태안	드론이용 벼 직파재배 경영비 절감	50
		기능성 특수미 우량품종 보급 생산기반 조성	100
		절화류 연작장해개선 및 신소득개발 시범	100
전북	도기술원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750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 사업	250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450
		준고랭지 노지수박 터널재배 기술시범	50
		프리지아 전용 양액재배 기술시범	50
		우리원 개발 벼섯 신품종 보급시범	100
		최고품질 과채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150
		기능성 유용곤충 소득화모델 구축	100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생산시범	100
		시설수박 저온기 착과율 향상 환경개선	60
		친환경 인삼 신기술 시범단지 조성	200
		친환경 천마 신기술 시범농가 조성	100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지원	300
		농업 경영개선 및 소규모 생산품 유통지원	142
		경축순환자원 활용기술 개발사업	210
		동부산악권 신소득작목 발굴 및 재배기술	300
		기후변화대응 녹색농업기술 개발	370
	김제	참다래 특화작목 육성 시범	300
		에너지절감형 시설하우스 재배기술 시범	300
		고구마 무병묘 증식포 기술 시범	300
		농업용 드론활용 벼 경영비 절감기술 시범	50
		벼 안전생산 기술 시범	250
		첨단농업 시설원에 환경개선 시범	300
	정읍	블랙베리 활력증진 기반시설 구축	250
	임실	복숭아 명품화사업	112
		웰빙 약초 재배단지 조성	20
	무주	고랭지 딸기재배 시범단지 조성	100
		고랭지 청정 미나리 생산단지 조성	50
		고랭지 토종다래 재배단지 조성	50
전남	담양	딸기 신품종(죽향) 육묘기반 조성	150
	곡성	소비자 선호형 소과류 특화단지 조성	200
	구례	구례 감 가공품 생산단지 육성	150
	보성	친환경 보성감자 시설재배단지 육성	300
	장흥	한우 유전자 관리 시스템 구축	50
	해남	친환경 유기축산 단지조성	200
	장성	옐로우 프루트 특화 생산단지 조성	270
	신안	생강 확대재배 기반조성	50
경북	상주	상주오이기후변화대응프로젝	400
	경주	토마토수경재배기술보급	250
	경산	우량건전종묘연구기반조성	100
	영양	영양고추 FTA대응경쟁력향상 기술보급	200

시도별	시군별	2017년 사업내역	사업비
	청도	저수고생력화다품종명품화단지조성	400
	고령	원예작물스마트팜농업실현	100
	군위	기존하우스를활용한딸기양액재배	300
경남	양산	자가육묘장 설치 시범	50
		친환경 토양개량제 이용 당근 명품화	50
	의령	의령 표고버섯 톱밥배지 배양센터 설치	250
		토요애한우 우수혈통 관리 및 수정란 생산·이식 기반조성	150
		웰빙과수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인프라 구축	250
		항노화산업 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	150
	창녕	수출토마토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150
	고성	기능성 쌀 생산기반 구축사업	100
		방울토마토 양액재배 시범사업	50
	남해	남해마늘 활용 한우사료 첨가제 급여시범	100
	하동	하동 청학미나리 단지조성	100
	산청	딸기 재배시설 환경개선 시범	165
	함양	고랭지 사과단지 조성사업	150
제주	제주	약용작물안전생산시범	35
	제주	시설하우스 공기교반시범	174
	제주	시설하우스 자동관수관비시스템	91
	제주	GAP모델농가 육성 시범사업	45
	제주	근교농업 맞춤형관비시스템 시범	20
	제주	과수서리방지시범	126
	제주	ICT융합 하우스지킴이시범	79
	제주	월동채소뿌리혹병 방제 기술시범	8
	제주	높은이랑타이백지주재배시범	65
	제주	자연에너지활용난방비절감시범	48
	제주	하우스 고온예방 삼각고시범	59
	제주	농촌마을 경관농업 자원화 시범	75
	제주	농촌자원6차산업활성화사업	245
	제주	단옥수수수량품종시범	10
	제주	국내산약초고품질생산실증시범	30
	제주	월동채소작부체계개선시범	10
	제주	기능성감귤 재배 시범	18
	제주	식량작물 재배시범	45
	제주	친환경농자재제조시범	18
부산	부산	친환경 토마토 생산기반 구축	90
인천	인천	과채류 유묘적심 신기술보급 시범	30
		명품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시범	30
	강화	현장농업 맞춤형 지원사업	100
	옹진	시설원에 환경제어 시범사업	170
대전	대전	노지과원재해방지 및 ICT시범 단지 조성	100
		시설채소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	200
		화훼 육묘자동화 생산기반조성	100
울산	울산	TMF 및 미생물을 활용한 한우 및 흑염소 고급육 생산시범	70

5)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기술개발 촉진과 기술보급 시설확충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지역 농업기술 보급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인 교육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인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최첨단 농업과학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하는 사업이다.

1997년부터 추진한 본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로 전환하여 지원하였으며, 2010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로 전환하였고 2015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으로 전환하였다.

주요사업내용은 도심소재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교외이전에 따른 청사건축, 과학영농시설, 농업인교육관, 다목적 농업인 교육시설, 농촌생활과학관 등 시설비 지원과 지역 특수시설 기자재 구입 및 현지 지도활동 강화를 위한 순회지도 및 상담 차량지원,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한 장비 지원, 농산물가공기술교육장비, 종합검정장비 및 조직배양장비 지원, 기타 도농교류를 위한 체험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도 농촌지도기반조성을 위한 농촌지도시설 지원 사업은 총 82개소로 청사 시설지원, 과학영농시설, 농업인 교육시설을 지원하였다. 2017년까지 추진한 농촌지도기반시설은 1,309건 326,257백만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표 2-2-108 2017년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국비)
계	82	19,746
청사시설지원	12	3,090
농업인교육시설	20	6,928
과학영농시설	31	6,106
테마파크조성	5	1,250
농업 체험관	3	786
기타	11	1,586

농촌지도장비는 순회지도 및 상담차량 지원 38대, 농기계차량 3대, 교육 등 홍보 59조, 가공교육장비 50대, 종합검정장비 50대, 조직배양장비 6대, 기타 미생물배양장비 등 25대 등 총 270종 5,643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사업추진결과 사업참여 방문자 증가율 26.6%로 시설확충 및 개선으로 고객인 농민

의 활용도 증가 및 농촌지도사업 전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시·도별 지원(배정)기준을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에 의거 신청 후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표 2-2-109

2017년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지 원 금 액 (국비)
농촌지도 기반조성	계	352	25,389
	지역개발계정	304	23,102
	제주계정	46	1,987
	세종계정	2	300

본 사업은 앞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지역 농업인의 현장 실증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업기술 수준향상 및 지역특화작목 개발보급을 촉진하여 농가소득 증대하고, 지역 농업여건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장비보강으로 전문농업기술 지도체계 확립하여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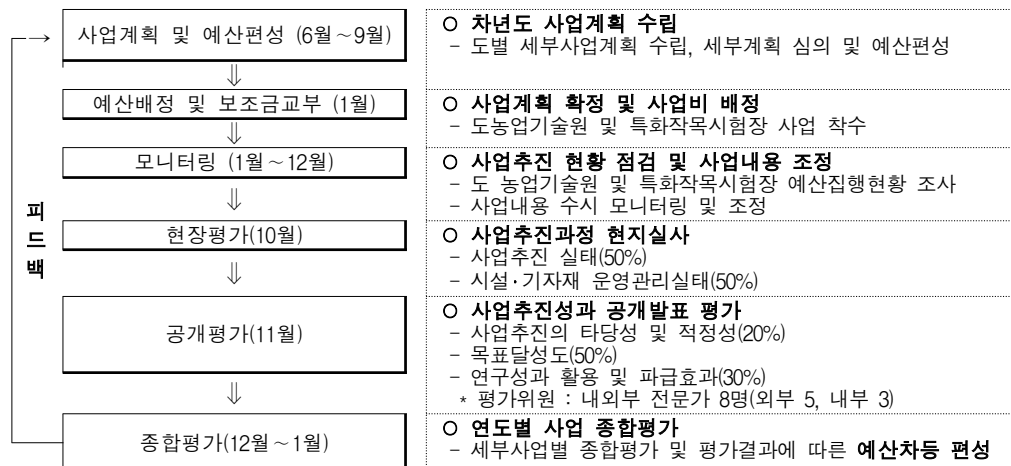
(21)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은 농촌진흥법 제3조(지방농촌기관)와 제25조(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광역경제권의 지역산업 육성”,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녹색성장 및 지역밀착형 R&D 사업 추진” 등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농업연구기반(연구시설·장비) 고도화 지원을 통해 각 도 농업기술원 및 특화작목연구소를 지역농업연구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원된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안정생산기술, 농식품 산업화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며, 개발된 기술을 보급·확산시켜 지역전략작목의 부가가치 증진과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농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1991년부터 시작된 국고보조사업으로 2014년 지역발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역농업 활성화 관련 3개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여 2015년부터 현재의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으로 재편하였으며, 내역사업으로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국비 50%, 지방비 50%)’,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국비 100%)’,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국비 10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까지 국비가 총 4,457억원이 투입되어 도 농업기술원(9개소) 및 지역특화작목연구소(42개소)를 대상으로 노후연구기반 교체 및 신규 연구기반 구축, 29개 산학협력단 운영 및 현장 컨설팅, 그리고 지역 특화작목의 안정생산 기술 개발 및 농업현장 애로해결 기술 개발을 지원하였다.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의 계획수립, 평가 등 사업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2-2-31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 추진 절차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을 통해 2017년에는 총 95억 원을 지원하여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천적 등 유용곤충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 강원도농업기술원의 농식품 실험실 현대화, 충북농업기술원의 마늘 분석 및 시험연구 장비 보강, 충남농업기술원의 ICT 융복합 스마트온실 구축, 전북농업기술원의 파프리카 현대화 비닐온실 순환식 양액관리 시스템 설치, 전남농업기술원의 차 건강기능성 식품소재화 및 제품개발 연구장비 구축, 경북농업기술원의 초분광 과제류 품질분석 시스템 구축, 경남농업기술원의 양파 분자유종 효율증진 연구장비 보강, 제주도농업기술원의 기후변화 대응 온습도 구매 하우스 시설 구축 등 총 102건의 노후 연구기반 교체/보강 및 신규 연구기반을 구축하였다. 지역 산·학·관·연과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율은 10.3%로 목표

치인 8.1%를 초과 달성하였다.

표 2-2-110

2017년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 예산 및 연구기반 구축 건수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정	예산액	비고
계		9,456	102건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경제	8,903	도 농업기술원 연구기반 구축 48건 (시설 21, 장비 27) 특화작목시험장 연구기반 구축 46건 (시설 23, 장비 23)
	제주	553	도 농업기술원 연구기반 구축 8건 (시설 4, 장비 4)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구축된 연구기반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사업으로 총 69억 원을 지원하여 76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논문게재 26건, 학술발표 173건,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14건, 영농활용 기술개발 100건, 기술이전 23건 등의 과학적·사회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표 2-2-111

2017년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주요 성과

(단위: 건, %)

구분	논문게재	학술발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영농활용 (기관채택)	정책제안 (기관채택)	신품종 출원/등록	기술이전	유전자원 등록/평가
성과	26	173	14	100	9	4	23	3

정량적 성과 외에도 구축된 연구기반을 활용하여 칼랑코에 신품종 ‘핑크원’, ‘레드원’, ‘옐로우스타’ 개발 및 일본 시범수출(8,000천주, 11천불) 실시로 수출시장 개척, 강원 다래·머루 와인, 경북 복숭아 청 및 저염장류, 경남 섬애쑥 발효물 등 지역 특산품 가공기술 개발, 특허출원 등 산업화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 본 사업을 통해 신품종을 육성·보급함으로써 수출 및 농가소득 증대, 로열티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제주도 미니씨감자 대량생산 체계 구축으로 종자비용 절감 66억원/연, 상품율 향상으로 인한 조수입 증대 100억원/연 등 다양한 지역특화작목의 안정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체계를 확립하였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총 55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특화작목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 지역 농산업 경쟁력 제고, 농가 컨설팅을 통한

조직화 개선 등 농업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지역농업 활성화로 연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우 수 사 례	포도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와인 개발 및 부가가치 산업화 기반 구축
<p>☐ (품종보급 및 와인 개발) 신품종 육성 및 수출용 와인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량(캠벨 대체), 청포랑(와인용) 등 육성·보급('16) : 3품종 13개소(240a) ○ 신품종 포도 및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와인 개발(4종) ; 기술이전 6개소(3.5억 매출) <p>☐ (수출확대) 검역지원, 수출매뉴얼 보급, 산학연 컨설팅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도수출 : ('15) 130톤(4억원) → ('16) 133.3톤(4.2억원) <p>☐ (농가 소득증대) 보관용이 소용량(75ml) 제품개발 및 보급으로 소득증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소득 : ('15) 75백만원 → ('16) 138백만원, 84% 증가 <p>☐ (농가 조직화) 한국와인연구회(61명) 결성, 제조공정 표준화 등 경쟁력 제고</p>	 

본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추진에 따르는 회원농가의 2017년 평균 소득은 21.8%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에 대한 회원농가 만족도도 88.5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2017, 지역농업네트워크).

표 2-2-112 2016년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 성과분석

사업명	투입액(2017년)	회원농가 소득증가율	회원농가 만족도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	55억 원	21.8%	88.5점

출처 : 2017년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 사업 성과분석(2017, 지역농업네트워크)

앞으로 지역농업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공동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특화작목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컨설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2) 산림경영자원육성

1) 임산물수출 촉진

임산물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촉진하여 영세한 임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수출용 포장용기, 수출상품 선별기 등 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밤 수출 확대를 위해 포장용기, 장비 구입비 3.6억원을 충남 공주·논산·부여 등 3개소에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도 충남 공주·아산·논산·부여 등 4개소에 3.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 목재이용가공 지원

친환경 소재이자 탄소저장고 역할을 하는 목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목재의 이용 촉진·확대를 위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목재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체험 중심형 행사와 초·중·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목공 체험교육을 실시하고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경기 용인, 강원 화천 등 24개소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이 운영 중이며, 2017년에는 인천, 대전, 경기 남양주·이천 등 18개소에 141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8년도에도 대구, 강원 양구, 경남 합천 등 15개소에 12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산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목재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목재이용·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경남 진주에 6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2-113 목재문화체험장 이용객 (2014~2017년)

(단위 : 천명)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목재문화체험장 이용객 현황	638	689	1,403	1,477

표 2-2-114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현황 (2014~2017년)

(단위 : 개소)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현황	6	10	18	24

3) 나무은행

숲가꾸기 및 각종 산림개발지에서 발생하는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가로수 식재, 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나무은행 조성·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전국 71개소(61ha)에서 나무은행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

를 통해 약 76천본의 조경수를 수집하여 66천본(가로수 5천본, 도시숲 39천본, 기타 공공용 22천본)을 식재하여 약 4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창출하였다. 2018년에도 경남 창원, 거제, 양산 등 6개소를 추가하여 44개소에 3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림 2-2-32 전남 나무은행 운영 사례(가로수, 도시숲, 도시공원)



4) 임산물관광자원 산업화

임산물의 생산, 가공·유통 등 임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체험·관광 등 지역의 문화 산업을 연계한 지역 클러스터사업으로 임산물 산지 임업인의 소득증대 지원을 위하여 임산물의 생산, 가공·유통과 전시판매 및 체험시설, 연구시설, 홍보관, 치유센터 및 공원시설, 기타 관광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라북도 완주군 일대에 「조경수 유통단지」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20억원(국비1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23) 임도시설

임도(Forest Road)는 산림 내 도로로서 임산물의 운반, 조림·숲가꾸기, 목재생산 등의 산림경영은 물론 산림보호·관리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며, 임업 기계화를 통한 경영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시설이다. 또한 산림병해충, 산불 등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이면서, 농산촌의 마을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산길 걷기,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산악승마 등 산림 레포츠 장소로서 지역경제와 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목적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임도시설은 1964년 국유림 내 입목 매각지 3개소에 15km를 설치한 것이 임도사업의

효시이며, 1984년부터는 공·사유림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유임도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2017년 말 현재까지 총 21,064km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기본산림관리에 필요한 임도밀도는 ha당 8.5m이나 현재 전국 임도밀도는 3.3m로 38.8%에 불과하여 선진 임업국과 비교하면 매우 빈약한 실정으로 임도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54,000km의 임도를 시설하여 임도밀도 ha당 8.5m달성을 위한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하기 위하여 임도시설 확충과 더불어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1,503억원을 투자하여 720km의 임도를 신설하였으며 그 중 민유임도는 427km를 시설하여 총거리는 14,529km로 임도밀도 3.08m/ha이며, 국유림은 293km를 시설하여 총거리 6,535km로 임도밀도 4.03m로 국유임도가 민유임도보다 0.95m가 더 높은 실정이다.

또한, 집중호우에 의한 재해 안전성 강화와 산림사업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479km의 노후임도에 대하여는 대형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선형변경 등 구조안정화를 위한 개량사업과 기설임도 3,951km에 대하여 항시 임도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실행하였다. 2018년에는 1,558억원을 투자하여 임도신설 8104km, 구조개량 356km, 유지·보수 4,111km를 실행 할 계획이다.

표 2-2-115 2018년 임도시설 추진계획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계 획 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810 (356)	191,936	155,805	24,088	12,043	()내는 구조개량
국유임도	330 (109)	71,501	71,501	-	-	간선임도 187km 작업임도 143km
민유임도	480 (247)	120,435	84,304	24,088	12,043	간선임도 321.7km 작업임도 158.4km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관리 및 임업기계화를 통한 임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제적 효과성을 고려해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임도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신설 682km 중 76.1%인 519km를 집중시설 하였으며, 산지에 적합하고 재해에 안전한 효율적인 임도시설을 위해 학계·과학원·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중앙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임도시설의 설계 및 시공현장에 대하여 토론회 기술 지도를 통해 재해에 안전한 임도

시공을 유도하고 현 정부의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일자리 관련 임대시설 추경사업 39.5km를 국유림에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였다.

산림경영의 필수적이고 국민의 이용이 확대 되고 있는 임대시설에 대하여 학계 및 현장전문가 등과 기술공유 및 소통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국민의 임대이용의 수요를 반영하여 테마임도를 152개소 1,527km를 운영하고, 임대시설의 다양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테마임도」를 발간하였으며, 임대시설 확대를 위한 지자체 설득 및 산주들의 부정적인 인식전환을 위한 전략적인 홍보를 위해 SBS-TV 기획 다큐멘터리(‘숲에서 길을 묻다.’)를 반영하여 임대시설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24) 해양 및 수자원관리

1) 연안정비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연안의 지표가 깎이거나 모래 등이 유실되는 등 훼손된 연안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보전·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연안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연안침식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이상 고파랑의 내습 증가, 연안개발에 따른 인공구조물 설치 증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 공통현상이기도 하다. 연안정비사업은 이러한 연안침식의 심각성이 다각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관광자원인 연안을 보전하고 국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꾸준히 시행하여 왔다.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및 조정, 지역별 사업계획 검토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립된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10~2019년) 및 제2차 연안정비(변경)기본계획(2010~2019년)에 근거하여, 2014년도에는 321억원(지특회계)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등 47개소, 2015년도에는 270억원(지특회계)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광 상하낙월지구 등 46개소, 2016년도에는 291억원(지특회계)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릉 안목지구 등 55개소, 2017년도에는 291억원(지특회계)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산 미포항2지구 등 53에 대한 지자체시행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2017년도까지 125개소(부산 미포항1지구 등)에 대한 지자체시행 연안정비사업이 완료되어 대형 태풍

등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유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표 2-2-116 연안정비사업 추진(지자체 보조)

(단위: 억원, 개소)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예산	321	270	291	291
정비사업	47	46	55	53

연안정비사업은 통상 수년에 걸쳐 비교적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8년에도 291억원(지특회계)의 예산을 투입하여 울릉군 남양3리지구 등 44개소에 대한 지자체시행 연안정비사업이 진행 될 예정이다. 면밀한 연안침식 원인분석과 적절한 대응방안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연안정비사업을 통하여 연안침식 피해가 최소화되고 연안공간의 유실이 방지되어 국민이 소중한 연안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지원

해양관광 기반시설조성지원 사업은 소득변화와 주5일제 등 휴일문화 정착에 따른 다양한 해양관광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22개 사업에 175억원(지특회계)을, 2014년에는 20개 사업에 124억원을, 2015년에는 23개 사업에 137억원을, 2016년에는 36개 사업에 199억원을 투입하여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2017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부산 남항 유람선 선착장 구축사업’ 등 9개 사업을 포함한 39개 사업에 255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시도별 2017년 사업으로는 부산광역시 ‘송도 구름다리(출렁다리) 복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0억여원, 강원도 ‘해중공원레저전용공간 조성’에 6억 8천만원, 경기도 ‘안산 해양레저 아카데미’ 건립에 10억원, 충청남도 ‘보령머드멀티랜드마크’ 등 5개 사업에 32억여원, 전라북도 ‘갯벌 식물원’ 등 3개 사업에 10억여원, 전라남도 ‘섬진강 어류생태관 시

설보수’ 등 11개 사업에 81억여원, 경상북도 ‘신정동진 미항건설’ 등 10개 사업에 72억여원, 경상남도 ‘등대낚시공원 리모델링’ 등 3개 사업에 13억여원, 제주특별자치도 ‘다이버 해양지원센터’ 등 3개 사업에 17억원이다.

2018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수상레저단지조성’ 등 8개 사업을 포함한 36개 사업에 276억원을 투입하여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2-2-117 최근 5년간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원 예산 현황(국비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수	22	20	23	36	39
예산액	17,482	12,338	13,746	19,923	25,534

3) 마리나시설 조성

마리나시설 조성사업은 소득수준 향상, 주5일제 근무, 교통여건의 개선 등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참여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마리나사업 지원 등 해양레저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해양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양레저·스포츠 진흥과 관광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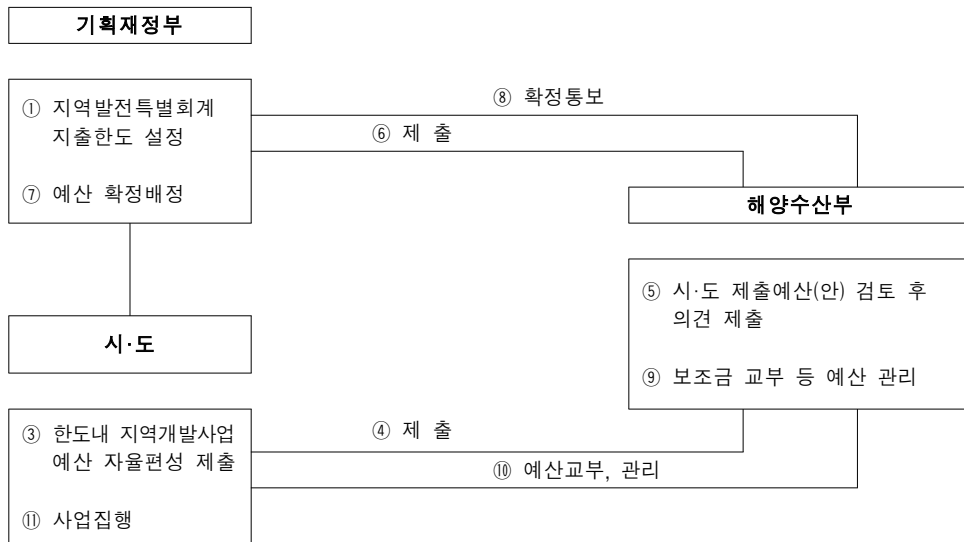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해양관광과 관련된 여러 사업에 예산을 지원, 2013년에는 21개 사업을 선정하여 17,83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20개 사업에 13,358백만원을 지원하여 마리나, 낚시공원, 친수공간 등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관광자원시설사업을 지원하였다. 2015년부터는 해양관광과 관련된 여러 기반시설 사업 중 마리나시설 조성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3개 사업에 747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4개 사업에 7,600백만원을, 2017년에는 5개 사업에 9,66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018년에는 5개 사업을 선정하여 8,99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진흥을 통한 저변확대 및 해양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리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표 2-2-118 연도별 예산 지원액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17,839	13,358	747	7,600	9,666

표 2-2-119 사업시행체계



4)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매년 반복적으로 해안가에 각종 쓰레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속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해안경관을 저해함은 물론 해양 생태계 교란, 어족자원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바닷가에 산재되어 있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수거 처리하여 청정 해양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 3,192백만원으로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4,424톤, 2015년에는 6,812백만원으로 12,110톤, 2016년에는 10,682백만원으로 8개 광역지자체에서 16,139톤을 수거하였고 2017년도에는 6,597백만원을 투입하여 12,047톤을 수거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6,697백만원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도서, 벽지 등 바닷가에 산재되어 있는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 추진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연중 수시 해양쓰레기 수거체계를

구축방안을 연구·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120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실적(2014 ~ 2017년)

(단위 : 백만원, 톤)

	2014		2015		2016		2017	
	사업비	수거량	사업비	수거량	사업비	수거량	사업비	수거량
합 계	3,192	4,424	6,812	12,110	10,682	16,139	6,597	12,047
부 산	-	-	-	-	15	283	40	98
울 산	-	-	-	-	120	126		
충 남	110	272	220	520	220	761	2,038	1,175
경 북	-	-	-	-	100	240	140	117
경 남	350	720	300	539	300	218	300	291
전 북	-	-	-	-	350	787	450	859
전 남	936	3,138	2,686	10,771	3,336	12,514	2,929	7,207
제 주	200	294	200	280	900	1,210	700	2,300

5)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쓰레기의 해양 재투기를 방지하여 해양 정화 비용을 절감하고 어업인 스스로 해양 환경 보전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는 4,43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으로 6,597톤을 처리하였으며, 2015년에는 4,512백만원으로 6,158톤, 2016년에는 4,456백만원으로 6,296톤을, 2017년에는 4,368백만원을 투입하여 6,667톤, 2018년에는 4,392백만원을 투입하여 10개 광역지자체에서 조업중 인양쓰레기를 수매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확대하여 어업인에 대한 해양환경 보전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해양환경 보호 의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121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처리 실적(2014~2017년)

(단위 : 백만원, 톤)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사업비	17,770	4,434	4,512	4,456	4,368
처리실적	25,718	6,597	6,158	6,296	6,667

6) 선상집하장 설치

어선이 많은 항·포구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을 설치하여 조업중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재투기를 방지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효율성 제고를 통한 청정 바다환경 유지를 위하여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도에 9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로 62개소, 2015년에는 57개소, 2016년에는 47개소, 2017년도에는 53개소를 설치했으며 2018년도에는 전국 5개 지자체에서 5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를 통하여 해양쓰레기 퇴거저오기 생활화로 어업인 스스로 바다를 깨끗이 유지해 나간다는 의식을 높여 해양환경 보전 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122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현황(2014~2017년)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사업비	3,794	1,051	961	882	980
설치개소	218	62	57	47	53

(25) 어업기반정비

어촌지역의 수산업 생산활동에 필요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어촌의 생산성 향상과 어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자체관리 어항건설, 수산종묘 관리, 인공어초사업,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등 12개 내역사업에 7,935억을 지원하여 어업기반정비를 통한 어촌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표 2-2-123 연도별 예산 지원액(제주포함)

(단위 :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43,872	165,038	170,856	166,807	146,947

향후,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설명회 개최 및 포괄보조사업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사업자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수산업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보강하여 어업기반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어촌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26) 서남권 친환경수산물종합지원단지 조성

목포 남항의 어항기능이 북항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그 배후부지에 수산물 위판·가공·유통기능 등을 포함한 수산지원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서남권 친환경수산물 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사업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예산은 ‘14년부터 반영되었으며, 2015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및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공사발주 및 계획을 완료하였다.

201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여 2019년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하고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철저한 사업관리에 노력할 것이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수산업의 대외적 환경변화와 사회·경제적 수요를 반영한 어항의 다기능화를 선도하고 바다문화 체험·교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양륙·가공공간, 판매공간, 친수·교류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 수산물안전검사체계 구축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도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분석 장비 구축 지원방안(2009년 7월)을 마련하여 지자체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고, 2009년에 전남도 1개소를 시작으로 2010년 부산시·경남도 2개소, 2013년 경북 1개소에 각 국비 10억 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2년 8월부터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안전성조사 업무를 공동수행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석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2017년까지 39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관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업무를 추진하였다.

표 2-2-124 연도별 예산 지원액

(단위 :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450	600	600	600	600

향후 수산물 생산 지자체 10개소에 대한 수산물 안전성조사 장비 구축 등을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수산물 안전성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3. 도농상생 및 귀농·귀어·귀촌을 통한 농어촌 활력 증진

(1)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은 2013년 5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경로간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4년 기존 소비자유통활성화지원사업에서 소비자참여형직거래활성화 별도사업으로 분리되어 직거래장터 설치 지원, 소비자교류 지원 등과 함께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직매장 설치 및 생산자교육, 홍보 등을 보조 30~100%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총 129개소가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정책지원에 힘입어 로컬푸드직매장은 전국적으로 2013년 32개소에서 2017년에 188개소로 확대되었으며 매출액 또한 동 기간 317억원에서 3,565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여 직거래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판로가 부족한 영세농, 고령농, 귀농인구에 적합한 다품종 소량 유통방식으로서 일반 마트 출하와 비교할 때 농가수취가격이 20.0%p 높아 생산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규모화조직화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산지유통정책에서 소외된 반면 직매장에 참여하면서 가격을 직접 결정하고 유통·판매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농업에 대한 자부심과 소비자와의 애착이 형성되어 심리적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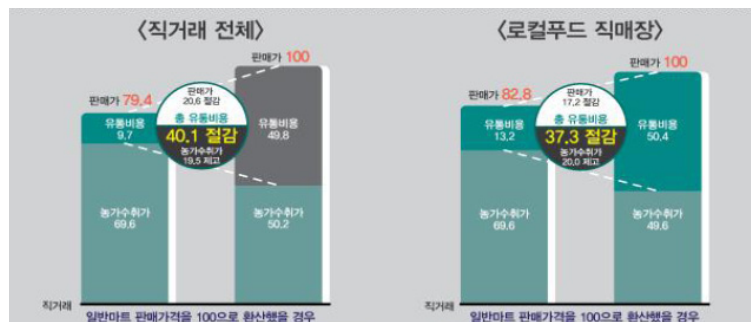
매장 판매단가 또한 일반마트 대비 17.2%p 낮고 당일 수확 당일 유통 원칙의 적용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합리적 가격에 만나게 된 소비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2-125 전국 로컬푸드직매장 운영현황

(단위 : 개소수, 매출액)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개소수	32개소	71개소	103개소	148개소	188개소
매출액	317억원	950억원	1,659억원	2,560억원	3,565억원

그림 2-2-33 직거래 일반 및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자·소비자 효용



자료 : 직거래 활성화 소비자 만족도 및 생산자 기대효과 조사분석 연구, '14.12),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제3장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제1절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1.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1)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SCK)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Specialized College of Korea)은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여 사회·산업 현장 수요 맞춤형 핵심 전문인력 양성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학령인구 저하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조개혁과 연계한 특성화’로 정책방향을 정하였다. 정책연구와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한 전문대학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문대학 육성사업 시행계획(* 14.2)을 발표하였다.

동 사업은 2주기 총 5년(2+3년)으로 운영되며 1주기는 2014~2015년, 2주기는 2016~2018년으로 구분된다. 2014년 78개교를 시작으로 2015년 79개교가 참여하였고, 2016년은 83개교, 2017년은 총 82개교를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중간평가를 통해 성과 미흡 대학을 사업에서 배제하고 신규 대학을 참여시킴으로서,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가 동력을 확보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차평가 실시 및 컨설팅을 추진하여 성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전문대학은 기존 백화점식 학과 운영에서 탈피하여 특성화 계열에 대학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였다. 그 결과 학과수를 기준으로 특성화 계열내 학과가 2013년 819개에서 2016년 948개로 사업 시행 이전보다 15.8% 증가하였고, 비특성화계열 학과는 2013년 460개에서 2016년 344개로 25.2% 감소하였다. 입학정원 기준으로 특성화 성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구조조정으로 입학정원은 특성화계열 5.4%, 비특성화계열 35.3% 모두 감소하였다. 이는 비특성화계열 입학정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특성화계열에 입학정원이 집중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산업수요를 반영한 현장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강화하였다.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2014년 632개 학과, 8,002개 교과목 대비 2017년 1,312개 학과, 28,027개 교과목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렇듯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교수 중심, 강의 중심 교육과정에 현장 중심, 실습 중심 교육과정이 가미되면서 교육의 현장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NCS 기반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대학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운영 성과로는 강화된 역량을 기반으로 전문대학의 주요 성과 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사업 추진기간 동안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수행 대학의 취업률이 2017년에는 71.0%로 상승하여 취업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고용 절벽해소 및 국가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하였다.

표 2-3-1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주요성과

구분	2014년(사업시작)	2017년
취업률	64.8%	71.0%(6.2%p ↑)
교육비환원율	114.7%	128.7%(14.0%p ↑)
학과수	특성화 계열 819개(2013년) 비특성화계열 460개(2013년)	특성화 계열 948개(15.8% ↑, 2016년 기준) 비특성화계열 344개(25.2% ↓, 2016년 기준)
입학정원	특성화 계열 73,766명(2013년) 비특성화 계열 30,266명(2013년)	특성화 계열 69,744명(5.4% ↓, 2016년 기준) 비특성화계열 19,570명(35.3% ↓, 2016년 기준)
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 학과 632개 도입 교과목 8,002개	도입 학과 1,312개(107.6% ↑) 도입 교과목 28,027개(250.2% ↑)
현장실습 이수율	25.5%	34.4%(8.9%p ↑)

표 2-3-2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지원 현황

(단위 : 개교, 백만원)

지원 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학 수	78	79	83	82
예산액	269,575	296,924	297,184	267,515

(2) BK21플러스 사업을 통한 지방 대학원 연구역량 강화

BK21(Brain Korea21) 사업은 1단계('99~'05년)와 2단계('06~'12년)를 거쳐 BK21 플러스(Program for Leading Universities & Student) 사업('13.9월~'20.8월)까지 20년째 추진 중이다. 특히, BK21 플러스 사업은 2단계 대비 지방대 지원 사업비를 24%에서 33%로, 지방대 선정 사업단(팀) 비중을 35%에서 44%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 우수 대학원 지원을 확대하였다. 매년 약 9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방 36개 대학, 239개 사업단(팀)을 지원하고 있다.

표 2-3-3 BK21 플러스 사업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지원 연도	2013년(6개월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액	44,179	87,415	87,444	91,026	91,467
대학/사업단	37 / 244	37 / 241	38 / 241	36 / 233	36 / 239

추진 경과는 2015년 중간평가를 통하여 2016년 이후 4년간 지원할 사업단(팀)을 재선정하였다. 2년간('13.9월~'15.8월)의 실적 및 계획을 평가하되,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하여 기존 2개 분야를 9개 학문분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학문분야별 특성화된 지표를 개발하여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2-3-4 BK21 플러스 평가구조 개편

구분	분야								
('13년) 선정평가	과학기술					인문사회			
('15년) 중간평가	자연 과학	공학	의약학	농·생명 수산해양	과학기술 융복합	인문학	사회 과학	인문사회 융복합	디자인 영상

2015년 중간평가 결과 연구성과(논문, 저서)와 산학협력(특허, 기술이전) 부문에서 강점을 가진 우수 사업단(팀)이 다수 선정되었다. 특히 지방대학 사업단(팀)의 24.7%(59개)가 신규 사업단(팀)으로 교체되었으며, 지방대학원의 '지역 산학협력 연구 및 산학 간 인적·물적 교류의 우수성'을 비중 있게 평가하여 지역 산업 현장의 수요에 부합

하는 고급인력 양성 기반을 강화하였다.

2018년 BK21 플러스 사업 사업단(팀) 성과점검 지표는 ‘질 중심·학생 중심·사업단 자율 중심’ 성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각 사업단(팀)은 개선된 성과지표를 통해 지난 2년간(’16.3~’18.2)의 실적을 평가받는다.

표 2-3-5 BK21 플러스 참여인력 연구역량 향상

(단위 : 편)

구분	선정당시(2013)	2016	증가율(%)
참여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실적 (논문 실적)	1.35	1.5	+10%
대학원생 1인당 논문 IF	1.36	1.8	+32%
교수 1인당 논문 IF	16.5	17.9	+8%

표 2-3-6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한 지방대학원생의 취업률

(단위 : %)

구분	BK21참여 박사졸업생	BK21참여 석사졸업생
취업률	81.33	70.3

* 조사 기준 : '17. 12.

표 2-3-7 BK21 플러스 사업 참여 중인 지방 대학원생의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 점)

항목	만족도 (5점 만점)
참여인력 개인에 대한 사업의 영향·효과성	4.26
사업단(팀) 운영 대학원(학과)에 대한 사업의 영향·효과성	4.26
BK21 플러스 사업 및 지원·운영에 대한 만족도	4.17
총 평균	4.23

* 조사 기준 : '17. 11.

추진 성과로는 지방대학의 경우 석사(70.3%), 박사(81.3%) 졸업생 모두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또한 BK21 플러스 사업 참여중인 지방 대학원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연구장학금 제공을 통한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등 참여인력 개인에 대한 효과성과 사업 지원을 통한 소속 학부와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 등 학과에 대한 효과성 측면

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단(팀)별 사업계획서 및 성과 등을 개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BK21 플러스 웹진(<http://bkplus.nrf.re.kr>)을 발간하여 우수사업단(팀) 성과 및 사례 소개, 사업 주요 소식을 전함으로써 우수성과 발굴 및 공유·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분야별 사업단(팀)간 정보교류와 협업을 활성화하여 의미있는 결과물을 창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3)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은 2014년 2월 지방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특성화 방향을 설정하고, 2014년 7월 지방대학 79개교(264개 사업단)를 선정하여 연간 1,925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는 지방의 일반대학 126개 대학 중 약 63%에 해당된다. 대학의 성과관리를 위해 2016년 9월과 2017년 7월에 중간평가와 연차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지방대학 76개교(257개 사업단)가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 대학은 사업의 마지막 해인 2018년에 약 1,358억원을 지원받는다.

동 사업은 지역사회 및 산업과 연계한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유도하고자 지역 산업(동남권 영상/해양, 충청권 국방/디스플레이/바이오, 호남·제주권 농식품/관광, 대경·강원권 IT/SW/환경 등) 및 지역전략과 밀접히 연계한 특성화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운영 방식은 학생수, 학교수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경·강원권, 동남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대학 및 사업단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분야를 선정·지원하도록 하여 개별대학 및 지역여건에 맞는 대학특성화를 견인하도록 하였다. 지방대학 특성화의 큰 틀은 정부가 제시(Top Down)하였으나, 구체적인 특성화 분야와 추진계획은 대학이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Bottom Up)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였다. 대학에서 자체적인 중장기 발전방향을 세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대학이 더욱 특화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운영 성과로는 학문간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특성화를 유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개편으로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노

력하였다.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특성화 분야의 교육과정 개편·운영 및 신규 교과목 개설(전공과목 12,998건) 등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 수요에 대응해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융·복합 사업단(166개 사업단)을 운영 및 학사제도(34개 대학 68개 사업단)를 개편하는 등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표 2-3-8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 특성화분야 여건 개선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사업시작)	2017	증감률, %p
전임교원 강의비율	76.0	82.8	+6.8
전임교원 확보율	68.1	78.9	+10.8
취업률	73.4	77.3	+3.9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12.0	15.5	+3.5
해외파견 학생 비율	2.2	6.4	+4.2
국내 유치학생 비율	0.9	2.9	+2.0

특히, 특성화사업의 교육성과 창출 및 관리를 위해 ‘교수-학습 역량 진단기준(NASEL)’을 적용하여 교육과정 현 수준을 진단하고,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에 환류함으로써 교원-학생간 상호작용을 강화하였다.

표 2-3-9 NASEL을 활용한 교수·학습 역량 진단 (교육개발원 측정)

(단위 : 점)

구분	능동적 협력적 학습활동 PCL	전공 교수·학습 만족도 M-STL	교수-학생 상호작용 SFI	교수·학습 성과 TLO	학생지원의 질 QSS	평균	비고
CK사업 참여대학(지방)	2.493	3.257	1.923	2.556	3.055	2.657	* 4점 척도
비참여대학	2.335	3.099	1.724	2.408	2.910	2.495	

* NASEL(National Assessment of Student Engagement in Learning) :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전공 교수-학습 만족도, 교양 교수-학습만족도, 교수-학습 성과, 자기주도적 학습활동, 학생 지원의 질 등 7개 영역의 교육성과 측정 도구

2.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강화

(1)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4년제 대학)

1기 LINC 사업(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은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확산하고,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력 양성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2012~2016년까지 총 5년간 지원하였다.

1단계 사업('12~'13년)은 주로 산학협력 선도모델 기반 조성 및 내실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고, 2단계 사업('14~'16년)은 1단계 사업을 통해 구축된 산학협력활동 기반을 바탕으로 산학협력의 성과를 보다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확대,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기업 지원 등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추진하였다.

표 2-3-10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지원 현황

(단위 : 개교, 백만원)

지원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학 수	51	51	56	57	57	75
예산액	166,600	216,900	238,832	223,982	224,000	238,272

표 2-3-11 1기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4년제) 주요 성과

구분 년도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수(명)	산학연계 교육 과정 운영(건)	창업강좌 (평균시간)	기술이전 실적(건)	기술이전 수입료(백만원)
1차년도 ('13.2)	42,744	872	53	992	15,144
2차년도 ('14.2)	70,145	1,484	79	1,583	17,496
3차년도 ('15.2)	81,858	1,650	94	2,000	25,887
4차년도 ('16.2)	94,240	1,906	108	2,578	29,547
5차년도 ('17.2)	104,727	2,197	123	2,551	30,927

’ 17년도부터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추진 방향(’ 16.7월 발표)과 1기 LINC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기반으로 한 Bottom-Up 방식의 자율적 산학협력 모델의 창출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으로 고도화 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 17년에 일반대학 75개교를 사업수행대학으로 선정하고, 총 예산 2,383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특히 2기 LINC+ 사업은 지역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기업 지원, 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혁신을 추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표 2-3-12 2기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주요 성과

구분 년도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공동 활용장비 활용기업 수(건)	교수 1인당 산업체(지역연계) 공동연구비(천원)	교수 1인당 기술이전 수입료(천원)
’17.2	38.8	227.4	11,939.2	2,157.8
’18.2	42.5	280.8	14,217.5	2,508.6

사업 수행 대학은 지역사회의 여건과 해당 지역소재 기업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대학별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대학별 LINC+ 성과지표와 목표에 따라 학내 산학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역 산학협력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학협력 특화를 위해 자체 대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산학협력모델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성과 창출과 확산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산학협력시스템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표 2-3-13 2기 1차년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지역 간 협업 우수사례

- ❖ **(가톨릭관동대학교)** 거주 인구의 고령화 진행에 따른 주택·건물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강원도 건축사협회-올림픽 도시정비단 연계 마을 재생 프로그램 시행
- ❖ **(선문대학교)** “아산 지중해 마을”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 문화체험 지원 및 거리환경 조성, 포토존 개발 등을 통해 아산 랜드마크로서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구축

❖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형 뒷집재생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JEEK팀) 진행

(2)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전문대학)

동 사업은 2012년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5년간 지원한 사업으로, 5차년도('16년)에는 총 30개 전문대학(산학협력 선도형 10개, 현장실습 집중형 20개)에 195억원(대학 평균 6.5억원)을 지원하였다. 사업시작 1차년도와 비교하여 산학협력 가족회사수는 1.6배, 산학협력 중점교수 수는 1.7배 증가하는 등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대학의 체질이 개선되었다. 학생 교육측면에서는 현장실습 이수 학생 비율은 1.2배, 창업강좌 시수는 1.7배 증가하는 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이 높아지고 창업교육의 저변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 측면에서도 기술지도 건수는 1.8배 증가하는 등 전문대학의 역할이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로까지 확대되는 성과를 보였다.

표 2-3-14 2016년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주요성과

구분 년도	산학협력 가족회사 (개)	산학협력 중점교수 (명)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	기술지도 (건)	창업 강좌시수 (시간)	창업 재정지원 (천원)	창업공간 지원(㎡)
1차년도('13.2)	14,751	215	62.9	1,381	1,232	766,450	3,658
2차년도('14.2)	17,241	296	72.6	2,126	1,307	944,000	4,254
3차년도('15.2)	16,991	330	70.6	2,170	1,456	1,059,000	5,095
4차년도('16.2)	20,648	358	80.7	2,368	1,869	1,201,000	5,669
5차년도('17.2)	23,575	367	78.3	2,544	2,126	1,063,000	6,156

그러나 청년실업률과 중소기업 인력난이 가중되고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히 변화하는 현실에서 미래사회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대학을 변화시킨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16년 종료)의 성과를 토대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과 산업체간 교육과정 개발·운영에서 협력을 강조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을 새롭게 시작하였다.

동 사업은 산업체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해당 산업체로의 채용과 연계하는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44개교와 대학특성에 기반한 다양한 산학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산학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는 산학협력 고도화형 15개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전국을 5개 권역(①수도권, ②충청강원권, ③호남제주권, ④대경권, ⑤동남권)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대학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지역 대학·사회의 상생발전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은 2주기 총 5년(2+3년)으로 운영되며 1주기(2017~2018년) 운영 후 '19년 단계평가를 거쳐 2주기(2019~2021년)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1주기 성과 미흡대학을 사업에서 배제하고 신규 대학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엄격한 사업관리를 통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사업 첫해인 '17년에는 44개 대학에서 307개 사회맞춤형학과를 개설·운영하여 2,673개 기업이 협약기업으로 참여하였으며, 참여학생 7,334명 중 6,208명이 협약기업과 채용약정을 맺어 청년 취업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산업체 현장과 유사한 실습환경(현장 mirror형)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현장밀착형 인재양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산학협력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대학별 대표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사업화 초석 마련을 통한 대학재정 자립화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애로기술 지원과 산학협력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한 기업신속대응센터 역할 강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표 2-3-15 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주요성과

구분 년도	협약기업연계취업률(%)	참여인력만족도(%)
1차년도('18.2)	55.1	77

(3)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ACE 사업)

ACE(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사업은 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육'에 초점을 두고, 대학들의 자발적인 교육과정 개발·운영 혁신 노력을 촉진하고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교육지원 시스템의 총체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0년에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신설된 교육부의 대표적 학부교육 지원사업으로, 2014년부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분리되어 개별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17년도부터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16.7월 발표)에 따라 기존 ACE 사업을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으로 고도화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학부교육 모델의 공유·확산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매년 신규 대학을 선정하여 4년(2+2)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10개 대학을 신규 선정하고, 기 선정 대학(32개교)을 포함하여 총 42개 대학(수도권 15개교, 지방 27개교)에 평균 20억원씩, 총 744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3-16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지원 현황

(단위 : 개교, 백만원)

지원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선정 대학 수	11	11	3	-	13	16	3	10
지원 대학 수	11	22	25	25	27	32	32	42
(예산액)	(30,000)	(60,000)	(60,000)	(60,000)	(57,272)	(59,400)	(59,400)	(74,359)

예산은 대학 본부에 총액교부방식(Block Grant)으로 지원하며, 지원대학은 각 대학의 비전과 인재상에 맞는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다. 대학의 특성에 맞게 수립한 성과목표와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은 학부교육 발전 계획에 대해 자발적으로 고민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개선해왔으며 대학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교양교육 전담기구 신설·확충을 통한 기초 교양교육 강화, 창의성 함양과 융복합 교육 실현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체계화 하였다. 교양 및 전공 교과와 연계한 내실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의 특성,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 하였다.

둘째, 학생들의 역량 관리 및 대학생활 적응 등을 돕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교수-학습법 지원 시스템 구축하였다. 교육 분석 전담 기구를 통하여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학부교육 질 관리 실시 등 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개선하였다.

동 사업은 이러한 대학의 전반적인 학부교육 시스템 개선을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학부교육 모델을 창출·확산함에 기여하였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질적인 만족도가 비ACE 대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17 2014년도 ACE 선정 대학 대학생 핵심역량 향상도(K-CESA)

(단위 : 점, %)

측정 항목	2014년(A)	2015년	2016년	2017년(B)	향상률 ($C=(B-A)/A \times 100$)
의사소통역량	44.2	45.8	47.6	47.0	6.3
글로벌역량	48.1	51.3	51.7	52.4	8.9
대인관계	50.7	49.7	54.7	56.5	11.4
종합적사고력	48.4	49.2	48.7	50.0	3.3
자원정보기술	49.0	51.9	50.8	51.5	5.1
자기관리역량	49.6	49.7	53.3	54.9	10.7

표 2-3-18 ACE 사업 참여 대학 학생들의 교수와의 교류에 대한 질적 만족도

(단위 : %)

측정 항목	2014년(1학년)	2015년(2학년)	2016년(3학년)	2017년(4학년)
ACE대학(a)	37.88	38.41	38.09	36.94
비ACE대학(b)	35.52	36.14	36.17	35.28
a-b	2.36	2.27	1.92	1.66

ACE 지원 대학들은 대학별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 보고서를 ACE 홈페이지(<http://eduup.kcue.or.kr>)에 게재하고 있으며, 매년 ACE 포럼, ACE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ACE 사업은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고유의 브랜드를 창출하였으며 대학 자율성 확대 및 대학교육 체질 개선에 기여한 주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편, 동 사업은 대학 자율성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 확정(’18.3)에 따라 ’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제2절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1.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1) 학교기업 지원사업

학교기업(School-Based Enterprise)은 학생들에게 체계적 현장실습과 창업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원의 연구 활용 및 개발된 기술 등의 민간부문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과정 또는 특정 전공학과와 연계하여 기업활동(물품의 제조·판매·가공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학교 소속 부서이다. 학교기업 지원사업은 학교기업 운영 지원을 통해 학교기업이 실무적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생산된 재화(제품)와 용역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육성함으로써 학교기업의 자생적 운영 기틀을 갖추고, 더 나아가 운영 수익금을 교육재정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구축(자립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은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학교기업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산학협력 활성화의 일환으로 2004년 학교기업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2004~2009년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던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2010년부터는 5년 단위 사업(중간평가를 통한 계속 지원, 2+3년제 운영)으로 확대하여, 1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 10~* 14년)을 추진하였다. 1단계 지원사업의 후반부인 2013~2014년은 학교기업을 4개 유형(자립형, 자립화 준비형, 기반구축기형, 현장실습 준비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한 결과 5개 학교기업이 자립하였다. 또한, 학교기업의 매출액이 평균 229억원에서 302억원으로 증가하였고, 현장실습 참여학생 수는 22,176명에서 31,641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학교기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자립화의 기반이 마련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표 2-3-19 학교기업 지원사업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액		12,250	11,045	10,493	9,968	8,673
학교기업수	대학	18	15	24	23	18
	전문대학	18	15	23	23	16
	고등학교	16	16	14	14	8
	계	52	46	61	60	42

2015년에는 2단계사업('15~'19년)으로 학교급, 성장 정도 등 학교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성장·자립형으로 총 61개 학교기업을 선정하여 2년간 205억원을 지원하였다. 유형 및 학교급, 선정 및 연차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였다. 2단계 지원사업의 전반부인 2015~2016년에는 학교기업의 운영성과를 위해 수요조사를 통한 개별 학교기업에 직무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과 우수사례 공모 및 국회 포럼 개최, 산학협력 EXPO 참여를 통해 우수성과 확산을 추진하였다. 산학연협력을 위해서는 학교기업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활용, 창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학 내 창업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2단계 지원사업의 후반부('17~'19년) 지원을 위해 2017년 3월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하위 30% 지원 중단 및 자립형 학교기업의 자립화를 추진하였고, 현장실습 중점형(5개) 및 창업실습 중점형(8개) 등 신규지원 13개교를 포함한 총 42개 학교기업을 선정·지원 하였다. 그 결과, 7,865명의 학생들이 학교기업 현장실습에 참여하였으며, 290명의 학생들에게 창업실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2017년도부터는 학교기업의 기업역량을 강화하기위해 마케팅·디자인센터를 2개교 지정, 시범운영하여 학교기업 제품과 서비스의 상품성을 제고하고,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공동마케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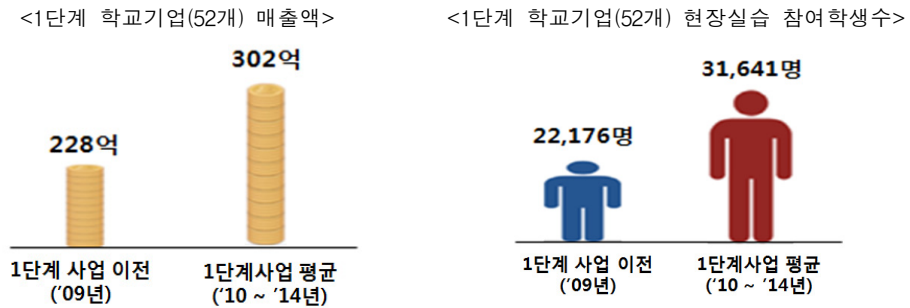
표 2-3-20 학교기업 매출액 및 현장실습 학생 수 현황

(단위: 개, 억 원, 명)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지원 대상교	52	46	61	60	42
매출액	283.06	169.36	164.64	194.29	130.89
현장실습 학생 수	9,671	10,550	9,698	12,495	7,865

2단계 지원사업의 후반부인 2017~2019년에는 학교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학내 다양한 창업 지원, 산업수요 맞춤형 현장실습 등의 발전을 추진 중이다. 창업실습형 학교기업 육성과 학년·단계별 맞춤형 창업실습, 대학창업펀드 연계 등 대학 내 다양한 창업을 지원하고, 기업경영 실습과 산업체와 연계협력 체계를 통한 산업 수요 맞춤형 현장실습 등 학교기업의 특성에 맞는 현장실습으로 내실화하여 학교기업을 통한 대학의 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림 2-3-1 학교기업 지원사업 1단계('10~'14) 사업 성과



(2) 지역혁신창의인력 양성사업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은 R&D연계형 석·박사양성 사업으로 지방대학의 교수 연구실(Lab 단위)과 지역소재 기업(연구실)이 사업단을 구성하여 기업이 필요한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4년제 대학의 이공계학과이며 51개 과제에 대하여 과제당 매년 150백만원에서 250백만원 내

외의 연구비를 3년간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는 석·박사생의 인건비가 30~6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연구장비·재료비 및 연구활동비에 사용된다.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로는 첫째,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 및 일자리를 창출한 점이다. 연평균 97건의 연구과제 수행으로 769명의 석·박사 인력을 양성하였고, 그중에서 총 304명이 취업하였으며, 162명(59.7%)이 지역 내 기업으로 취업하여 지역 인재의 정주율 제고에 기여하였다. 둘째, 학술활동 및 기술개발 성과이다. 연평균 SCI급 논문 233건과 91건의 특허 등록이 이루어졌다. 셋째, 기술 이전을 통한 기업지원이다. 대학은 연평균 기술이전 106건과 기술료 833백만원의 수익을 얻었고 기업은 55건의 사업화를 통하여 2,350백만원의 매출을 창출하였다.

이렇듯 석·박사생의 학업을 위한 경비 지원을 통해 지역의 우수 인재가 지방대학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지역의 중소기업은 부족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여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연구소 운영 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의 중소기업은 소액의 대응투자(정부출연금의 5%)로 대학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애로기술을 해결한 점도 큰 성과로 나타났다.

표 2-3-21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연구인력양성 현황

(단위 : 명, %)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석박사	810	858	686	1,003	618
취업자수	236	280	350	329	235
지역내 취업자수 (지역내 취업률)	120 (50.8)	151 (53.9)	200 (57.1)	188 (57.1)	100 (65.1)

표 2-3-22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주요성과

(단위 : 개, 백만원)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SCI 논문수	271	274	257	300	143
특허출원수 (등록건수)	68 (289)	282 (140)	291 (143)	304 (77)	133 (55)
기술이전수 (기술료)	4 (250)	73 (383)	88 (333)	133 (1063)	98 (1103)
사업화수 (매출액)	-	19 (1843)	25 (4767)	68 (1143)	73 (1140)

아울러, 성과 우수사례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산학협력 EXPO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지역희망박람회 전시하여 다른 대학 및 기업 등에서 벤치마칭 하도록 홍보하였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됨으로써 2017년도 사업에 참여한 교수, 학생, 기업 등 사업수요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총 357명 중 304명(85.2%)이 만족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표 2-3-23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개)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	276	276	262	169	79.59
과제 수	165	156	143	99	51
(신규 / 계속)	(42 / 123)	(51 / 105)	(54 / 89)	(0 / 99)	(0 / 51)

제3절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1.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1)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지역의 평생교육 추진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격차 없는 학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증가, 도시쇠퇴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농어촌 및 고령인구 밀집지역 등 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의 접근성 강화, 경력단절여성·은퇴자 등의 ‘제2의 경력창출’ 학습형 일자리 확대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세부사업은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의 안정적 현장착근과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¹⁹⁾’, 시·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정보를 수집·제공하여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사업²⁰⁾, 시·군·구 단위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통해 지역 단위 학습공동체 형성 및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과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한 근거리 학습 접근성 제고를 위한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²¹⁾’ 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에는 전체 10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운영을 지원하였고, 그 결과 3개 시·도가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을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17개 시·도 전체의 온라인 평생교육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7개의 신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지원하여 총 136개의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였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지역 특성화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주는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은 13개 시·군·구를 지원하였다. 또한 평생교육 추진 기반 및 관심이 미약한 곳이나 시·군·구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일반도시 특성화 지원사업²²⁾은 총 14개의 시·군·구를 선정·운영하였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은 32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하여 총 92개 시·군·구, 502개 행복학습센터를 지원하였으며, 863명의 행복학습 매니저²³⁾를 양성·배치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였다.

2016년에는 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운영을 지원하였고, 17개 시·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지원을 통해 온라인 평생교육기반을 본격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7개의 신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지원하여 총 143개의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지원해주는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은 22개 시·군·구를 지원하였다. 또한 일반도시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6개의 시·군·구를 선정·운영하였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은 별도의 신규 선정 없이 92개 시·군·구, 670개 행복학습센터를 지원하였으며, 1,091명의 행복학습 매니저를 양성·배치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였다.

2017년에는 3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운영을 지원하였고, 10개의 신규

19) 3년 계속지원 사업, 2011~2017년 사업 운영, 2017년 사업 종료

20) 2011~2016년 사업 운영, 2016년 사업 종료

21) 3년 계속지원 사업, 2014~2017년 사업 운영, 2017년 사업 종료

22) 2013~2016년 사업 운영, 2016년 사업 종료

23) 행복학습센터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학습 수요 조사, 학습상담 및 학습지원 등의 역할 수행

평생학습도시를 선정·지원하여 총 153개의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였으며 기존에 지정한 22개 평생학습도시(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환경을 고려한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였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은 37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하여 총 129개 시·군·구, 832개 행복학습센터를 지원하였으며, 416명의 행복학습 매니저를 양성·배치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였다.

표 2-3-24 지역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축 자치단체 수

(단위 : 개(누계))

사업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시·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14	15	17	17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14	17	17	17
시·군·구	평생학습도시 조성	129	136	143	153
	행복학습센터 운영	60	92	92	129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도시, 행복학습센터 지속 확산을 통해 ‘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운영기반이 조성되고 있고, 이러한 지역 평생학습 추진 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평생학습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 평생교육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 주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의 기회 제공이 용이해졌고, 참여한 학습자들이 교육과정 이수 후 교육결과를 활용하여 소득창출로 연계되는 학습형 일자리 창출 및 재능기부 등의 사회참여 및 환원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표 2-3-25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

연도	프로그램(개)	학습자(명)	만족도(점)	사회참여자(명)		
				일자리	재능기부	합계
2014년	1,305	66,733	88	1,925	8,584	10,509
2015년	2,542	124,428	89	2,042	9,550	11,592
2016년	4,818	181,039	90	1,813	10,292	12,105
2017년	1,950	70,029	90.8	1,644	9,152	10,796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8).

(2)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 사업은 2008년에 도입되어 성인 전담 학과 개설, 성인에게 적합한 현장실무중심 교육과정 개발, 학습자 접근성 및 프로그램 수월성이 확보된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초기에는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중심이었으나, 2012년부터는 성인 학습자의 교육 수요 유형과 지역 특색을 고려하여 성인학습자들이 본격적인 학위과정 입학에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

2013년부터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5배 이상 증액되어 4050 세대 성인학습자들의 취업·창업 역량증진을 위한 비학위과정이 새로 개설되었다.

2014년에는 운영 모델을 다양화하여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의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창업 맞춤 특화프로그램 등 단기 집중 전문교육을 통해 중장년층의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등 사회·경제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후진학 지원체제 구축 및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2015년부터는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사사업인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학위, 비학위과정), 전문·희소분야 대표대학 운영 및 재직자특별전형 운영대학 지원사업을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하여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와 대학의 성인 친화형 체제 개편을 가속화하였다.

한편, 대학은 여전히 학령기 학생 위주의 교육체제를 운영하고 있어 성인의 다양한 고등교육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2016년에 성인학습자만을 전담하는 단과대학을 대학 내에 신설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을 발표하고 전국 권역별 9개 대학을 선정하여 총 250억원을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약 231억원 예산을 기반으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추진, 학령기 학생 중심의 대학시스템을 탈피하고 성인친화형 대학시스템 발전 유도를 통해 대학의 성인학습자 전담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수요 기반 선도 모델 15개교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5개교, 충청권 2개교, 대경강원권 2개교, 동남권 3개교, 호남제주권 3개교이며, 유형별로는 단과대학형 10개교, 학부형 2개교, 학과형 3개교이다.

표 2-3-26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 사업 추진 경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구조	지원대학	예산액
2010년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교육원활성화	20개교	2,500
2011년	대학전체체제개편, 평생교육원체제개편	24개교	4,040
2012년	선취업후진학, 4050제도약형	25개교	5,508
2013년	학위과정, 비학위전문가과정	47개교(비학위 13개교)	27,508
2014년	학위과정, 비학위전문가과정	45개교(비학위 10개교)	10,233
2015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47개교(비학위 17개교)	10,733
2016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37개교(비학위 15개교)	13,133

표 2-3-27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전환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지원대학	예산액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위과정(학령기 학생→평생학습자 정원)으로 전환 평생학습자 대상 전담조직 신설 또는 전환 	9개교	25,000

표 2-3-28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전환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지원대학	예산액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과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통합·개편 다양한 운영모델(단과대학형, 학부형, 학과형) 자율적 운영 지원 	15개교	23,132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의 비학위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성인학습자들이 100세 시대 인생 재도약·재설계를 할 수 있도록 후진학 및 평생경력개발을 하고, 대학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고용 연계가 가능한 과정을 운영하여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학위과정 지원 및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평생 학습자 전형도입과 학비 부담 완화 및 전담 조직 구성 등 후진학자들이 직면하는 일과 학업 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면밀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산업체 등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전공을 개설(52개 학과, 1,990명 정원)하였으며, 성인학습자·후진학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적 지원 체계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예컨대, 「고등교육법」을 개정(' 17.11.9.)하여 전문대학, 산업대학에만 인정되던

재직자를 비롯한 성인학습자의 사회경험, 재직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인 ‘학습경험인정제’의 4년제 대학으로의 확대이다. 더 나아가, 동 사업은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유연한 학사제도, 예컨대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재학연한 폐지, 학점당 등록금제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성인학습자들의 계속 교육에 대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표 2-3-29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 사업 성과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	27,508	10,233	10,733	13,133
대학 수	47교(비학위13교)	45교(비학위10교)	47교(비학위17교)	37교(비학위15교)
학과 개편 수	139	164	153	102
학위과정 학습자	3,209	2,762	2,405	1,679
비학위프로그램 수	64	10	52	67

표 2-3-30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 성과

(단위 : 개, 명)

구 분	참여대학	정원이동	학과 개편	전담교원	전담직원
2016년	9교 (전담조직 구성 완료)	406	42	142	146

표 2-3-31 대학의 평생교육지원체제 사업 성과

(단위 : 개, 명)

구 분	참여대학	모집인원	학과	운영모델		
				단과대	학부	학과
2017년	15교 (전담조직 구성 완료)	1,990	52	10교	2교	3교

2. 인문학 진흥 강좌

(1) 인문학 대중화

인문학 대중화의 세부사업으로는 시민인문강좌, 인문주간, 석학인문강좌, 세계인문학포럼, 인문도시, 한·중인문학포럼 등이 추진되고 있다. 먼저, 시민인문강좌사업

(’ 06)은 인문학계와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10여년 간 전국 각지에서 일반시민, 학생, 소외계층(노숙자, 교도소 재소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인문학 단체 주관의 다양한 인문강좌를 개설하였다.

인문주간(’ 06)은 매년 10월의 마지막 주를 인문강조주간으로 설정하고, 학술지원사업의 다양한 성과를 인문학 관련 강연, 토론, 공연, 전시 및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기획하여 전 국민이 인문학을 즐기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인문학적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석학인문강좌사업(’ 07)은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은 인문학 분야의 석학을 초청하여 수준 높은 인문학 강의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열린 강연’ 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계인문학포럼(’ 11)은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제1회 세계인문학 포럼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이후 2016년까지 총 4회의 포럼을 개최하여 대규모 국제학술행사로서 세계 석학의 담론의 장이자 세계-한국 인문학계간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문도시사업(’ 12)은 대학·지자체가 연계·협력하여 지역 인문 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의 인문·역사·문화 자산을 발굴·활용하여 도시전체에 인문체험의 장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2012년 2개의 인문도시를 시작으로 그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2017년 27개의 인문도시를 지역인문거점으로 육성·지원하고 있다. 한·중 인문학포럼(’ 15)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13.6.27)을 통한 정상회담 교육분야 후속조치로 2014년 ‘중국학자초청 인문학 포럼’ 이 시범적으로 개최된 이후 2015년부터 상호 번갈아가며 정례 개최됨에 따라 중국과 인문유대 강화 및 네트워크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13~2017년도 인문학대중화사업 세부 사업별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3-32 연도별 인문학대중화 세부사업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석학인문강좌	684	800	800	800	800	3,884
시민인문강좌	1,500	1,200	700	100	-	3,500
인문도시	-	1,500	2,500	3,100	3,100	10,200
인문주간 등	716	1,642	1,600	1,300	1,400	6,658
합계	2,900	6,000	6,700	5,300	5,300	26,200

인문학 대중화사업에 해마다 참여하는 일반국민 참여자수는 연평균 약 18만명에 이

르고 있다. 석학인문강좌는 탄탄한 기획력과 강연 구성이 뒷받침되어 연간 고정 청중만 약 530명에 이르며, 최근 5년 간 총 84,524명(연평균 16,904명)이 참여하였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수강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석학강좌 동영상 제작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석학강연 자료를 집대성하여 석학총서로 강연지식을 습득·공유할 수 있도록 제작·보급하고 있다.

지역 인문학 활성화를 위한 인문도시의 전국화('13년 5개 → '14년 17개 → '15년 25개 → '16년 31개 → '17년 27개)를 추진한 결과, 전국에서 시민이 동참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인문도시 프로그램(강연, 공연 등)이 연평균 280개 이상 운영되고 있고, 참여하는 일반시민 수 역시 2014년 13,300명에서 2015년 47,118명, 2016년 57,000명, 2017년 59,23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문주간에는 인문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다채롭고 풍부한 콘텐츠의 인문학 행사가 개최되어 2017년에 전국적으로 109,868명이 참여했다.

세계인문학포럼은 세계적 석학들의 초청 강연 및 심층토론을 통해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인문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한국 인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한·중 인문학포럼의 개최로 한·중 양국 학계의 관심과 확산을 거쳐 한국의 인문학 분야 교류가 활발해졌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중국의 인문학에 대해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 밖에도 해마다 인문사회분야 우수성과 교류회를 개최하여 연구 성과 사례 발표, 각종 성과물 전시, 사업분야별 새로운 연구의 시도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인문학 진흥을 위한 성과 교류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13~2017년도 인문학 대중화 사업 일반시민 참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3-33 연도별 인문사회분야 성과확산을 위한 일반시민 참여자 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석학인문강좌	14,715	21,188	14,096	17,089	17,436	84,524
시민인문강좌	49,114	76,169	39,169	35,000	-	199,452
인문도시	-	13,300	47,118	57,000	59,230	176,648
인문주간 등	66,237	67,491	82,028	95,935	109,868	421,559
합계	130,066	178,148	182,411	205,024	186,534	882,183

제4장 지역 문화 육성, 생태 복원

제1절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1. 지역 고유자원의 재발견 및 재창조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1) 지역문화산업 기반 조성

1) 지역 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지역 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은 전국 16개 지방 문화산업지원기관(또는 문화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당지역 산·학·연으로 이루어진 구성체가 연구개발(R&D)을 통하여 지역문화에 기반한 특화상품을 기획·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문화에 기반한 특화상품은 문화상품 시장 형성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며, 기업체·대학·연구소 간 협력체계 구축과 대학의 인력과 지역 문화산업 핵심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산업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2005년부터 연구개발 과제 지원을 시작하여, 2016년까지 총 86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인천, 전남, 제주 등 총 3개 지역 과제를 지원하였다. 과제당 지원규모는 5억원 이내(총사업비의 50% 이내)이며, 2017년 국비 지원규모는 11억원이다.

2) 대구 디자인패션산업 육성지원

대구 디자인패션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대구지역의 특화된 섬유패션업계에 고부가가치 디자인 경쟁력 향상과 패션문화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패션문화 콘텐츠 확산과 지역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상승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7년에는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 ‘D.GROUND 프로젝트’를 통해

소재업체 5개사, 패션업체 5개사를 선정하여 제품개발 컨설팅 지원, 디자인 및 완제품 개발 지원, 제품기획 컨설팅 및 마케팅을 지원한 결과 텍스타일 디자인 225점 및 완제품 300점을 개발하고 총 150건의 텍스타일 디자인 등록을 완료하였다. 또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181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기록했으며, ‘D.GROUND’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참여업체 제품 판매를 지원하고 온라인 패션잡지 기사 게재 등 온라인 홍보를 지원했다.

아울러, 패션문화 콜라보레이션 사업을 통해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패션제품 개발을 지원, 10개사를 선정하여 텍스타일 디자인 100점, 완제품 230점을 개발하고, 텍스타일 디자인 50점을 등록했으며, 콜라보레이션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한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패션 신생기업 지원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여 입주 디자이너 18명에 대해 1:1 컨설팅 지원,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여 866점의 시제품을 제작하고 24억원의 매출 실적을 기록하였다. 더불어 ‘패션창업 인큐베이터’ 사업을 통해 예비창업자 12개 팀과 초기창업자 3개팀에 대한 제품 개발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전시참가 및 홍보 지원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을 하여 2.5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섬유산업도시의 인프라를 갖춘 대구의 강점을 살려 젊고 창의적인 패션 브랜드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K-패션을 대표하는 지속 가능한 패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는 대구출판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구출판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방출판산업의 주요 거점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는 대구 달서구 출판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부지 6,040㎡, 건축연면적 8,425㎡로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2016년 7월에 건립되었다.

동 센터는 2012년부터 추진하여 2016년 7월에 완공되었으며 국비 88억원, 지방비 137.1억원(용지비 49.1억원 포함) 등 총 225.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주요 시설로는 대구 출판산업단지의 업무 지원시설과, 기업입주시설, 생산지원시설로 구분되며, 세부

적으로는 창작 레지던스, 전문 창작자 커뮤니티룸, 공동장비센터, 공동물류창고, 교육실, 지식정보지원실, 전자출판공동 제작공간, 회의실, 비즈니스 상담실 등이다.

대구는 센터 용지비 49.1억원을 확보, 2013년 말에 용지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에 건축설계를 공모하여 2014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고 45억원을 지원하고 대구시는 자체예산 45억원을 확보하여 2014년 12월에 센터 건설 시공업체를 선정 발주하였다. 2014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센터를 건립하고 대구출판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출판제작을 지원할 공동장비 구입 등을 구입하였다.

표 2-4-1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주요시설

구 분	시 설 배 치
생산지원시설	공동장비센터, 공동물류창고, 교육실(컴퓨터실, 강의실), POD센터, 지식정보지원실, 전자출판공동제작공간 및 아카데미
기업입주시설	출판콘텐츠업체 사무실, 1인 창조기업 공동사무실, 창작 레지던스, 전문창작자 커뮤니티 룸, 휴게실
업무지원시설	센터 사무실, 유관기관 사무실, 소회의실, 대회의실, 비즈니스 상담실
기 타 시 설	북 카페, 북 키즈(어린이 독서공간),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대구출판산업단지는 영남권 출판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일반산업단지로 총면적은 242,916㎡(73천평)으로 1,248억원의 예산으로 조성되었다. 출판업, 인쇄업, 영상정보서비스업이 주요 입주업종이며, 대구시에서 추진하였다.

대구는 2010년에 대구출판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으며, 2012년 12월에 단지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 2014년 6월에 93개 산업시설 필지를 87개 업체에 분양하고 2017년 12월 현재 87개사가 입주완료하였다. 대구출판산업단지 조성과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으로 취약한 지방 출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구시는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영남권 출판산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4) 광주 공예문화산업 육성

광주 공예문화산업 육성사업은 2013년부터 광주지역의 공예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공예문화산업이 대한민국 대표 특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에는 우수민속공예품 개발 지원(6종), 우수 공예문화상품 ‘오핸즈 브랜드’ 지정(9점), 공예명장 선정(2명), 제6회 빛고을 핸드메이드페어 개최, 광주 지역 공예품 관련 마케팅 지원(489개 업체 참여),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2곳) 등을 통해 광주 지역 공예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해당 사업을 통해 광주 지역의 공예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공예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예문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5)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 운영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 운영사업은 2015년부터 미래유망기술의 한 분야로 시장잠재력이 풍부한 문화기술 중 기존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VR/AR 산업 분야를 선도적으로 육성하고자 VR/AR 기업지원 및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콘텐츠 기업 입주지원, 협업·네트워킹 공간 운영, VR/AR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된 성과로는 콘텐츠 창업 87건, 스타트업 지원 962 건 등 지역 콘텐츠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비즈니스센터 11층, 6층, 2층 (1,788㎡/541평)

6)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해녀, 제주신화, 돌담 등 제주 지역특화소재를 활용한 글로벌 실감형 콘텐츠 프로젝트 개발 및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궁극적으로 제주문화산업을 육성 및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매년 6억원(국비 3억원, 지방비 3억원)이 지원 예정이며, 2017년에는 제주 지역특화소재를 활용한 극장용·TV용·뉴미디어 애니메이션 파일

릿 영상 총 4건을 제작 지원하였다.

7)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사업은 영상문화 향유권 제고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2005년부터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지원을 추진하여 왔다. 2017년까지 20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국고지원액은 230억원에 이른다.

지역 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역 미디어에 대한 이해,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와 영상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창작 지원사업, 영상물 상영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표 2-4-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지원 현황

구 분	'05 년	'06 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 년	'14 년	'15 년	'16년			'17년
지 역	경 남 김 해	제 주	대 구	인 천 남 구	충 남 천 안	충 북 제 천	경 북 안 동	강 원 원 주	전 북 익 산	경 기 부 천	강 원 강 릉	경 기 고 양	전 남 순 천	경 기 성 남	경 기 수 원	인 천 강 화	광 주 동 구	경 남 합 천	경기 화성	경기 의정부
개 관	'05.11	'06.7	'07.4	'07.9	'08.9	'08.11	'08.12	'09.4	'09.7	'10.2	'10.4	'11.4	'11.11	'12.12	'14.3	'15.2	'16.4	'16.11	'16.12	'17.4

8) 국제영화제 지원

국제영화제 지원사업은 국제경쟁력 있는 국제영화제의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 영화 문화 및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8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2017년에는 전주국제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DMZ국제다큐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등 총 6개의 국제영화제를 지원하였다. 이들 6개 영화제는 부분 경쟁을 도입한 비경쟁 영화제로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부산, 전주, 부천, DMZ 그리고 제천 영화제는 지역영상산업의 성장을 고려한 지자체 주최 행사이다.

표 2-4-3 2017년 국제영화제 현황

영 화 제 명	개최내역		사업추진		예산(억원)			
	기간	장소	상영편수	참가인원(명)	계	영발기금	지방비	기타
제18회 전주국제	2017.4.27.~5.6.	전주	58국 229편	79,107	45.3	5.1	26.7	13.5
제19회서울국제여 성	2017.6.1.~6.7	서울	37국 107편	17,454	12.4	3.1	4	5.3
제21회부산국제판타스 틱	2017.7.13.~7.23	부산	58국 289편	58,476	45.2	5.4	31	8.8
제13회 제천국제음악	2017.8.10.~8.15	제천	34국 107편	24,021	23.6	3.1	15.8	4.7
제9회DMZ국제다 큐	2017.9.21.~9.28	고양 김포	44국 114편	15,072	18	0.7	14.1	3.2
제22회 부산국제	2017.10.12~10.21.	부산	76국 300편	192,991	114	7.6	64.4	42
계			307국 1,146편	387,121	258.5	25	156	77.5

(2)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 재생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은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로 인해 폐기 또는 방치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창작 및 체험 등을 위한 문화예술 융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노후 산업단지 및 폐 산업시설에 새로운 활력과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발전 및 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12개 사업(콘텐츠 지원 2개 사업 포함)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부산, 경기 등 6개 사업지에 20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역주민, 각 산업단지, 예술단체, 관광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연계와 협업을 유도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으며, 장소가치를 기반으로 삶의 현장에서 재창조되는 새로운 문화지대 안에서 직접 문화를 실현하고 함께 체감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융성의 핵심가치를 인식하고 그 효과를 발현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표 2-4-4 2017년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지 역	사 업 명	사업비(국비)
산업단지	청주	동부창고 문화재생	38(19)
폐 산업 시설 (5개소)	부산(본청)	복합문화공간 조성	32(16)
	경기(본청)	융복합 문화창조 공유 플랫폼	28(14)
	전북 남원시	남원 아트센터 조성	28.32(14.16)
	전남 광양군	광양 문화융광로 조성	36(18)
	세종시	조치원 정수장 문화재생	40(20)
계	6개 사업		202.32(101.16)

제2절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1. 생활문화 및 공동체 지원

(1)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2009년부터 시행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문화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사회적 현상과 문제에 대한 문화예술적 접근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주체가 되어 개인의 삶을 풍부히 하고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여 지역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국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신장시키고 지역의 주체적 문화역량 및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였다. 기초생활권 내 임대아파트 단지, 서민 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문화적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144개 지역을 선발하여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15개 시도 44개 지역을 선발, 7.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총 6만7천여 명의 주민들이 본 사업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 문화 발굴 및 형성 활동에 참여하였다.

(2) 체육진흥 인프라 확충

1) 체육진흥시설 지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녹지공간 속에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집중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33개소에 21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21개소에 12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들의 건강 및 여가선용을 위해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휴게공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11개소에 3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8개소에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지방체육 진흥 및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운동장, 체육관, 종목별 체육시설 등 각종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142개소에 1,08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97개소에 54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 및 지자체가 보유한 운동장에 인조잔디·천연잔디·마사토 구장 및 우레탄 트랙, 야간 조명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86개소 25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48개소 15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사업은 서바이벌 게임장, 래프팅장 등 레저스포츠 활동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4개소 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 3개소 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 전국체전시설 건립 지원

전국체전시설 건립 사업은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시·도의 미 보유 시설 및 규격 미달 경기장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3개 지역(충남, 충북, 전북)에 22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3개 지역(전북, 서울, 경북)에 18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3)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생활·전문체육시설의 개·보수, 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 시설의 긴급한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602개소 1,07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222개소 64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3)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2005년부터 시행된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은 지역의 문화재단·대학과 문화예술전문가(단체)가 참여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 현안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통해 그 결과가 실질적인 지역문화 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05년 ~ 2017년까지 총 194개 과제 54억을 지원하였다.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컨설팅 과제를 선정하며 지특회계로 과제당 3천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정률 50%)하고 있다.

2.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1)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은 선진국 수준의 공공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8년까지 1,100개의 공공도서관을 확충하여 인구 4.5만명당 1관 수준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7년 공공도서관 건립에 728억원 지원한 것을 포함하여 지난 1991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07개관에 총 6,909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건립하는 도서관의 건립비에 대해서는 80%, 최대 16억

원까지 특별 지원(일반 공공도서관은 40%)하여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 소외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 건립의 내실을 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도서관 건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건립 예정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설계·시공·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지자체 담당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사업은 1996년부터 문화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지원하기 시작하였는데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7년까지 총 163개관, 2,669억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도 98억원을 투입하여 서울공예박물관건립 등 12개(계속 4개, 신규 8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3)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사업은 미술인구의 저변 확대와 미술에 대한 감상기회 확대를 통한 국민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미술문화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99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지원으로 2017년까지 총 110개관, 1,194억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5개관 10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4) 문예회관 건립 지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사업은 1997년 이후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공간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도모하고자 1지자체당 1개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노후화된 문화예술회관이 늘어남에 따라 개·보수도 2005년부터 지원하고 있다(건립 및 개보수 1관당 20억원 이내 지원). 2017년에 15개관 119억원을 지원하였

고, 2018년에는 16개관에 14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5)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낙후된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는 사업으로 198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최근 2014년도에는 5개 시·도 8개 문화원(계속 2개, 신규 6개), 2015년도에는 7개 시·도 9개 문화원(계속 6개, 신규 3개), 2016년도에는 8개 시·도 14개 문화원(계속 6개, 신규 8개), 2017년도에는 5개 시·도 9개 문화원(계속 7개, 신규 2개)을 지원하였다.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문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이 지역주민 문화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 건립지원이 필요하며, 2018년도에는 5개 시·도 7개 문화원(계속 4개, 신규 3개)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및 231개 시·군·구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동기 부여 및 체계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으로 2014년, 2015년에는 2,480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30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배치 규모를 2,600명으로 확대, 321억원을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2,600명 배치 규모를 유지하고 지도자 처우 개선 및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353억원을 지원하였다.

(3) 공공 스포츠클럽 육성

공공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은 폐쇄적인 동호인 클럽의 구조 개선과 체육 시설·프로그램·지도자 연계를 통한 생활체육의 효율성 및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동 사업으로 2017년까지 공모를 통해 56개 공공 스포츠클럽을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전문체육 간의 연계 강화, 은퇴 선수 및 지도자 일자리 창출 등 안정적인 생활체육 선순환 생태계 마련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표 2-4-5 공공 스포츠클럽 공모요건

구 분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세 부 기 준	지역인구	20만 이상 시군구 지역	20만 미만 시군구 지역
	회 원 수	600명 이상	400명 이상
	종 목 수	5종목	3종목
	시 설	규모있는 복합체육시설 보유	일반적인 체육시설 보유
필수 공통 요건		- 거점시설(주6일 이상 클럽 운영 가능, 클럽하우스 보유)을 포함한 최소 1곳 이상 시설을 위탁 또는 소유 형태로 확보 - 전문 선수반 운영(최소 1개 종목) - 생활체육기반 지역커뮤니티 기능할 수 있는 클럽하우스 보유	
지원예산		3억원	2억원

그림 2-4-1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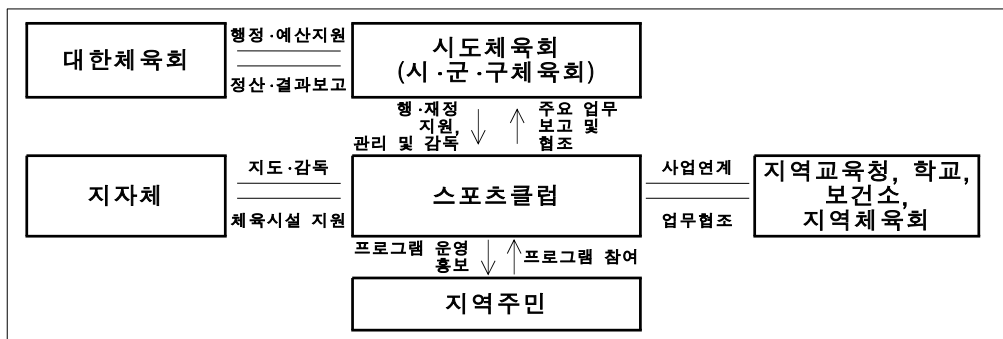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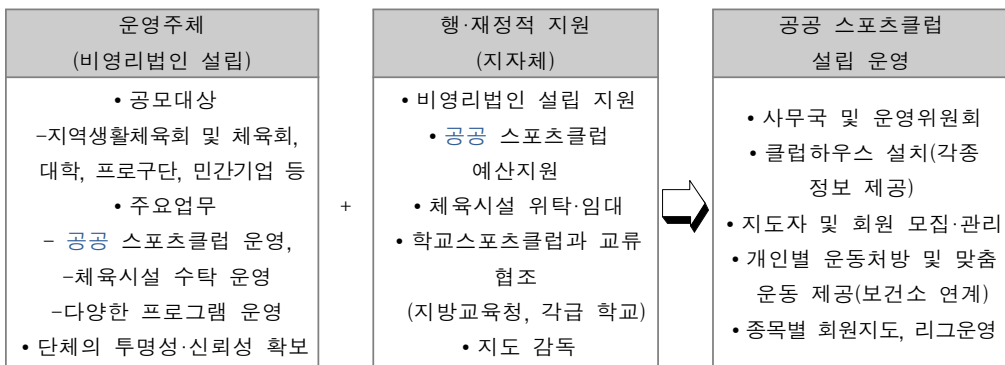


표 2-4-6 클럽운영과정



(4) 생활체육 광장 조성

생활체육 광장조성사업은 1993년부터 아침 또는 저녁 시간대 지역주민 생활체육 모임 현장에 전문 지도자를 배치하여 마을단위 생활체육 참여환경 제공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림 2-4-2 사업추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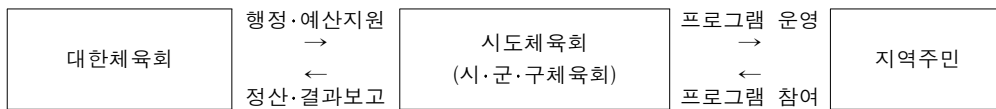


표 2-4-7 생활체육 광장 운영장소 : 전국 385개소

지역	개소	지역	개소	지역	개소
서울	31	울산	13	전남	34
부산	28	경기	26	경북	27
대구	31	강원	27	경남	30
인천	18	충북	22	제주	9
광주	19	충남	21	세종	2
대전	20	전북	27	계	385

* 행정구역 시·군·구 단위에 1개소 이상 운영

표 2-4-8 생활체육 광장 연도별 실적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개소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20
횟수	145,148	140,016	142,816	137,074	140,892	142,672	157,322	166,180	88,609
인원	5,500,018	6,024,524	5,370,996	4,703,464	4,943,438	5,029,846	5,452,284	5,955,670	4,818,484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개소	520	520	518	434	434	434	434	434	385
횟수	86,363	74,924	56,644	60,981	60,971	59,774	59,020	59,477	58,702
인원	4,750,232	2,822,325	1,803,503	1,857,131	1,805,937	1,721,924	1,693,118	1,763,938	1,604,261

3. 문화소의 및 취약지역 문화접근성 향상

(1) 작은영화관 조성 지원

작은영화관 조성 지원사업은 지역민의 영화 향유권 강화 및 지역 간 영상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극장 부재 지역에 대도시와 동시에 최신 영화를 볼 수 있는 소규모 상설 상영관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13개 지역(경기 포천, 강원 횡성, 양구, 인제, 정선, 고성, 충남 청양, 전남 화순, 경북 칠곡, 울진, 경남 함안, 산청, 제주)에 54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4-9 연도별 작은영화관 지원 현황

지원연도	지원지역	
2014년	9개	강원(삼척, 철원, 평창), 전남(장흥, 고흥), 충남(예산, 서천), 경남(남해), 인천(강화)
2015년	7개	강원(정선), 경북(영양, 고령), 경남(합천), 전남(완도), 충북(영동), 울산(울주)
2016년	14개	경기(가평), 강원(양구, 양양, 인제, 횡성), 충북(옥천), 충남(금산, 태안), 전남(곡성, 보성, 진도), 경북(영천, 울진, 칠곡)
2017년	13개	경기(포천), 강원(횡성, 양구, 인제, 정선, 고성), 충남(청양), 전남(화순), 경북(칠곡, 울진), 경남(함안, 산청), 제주

(2) 소외계층문화순회 사업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은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재한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에는 200억의 예산으로 227개의 예술단체가 전국 3,100회 순회공연을 펼쳐 약 72만명이 관람하였으며, 2017년에는 203억의 예산으로 347개의 예술단체가 전국 4,773회 순회공연을 펼쳤으며, 2018년에는 202억의 예산으로 약 400개 예술단체가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화·경제적 소외계층을 찾아갈 예정이다.

제3절 지역 관광산업 육성

1.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관광거점 육성

(1) 산업관광활성화

정부는 산업관광 인프라 조성 및 산업관광 수용태세 개선, 산업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2012년부터 산업관광 육성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2년 6개 시범사업 추진 이후, 매년 3개소~6개소 내외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2년~2017년간 지원되는 사업은 24개 지자체, 27개 사업으로, 2012년 15억원 지원 이후 매년 10억원 내외의 예산 지원하였다. 또한, 지자체 공모사업과 별개로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산업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화 등 산업관광 기반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2-4-10 산업관광 육성 사업 지원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사업수	6개 사업	5개 사업	6개 사업	4개 사업	3개 사업	3개 사업
	지원 예산	1,000	1,720	1,320	1,320	1,200	1,200
산업관광 기반조성 (한국관광공사)		400	280	260	260	200	140
계		1,400	2,000	1,580	1,580	1,400	1,340

(2)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육성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육성사업은 광역·시·도 단위 「지역방문의 해(2004년~2013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사업 발굴·추진 필요를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동 사업은 관광의 잠재성이 큰 중소도시를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 콘텐츠·상품개발,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매력적인 관광목적지

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모를 통해 매년 2~3개 도시를 지정 3년간 최대 25억원 (관광기금 50:50 매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내실 있는 행사 실행을 유도하고 있다.

지원 분야로는 i)숙박 등 환경·시설개선, 유휴공간 재생·재활용, 정보 및 안내체계 개선 등 환경개선, ii)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자원의 활용과 상품화, iii)관광 관련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네트워킹 및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 주민·지자체 역량강화, iv)이벤트·축제 등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마케팅 등이다. 2014년도에 제천시, 무주군, 통영시를 ‘2016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한 이후, 2017 올해의 관광도시로 광주 남구·강릉·고령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2018 올해의 관광도시로 인천 강화·공주를,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전남 강진·울산 중구·경기 안산을 선정하여 육성 지원할 계획이다.

(3) 동계올림픽특구 개발

동계올림픽특구 개발 사업은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대회 이후에도 개최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동 사업은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과 강릉, 정선 지역만의 독창적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올림픽 이후에도 관광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지역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올림픽 개최지역의 고유한 생활문화, 향토음식, 특산물, 지역축제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관광콘텐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설 조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정비를 위해 2017년에 3개 지역(평창, 강릉, 정선)에 205억원을 지원하였다.

지원사업으로는 효석문화예술촌 조성,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전통숙박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지역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 한류 K-컬처 이벤트 개최, 삼로 트레킹 관광코스 개발,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이 있다.

(4) 동북아 해양관광 레저특구 조성사업

동북아 해양관광 레저특구 조성 사업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기 구축된 SOC와 Big-0, 아쿠아리움 등 박람회가 남긴 핵심자산을 재활용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박람회장을 동북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하여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여수박람회법 제14조에 따라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동 사업의 대상지는 여수박람회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박람회특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박람회장 및 주변 입지를 고려하여 크게 3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휴양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유치하여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하는 것이 기본 구상이며, 개발계획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위치 : 전남 여수시 덕충동, 수정동 일원
- 면적 : 해양박람회특구 약 798천㎡
- 개발 구상 : 엔터테인먼트리조트·복합콘텐츠·해양레저구역으로 구분 개발
- 개발 방안 : 부지는 매각, 시설·건물은 매각·임대 병행방식으로 민간참여

먼저 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후활용계획을 수립(‘12.9)한데 이어 여수박람회법 개정(‘12.12)을 통해 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13.1)과 재단을 설립(‘13.2)하고,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여수박람회 폐막이후 박람회장을 새로이 단장하고, Big-0, Sky-Tower 등 특화시설 콘텐츠를 보강하여 재개장(‘13.4.10.)함으로써 박람회장을 시민공원화하는 한편, 박람회 기념관 조성(‘14.5)과 한국관·국제관 컨벤션시설을 활용한 국내외 회의·행사유치(연중) 등을 통해 박람회장 활성화에 주력한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박람회장 누적 방문객 1,035만명, 누적 운영수입 194억원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재개장 5년째인 2017년에는 방문객 359만명, 운영수입 73억원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표 2-4-11 박람회장 방문객 및 수익

(단위 : 만명,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방문객	190	223	318	304	359
수익	25	48	64	57	72

이와 같은 박람회장 활성화 성과는 해양수산부가 박람회장 개장 이후 정부 출연금 형식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25억원을 지원하여 박람회시설을 쾌적한 해양 힐링 공간으로 유지관리하고, 박람회장 방문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집객프로그램 운영 및 마케팅을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박람회장을 동북아해양관광레저특구로 조성하고자 세 차례(‘12.9/’ 13.7/ ‘14.6)에 걸친 민간투자유치를 추진하였으나 박람회장 일괄 매각 조건에 따른 초기 투자 부담 등을 이유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박람회장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여수시와 공동으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14.7 ~ ’ 15.1)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박람회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박람회장 민간참여조건 완화(박람회 시설 임대 전환, 매각대금 5년 분할상환 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사후활용계획을 변경·고시하였다. 또한 변경된 사후활용계획을 근간으로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함께 민간제안 사업 공모를 재추진(‘15.6/’ 15.11)하여 3개 사(매각 2, 임대 1), 1,144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민간참여를 통한 박람회장 개발의 물꼬를 트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사후활용계획의 목적인 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하여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 투자 기업의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해당지자체·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공동으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하는 한편, 박람회장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박람회장 주변의 관광콘텐츠와 연계한 다각적인 집객대책 및 민간투자유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5) 크루즈 관광 활성화 지원

크루즈 산업은 해운·조선·관광 등 연관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 2016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 195만명이 소비 지출한 금액만 2조원 이상

최근 세계 크루즈 시장은 연평균 매년 5% 이상 성장하여 2017년 기준 2,520만 명으로 2020년 3,110만 명 이상으로 성장이 예상되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크루즈 시장은 2017년 470만명, 시장규모 5조 8천억원(운임기준)으로 2020년까지 500만 명 이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²⁴⁾

다만, 국내 시장의 경우 지난해 한중관계에 의한 영향으로 2016년(195만명) 대비 79.8% 감소한 39만명이 입하하는 등 국내 크루즈 시장은 외부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4-12 연도별 기항지 크루즈 관광객 입항 현황

(단위 : 만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8	80	106	88	195	39

이에 정부는 지난해 크루즈 시장을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한-대만 크루즈 항로를 개설하여 2018년 부산과 여수에 대만 크루즈 관광객 1만명을 유치하고, 대만, 홍콩 등 동남아 국가간에 크루즈 협의체인 아시아크루즈협의체에도 가입하여 동남아 크루즈 관광객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한·중·일 크루즈 항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동서·남해 연안에 인접한 도시와 항만인프라, 풍부한 관광자원이 존재하여 중국 및 일본 크루즈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기항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나, 세월호사고 등 연이은 해양사고로 인한 크루즈 여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지난해 기준 국내 크루즈 수요는 4만여명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24) 출처 : 해양수산개발원

국내 크루즈 수요를 2020년까지 20만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7년 크루즈 여행 체험 단 50팀 100명을 선정하여 한-러-일 크루즈 항로를 운항하는 크루즈선에 승선하여 크루즈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생정보 등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 크루즈 여행 방송홍보를 3회이상 추진했다.

크루즈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크루즈 관계자 1,200여명이 참석하는 제6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을 개최했다. 아시아 크루즈산업의 공동번영을 위한 학술 포럼을 진행함과 동시에 선용품, 여행사, 기항지 지자체 등 연관 업·단체의 전시부스 운영으로 국내 크루즈산업을 대외에 알리는 초석을 다졌으며, 계속해서 그 규모를 확대하여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크루즈 행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국내 부족한 크루즈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여, 제1차 과정(2015.10~2018.2) 이수인원 294명 중 219명이 국내외 크루즈선사 등에 취업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합격한 이들은 크루즈선에 승선하여 향후 국적 크루즈선 취항에 밑거름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크루즈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남아와 해외 글로벌 크루즈 유치를 확대하는 등 해외 포트 세일즈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크루즈 수요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적 크루즈 선사 취항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6)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21세기의 화두로 등장한 녹색관광 실현에 따른 선도적 권역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충북의 남한강과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생태·휴양 중심의 녹색관광개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09년에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충북, 강원, 경북의 3개 도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총 사업비 77억원 규모의 3개 부문 75개의 세부사업을 구상하였다. 동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을 확정하고 2012년 9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총 사업비 3,970억원, 38개 세부사업으로 총사업규모를 확정하였다. 이후 사업 착수 후의 관광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

간평가 연구용역(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 총사업비 2,670억원(△1,300억원), 32개 세부사업(△6개)으로 전체 사업규모를 조정하였다.

총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개년으로, 2013년에는 간현 녹색충전지대 조성 등 5개 사업에 25억원을, 2014년에는 국제 수변레포츠단지 조성 등 12개 사업에 11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백두대간 곤충놀이나라 등 16개 사업에 145억원, 2016년에는 간현 녹색충전지대 조성 등 16개 사업에 147억 원, 2017년에는 고구려 수변테마마을 조성 등 16개 사업에 14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조성 등 9개 사업에 9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7)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관광지 중심의 관광시장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지역의 상생발전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광역적 차원에서의 개발이 요구되면서 서부내륙권의 우수한 관광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관광 성장동력 마련하기 위한 광역관광 개발사업이다.

2015년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세종, 충남, 전북지역의 19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40개 사업 6,167억원의 총사업비를 확정하였으며, 29개의 관광개발사업과 11개의 관광진흥사업들을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개년동안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0개 사업 86.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14개 사업 8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창조적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1) 관광두레 조성사업

관광두레 조성 사업은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두레PD(관광분야 지역활동가)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숙박·식음·여행기획·체험·기념품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

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12월 기준 40개 기초 지자체에서 155개의 주민사업체를 육성하고 있으며, 68개 주민사업체가 월평균 1,474만원의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표 2-4-13 관광두레 조성사업 지원 현황 (2017.12월 현재)

구 분	지 역	P D	주민사업체
계	40개	33명	155개
1기(2013년)	3개	1명	12개
2기(2014년)	13개	5명	39개
3기(2015년)	10개	11명	42개
4기(2016년)	7개	9명	35개
5기(2017년)	7개	7명	27개

(2) 해안누리길 활성화 사업

웰빙과 힐링문화가 확산되고 삶과 자신을 돌아보는 걷기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면서 바다를 더욱 가까운 곳에서 느끼고, 공감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해안길 걷기’라는 새로운 여행문화 정착과 연안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라는 취지에서 2010년 국토해양부는 ‘아름다운 해양경관, 걷고 싶은 해안순례길’ 사업을 시작하였고, 해안지역의 35개 시·군·구 6,000Km 해안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책길, 마을길 등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 없이 친환경적 여행길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해안누리길이라는 명칭은 대국민공모를 실시한 결과 2,504건의 명칭이 제안되었으며, 전문가 심의를 거쳐 아라길, 아랑길, 해솔길 3개의 후보명칭을 선정하였으나, 국내 해안길을 대표하기 위한 대표성과 신선함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안누리길’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림 2-4-3 해안누리길 BI



노선 선정은 도보여행에 적합한 168개의 노선을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아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의 심의 및 현장조사를 통해 11개 시도 36개 시·군·구에 있는 52개 노선을 선정하였으며, 2015년 인천삼형제섬길을 추가하여 현재는 53개 노선 508.2Km의 해안누리길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종합안내판 설치 등을 통한 안내체계 구축,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보급, 스토리북 제작, 팸투어 등 걷기 행사와 축제 개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해안누리길 여행상품 개발, 대중주 행사 진행, 자원활동가 모집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 등이 있다.

연도별 주요 실적은 2013년 진도 웰빙등산로 등 5개 노선에 해설판 등 8종, 22개의 시설물 설치 및 보수와 2회의 팸투어를 진행하였고, 2014년에는 해안누리길 소개책자인 이야기 따라 걷는 길, 해안누리길 5,000부를 발간하고, 완도 신지명사길 등에서 걷기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특산물 판매,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하였다. 2015년에는 현장체험학습 교재 발간과 공개수업을 진행하고, 주요 일간지 등을 대상으로 노선을 소개하고, 출입기자 대상 팸투어를 개최하여 해안누리길의 홍보를 강화하였다. 2016년에는 해안누리길의 관광자원 가치 제고를 위해 요트체험, 어촌체험마을 숙박 등을 포함한 1박 2일 패키지 상품을 시범 출시하였고, 판매 하루만에 약 100여명의 참가자 모집이 끝났다. 2017년에는 해안누리길 여행상품 개발하여 3,661명의 국민이 이용을 하였고, 28박29일 동안 43개 해안누리길을 걷는 대중주 행사를 개최하고, 12명의 자원봉사자 모집을 통해 7개 노선의 민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이용환경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에는 해안누리길을 거점으로 하는 다양한 테마코스 개발과 인증서 발급 등 방문 동기 강화를 통해 해안누리길의 이용 활성화와 수준 높은 해양관광 콘텐츠

츠를 제공에 주력할 예정이다.

표 2-4-14 최근 5년간 해안누리길 활성화 사업 지원 현황(국비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액	300	295	200	200	200

(3) 레고랜드코리아 기반시설 조성

레고랜드 코리아 기반시설 조성 사업은 강원도 춘천시 하중도에 건립되는 테마파크(레고랜드 코리아)의 성공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기반시설(관광지 연결 진입교량)을 조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광 접근·편의성 향상,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 마련 등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레고랜드 코리아에는 테마파크, 레고호텔, 콘도, 워터파크, 상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동 사업은 2014년에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을 통해 기반시설 국비 지원의 타당성을 인정받았고, 2015년에는 설계 및 공사 계약을 완료하여 6월경 공사 착공하였으며, 2017년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2018년 1월 16일 준공되었다.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
- 사업위치 : 춘천시 근화동 ~ 중도동(하중도)
- 사업내용 : 진입교량 설치 L=1,058.5m(교량 L=966m, 접속도로 L=92.5m)
- 총사업비 : 85,840백만원(국고 42,543백만원 / 지방비 43,297백만원)

표 2-4-15 연차별 투자금액 현황(국비기준)

(단위: 백만원)

연도별	2015	2016	2017
예산액	19,920	11,547	11,076

3. 생태·역사·문화 콘텐츠 중심의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

(1) 관광자원개발 사업

1) 관광지 개발

관광지 개발은 국민의 건전 여가활동 및 다양한 관광활동을 위한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지 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오수처리장, 화장실, 공원, 광장 등 공공편익시설 및 노후 시설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의 관광 매력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7년에는 경기 평택 내리 관광지, 충남 안면도 관광지 등 총 36개소에 30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경기 산정호수 관광지, 강원 지경 관광지 등 총 43개소에 33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 문화관광자원개발

문화관광자원 개발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지나 관광단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사적지,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광역권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소재한 독특한 역사문화, 레저·스포츠자원 등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1999년부터 지원한 사업이다. 정부는 2016년에는 임계면에코케어치유센터 조성 등 192개 사업에 1,28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하동호 주변 힐링공원 조성사업 등 236개 사업에 1,584억원을 지원하였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을 테마로 한 관광자원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각 지역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보유하고 관광객들의 다양한 관광수요에 부응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3)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습지, 옛길, 강, 호수 등 생태자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를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관람·체험관광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 식생 확대, 체험·관람시설 확충 등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생태자원의 중요성을 관광객들에게 인식시키고 건전한 체험형 관광문화를 활성화 한다는 점에서 추진 필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2016년에는 대원사계곡 관광자원생태탐방로 조성 등 32개 사업에 18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등 35개 사업에 197억원을 지원하였다.

4) 광역 관광자원개발

광역 관광자원개발사업은 동·서·남해안 및 지리산권 등 권역별로 특색있는 관광자원(자연·문화·역사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개발의 효과 제고는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기적인 사업평가 및 환류를 통해 사업을 재구성하여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3개에 41억원,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5개에 47억원,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3개에 26억원,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 10개에 8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서해안·남해안·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2017년을 기준으로 사업이 완료되었고, 2018년에는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3개에 3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5)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주 5일 근무제 정착, 대체공휴일제 시행 등으로 국민의 여가가 확대되고 국내관광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고자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여 캠핑장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국민여가캠핑장이 야영장 및 화

장설·취사장·샤워장 등의 위생시설, 운동장·놀이시설 등의 체육시설, 주차장·야영용 트레일러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쾌적하고 저렴하며 안전한 곳으로 조성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7년까지 총 96개소 조성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 12월말 기준 56개소가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어 국민의 여가수요 충족은 물론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6)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지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전통한옥을 한국 고유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체험숙박시설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받은 전통한옥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설 개보수 등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숙박시설로서의 한옥의 가치 보존·제고 및 대체숙박시설 확충으로 국내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7) 관광안내체계구축

관광안내체계란 관광정보의 공급자가 관광정보 수요자에게 관광정보를 전달하는 제반 매개수단 및 운영체계를 말하며, 관광안내체계의 구성요소는 관광안내소, 관광안내표지판, 등 관광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전달매체, 시설물 및 인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관광안내소는 각 지자체 등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약 390여 곳에서 운영 중이다. 관광안내표지는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매뉴얼과 표준 디자인이 수록된 한국 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전국 각 지자체에 보급하였다. 2017년 전체외래객 약 1,334만 명 중 중화권(중국, 대만 등) 44%, 일본 약 17%를 차지하는 등 한류의 영향 등으로 증가한 방한 비중을 고려하여 관광안내표지판의 다국어 표기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매년 1천여 건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다.

8) 탐방로안내체계구축

탐방로안내체계구축 사업은 길 자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관광 자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관리 하는 사업으로, 점형으로 분포된 관광자원을 선형으로 네트워크화하고 도보관광 수요증가에 따른 새로운 여행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한 올레길, 해파랑길, 가람길, 구불길, 강화나들길 등 탐방로 조성은 지역단위로 산재되어 있는 탐방로를 융합하여 관광객의 지역 간 이동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등 관광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6년에는 기존 조성된 걷기여행길의 노선의 정비 및 안내판 정비, 걷기길 안내, 편의제공 등을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한양도성 안내판 개선 및 확충 등 총 33개소 17개 광역시도에 1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 강화나들길 등 총 13개소 8개 광역시도에 7억원을 지원하였다.

(2)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1) 생태녹색 관광자원화

2016년도에는 사업초기부터 지속적인 국고지원으로 일정 수준의 자생력이 확보되고, 사업목표가 일정부분 달성된 기존의 생태관광 10대 모델과 슬로시티 11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종료하고,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을 보유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지역별 예산지원을 차등화하고, 향후 국고지원이 없어도 자생력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2017년에는 8개 지역에 1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10개 지역에 약 1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 야생화 관광자원화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은 야생화를 지역의 특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한 사업지를 공모하여 야생화 군락지 발굴, 조성 및 스토리텔링형 야생화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내용으로 경기 파주 등 4개 지역에 6억을 지원하였다.

3)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사업은 관광목적지로서의 자원성은 있으나 시설노후화 및 관광콘텐츠 등이 미흡하여 매력도를 상실한 기존 관광지에 대한 재생을 추진한 사업으로 2017년에는 경기 남양주 등 3개 지역에 3억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4개 지역에 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3)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

해양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국민들의 여가활동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해양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한 등대를 다양한 해양문화의 장(場)으로 활용함으로써 해양 르네상스 창달에 노력하고자 하였다.

1999년부터 유인등대 정비계획에 따라 등대 건축물을 개량하면서 전시실, 방문객 이용시설 등 기본적인 하드웨어 구축을 완료하였다. 해양관광지와 근접하고 경관이 수려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산시 영도등대, 인천시 팔미도등대, 울산시 간절곶등대, 제주도 우도등대, 동해시 묵호등대, 속초시 속초등대, 여수시 오동도등대 및 통영시 소매물도등대를 해양문화공간으로 지정하여 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양 안전교육, 등대체험, 음악공연 및 세미나 개최 등 적극적인 해양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등대가 단순히 뱃길을 안내하는 전통적인 기능뿐 아니라 해양문화공간으로서의 부가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이는 등대 및 해양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게 하였다. 또한, 인천 팔미도등대, 제주 우도등대, 여수 오동도등대, 동해 속초 및 울산 간절곶등대에는 등대문화 해설사를 배치하여 방문객들에게 등대해양 문화공간 및 주변관광시설에 대한 설명을 돕고 있다.

표 2-4-16 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 실적

사 업 명	2014	2015	2016	2017
등대해양문화공간 정비 실적(억원)	19	20	23	26
등대해양문화 행사비(억원)	3.7	3.7	3.7	4.3
등대해양문화공간 방문객(명)	2,875,814	2,971,433	3,944,708	3,807,364

현재 등대외부 구조물 등 커다란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된 유인등대 정비사업이 완료되고 전시물의 변화, 행사의 다양화 등 방문객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변모하고 있는 시기로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다른 해양관련 사업에 비해 예산확보가 녹록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017년에는 26억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4.3억원으로 등대스텝프 투어, 음악공연, 1일 등대체험 등 특색 있고 다양한 52회의 해양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등대에 진행되는 각종 해양문화행사 및 시설물 정비 등은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다른 해양문화행사와 차별화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방문객이 등대해양문화 공간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속적인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4)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전국에 소재한 각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정비 및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의 관광자원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참여 지자체와 사업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17년에는 9개 시·도에서 26개 내역사업을 선정하여 국비 189억원을 지원하였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예산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나주 서성벽 특별관리구역 조성, 안동 호계서원 이건 및 복원사업, 시흥 오이도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횡성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건립 등을 지자체에서 관심있게 추진하면서 지역유산의 테마별 관광자원화 개발로 지역주민과 관람객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다. 2018년에

는 10개 시·도 26개 내역사업을 선정하여 국비 27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5)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은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사업 중 대구·경북권 사업으로, 해당 지역을 유교, 신라, 가야의 3대 문화권과 백두대간, 낙동강의 생태 축을 기반으로 하는 독창적 지역 문화공간, 대단위 관광산업 기반, 생태 자연의 보고로 만들기 위한 종합 관광개발사업이다.

2009년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2010년 3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 12월 선도사업(9개 사업), 2011년 4월 전략사업(26개 사업)에 대한 간이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총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개년으로, 2010년에는 세계 유교선비문화공원 등 13개 사업에 250억원, 2011년도에는 녹색문화 상생벨트 사업 등 28개 사업에 600억원, 2012년도에는 유림 문학 유토피아 사업 등 42개 사업에 917억원을 지원하였다. 2013년도에는 신화랑풍류체험벨트 등 40개 사업에 958억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31개 사업 80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36개 사업에 1,745억원을 지원하였다. 2016년도에는 40개 사업에 1,66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30개 사업 1,696억원을 2018년도에는 28개 사업 1,19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6)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은 DMZ 인접지역 3개 시도 10개 시·군 지역의 생태 및 역사, 문화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09년 ‘평화생명지대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연구용역(2008년 8월~2009년 10월, 3.6억원)을 통해 테마 횡단코스 개발 등 37개 사업(총사업비 5,516억원)이 구상되었으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제20차 보고(2010년 3월)에서 사업명을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계획’으로 변경하였다.

행안부, 산림청,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44개 세부 사업을 확정하고 2013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3개 시도 10개 시·군, 총 44개 세부사

업에 총사업비 국비 2,097억원을 포함하여 총 4,610억원 규모로 추진되었다.

‘16년 8월 그간의 정책여건 및 지역관광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사업 추진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해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중간평가 연구용역 ‘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총 29개 세부사업, 총사업비 2,466억원으로 사업규모를 변경하였다. 이후, ‘ 17년 강원도 2개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및 총사업비 관리사업의 총사업비 자율조정을 통해 현재 29개 세부사업, 총사업비 2,391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도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경기 김포) 등 3개 사업에 15억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 수리에코타운 조성(경기 파주) 등 6개 사업에 85억원, 2015년도 연평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인천 옹진) 등 6개 사업에 120억원, 2016년도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조성(강원 화천) 등 8개 사업에 151억원, 2017년도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강원 철원) 등 10개 사업에 10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박수근 미술체험마을 조성(강원 양구) 등 8개 사업에 10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4절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

1. 도시 생태자원의 복원·확충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1) 자연마당 조성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하여 2017년까지 부산, 대구, 서울, 익산, 인천, 대전, 군산, 경산 등 총 12개소의 자연마당을 조성하였다. 2018년에 신규로 4개소를 더 설치하여 실시설계까지 마무리하고 연말에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2개소가 추가로 완공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자연마당을 조성하여 녹지 및 생태공간이 취약한 도시지역에 다양한 생태휴식공간을 확충함으로써 도시생태계의 건전성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 생태놀이터 조성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73개소의 생태놀이터를 조성하여 아이들이 집근처 도심에서, 보다 쉽고 가깝게 자연생태 학습과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아이들의 정서발달은 물론 부모에게도 휴식과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3)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최근 4년동안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349개 사업(185,006백만원)에 대하여 국고 지원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체험·전시시설, 탐방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태탐방 장려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자연생태 복원을 통한 대국민 환경복지 향상에 기여하였다.

2. 하천-산림생태 보전·복원으로 융합적 가치 창출

(1) 생태하천 복원

환경부는 1987년부터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까지 오염·훼손된 하천 1,471km를 복원하였다. 그 결과 BOD 평균 6.1→2.4mg/L(2007 ~ 2016년 준공 163개 하천 조사결과)로 수질이 개선되었으며 생물다양성 증가와 주민만족도 측면에서도 향상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국토부와 환경부 합동으로 부처간 중복 문제 해소를 위한 ‘지방하천정비사업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침’을 제정(2014.2.17)하였으며, 생태하천복원사업 계정을 광역발전특별회계 광역계정(~2014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계정(2015년~)으로 전환하였다.

아울러, 생태하천복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15년 신규사업 선정 시부터 지자체에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한 후 환경부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 준공 이후 5년간 보조사업자에 의한 사후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생태하천복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발굴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생태하천복원 사례집 ‘천생인생’, 생태하천복원 매뉴얼, 미국 환경보호청(EPA) 수생태복원원칙 재해석본(2014.10.17), 홍보 동영상 등을 제작·배포하여 하천복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표 2-4-17 생태하천복원 조성사업 추진성과

(단위:%)

성과지표	구분	2014	2015	2016	2017	측정산식
생태하천복원 비율	목표	54.6	59.3	64.0	70.7	[복원하천 구간누계/복원목표구간(2,077km)]×100
	실적	55.3	60.2	65.9	70.8	

(2)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국가생태문화탐방로는 2008년부터 추진된 국고보조사업 결과 2017년까지 62개 사업에 약 2,004km가 조성완료 또는 조성 중이다.

(3) 생태탐방체험시설 및 에코촌 조성

생태탐방체험시설은 2017년 기준 북한산(2011년), 지리산(2015년), 설악산(2017년), 소백산(2017년) 생태탐방연수원이 운영 중에 있다. 생태탐방연수원은 가족단위나 소규모 단체를 대상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생태관광 프로그램 구성시에도 국립공원 인근지역의 다양한 생태·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사회가 생태관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해설사·자연환경해설사 등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 중이다.

에코촌은 2016년 기준 순천만 에코촌과, 우포늪 에코촌이 운영 중에 있으며, 에코촌은 조성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며 그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국가하천 정비

국가하천정비사업 총 사업비 8조 6,541억 원 중 2017년 말 기준 5조 9,51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9년 이후 2조 2,748억 원을 투자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표 2-4-18 국가하천정비사업 투자현황

(단위 : 억 원)

사업명	전체	2014년 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비고
국가하천정비	86,541	47,354	4,338	3,900	3,920	3,600	22,748	

아울러, 국가하천정비 사업은 유역 중심의 다양한 홍수방어대책 마련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맞춤형 하천사업을 발굴하고 홍수에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안전제방 확보율 86.3%)하였으며, 하천의 생태기능 회복과 지역맞춤형 하천환경을 개선하여 생태적으로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문화공간을 창출하였고, 하천사업 제안공모 실시와 소외지역에 대한 주민복지형 하천사업 추진으로 하천사업을 통한 지역발전과 복지 실현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선순환형 구조(계획-건설-관리)를 통한 하천관리의 효율화와 사후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하천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 지방하천 정비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4조 5,273억원 중 2017년까지 87,34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19년 이후 5조 2,238억 원을 투자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표 2-4-19 지방하천정비사업 투자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전체	2014년 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비고
지방하천정비	145,273	68,069	7,204	6,384	5,687	5,691	52,238	

국토부는 그간의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08년~), 하천설계기준 강화 및 홍수피해발생 등 각종 여건변화에 따라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16.10)」을 보완·수립하여 홍수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생태·문화적으로 건강한 하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하천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 하천이용자가 공감하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업과 연계한 하천정비모델을 공모*하는 등 사업 다변화를 통해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 제안공모로 '17년까지 수암천(경기 안양) 등 21개사업 선정('15년 7개사업, '17년 14개사업)

지방하천의 홍수안전도(제방정비 완료구간)는 약 49% 수준('14.12월말)으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16.10)」에 따라 2025년까지 홍수안전도 70%를 목표로 시도별 투

자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효율적으로 사업 시행할 계획이다.

3.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경제적 기반 및 환경 개선

(1) 경관보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형성하여 이를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와 연계하는 사업이다. 경관보전직불 지원단가는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마을경관보전활동비 15만원/ha('17년부터 국고50%, 지방비50%)를 지급하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4-20

경관직불보전제 연차별 사업추진 내역

(단위 : ha, 백만원, 개)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시행면적	470	470	800	5,814	16,171	16,600	13,741	13,766	12,736	12,666	12,160	11,702	14,500	11,482
-경관작물	시범사업			502	600	1,000	5,928	5,796	7,483	7,648	8,116	8,300	9,000	7,500
-준경관작물	(구분없음)			5,312	15,571	15,600	7,813	7,990	5,313	5,048	4,044	3,402	5,500	3,982
○ 예 산	600	600	1,000	2,646	9,640	15,679	13,903	7,579	14,072	14,072	13,870	13,591	11,522	9,320
- 직불금	560	560	952	2,596	9,590	15,596	13,853	7,475	13,968	13,968	13,766	13,487	11,488	9,216
- 행정비	40	40	48	50	50	83	50	104	104	104	104	104	104	104
○ 마 을 수	45	44	60	412	939	795	788	796	527	525	491	476	601	579
○ 농 가 수	763	641	1,216	6,549	16,287	17,632	15,660	18,366	12,778	10,572	9,942	9,677	11,861	10,375

표 2-4-21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한 지역축제 등 방문객 현황

(단위:천명,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측정산식
방문객 수(천명)	2,599	2,733	2,878	3,042	방문객증가율 = 당년도 방문객수 - 전년도 방문객수 / 전년도 방문객수 × 100
방문객 증가율(%)	2.8	5.2	5.3	5.7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꽃을 활용한 지역축제로 지역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 축제로 발전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휴경기 상태로 농촌의 미관을 저해하는 농지의 기능회복과 깨끗한 마을경관 형성에 기여하였다.

(2)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은 농촌의 토지이용을 통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경관 및 전통생태농법 등 전통문화가 깃든 농촌 고유의 자원을 복원·발굴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2년 3월에 농업유산제도를 도입한 이래 2017년까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총 9개 지역의 유산이 지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관광객이 증가하고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농업의 가치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4년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와 2호인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밭담이 FAO GIAHS(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2014년 4월) 되었고, 2017년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6호인 하동 전통 차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2017년 11월) 되었다. 우리 농업유산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는 우리나라 농업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등재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표 2-4-22 방문객 현황

(단위:천명,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방문객 수(천명)	-	-	12,890	15,842	지역브랜드 이미지
방문객 증가율(%)	-	-		22.9	및 가치 제고에 기여

표 2-4-23 국가농업유산지정 지정 현황

지정번호	명칭	지정범위	주요 특징
농업유산 제1호 (2013년)	청산도 구들장 논	청산도 전역 (5.0ha)	○ 전통온돌 방식인 구들장 방식의 통수로가 논바닥 밑에 설치된 논
농업유산 제2호 (2013년)	제주 밭담	제주도 전역 (22,108km)	○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밭을 둘러싼 돌담
농업유산 제3호	구례 산수유농업	구례군 산동면 일원	○ 전국 생산의63%, 천연된 산수유나무 보유, 산수유 군락 및 낮은 돌담 등 경관우수,

(2014년)		(228ha)	지역고유의 재배기술 보유
농업유산 제4호 (2014년)	담양 대나무밭	담양읍 삼다리, 향교리 일원 (56.2ha)	○ 전국 죽림면적의 26%, 경관적가치우수, 생물다양성 및 죽순생산, 농기구이용 및 전통죽제품 생산
농업유산 제5호 (2015년)	금산 인삼농업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등 14개리 (297ha)	○ 임야, 밭, 논에 걸쳐 다양한 인삼재배 기술을 확립하였고, 가공기술의 발달로 국내 인삼의 70%가 금산에서 유통
농업유산 제6호 (2015년)	하동 전통 차농업	하동군 화개면 일원 (597.8ha)	○ 차 군락지의 조성부터 재배까지 자연을 훼손되지 않았고, 차와 관련된 차 민요, 채다가(採茶歌), 차 품앗이 등 많은 문화유산자원이 형성
농업유산 제7호 (2016년)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금강송면, 북면 일원 (14,188ha)	○ 왕실의 황장봉산으로 지정, 주민들이 송계를 조직하여 숲을 관리하면서 생계를 유지,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독특한 경관 형성
농업유산 제8호 (2017년)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	부안군 변산면 유유동 일대 (58.9ha)	○ 뽕나무 재배에서 누에 사육 등 일괄시스템이 보전·관리되고 친환경적 뽕나무 재배, 주변 산림과 뽕나무밭이 조화된 우수한 경관 형성
농업유산 제9호 (2017년)	울릉 화산섬 밭농업	울릉군 일대 (7,286ha)	○ 급경사지 농지에 띠 녹지를 조성하여 토양유실을 방지하고, 울릉지역에 자생하는 작물 재배 및 산림과 해안이 어우러지는 패치형태의 독특한 경관 형성

(3)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정책은 2010년 ‘한국형 10대 생태관광 모델사업’, 2011-2012년 생태관광지 핵심모델개발사업, 2013년 생태관광지역 시범사업을 거쳐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2013.3)하여 본격적인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생태관광지는 2014년 12개소, 2015년 5개소, 2016년 3개소의 총 20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표 2-4-24 생태관광지역 지정 현황

구 분	생태관광지역 지정현황
개 념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
근 거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생태관광지역 지정	① 부산-낙동강하구, ② 울산-태화강, ③ 강원 양구-DMZ, ④ 강원 인제-생태마을, ⑤ 강원 평창-백룡동굴 일원, ⑥ 충남 서산-천수만철새도래지, ⑦ 충남 서천-금강하구 및 유부도, ⑧ 전남 순천-순천만, ⑨ 경북 울진-왕피천계곡, ⑩ 경남 창녕-우포늪, ⑪ 경남 남해-앵강만, ⑫ 제주 제주시-동백동산습지, ⑬ 경기 안산-대부도, ⑭ 강원 강릉-가시연습지와 경포호, ⑮ 충북 괴산-산막이옛길과 괴산호, ⑯ 전북 고창-고인돌·운곡습지, ⑰ 제주 서귀포-효돈천과 하례리 마을, ⑱ 신안 영산도(명품마을), ⑲ 완도 상서마을(명품마을), ⑳ 광주 평촌마을(명품마을)

(4)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 및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2017년까지 틈새환경기술 및 조사연구 3,268개의 연구과제, 13,768개 사업장의 기업환경기술지원(컨설팅), 누적인원 42만 5,443명에 대한 환경교육을 수행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는 영세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사업비로(환경시설 개선비 지원, 업체당 최고 2천만원) 연간 약 1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성하여 354개(2011년 77개, 2012년 77개, 2013년 68개, 2014년 69개, 2015년 63개) 업체의 노후된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개선하였다.

표 2-4-25 추진성과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총계
기업환경 기술지원 (업체 수)	1,058	1,123	1,006	986	4,173
조사·연구사업 (연구사업 수)	185	161	171	139	656
환경교육 (교육인원 수)	3,505	3,705	4,181	3,262	14,653

제5장 사각없는 지역복지 · 의료

제1절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1.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포괄보조금사업)

저출산과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 서비스 욕구가 지역·계층별로 다양하게 분출되었다. 아동의 정서·심리·행동 문제, 가족 기능의 지원, 고령자 소외 예방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해 적극적인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신규 개발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역 주민의 욕구(needs)에 따라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 지자체 신규서비스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진단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며, 사회서비스 산업화·시장 활성화를 유도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서 매칭비율은 국고 7 대 지방비 3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으며, 세부 내역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표 2-5-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내용

세부 사업명	사업 내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직접 기획한 사회서비스 지원 (아동재활, 아동역량개발,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가족역량관리, 신체·정신건강관리 등)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재가간병·가사지원

별개의 단위사업으로 존재하던 3개의 사업을 2013년부터는 지역수요에 민감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회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로 재정배분 방식을 전환하여 시·도가 사업 기획 및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 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2015년부터는 포괄보조를 제도화하여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하였다.

포괄보조로 전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중앙정부(복지부)는 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시·도가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계획→집행→성과→환류의 단계에 따라 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연중 평가방식으로 상반기(계획, 서면평가), 하반기(성과,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제공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활성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고령근로 촉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 2017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표준모델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성인(청년) 대상 심리지원 서비스, 치매환자가족 여행서비스 표준모델 시범사업 추가하였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다산(多産)가정에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고, 서비스 기간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재정 투자 확대를 통해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성인, 가족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해 생애주기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

공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등 제공기관의 양적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복지공동체 활성화 (민관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방분권과 함께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지역단위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으로 지역사회 내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지역사회 복지거버넌스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었다. 이를 위해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었고 지역 내 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보장급여의 효과적인 제공,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명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고, 협의체 참여범주를 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사회보장영역으로 확대는 물론 참여 위원 수 확대와 함께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 기관, 자원봉사자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민관협의기구로서 2017년말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3,488개 읍·면·동에 구성·운영(98%)되어 총91,294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군구에 대표·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실무협의체 내에 노인, 고용, 주거 등 복지대상자별·기능별 실무분과(2,059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군구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평가 및 지역사회 보장급여 제공, 자체 사회보장 사업추진, 읍면동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실무협의체가 이를 지원하고 실무분과에서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기관 간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는 등 전국 시군구 31,890명의 협의체 위원들이 협력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기관종사자,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전국 60,404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724,585가구) 및 복지자원 발굴(337,388건), 연계(1,742,561건) 등 지역보호체계 구축은 물론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특화사업(2,629개)을 마을단위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지역별 협의체 운영 역량과 인프라의 격차로 인한 성과의 차가 현저하여 이를 완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민관협력을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국대회를 개최(17개 시도)하였고 복지사업평가 및 우수사례 공모로 포상(200백만원)수여 하였다.

표 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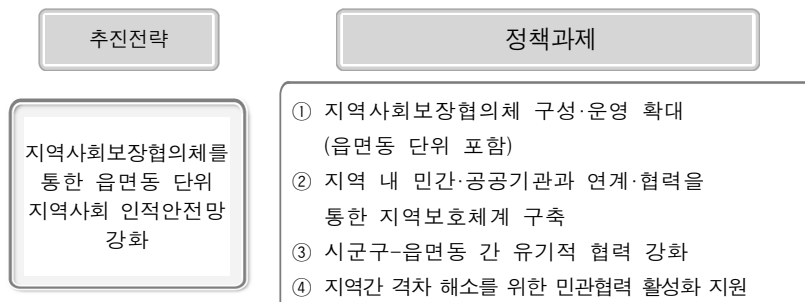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지원 추진성과

(단위:개소,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비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시군구)	228	228	229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3,224	3,467	3,48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전국대회 개최지원	220	220	220	

그림 2-5-1

지자체와의 협력 추진체계 구축



또한, 실무자와 민간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실무교육(2회 418명) 추진은 물론 읍면동 단위 업무 매뉴얼 배포('15) 및 협의체 운영안내(지침)를 제작하여 업무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 내 공공과 민간 협업의 구심점인 협의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 예산으로 시군구에 전담인력이 배치(181개 시군구 228명)되어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3)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인력확충, 읍면동 사례관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7,000명 확충을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하여 오고 있으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관리 대상자수는 2014년 6월 기준,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기초수급자수는 99명으로 여전히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찾아가는 서비스나 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에는 한계가 있고 복지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미흡하여 인력충원 효과가 반감되었다.

아울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 부담, 악성 민원인의 폭력·폭언, 승진기회 부족, 행정직을 복지업무에 배치하였으나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복지인력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2014년 10월,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 의결)」을 마련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과 인력확충의 효과성·지속성 제고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총 6,000명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충원하기로 하였고, 이중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시행을 위한 신규 복지직 공무원 1,177명은 2014년 7월 시·군·구에 우선 선발 배치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복지직 3,360명(70%), 행정직 1,463명(30%) 등 4,823명을 매년 1,600명씩 충원하기로 하였다.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순증되는 복지직 공무원에 대하여 관계부처 합의로 3년간 인건비(1인당 3천만원의 서울 50%, 기타 70%)를 지자체에 국고 지원하기로 하였다.

표 2-5-3 연도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실적

(단위 : 명)

구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획	6,000	1,177	1,600	1,600	1,623
실적	7,691	1,177	2,037	2,578	1,899

또한, 사회복지 인력관리 강화를 위해 기 확충인력을 포함한 신규 증원인력에 대하여 전보제한을 강화하고 시·군·구별로 복지업무 수행 행정직 정원을 정원규칙에 별도로 표기토록 하여 이탈을 방지토록 하였다. 시도 정부업무 합동평가 시 사회복지담당 공

무원 운용관련 지표 신설·평가를 추진하고 복지담당공무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우대를 실시하며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복지업무 역량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 6,000명 확충대책에 따라 2015년에는 신규 복지직 1,615명, 행정직 422명 등 총 2,037명을 임용·배치하였고, 2016년에는 신규 복지직 2,224명, 행정직 354명 등 2,578명을 임용·배치 완료하여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대폭 확충하였다. 2017년에는 신규 사회복지직 및 사회복지담당 행정직 1,899명을 확충하였다. 순증하는 복지직 공무원의 인건비 국고보조는 2012년 272억에 이어, 2013년 572억, 2014년 792억, 2015년 735억, 2016년 626억, 2017년 601억을 교부하였다.

2017년 8월에는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발표하여 사회복지공무원 및 간호직 공무원을 대폭 확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복지·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2017.10.18.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비스 질 상상을 위해,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추가로 발표하였고, 동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사회복지공무원 1.2만명, 방문간호공무원 3.5천명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7.12.16.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500명을 우선 충원하기 위한 선발 시험을 실시하였고, 2018년 상반기 일선 읍면동에 배치하기로 하였다.

복지인력 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를 위하여 2년 이상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 장기재직 가산금(월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완료(2015년 1월)하였고,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상시학습 시간(연간 80시간) 중 사회복지 관련 교육을 연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의 개정을 완료(2015년 1월)하였다. 그 밖에도 복지업무 담당자의 전보제한 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완료(2015년 11월)하였고, 복지업무 담당 경력에 대한 평정가산점 부여 근거 신설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15년 11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도 완료(2016년 5월)하였다.

아울러, 지자체 정부업무 합동평가시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 수’ 평가지표(역순위 평가)를 신설(2015년 7월)하여, 2016년 평가(2015년 실적)부터 2018년 평가(2017년 실적)까지 적용하였으며, 2019년 평가(2018년 실적)시에는 사회복지

지공무원 및 방문건강관리(간호직) 공무원 확충 이행률을 신규로 평가하는 등 지자체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였다.

2. 지역수요를 반영한 주민체감형 건강증진사업 강화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모태가 되는 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 등에 따른 국민 건강 증진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995년 시작되었고 2005년 전국 사업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그러나 획일적인 국가 주도형(Top down)의 사업구조로 도시와 농촌의 서로 다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금연, 모자보건 등 개별 소규모 세부 사업단위로 구분되어 수행되는 건강증진사업이 지역 사회 내에서는 분절되고 경직된 형태로 진행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또한 많았다.

이에 2013년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단위 간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지방자치 단체 주도 맞춤형 사업인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개별적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개별 건강사업의 영역 간 경계를 없애고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를 지자체에서 분석 및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건강 영역별, 생애과정별 건강증진사업 재구성으로 대상자 중심 서비스 역시 강화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수행 지침, 매뉴얼을 마련하고, 성과 관리 및 평가를 수행하며 국고 보조금을 확보하는 등의 총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도 단위의 광역 지방자치 단체는 시군구 단위로의 예산배정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군구 단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시군구 단위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사업을 개발하는 등 지역의 우선순위 건강문제를 설정하고, 실제 사업을 진행

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실제 사업은 개인별, 인구집단별 특성을 반영하여 제시한 13개 영역 내에서 선택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에 필요한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한다. 이를 지원하는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기술 지원 및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각 시군구의 사업 시행 결과는 시도 단위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우수 지자체 선정 및 포상으로 환류하고 있다.

지원기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사업 기술지원, 성과관리, 모니터링과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은 시도의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 시군구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및 기획능력 제고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제공확대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역과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의 진행이라는 결과로 (표 2018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이를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표 2-5-4 2018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지자체명	사업명
서울 중구보건소	동주민 센터 중심 참여형 통합건강증진 모델 구축
부산 사하구보건소	新 건강취약계층! 1인 가구 “혼자서도 FUNFUN하게!”
울산 남구보건소	고래마을 장성포, 함께하는 장생(Well aging)
경기 안산 상록수·단원구보건소	발걸음 도시를 깨우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도시 안산」
충남 홍성군보건소	건강함으로 건강을 배달하는 「Health-우정인
전북 남원시보건소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건강세상 「세상을 바꾸는 날갯짓」

그림 2-5-2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체계

<중앙-광역-기초의 역할>		
중앙(보건복지부)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운영 안내서 및 매뉴얼 개발 • 국고보조금 확보 및 배분 • 기술지원 및 검토 • 성과관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예산배정 •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 기술지원 및 검토 • 시군구 교육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수립 • 사업개발 및 우선순위 설정 • 사업별 예산 배분 및 집행 • 사업수행 및 자체평가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원 및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자문 • 사업 모델개발 및 우수사례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총괄관리, 교육 협의체 운영 • 시도 및 지원단 교육지원/성과관리 실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정책방향 설정 및 기술지원, 모니터링 • 시군구 교육 및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건강증진사업 시스템 	

(2) 주민 정신건강 지원 확대

급격한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성인의 평생 정신장애 유병률이 25.4%에 달하며(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삼성서울병원),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가 2014년 기준 27.3명으로 OECD 국가 평균(12.0명)의 2.3배에 달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재활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주민 정신건강 지원 사업은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이를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귀를 돕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및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를 근거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주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정신보건 전문기관이다. 각 시도 단위에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시·군·구 단위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사업·중증정

신질환관리사업·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자살예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로 전반적인 지역정신보건사업의 기획·조정·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① 해당지역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기본(시행)계획 마련, 기초조사 등 수행, ②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효과성 평가, ③ 정신질환 인식개선, 정신보건서비스 인지도 향상 등을 위한 광고·홍보 및 캠페인 등 수행, ④ 지역 정신보건전문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 등 양성,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가족 인권교육, ⑤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업무조정, 위기상황에 대한 응급대응체계 구축 등이며,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24시간 핫라인 운영 및 응급위기대응, 광역 정신보건심사위원회 평가 업무 지원 등의 업무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로 직접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문제 상담,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①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사례관리, 병원연계, 위기개입, ②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병원연계, 상담 프로그램, 사례관리 등 자살예방 사업, ③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 조기발견, 정서행동특성화 검사(교육청) 사후관리, 병원연계 및 치료비 지원, 바우처 연계, ④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일반상담, 심리검사, 정신 관련 행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8년 정신건강복지센터 4개소를 설치하여 개소수를 점차 확대, 2017년말 현재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24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12년부터는 통합정신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광주광역시에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달체계의 중심기관으로서 통합적 정신건강증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227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해 스트레스, 우울증, ADHD 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교육부와 공동으로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학교 및 정신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조성하였는데, 2013년 6개 지역으로 시작하여 2015년 17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취약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개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1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국립서울병원 내 ‘심리위기지원단’을 중심으로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메르스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극복하기 위한 심리지원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제2차 정신건강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2016년에는 정신건강 5개년 계획인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2016년 2월)하고, 그 법적 근거인 「정신보건법」을 전부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을 2017년 5월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경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개소(2016년 7월)로 광역단위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을 완료하였다.

표 2-5-5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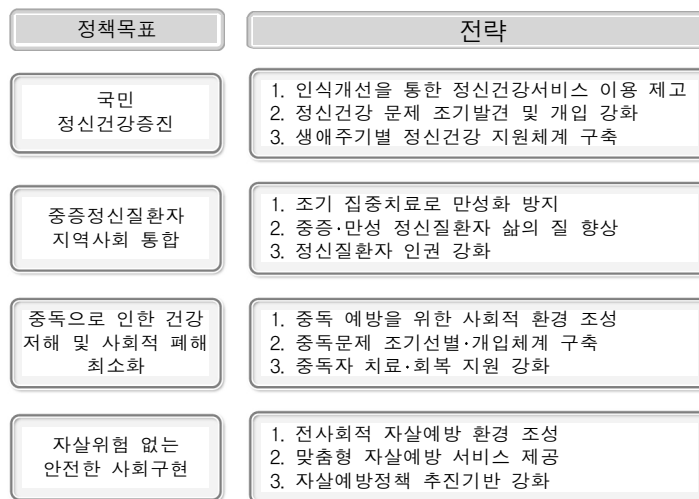
(단위 : 개소,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광역센터	개소	5	7	9	11	13	14	14
	단가	768.8	768.8	768.8	768.8	768.8	768.8	792
기초센터	개소	133	149	159	169	179	179	195
	단가	152.6	152.6	152.6	160	160	165.85	170.8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초 센터에 지원되는 사업비임

* 단가(예산)는 국비(50%), 지방비(50%) 포함한 금액임

그림 2-5-3 정신건강 종합대책('16.2.25)



보건복지부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총괄하고 시·군·구가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통합사례관리로서, 드림스타트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아동을 발굴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자원(서비스)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학교, 보육시설, 보건소 및 민간 의료기관 등 다양한 지역 내 아동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경제적 후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후원 효과까지 도모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시·군·구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여 2007년 16개 시·군·구에서 2008년에는 32개, 2009년에는 75개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101개, 2011년에는 131개, 2012년에는 181개, 2013년에는 211개, 그리고 2015년부터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는 시·군·구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성이 인정되면서 사업초기에는 일부지역 아동(2~3개 동,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시·군·구에 따라서 시·군·구 내 전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였거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대상도 2007년 3,700여 명에서 2017년에는 약 38배가 증가한 144,289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적인 확대 뿐만 아니라 드림스타트 사업의 핵심기능인 사례관리 체계의 내실화를 통해 아동 통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대상아동 및 부모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동과 양육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아동이 어릴수록 서비스 수혜의 효과가 다른 연령대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홀로 방치될 수 있는 지역 내 아동들에게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 가능한 소규모 아동이용시설로서 아동의 집에서 근거리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통해 홀로 방치되는 학령기 아동(18세 미만)에게 학습능력 제고, 정서지원,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1980년대부터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자생적으로 설립·운영해 온 ‘민간 공부방’에서 출발하였으며, IMF 이후 사회현상과 맞물려 방과 후 방임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가 급증하였다.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맞벌이 가족의 증가, 근로빈곤층의 확대 등으로 인해 방과 후에 홀로 있는 아동에 대한 돌봄이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면서, 정부는 민간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아동복지법」 개정, 2004년 1월 29일)하여 공적 전달체제로 제도화하고 운영비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뿐만 아니라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의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말 기준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 4,189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타 부처에서 시행 중인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표 2-5-6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시설 수, 이용아동 수 및 지원 예산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시설수	3,985	4,036	4,061	4,059	4,102	4,107	4,189
이용 아동수	104,982	108,357	109,066	108,936	109,661	106,668	108,578
지원단가 (만원/월, 개소)	370	395	420	433	443	453	473

표 2-5-7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명	내 용
보호프로그램	일상생활관리, 위생건강관리, 급식지도, 생활안전지도, 안전귀가지도, 5대 안전의 무교육
교육프로그램	숙제지도, 교과학습지도, 예체능활동(미술/음악/체육), 적성교육(진로/독서/요리/과학 등), 인성·사회성 교육, 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
문화프로그램	관람·견학, 캠프·여행, 공연, 행사(문화/체육 등)
정서지원	연고자 상담, 아동 상담, 보호자교육, 행사·모임
지역사회연계	기관홍보, 인적연계, 기관연계

표 2-5-8 연령별 이용아동 현황('17.12월말 기준)

(단위 : 명)

계	미취학	초등학생 저학년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등
108,578 (100%)	2,203 (2.0)	54,716 (50.4)	37,102 (34.2)	12,561 (11.6)	1,996 (1.8)

자료 : 2017년 12월 기준

(3)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을 위한 요양제도 도입 추진(2008년 100대 국정과제) 및 VIP 주재 국민경제대 책회의 서민희망과제 채택(2010년)에 따라 기존 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제도가 시행(2011년 10월)되었다. 동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의 활동지원 인정조사결과와 생활환경에 따라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액을 매월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제공함으로써(기본급여(1~4등급) 50.6~127만원, 독거 등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급여(10.8~293.8만원)) 장애인의 자

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토대로 장애인활동지원이 본격 제도화(시행 2011년 10월 5일)됨에 따라 대상자 수를 확대('11년 30천명→ '17년 69천명, 예산기준)하였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수발자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서비스 내용 확대로 활동보조인(방문간호사 등) 등 유휴인력에 대한 추가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11년 19천명→ '17년 60천명, 예산기준 추정치)을 확대하였다. 위탁사업기관으로 국민연금관리 조직 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 부서인 '장애인활동지원부'를 신설하고 292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인정조사 전문화는 물론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신청 안내와 제도의 인지도 제고 및 정책 홍보를 실시하였다.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였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정부 재정지원에 의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저소득층 중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2013년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시범평가를 거쳐 2014년부터 활동지원기관에 대해 유형별로 3개년 평가를 실시하여,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평가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였다. 또한 활동보조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활동보조인 교육시간을 늘리고 실기 및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였다. 활동지원기관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상위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 포상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년도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양적 팽창 뿐 아니라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아울러, 국정과제(50-2, 중증장애인 상시 돌봄체계 구축) 추진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 전체(장애1~3급, 2015년 6월)로 확대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인 발달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주간활동서비스(가칭) 등 활동지원급여 다양화를 위한 연구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보호체계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2013년 10월~)하였으며,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지역 및 대상 확대와 독거노인 사업과의 전달체계 통합을 통해 화재·가스사고 등 응

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서와 신속히 연계하고, 시군구별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안전 확인 등 오프라인 안전망체계를 구축하여 2014년 32개 지역, 3,500명을 2017년에 118개 시군구 지역, 10,000여명으로 확대 제공하는 등 중증장애인 상시보호를 위한 통합 돌봄 제공체계 마련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4)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건강관리, 상담 등의 종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및 지자체 관할 공공시설 등 시설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저소득·맞벌이·한부모 등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이 방과후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활동·복지·보호·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균형 있는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취약계층 가정의 사교육비 절감 및 방과후 비행 노출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학교와 가정·지역사회·민간기업 등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공적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 주5일 수업에 따른 다양한 복지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여 계층 간 격차 완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표 2-5-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요

구분	내 용						
사업목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초4~중3)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성장 및 자립역량 배양						
사업대상	저소득·맞벌이·한부모·장애·3자녀이상·조부모·다문화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						
	연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개소수	100	150	185	178	161	200
	인원	4,200	6,300	7,680	7,245	6,672	8,200
	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개소수	200	200	200	244	250	250
	인원	8,060	8,200	8,091	9,490	9,745	9,773
시행주체	여성가족부, 17개 시·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설치시설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및 지자체 관할 공공시설 등						
사업기간	2017. 1. ~ 12월 연중 상시 실시(토요일, 방학 중에도 일부 운영)						
사업	250개소 운영						
예산	개소당 1.5억원(국비지원율 : 서울 30%, 지방 50%)						

(5) 청소년시설 확충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건전한 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전국적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청소년수련관 1개소 이상,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이상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을 지원하며, 자유학기제, 주5일 수업제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청소년 여가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2017년도에는 건립지원 51개소, 기능보강 79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건립지원 49개소, 기능보강 74개소를 지원 중에 있으며 그 결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 2013년 505개소에서 2017년말 551개소로 46개소가 증가하였다.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은 2017년 말 현재 청소년수련관 185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58개소, 청소년수련원 189개소, 청소년야영장 43개소, 유스호스텔 115개소, 청소년특화시설 10개소 등 전국에 800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표 2-5-10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17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계	800	185	258	189	43	115	10
	공공	551	184	253	64	19	21	10
	민간	249	1	5	125	24	94	0

표 2-5-11 2018년도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지원현황

(단위 : 개소, 억원(국고))

구 분		계	건립지원			기능보강 지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시설 확충	지원개소	123	14	35	-	74
	지원액	879	249	445	-	186

2.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1) 어린이집 확충 사업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의 선호도가 높으나 전체 어린이집의 7.8%(2017년 말)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여 공공보육인프라 확대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농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산업단지, 군 관사 인근지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다문화가구 밀집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 보육수요도 또한 고려하고 있다.

2017년 당초 국공립어린이집을 180개소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새 정부 국정과제(48-3)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추진함에 따라 추경예산에 180개소를 추가 편성하여 총 360개소로 확충 목표를 확대 설정하였다.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소당 330㎡까지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515㎡까지 지원하여 최대 3억 2,702만원(국비 기준)을 지원하였으며, 공동

주택 내 의무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려는 시설에는 최대 5,500만원을 지원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7년 말 기준 3,157개소가 설치·운영되어 186,916명의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151개소, 2016년 201개소, 2017년 373개소를 선정·지원하였으며, 국정과제(48-3)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추진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8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국비지원 상한액을 인상(3.27억원 → 4.61억원)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전환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과 상생협력하면서 효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2018년 2월)하여 공동주택 관리동 2층과 공공업무시설 건물 5층 이하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하였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관련 지방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활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언어발달지도사를 배치하거나 센터 인근 보육시설로 파견하여, 보육시설 원아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 발달 촉진을 위한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하여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아동의 부모에게는 상담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2009년 8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00명의 언어발달지도사를 배치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205개 센터에 300명으로 확대 배치하였다.

표 2-5-1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도서비스 운영 실적(2013~2017)

(단위 : 명)

구 분	계		진단아동 수		교육아동 수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2013년	185,436	14,316	23,976	8,864	161,460	5,452
2014년	212,790	14,602	25,272	9,101	187,518	5,501
2015년	225,359	15,253	28,147	9,643	197,212	5,610
2016년	232,847	15,379	28,520	9,731	204,327	5,648
2017년	225,136	14,630	27,720	9,212	197,416	5,418

(3)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식약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08.7.)으로 식약처에서 지방으로 이관된 식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이관(식품, 의약품의 수거검사) 및 이체인력(101명)에 대한 인건비, 기본경비 및 사업비 전액 국고보조를 통하여 식품, 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16개 시도(세종 제외)에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지자체 국고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17년도에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으로 국내에 유통중인 식품, 의약품에 대하여 16개 시도에서 수거 검사한 식품, 의약품 실적은 식품 5,357건, 의약품 등 3,325건이었다.

향후에도 국내 유통중인 식품,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검사 체계 확립 및 지자체와의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2-5-13 예산 투입 내역(2012~2017)

(단위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48.36	45.94	45.94	47.32	47.32	44.95	42.70
· 경제발전계정	47.00	44.58	44.58	45.92	45.92	43.62	41.49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36	1.36	1.36	1.40	1.40	1.33	1.21

제3절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1.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취약지 해소

(1)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농어촌 취약지는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반면, 의료 인프라는 부족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는 멀리 떨어진 도심지 병원으로 이동하는 불편함 수준에 그치지만, 응급환자는 적정 시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예후가 악화될 수 있다.

취약지는 환자수가 적어 수익성이 떨어지고 의료인력이 근무를 기피하는 등 응급의료기관 자체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는 전국 어디서나 제 시간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 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부터 응급의료 취약지역 내 의료기관에 당직운영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응급의료기금이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충되고 2010~2012년 응급의료선진화계획의 중점추진사업으로 채택되면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郡)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을 새로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는데, 농어촌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사회경제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경영난을 이유로 기존 응급의료기관이 문을 닫거나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군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1개소밖에 없어 문을 닫을 경우 응급의료 사각지대가 되는 지역의 기관까지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2013년부터 모든 군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2015년부터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대상을 현재 행정구역상 군 지역(83개)에서 응급의료취약도가 높은 도·농복합시(19개)까지 확대하여 지원하였다. 2017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의 접근성을 반영하여 응급의료 취약지를 새롭게 정의하였으며(99개), 취약지에

서 제외된 지역도 경과조치를 두어 당분간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5-14 연도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관수	28	37	44	48	45	52	71	87	103	115	108	127
지원액	3,667	3,275	4,305	5,950	21,549	18,558	18,511	23,372	22,866	23,908	24,891	25,206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2006년 37억원에서 2017년 252억원으로 증가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감소함에 따라, 보조금을 응급의료 안전망 유지에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양적인 인프라 확충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정책목표를 이동할 조건이 충족되었다.

따라서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였으며,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여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금 사용에 대해 회계법인의 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담보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 외에도 응급실에 근무할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간호사 수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도심지의 거점병원에서 취약지병원 응급실로 간호사를 파견하는 등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13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18명의 간호사가 파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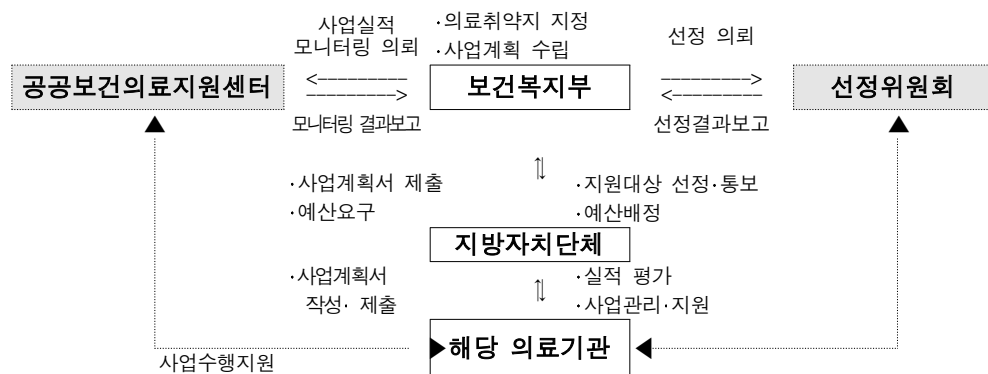
또한 다양한 전문 의료진을 확보하기 어려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거점병원과 취약지병원 간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통해 응급환자 진료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응급환자의 영상검사에 대한 판독도 24시간 지원하고 있다.

(2) 필수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으로 일부농어촌 군 지역은 필수의료서비스를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받는 등 의료접근성이 현저히 낮다. 이런 지역 간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격차는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건강 수준

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지역 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설·장비·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림 2-5-5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사업 추진체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3년 2월 시행)으로 의료공급이 부족한 의료취약지 지정,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및 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에 대하여 보건의료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인력의 공급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의료취약지 지정·지원을 위해 ‘지역별 의료실태 분석을 통한 의료취약지 도출 방안 연구(2012년 12월~2013년 6월, 주관: 건보공단, 연구: 국립중앙의료원)’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모델 및 관리방안 연구’(2013년 9월~12월, 국립중앙의료원)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유형별 거점의료기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부족한 필수 진료과(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한 지역을 필수의료취약지역으로 도출하고, 필수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1차 연도에는 국고지원 한도 내에서 시설·장비비와 인건비(최대 6개월분), 2차 연도 이후부터는 연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현재 병원급 소아청소년과를 2014년 1개소, 2015년 2개소, 2016년 4개소, 2017년 5개소

에 대하여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표 2-5-15 연도별 의료취약지 사업 선정 및 지원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기관수	1	2	4	5	
예산(국비)	222	284	568	659	

(3)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의료기관의 대도시 쏠림 현상으로 농어촌 의료공백, 저출산에 따른 출산 인프라 감소 등으로 분만취약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분만취약지가 증가하여 농어촌 산모는 산전산후 진찰 및 분만을 위해 원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동 사업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분만취약지를 해소하고, 분만의료기관까지의 치료접근성을 향상하여 적절히 산전관리를 받도록 하고 안전한 분만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분만취약지역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만산부인과 설치 가능여부(분만외래·순회진료산부인과)로 구분하여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취약지로 도출된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분만 취약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내 관련과 및 외부 전문가로 T/F팀을 구성·운영(2009년 11월~2010년 4월)하여 국비지원 규모를 검토하였고, 산부인과 분만실 유무의 평면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취약지 기준을 선정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방향 도출(2010년 5월) 등 분만취약지 개선방안을 추진하였다.

2011년 시범사업을 통해 분만산부인과 3개소를 시작으로 2012년 분만산부인과 2개소, 외래산부인과 2개소, 2013년 분만산부인과 4개소, 2014년 분만산부인과 2개소, 외래산부인과 7개소, 순회진료산부인과 5개소, 2015년 분만산부인과 1개소, 외래산부인과 5개소, 2016년 분만산부인과 2개소, 외래산부인과 2개소를 추가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기존 외래산부인과를 분만산부인과로 2개소 전환하여 지원하였다.

표 2-5-16 연도별 분만취약지 사업 선정 및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관수 (신규)	3	7 (4)	11 (4)	25 (14)	31 (6)	35 (4)	35 (외래-분만전환 2개소)
예산(국비)	1,875	2,200	3,950	4,875	5,525	5,725	6,850

제3부

지역별 시책

제1장 서울특별시

제2장 부산광역시

제3장 대구광역시

제4장 인천광역시

제5장 광주광역시

제6장 대전광역시

제7장 울산광역시

제8장 세종특별자치시

제9장 경기도

제10장 강원도

제11장 충청북도

제12장 충청남도

제13장 전라북도

제14장 전라남도

제15장 경상북도

제16장 경상남도

제17장 제주특별자치도

제1장 서울특별시

제1절 서울특별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2017년 기준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1,000만명 이하로 감소한 전년보다 7.3천명 더 감소한 986만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357조원이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에 비해 다소 낮은 연평균 4.2% 성장하였다. 반면, 1인당 GRDP는 3,624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도 4.9%로 전국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수출액은 전국 추세와 마찬가지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다 2017년 반등하여 전년도에 비해 약 40억 달러 증가한 57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소폭 개선된 85.0%로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를 크게 상회하여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았다.

표 3-1-1 서울특별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서울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	1,565,248	1,635,555	-	4.9	328,661	344,426	357,081	-	4.2
인구(천명)	51,328	51,529	51,696	51,779	0.3	10,103	10,022	9,931	9,857	-0.8
1인당 GRDP (만원)	2,927	3,068	3,192	-	4.4	3,295	3,465	3,624	-	4.9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	526,757	495,426	573,694	0.1	62,329	60,273	53,428	57,386	-2.7
취업자 (천명)	25,897	26,178	26,409	26,725	1.1	5,209	5,165	5,146	5,152	-0.4
재정자립도 (%)	50.3	50.6	52.5	53.7	2.2	84.2	84.3	84.7	85.0	0.3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서울특별시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93.7%, 제조업 6.2%, 광업·농림어업 0.2%로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생산액이 각각 33.3%, 33.3%, 40.8%로 다른 업종의 비중과 큰 격차를 보였다. 그 외에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기타 기계 및 장비’ 등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생산액이 모두 감소한 반면,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가죽, 가방 및 신발’ 등의 업종은 서울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사업체 수 기준으로는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이 종사자수 기준은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분야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생산액 비중변화는 크지 않았다.

표 3-1-2 서울특별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2.8	3.2	3.6	2.8	2.8	4.1	2.8	3.1	3.8
섬유제품	4.7	3.4	4.2	5.0	3.7	4.7	4.5	3.5	3.8
의복, 의복액세서리	34.4	35.7	44.2	33.0	34.3	42.8	33.3	33.3	40.8
가죽, 가방 및 신발	4.5	3.6	4.7	4.5	3.8	4.9	4.7	4.0	5.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5	7.8	4.6	9.4	8.3	0.3	9.4	8.7	4.9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8.1	11.0	9.2	8.1	11.4	10.5	8.2	10.7	9.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7.0	6.6	4.4	7.6	7.4	5.3	7.6	8.0	4.8
전기장비	5.8	5.4	4.6	5.6	5.1	4.8	5.5	5.3	4.2
기타 기계 및 장비	6.7	6.5	4.9	6.7	6.4	5.5	6.4	6.1	4.7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이 각각 22.0%, 16.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23.6%, 매출액 기준은 '출판, 방송통신업'이 2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 비중이 14%대이며, 매출액은 18.4%로 서울시 서비스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다소 감소하였다. 종사자수·매출액의 경우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졌다. 반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3-1-3 서울특별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2	0.5	0.6	0.2	0.3	0.3	0.2	0.3	0.3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6	20.0	39.4	8.9	14.9	28.4	9.1	16.1	27.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8	10.3	12.6	14.4	7.2	11.3	16.5	9.1	17.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15.1	19.2	25.8	14.4	14.9	18.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7	25.3	11.4	5.2	18.2	7.7	5.4	23.6	10.6
교육 서비스업	14.9	9.0	5.6	12.5	14.5	8.5	12.7	7.2	4.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8	19.9	17.4	9.9	13.6	9.0	11.0	17.0	12.2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0.2	5.2	8.1	7.7	3.4	4.0	8.7	4.4	5.8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26.7	9.7	4.8	26.2	8.9	4.8	22.0	7.4	4.0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3. 혁신활동 현황

서울특별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10.5조원, 연구개발인력 150,310명, 연구개발조직수 9,683개로 경기도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구개발인력은 2014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조직수는 연평균 4.3%, 9.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는 유지된 반면, 연구개발인력·조직수는 다소 감소하였다. 연구개발인력의 경우 1.0%p, 연구개발조직은 0.3%p, 감소하여 서울 이외 지역의 연구개발 활동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출원 및 등록 모두 전국대비 비중이 30% 수준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47,288건이며, 등록은 25,087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28.9%, 30.4%였다.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과 등록건수는 감소하였으며, 특허 등록건수는 2014년과 비교할 때, 2,782건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1.0%p 감소한 반면, 등록건수는 1.3%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4 서울특별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9,635,558 (15.1)	10,030,638 (15.2)	10,483,939 (15.1)	4.3
	연구개발인력	151,835 (25.1)	144,830 (23.4)	150,310 (24.1)	-0.5
	연구개발조직수	8,017 (25.0)	9,116 (24.4)	9,683 (24.7)	9.9
특허	출원	48,969 (29.9)	48,030 (28.7)	47,288 (28.9)	-1.7
	등록	28,315 (29.1)	22,305 (29.2)	25,087 (30.4)	-5.9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서울특별시는 600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4대 궁을 포함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한강, 남산 등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를 중심으로 전국의 철도, 도로 등 간선교통망이 발달되어 있으며, 전국 대학의 약 35.6%가 집중되어 있어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이처럼 서울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의 다양한 분야가 집적되어 4차 혁명 도래 시기를 맞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및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북아 경제권역의 핵심지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고령사회 및 1~2인 가구의 급증으로 주택시장, 교통, 문화, 복지 등 각 분야에서의 수요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저성장 및 소득양극화 심화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노약자·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주거·사회복지서비스 정책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 불감증 및 기상이변으로 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 재생의 개념을 접목시켜 환경가치 및 에너지절약을 중시하는 스마트·생태도시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주요 정책이슈 및 향후 발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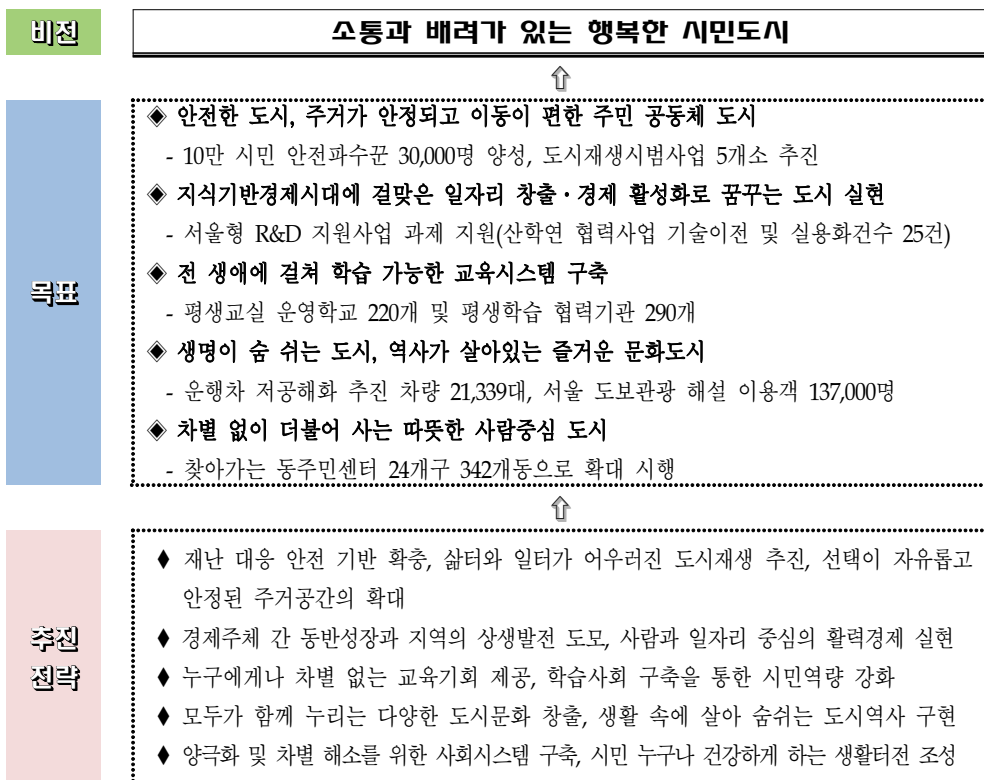
첫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전의 총량적 양적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질적 성장과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더 나은 주거 및 생활환경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연자원 관리와 역사 자원의 보전 및 활용을 통해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서울만이 가진 매력과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과밀로 인한 집적 불경제 요인을 점차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이에 대응한 환경협약에 따라 환경오염 및 에너지 낭비 요인을 줄이고 녹색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노후한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개발로 인한 첨단화로 도시의 안전성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중소도시와 대도시 등 이분법적인 경쟁구도는 지양하고 서울시와 주변 도시 그리고 비수도권의 상호 특·장점을 살려 지역 상생적 연계·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서울특별시는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를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발전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관련 계획 중 최상위계획인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미래상을 수용하여 반영한 것으로, 소통과 배려를 통해 ‘안전한 도시,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리한 주민공동체 도시’, ‘지식기반경제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로 꿈꾸는 도시 실현’, ‘전 생애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 ‘생명이 숨 쉬는 도시,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람중심 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1-1 서울특별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서울특별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세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은 정부에서 제시한 5대 분야, 21개 실천과제에 따라 서울도시기본계획 및 서울 시정 4개년 계획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다.

첫째, 지역생활권 활성화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안전한 도시,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리한 주민공동체 도시’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재난 대응 안전 기반 확충,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 및 침수지역 해소’,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조성’,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도시재생 추진’,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녹색교통환경 조성’, ‘선택이 자유롭고 안정된 주거공간의 확대’를 수립하였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로 꿈꾸는 도시 실현’으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창조경제도시 도약’, ‘경제주체간 동반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경제 실현’, ‘전통문화유산 및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수립하였다.

셋째,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전 생애에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 ‘학습사회 구축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 ‘전인교육을 위한 학교 기능 회복’,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수립하였다.

넷째,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생명이 숨 쉬는 도시,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도시 내 자연생태계 보전·회복과 공익기능 증대’,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도시문화 창출’, ‘생활 속에 살아 숨 쉬는 도시역사 구현’,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실현’을 수립하였다.

다섯째,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람중심 도시’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복지시스템 마련’,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생활터전 조성’, ‘양극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의 실천’을 수립하였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서울특별시는 2014년 1월, 경기 동북부 지역(의정부, 남양주, 양주)과 일부 자치구(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를 포함하는 ‘수도권 동북부 시범생활권’을 구성하였다. 서울시 및 인근 경기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인근 경기지역을 포함하는 생활권 구성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기존 생활권을 확대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인근 경기도 10개 시(성남, 고양, 부천, 의정부, 구리, 하남, 남양주, 파주, 양주, 수원)와 함께 ‘서경지역생활권’을 새롭게 구성(2014년 12월)하였다.

‘서경지역생활권’은 「서울과 이웃지역의 상생발전 협력의 틀 조성」을 비전으로, 친환경·문화관광 네트워크 구축과 광역 교통수요 대응, 자족기능 강화 및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산업단지 연계 일자리 창출 및 자연자원 활용 네트워크 구축, 창조문화산업 육성 및 지역 공동시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1-2 서울특별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서경지역생활권의 주요 사업으로는 구리시가 주관하고, 서울 노원구, 성북구와 경기도 남양주시가 참여하는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해당 사업은 2016년 지역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1.5억원(총사업비 30.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조선왕릉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조선왕릉 홈페이지 구축 등 공동운영체계 구축, 창작 지원 및 인재육성 지원 사업, 콘텐츠 실현의 장 마련 사업, 지역민의 일상 행복증진을 위한 콘텐츠 활용사업 등이다. 또한 2015년도에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된 ‘아차산 문화벨트 조성사업’은 아차산성 망대지 정비, 역사·생태 학습장 및 힐링공간 조성 등 역사문화·생태자원의 연계조성을 통한 아차산 문화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었고 2014년도에 선정된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도 생태하천 조성 및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6년 11월에 완료하였다.

(2) 서울시 추진현황 및 성과

서울특별시시는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5개 시범지구에 대해 활성화계획 수립·고시를 완료하였고, 주민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등으로 주민이 참여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마중물사업을 시행하였다. ‘동네숲(골목길)가꾸기(舊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은 중구 삼일대로 2길 일대 등 17개소 골목길 녹화사업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465회 진행 등으로 도시녹화 공동체 형성 기반을 구축하였다.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노후 주택 ‘석면 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을 2012년부터 총 313가구(2017년 26가구)의 지붕교체 작업을 추진하여 유해물질 제거와 시민건강피해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성과를 가져왔고,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사업’은 2017년에 총 9,322호를 건설하여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안정도모에 기여하였다. 그 외에도 지역주도 협력사업인 ‘귀농 종합 지원’으로 귀농정보 제공 및 영농교육을 통한 우수 인력의 귀농 정착 유도 및 농촌 활력을 도모한 효과를 가져왔으며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신규 마을기업 및 우수 마을기업 총 16개를 선정하여 지역의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1)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서울특별시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어르신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분권형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간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교육훈련지원사업으로 54명이 취업하였고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270개의 고용이 창출되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다문화 가정,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 1,334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서울형 R&D 지원 사업’은 산학연협력 연구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지속가능한 서울경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에 44건의 기술이전 및 실용화건수를 기록하였다.

그 밖에 청년들이 자유롭게 상상·활동 할 수 있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는 4개소(양천, 성북, 도봉, 서대문)의 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강남 지역에도 2018년 5월에 설계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따라서 2018년 하반기에는 기존의 2개소(구로, 동작)와 추가 4개소가 준공 및 개관을 하게 되어 청년들간의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역량 강화, 창의·문화·학습활동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활력 제고 및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서울특별시는 서울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열악한 기업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G밸리 활성화 추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G밸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6년에는 舊정수장부지 MOU 체결 및 G밸리 기업 투자펀드(111억원) 조성·운영하였고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다. 2017년에는 G-SQUARE 개발공사가 착공되었고, 12월에는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하였다.

(3)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 확산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지역경제 확산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서울형 R&D 지원사업’ 등이 있다.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를 중심으로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부흥 및 동북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에는 관계기관별(성북구, 동대문구, KIST, 고려대 등) 간담회 및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고, 홍릉 관련 기관(7개 기관)과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방안의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6년에는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시설 조성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본관 설계 완료 및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7년에는 서울바이오 허브 본관 개관 조성 완료('17.10. 개관) 및 신관·별관 공사를 착공('17.11)하였다.

‘서울형 R&D지원사업’은 산학연협력 연구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지속가능한 서울경제 성장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산학연 협력사업의 기술이전 및 실용화 건수가 2015년 36건, 2016년 37건, 2017년 44건으로 매년마다 증가하여 양적 성장, 중소기업 매출 증대 및 비용 절감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4)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서울특별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사업’을 통해 다양한 도시농업 모델 제시 및 도시문화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세부적으로 학교농장 조성 및 운영 지원(213개교), 실버·다둥이·다문화 농장 운영(3개소, 1,250구획),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162개소 413세트)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사업’을 통해 제초제, 농약, 화학비료, 비닐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도시텃밭을 7,600구좌 보급 및 운영하여 한강 수질 개선과 안전한 유기농 먹거리와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 참여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하였다.

그 외에도 한강상수원보호구역 내 ‘함께 서울 친환경 농장 운영’사업을 통해 6,300구획(총 면적 103,950㎡)농장을 분양 및 운영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 도농교류를 촉진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1)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서울시는 '대학 특성화를 통한 서울시립대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은 사업 운영 첫 해로 학과 특성화 사업(4개 참여 학과 선정, 30백만원 지원, 학과별 특수성 및 사회적 인력수요에 기반한 특화교육 운영), 계산물리 특화 교육과정 운영(연구교수 1명 채용, 27개 교과목 실습모듈 개발), 학생 장학금 지원(5백만원 지원) 등 세부사업을 통해 특성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2015년에는 2014년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및 사업성과의 교내 공유·확산을 통해 지속적인 대학 전체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2016년에는 대학 전체 특성화 경쟁력 강화 및 계산물리 특화교육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춘 도시전문가를 양성하였고, 2017년에는 해당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Unique Plus UOS' 사업을 추진하여 지원받는 학과 및 학생수를 증가하였다(2016년 1개 학부 17명 → 2017년 4개 학부 34명). 이는 특성화 사업 수혜율 확대를 통해 대학 전체 특성화 역량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2)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의 서울시 주요 사업으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 확대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특성화고교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해 산업수요에 적합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14년에는 특성화고 체제개편 28교, 실험실습기자재 77교, 실험실습재료비 79교, 취업역량 강화사업 49교, 산학협력 30교, 2015년에는 특성화고 체제개편 21교, 실험실습기자재 79교, 실험실습재료비 79교, 취업역량 강화사업 46교, 산학협력 24교, 2016년에는 특성화고 체제개편 16교, 실험실습기자재 79교, 취업역량강화사업 52교, 취업기능강화지원 사업 27교, 2017년에는 특성화고 체제개편 10교, 실험실습기자재 80교, 실험실습재료비 80교, 취업역량강화사업 26교를 지원하였다. 또한 NCS 기반 교육 과정 안착을 위해 다양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3)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서울특별시 2014년 4월, 서울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 평생교육정책 및 사업 등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2015년에는 독립재단을 출범하여 (2015년 3월) 평생교육 발전계획 및 전략과제 수립, 행복학습센터 운영, 네트워크 기반 특성화 모델 발굴 등의 성과를 이루었고 2016년에는 평생학습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1천여명이 참석하였고, 문해교육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초등, 중등 70명을 양성하였다. 2017년에도 평생교육 컨설팅 20회, 릴레이 강연회 1,710명 참여, 동네배움터 운영지원 45개소 등 지속적으로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평생학습 기반을 강화하였다.

학교 자원을 활용한 시민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및 지역 평생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 중심 지역평생학습공동체 구축’,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의 평생학습협력망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학교 중심 지역평생학습공동체 구축사업’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평생학교 운영학교가 245개로 확대되었고 학교 및 지역사회에 교육봉사 등으로 환원하여 지역평생교육기반을 구축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학습·복지·고용이 순환하는 평생교육실현으로 개인 및 지역사회의 통합적 평생학습력을 향상시켰다.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의 평생학습협력망 구축사업’은 평생학습 협력기관이 2015년 284관, 2016년 288관으로 2017년 313관으로 점점 확대되었다. 특히 2017년에는 거점기관 소외계층 운영지원을 통해 41개 프로그램 운영 및 6,034명이 참여하였으며, 협력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해 99개 프로그램 운영 및 17,701명이 참여하였다. 이는 협력기관을 확대 구축하여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평생학습공동체를 형성하였고,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한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 양극화를 해소하였다. 또한 협력기관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복원

(1)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서울특별시는 홍인지문 복층의 멸실된 성곽복원을 위해 ‘한양도성 보존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은 원형고증 연구를 통하여 성곽복원 설계안을 마련하였고 2015년은 관할 자치구와 협력하여 성곽 주변 노점상 등 가로시설을 정비하고 성곽복원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016년은 성벽 변형이 심한 구간 정밀계측 및 풍화성동 보존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7년은 성벽 주요 변형구간 24개소를 정밀계측 관리, 숙정문·창의문 보수·정비, 인왕·백악 성벽 훼손구간 보수를 하였고 이는 위험 우려구간을 사전에 예측하여 탐방로 우회·폐쇄조치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울 어디서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공공도서관 확충사업’과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에는 목표보다 1개소 많은 9개소의 공공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2015년 6개, 2016년 2개, 2017년 13개의 추진실적을 나타냈다. 작은 도서관의 경우 2015년 27개, 2016년 16개, 2017년 20개로 누적 925개(2006년부터 시작)의 도서관을 조성·지원하여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2)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서울특별시는 지역의 문화격차 및 지역불균형 해소하고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수요 및 증가 대비 생활체육시설의 부족으로 이용률이 높고 확충이 시급한 종목부터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2014년 39개, 2015년 44개, 2016년 113개, 2017년 82개 체육시설을 조성하였다.

그 외에도 서울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 사업은 2015년 160명, 2016년 160명, 2017년 200명 지원 등 점점 사업대상 인원을 증가시킴으로써,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및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였다.

(3) 지역 관광산업 육성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시는 ‘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울도보관광코스 개발·운영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울도보관광코스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서울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2017년도 서울도보관광 이용객은 총 149,564명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하였다(2016년 137,413명). 신규자원을 반영한 일반 코스 3개(서울로 7017 등)과 장애인 2개 코스 등 새로 5개를 개발하여 총 30개 도보관광 코스를 운영하게 되었다(일반 23, 상설 3, 장애인 4).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해설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총 206명의 해설사를 양성·배치시켰고, 해설 품질 제고를 위해 전년 대비 15시간을 확대한 80시간의 정기교육 운영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해설사 전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평가결과, 해설사 활동정지 7명·자격해지 7명). 또한 외국인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국적에 맞춘 해설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있고 신규 관광자원 및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코스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4)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

서울특별시시는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차 저공해 사업’은 노후 경유차·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 PM-10) 및 질소산화물(NOx) 등 인체 위해성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에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12,152대, 질소산화물 저감 353대를 통해 미세먼지를 개선하였고, 2015년에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13,639대, 2016년 16,916대, 2017년 29,678대를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장시켰다.

또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배란다·주택옥상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민이 에너지 소비주체에서 생산주체로 전환하도록 독려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당초 목표였던 5.6MW를 초과달성하여 2만개소에 12.1MW를 보급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시민참여 태양광발전 우수 정책으로 국비 지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1)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있다. 동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기존의 행정중심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복지와 마을공동체중심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1단계 본격 시행으로 13개구 80개동, 사회복지인력 60명을 충원하였고, 2016년은 2단계로 17개구 283개동, 2017년은 3단계로 24개구 342개동으로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 문제 등을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시·구·동 단위의 다양한 참여주체와의 정책공유 및 협업을 통한 민·관 협치가 강화되고 있다.

(2)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서울특별시시는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서울형 방문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반 구축 및 지원을 하였다. 2014년에는 허약노인 집중사례가 6,670건, 2015년 14,000건, 2016년 15,500건, 2017년 14,000건으로 어르신들의 예방적 건강실현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서울시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사업’으로 2017년 공사 완료 및 개원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장애 아동들의 대기시간 단축 등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3)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및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사업으로 ‘건강서울 통합의료 안전망 구축 사업’이 있다. 2015년에 북부병원 1개소를 시범기관으로 지정,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의료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6년 9개, 2017년 12개로 확대 운영하여 2015년 275명, 2016년 340명, 2017년 327명 등 더 많은 사람이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제2장 부산광역시

제1절 부산광역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부산광역시의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17년 기준 347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81조원으로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상회한 연평균 5.0% 성장하였다. 1인당 GRDP도 2,356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도 5.1%로 전국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수출액은 2015년에 158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가 2016년 큰 폭으로 하락한 뒤, 2017년에는 약 10억 달러가 증가한 15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016년과 동일한 60.1%로 2014년의 57.4%에 비해 2.7%p 높아졌으며,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보다 높았다.

표 3-2-1 부산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부산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	1,565,248	1,635,555	-	4.9	73,674	78,238	81,198	-	5.0
인구(천명)	51,328	51,529	51,696	51,779	0.3	3,519	3,514	3,499	3,471	-0.5
1인당 GRDP (만원)	2,927	3,068	3,192	-	4.4	2,134	2,266	2,356	-	5.1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	526,757	495,426	573,694	0.1	14,702	15,579	14,074	15,064	0.8
취업자 (천명)	25,897	26,178	26,409	26,725	1.1	1,693	1,684	1,686	1,685	-0.2
재정자립도 (%)	50.3	50.6	52.5	53.7	2.2	57.4	56.8	60.1	60.1	1.5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부산광역시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79.4%, 제조업 19.8%, 광업·농림어업 0.8%로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및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가 각각 16.7%, 14.6%로 가장 높았다. 생산액 기준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1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4년에 비해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다. 이 외에도 '금속가공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의 업종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전반적으로 큰 비중 변화가 없는 가운데 '식료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이 다소 증가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식료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증가한 반면,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는 감소하였다. 생산액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식료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등의 업종이 증가하였다.

표 3-2-2 부산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6.7	6.4	6.1	7.0	6.8	6.5	7.3	7.1	6.4
의복, 의복액세서리	0.3	0.1	2.2	0.3	0.1	1.5	0.2	0.1	1.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7.3	7.6	5.6	7.5	7.5	5.7	7.6	7.5	5.5
1차 금속	7.2	7.9	16.7	7.3	7.9	15.1	6.9	7.4	14.0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6.7	13.0	11.7	16.9	12.9	9.9	16.7	12.7	10.1
전기장비	5.9	5.8	5.2	6.2	6.2	5.2	5.7	5.9	4.7
기타 기계 및 장비	16.7	14.9	12.6	17.1	15.3	12.9	16.7	14.6	11.8
자동차 및 트레일러	6.2	8.7	15.1	6.0	8.6	16.4	6.4	9.8	19.5
기타 운송장비	0.2	0.3	5.0	0.2	0.3	5.2	0.2	0.3	6.0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33.2%, 15.6%, 14.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28.5%, 19.3%로 가장 높았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부동산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 비중이 8~9%대이며, 매출액은 12.6%로 매출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5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종사자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증가한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사업체 수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종사자수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매출액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증가하였다.

표 3-2-3 부산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6	1.5	3.1	0.5	1.1	1.7	0.6	1.3	1.9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1	3.0	6.0	2.1	3.4	10.1	2.0	2.8	4.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5.3	10.3	20.0	13.2	7.7	16.7	15.6	9.9	26.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8.3	9.0	13.6	8.3	9.4	12.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2	21.9	13.7	5.0	15.8	8.8	5.5	19.3	10.9
교육 서비스업	16.2	9.8	5.8	14.8	20.8	16.4	14.6	8.4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1	30.0	31.2	10.3	22.9	18.4	11.3	28.5	23.2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9.9	6.4	8.5	7.9	4.5	4.8	9.1	5.7	6.1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37.6	17.0	11.7	37.7	14.8	9.5	33.2	14.7	9.8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3. 혁신활동 현황

부산광역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1.2조원, 연구개발인력 22,395명, 연구개발조직수 1,563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4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연구개발조직수는 연평균 11.6%, 연구개발비는 연평균 6.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조직수 모두 소폭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인력, 조직수 모두 0.1%p 증가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해서는 0.2~0.3%p 감소하여 부산의 지속적인 혁신활동 증가가 다소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5,989건이며, 등록은 2,527건으로 전국대비 3.1~3.7%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은 연평균 5.9%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특허등록은 -4.8%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전년도에 비해 특허등록 건수가 246건이 증가하여 감소율이 다소 낮아졌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0.4%p, 등록건수 0.2%p 증가하여 각각 3.7%, 3.1%로 나타났다.

표 3-2-4 부산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1,104,845 (1.7)	1,286,165 (2.0)	1,241,716 (1.8)	6.0
	연구개발인력	21,441 (3.5)	24,124 (3.9)	22,395 (3.6)	2.2
	연구개발조직수	1,254 (3.9)	1,580 (4.2)	1,563 (4.0)	11.6
특허	출원	5,337 (3.3)	5,786 (3.5)	5,989 (3.7)	5.9
	등록	2,790 (2.9)	2,281 (3.0)	2,527 (3.1)	-4.8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부산광역시에는 우리나라 제1의 국제무역항과 국제공항을 갖춘 세계물류 네트워크의 중추도시(Asian Gateway)이자 문화·문명의 입구이며, 역사적 상황에서 항상 첨예한 역할을 했던 우리나라의 관문이다. 부산광역시는 한국전쟁 이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지금은 우리나라 제일의 항만·해양관광도시, 동북아 컨벤션 중심 도시로 위상이 높아졌다.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세계적인 슈퍼항만을 가진 해양물류의 중심도시로 항만, 철도, 공항 등 해상과 내륙의 운송체계를 결합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 특화된 산업단지, 기간산업과 전략 산업 등 풍부한 산업기반과 풍부한 천혜의 자연자원을 고루 갖추고 있는 기회의 도시이다. 또한 다양한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세계적인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의 인구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고용 및 세수 감소로 이어져, 경제력 저하를 우려시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도 도시 활력을 침체시키는 요인이다. 또한 우수 인재의 시외유출과 혁신 성장동력의 발굴과 성장세 미흡은 부산의 미래먹거리 확보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대외적으로는 상해, 싱가포르, 홍콩 등 경쟁국과의 경쟁 심화와 중국경제의 부상과 서해안권의 집중개발로 인한 상대적 소외,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자체간 경쟁 과열 등 부산광역시를 둘러싼 불균형 요인들도 부산의 발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서부산권 개발을 통한 부산신항건설, 국제산업물류단지조성, 경제자유구역개발 등으로 국제항로의 Hub항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교역기능이 강화되었으며, 해양수도로의 성장잠재력도 증가하였다. 또한 부산의 풍부한 자연자원은 자연친화적 도시공간 창출은 물론, 국제적인 체류형 관광·휴양명소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간 부산시에서 준비해 온 TNT 2030 플랜 실현과 고학력 인구비율 증가는 고도화된 지식산업활동 기반 확대와 신소재, 소프트웨어, IT산업 등 부산시의 자생적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가장 살고 싶은 도시 대상 선정(중앙일보 주관)과 2017년 사회조사결과 '부산에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한 시민이 70.9%인 결과는 부산시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로, 향후 도시 정책 변화의 체감도가 시민 모두에게 보다 제대로 전달되고, 시민 신뢰와 지지를 통한 시정 동력을 확보해 가는데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부산광역시가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적인 도시로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컬(Glocal) 시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대내적으로는 지역 설정에 맞추는 전략, 그것이 바로 글로컬 시대를 준비하는 부산의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부산은 세계 경제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고, 개방적이고 유연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살릴 수 있는 사람과 기업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룬 성과와 변화를 바탕으로 부산발전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함은 물론, 부산 경제 체질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중심 시정'과 '지역경제 체질 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역 내 격차 해소를 위한 서부산권 개발 가속화를 위해 신공항 접근 도로망과 철도망을 구축 등 서부산권 교통 인프라 개선, 사상스마트시티 본격 착수, 에코델타시티 등 시정 숙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서부산 발전의 상징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세계적인 행사인 2030 등록엑스포의 부산 유치와 낙동강 중심의 서부산 발전 촉매 역할을 하게 될 낙동강 하굿둑 개방 등으로 위대한 낙동강 시대를 열어갈 서부산 그랜드 플랜이 본격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지진대책, 원전위험 해소 등 시민불안과 갈등 해소에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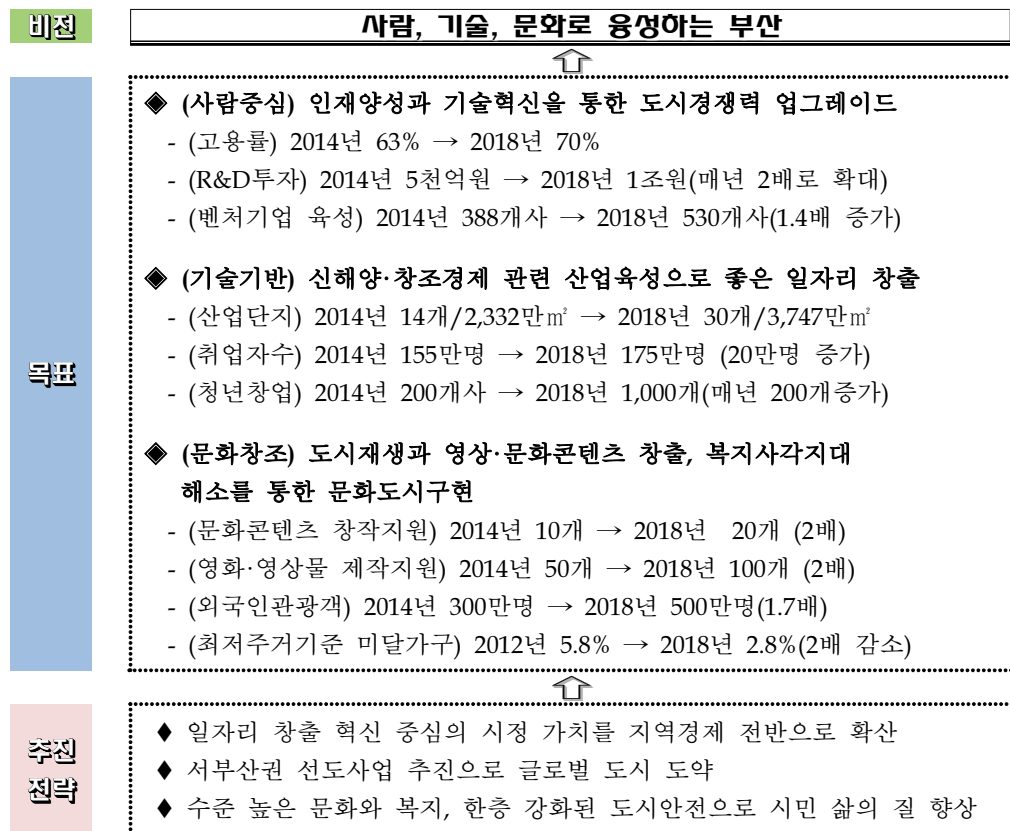
1. 발전비전

부산광역시의 발전비전은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으로 인재양성과 기술혁신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해양·창조경제 관련 산업육성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 도시재생과 영상·문화콘텐츠를 창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문화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첫째, 일자리 창출 혁신 중심의 시정 가치를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 둘째, 서부산권 선도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도시 도약, 셋째, 수준 높은 문화와 복지, 한층 강화된 도시안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추진전략으로 한다.

그림 3-2-1

부산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부산광역시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일자리 창출, 서부산 발전, 부산형 복지 정립 등의 분야에 괄목할 성과를 이뤘다.

먼저,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사람과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혁신인 ‘TNT 2030’ 플랜을 실현하고, 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과 대학산학연 연구단지(URP) 조성 등 대학 중심의 연구·사업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창업시작에서 성장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창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 외에도 적극적인 규제개선 등으로 기업 친화 도시로의 변모를 꾀하였다.

그리고 지역 내 균형을 위한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 플랜’을 가시화하고, 부산형 복지인 ‘다복동’을 통해 복지와 도시재생을 포함한 ‘부산형 융합 복지’의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문화정책을 민간 주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문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2017년에는 시민과 한층 강화된 소통으로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큰 틀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목표 달성을 위한 세 가지의 추진 전략을 선정하였다.

첫째, ‘일자리 창출 혁신 중심의 시정 가치를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을 위해 TNT 2030 플랜의 성과를 확산하고, 국가 R&D 유치, 창업생태계, 고부가 지식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기술고도화 지원 및 유망 글로벌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체질 강화, 일자리 허브 구축으로 미스매치 제로화, ICT기반·SW융합·의료산업·방사선의과학 육성 등 미래 먹거리에 대응하는 세부 전략을 강구한다.

둘째, ‘서부산권 선도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해서는 서부산글로벌시티 플랜 핵심사업의 본격화로 서부산 발전의 꿈을 현실화하고, 부산 대표 노후 공단인 사상공단 재생사업을 시작으로 도시개발 가속화, 글로벌 해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강구한다.

셋째, ‘수준 높은 문화와 복지, 한층 강화된 도시안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생활 속 시민 문화 참여 공간 확충, 문화시설의 지역 편중 해소를 통한 균형 있는 문화생활 저변 확대, 관광·영상 인프라와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한 도시 소프트웨어 강화, 다복동 사업 활성화 등 부산맞춤형 복지 대응 체계 구축을 강구한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부산광역시시는 지리적 연접성, 공간기능적 연계성, 산업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김해·양산·울주와 부산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하였다. 4개 지자체간 합의된 공동 목표 실현과 생활권 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상생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해 연계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였고, 현재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구축 사업, 낙동강 뱃길복원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림 3-2-2 부산광역시 지역생활권 구성



부산중추도시생활권은 2014~2017년 간 총 5개의 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생활권 지역의 공통된 자원과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사업을 발굴하였고, 이 중 2014년에는 ‘철길마을 W-line프로젝트’와 ‘폐기물매립시설 공동이용 사업’이 선정되어 총 5,356백만원(국비 4,238백만원, 지방비 1,118백만원) 사업비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5년에는 ‘낙동강뱃길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이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3,958백만원(국비 2,770백만원, 지방비 1,188백만원), 2016년에는 사회적약자 스마트 위치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선정되어 2,755백만원(국비 2,204백만원, 지방비 551백만원), 2017년에는 스마트기술 활용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이 선정되어 2,680백만원(국비 1,970백만원, 지방비 710백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부산광역시시는 고른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 경제권 도로망 구축과 대중교통 중심도시 구현, 부산형 도심재생 확산, 클린에너지 도시, 재난 안전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광역 경제권 도로망은 낙동강 횡단대교(3개소)와 해안순환도로망(3개소),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지정(5개소) 등 동·서를 연결하고 내부간선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 간, 지역 내 교류가 활발해지는 데 주력을 두었다. 또한 광역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지 대중교통 수송부담률 60% 달성을 위한 시민공감대를 확산하고, 2층 버스 시범운영, 전기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였다. 동해남부선 부산-일광 구간 준공 및 부전-마산 복선전철사업도 추진하여 교통 지원 체계를 활용한 균형발전을 유도하였다.

부산형 도심재생은 주거재생 위주의 도시재생에서 노후 상업지, 공단 재생 등을 병행하는 보다 종합적인 관점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였고, 행복마을만들기는 3년 연속 1위를 쾌거하는 등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켰다.

부산광역시시는 ‘클린에너지 부산’ 원년으로 클린에너지 정책컨트론타워인 ‘클린에너지 정책보좌관’을 설치하였고, 2017년 5월에는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외에도 울산, 경주 지진 이후 지진으로부터 도시안전 확보를 강화하고, 시민 우려가 큰 신고리 5, 6호기 건설 등 시민안전 대책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성과는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 정지’이다. 이번 고리1호기 영구 정지는 시민과 함께 이루어 낸 결과로 시민 축제로 승화할 예정이며, 원전사고 대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지진대비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2017년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기술 활용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은 드론, 빅데이터를 활용한 참여지자체 재난대응 관제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강과 산, 바다로 둘러싸여 풍수해, 해상재난, 산불 등이 상시 우려되는 생활권의 지리적 특성과 재난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함에 대응한 사업으로, VR 기반 시민참여형 재난안전 체험공간 조성, VR 기반 재난안전 체험 콘텐츠 개발, 드론(Drone) 활용 실시간 재난감시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이 추진 중에 있다. 재난에 대한 지역 간 공동 대응과 시민들의 재난체험 및 대응훈련을 통한 재난 대비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부산광역시의 일자리 환경 혁신은 체감형 일자리 정책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생태계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체감형 일자리 정책으로는 2017년 5월, 부산의 첫 청년종합지원 대책인 ‘청년 디딤돌 플랜’이 대표적이다. 동 플랜은 부산시 최초의 ‘청년 종합 지원 계획’으로 청년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부산 청년들과 함께 노력하여 만든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의의가 있다. 이 정책은 그동안 일자리 문제에 집중되었던 청년 정책을 주거, 생활안정, 문화, 참여 등 부산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청년들의 일자리와 생활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8월에는 청년정책플랫폼인 청년두드림센터와 K-Move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소셜프랜차이즈, 푸드트럭, 위기업종지원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부산 일자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하여, 2,452명 취·창업시켰다. 또한 소상공인 종합지원대책을 통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6월에는 ‘골목상권 스마일프로젝트’를 실행하고, 2017년 10월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설치·운영하여 시민들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생태계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 강소기업 육성 및 글로벌 기업 유치, 지역 R&D 역량 강화, ICT 기반 미래 신산업 창출 등을 추진하였다.

부산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유치 전략에 집중하여 우수 기업 29개사 유치, 5,704억원의 창출효과와 직접일자리 4,078명 창출효과를 달성하였고, 2017년까지 누적수로는 100개사, 13,445명, 지역 내 투자 18,243억원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기업이 일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 2017년 경제활동 친화성 조사(대한상의)에서 16개 구·군이 모두 S등급이 나올 정도로 괄목할 변화를 이루었다.

한편 ‘TNT 2030’ 플랜 성과 확산의 결과로 한국로봇연구원 분원, 기초과학연구원, FAU 유체역학연구소 등 국가R&D 유치가 26건, 3,226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2017년 3월 ‘부산지식산업센터’를 개관하였다. 창업생태계는 창업시작에서 성장까지 창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업 환경 촉진 및 성공률을 제고하였다. 창업생태계는 창업카페(예비자)→창업지원센터·혁신센터(원스톱지원) →센탑(투자)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단계별 창업자금지

원 시스템도 구축(18개 펀드 3,001억원 조성)하였다.

그리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이루어졌는데, 먼저 산업 수요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연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3개 대학에서 420명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대졸(예정) 미취업자 대상으로 부산전략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5억원, 6개 분야 122명)하였고, 미래사회 변화 요구에 대응하는 미래 신직업군 전문인력도 양성(1.3억원, 3개 사업단, 79명)하였다.

부산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요자와 공급자를 위한 두 가지 관점의 전략적 계획을 수립·실행한 결과, '17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창출평가 3년 연속 대상을 수상('17. 고용노동부)하였으며, 고용률 63.3%(민선 6기 이전 61.6%), 좋은 기업 유치수 100개(민선 6기 이전 51개), 100대 강소기업은 76개(민선 6기 이전 3개)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냈다.

일자리 기반 마련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지역산업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발, 섬유, 패션산업이다. 부산은 과거 신발제조업이 지역의 주된 사업이었던 만큼, 지역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를 건립중에 있으며, 2016년 6월 착공하여, 2017년 말에는 공정률 50% 상태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신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정과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등 다시 신발 제조산업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그리고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부산시는 중소기업의 R&D 저변확대 및 기술혁신 고도화, 우수 기술 사업화 및 성장지원 촉진을 위한 지원에 집중하였다. 산학연협력기술개발 및 지역특화산업분야 중소기업 집중 지원(62억원)하였고,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 운영 지원(180억원)하고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10억원)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부산광역시시는 차별없는 교육여건 마련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먼저, 공교육 지원의 내실화를 다지는 데 역점을 두었다. 영남권 최초로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였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를 지원하여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였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아이들의 방과 후 시간에도 질적 교육을 받을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성화고 35개교(840백만원)와 취업연계 산업체 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 3개교(370백만원), 과학영재 및 글로벌 인재양성 특수목적고 4개교(1,000백만원)를 지원하였다.

이 밖에 부산특화형 평생교육 허브기관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출범('17.1.1.)하여 부산특화형 인재·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 및 평생교육기관의 역량 강화하고자 하였다.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16개 구·군에 생애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578개(23,525명 참여) 350백만원을 지원하고, 평생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16개 구·군 200개(17,829명 참여) 14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평생교육진흥 추진기반 구현을 위해 대학과 구·군 연계 프로그램은 21개 대학에 107개 프로그램을 332백만원 지원하였고 부산시 16개 구·군의 행복학습센터 지정도 2016년에 88개, 2017년에 128개 지정 완료하는 등 평생교육진흥 추진기반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산학협력 고도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에 역대 최초로 15개 대학이 선정되었고, 시, 대학 산학협력단, 공공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 등 28개 기관이 참여한 산학연 혁신 네트워크 구성·운영하였다. 또한 지자체 최초 산학협력 EXPO를 교육부와 공동개최하여 433개 기관 참여, 3만 여명이 참관하였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과학기술의 인프라 구축과 과학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어 공남권 거점 과학관인 '국립부산과학관'을 운영하고 있고, 누적 관람객 190만명을 돌파하였고('17년 12월), 과기부 성과평가 최우수 'S'등급을 2년 연속 받았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부산광역시시는 지역 문화 융성과 생태 복원을 위해서 시민 생활문화의 체감도 향상과 창작환경 조성, 사람과 환경의 공존에 역점을 두고 있다.

먼저 시민 자율적 문화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활문화센터 총 14개소 중 10개소 개관 운영, 수영팔도 문화마을 조성 사업(수영성 난장 개최, 마을박물관 조성 등), 달맞이길·청사포 문화마을 조성(지역주민 간 커뮤니티 활성화, 갤러리 투어 운영 등)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부산 원도심 스토리투어 관광상품 개발(운영코스 확대 6개→8개), 크루즈 운영 활성화(입항 260회, 85만명)를 통해 생활 속 문화 거점공간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문화취약계층의 맞춤형 문화복지 지원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4천명 지원하였고, 맞춤형 실버문화복지 지원(홀몸노인 등 고령층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 2,520회),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음악 등 6개 분야 215백만원)을 통해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문화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예술하기 좋은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국 최초로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400백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예술인 활동증명대행, 예술인 일자리 파견, 반딧불이(빈집활용 창작공간) 등을 실시하는 ‘예술인을 위한 복지 기반’으로,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지역 폐자원을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로, 폐산업시설인 옛 고려제강을 복합문화공간 ‘F1963」로 조성하였다. F1963은 사장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연지근린공원을 조성하였고, 어린이공원을 자연친화생태놀이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실시하였다. 이 외 북구 개나리, 연제구 한마음, 사하구 장림산책공원, 해운대구 푸른어린이공원을 생태놀이기구, 비오톱 조성, 친환경휴게쉼터로 조성하였다.

한편, 시민들의 불편함 호소가 많았던 동천의 수질개선을 통해 주민,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 및 쾌적한 환경 제공하였고, 동천 지류인 부전천 복개구간 복원을 통해 도심 하천 물길 회복 및 새로운 친수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상권 재생 환경을 만들었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부산광역시시는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를 위해 부산형 시민복지의 내실화를 기하고, 일·가정 양립 사회문화를 조성, 의료산업 고도화 및 의료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하였다.

부산형 시민복지 내실화를 위해서는 ‘부산형 기초보장제 정착 보완’을 통해 수혜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제도 홍보를 통한 틈새 사례를 지속 발굴하였고,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제 추진하여 최저생계유지비 총 1,345가구(부가급여 766가구) 지원하였다. 그리고 부산형 시민복지의 대표 브랜드인 ‘다복동’ 사업을 확산시켜, 동(洞) 중심의 통합적 복지허브를 구축하여 복지수혜의 누락 및 중복을 적극 방지하였다. 다복동은 복지, 건강, 마을재생 등 다양한 서비스 정책을 단일 브랜드화한 것으로, 인력·자원 효율적 활용, 주민·마을 중심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하여 주민 중심 마을 단위 통합복지 구현한 부산시의 대표 브랜드이며, 부산광역시는 다복동 사업의 개선·보완을 위해 복권기금 43억원을 확보하고 권역형 일반동 사업 활성화 지원, 다복동 사업지원체계 완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다복동 행복마을 만들기,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4년 연속 1위(기획재정부), 다복동 ‘2017 지역사회복지평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부문 우수상 수상(보건복지부)하는 등 부산 지역성을 반영한 민·관 지역복지통합체계 구축의 성공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사회통합 지원, 저출산 극복, 아동·청소년 복지 3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였다.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 주민 등이 지역사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내실화하였고, 결혼·출산 장려 사회 분위기 조성 확산에 주력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개소(161개소→164개소), 아동·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센터 16개소 운영), 방과후 돌봄·지역아동센터 운영(센터 지원 206개소) 정책 등을 실시하였다.

이 중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성과는 2017년 11월 발표한 「아이·맘 부산플랜」이다. 아이맘 부산플랜은 부산형 출산장려정책으로 아주라 지원금과 엄마를 위한 ‘맘에게 마을으로 센터’, ‘맘에게 마음으로 정책’ 3개 분야의 지원정책을 통해 출산 장려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 정

책으로 2017년이 플랜의 시작점이라면, 앞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의 도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구현하고 ICT 융복합 의료·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첨단 ICT 의료융복합 산업기반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부산형 의료산업인 항노화, 의료·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책으로 의료·바이오 R&D 및 지역기업 12개 사업 163.3억원(신규 2건, 14억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치의학산업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치의학 첨단융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분석 용역 완료, 글로벌 디지털 치과진료체험 전시회 개최, 영남국제치과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 개최 지원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3장 대구광역시

제1절 대구광역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대구광역시의 인구 추세는 201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약 248만명으로 2014년 대비 1.8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약 49.7조원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3.3%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연평균 성장률(4.9%)과 비교했을 때 다소 못 미치는 수치이다. 1인당 GRDP의 경우 2,015만원(2016년 기준)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 또한 3.5%로 전국 성장률(4.4%)을 하회하고 있다. 수출액은 2014년 78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소폭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는 전년대비 3억 달러 증가한 72억 달러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2014년(51.7%) 대비 4.9%p 높은 56.6%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국 재정자립도(53.7%)를 상회한다.

표 3-3-1 대구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대구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	1,565,248	1,635,555	-	4.9	46,524	48,869	49,673	-	3.3
인구(천명)	51,328	51,529	51,696	51,779	0.3	2,493	2,488	2,485	2,475	-0.2
1인당 GRDP (만원)	2,927	3,068	3,192	-	4.4	1,880	1,980	2,015	-	3.5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	526,757	495,426	573,694	0.1	7,807	7,090	6,915	7,213	-2.6
취업자 (천명)	25,897	26,178	26,409	26,725	1.1	1,227	1,246	1,247	1,239	0.3
재정자립도 (%)	50.3	50.6	52.5	53.7	2.2	51.7	53.1	57.1	56.6	3.1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대구광역시의 지역내총생산액을 기준으로 한 산업구조는 서비스업(77.7%), 제조업(21.9%), 광업·농림어업(0.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2016년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제품', '섬유제품'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사업체수로 보면 '금속가공제품', '섬유제품'이 각각 21.1%, 17.9%로 높게 나타났으며, 종사자수로는 '금속가공제품(17.0%)', '자동차 및 트레일러(16.7%)', '섬유제품(14.9%)'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생산액 비중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제품' 등이 각각 21.3%, 14.1%, 13.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4년과 대비해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기준 모두 큰 비중 변화는 없으며, 사업체수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식료품'이, 종사자수로는 '금속가공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의 비중이 다소 증가했다. 생산액 비중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가 다소 증가했다.

표 3-3-2 대구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3.4	3.6	4.8	3.4	3.7	5.3	3.6	3.8	4.5
섬유제품	18.2	15.3	11.4	18.2	15.3	8.0	17.9	14.9	10.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5	2.7	3.7	2.4	2.6	3.7	2.7	3.2	3.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7.7	8.1	7.0	7.8	8.6	8.1	7.6	8.6	7.8
1차 금속	2.9	2.3	5.2	2.6	2.1	4.7	2.6	2.1	4.6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21.2	16.4	13.7	21.5	17.4	12.2	21.1	17.0	13.5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2.3	6.9	4.8	2.2	4.7	4.0	2.0	4.1	3.3
기타 기계 및 장비	15.2	13.3	13.9	14.7	13.3	16.3	14.8	12.9	14.1
자동차 및 트레일러	8.9	17.0	21.1	9.0	17.2	22.0	9.1	16.7	21.3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다음으로 2016년 기준 대구광역시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로는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32.8%, 17.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부동산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비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각 29.9%, 28.2%로 가장 높으며,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높게 나타났다. 특이점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경우 종사자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지만,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22.6%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에서 모두 8~9%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대비 사업체수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의 비중이 다소 증가한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종사자수의 경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며,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 매출액 기준 또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 하였으며, '교육 서비스업',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표 3-3-3 대구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6	1.2	4.3	0.5	0.9	2.1	0.6	1.0	2.8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0	3.7	6.5	2.2	3.9	9.9	1.9	3.3	7.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6	9.7	18.4	11.3	7.1	16.3	12.9	9.1	22.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7.9	7.7	9.8	7.8	8.1	9.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7	18.1	13.4	4.0	13.5	7.0	4.2	16.8	9.5
교육 서비스업	19.6	12.7	7.6	17.6	24.3	19.2	17.7	11.1	6.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9	31.4	34.0	10.9	23.4	21.0	12.0	29.9	28.2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1.0	6.6	5.1	8.9	4.6	3.4	10.1	6.2	4.5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36.5	16.7	10.6	36.7	14.6	11.2	32.8	14.5	9.4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3. 혁신활동 현황

대구광역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약 1.2조원, 연구개발인력 16,665명, 연구개발조직수 1,543개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4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조직수는 각각 연평균 11.0%, 9.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국대비 대구광역시의 연구개발 활동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및 인력은 소폭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조직수는 0.1%p 감소하였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은 각각 1.7%, 2.7%로 동일한 비중을 보였으나, 연구개발조직수는 0.4%p 감소하였다.

대구광역시의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4,735건이며, 등록은 2,365건으로 2014년 대비 특허 출원은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는 크게 감소했다.

전국대비 비중은 출원 및 등록 모두 약 3%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비중변화는 2014년에 비해 특허출원 0.2%p, 등록건수 0.1%p 증가하여 각각 2.9%로 나타났다.

표 3-3-4 대구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970,544 (1.5)	1,103,985 (1.7)	1,195,814 (1.7)	11.0
	연구개발인력	15,395 (2.5)	16,923 (2.7)	16,665 (2.7)	4.0
	연구개발조직수	1,284 (4.0)	1,604 (4.3)	1,543 (3.9)	9.6
특허	출원	4,470 (2.7)	4,864 (2.9)	4,735 (2.9)	2.9
	등록	2,701 (2.8)	2,043 (2.7)	2,365 (2.9)	-6.4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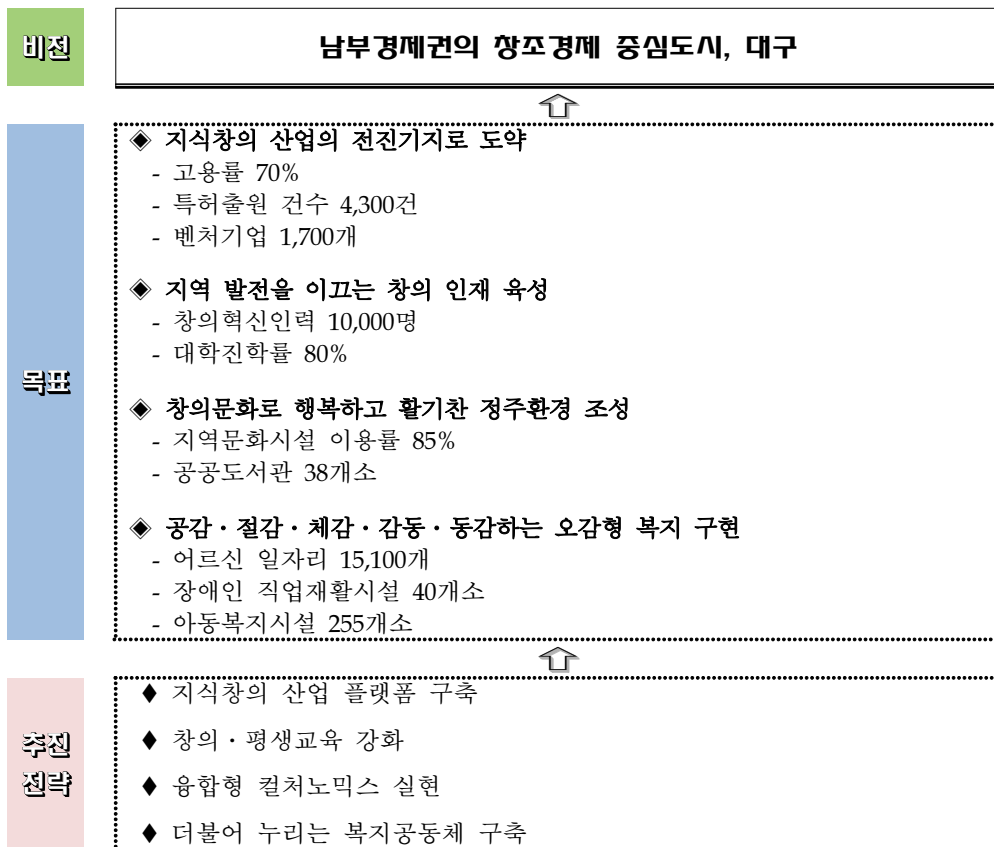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및 추진배경

대구광역시시는 ‘남부경제권의 창조경제 중심도시, 대구’를 발전비전을 설정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그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형자동차, 의료, 에너지, IoT, 물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 인프라 구축 및 관련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비전 달성을 위해 ‘지식창의 산업의 전진기지’, ‘지역발전을 이끄는 창의적 인재 육성’, ‘창의문화로 행복하고 활기찬 정주환경 조성’, ‘공감·절감·체감·감동·동감하는 오감형 복지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림 3-3-1 대구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대구광역시시는 발전비전 및 목표실현을 위해 ‘지식창의 산업 플랫폼 구축’, ‘창의·평생교육 강화’, ‘융합형 쉼처노믹스 실현’, ‘더불어 누리는 복지공동체 구축’ 등 크게 4가지 추진전략을 취하고 있다.

첫째, 지식창의 산업의 전진기지로의 도약을 위해 ‘지식창의 산업 플랫폼 구축’을 추진 전략으로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창업초기기업 SW제품 상용화 지원 및 이업종 융합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통해 초기 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로봇 및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을 중심으로 한 R&D 역량강화, 기업유치 등의 활동으로 대구광역시 신성장 동력산업과 주력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지역 발전을 이끄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창의·평생교육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취하고 있다. 먼저 마이스터고 및 도제식 직업학교 지원, 사회 맞춤형 선도전문대학 육성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또한 시민맞춤형 평생 학습 및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공공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교육접근성 향상과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지역민 삶의 질 및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창의문화로 행복하고 활기찬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융합형 쉼처노믹스 실현’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아트스퀘어, 대구공연예술제 및 대구생활문화제 등 다양한 공연·문화 행사와 문예회관 건립,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문화와 ICT 기술의 융합을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지역예술가들의 자생력 강화 지원 등을 통해 창작과 향유가 선순환 되는 문화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공연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시는 공감·절감·체감·감동·동감하는 오감형 복지구현을 위해 ‘더불어 누리는 복지공동체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 복지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청소년 수련원 및 문화의 집 건립,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대구광역시의 지역행복생활권은 대구중추도시생활권 1개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8개 시·군(경북 7, 경남 1) 모두가 행복한 생활공동체를 조성하고자 ‘영남 중추생활권의 주민행복 기반 향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구중추도시생활권은 2017년까지 총 5개의 선도사업(한방 MRC 신한류 창조-한방 휴(休) 사업, 약용작물 명품화 지원사업,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힐링푸드밸리 조성사업, 신의 물방울 연계 6차 산업 창출사업, 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을 완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2017년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경산이 연계한 ICT 기술 기반의 정신보건 케어 ‘ICT 기반 마음톡톡(Talk Talk) 행복지원 프로젝트’가 신규 사업으로 선정 및 추진됨으로써 지역민의 정신건강 및 복지 증진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대구중추도시생활권에 경북 포함, 안동, 경남 창녕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대구지역생활권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연계·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림 3-3-2 대구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대구광역시시는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크게 도시 활력증진, 전통시장 육성 및 도시농업 활성화, 지역교통망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도시 활력증진을 위해 ‘역사전통 문화마을조성(80백만원)’, ‘마비정 문화마을 조성(80백만원)’, ‘대봉동 문화마을 조성(80백만원)’ 등 지역이 보유한 자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로 주민공동체 화합 및 지역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서대구·염색·제3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9.3km², 440억원)과 남구의 ‘대명 행복문화마을 조성(2.0km², 113억원)’, 서구의 ‘원고개 날피마을 조성(0.425km², 60억원)’ 등 도심 新활력 거점 개발을 위한 도시재생 및 도시기능 회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육성 및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와 지역농촌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먼저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15개 시장을 대상으로 19개 사업을 추진(추진률 30%)하였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전통시장의 관광명소화, 청년상인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의 높은 판매율(1,166억원)과 회수율(1,520억원)을 달성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9.9%, 22% 증가한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의 노후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보수·보강(6개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방문자 증가율 150%) 등을 통해 재해 사전예방 및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교통망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교통 수요가 높은 지역(동구 일원, 수성유원지 등)에 공영 주차장 조성(7개소)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대내외 교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했다. 또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달성/신서, 공급면적 1,486m²)을 통해 도심 내 불법 주·박차 해소 및 도시환경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다사~왜관, 조야~동명 등 5건의 광역도로 건설(연장 35km, 폭원 4~6차로) 사업을 통해 도시 접근성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했다.

그 외에도 생활 편의시설 확충 및 재해예방 사업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대구광역시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식융합산업의 전진기지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크게 지역특성화 산업 육성,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대구광역시시는 지역특성화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SW성장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국내·외 전시·상담 참가(49개사), 해외진출컨설팅(5개사), 클라우드펀딩(2개사) 등 지역 SW기업들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개척을 모색했으며, 예비/재직자 대상 SW전문교육(교육수료 108명),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35개사, 62명) 운영을 통한 인력양성으로 SW융합산업 핵심거점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관련 포럼운영(10회), 대구 SW인재양성협의회 운영(3회), 기업역량강화 세미나·워크숍 개최(4회) 등 SW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다음으로 대구시는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5개 분야 26개사)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모색했다(수출 증가율 4.3%). 또한 우수기업 성장 동력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스타기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주력산업의 기술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를 통해 Pre-스타기업(92개사), 스타기업(87개사), 글로벌 강소기업(28개사), 월드클래스300 기업(28개사, 수도권 제외 전국 최다)을 다수 육성했다. 특히 기업수요 중심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스타기업 65개사, 150건, 3,080백만원/Pre-스타기업 65개사, 132건, 1,578백만원)을 통해 지원기업의 높은 매출 증가율(4.5%)과 고용 증가율(2.9%)을 기록했으며, 지역 우수인재와 스타기업 매칭 사업인 스타기업 히어로 양성 사업을 통해 2017년 97개사에 총 228명의 청년일 자리를 창출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시는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751백만원)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425백만원)을 적극 추진했다. 이를 통해 748명의 일 자리를 창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05명, 마을기업 육성 443명)했으며, 특히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경우 74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참여자들의 만족도 또한 78.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구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3,539백만원) 및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사업(202백만원) 추진을 통해 취약계층에 고용기회를 부여하고, 복지와 고용을 연계한 사회통합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그 결과 2017년 예비 사회적 기업 21개소, 인증 사회적기업 9개소를 발굴하였으며, 높은 고용창출(297명)과 매출액(465억원)을 달성했다. 이와 같이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대구광역시는 ‘지역발전을 이끄는 창의인재 육성’을 목표로 크게 지역대학 역량 강화, 산업맞춤형 인재 양성, 평생학습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지역대학 및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지역에 소재한 7개의 (전문)대학(계명대, 대구보건대, 영진전문대, 대구과학대, 수성대, 영남이공대, 계명문화대)에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프로그램 및 산학협력 기업지원, 특화인재 양성, 대학-지역산업체 간 협업체결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대학 및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다음으로 산업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서 ‘마이스터고 지원(115.3억원)’ 및 ‘도제식 직업학교 지원(17억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대구시는 마이스터고 3개교(대구일마이스터고(취업률 100%), 소프트웨어고, 농업마이스터고(FFK 다수 입상))에 교과활동(17개 과정, 3개 직종운영) 및 교육기반시설(기능훈련실 4실, ICT 기술기반 환경 조성) 확충 지원과 도제식 직업학교 5개교(대구공고, 경북공고, 경상공고, 서부공고, 조일로봇고)에 훈련장비 및 시설 확충 지원(135개사, 350명 참여)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기업의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는 시민의 고른 학습기회 영위와 다양한 학습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민대학(57개 프로그램, 참여인원 31,390명)’,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39개 프로그램, 참여 인원 1,626명)’, ‘대구평생교육진흥원(15개 프로그램, 참여 인원 2,702명)’ 등을 운영했다. 특히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의 안정적인 현장 착근과 운영활성화를 도모했으며, 다양한 세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학습지원 및 참여기회 제고 등을 통해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 및 교육사각지대 해소로 지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했다.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 복원

대구광역시시는 지역문화육성, 생태복원을 위해 지역대표 문화공연 육성 및 문화산업 역량 강화, 생활밀착형 문화 공간 조성, 지역 생태환경 보전과 자원 활용성 제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대구광역시시는 국가대표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대구사진비엔날레(80백만원), 대구아트스퀘어(200백만원) 등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생산과 창조형 여가문화를 조성했다. 특히 대구아트페어의 경우 7개국 101개 화랑 및 700여명의 작가가 참여해 5천여 작품을 전시·판매했다. 이를 통해 3만 5천여 명의 관람객이 관람했으며, 48억원의 판매수익을 달성했다. 또한 대표적인 지역 축제인 컬러풀대구페스티벌(관람객 수 117.5만 여명, 생산유발효과 803억원), 동성로 축제(관람객 수 79.2만 여명, 생산유발효과 694억원), 대구치맥페스티벌(관람객 수 41.8만 여명, 생산유발효과 370억원) 등 전국 규모의 다양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공연문화도시’ 브랜드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대구광역시의 노력들을 통해 문화공연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와 참여율이 향상되었다.

다음으로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은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제고와 문화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특히 생활문화센터(연면적 170.86㎡, 78백만원)를 개관함으로써 지역민의 생활문화 참여 접근성을 제고했으며, 웃는얼굴아트센터(이용객 50,818명) 리모델링 및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구 대표도서관(연면적 14,350㎡), 월배권도서관(연면적 4,269㎡), 대명도서관(연면적 696㎡) 등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및 노후시설 개선(북부도서관, 두류도서관, 서부도서관) 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문화역량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생태환경 보전 및 자원 활용성 제고를 위해 팔공산 생태통로 조성(B=30m, L=50m), 대명유수지 땀퐁이 생태학습장 조성(A=258,000㎡),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A=89,673㎡) 등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호하고, 생태자원 체험 및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민의 수요충족과 녹색휴식공간을 제공했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대구광역시시는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를 위해 맞춤형 복지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민의 복지체감도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

먼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사례관리 아동 2,430명, 2,339백만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아동보호 및 급식, 일상생활지도 및 학습능력 제고, 상담 및 가족지원 등 지역아동센터 지원(198개소, 수혜아동 수 4,878명)을 통해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94개소, 5,193백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7개소, 언어발달지도사 11명) 등 보육 공공성 확보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및 안정적 사회 융화를 지원했다.

다음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11개 기관, 484명, 1,850백만원)을 통해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과 비행노출 등을 예방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4개소),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1개소)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수혜인원 4,402명, 2,129백만원)을 통해 건강한 출산문화 장려를 도모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수혜인원 4,027명, 48,996백만원), 기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수혜인원 536명, 881만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지역민의 건강 및 복지 체감도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먼저 아동·청소년 뇌기능(569명) 및 정서·심리(3480명) 지원 프로그램과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 서비스(709명)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간의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인 정서치유서비스(1,331명),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620명) 등 건강한 노후생활과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시는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잠재수요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제4장 인천광역시

제1절 인천광역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 기준 295만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81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상회한 연평균 7.9% 성장하였다. 1인당 GRDP는 2,782만원으로 2년 사이 300만원 이상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도 7.4%로 전국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수출액은 전국 추세와 달리 연평균 9.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에 2017년에는 393억 달러로 2014년 300억 달러보다 93억 달러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보다 높으나, 2014년의 66.9%에 비해 1.5%p 낮아진 65.4%로 재정자립도 수준이 낮아졌다.

표 3-4-1 인천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인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	1,565,248	1,635,555	-	4.9	69,501	75,675	80,862	-	7.9
인구(천명)	51,328	51,529	51,696	51,779	0.3	2,903	2,926	2,943	2,949	0.5
1인당 GRDP (만원)	2,927	3,068	3,192	-	4.4	2,428	2,625	2,782	-	7.0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	526,757	495,426	573,694	0.1	30,003	31,198	35,819	39,287	9.4
취업자 (천명)	25,897	26,178	26,409	26,725	1.1	1,472	1,488	1,520	1,533	1.4
재정자립도 (%)	50.3	50.6	52.5	53.7	2.2	66.9	64.4	67.0	65.4	-0.8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인천광역시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72.3%, 제조업 27.2%, 광업·농림어업 0.5%로 나타났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이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가 각각 18.7%, 18.4%로 가장 높았다. 종사자수는 '기타 기계 및 장비'가 16.3%였으며, 생산액 기준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1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전기장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등의 업종 비중도 높았다.

2014년 대비 사업체수 기준으로 '식료품', '기타 기계 및 장비' 등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큰 비중변화는 없었다. 종사자수·생산액 기준은 '식료품',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증가하였다.

표 3-4-2 인천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3.6	3.9	7.7	3.7	4.4	8.3	4.2	4.1	8.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4.1	3.7	4.0	4.3	3.7	7.4	4.5	3.8	4.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8.3	8.4	4.6	7.9	8.0	5.1	8.0	8.3	4.9
1차 금속 제조업	5.1	6.7	12.6	4.8	5.9	12.1	5.0	5.9	11.7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8.5	12.4	5.7	18.5	11.9	5.1	18.7	11.9	6.0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10.5	11.6	7.0	10.4	13.3	7.8	9.7	13.2	9.2
전기장비	7.5	6.8	5.1	7.5	6.5	5.1	7.8	6.4	4.8
기타 기계 및 장비	17.9	17.2	13.8	18.4	16.7	13.7	18.4	16.3	1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4.9	12.7	16.4	4.9	12.9	16.1	4.6	13.4	17.3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0.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각 32.9%, 24.7%로 가장 높았다. 인천은 그 외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 비중이 6~7%대이며, 매출액 비중은 10.7%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다소 증가한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기준으로는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증가하였다.

표 3-4-3 인천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0	2.4	11.2	0.8	1.7	5.6	0.9	2.2	7.5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5	2.2	4.6	1.6	2.5	5.1	1.4	2.2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7	9.8	19.3	13.9	7.0	17.3	16.2	9.2	22.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6.3	8.9	17.8	6.2	7.2	10.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9	19.1	12.2	4.2	14.2	8.0	4.4	15.7	10.7
교육 서비스업	14.7	10.9	6.5	14.0	22.6	16.7	13.7	9.7	5.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7	32.4	27.9	12.4	23.7	16.6	14.0	32.9	24.7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3.1	7.3	7.7	10.3	5.0	4.9	12.4	6.9	7.2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33.4	15.9	10.7	36.5	14.3	7.9	30.7	14.2	8.5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3. 혁신활동 현황

인천광역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2.4조원, 연구개발인력 25,603명, 연구개발조직수 2,287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4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연구개발조직수는 연평균 12.8%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연구개발비 비중은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는 감소한 반면, 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조직수 비중은 증가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2%p 감소한 반면, 연구개발인력은 0.3%p, 연구개발조직수는 0.2%p 증가하였다.

특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5,989건이며, 등록은 3,307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과 등록건수 모두 감소하였으며, 특허등록건수의 경우 연평균 -12.8%로 감속 폭이 컸다.

전국대비 비중의 경우 출원 및 등록의 전국대비 비중이 4% 수준으로 2014년에 비해 특허출원 건수는 0.2%p, 등록건수는 0.5%p 감소하여 각각 3.7%, 4.0%로 나타났다.

표 3-4-4 인천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2,282,890 (3.6)	2,499,522 (3.8)	2,389,539 (3.4)	2.3
	연구개발인력	22,983 (3.8)	25,319 (4.1)	25,603 (4.1)	5.5
	연구개발조직수	1,796 (5.6)	2,088 (5.6)	2,287 (5.8)	12.8
특허	출원	6,438 (3.9)	6,633 (4.0)	5,989 (3.7)	-3.6
	등록	4,351 (4.5)	3,214 (4.2)	3,307 (4.0)	-12.8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인천광역시에는 수도권에 위치한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한 도시이고,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역사문화 자산 및 국제기구 중심도시로의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도시브랜드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도시이다.

산업에 있어서 전통 제조업 및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바이오, 반도체, 항공, 로봇산업 등의 첨단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민간투자 및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실현의 최적지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제조업의 핵심기술 개발지원, 고용창출 및 유관산업의 성장률이 매우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기는 하나, 인구의 급격한 팽창과 기반시설 부족, 다양한 지역출신으로 응집력 약화, 공업도시 및 공해도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전통산업의 노후화 및 양질의 일자리 부족, 수도권 내 경기 및 서울과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 등은 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비핵화에 의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기대와 통일의 필요성 인식 제고 및 민족의 동질성 회복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천의 가치를 활용한 통일기반 조성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GCF 및 국제기구 유치와 협력 확대, 인천공항 중심의 경제권 형성,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재생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이 기회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수도권 역차별로 인한 지역경쟁력 약화 및 원도심 재생 지체, GM 이전 논란과 같은 외부 경제 불확실성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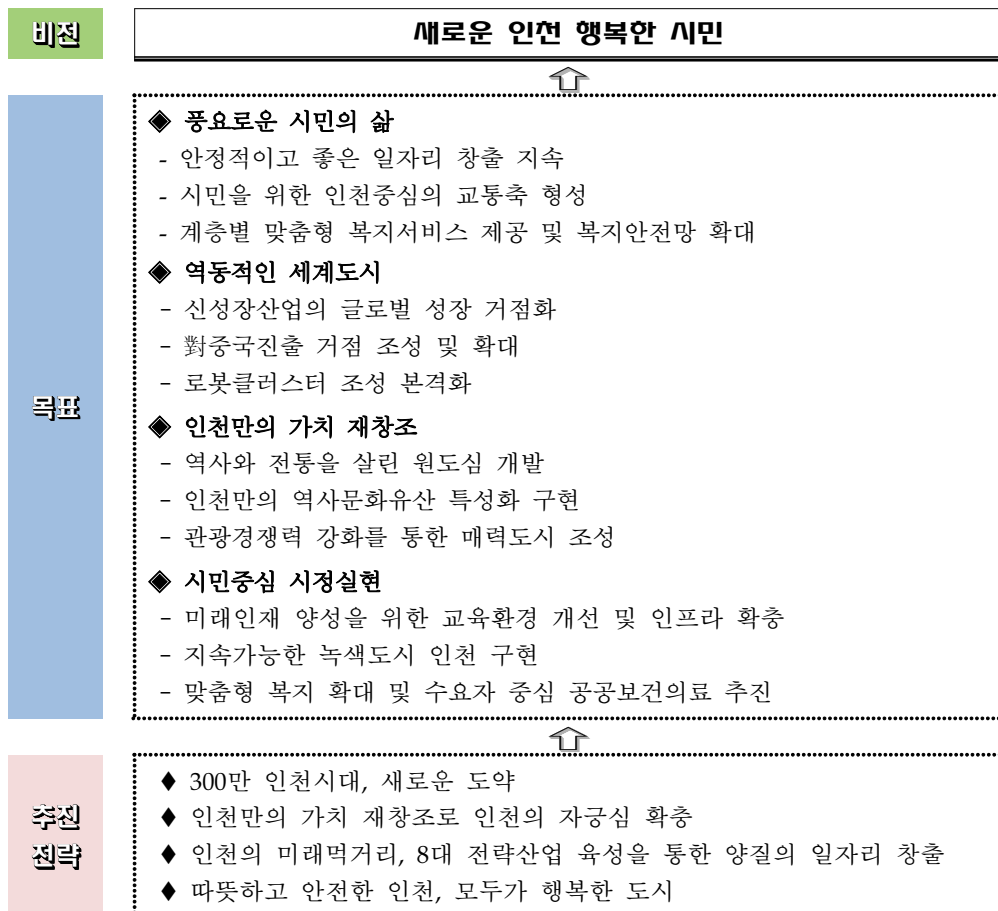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지역균형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와 각종 지역 내 도시개발,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 간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4차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노후산업단지의 재정비,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테마별 관광벨트 및 도서지역 관광코스 개발, 세계적인 관광 MICE 인프라 확대, 인천 고유의 역사공간을 재조명하고, 세계적인 항만 및 공항 등의 지역특화연계사업의 개발과 서해5도 도서지역 및 접경지역의 개발, 경제자유구역의 기업 경제환경 및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인천 중심의 무역 및 물류중심지로 광역교통망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야 하며,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확대 및 국제 비즈니스 서비스업 육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인천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 목표를 바탕으로 민생, 교통, 문화, 환경, 해양, 경제, 교육 등 7대 주권의 확립을 통해 인천 주권시대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실천과제를 추진하여 인천 시민의 행복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고 있다.

그림 3-4-1 인천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인천광역시시는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목표 하에 ‘300만 인천시대, 새로운 도약’,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로 인천의 자긍심 확충’, ‘인천의 미래먹거리, 8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따뜻하고 안전한 인천, 모두가 행복한 도시’ 등 4대 분야별로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00만 인천시대, 새로운 도약’ 관련해서 우선 인천만이 가진 가치 재창조와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가속화하여 원도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활용하여 쇠퇴한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 이에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등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원도심 부흥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예정이다. 또한 3대 도시에 걸맞는 교통인프라 구축 확대를 통해 인천 시민들의 주거복지 주권 실현과 시민체감형 미래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인천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인천발 KTX 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건설사업, 서울 7호선 연장,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 연장,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인천중심 고속순환망 구축 등 유관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한다.

둘째,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로 인천의 자긍심 확충’ 전략은 인천만이 보유한 가치를 찾아내고 발전시켜 인천의 정체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우선 문화성시 인천만의 문화주권 실현과 창작환경 조성 및 문화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문화 활성화로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 실현 등을 추진코자 한다. 다음으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등을 재창조하기 위해 시민이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가치재창조 선도사업 및 섬 프로젝트, 관광기반시설 및 역사문화공간 조성, 주요 역사자산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끝으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녹색수도를 건설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대기환경 관리 강화, 생활폐기물 감량 및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한다.

셋째, ‘인천의 미래먹거리, 8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략은 8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혁신을 선도하고, 첨단기업 유치에 따른 신성장산업을 글로벌 성장거점으로 조성함으로써 계층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건언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인천 미래산업 집중 육성에 따라 8대 전략산업(항공, 자동차, 로봇, 바이오, 물류, 뷰티, 관광, 녹색기후)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및 첨단자동차산업의 거점 확보,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및 로봇랜드 조성 등과 중소기업 창조기술 경쟁력 제고 및 부평·주안·남동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에 따른 융복합집적지 조성 등을 통해 인천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자리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내일 희망 프로젝트와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그리고 서민 경제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지원과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또한 중요함으로 세대별 지역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확대하여 고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넷째, ‘따뜻하고 안전한 인천, 모두가 행복한 도시’ 전략은 급변하는 복지환경 변화와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민체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의 최소 단위인 동(洞) 단위 복지 허브화를 통한 공동체 지원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건강한 가정 조성을 위한 저출산·고령화 현상 대응체계 구축 및 일자리 지원 확대, 수요자 맞춤형 안심 보육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여성·아동이 안전한 행복한 공동체 조성의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상황 관리 및 CCTV 설치,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 소방안전 대책 등을 추진한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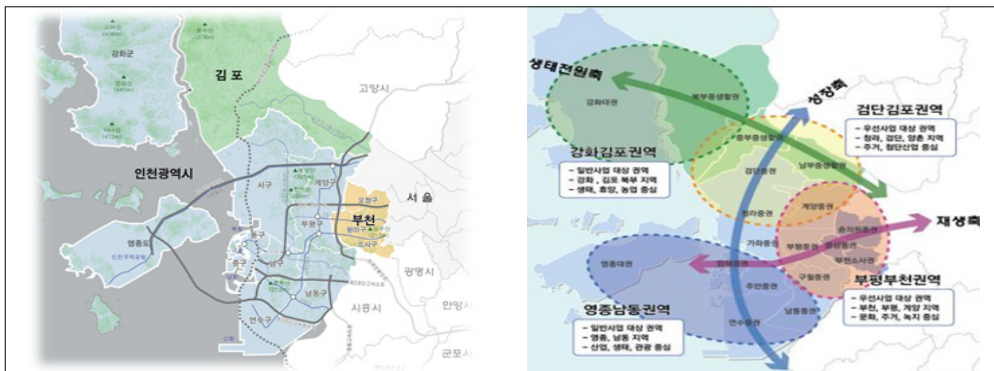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인천광역시시는 부천, 김포와 함께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하여 인천·부천·김포 지역 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생활권 주민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기초지자체 10개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1993년 출범)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화군, 계양구 등은 강화-김포 공동발전협약(2011년), 계양-김포-부천 공동발전협약(2012년) 등을 체결하여 20년 전부터 각종 협력 사업을 부천, 김포와 함께 추진하였다.

그림 3-4-2 인천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인천·부천·김포 지역행복생활권은 2014년 9월에 생활권발전협의회(2014.9)를 구성하여 정부 재정지원 사업 추진 및 연계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자체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의한 ‘굴포천 Eco 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실무협의회 및 현장 합동 점검 등을 통해 2017년에 사업 완료되었고, ‘아라천 해양생태문화 창조벨트 조성사업’과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이 생활권 활력 창출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19년까지 해당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인천광역시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편리하고 빠른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원도심 재생 추진, 주민체감형 생활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혁신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우선 도시 확장 및 광역통행 수요에 대응하는 인천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발 KTX의 총 사업비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17년 11월)를 완료하였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17년 9월)하였다. 또한 시민의 이동 편의 증진과 도로교통난 해소,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 7호선 석남 연장사업의 전동차 제작 및 개량 감독 용역을 착수('17년 9월)하였고,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17년 12월)되었으며,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이 승인·고시('17년 12월)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인천 중심의 광역교통망 구축,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한 시민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근대문화 자산 등을 연계하는 원도심을 새롭게 복원하기 위해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2016~2021년, 5,667억원)을 본격 추진하여 개항장 일대(중구 월미도, 내항, 개항장 및 동구 일원)가 해양·문화·관광이 융합된 지역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전국 최초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그동안 추진에 난항을 겪던 원도심 개발(청천2구역, 십정2구역, 송림초교주변구역, 금송주택재개발 8개 구역)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주민들의 주거불안 문제와 원도심 정비 등을 동시에 해결하였다. 이와 함께 민자 손실보전 관련 국토교통부와 전격 합의('17년 11월 24일)를 통한 제3연륙교 건설과 최초로 시도되는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인천기점~서인천IC 이관, '17년 12월 1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검단신도시의 단지공사 착공('17년 2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른 첫 토지매각('17년 3월),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대한 매립면허권 공동소유 승인('17년 2월) 등을 통해 해묵은 현안들을 정상화시킴으로써 지역균형 및 주민편익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활성화를 통해 인천 시민들에게 혜택을 증대시켰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천광역시시는 지역 산업과 고용여건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과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지난 3년간 일자리 지표(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 증가)가 향상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정부사업과 인천시의 청년취업 지원 사업을 연계한 전국 최초의 정부 협업 모델인 청년 사회진출 지원 사업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인천지역 미취업 청년 7천명에게 실질적인 취업활동비를 지원하게 되었고, 인천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및 청년 내일(My Job) 희망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창업 및 일자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노동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고용·복지·서민금융을 원스톱서비스로 지원하는 광역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하였다.

다음으로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는 환경지킴이 등 일반적인 공익형 일자리는 물론 인천시민의 특색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실버카페 20개소를 개점해 바리스타 어르신 230여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시장형 우수기관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되었고 전국 지자체 대상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에서는 우수상을 받았다.

다음으로 여성 일자리 관련해서는 경력단절여성 취업기관의 기능 강화로 2015년부터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 구성·운영방안을 모색해 왔고, 인천지역내 새일센터 7개소와 연계해 새일센터의 역량제고, 인천 여성 취업 등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으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평가결과 인천새일센터 8개소 전체 “가”등급(17년 8월) 획득하였으며, 구인처 발굴 및 직업훈련과정 개발, 창조혁신센터와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시는 4차 산업혁명 실현의 최적지로 잠재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먹거리가 될 바이오, 로봇, 첨단 자동차 등 ‘인천 8대 전략 산업’ 37개 사업에 514억 원을 조기 투입함으로써 전통 제조업 및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신속히 추진하면서 첨단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에 민간투자자와 우수 인재를 유치해 융·복합형으로 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며, 특히 첨단 자동차, 로봇, 항공 등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 기관, 대학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제조업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8대 전략산업의 실효성 있는 육성방안 체계를 마련('15년 10월)하였으며, IFEZ 투자유치 추진에 있어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중 1위(66%)로 4년간('14~'17년) 53억 46백만 달러를 유치(전체 유치액의 51.4%)하였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자동차, 반도체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기업과 함께 신세계, 현대, 롯데 등 복합쇼핑몰이 들어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국제업무지구 지역의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를 선정('16년 2월)함으로써 국제 MICE 산업의 중심지로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인천지역 산업단지들에 있어서 정부의 구조고도화 시범단지로 최초 선정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재생·혁신산업단지로('15년 7월), 부평·주안산업단지를 혁신산업단지로('14년 12월) 지정되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최첨단의 산업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스마트 공장 등 시대에 맞게 혁신·개편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항과 항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세계물류 중심도시 인천광역시에는 인천신항의 두 번째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이 개장('17년 1월)되어 내륙수송 물류비용과 시간을 줄여 한국산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 제품 가격 인하와 내수시장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세계 30위 항만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항공산업에서는 인천산학융합지구에 세계3대 인프라스트럭처 기업이자 항공기업인 GE(General Electronic Company)가 함께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16년 12월)되어 국비 등 584억원을 투입한 항공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17년 12월)되어 연간 여객 처리능력이 증가해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서민경제 안정 매진 및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주체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성장의 동반성장을 도모하여 신기시장연합(신기시장, 남부종합시장) 육성 및 송현시장 야시장 등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관광 중심지로 개발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해마다 사회적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3.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인천광역시시는 차별 없는 교육복지 도시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유관사업들을 2017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우선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위해 중학교 전 학년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수혜인원 135개교 80,588명)하였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교육 환경개선 및 평생학습 지원에 있어서는 대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인천글로벌리더십스쿨 등의 장학사업을 통해 장학기금을 확충하여 911명에게 11억원을 지원하였고, 인천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를 개정('17.9.25. 공포)하여 학교 노후시설 개선사업 지원 및 교육경비보조 제한 군·구 관내 학교 프로그램비 지원 등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2017 교육부 공모 신규 평생학습도시에 계양구가 선정되어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의 증대와 함께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북부교육문화센터 건립 지원에 따라 인천 최초의 학교복합화 시설이 준공('17년 8월)됨으로써 교육인프라 확충 및 공교육 강화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인천지역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였다.

인천광역시시는 시민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7대 인천주권 사업 중에서 애인(愛仁) 정책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발표('17년 9월)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및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시행할 예정('18년)이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학습, 진로 등 청소년의 창의적인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애인(愛仁) 꿈나무 멘토링 및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총 2,177백만원), 청소년의 꿈과 끼 표출을 위한 문화대축제('17년 6월) 및 음악교류 개최('17년 7월) 등 활동의 장 조성,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 가족 공감복지 서비스를 통한 교육지원 3개소 운영, 여성의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과정 운영(32과정 800명), 교육인프라 확충 및 학교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다목적 강당 건립 및 학교 노후시설 개선 지원, 소수자를 위한 교육사업 운영, 서해5도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비 지원 등이 있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인천광역시는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을 위해 ‘가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인천’을 목표로 설정하고, 사람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글로벌 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인천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선 인천의 168개 섬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섬의 다양한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기 위한 ‘매력 있는 애인(愛仁)섬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기반 구축, 도서지역 접근성 개선을 통한 섬 방문객 100만 돌파(‘17년 9월), 무인도서 개발계획 승인(‘17년 5월), 백령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준공(‘17년 11월), 도서지역 경관형성 시범사업, 섬 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 및 대표음식 선정 등을 추진하였다.

다음으로 ‘문화성시 인천’을 발표하여 문화주권의 실현 및 문화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문화도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세계 최초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16~’21년, 816억원), 인천뮤지엄파크 추진 및 실감콘텐츠체험관 운영(‘17년 1월), 생활문화 축제, 영화 및 드라마 지원(101편),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글로벌 관광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국내 최초 아웃도어 락 페스티벌(‘17년 8월) 및 한여름밤의 음악축제(70만명 관람), K-POP을 활용한 INK2017 개최(‘17년 9월), 세계적인 EDM 공연(8개 스테이지 195팀의 DJ팀 출연, 총 12만명 입장) 개최 등을 통해 1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였다.

또한 관광, 스포츠, 쇼핑, 의료 등과 MICE 산업의 연계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 최대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를 개최(‘17년 6월)하여 2,857명이 참석하였고,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국제회의 개최(‘17년 10월), 산업 및 수출 연계 MICE 개최, 최대 규모 다국적기업 회의 개최 및 지역특화 Sport-MICE 유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끝으로 자연이 살아있는 건강한 녹색도시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한 결과, 2017 대한민국 에너지 효율·친환경 종합대상 수상(‘17. 5월) 및 제25회 조선일보 저탄소녹색대상을 수상(‘17년 7월)하였고 2년(‘15~’16년) 연속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 1위로 선정되어 정부 포상(‘17년 11월)을 받았다. 또한 녹색기후기금(GCF)의 지원 및 협력을 통해서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GCF 정규직 직원 증가로 140명 정도(‘17년)의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공원녹지 및 환경기반 조성, 자원 재활용 처리기반 구축과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 수도사업 흑자경영 전환을 통한 물 복지기반 등을 마련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인천광역시시는 시민이 필요로 하고 만족하는 공감복지 구현을 위해 어르신,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4대 약자 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공감복지 사업 발굴을 확대('17년 5대 분야 28개 사업 998억원, 수혜자수 233,787명)하였고, 공감복지 분야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등 26개 사업과 장애아동 학습지원 서비스 관련 대외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어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선도적 인천형 자활모델을 개발하여 자활생산품의 판로확대와 저소득층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였다. 또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사업과 시(市) 연계 결연가구와의 자매결연,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및 정주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천형 공감복지를 구현하였다.

우선 아동을 위한 정책으로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I-Mom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 인천형 공교육 인프라 확충, 안심케어도시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어르신을 위한 정책은 전국 최초 시립치매전문종합센터를 건립하고, 고령사회대응센터 설립('17년 12월) 및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세이프존 SOS 비상벨 설치, 무인여성안심택배 확대(26개소),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정책으로 인천지역 첫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준공('17년 7월) 및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설립, 그리고 전국 최초 인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개소('17년 8월)와 인천 송암점자도서관 운영('17년 11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시는 시민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원스톱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였고, 전국 유일하게 5년 연속 자살률이 감소하는 도시로 나타났으며, 시민 건강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운영과 우수 공중위생업소를 발굴·육성하고 있다.

이 외에도 흔들림 없는 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환경안전분야 리스크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17년 5월)과 지진 내진성능 확보 및 계측기 설치, 현장 중심의 소방 대응역량 강화, 중증 응급의료체계 고도화 등의 안전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제5장 광주광역시

제1절 광주광역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광주광역시의 인구는 2017년 기준 146만명으로 2014년 147만명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34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하회한 연평균 3.7% 성장하였다. 1인당 GRDP는 연평균 3.8% 증가하여 2,239만원을 기록하였으나, 전국 1인당 GRDP 규모와 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수출액은 2014년 163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가 2017년 반등하여 15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016년 50%를 넘었다가 다시 감소한 49.2%를 기록하였다. 2014년의 46.0%에 비해 3.2%p 높아졌으나,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보다 낮았다.

표 3-5-1 광주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광주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	1,565,248	1,635,555	-	4.9	31,295	32,516	33,670	-	3.7
인구(천명)	51,328	51,529	51,696	51,779	0.3	1,476	1,472	1,469	1,464	-0.3
1인당 GRDP (만원)	2,927	3,068	3,192	-	4.4	2,080	2,159	2,239	-	3.8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	526,757	495,426	573,694	0.1	16,258	15,305	14,699	14,951	-2.8
취업자 (천명)	25,897	26,178	26,409	26,725	1.1	732	733	730	744	0.5
재정자립도 (%)	50.3	50.6	52.5	53.7	2.2	46.0	49.3	51.5	49.2	2.3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광주광역시시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72.2%, 제조업 27.4%, 광업·농림어업 0.4%로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비중은 광역시 중 울산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이 지역 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가 20.9%로 가장 높았고,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각각 25.0% 및 44.5%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전기장비', '금속가공제품' 등 업종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식료품' 등 다소 증가한 반면 다른 업종은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식료품', '1차 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이 증가하였으며, 생산액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등이 증가하였다.

표 3-5-2 광주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4.5	2.7	1.8	4.8	3.1	1.9	5.1	3.2	1.8
의복, 의복액세서리	1.7	0.6	0.1	1.6	0.5	0.0	1.3	0.4	0.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1.5	11.8	8.5	10.9	12.4	8.1	11.2	12.0	8.9
1차 금속	4.3	2.4	4.1	4.7	2.6	4.3	5.3	3.0	4.1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5.4	8.5	4.7	14.6	7.4	4.0	15.6	7.8	4.8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4.9	11.1	5.9	4.8	11.6	7.4	4.6	10.4	7.5
전기장비	10.9	15.2	16.9	9.5	12.7	13.5	9.2	13.9	14.0
기타 기계 및 장비	18.8	12.6	8.4	20.0	14.2	10.1	20.9	14.0	8.9
자동차 및 트레일러	12.5	23.8	42.7	13.2	24.2	43.7	12.8	25.0	44.5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30.4%, 17.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1.8%, 매출액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23.6%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의 업종이 지역 내 서비스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 비중이 8%대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다소 증가한 반면,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등이 증가한 반면,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3-5-3 광주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5	1.2	4.6	0.4	0.8	1.9	0.4	1.0	2.4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1	3.2	4.9	2.2	3.5	9.0	1.9	2.9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9	10.3	27.7	11.3	8.1	29.9	13.4	10.2	3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7.8	7.8	7.0	7.8	7.9	8.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4	17.3	12.4	4.4	12.5	7.1	4.9	16.0	10.4
교육 서비스업	19.5	11.7	6.0	17.5	23.7	16.2	17.0	9.6	4.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7	33.4	28.6	11.6	24.9	16.9	13.0	31.8	23.6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1.9	6.9	6.9	9.5	4.9	4.4	11.2	6.7	5.7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34.0	16.0	9.0	35.2	13.8	7.6	30.4	13.9	8.0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3. 혁신활동 현황

광주광역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84백억 원, 연구개발인력 13,198명, 연구개발조직수 734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4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하였는데, 특히 연구개발비는 연평균 10.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조직수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이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조직수는 감소하여 각각 1.2%, 2.1%, 1.9%를 차지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1%p, 연구개발인력은 0.1%p 소폭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조직수는 0.2%p 감소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3,321건이며, 등록은 1,410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연평균 12.8%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는 연평균 -6.9%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등록건수가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의 경우 출원 및 등록의 전국대비 비중이 2% 수준으로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는 0.4%p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는 변화가 없어 각각 2.0%, 1.7%로 나타났다.

표 3-5-4 광주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성장률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679,836 (1.1)	733,169 (1.1)	835,275 (1.2)	10.8
	연구개발인력	12,178 (2.0)	13,225 (2.1)	13,198 (2.1)	4.1
	연구개발조직수	662 (2.1)	750 (2.0)	734 (1.9)	5.3
특허	출원	2,612 (1.6)	3,074 (1.8)	3,321 (2.0)	12.8
	등록	1,626 (1.7)	1,298 (1.7)	1,410 (1.7)	-6.9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광주광역시에는 서남권 거점의 중심도시로서 풍부한 유·무형의 도시자원이 집적된 상태이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지닌 문화·예술의 도시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간 융합화 및 특성화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을 통해 문화융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입주한 16개 공공기관의 집적화, 연구개발 특구 지정에 따른 새로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대비 교육·문화시설 및 서비스는 양적·질적 열세이고, 지역의 인재유출이 심각한 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 지역특화프로젝트로 지정된 문화·콘텐츠 융합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4대 주력산업(스마트가전, 광융합, 생체의료, 복합금형)을 지역 대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성공적인 혁신도시 시즌 2를 위하여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역인재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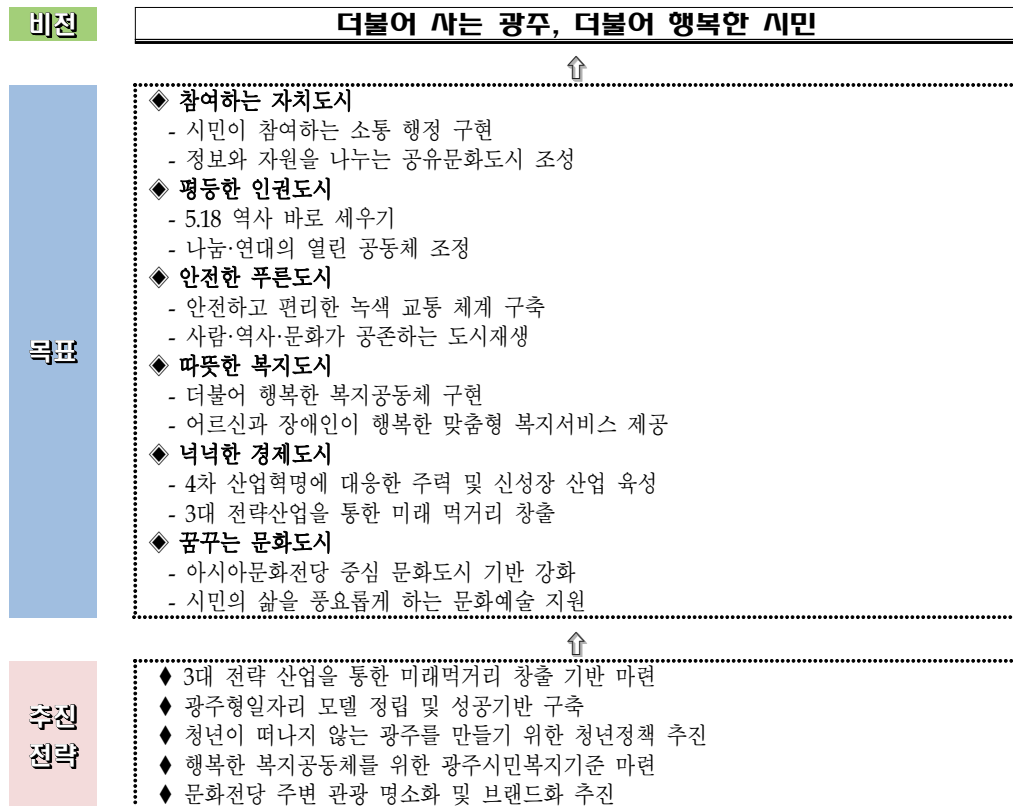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이 깃든 문화·예술의 도시 ▪ 자동차 및 에너지 신산업등의 비교우위 확보 ▪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인지도 확보 ▪ 서남권 교통·물류·서비스의 거점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유출에 따른 우수 인적자원 부족 ▪ 취약한 산업기반과 경쟁력있는 선도기업의 부족 ▪ 배후도시(인접 시군) 경쟁력 취약 및 인구감소 ▪ 특화된 도시브랜드 미흡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 국제행사 성공적 개최에 따른 도시브랜드 상승 ▪ 연구개발특구 및 혁신도시 조성 ▪ 문화콘텐츠 특화도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화, 생산인구 감소 등 사회구조 변화 ▪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 ▪ 보편적 복지욕구 증대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가중 ▪ 도시간 경쟁 심화 및 인구증가의 정체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비전으로 하여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산업, 에너지 신산업,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정립 및 성공기반 구축, 5·18진상규명을 통한 오월 역사바로세우기, 2015 하계U대회를 명품대회로 성공 개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했다.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위한 광주시민복지기준 마련,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광주 시민총회 개최하였다. 이와더불어 당당한 도시, 따뜻한 도시, 넉넉한 도시를 시정방향으로 설정하여 참여하는 자치도시, 평등한 인권도시, 안전한 푸른도시, 따뜻한 복지도시, 넉넉한 경제도시, 꿈꾸는 문화도시를 구축했다.

그림 3-5-1 광주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지역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첫째, 3대 전략 산업(친환경 자동차산업, 에너지 신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①친환경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전용산단을 조성하고,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및 보급을 추진하였다. ②에너지 신산업을 위해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등과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남구 대촌동 일대에 전용산단(44만평)을 조성하고, 선도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을 통한 일자리 및 사업모델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인재육성 요람이 될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③송암산업단지 일원을 미래 핵심성장 동력산업인 문화콘텐츠 산업의 전진기지로 삼고자 아시아문화전당과 빛가람혁신도시, CGI센터 권역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첨단과학과 문화가 융합되는 문화창조 융합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연관 인프라간 시너지를 확대하였다.

둘째, 광주형일자리 모델 정립 및 성공기반 구축이다.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성공적 실천을 위해 노사민정 대표 22명이 모여 「광주형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기초협약」을 체결하였고, 광주형일자리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전국화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7개 지역노조 600여명이 참석하여 광주형일자리 성공지지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고용률 60.9% 달성, 재정지원(공공부문, 민간부문)을 통한 75,833명의 일자리 창출을 구체적인 지표로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주력산업과 미래전략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맞춤형 윈스톱 취·창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미스매치를 해소하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능력훈련을 강화하는 등 질 좋은 일자리창출에 심혈을 기울였다.

셋째, 청년이 떠나지 않는 광주를 만들기 위한 청년정책을 추진하였다. 전국 최초로 청년 정책 전담부서인 청년인재육성과(현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였고, 광주청년드림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이 장래 직업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 경험과 급여를 지원하여 참여자 280명 중 109명(38.9%)이 직무역량 등을 인정받아 민간기업에 채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청년들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융·복합형 창업지원센터인 'I-PLEX'를 개관하고 창업카페, 시제품 제작실, 전용 보육공

간 조성 등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만들었다. 우수 청년기업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100억 규모의 청년창업펀드 조성, 매년 200억원대의 청년창업특례보증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청년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고 있다.

넷째,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위한 광주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하였다.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인권보장과 인격적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시민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수준의 복지 가이드라인 「광주시민복지기준」을 발표하였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堂堂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하여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인권보장과 인격적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광주시민복지기준 마련에 나섰고 전문가, 시민, 언론, 학계 등이 참여한 광주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의 5대 분야에 대한 복지기준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문화전당 주변 관광 명소화·브랜드화를 추진하였다. 문화전당과 그 주변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 시민과 관람객이 전당으로 모여들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했다. 매주 토요일, 문화전당과 금남로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토요일은 광주가 좋아.’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2016년에 시작하여 3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행사로 자리잡았다. 특히, 2017년 6월에 개최한 ACC 광주프린지 인터내셔널은 10만여명이 관람하는 등 광주와 문화전당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거리공연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빛고을 중추도시생활권(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을 구성하고, 다양한 생활권 사업 발굴·자문등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생활권 공동장사시설 조성사업’을 통해서 광주에 거주하던 시민으로만 제한하고 있던 장사시설 사용 대상을 5개 시·군으로 확대하였다.

‘취약지 응급협진시스템 구축사업’은 전남대학교병원과 인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 원격 응급협진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취약지 응급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풍류남도 나들이 사업을 통해서는 광주와 담양의 누정문화 및 가사문화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 취약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새뜰마을사업 4건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생활기반을 개선·확충했다.

그림 3-5-2 광주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2014년 2개 사업, 2015년 1개 사업, 2016년 1개 사업, 2017년 2개 사업 등 총 6개 사업이 선정·추진되었다. 취약지 응급협진시스템 구축사업은 전남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농촌지역 취약지 주민들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한뿌리 생활권 지역경제순환 증진 프로젝트 및 생활권 중심의 소·생 상생 로컬푸드 체계 구축사업은 광주 남구, 나주시, 화순군이 공동 추진하는 과제로서 로컬푸드 판매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거뒀다. 지역 전통문화자원인 누정문화와 가사문화를 자연생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전통문화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7년 무등산권 지질공원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사업, 남도청년 장돌뱅이 사업이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새로이 선정됐다.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세계적인 지질·자연·문화·역사자원을 연계하는 통합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활력 있는 청년상인의 결합을 통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015년부터 빛고을 생활권 발전을 강화하고자 광주시를 포함하여 5개 자치구 및 인접 5개 시·군과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5회 개최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17개 협력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다. 분야별 협력과제로 ①남도문화융성 및 관광자원화(다정다감 남도탐방, 남도향기가 있는 광역시티 투어, 지역축제 상호 교류협력, 명품체험마을 연계협력 관광 활성화, 빛가람 문화예술아카데미, 2019광주세계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협력) ②인프라 구축 및 경제활성화(광주 순환고속도로 건설, 광주 하남~장성 삼계간 광역도로 개설, 지방도 825호선 시설개량사업,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건설, KTX 장성역 정차 추진, 겨울철 제설대책 공동대응 추진, 동북댐 기존 도수관리 철저) ③자연생태공원 및 휴식 공간조성(승촌보 주변 수변테마공원 조성, 구 너릿재 구간 활용 광역자전거길 구축, 영산강 자전거길 정비)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남도탐방을 추진하여 지역의 친밀도를 제고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5개 시·군을 연계한 남도만의 특색있는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인근 시·군간 축제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성공 노하우 공유 및 관광의 부가

가가치를 높였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빛고을중추도시생활권은 「지역행복생활권 운영체계 평가」에서 2년 연속('15년~'16년) 우수생활권으로 선정되었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지역 산업지형을 미래시대에 걸맞게 재편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문화콘텐츠 융합 등 3대 밸리 산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결과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서 기반을 마련하였다.

친환경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3,03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123만평 규모의 자동차 전용산단인 빛그린국가산단을 중심으로 179종의 기업 공용장비 구축을 위한 '선도기술지원센터'와 기업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은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등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한전,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광주, 전남, 나주 등 7개 기관이 에너지밸리 조성 협약 체결로 시작되었다. '15년부터 조성되고 있는 남구 대촌동 일대 에너지밸리 전용산단(44만평)은 광주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연구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에너지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므로써 에너지 산업의 핵심기지가 되고 있다

광주형일자리 실현을 위해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위원회를 구성 등 사회적 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노·사·민·정 대표 22명이 모여 「광주형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기초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서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을 4대 핵심의제로 하는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정립하였다.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돼 빛그린산단에 조성되고 있으며, 대촌동에 에너지밸리 국가산단이 착공된데 이어 지방산단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44만평 규모의 산단이 조성되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도 송암공단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AI 인공지능중심 창업단지 조성, 100대 강소기업, 광융합산업, 생체의

료산업 육성과 함께 공기산업,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 등 미래형 산업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금형시제품 제작 및 시험평가를 위한 센터 및 장비를 구축하고, 금형클러스터를 활성화하여 지역 금형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였다. 첨단소재 부품·제품의 개발 초기단계부터 양산에 이르기까지 시제품 생산, 시험분석, 기술서비스 지원 중심의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고부가가치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선점을 위해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를 구축하였다. 지역내 가전로봇지원센터,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광주노인복지타운 등의 인프라와 개발인력 및 연구·임상시설과의 연계성 확보를 통해 로봇산업은 물론 첨단 의료기기산업을 집중 육성하였다.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 등 특화된 경쟁력을 가진 유망 중소기업을 명품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선도 기업군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00개사 선정을 완료하였다. 선정된 기업에는 자금지원, 경영진단 및 컨설팅, 맞춤형 지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전문연구원으로 구성된 48명의 GFD(Gwangju Field Director)를 1사 전담 매니저로 매칭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결, 지원하는 현장 맞춤형 밀착지원을 강화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특성화 마이스터고 지원(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지원)을 위하여 NCS기반 광주전남지역 산업특성 인력양성 유형 개발 계획 수립, NCS기반 실전창의인재 양성 마인드 함양 전교직원 직무연수, NCS기반 인적물리적인 실험실습 교육환경 개선 재구조화 및 학습 모듈개발, NCS기반 교육과정 편성 전문교과 실무과정 운영하였다.

중등 직업교육 규모확대 및 현장성 있는 직업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근본적인 혁신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매력적인 직업계고를 육성하고, 지역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중심의 우수 기능인재를 양성하였다.

녹색생활습관 정착 및 녹색실천 마인드 함양을 위한 에코교실, 지속가능발전 환경교육 조성, 에코스쿨 활성화 우수학교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원어민과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학 중 영어체험캠프,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초·중학생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재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어학연수 등을 받기 어려운 돌봄이웃(저소득층) 자녀들의 영어교육 격차 해소 및 영어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학중 영어체험캠프를 운영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2005년 남구를 시작으로 2006년 동구, 광산구, 2011년 북구에 이어 2015년 서구까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내의 5개 자치구 모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했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광주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실시하고 광주형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시민사이버학습센터와 검정고시사이버학습센터를 운영하여 시민 교육복지를 제고하고 제5회 광주평생학습박람회 개최를 통해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또한 다양한 시민교육 운영과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 등 광주형 평생학습 특화모델 운영을 통해 시민주도형 공동체를 구현하였다.

노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one-stop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인생이모작 자문위원회 운영 및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새로운 제2의 삶을 설계, 사회공헌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 및 제2의 일자리 모색 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과 제2의 커리어 개발교육 등을 운영하였다.

전국 최초로 구성·운영 중인 제3기 청년위원회는 다양한 청년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청년과 청년, 청년과 사회, 청년과 세계를 잇는 플랫폼 광주청년센터 'the 숲'은 2015년 6월 개관 후 청년들의 거점공간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017 세계청년축제는 '청년은 한다'는 주제로 청년문화도시를 보여주었다.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을 다니는 광주·전남출신 대학생들에게 학비부담 절감 및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과 공동으로 제2남도학숙을 건립하였다.

광주청년드림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무현장에서 일 경험을 통해

취업에 대한 자신감도 얻고, 역량을 키워서 민간으로 취업을 유도하는 일자리 디딤돌 사업이다. 2017년에는 280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그중에서 30%인 84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또한 광주청년드림사업은 2017년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과 포상금 2억원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4. 지역 문화 육성 · 생태 복원

광주를 7개 문화권역으로 설정하여 문화전당의 파급효과를 도시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은 급변하는 문화지형과 4차 산업혁명 등 문화도시 트렌드를 반영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현실적인 관점에서 재조정하여 5개 문화권역으로 재설정 하였다.

문화전당 주변 관광 명소화·브랜드화를 위해 매주 ‘토요일은 광주가 좋아’라는 구호로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개최하고 대인예술야시장과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문화전당과 어우러진 도심권 도보관광 활성화(양림역사문화마을 - 남광주밤기차시장 - 동명동카페거리 - 광주폴리 등)를 통해 색다른 관광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제7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2017년 9월 8일부터 10월 23일까지 46일 동안 ‘미래들(FUTURES)’을 주제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관과 시립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펼쳐졌다. 산업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생활측면에서의 디자인의 역할을 제시하고,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시·행사장을 광주, 전남지역 곳곳에 마련하여 관람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행사의 대중화는 물론 홍보 효과, 외지 관광객들이 전시 관람과 함께 머물러 갈 수 있는 경제유발 효과를 극대화 했다. 또한, 영화 ‘택시운전사’에 출연한 브리샤택시를 전시해 포토존으로 관람객들 인기를 끌었다. 관람객은 27만여 명을 돌파하면서 지난 행사의 10만 7천여 명에 비해 154%, 지난 2013년 21만여 명보다 29% 각각 증가했다. 행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단 한건의 관람객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행사로 마무리 되었으며, 47개 국가에서 335개 기업, 디자이너, 작가 등 468명이 참여하고, 1,288개 전시 아이템이 출품되어 명실상부한 국제화의 기반을 다졌다.

40여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되어 있는 송암산업단지에 1단계 「CGI센터」를 구축한 데 이어, 2단계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광주의 대표 문화콘텐츠 및 문화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에 따라 송암산업단지 일원을 미래 핵심성장 동력산업인 문화콘텐츠 산업의 거점기지로 조성하여 아시아문화전당과 빛가람혁신도시, CGI센터 권역 클러스터를 잇는 삼각벨트를 형성하여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된 이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조성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 2016년까지 빛고을 시민문화관 일원에 미디어아트 콘텐츠 관광 레저 기반 시설 구축을 완료하였다. 2017년부터 미디어아트 특성화 공간 구축을 위해 도시 유휴자원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AMT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미디어아트 플랫폼(AMT센터)은 빛고을 시민문화관 주차장 부지로 쓰이고 있는 장소에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립 될 예정이며, 그 주변은 유네스코 미디어파크 공원으로 조성하여 야외무대 등 문화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라도 천년의 역사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천년의 창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전라도 천년 30개 기념사업을 확정하고 추진하여 전라도의 자존감 및 위상을 높이고 있다. 7대 사업으로는 ① 전라도 이미지 개선 3개 과제 ② 전라도 천년 문화관광 활성화 5개 과제 ③ 전라도 천년 대표 기념행사 3개 과제 ④ 학술 및 문화행사 10개 과제 ⑤ 문화유산 복원 3개 과제 ⑥ 전라도 천년 랜드마크 조성 3개 과제 ⑦ 전라도 천년 숲 조성 3개 과제등을 추진하고 있다.

무등산 권역의 우수한 역사·문화자원과 자연경관이 뛰어난 광주호 주변을 원효사상가 이주단지 조성사업, 호수생태원 확장사업 등과 연계하여 광주 시민과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여가·문화생활 향유 및 자연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광주만의 특색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생태문화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무등산 국립공원 내 원효사 집단시설지구의 상가들을 이주시켜 광주호 주변 남도 전통문화와 가사문화를 연계한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호수생태원 확장을 통해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 조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호수생태원 누리길 조성, 광주호 주변 누정 문화재를 연결하는 산책로 및 생태숲 조성, 자연체험형 환경교육과 안전한 탐방을 위한 생태탐방체험관 건립, 자동차 수용 및 시민 편의시설을 갖춘 야영장 조성 등 다양한 관광 문화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층 확대로 빗물의 표면유출이 증가되고 도시침수, 지하수 고갈, 하천수질 악화 등 도시문제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을 통해 자연적 물 순환을 회복하기 위한 환경부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공모사업(16년)’ 시범도시에 선정되었다.

5. 사각없는 지역 복지 · 의료

시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복지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광주시민복지기준을 마련·시행하였으며 사회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광주복지재단 설립하였고 제도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정을 위한 「노랑호루라기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특·광역시 최초로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및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과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의 어려움 해소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통합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와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연 480시간을 모두 소진한 가정에 48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광주형아이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다양한 복지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법·제도권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과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으로 보금자리를 잃거나 불안정한 주거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구별 불안요인이 상존하여 구제대책이 절실하였다. 이에 비수급 빈곤위기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와 대상을 확대한 「노랑호루라기」 제도를 도입하여 선정된 대상가구의 지원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규정의 지급액을 적용하여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되 실질적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여 통합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민간자원의 발굴 및 연계 등을 통하여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광주역 유흥지와 서림마을 일원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118,369백만원을 투

입하여 행복주택 1,200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으며,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를 위해 사각지대 수급자 발굴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15년 8월 「광주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연도별 사업계획 심의 등 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였다. ‘노인일자리 민·관협의체’를 구성,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와 신규일자리 발굴 노력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주거환경 체험을 위해 ‘자립생활주택(체험홈 9개소, 우리집 10개소)을 마련’하여 전담인력을 통한 일상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완전히 자립해 나가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생활비품 구입 등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실무위원회 및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 자립생활 적응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자립생활 환경구축에 기여하였다.

보건기관과 원거리의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였다. 전국 5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 시는 동구를 제외한 각 자치구에 1개소씩 설치하였고, ‘18년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동구센터와 남구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이 선정되어 설치를 추진 중이다. 여성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편의 증진을 통해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친화 산부인과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할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하였다.

건강위험군, 질환군 중 방문건강관리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교육, 건강관리 프로그램, 관련 기관 연계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개개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외부활동 확대,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에 큰 효과를 나타냈다.

제6장 대전광역시

제1절 대전광역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대전광역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4년 153만명에 비해 3만명 감소한 150만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36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에 조금 미치지 못한 연평균 4.7%로 증가하였다. 1인당 GRDP는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 2,340만원이었으나, 연평균 성장률은 5.3%로 전국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수출액은 2014년 47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반등하여 4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57.1%로 2014년의 54.9%에 비해 2.2%p 상승하였으며,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보다 다소 높았다.

표 3-6-1 대전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대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	1,565,248	1,635,555	-	4.9	32,799	34,062	35,922	-	4.7
인구(천명)	51,328	51,529	51,696	51,779	0.3	1,532	1,519	1,514	1,502	-0.6
1인당 GRDP (만원)	2,927	3,068	3,192	-	4.4	2,112	2,208	2,340	-	5.3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	526,757	495,426	573,694	0.1	4,732	4,307	4,163	4,454	-2.0
취업자 (천명)	25,897	26,178	26,409	26,725	1.1	762	770	774	764	0.1
재정자립도 (%)	50.3	50.6	52.5	53.7	2.2	54.9	54.9	55.0	57.1	1.3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대전광역시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81.9%, 제조업 17.9%, 광업·농림어업 0.1%로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비중은 5개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이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기타 기계 및 장비'는 사업체수·종사자수가 각각 15.7%, 1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생산액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14.2%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고 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등 업종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식료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이 증가한 반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전기장비' 등이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전반적으로 비중이 소폭 증가한 반면,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등은 감소하였다. 생산액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등 주요업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2 대전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7.2	5.5	5.6	8.0	5.6	5.7	8.3	6.2	5.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5.5	9.1	13.2	5.8	9.0	13.8	5.8	9.3	14.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4.3	9.1	11.2	4.8	9.4	10.2	4.3	9.2	9.8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6.8	5.8	4.9	6.8	6.2	5.4	7.4	6.0	5.6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11.2	13.2	10.6	10.8	13.0	9.3	11.3	13.1	9.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2.5	2.7	0.3	2.4	2.6	0.3	2.7	3.1	0.3
전기장비	6.3	4.9	3.8	5.9	4.6	4.7	6.0	4.1	4.3
기타 기계 및 장비	17.2	15.4	14.4	17.3	15.4	13.3	15.7	14.7	12.1
자동차 및 트레일러	4.4	6.3	6.6	4.1	6.4	7.3	4.2	6.5	7.1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29.8%, 15.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8.9%, 24.9%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의 업종이 지역내 서비스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 비중이 7~8%이며, 매출액은 12.8%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업이 포함된 경제총조사(2015년) 자료의 매출액 비중은 34.9%로 가장 높아 지역내에서 연구개발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2015년 대비 사업체수·매출액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감소하였다. 종사자수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3 대전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5	1.0	2.5	0.3	0.6	1.0	0.4	0.9	1.8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3	6.3	12.5	3.1	5.3	11.7	3.1	6.0	9.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8	9.3	13.8	11.4	5.9	8.0	13.1	8.6	18.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8.2	16.1	34.9	7.7	8.4	12.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7	24.4	15.0	4.6	15.2	6.9	5.1	21.0	11.5
교육 서비스업	16.7	9.9	7.2	15.1	21.7	15.4	15.1	8.8	5.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0	29.9	31.0	12.9	20.1	13.1	14.7	28.9	24.9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1.7	5.8	8.0	9.1	3.7	3.5	10.9	5.5	7.6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32.4	13.5	10.0	35.2	11.4	5.6	29.8	11.8	8.3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3. 혁신활동 현황

대전광역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7.3조원, 연구개발인력 49,532명, 연구개발조직수 1,320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은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인력이 증가한 반면 조직수는 감소하여 각각 10.5%, 7.9%, 3.4%를 차지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6%p, 연구개발인력은 0.3%p 소폭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조직수는 0.2%p 감소하였다. 대전의 연구개발조직수 비중 감소는 최근 대전 이외 다른 지역에 연구개발조직들이 많이 생겨난 것을 의미한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10,811건이며, 등록은 5,492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연평균 -1.4%, 등록건수는 연평균 -14.7%의 증가율을 보이며, 특허등록건수의 감소폭이 컸다.

전국대비 비중의 경우 출원 및 등록의 전국대비 비중이 6% 후반대 수준으로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는 0.2%p, 등록건수는 1.1%p 감소하여 각각 6.6%, 6.7%로 나타났다.

표 3-6-4 대전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6,333,015 (9.9)	6,655,076 (10.1)	7,274,095 (10.5)	7.2
	연구개발인력	45,755 (7.6)	48,946 (7.9)	49,532 (7.9)	4.0
	연구개발조직수	1,166 (3.6)	1,277 (3.4)	1,320 (3.4)	6.4
특허	출원	11,118 (6.8)	11,283 (6.8)	10,811 (6.6)	-1.4
	등록	7,550 (7.8)	5,238 (6.9)	5,492 (6.7)	-14.7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대전광역시에는 대덕연구단지조성 40년 동안의 풍부한 R&D자원 및 역량 축적과 대덕특구 지정으로 인한 기술사업화 경험과 인프라가 누적되어 있으며, 국토 중앙에 입지한 전통적 국내교통의 중심지라는 발전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통 제조업의 경직성이 없어 새로운 산업과 이를 육성할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다.

하지만 풍부한 연구개발자원에 비해 지역수요에 기반한 기술사업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며 고용성장 잠재성이 약하고, 영세업체 중심의 낙후된 서비스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약점이다. 한편 2017년 현 정부의 출범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발표되고(2018년 2월 1일) 그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구축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혁신도시 발전 방안은 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 이외 우리시와 크게 관계가 없는 정책이며 국가균형발전에 소외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해 그 부분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별도로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부는 대통령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2017년에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을 선포한 대전은 대덕특구, KAIST, 과학벨트 등 최고 수준의 과학 인프라와 기술 역량이 결집된 국내 최대의 과학기술도시로 정부 정책에 맞춰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 정책에 발맞춰 대전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시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전의 강점과 기회를 연계하여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풍부한 연구개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한 신성장 모델의 창출지로서의 입지를 공고화하여 미래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고, 친환경 도시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 첨단 도시를 구현하는 것 역시 앞으로의 과제이다. 또한 지역기반의 기술사업화 시스템 정착이 미흡한 약점을 풍부한 R&D 역량을 기반으로 기술사업화와 인큐베이팅 등 기술집약형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대전의 약점을 기회 요인과 연계하여 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도심 낙후 문제 해결을 위해 역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전의 강점과 위협요인을 연계하여 경제·소득의 양극화 및 실업문제를 연구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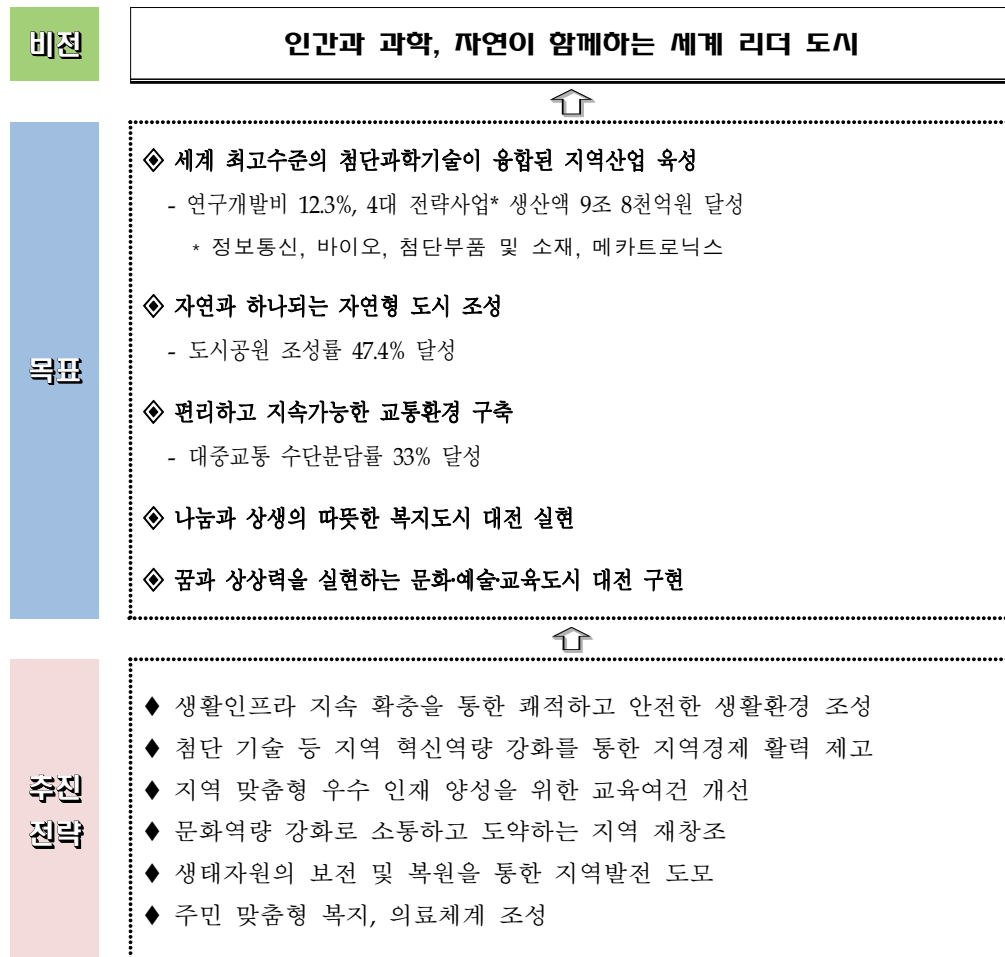
자원을 활용한 과학기반 사회적 기업의 확대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전의 약점과 위협을 연계하여 극복할 발전과제로서는 타지역 과학기술 수요 증대에 따라 연구개발 자원 분산 위협과 지역 시민차원의 과학기술 수요에의 대응 체계 미흡 문제를 지역기반형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극복하는 것과 함께 노령화 증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기업군 창출과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을 통해 선순환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응하여 향후, 5년간(2014년~2018년) 지역발전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역발전 비전을 「인간과 과학, 자연이 함께하는 세계 리더 도시」로 설정하였다.

그림 3-6-1 대전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지속성장도시」, 「자연순환적 녹색도시」, 「인간중심의 상생·창의도시」를 추구하면서 5개의 목표를 세웠다. 첫째, 세계 최고수준의 첨단과학기술이 융합된 지역산업 육성, 둘째, 자연과 하나되는 자연형 도시 조성, 셋째,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구축, 넷째, 나눔과 상생의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 실현, 다섯째, 꿈과 상상력을 실현하는 문화·예술·교육도시 대전을 구현하는 것이다.

2. 추진전략

발전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대 부문별로 각각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 2018년까지 33%까지 높이고 범죄취약지역 CCTV를 600 여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생활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활동인구를 2018년까지 957천명 늘리고 4대 전략산업(정보통신, 바이오, 첨단부품 및 소재, 메카트로닉스) 생산액을 9.8조원으로 늘리는 등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창의혁신 인재를 2018년까지 1,000명 양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힘쓸 것이다.

지역문화 육성 및 생태 복원을 위해서는 2018년까지 54.0km의 3대 하천 생태복원을 하는 등 생태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한편으로 문화역량 강화로 소통하고 도약하는 지역 재창조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부문에서는 2018년 한해 모든 시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확대하고, 계층별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여 「행복한 복지도시 대전」을 구현할 것이며, 또한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대전의료원 설립,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등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새로운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대전광역시시는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맞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과 함께 대전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하였다.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중추도시생활권은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형 클러스터 구축(계룡, 논산 등과 연계한 첨단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도농통합형 공생커뮤니티 구축(기호유교문화권, 대청호 등 지역의 역사,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통합 문화·관광지대 구축)을 목표로 설정되어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대전 중심지의 활력증진과 함께 주민 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주도 협력발전체계 구축, 지역 교통물류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6-2 대전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생활권 선도사업(공모사업)으로 2014년에 “대청호권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 2015년에는 “제대군인의 사회진입 및 정착을 위한 생애전환 프로젝트”, 2016년에는 “소규모 식품파일럿플랜트구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017년에는 “힐링 SONG 의료관광 연계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생활권 참여 지자체와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 선정된 “대청호권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2016년까지 총사업비 26.4억원(국비 23.8억원, 지방비 1.6억원)이 투입되었는데, 대청호 인근 마을의 노후시설 정비 등 마을환경 개선,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복합체험시설 개선, 마을 생산품 브랜드 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대청호 마을 내 관광자원 활성화 등 지역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마을별 주민편의시설 및 복합시설을 증축하여 주민편익 개선에 노력하였다.

또한 2015년에 선정된 “제대군인의 사회진입 및 정착을 위한 생애전환 프로젝트”는 2017년까지 총사업비 22.5억원(국비 18억원, 지방비 4.5억원)을 투입하여 제대한 중장기 복무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수요 맞춤형 생애전환 프로그램 운영, 지피지기 프로젝트, 행복 Biz-센터 구축·운영, 귀농·귀촌 새희망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2017년 동안 생애전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210명이 교육을 받고 그 중 61명이 취업하였다. 또한 행복 Biz-센터 구축·운영 사업을 통해서 대전테크노파크 내 비즈센터 구축 공간(231㎡)을 개소하여, 군과 국방기업 간의 정보공유 커뮤니티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뒷받침 하였다. 한편, 귀농·귀촌 새희망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고 귀농 정착기술교육,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대군인의 귀농·귀촌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였다.

2016년에 선정된 “소규모 식품파일럿플랜트구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은 2018년까지 총사업비 34억원(국비 27억원, 지방비 7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식품파일럿플랜트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식품시범생산을 지원하며, 청년 식품분야 창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에 앞서 2016년에는 식품파일럿플랜트 구축을 위해 유성구 덕명동 155에 건립 대상지 토지를 매입하였다. 파일럿플랜트 사전절차(경관심의, 도시계획심의 등)로 인한 설계기간 소요로 당초보다 늦은 2017년 10월에 설계가 완료되었다. 2018년 6월에 식품파일럿플랜트 조성이 완료되면 파일럿플랜트를 활용한 기업 지원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질 것이다.

2017년에 선정된 “힐링 SONG 의료관광 연계 프로젝트”는 2019년까지 총사업비 16억원(국비 13억원, 지방비 3억원)을 투입하여 생활권의 의료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외래관광객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며, 힐링체험 관광체계를 고도화 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7년 한해는 대전마케팅공사와 위수탁 업무체결을 맺어 사업추진체계를 갖추었으며, 베트남 박장성 대표단이 대전을 찾아와 의료관광을 실시한 바 있다. 2018

년도에는 글로벌 전문인력을 20명 양성하고, 다국어 온라인모바일을 구축하여 생활권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대덕구 장동 옥골지구는 2015년에 도시지역 취약지역 개조 프로젝트(새뜰마을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까지 총 사업비 40억원(국비 28억원, 지방비 12억원)을 투입, 지역의 안전확보, 인프라 구축, 일자리 및 문화,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사업의 추진방향 및 실시설계를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하여 2016년 11월에 완료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덕구는 2017년에 공동홈 신축 공사를 신축하였으며, 골목길 핸드레일 설치사업을 준공하였다. 또한 LPG 배관망 구축사업 저장탱크 현황측량을 하는 등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 셰프테드 사업, LPG 배관망 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준공하여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옥골지구 주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대전광역시시는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특히 교통수단 간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버스전용차구간을 확대('13년 27개소→'17년 100개소/누적)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의 도로환경 및 교통시설을 개선하여 OECD 평균수준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실시('13년 7개소→'17년 20개소/누적)하여 사망자 수를 감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13년 44개소→'17년 80개소/누적)하는 등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을 우선하는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다.

'안전 안심의 도시 대전'을 표방하는 대전광역시시는 '안전·안심 생활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노력하였다. 그 중에서도 사회 취약계층(약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는데, 특히, 주택의 30년 이상 된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하였으며('13년 199동→'17년 1,048동/누적),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층 가구에 가스시설 금속배관 시설개선('13년 900→'17년 5,274/누적)을 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대전광역시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경제복지 실현을 위해 청년 등 일자리 창출에 매진, “행복한 대전 조성”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기반으로 첨단기술기반 강소·벤처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서민생활 경제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조성하였다. 또한 전 세계 이슈로 부상한 4차 산업혁명과 연계 가능한 과학도시 토대 마련을 위해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을 슬로건으로 기술혁신을 이끌 최적의 여건과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지역 SW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생태계 활성화 및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SW산업 기업을 지원(‘13년 50개사→’17년 158개사/누적), 재직자 및 취업연계 인력양성 운영 교육을 통한 취업을 확대하여(‘13년 127명→’17년 368명/누적) 지역SW산업 진흥발전을 도모하였다. 또한 창업, 사업화, 시장개척까지 3단계 지원을 통해 기술기반이 튼튼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기업성장 주기별 3-up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13년부터 ’17년까지 467개사(누적)를 지원하여 매출(’13년 13,447백만원→’17년 112,004백만원/누적)을 달성하고, 고용창출(’13년 120명→’17년 566명/누적)을 확대하여 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였다. 또한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지원(’13년 5개사→’17년 55개사/누적), 고용창출(’13년 76명→’17년 247명/누적), 매출증가액 연평균 12,000백만원을 달성 하는 등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에서 마케팅까지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진입 및 상품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였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13년 58개→’17년 229개/누적)하고, 취약계층 등 일자리 창출을 확대 지원(’13년 261명→’17년 1,191명/누적)하였으며, 나아가 사회적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사회적기업 장터(프리마켓) 등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사회적기업의 매출 증가에 기여하였다.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의경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힘쓰고 있는데, 2017년에는 하소지구에 152천㎡의 산업용지를 공급하고, 둔곡·신동 1,224천㎡의 분양

을 추진하였으며, 평촌·장대(581천㎡), 대동·금탄(2,700천㎡)의 계획을 수립하고, 첨단 국방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는 안산지구(502천㎡)는 2017년 8월 국토교통부의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어 109개의 기업을 사전 유치하는 등 대전경제 활력을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확산을 위하여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지원사업으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혁신주체들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하여 2017년에는 창업보육에 20개사, 기업지원 100개사 투자유치 150억원을 달성하여 창업지원 및 창업문화 확산을 통한 글로벌 벤처기업의 산실이 되는 엑셀러레이터 허브를 구축하였다.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으로 사이언스 콤플렉스 공공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학, 문화, 쇼핑, 업무 등 공공과 민간이 어우러지는 융·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2015년에 (주)신세계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2016년에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 12월에는 사이언스콤플렉스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2018년도 상반기에는 사이언스콤플렉스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엑스포 과학공원을 과학, 비즈니스, 여가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엑스포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스튜디오 큐브(HD 드라마타운), 기초과학연구원 1차 본원을 준공하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사업으로 로컬푸드 복합공간 조성을 추진하여 유성구에 로컬푸드 가공 지원센터(331㎡)를 2015년에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작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전국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는데, 2016년, 2017년 2년간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로컬푸드 기반 구축에 노력하여 일자리 18명, 매출증가율 평균 136%, 48종의 시제품 개발, 188명의 교육을 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도시지역에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도시림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여가공간으로 활용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사업으로 지자체 도시숲, 자연휴양림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숲길조성관리, 한밭수목원 특성화 및 조성보완 사업,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 이용객이 2,911명, 일자리 53개를 신규 창출하는 등 시민의 다양한 여가 수요에 대응하는 산림복지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꿈과 상상력을 실현하는 교육도시 대전 구현’을 위해 대전광역시에서는 지역 맞춤형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을 육성하고자 산학협력선도대학과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대학과 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 교육시스템을 개선하여 취업·창업지원(‘13년 12명→’17년 75명/누적), 특성화 인력양성(‘13년 75명→’17년 483명/누적), 현장실습(‘13년 470명→’17년 3,126명/누적)을 달성하는 등 취업의 미스매치 해소 및 지역산업의 성장 견인에 노력하였다.

일과 학습의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성장사다리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 사업을 통해 대전형 창의혁신 인재를 양성하였으며(‘13년 215명→’17년 914명/누적), 히든챔피언 발굴지원으로 기업성장 지원(‘13년 14개사→’17년 50개사/누적) 및 총 15건의 글로벌 연계기관을 발굴하여 진출을 지원하였다. 또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예산확보의 어려움 속에서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현장학습에 참여한 학생이 모두 199명(‘13년 35명→’17년 199명/누적)이며, 이들 중 해외 취업 115명(‘13년 21명→’17년 115명/누적), 국내 취업 54명(‘13년 2명→’17년 54명/누적)으로 85%의 취업 성공률을 보이는 등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및 취업역량 강화, 특성화 경쟁력 강화 및 홍보 효과 제고, 해외 일자리 창출을 통한 특성화고 취업을 제고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대전시는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자치구의 특색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균형 있고 다양한 평생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자치구 사업에(‘13년 9개 사업→’17년 29개 사업/누적) 5년간 총 250백만원을 지원하여 소외계층,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취·창업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 복원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은 문화역량 강화로 소통하고 도약하는 지역 재창조를 추진전략으로 하여 다양한 일들을 진행했다.

먼저,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을 위해 국제회의 유치촉진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국제행사 개최 '14년 72건→'17년 301건/누적) 도시 이미지 제고와 국제위상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창작문화 예술인 레지던스 조성 사업을 통해 테미예술창작센터 및 파리 이용노 레지던스 운영, 아티언스 랩 운영, 민간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문화예술촌 조성 등을 추진,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였다.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민의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 욕구충족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 조성 마련에 힘쓰고 있는데, 2017년에는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의 경우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의 문제로 추진공정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2018년 말 개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며, 그 이외 사업을 포함한 종합성과를 보면 이용객 183,509명에 만족도가 86%로 높게 나왔으며, 운영프로그램도 493건으로 당해연도 성과를 모두 초과 달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13년 111명→'17년 597명/누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13년 455개소→'17년 2,431개소/누적) 시민 1,000천명(연평균 인원)이 이용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생활체육광장조성사업을 통해서도 생활체육광장지도자를 매년 22명 배치하고 22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91천명(연평균 인원)이 이용하였고,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으로 시민건강증진 골든플랜을 시행하여 학교체육시설을 확충하고('13년 28개소→'17년 121개소/누적)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다.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상소오토캠핑장 조성, 커피브리지 관광자원화사업, 관광안내체계 구축, 문화관광지원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17년에는 시설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86점으로 높게 나왔으며, 시설이용 관광객수 212,053명(유료관광객), 매출액 537백만원을 달성하는 등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대전 대표축제육성을 위해 효문화 뿌리축제와 대

전사이언스페스티벌, 계족산 맨발축제를 적극 지원하여 효문화뿌리축제('13년 20만명→'17년 1,540만명/누적),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13년 15만명→'17년 76만명/누적), 계족산맨발축제('13년 38천명→'17년 178천명/누적)의 관람객을 확대 유치하는 등 대표 축제의 관광상품화에 성공하였다.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을 위해 2017년도에는 국가하천을 정비하여 13개소의 하천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에 노력하였으며, 대전천, 정생천, 탄동천, 유성천, 관평천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재해(수해)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구축,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원하여 연구사업('13년 14개 과제→'17년 56건/누적)과 기업체 환경기술지원을 실시('13년 지원 20건→'17년 지원 233건/누적)하는 등 지역 환경기술개발의 구심점을 형성하게 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대전광역시시는 '나눔과 상생의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 실현'을 위해 주민 맞춤형 복지, 의료체계 조성을 추진전략으로 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1,755명에게 약 70억원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을 추진해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13년 268명→'17년 1,317명/누적)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총 285명(누적)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사회변화에 따라 취약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돌봄·재활·상담 등의 예방적 복지 실현하고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하여 투자사업 제공인력의 서비스 능력 강화를 위해 소양교육('13년 3회 242명→'17년 20회 3,380명/누적), 직무교육('13년 4회 206명→'17년 30회 1,949명/누적), 컨설팅('13년 4회 38명→'17년 54회 576명/누적)을 실시하여 사회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13년 1,085명→'17년 8,629명/누적)하였으며,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13년 1,172명→'17년 6,541명)을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적극 지원하였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인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정부 노인일자리, 시 노인일자리, 꿈나무지킴이, 시니어클럽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13년 8,186명→'17년 60,105명)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였으며, 드림스타트지원사업을 통해서도 취약계층 아동('13년 1,930명→'17년 8,247명/누적)에게 건강·복지·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였다. 또한 방과후돌봄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13년 148개소→'17년 731개소/누적)이외에도 아동복지교사를 배치('13년 94명→'17년 622명/누적)하고 2015년부터는 초록펜 동아리를 파견(총 86팀 440명)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강화하였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공공형(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 확대 확충하여('13년 40개소→'17년 93개소/누적)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전시는 동구 용운동에 300병상 규모의 대전시립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대전은 법정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없으며, 이 때문에 공공의료 취약지역-보건소-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으로 연결되는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단절되어 있어 메르스 등 감염병 및 재난 재해상황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기능이 취약한 상황이다. 2015년도에는 메르스 사태 등을 통해 정부가 대전의료원 건립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사업승인이 보류되었지만 지속적인 제도적 기반과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마련하여 2017년에는 의료원 설립 관련 인근 지자체와의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여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되면 향후, 대전의료원 설립에 매진할 것이다. 대전의료원이 설립되면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안전망 구축 및 지역간의 의료 불균형 해소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제7장 울산광역시

제1절 울산광역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울산광역시의 인구는 2017년 기준 116.5만명으로 2014년과 큰 변동은 없으나, 전년 대비 0.61% 감소되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71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하회한 연평균 3.1%로 증가하였다. 1인당 GRDP는 전국 수준의 2배에 가까운 6,096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수출액은 2010년 1,014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17년에는 347억 달러 감소한 66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69.9%로 6개 광역시 중에는 가장 높고, 서울, 세종,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전국 재정자립도인 52.5%를 크게 상회하였으나, 2014년에 비해서는 0.3%p, 전년도에 비해서는 2.3%p 감소하였다.

표 3-7-1 울산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울산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	1,565,248	1,635,555	-	4.9	67,018	69,674	71,236	-	3.1
인구(천명)	51,328	51,529	51,696	51,779	0.3	1,166	1,174	1,172	1,165	0.0
1인당 GRDP (만원)	2,927	3,068	3,192	-	4.4	5,822	5,987	6,096	-	2.3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	526,757	495,426	573,694	0.1	92,400	72,907	65,259	66,700	-10.3
취업자 (천명)	25,897	26,178	26,409	26,725	1.1	556	573	576	584	1.7
재정자립도 (%)	50.3	50.6	52.5	53.7	2.2	70.2	72.0	72.2	69.9	-0.1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울산광역시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36.5%, 제조업 63.1%, 광업·농림어업 0.4%로 서비스업보다 제조업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이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기타 운송장비’가 19.9%, 종사자수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는 3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생산액 기준으로는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25.4%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는 ‘금속가공제품’ 및 ‘기타 기계 및 장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4년 대비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등이 증가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의 경우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 일부 업종이 증가하였고, 생산액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은 크게 감소하였다.

표 3-7-2 울산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1.1	2.6	34.9	1.1	2.6	26.7	1.3	2.8	25.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7	2.2	19.6	2.8	2.2	20.4	2.9	2.4	20.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3.4	2.6	1.0	3.5	2.5	1.1	3.9	2.9	1.2
1차 금속	1.3	0.6	7.9	1.1	0.4	8.4	1.0	0.4	9.6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2.6	5.6	1.3	12.4	5.6	2.1	12.5	5.1	1.5
전기장비	5.1	5.4	2.0	5.1	5.0	3.3	4.9	6.5	2.6
기타 기계 및 장비	12.6	5.8	2.1	11.8	5.4	4.4	11.2	5.0	2.3
자동차 및 트레일러	16.6	29.2	18.6	16.6	30.8	22.2	16.6	30.4	23.6
기타 운송장비	18.1	28.0	10.3	20.0	28.2	8.1	19.9	27.6	11.5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각각 31.2%, 13.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6.5%, 22.1%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는 6.7%, 종사자수·매출액의 비중은 11~13%대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종사자수·매출액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3-7-3 울산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0	1.8	6.4	0.8	1.3	3.2	0.8	1.5	4.4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	2.4	5.4	1.3	2.6	5.7	1.1	2.1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1	10.2	13.2	11.7	7.1	11.2	13.7	11.4	18.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6.9	11.8	22.6	6.7	11.2	13.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9	21.6	17.3	4.8	15.0	10.8	5.2	15.7	15.1
교육 서비스업	19.7	13.5	13.1	18.1	23.5	19.2	17.6	11.2	10.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6	27.4	27.1	10.8	20.2	15.6	11.6	26.5	22.1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2.7	7.2	5.8	10.4	4.8	3.2	12.0	6.4	3.8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34.0	15.9	11.7	35.2	13.7	8.4	31.2	14.0	8.8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3. 혁신활동 현황

울산광역시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80백억 원, 연구개발인력 10,105명, 연구개발조직수 464개로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연구개발비는 감소하였다. 특히 연구개발비는 전년도 97백억 원에서 17백억 원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연구개발조직수는 연평균 11.8%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2년 전에 비해 93개가 증가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는 소폭 감소하였으며 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조직수는 변화 없이 각각 1.2%, 1.6%, 1.2%를 차지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2,421건이며, 등록은 1,016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연평균 -7.4%, 등록건수는 연평균 -11.0%의 증가율을 보이며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의 경우 출원 및 등록의 전국대비 비중이 1.2~1.5% 수준으로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는 0.2%p, 등록건수는 0.1%p 감소하여 각각 1.5%, 1.2%로 나타났다.

표 3-7-4 울산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815,288 (1.3)	972,318 (1.5)	801,477 (1.2)	-0.9
	연구개발인력	9,671 (1.6)	9,796 (1.6)	10,105 (1.6)	2.2
	연구개발조직수	371 (1.2)	460 (1.2)	464 (1.2)	11.8
특허	출원	2,825 (1.7)	2,553 (1.5)	2,421 (1.5)	-7.4
	등록	1,284 (1.3)	911 (1.2)	1,016 (1.2)	-11.0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울산광역시에는 생산·산업도시로서 주력산업인 자동차·석유화학·조선 등의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기반의 도시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경쟁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조선업 침체 및 장기불황 등 경제적 침체로 인해 울산시의 인구가 2016년 117.2만명에서 2017년 116.5만명으로 전년대비 0.61%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울산의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자원과 반구대 암각화 등 풍부한 문화역사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확장이 용이한 도심권 외곽의 광활한 배후 부지에 문화창조도시 조성으로 울산시의 장기적인 개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조선해양도장표면처리센터 건립 등 주력산업 고도화 추진과 동시에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바이오 메디컬산업 육성 등 신성장 산업으로 경제구조 다변화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환경·에너지 정책의 전환 및 산업의 융복합 ICT, IoT으로 녹색산업 비중이 증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산업 중심의 공간개발로 시민생활의 문화공간이 미흡하여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등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내 생활권 연계 협력을 도모하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복지인력 보강 등 복지 및 사회서비스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도시경쟁력 우위 ▪ 문화관광 분야의 성장기회 및 잠재력 보유 ▪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으로 신산업 태동 ▪ 풍부한 미개발 가용지로 토지자원 확보 용이 ▪ 인접지역간 산업연계 활성화로 중심도시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산업 분야에 대한 높은 의존도 ▪ 문화관광분야의 창조인력 및 인프라 부족 ▪ 에너지원의 변화에 취약한 지역산업 보유 ▪ 산업중심 개발로 시민생활 공간 미흡 ▪ 조선업 침체 및 장기불황 등 경제적 침체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정책의 전환, 산업융복합 촉진 ▪ 문화예술 소비욕구와 여가시간 증대 ▪ 대외지향적 국가프로젝트의 적극 추진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증대 ▪ 혁신도시 건설로 지역역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의 성장 정체 등 국가경제 성장 둔화 ▪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미진 ▪ 난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및 경관 파괴 ▪ 복지 욕구 증대로 복지정책 급변 ▪ 은퇴자 증가로 인력 역외유출 가능성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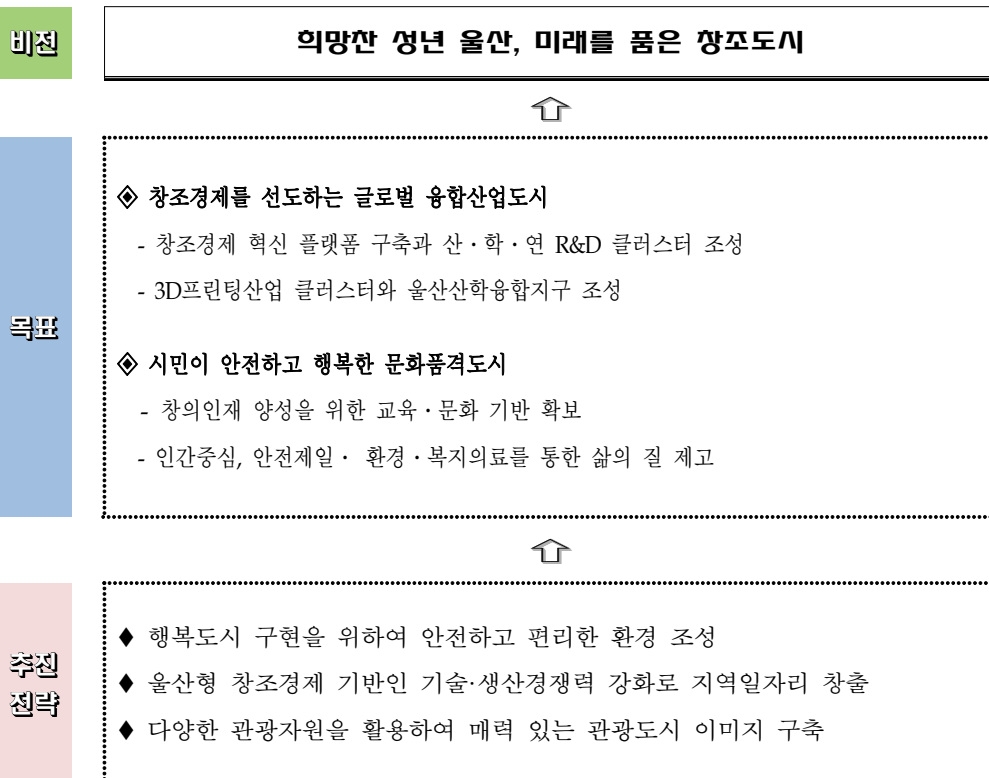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울산광역시의 발전 비전은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고 시민의 삶이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豊) 조화롭고(和) 품격(格) 높은 창조도시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융합산업도시'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문화품격 도시'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첫째, 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둘째, 울산형 창조경제 기반인 기술·생산경쟁력 강화로 지역일자리 창출, 셋째,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매력 있는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그림 3-7-1 울산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울산광역시시는 경북 경주, 경남 밀양·양산 4개 도시를 울산중추도시 생활권으로 구성(2014년 2월 4일)으로 2014년에서 2017년 3년간 4개의 선도연계협력 사업 추진하여 관광 및 교통, 주민건강, 안전도시 디자인 사업 등의 선도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림 3-7-3 울산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관광분야 측면에서 2014년 영남알프스 마운틴탑 사업(총 32억원, 국비 29억원, 지방비 3억원)을 통해 영남알프스를 동남내륙지역의 산악관광메카로 육성하고 지역간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였으며, 2015년에는 울산~경주 광역버스 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총 20억원, 국비 16억원, 지방비 4억원)으로 인접지역 간 통행자 교통이용 편의증진 및 상호교류를 위해 센터 연계 서버 및 S/W 개발, 센터시스템(DB제공서비스 등) 확충, 버스정보단말기(BIT)를 확대 설치하였다.

2016년에는 밀양시와 연계하여 계남기반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사업(총 31억원, 국비 25억원, 지방비 6억원)을 통해 계남기반 건강정보 리포트 제공으로 주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차원의 국민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추진 할 경우 국민건강향상분야의 국가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신규사업인 산업단지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사업(총 27.3억원, 국비 18억원, 지방비 4.5억원, 민자 4.8억원)으로 안전하고 매력 있는 도시 형성에 이바지 인근 도시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울산광역시시는 광역교통시설 확충과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였다.

광역교통시설 확충 측면에서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승인('17년 7월)하고, 울산공항 에어부산 신규 취항 및 대한항공 노선(울산~제주) 증편 운항(김포 7회/일 → 8회/일, 제주 주말 2회 → 3회/일)하게 되었다. 울산역은 SRT 36회 증편으로 1일 평균이용객 14,895명에서 16,564명으로 11% 증가하였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오토밸리로 전 구간 개통('17년 9월)과 반천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준공('17년 11월),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준공('17년 12월), 물류수송로 신호체계 개선(18개 가로)으로 산업물류 비용이 절감되었고, 옥동~농소2 도로 개통('17년 9월)과 성안IC~서동 간 도로 준공('17년 9월)으로 시가지 교통 흐름 개선 및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되었다.

또한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기반으로 대중교통 이용 소외지역 맞춤서비스 제공(마실택시 4개 마을, 맞춤형버스 5개 마을),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버스정보단말기 '14년 947대→'17년 1,201대 설치), 울산고속도로 진입부 개선(장점IC, 범서하이패스IC 등), 국도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국도 35호선 교차로 13개소) 등 구축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대폭 감소되었다('15년 94명→'16년 70명→'17년 60명).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인 '울산 중구로다 조성사업' 등 3개 사업('16년~'20년, 382억원)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고시되었으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중 울산동백이 피는 온새미로 마당사업을 통해 울산동백축제('17년 3월)와, 학성이야기 통신꾼 운영 및 학마을 가꾸기('17년 4~11월)를 실시하였고, 방어진 내진길 우선 공사 발주 및 착공('17년 3월)하여 방어진항 디자인거리 조성사업('15년~'18년)을 추진하였다.

최첨단 울산형 스마트시티 구축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지하매설배관

DB 구축작업 완료(지하배관 1,639km), 취약지역 CCTV 확충 58대(어린이 보호구역 32대, 도시공원 놀이터 26대)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16년 71종→'17년 86종), 시민 중심의 홈페이지 통·폐합 및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개선으로 데이터 기반 시민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하여 개방과 소통 중심의 열린 시정을 구현하였다.

울산시는 무료법률상담실(378건), 법률홈닥터 상담(503건), 법률지원 체제강화(9월, 변호사 추가채용), 지역특화 통계 개발(베이비부머 통계 등)로 법무·통계행정 서비스 확대하였고, 울산누리 블로그(일 평균 11,510명), 및 SNS(친구수 115,408명) 운영으로 시민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여 참여와 소통의 시민중심 행정을 구현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울산광역시시는 조선업 위기 시작으로 산업위기가 심화되고, 소비심리의 위축 등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꾀했다.

지역·산업 맞춤형 12개 사업으로 207명 취·창업하고, 인력양성은 1,225명이 창출되었다. 특히, 지자체 일자리 목표공시제를 통해 성과를 인정 받아 특별상을 수상(인센티브 80백만원)하였으며, 제조업 창업공간 확대(톡톡팩토리 확대 1개소→3개소, 톡톡스트리트 확대 1개소→2개소),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36개사) 운영과 창업선도대학 육성(바이오특성), 울산창업펀드 조성(120억원), 청년·산업인턴지원 확대(인턴 220명, 정규직 전환 103명) 등으로 스타트업 울산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힘썼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대학일자리센터운영(취업프로그램 등 17,400여명), 정밀화학 기술사관 육성(196명), 중·장년층 재취업 훈련(4개 과정 100명), 사회공헌활동 지원(10개 기관 36명), 중장년일자리발굴단 운영(교육 874명, 취업 573명) 등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교류 다변화 도시화 측면에서 해외시장개척(474개사) 및 수출마케팅 지원(265개사), 유망·강소기업 육성(55개사), 제19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와 자매·우호도시 축하사절단 7개국에 초청되었으며, 울산의 마이스(MICE) 산업을 이끌 '울산전시컨벤션센터'가 2020년 준공목표로 지난 12월에 착공했으며, 건립 필요성이 제기된 지 18년 만의 숙원사업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울산은 조선해양산업의 위기극복 일환으로 조선기자재 기업의 판로확대 및 마케팅 지원 강화(국제인증 및 마케팅 지원 확대 50개사 57개 과제 지원, 조선기자재 전시회 참가지원 3개사), 경영안정자금 지원(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보조금 25억원 지원, 조선업 구조조정지원 특례보증 359건 75억원, 조선업 구조개선 펀드 500억원 조성), 일자리 지원(조선업종 퇴직자 취업연계 S-OIL MOU 체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연장, 울산조선업 희망센터 및 고용복지+센터 운영)을 추진하였다.

6차 산업화 추진으로 귀농·귀촌 교육 및 예비 귀농인 팜투어(2,600명), 도시텃밭 조성(25개소)과 농산물 판로(참여농가 1,609호 확대) 다변화, 또한 울산항 활성화(신항 개발, 인입철도 건설), 해양생태복원 폐기물 수거(1,530톤), 바다숲 조성(2개소, 5ha), 어촌자원복합산업화(2개소)를 통해 농·어업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였다.

울산은 경제 기반 확충과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위하여 3D프린팅산업 클러스터 조성(해외 연구기관 EWI·ARMC 분원 유치, 6개 국내기업 유치, 국립3D프린팅연구원 설립 추진)과 울산산학융합지구 준공('17년 12월), 계능 기반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계능산업기술센터 '17년 6월 개소, 울산 1만명 계능프로젝트 본격 추진 등)과 이차전지 산학연 연구센터 개소('17년 3월),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 연구기관을 2017년까지 27개 확충('14년 6월 기준 12개)하여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신사업육성 및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조선해양 도장·표면처리센터 착공('17년 1월),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기술지원센터 착공('17년 4월), 조선해양기자재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 지원(50개사),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을 위한 하이테크타운 설계 완료('17년 12월), 석유화학공정 기술교육센터 착공(2월), 지능형 모빌리티 핵심기술인 자율주행 차량제작 및 시험운행 등 주력산업 고도화 및 첨단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동북아 오일허브 법적 기반(석대법 개정, '17년 3월) 마련과 남항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17년 6월), 북항 하부공사 완료('17년 7월)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미래성장 동력이 확충되었고,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를 위해 시의회 및 울주군의회, 상공회의소 유치 결의 의결('17년 7월) 등의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원전해체 핵심요소기술 연구센터 개소('17년 3월), 울산 차세대전지종합지원센터인 KIET 울산분원을 착공('17년 9월), 친환경 전지융합실증화단지 조성 건축공사 완료('17년 12월), 수소차량 보급(39대)와 수소충전소 2기 준공 운영('17년 10월), 삼호철새마을 그린빌리지 조성 등 신재

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로 친환경 에너지허브 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13개사 5억 4백만달러)과 국내기업 유치(136개사 3조 5,105억원)로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였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4개 산단, L=6.26km, 851억원)과 테크노산업단지 공사 마무리(공정률 96%), 산단 내 R&D기관·첨단기업 유치(81개소)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용지 적기 공급(11개소, 7,304천㎡)으로 지역산업 활성화를 꾀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울산 관내 인구이동 및 지역별 학생증감에 따른 교육여건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17년 3월 개발사업에 따른 증가학생 배치를 위해 북구에 중산초와 울주군에 천상고를 개교하였으며,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예방 및 학교 적응력 제고를 위해 울주군에 울산두남중고를 개교하였다. 또한, 지역별 여건변화에 따라 기존 학교의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해 해 온남초, 매곡중 등을 증축하였다.

특히 울산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미래인재 발굴·육성과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에 대비한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울산인재육성재단을 설립('17년 9월)하였다. 울산시는 울산인재육성재단을 통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20억의 자본금을 출연하여 100억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장학사업을 확대하여 교육사다리 복원을 통한 지역인재 선순환 체계가 이루어 지도록 운영한다.

울산시는 울산대학교의 BK21플러스 사업을 지원하면서 세계적인 자동차·조선 전자융합기술 연구인력 양성과 관련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데 기여하였다. 동 사업추진으로 울산대 자동차·조선 전자융합기술사업단은 매년 37명의 석박사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관련 분야 세계10위권의 연구기관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을 통해 장기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 13건, 캡스톤 디자인 및 산하기관 협력 연구 활동 지원, 특성화 기술개발과 특허출원 지원으로 인턴 대학생 기업체와 협업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울산과학기술원 연구 교육운영 및 협력 사업으로 기술이전(10건 1,175백만원)

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도약 발판 마련, 학교 운영 및 R&D 수행으로 지역에 투자, 지역경기 활성화로 대학-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학과의 연계 지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와의 산학 연계로 인재양성 향상에 이바지하였다. 구체적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기업 운영학교인 울산마이스터고와 울산 상업고를 지원하여 학교기업 제품 제작활동을 통해 현장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명장 공방 기술이전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성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켰으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 확대를 통해 조선해양플랜트·에너지·자동차·기계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으며, 기술사관 육성사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체계적인 기술인재를 육성하였다.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복원

울산광역시 「2017 울산 방문의 해」로 2016년 총 관광객 260만명에서 2017년 700만명 달성하여 새로운 관광목적지로 부상하여, 관광객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대한민국 관광 100선에 당초 2개소에서 4개소로 추가 선정되었으며, 「2017 열린 관광지」 태화강 대공원 선정 및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중구 선정, 관광호텔 확충(6개소 663실 등록, 3개소 649실 건립 중) 등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문화측면에 있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운영(53개 문화시설 참여) 활성화,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문화예술육성 126개 단체, 신진예술가 10명, 창작콘텐츠 3개 단체)과 문화나눔사업 확대 운영(통합문화이용권 20,084명)으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하였으며, ‘아르코공연예술연습센터@울산’ 개관(‘17년 11월)과 어린이테마파크는 2017년 4월에 착공을 시작하였고, 시립미술관 건립 준비(‘17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와 울산문화재단 출범(‘17년 1월),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처용항의 페르시아 왕자 외 2개)로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문화 진흥기반이 구축되었다.

산악·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영남알프스 행복 케이블카 설치(실시설계 추진), 신불산군립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32,358㎡, 6월 착공)과 강동관광단지 조성 사업(울산안전체험관 착공, 뽕로로 테마파크·리조트 건립 MOU 체결) 추진, 키즈오토파크

울산 조성 업무협약 체결(11월)로 강동권 해양복합 관광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울산시와 한국관광공사간 업무협약을 통한 관광발전을 제휴하고, UNWTO 도시회원 가입('17년 5월)와 마케팅·홍보 등 협력사업을 다양화 하는 한편,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해돋이역사 기행) 선정은 동해안권 광역관광거점 도시로 부상되었다.

전국체육대회 참가(3회) 및 프로스포츠 홈경기(60회) 활성화 지원과 제2실내종합체육관 건립(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017 울산세계장애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41개국 502명, 22개 종목)로 스포츠가 활성화 되었다.

7대 도시의 도심하천 중 수질 1등급 유지와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추진(195,586톤 CO₂), 물순환 조례제정('17년 12월), 2017년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10월)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힘쓰며, 대하강 국가정원 지정 추진을 위해 대통령 공약 사업에 반영하였다('17년 7월). 또한 하수처리시설 증설(회야, '17년 1월 착공) 및 울산 슬러지자원화시설 건립(지방건설기술 심의, '17년 12월), 물 관리센터 개청('17년 9월) 등으로 생활 환경을 개선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 의료

울산광역시시는 나눔으로 따뜻한 삶, 살기 좋은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현장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인 읍면동 복지서비스 허브를 확대(10개팀 21개 읍면동→16개팀 43읍면동)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18,821명, 548억원)과 저소득층 자립지원(자활근로사업 448명)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출산양육을 위해 출산지원금 확대지원(둘째자녀 지원금 '16년 30만원→'17년 50만원)과 공보육시설 확충(국공립 8개소, 공공형 14개소),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6월),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17년 5월)으로 마음 놓고 아이 낳아 키우는 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여성의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여성새로일하기센터 2개소, 일자리 2,839명)이 되었고, 가족 유형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일시청소년쉼터 개소('17년 12월), 학생청소년 교육문화회관 착공('17년 7월) 등 청소년 건전육성에 힘썼다.

기초 연금(73,451명) 및 노인돌봄서비스(5,013명), 일자리 제공(8,013명)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17년 12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80개소)으로 장애인 자립기반이 강화되었다.

특히, 울산시는 건강도시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치매관리사업 컨트롤 타워를 구축(광역치매센터 개소·운영)하고, 건강계단 조성 37개소,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500명 등 보건서비스를 강화했으며, 디지털모기계측기 설치 10개소, 역학조사반 운영, 대응훈련 4회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 지도·관리, 식중독 예방 컨설팅 100개소, 지도점검 14,935개소로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응급환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24시간 응급의료기관 운영 10개소, 대형재난 대응도상훈련 4회를 실시하여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였다.

제8장 세종특별자치시

제1절 세종특별자치시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2017년 기준 28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종시에 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과 도시건설 진행 중이라는 환경적 영향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연평균 21.5%의 높은 인구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수출액은 2015년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7년 기준 10.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증가율과 같은 0.1%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보다 훨씬 높은 70.5%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도에 비해 19.9%p, 전년도에 비해 11.5%p나 급격히 증가하여 빠르게 재정자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3-8-1 세종특별자치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세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	1,565,248	1,635,555	-	4.9	-	-	-	-	-
인구(천명)	51,328	51,529	51,696	51,779	0.3	156	211	243	280	21.5
1인당 GDP (만원)	2,927	3,068	3,192	-	4.4	-	-	-	-	-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	526,757	495,426	573,694	0.1	1,020	929	1,012	1,024	0.1
취업자 (천명)	25,897	26,178	26,409	26,725	1.1	-	-	-	-	-
재정자립도 (%)	50.3	50.6	52.5	53.7	2.2	50.6	54.8	59.0	70.5	11.7

주 : 세종시의 지역내총생산 자료는 없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세종특별자치시의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식료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등이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이 12.2%로 가장 높았고, 종사자수는 '비금속 광물제품'이 종사자수 13.6%, 생산액은 '식료품'이 1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전기장비' 등 업종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금속가공제품' 등이 증가하였으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등은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등이 증가한 반면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비금속 광물제품'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생산액은 '식료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비금속 광물제품, '전기장비' 등은 감소하였다.

표 3-8-2 세종특별자치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12.0	11.0	11.9	12.8	11.8	14.1	11.5	11.8	14.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5.3	3.6	7.3	5.8	3.6	8.1	6.8	3.7	7.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11.3	7.1	7.0	10.9	8.5	9.4	10.1	8.7	8.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0.2	7.8	9.1	11.3	10.8	8.0	12.2	11.4	13.0
금속가공제품(기계·기구 제외)	4.9	1.5	0.9	4.7	1.5	0.7	5.4	1.8	1.0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3.4	14.4	16.1	2.3	12.3	15.0	2.5	11.0	10.3
비금속 광물제품	13.2	18.6	14.3	12.5	15.2	13.8	11.9	13.6	11.9
전기장비	8.3	9.5	10.6	7.8	7.7	8.9	7.6	8.4	8.2
자동차 및 트레일러	7.9	10.5	6.9	8.9	10.4	7.9	7.9	9.4	8.5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및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26.0%, 21.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종시가 신도시라는 특성에 의해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매출액 기준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64.2%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 6.6%, 종사자수 8.1%, 매출액 3.3%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이 모두 증가하였다. 다만,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2014년에 비해 매출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표 3-8-3 세종특별자치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6	3.4	2.3	1.1	1.3	1.2	1.3	2.2	1.4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6	3.0	1.0	1.9	4.0	2.6	1.6	2.5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31.0	21.0	14.0	22.6	10.5	15.7	26.0	18.7	20.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7.1	17.6	7.1	6.6	8.1	3.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0	12.8	1.4	4.2	9.4	2.1	4.7	12.8	1.9
교육 서비스업	11.4	8.4	0.6	13.9	28.7	8.4	13.2	9.6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9	29.1	3.7	12.7	15.3	3.6	15.1	29.5	4.9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9.9	8.8	75.5	8.1	4.3	57.3	10.2	7.0	64.2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25.6	13.5	1.5	28.4	8.8	2.0	21.4	9.5	1.6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3. 혁신활동 현황

세종특별자치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47백억원, 연구개발인력 4,908명, 연구개발조직수 138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조직수의 경우 연평균 16.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2015년에 비해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이 감소하였으며, 연구개발조직수의 경우 증가 폭이 낮아졌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연구기관 이전이 완료단계에 접어들어 증가세가 주춤해진 것으로 보인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조직수 모두 0.1%p 증가하여 각각 0.7%, 0.8%, 0.4%를 차지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548건이며, 등록은 249건으로 타시·도에 비해 건수는 작지만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특허 등록의 경우 경남을 제외하고는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증가하였다.

전국대비 비중의 경우 출원 및 등록의 전국대비 비중이 0.3% 수준으로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는 0.1%p로 증가하였다.

표 3-8-4 세종특별자치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392,505 (0.6)	488,716 (0.7)	468,534 (0.7)	9.3
	연구개발인력	4,441 (0.7)	5,065 (0.8)	4,908 (0.8)	5.1
	연구개발조직수	102 (0.3)	133 (0.4)	138 (0.4)	16.3
특허	출원	326 (0.2)	462 (0.3)	548 (0.3)	29.7
	등록	179 (0.2)	198 (0.3)	249 (0.3)	17.9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는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당진~영덕고속도로, 논산~천안고속도로 외에 2016년 12월에 착공한 세종~서울고속도로 등의 도로망과 지역내 조치원역을 포함하여 세종시의 관문격인 오송역을 중심으로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의 철도망이 정비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을 2시간 내외로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이 가까이 입지하여 현재 지역내에서 공항까지 이동편의 인프라가 구비되어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도 활발히 증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교통인프라 구축 관점에서 지역 거점도시로의 순조로운 성장을 예견할 수 있다.

더불어,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9부2처4청)과 국책연구기관(19개소)의 이전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위상이 제고되었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응용연구와 개발연구 및 사업화를 담당할 기능지구로도 지정되었다. 해당 계획은 세종시가 지식산업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대전의 과학벨트 거점지구 및 대덕특구, 천안지역 기능지구, 청주지역 기능지구와 연계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추진정책으로 우리시는 행정·과학·산업 중심도시로의 발전 기회가 포진되어 있기에 중부권 거점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세종시의 발전과제로는 우선, 신생도시 특성이 강해 행정과 연구기능 이외의 도시수행기능이 약해 도시자족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은 아직도 도시화 초기 단계이기에 도시생활을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 제공 여건이 부족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과 옛 연기군 읍면지역간의 인적 교류가 거의 없으며 신도시개발에 따른 인근 읍면지역의 난개발이 진행되는 등의 과제들이 쌓여있다. 이러한 지역내 발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종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자족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대학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진흥기반구축과 인구특성에 대비한 보건복지 지원을 개선하고자 한다.

둘째, 역내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읍면지역의 생활기반시설 개선과 균형발전 사업모델 추진 및 역내 신도시와 읍면 지역민과의 교류를 활성화한다.

셋째, 신도시 인근 읍면지역의 난개발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조성을 실천하며 계획적 지역성장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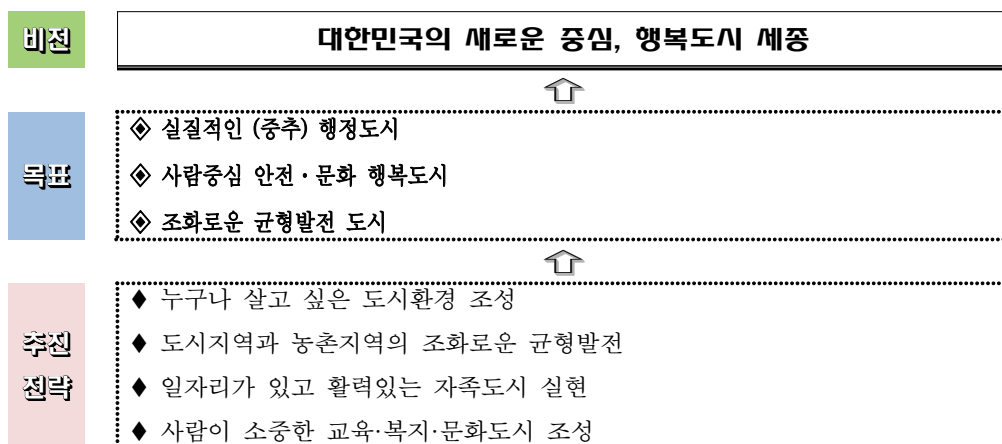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세종특별자치시는 대내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중앙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중앙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복합적 도시 수행기능을 하는 특별한 도시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제2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2014~2017)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을 시의 발전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세종시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면서 역내 신·구 지역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창조환경을 조성하여 최고의 행복도시로 만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비전 실현을 위한 목표는 크게 3가지로써, 첫째는 ‘실질적인(중추) 행정수도’로 국가 행정 및 지방행정시설 건립을 완료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행정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람중심 안전·문화 행복도시’로 역내의 교육·환경·문화·예술 등 소프트웨어적 도시 수행기능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하드웨어적인 도시 수행기능인 방재·안전·교통 등의 환경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모델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셋째는 ‘조화로운 균형발전 도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과 옛 연기군 지역간의 상대적인 삶의 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읍면지역의 특화발전 유도, 도농상생 농업체계 구축 및 친환경 농업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림 3-8-1 세종특별자치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세종특별자치시는 현재 시정에 있어 대외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목표를 살리면서 대내적으로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일자리가 있고 활력있는 자족도시 실현’, ‘사람이 소중한 교육·복지·문화도시 조성’ 등의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첫째,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 전략은 시민과 함께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성장관리방안을 강화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녹색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중심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편리한 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전략은 도농이 함께 잘사는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원도심 재생을 중심으로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 확산 및 마을기업 홍보 활성화 더불어 시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주민공동 이용시설 확충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일자리가 있고 활력있는 자족도시 실현’ 전략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전략산업 및 지역대표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충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세종 고용복지센터 운영, 청년 고용증진 등의 일자리 지원책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 ‘사람이 소중한 교육·복지·문화도시 조성’ 전략은 여성·가족·청소년·아동 친화적 도시기반 조성 및 사회환경 구축을 중심으로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복지·의료 서비스 확대 등의 세종형 복지시스템 구축과 지역대학을 연계로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로 삶의 질 제고를 추진하는 것이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세종특별자치시와 공주시는 두 도시간의 자율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14년 2월 28일)하였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라 고차적인 도시 수행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공주시는 풍부한 백제문화유산 및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두 도시는 지리적 접근성과 지역간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과 연계협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생활권 구성에 적합하다.

세종시는 지역행복생활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14년 10월 1일) 운영하여 연계협력사업의 발굴과 효율적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세종시는 세종·공주 중추도시권 시민의 행복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연계협력사업으로 최근 3년간 이번 2017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된 ‘세종·공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사업(‘15년 선정)’을 포함하여 ‘금강 르네상스 조성사업(‘16년 선정)’, ‘시대를 잇는 읍·복합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17년 선정)’을 완결 및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각각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8-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2017년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는 280,100명으로 전년 대비 15.2% 증가하였다. 세종시는 인구성장과 도시의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지역생활권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주도협력사업 확충’,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확충’,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지역교통·물류망 개선’의 4대 실천과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주도협력사업 확충’ 부문의 ‘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세종 읍면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보상(70%)이 진척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 운영(‘17년 7월~)되었다. 또, ‘조치원정수장 문화재생사업’으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의 거점공간이 마련되어 관련프로그램(개최횟수 12회, 참여예술인 223명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확충’ 부문의 ‘조치원공영주차장 설치사업’으로 공영주차장 2개소(83면)과 나눔주차장 3개소(43면)가 조성되고 ‘재해위험 저수지정비 사업’으로 위험저수지 3개소(운당, 종성골, 서낭쟁이) 정비가 완료되었다. 또,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금남면 하수관로 정비 진척에 대한 보급률이 전년대비 1.5% 상승한 91%까지 높아지고,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으로 연동·부강의 처리장부지 토지보상 및 처리장 3개소 시설공사가 완료·착수(‘17년 11월~)되었다. 더불어 ‘조치원철로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으로 철로변 연탄 저탄장부지(5,158㎡)를 매입하여 생활환경숲 조성을 진행하고, ‘생활안전개선 사업’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완료를 달성함과 동시에 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으로 양질의 안전연구 기반을 조성하였다.

‘지역중심지 활력증진’ 실천과제 부문의 ‘조치원읍 종합정비사업’으로 가로환경개선과 가공배전 지중화설치를 완료하여 보행자중심의 도로 설치를 가능케 하고 ‘부강면과 장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주민협의체 구성과 주민대학 운영을 통한 주민리더 양성(20명) 및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협동조합) 체계 구축을 실천하였다.

‘지역교통·물류망 개선’ 실천과제 부문의 ‘세종·공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으로 구간거리 33.1km의 연장, 정류장 안내단말기 41개소와 키오스크(KIOSK) 4개소 그리고 관련센터 연계프로그램 개발 등을 구축하였다. 이로 인해 차량운행의 정시성 향상(6분→2분)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30%→46.3%)이 이루어졌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육성', '지역투자 촉진기반 확대',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지역기반 연구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의 5대 실천과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일자리창출 중심의 지역산업육성' 부문의 '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으로 4건 과제(창업기업지원, 창업활성화지원, 창업역량강화, 창업경진대회 개최)에 32개 창업기업 지원 및 창업자 발굴을 수행해 전년대비 고용인원(4명 증가)과 매출액(3억원 증가) 확대를 달성하였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지역특성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4개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완료 시점까지 참여자 중도포기율(2.7%)을 낮추며 취업연계로 결실을 맺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사회적기업(월평균 7개사, 총160명)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지역투자 촉진기반 확대' 부문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으로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및 이벤트광장 조성(부지 1,312㎡)과 전통시장 소방시설 재정비 완료를 통해 1일 평균 시장 방문객수 4,713명(전년대비 22% 증가) 달성, 매출액 증가업체도 전년대비 10%가 늘어났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으로 전년대비 11% 증액된 73억원이 투입된 36개 과제(R&D 27건, 비R&D 9건)를 추진하여 신산업생태계 조성(제조업→융복합지식산업)과 지역대표산업 개편(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수송기기부품, 정밀의료기기)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으로 10억원을 투입, 구절초 소재를 이용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기업매출 신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고, 현재 구절초에서 머루포도 소재를 이용한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으로 우량기업 50개사 유치 촉진(국내이전 39사, 신·증설 11사 : 투자금액 4,998억원, 고용인원 2,052명)과 실제 보조금지원 업체(5개사 148억원) 지원이 이어져 기업의 지방투자 유도와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부문의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전의2 지방산업단지 진입로 준공목표(90%) 달성과 명학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준공목표(70%)를 달성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지역거점조성

지원사업'으로 첨단 공업용수 정상 가동 및 미래 공업용수도(송수관로 7.6km, 배수지 1,300㎡, 가압식 1식) 준공('17년 12월)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목표 만족도 21% 초과, 목표 가동율 30% 초과)에 기여하고 있으나 입주예정기업의 투자위축으로 이용업체 증가율이 둔화(목표 증가율 66% 미달)되고 있다.

'지역기반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혁신' 부문의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으로 충남과의 '자동차 기계부품'에 대한 과제지원 협력을 받아 광역권사업 생태계 조성(예산 47.1억원 확보)을 하여 충남과의 산업인프라 공동활용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나아가 '자율차산업'으로 지역산업 발전방향을 전개할 모멘텀이 제공되었다. '산학연 협력기술 개발사업'으로 내역사업인 첫걸음협력사업(16사 과제 추진중)과 지역유망중소기업지원사업(2사 과제 추진 중)을 통해 출원 10건, 시제품 및 상표등록 7건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SB플라자 구축운영사업'으로 기존건물 철거 후 공사가 진행 중이며 해당기관의 위탁운영 근거 조례도 마련함으로써 2018년 6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실천과제 부문의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관내 농산물 제조가공업체시설(1개소) 지원 및 6차산업 인증업체(2개소) 발굴을 완료하여 역내 농산물 수요확대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홍보 및 이벤트 활성화가 개선되어 이것이 도농교류 및 도시민 농촌체험 수요증가로 이어져 연간 방문객수가 약 8만명을 달성했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마을기업 신규지정(예비 4개, 신규 4개)을 통해 총 마을기업 11개사가 지정되어 3.3억원 지원을 받아 총매출액(7억원)이 증가하였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용배수로 사업(4개소)와 재해위험저수지(산학)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농번기 영농편의를 도모하였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로컬푸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저장시설을 신축(130㎡)하여 신선과채류 보관기간(5일→30일이상) 및 가공용농산물 보관이 용이해 지고 이용농가도 크게 증가(전년대비 75%증가)하였다.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설치사업'으로 식문화 교육·체험 등이 상시 가능한 인프라가 완공('17년 11월)되어 도농지역의 융복합 교류장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할 기회가 확대되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으로 지역 농산물 구매액이 149억(전년대비 38%증)에 이르렀고 일자리창출(고령자, 사회취약계층) 및 매출액 농가 환원(90%)으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3.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세종특별자치시는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일과 학습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3대 실천과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부문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교육지원사업 예산이 77개교에 총 20억원이 집행되어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단년도 사업 위주의 지원이기에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고 교육 수요자들과의 소통 또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해당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제가 남아있다.

'일과 학습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부문의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으로 관내대학의 지역사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관내 시민들의 수준 높은 학습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교육서비스 공급자 위주의 강좌로 구성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수요자 위주의 강좌로 개선하여 재구성하였다.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부문의 '시도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강화책이 진행되어 협의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18회)했으며 정책아카데미, 인문학 강좌, 학부모 대학 등의 프로그램(1,239회)을 운영하고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120회)을 지원하며 평생교육 기관특성화 프로그램 지원(120회), 학습동아리 발굴 육성(120회), 학습동아리(150회), 청소년 자유학기제(59회)를 운영했다. 이에 따라 평생학습 관련기관(지자체, 교육기관, 평생학습기관 등)의 업무분담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기반이 구축되는 결과로 이어져 평생학습 참여율이 28.1%로 성장하였다(전년대비 9.7%증가). 또한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사업'으로 청소년 진로교육 기반조성이 이루어져 다양한 체험제공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청소년 진로체험카드(3,088명), 진로체험교육(866회), 현장학습 차량지원(80대) 등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4. 지역문화융성 · 생태복원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문화융성·생태복원’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특성화 발전지원’,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지역관광 산업육성’,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의 4대 실천과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특성화 발전지원’ 부문의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사업’으로 7개 단체를 선정하여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200명)하였다.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으로 13개 분야의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문화재돌봄 사업’으로 문화재 보수(85개소)와 일상관리 및 모니터링이 수행되어 문화재 훼손 최소화와 내방객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조치원유휴부지 활용문화재생사업’으로 옛 한림제지 폐공장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사업부지 매입 및 이전을 완료(‘17년 7월)하여 조치원 등의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사업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였다.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부문의 ‘세종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설계용역 착수 및 부지 매입이 마무리되고, 관내 작은도서관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어 23개소(전년대비 10%증가)의 시설이 늘어났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부강면 관련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건축 설계가 완료되어 지역민의 생활문화 예술참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지역관광산업 육성’ 부문의 ‘관광활성화 홍보사업’으로 ‘장육진 화백과 종합관광안내 표지판정비사업’을 완료(‘17년 9월)했으며 관광안내지도를 제작(총 11만부)하여 세종시 관광객의 편의와 만족도 증속에 기여하였다. ‘금강르네상스 조성사업’으로 세종~공주 관광벨트 구축 용역이 완료되어 금강가도 경관조성, 시티투어 버스 코스 및 사업자 확정, 증강현실(AR) 기반 관광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생태자연환경 보존 활용’ 부문의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8년도 균형발전 사업평가에서 우수관정을 받을 정도로 잘 수행된 사업으로 정비부문에 98억원, 유지관리부문에 5억이 투입되어 해당 소하천 정비(9건)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다. ‘고북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조성사업 추진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생태공원 운영(농어촌공사)을 위한 협약체결을 집행했고, 이로 인해 이용객수는 6만 여명에 이르렀다.

5.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세종특별자치시는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취약지역 응급 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인프라 확충’의 3대 실천과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부문의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2개소)이 확충 개원(‘17년 10월)되어 어린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 금연지원서비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및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등이 원활히 진행되어 목표 성과지표 13개 중 11개 지표가 100%이상 달성했으며, 이로 인해 세종시 도농지역간의 취약지표 파악이 수월해져 관련사업에 대한 추진력이 향상되었다. ‘통합보건지소 사업’으로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설치 및 완료(‘17년 10월)되어 13명의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지소는 세종시의 동지역 주민들에게 보건 및 건강증진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하여 월평균 7,400건의 서비스 제공실적을 달성했다.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부문의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으로 청소년 멘토단 구성(13명)과 관련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 학업복귀지원, 사회진입지원, 건강증진지원, 고민상담지원, 꿈드림 청소년단 운영 등을 통해 지역내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서비스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신규 4개소, 지정 3개소) 설치와 이용자수 확대를 통해 산모·신생아에게 양질의 해당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또한,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돌보미 양성(195명)과 연계서비스 제공(4만건), 연계혜택가정(4천 가구) 실적을 달성하였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인프라 확충’ 부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중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을 통해 기관 확충(4개소)과 대여 및 품앗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이용객이 6만 여명까지 이르렀으며, 건강가족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시설 작은결혼식 운영, 아동 정서행동 발달관찰 프로그램 지원 등의 신규서비스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9장 경기도

제1절 경기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경기도의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 기준 1,287만명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인구증가율도 전국증가율을 크게 상회한 1.4%를 기록하였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372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상회한 연평균 6.3%로 증가하였다. 1인당 GRDP는 2,952만원으로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연평균 성장률은 4.9%로 전국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수출액은 2014년 1,116억 달러에서 2016년 981억 달러까지 하락하였다가 2017년에 반등하여 1,241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서울,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70.1%로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를 크게 상회하였다.

표 3-9-1 경기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경기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	1,565,248	1,635,555	-	4.9	329,559	352,857	372,344	-	6.3
인구(천명)	51,328	51,529	51,696	51,779	0.3	12,358	12,523	12,717	12,874	1.4
1인당 GRDP (만원)	2,927	3,068	3,192	-	4.4	2,683	2,840	2,952	-	4.9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	526,757	495,426	573,694	0.1	111,641	105,908	98,091	124,129	3.6
취업자 (천명)	25,897	26,178	26,409	26,725	1.1	6,272	6,393	6,504	6,685	2.1
재정자립도 (%)	50.3	50.6	52.5	53.7	2.2	67.7	66.6	67.4	70.1	1.2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경기도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62.7%, 제조업 36.2%, 광업·농림어업 1.1%로 나타났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등이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와 ‘금속가공제품’이 각각 14.5%, 14.2%로 가장 높았으며,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가 각각 21.5%, 31.9%로 높았다. 이 외에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등 업종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사업체수·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전반적으로 큰 비중 변화가 없는 가운데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생산액도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가 감소한 반면, ‘기타 기계 및 장비’는 증가하였다.

표 3-9-2 경기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5.1	5.6	5.0	5.2	5.9	5.3	5.4	6.0	5.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4.0	3.7	4.7	4.1	3.9	5.1	4.1	3.9	4.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1.1	8.5	5.9	11.3	8.4	6.1	11.3	8.7	6.0
1차 금속	3.3	2.7	4.0	3.4	2.7	3.6	3.4	2.6	3.5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4.1	9.0	5.4	14.1	8.8	4.8	14.2	9.0	5.3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9.0	22.6	33.9	8.5	22.4	32.9	8.2	21.5	31.9
전기장비	7.7	6.5	4.9	7.6	6.6	5.1	7.6	6.6	5.0
기타 기계 및 장비	14.8	11.9	8.2	14.7	11.9	8.8	14.5	12.1	9.0
자동차 및 트레일러	3.9	8.4	12.9	3.8	8.1	13.3	3.7	8.0	12.9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2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6.7%, 매출액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21.7%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 7.1%, 종사자수 8.6%, 매출액 10.2%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다소 증가한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감소하였다. 종사자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매출액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3-9-3 경기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9	2.0	5.4	0.8	1.3	2.4	0.9	1.7	3.6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6	7.0	20.2	2.6	5.9	13.3	2.5	6.7	15.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7	10.8	17.7	14.8	7.5	12.0	17.0	10.1	2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7.5	14.2	29.3	7.1	8.6	10.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6	16.6	8.3	3.9	11.6	5.5	4.1	14.4	8.1
교육 서비스업	17.2	12.4	6.9	16.3	21.8	13.0	15.9	10.8	5.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1	27.9	21.4	12.3	19.5	11.5	13.8	26.7	17.5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1.2	8.5	11.3	9.1	5.7	5.8	10.7	7.9	8.6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30.6	14.7	8.8	32.9	12.5	7.3	27.9	13.0	9.0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단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3. 혁신활동 현황

경기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33조원, 연구개발인력 205,137명, 연구개발조직수 13,513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혁신활동은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큰 격차를 보이며,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3년에 비해 증가하여 경기의 혁신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는 감소한 반면 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조직수는 증가하여 각각 47.6%, 32.8%, 34.4%를 차지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1.1%p 감소, 연구개발인력은 0.8%p, 연구개발조직수는 1.2%p 증가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48,764건이며, 등록은 23,38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연평균 -1.7%, 등록건수는 연평균 -9.1%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가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의 경우 출원 및 등록의 전국대비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는 1.0%p, 등록건수는 0.7%p 감소하여 각각 29.8%, 28.4%로 나타났다.

표 3-9-4 경기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31,032,952 (48.7)	31,839,012 (48.3)	33,050,550 (47.6)	3.2
	연구개발인력	193,926 (32.0)	202,267 (32.6)	205,137 (32.8)	2.8
	연구개발조직수	10,616 (33.2)	12,414 (33.2)	13,513 (34.4)	12.8
특허	출원	50,468 (30.8)	52,542 (31.4)	48,764 (29.8)	-1.7
	등록	28,275 (29.1)	22,750 (29.8)	23,381 (28.4)	-9.1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경기도의 경제활동 인구는 2016년 말 기준 679만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이고, 국내 수출 1위, 수입 2위의 최대 무역량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창조경제의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된 대한민국의 중심지이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핵심요충지이다. 경기도는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기반이 잘 갖춰져 있으며, 우수한 인력이 선호하는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우수인적자원의 활용이 용이하며, 국가 중추 교통망의 수혜지역으로 국제공항, KTX, 고속도로 등 우리나라의 중추 교통시설과 교통망이 경기도를 경유하거나 인근에 입지하여 이를 활용한 경제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서해를 사이로 가깝게 마주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권 강화로 경기도의 입지적 역할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대중국 무역의 핵심 산업 클러스터가 경기 남부에 분포하여 한국의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다. 현재 경기도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고 중장기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분야별 주요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며, 경제성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수도권규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지역경제 침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과학기술, ICT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촉진을 위한 투자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표개발과 고양, 판교 등 서비스 비즈니스 특구 조성, 남양주, 동두천 등에 생명 실버산업 및 먹거리 산업 등을 유치, FTA 대응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축산 산업 육성 등 경기도의 지역적 여건에 부합한 미래 신 성장동력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성장률을 제고 해나가야 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우선적 개발촉진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도하고 중첩된 개발규제와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해 동북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경기도의 자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제한이 되고 있으며, 미군 반환 공여지 및 군사시설 이전부지 등 가용 대규모 개발부지를 이용한 신 성장 동력산업 유치 등을 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에 집중된 과도한 중첩규제는 선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맞춤형 지역활력 시책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국비 지원사업이 적극 유치되어야 한다.

셋째,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사회보장 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기반의 복지자원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지역공동체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복지 전달체계의 보다 견고한 구축 등이 요구된다. 또한 도민들의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맞춤형 안심건강정책의 확대도 필요하다.

넷째,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 정책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최근 대형 복합재난의 증가로 효과적 컨트롤 타워와 신속한 현장대응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스마트한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과 소방·의료지원 전문인력 및 장비 등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중교통 서비스 환경 개선과 광역교통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광역버스의 효율적 조정과 광역교통개선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중앙정부의 조속한 국비 지원을 통한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추진과 광역기능의 철도인프라 개선을 위한 도내 주요구간의 복선전철 건설이 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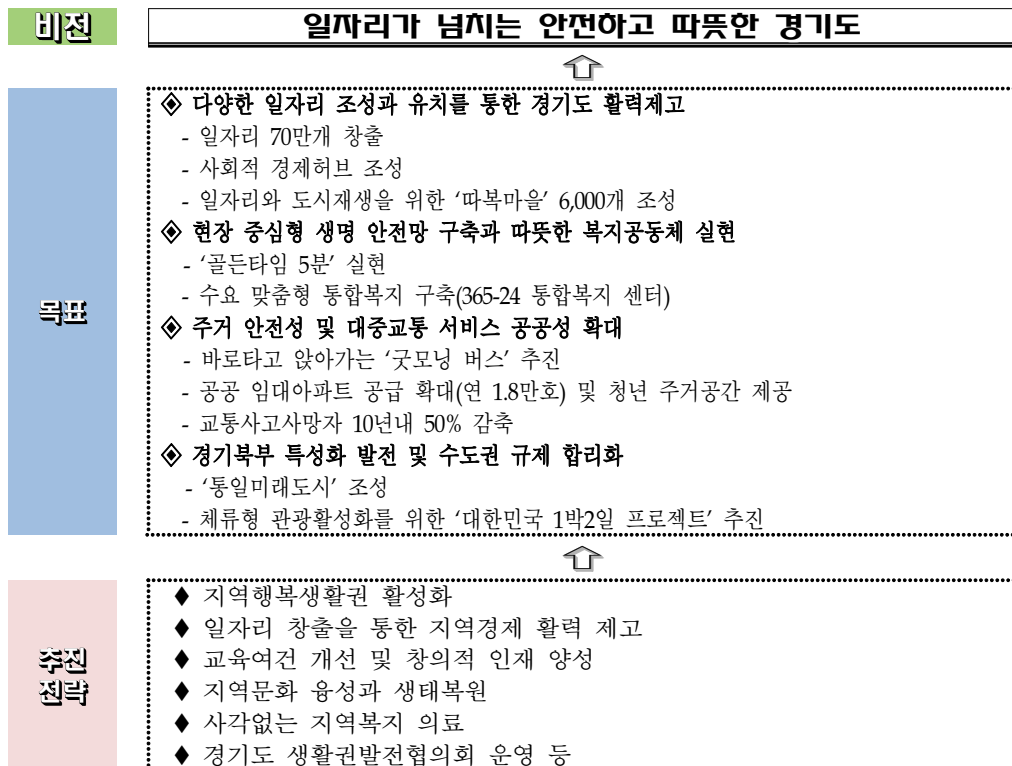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지자체 중심의 남북 교류협력 확대가 필요하며 이에 남북관계에 민감하지 않은 지자체 교류협력 사업이 발굴·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관계에 영향을 덜 받는 지속가능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경기도 특색의 남북교류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말라리아 방역 등 보건의료사업과 영·유아 등 취약계층 식량지원, 묘목재배 등 산림녹화, 농업협력사업 등 성과가 많은 사업은 성공 경험을 확대해야 한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경기도는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라는 발전 비전을 설정하여 현장·소통·통합, 데이터 기반의 도정혁신을 추구하고 도민 모두가 화합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일자리 조성 및 유치를 통한 경기도 활력제고’, ‘현장 중심형 생명 안전망 구축과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 ‘주거 안전성 및 대중교통 서비스 공공성 확대’, ‘경기북부 특성화 발전 및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4대 목표로 설정하고 110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경기도의 중장기 성장기틀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의 중추적 성장동력이자 제4차 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그림 3-9-1 경기도의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경기도의 발전비전을 이루기 위해 분야별 추진전략 5가지로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지역문화융성과 생태복원’, ‘사각없는 지역복지 의료’를 수립하였으며, 추진전략을 실현할 중점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첫째,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관련 추진전략으로 저 발전 낙후지역의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지역개발사업 적극지원, 생활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수도권 광역 도시 철도망 구축 및 광역버스 공급확대 등이며, 주요사업으로 주민 체감형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사업 추진, 출근 입석 ZERO화, 2분마다 출발하는 굿모닝 버스 정책 추진, 접경지역 개발과 남북한 교류협력공간의 개발, 수도권 순환·방사형 간선도로망 구축, 수도권 광역 및 도시철도망 구축, 지역중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활력 증진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이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관련 추진전략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의 허브 구축, 지역경제의 세계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융복합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 활성화 및 문화관광거점 육성 등이며, 주요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효과사업 확대 및 고용서비스 개선, 특화발전 프로젝트: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조성 및 활성화, 서비스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체계적인 R&D투자, 융복합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 활성화, 경기도 농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이다.

셋째,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관련 추진전략으로 안심배움터 실현, 사회취약계층 및 지역 교육여건 개선, 공공 돌봄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다양화 지원 등이며, 주요사업으로 학교안전망 강화로 안심배움터 실현, 사회취약계층 및 지역 교육여건 개선, 산·관·학·연 클러스터 조성, 산업체 기술변화 및 인력수요 변화 대응체제 마련, 더불어 잘사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을 추진토록 하였다.

넷째, ‘지역문화융성과 생태복원’관련 추진전략으로 도민 문화향유 기반 조성 및 활성화 경기도의 녹지 생태축 설정 및 녹지 인프라 구축, 체계적인 수변관리 및 DMZ 평화생태벨트 활성화 등이며, 주요사업으로 경기북부지역의 특색을 살린 체류형 1박2일 관광인프라 구축,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시설 건립 지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다섯째, ‘사각없는 지역복지 의료’관련 추진전략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다층적 안전망 구축, 사전 예방적 의료관리 및 즉시적 응급체계 구축,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가족친화 사회조성 등이며, 주요사업으로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골든타임 5분 실현,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사전 예방적 의료관리 및 즉시적 응급체계 구축, 범죄로부터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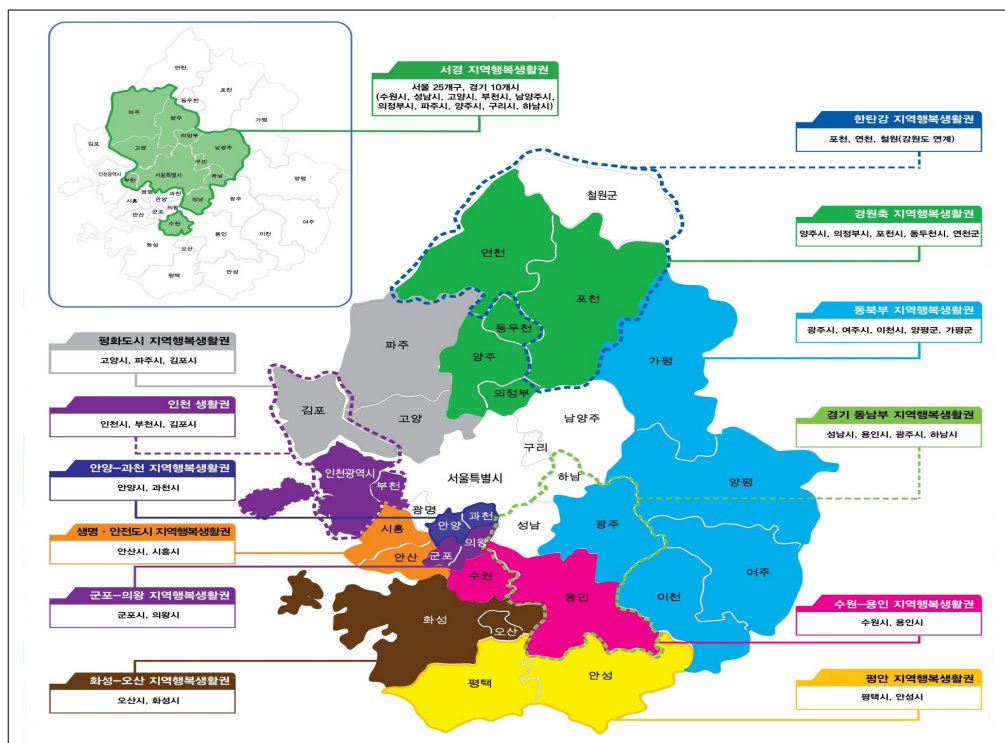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경기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경기도 지역특성과 부합한 주민체감형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11개 생활권으로 구성하였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행복권생활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실천과제로 주민체감형 생활인프라 확충, 지역주도 활력발전체계구축, 지역교통 물류망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 생활 환경개선, 낙후지역 주거지 재생 등 개선, 대중교통 운행체계를 개선하였다.

그림 3-9-2 경기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경기도는 지역행복권생활사업의 주요 실천과제로 주민체감형 생활 안전인프라 확충, 지역주도 활력발전체계구축, 지역교통망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주민체감형 생활인프라 확충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편익시설 18개소 설치, 환경문화시설 48개소 설치, 생활비용보조 242개 사업(133,345백만원)을 실시하여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였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1개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9개소를 설치하여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여 마을 환경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노력하였다. 또한 해양쓰레기 정화, 폐기물 자원 회수시설 확충사업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시설(구리, 남양주, 평택, 안성), 평택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 설치로 주민체감 생활 인프라 구축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권 한탄강 수계 협력사업 지원으로 한탄강 걷는 길 조성, 특색 있는 볼거리, 즐길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 지역 경쟁력을 향상토록 하였다.

지역교통 물류망 확충사업으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은 4개 구간(76.55km) 공사 착공, 인천-김포 구간(28.57km)을 개통함으로써 대중교통 순환체계를 개선하였고, 제2영동 민자고속도로(56.95km)를 개통하여 동서간 교통량 분산을 통한 통행량을 개선하였다. 대곡-소사-원시 복선전철 사업추진을 통하여 6,476명의 고용창출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북서간 대중교통망 체계구축을 통해 지역교통망을 확충하였다. 또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체계를 개선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경기도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육성,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조성, 지역관광산업육성, 지역성장거점육성, 농어촌 일자리 확충 등의 실천과제를 추진하였다.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육성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공공건물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7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특화사업,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창업, 창직 관련 교육 5,399명, 취업 3,296명으로 교육과 취업을 연계한 성과가 나타났다.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역투자촉진사업인 G슈퍼맨 펀드를 3호 750억원을 조성하여 도민 창업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고덕과 진위 등 지방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관로, 배수지 등)을 건설중에 있다.

과학기술 기반 확충을 위해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150여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과학기술진흥 정책수립지원 기반구축, 지역정책연구 및 신규사업기획을 위한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을 운영하여 15개 R&D사업을 분석하고, 27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지역관광산업 육성사업인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경기도 산업관광 거점 조성사업은 권역별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경기메디투어버스 시범운영, 경기 메디투어센터 운영, 홍보물제작지원 등 의료관광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였고,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관광지 112개소 내 도로, 주차장, 상수도 등 공공기반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관광투자 활성화와 관광거점 조성, 개별 관광객의 전략적 유치 및 만족도 제고, '도민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소비기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경기북부 DMZ인근 평화누리길을 도보와 자전거로 동시에 이용 가능하도록 자전거 진입로, 우회로, 자전거 쉼터 등을 설치하였다.

농어촌 일자리 확충을 위해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고 농가를 조직화하여 약 2,209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농업기반 정비 사업을 통해 약 966ha를 경지 정리하였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 21개소 설치, 농기계임대소 7개소 설치 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였다. 지역 농업연구기반 고도화지원 사업으로 시험연구시설 설치 26건, 시험장비 구입 21건으로 연구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으로 비교우위품목 경쟁력제고,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권역별 특화작목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 소득 달성율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다. 농식품가공·체험기술 보급, 지역농촌지도활성화 지원으로 56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었으며, 평택·화성 등 수산물 냉동시설 및 김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물 산지가공 육성사업을 실시하였다. 안산 어촌관광 시설 개선과 화성 전곡항 어촌관광단지 조성 등 어촌관광시설 확충을 통해 어촌 경쟁력강화를 도모하였고, 어항기능 강화를 위해 탄도항, 전곡항 등 5개소의 지방어항의 기본시설을 보강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경기도는 교육여건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경기도 대학생 지식멘토사업, 경기도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운영 등의 실천과제를 추진하였다.

마을 간 운영 프로그램의 상호 정보 교환 및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는 ‘경기 행복학습마을’ 운영(15개소)을 통해 소외된 지역·계층에 개인의 발전 및 지역공동체로서 성장을 도모하였다. 평생학습마을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성 회복 및 도내 평생교육 확산을 위해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으로 학습프로그램운영 36,746개, 참여인원 303,773명으로 도내 평생교육 확산에 기여하였고, 대학생 지식(재능)기부를 통한 경기도 대학생 지식멘토 사업으로 460팀을 구성하여 수요자(학습취약계층)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도민의 열린 자기주도형 학습기회 제공과 우수 학습동아리 발굴 지원을 위한 경기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동아리 8112개를 발굴·지원하였으며, ‘걸어서 10분, 농어촌은 차로 10분 거리에’라는 목표로 공공 도서관 40개를 개관하였고, 읍·면·동당 1개의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을 실시하여 18개의 도서관을 조성하였으며, 마을 공동체 내 186개소의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여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경기도는 지역문화·융성, 생태복원을 위한 지역문화역량강화, 문화격차 해소, 생태자연환경 보전활용 등의 실천과제를 추진하였다.

경기도는 지역문화역량강화를 위해 디지털 만화유통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아카데미교육 1,181회, DB구축 19,021건, 원천정보 발굴 23종을 실시하여 디지털 만화 기반조성과 만화콘텐츠 저작권 보호 캠페인운영으로 지역문화역량을 강화하였다.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으로 박물관 6건, 문화원 2건, 예술회관 건립 4건 등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지역영상 미디어센터 건립 2건, 화성, 의정부를 문화거점도시로 조성하였으며, 문화향유가 힘든 소외계층에게 찾아가는 공연을 추진으로 약 825천명이 관람하였다. 또한 시·군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29여명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여 매년 약 250여명 지도하였으며, 체육 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 노인건강체육시설조성 73개소를 조성하였다.

생태자연 환경보전활용은 녹색환경지원 센터운영 지원사업으로 환경분야 조사 연구, 기술개발, 기업 환경기술 지원, 환경교육 등을 통한 지역 환경현안 해결 및 전문기술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여 기술개발 90개, 환경기술지원 661개, 환경교육 417회를 실시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마련, 경기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위한 단위사업 발굴 추진 등 건설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보급확대,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 등 환경복지 사업과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수립 등으로 환경위험으로부터 도민건강보호에 힘쓰고 있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 의료

경기도는 지역맞춤형 복지지원,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 등의 실천과제를 추진하였다.

지역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시설확충,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 드림스타트 지원사업,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163개소 운영하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40개소의 청소년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평가, 언어 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으로 10,538명을 지원하

였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12만건의 사례관리를 하였고 6만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안정적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 지원 및 교육, 평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여 매년 약 750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신속 출동태세 구축 및 재난 대응역량 강화, 재난심리 지원 등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재난안전 응급의료 지원 체계 확충)을 위해 응급처치교육 약 23만명, 자동심장충격기 약 3만대를 설치하였다.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사업으로 농어촌지역 및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33개소에 1,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통합사업인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시군담당역량교육 및 모니터링 46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20만명 실시하였다.

취약계층 등 의료사각지대 이동진료반 운영을 통한 무료이동진료서비스는 120,710명이 이용하였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797천 가구, 방문 2,957회 실시하였다. 치매관리 원스톱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치매관리 전달체계 확립, 주민 정신건강 지원 확대(치매종합지원서비스체계 구축)를 위해 광역치매센터 치매전문교육 20,065명 지원하였고, 치매환자 116,09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가족사랑 이음센터 7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안산시 건립 및 운영에 160억원을 지원하여 주민 정신건강 지원 확대를 도모하였다.

제10장 강원도

제1절 강원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강원도의 인구는 2017년 기준 155만 명으로 2014년 154만 명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42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상회한 연평균 5.9% 성장하였다. 1인당 GRDP는 2,744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전국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5.6%로 전국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수출액은 2014년 21억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반등하여 2017년에는 1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9.1%로 2014년의 26.6%에 비해 2.5%p 높아졌으며,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에는 크게 하회하였다.

표 3-10-1 강원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강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 원)	1,485,505	1,565,248	1,635,555	-	4.9	37,170	39,566	41,709	-	5.9
인구(천 명)	51,328	51,529	51,696	51,779	0.3	1,544	1,550	1,551	1,550	0.1
1인당 GRDP (만 원)	2,927	3,068	3,192	-	4.4	2,461	2,609	2,744	-	5.6
수출액 (백만 달러)	572,665	526,757	495,426	573,694	0.1	2,070	1,881	1,660	1,783	-4.9
취업자 (천 명)	25,897	26,178	26,409	26,725	1.1	721	741	749	790	3.1
재정자립도 (%)	50.3	50.6	52.5	53.7	2.2	26.6	25.9	27.1	29.1	3.0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7년 자료는 잠정치 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강원도의 산업별 비중은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82.4%, 제조업 9.5%, 광업·농림어업 8.1%로 나타나 서울, 제주에 이어 서비스업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식료품', '비금속 광물제품' 등이 지역 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수·종사자수 기준에서 '식료품' 비중이 각각 33.9%, 28.3%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생산액은 '비금속 광물제품'이 2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 외에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음료 제조업' 등의 업종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1차 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음료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가 증가한 반면, '비금속 광물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감소하였다. 생산액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업종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기장비' 등이 감소하였다.

표 3-10-2 강원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33.6	27.8	20.8	32.9	27.4	21.1	33.9	28.3	20.8
음료	2.4	3.1	8.7	2.6	3.8	7.4	2.7	4.5	7.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6	4.0	2.5	4.5	4.3	3.0	4.3	5.2	3.3
비금속 광물제품	14.9	14.6	21.5	14.9	13.9	22.4	14.8	13.5	22.6
1차 금속	1.7	2.1	4.8	1.2	1.9	5.1	1.1	1.8	3.9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4.9	6.2	5.3	5.3	7.1	5.5	5.5	7.5	6.3
전기장비	4.7	4.9	5.4	4.4	4.4	4.6	4.4	4.4	4.5
기타 기계 및 장비	5.1	5.2	3.8	4.8	5.3	3.6	6.4	5.7	4.1
자동차 및 트레일러	5.7	12.7	14.9	5.6	12.8	14.9	4.5	10.7	12.2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 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1.8%, 24.4%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의 업종이 지역 내 서비스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 비중이 6%대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사업체수 기준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다소 증가한 반면, '교육 서비스업',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기준은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증가하였다.

표 3-10-3 강원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3	2.6	4.5	1.0	1.7	2.6	1.2	2.2	4.3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5	2.9	5.2	1.8	3.8	10.0	1.4	2.8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5	8.7	14.2	10.0	6.0	10.5	12.2	8.2	16.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6.3	6.5	7.5	6.6	6.8	6.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0	14.1	10.8	4.0	10.1	7.5	4.8	13.1	9.8
교육 서비스업	15.6	9.7	4.9	15.1	25.8	22.0	14.3	8.4	5.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1	32.2	27.8	11.2	22.6	17.3	13.2	31.8	24.4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3.7	13.3	22.8	10.5	8.4	14.0	12.9	11.5	20.1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36.3	16.5	9.9	40.1	15.1	8.7	33.4	15.1	9.3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 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3. 혁신활동 현황

강원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연구개발비 39백억 원, 연구개발 인력 9,980명, 연구개발 조직 수 476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 조직 수 모두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 인력은 감소하였다. 특히 연구개발 조직 수는 연평균 9.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연구개발 인력은 -3.0%의 증가율을 보여 인력의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조직 수는 각각 0.6%, 1.2%로 변화가 없는 가운데 연구개발 인력은 감소하여 1.6%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특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2,410건이며, 등록은 1,291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 건수와 등록 건수는 각각 연평균 -0.6%, -3.3%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출원 건수 및 등록 건수가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의 경우 출원 및 등록의 전국대비 비중이 1.5% 수준으로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 건수는 변화가 없으며, 등록 건수는 0.2%p 증가하여 각각 1.5%, 1.6%로 나타났다.

표 3-10-4 강원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370,470 (0.6)	414,232 (0.6)	392,099 (0.6)	2.9
	연구개발 인력	10,613 (1.8)	10,346 (1.7)	9,980 (1.6)	-3.0
	연구개발 조직 수	397 (1.2)	490 (1.3)	476 (1.2)	9.5
특허	출원	2,441 (1.5)	2,571 (1.5)	2,410 (1.5)	-0.6
	등록	1,381 (1.4)	1,090 (1.4)	1,291 (1.6)	-3.3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 활동조사보고서, 각 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 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강원도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어메니티 산업(바이오, 의료기기, 관광·문화)이 본격적인 성숙기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42조원(2016년 기준)을 기록하여 전국 연평균 성장률(4.9%)을 상회한 5.9%를 나타내고 있으며 1인당 GRDP도 연평균 성장률이 5.6%(2016년 기준)로 전국 평균 성장률(4.4%)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한 소재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역 대학의 풍부한 연구역량과 인력 등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전국 최고의 문화, 관광 환경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최고의 주거생활 환경과 교육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올림픽 경기장, 숙박시설, 접근로 확충 등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올림픽 관련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수도권 및 전국에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평화·관광·ICT올림픽 실현을 통해 강원도의 국제화·브랜드화 및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원도의 발전과제로는 먼저 성공적인 올림픽 준비와 개최를 통해 세계에 강원도와 평창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강원경제 부흥을 위한 주요 경제정책 추진에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스마트 관광, 숙박, 교통, 음식, 안전을 비롯한 관광 인프라를 집중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강원도 경제 성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걸림돌인 군사·산지·환경 등 이중·삼중 규제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

이를 가시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강원도는 6대 중점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둘째, 세계 중심으로 도약하는 글로벌 강원경제, 셋째, 미래 강원을 위한 경제 신동력 확충, 넷째, 지역가치 창출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다섯째, 동북아시아 중심지 도약을 위한 SOC 구축, 여섯째, 함께 만들고 누리는 복지강원 실현이다. 이러한 강원도 발전 잠재력과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세밀하고 정교한 실행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강원도는 ‘어메니티산업 1번지 세계 속의 생명·건강 허브’라고 하는 미래 비전을 설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명·건강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및 균형발전, 1인당 GRDP 3만 달러 달성을 위한 강원도형 경제 기반 구축, 인간·생명·안전·삶의 질 중심의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 동계올림픽을 통한 세계적 지역문화·생태강원 실현,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 만들기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림 3-10-1 강원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어메니티산업(Amenity Industry) 1번지, 세계속의 생명·건강 허브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생명·건강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및 균형발전 ◆ 1인당 GRDP 3만 달러 달성을 위한 창조경제 기반구축 ◆ 인간·생명·안전·삶의 질 중심의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 ◆ 동계올림픽을 통한 세계적 지역문화·생태강원 실현 ◆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 만들기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6개 생명·건강 지역행복생활권 구축 ◆ 도시재생·농촌 중심지 활성화 ◆ 대륙화 및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교통·물류망 확충 ◆ 강원도형 어메니티산업(Amenity Industry) 육성 ◆ 특화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촉진 ◆ 창조적 산업생태계 과학기술기반 확충 ◆ 생명건강 성장거점 육성 ◆ 지역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 지역을 이끌어 나갈 창의인재 양성 ◆ 교육여건 개선 및 평생학습체계 구축 ◆ 생활권별 특화된 문화인프라 조성 ◆ 2018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 ◆ 생태강원 인프라 조성 ◆ 어르신, 장애인, 소외계층, 여성이 행복한 복지인프라 ◆ 마음·생명·건강 치유인프라 조성 ◆ 취약지역 없는 의료체계 구축

2. 추진전략

강원도는 어메니티 산업(Amenity Industry) 1번지, 세계 속의 생명·건강 허브라는 발전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역생활권 활성화 추진전략으로는 생활권별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을 통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과 주민 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을 통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일자리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강원지역 「지역산업 진흥계획」과 연계한 수출지원 및 GTI(Greater Tumen Initiative) 국제무역·투자박람회 개최를 통해 도내기업의 안정적 해외진출 및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내 이전기업 및 향토기업의 신·증설 등 투자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취약한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 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어촌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된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유치 및 우량 향토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셋째,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추진전략으로는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전략과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인간·생명 중심, 강원도 환경에 특화된 창의적 인재와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통한 국제적 감각향상 및 맞춤형 인재양성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넷째, 지역문화 육성, 생태복원 추진전략으로는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전략으로는 지역밀착형 복지 전달체계 구축과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 및 지역 주도형 사업을 통한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보장에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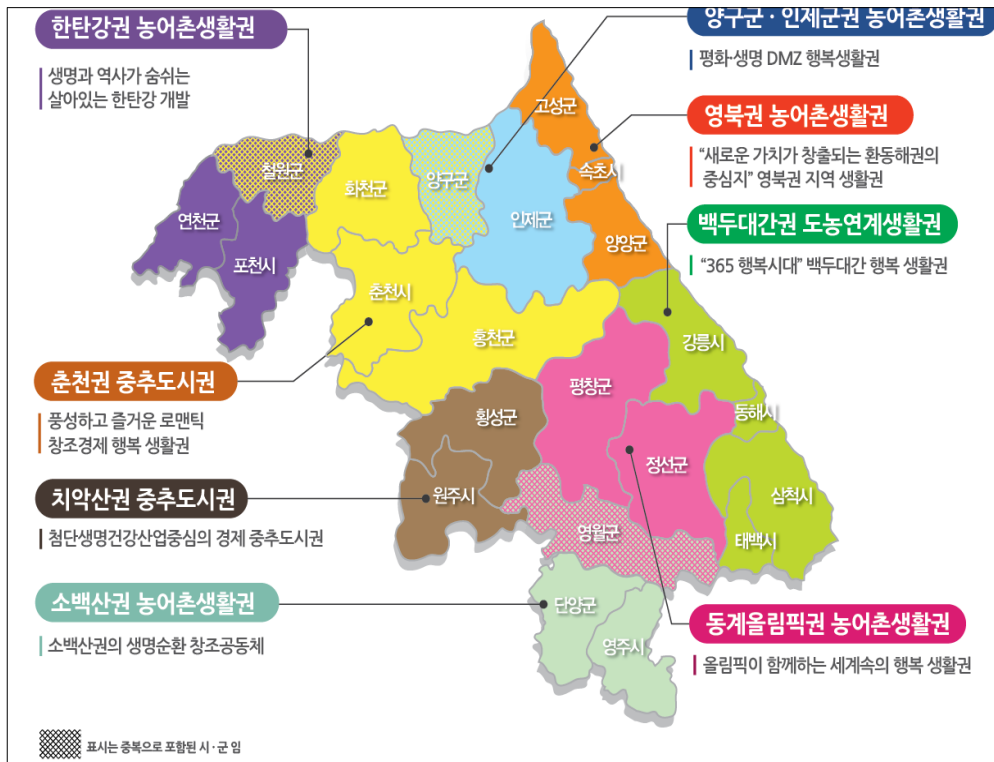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강원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중추도시 생활권(춘천권, 치악산권), 도농연계 생활권(백두대간권), 농어촌 생활권(영북권, 올림픽권, 양구-인제권), 시도 간 경계를 초월한 농어촌 생활권(한탄강권, 소백산권) 등 8대 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성과로는 연계협력사업(‘17년 4개 선정, 74.6억원) 및 새뜰마을 사업(‘17년 5개 선정, 81.3억원)을 통해 주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양양 간 동서고속도로 개통, 서울~강릉 KTX 개통 등을 통해 동북아시대 강원권 중심의 방사형 순환교통망을 확충하였다.

그림 3-10-2 강원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현황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강원도는 지역행복생활권을 형성한 시·군 간 연계협력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연계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사업을 매년 확대('13년 4개 사업 → '17년 12개 사업)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5년도에 연계협력 사업으로 선정된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 주최 '제1회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3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기존 서비스 대상지역을 확대(3개 군 → 5개 군)하였으며 해당지역의 임산부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추진한 새뜰마을 사업도 매년 사업을 확대('15년 11개소 → '17년 26개소) 추진하고 있다.

마을주민 주도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창출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13년도 85개소에서 2017년도 111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하였으며, 예비마을기업도 2017년도에 16개소를 추진하여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육성을 통한 소득 창출을 도모하였다. 또한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2015년도에 32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추가로 신규 지원자를 선정(50명)하고 '19년까지 연간 50명(총 2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 청·장년층을 귀농인으로 적극 유치해 젊은 미래농업인 확보, 농촌인구 고령화 감소 등 효율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2017년까지 5,818억 원을 투자하여 51개소를 완료하여 농어촌 지역에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14년 2,319동→'17년 2,780동)을 통해서는 석면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였다.

강원도의 남북분단 및 각종규제로 인하여 소외·낙후된 접경지역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성장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추진된 '동서녹색평화도로'는 접경지역의 열악한 접근성 개선으로 주민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평화누리길 조성을 통해서는 접경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에 커다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도로 23개소(6.501km), 공원 20개소, 주차장 10개소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춘천시 2개 지구(약사지구, 소양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해서는 2017년까지 2,510개소 5,303km를 완료하여 재해예방 및 도민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강원도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 추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특화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강원도 특성에 맞는 헬스케어,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도내 이전기업 및 향토기업의 신·증설 등 투자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고품질·안전한 농수산물 생산과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을 통해 강원도의 경쟁력을 제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력산업 육성사업은 2015년도부터 시작하여 2017년도에 192억 원 을 투자하였으며, 경제협력권 사업은 2014년 22억 원에서 2017년도에는 52개 과제에 총 249.5억 원 을 투자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17년 186개)을 추진하였으며, 일자리창출사업(84기업, 463명), 지역특화사업 10건(도 3건, 시·군 7건) 등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였다.

이와 함께 강원도형 일자리 3대 지원사업인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17년 418 억 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17년 60억 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17년 채용인원 477명)을 추진하였다. 또한 청년 희망일자리 버스원정대를 운영하여 13개 기업 131명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 26명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청년채용 확대사업을 통해 2015년도 167명, 2016년도 206명, 2017년도 221명으로 채용 인원이 확대되었으며, 전체 채용인원 중 지역 인재 채용 비율도 증가('15년 10.9%→'17년 11.6%)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의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지금까지('04년~'17년) 총 3,889백만 원을 투자하여 생산시설 203.9ha, 관정 147공을 설치, 29억원의 취급액('16년)을 달성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17년 52개소, 지원액 55,995 백만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04년~'17년) 32개소(완료 27개소, 계속 5개소)를 추진하는 등 강원도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향토산업은 지금까지('08년~'17년) 69,171백만 원을 투자하여 27개소(완료 21개소, 계속 6개소)를 진행하였으며 매출액('14년 72,589백만원 → '17년 86,656백만원) 및 고용창출도('17년 20명)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증가율('17년, 5%)이 지속적으로 유지·향상되었으며,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통해서도 수산물 생산·가공·전시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매출액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어촌자원복합산업 화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어촌체험마을 체험객수('14년 86,864명 → '16년 174,614명)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어업기반정비 사업을 통해 41개소('07년~'17년)가 설치 완료되었다. 이외에도 산림경영자원육성사업(사업참여자수 : '14년도 4,064명 → '17년도 35,000명), 산림휴양녹색 공간 조성사업(방문자수 : '14년 382,227명 → '17년도 855,049명)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을 위해 공헌하는 인간생명 중심의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및 농산어촌 초·중학교 학습여건 개선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강원도 자체사업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 사업을 통해 강원도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였다.

사업별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통해 작은학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17년 81개교),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73교), 작은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51교) 등을 추진하였으며 작은학교 교수 연구회 운영('17년 17팀), 지역협의 회 구성·운영(2회)을 추진하였다.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을 통해서 각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144명을 배치하였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초·중·고생)를 대상으로 국제문화 이해와 실용영어 습득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마인드 함양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320명을 선발하여 필리핀 어학연수 및 어학 봉사활동 참여를 지원하였다. 2004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강원청년지도자 과정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별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총 816명('04년~'17년)의 청년지도자를 양성하였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위탁 운영하였으며 지역평생교육 행복학습센터(12개 시·군)를 운영하여 근거리 평생학습 접근성 제고와 평생학습 소외지역 해소에 노력하였다. 또한 성인 문자해독 교육을 전담하는 비영리 민간 기관(12개 기관)에 도비 7천만 원을 지원하여 초·중등부 수준의 문해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3개소)을 지원하여 장애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복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특화자원 및 지역 문화자원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시설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영화관 및 도서관이 없는 시군에 작은 영화관 및 도서관을 조성하였다. 사업별로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지방문화산업 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2013년 이후 총 13개소(개관 7개소, 건립 중 4개소, 건립추진 2개소)의 작은 영화관이 추진되고 있으며, 방문자수도 2014년 58천 명에서 2017년 714천 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시·군별 균형 있는 문화시설 확충사업(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17년도 17명)하였으며 관람객 수도('15년 209천명→ '17년 832천명) 크게 증가하였다. 2017년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생활체육공원(2개소), 지방체육시설 지원(9개소),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4개소), 레저스포츠시설 지원(1개소) 등이 추진되었으며, 특히 동해시의 경우 2017년도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으로 278억원의 경제효과를 달성하였으며 인제군의 경우도 6개 대회와 2개 전지훈련 유치로 통해 약 19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였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2017년도 407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소재 유·무형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전승·활용으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문화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을 통해 삼척, 횡성, 영월, 철원, 양구 등 지금까지 총 7개소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최근 3년간('15년~'17년) 72,295명이 시설을 이용하였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통해서는 9개 사업이 추진되어 생태하천 복원 비율(21%)과 수혜주민의 75% 이상이 사업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는 등 수질개선으로 인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으며 자연과 인간이 어울리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치수사업 시행이 필요한 하천에 대한 체계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은 지금까지 총 66개소 227.1km, 5,514억원을 투자('17년 14개 시·군 22개소 14.2km, 669억원)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17년까지 2,550개소 2,025km), 고향의 강 조성사업('17년까지 6개소 12.6km, 716억원)등을 추진하여 자연 재해에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 환경을 조성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 · 의료

강원도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장애인의 복지선진화 및 지역·계층에 차별 없는 공공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인프라·서비스 확대, 농촌고령자를 위한 공동시설지원, 청소년시설 확충,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자활기업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구축(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및 복지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위해 지역별, 가구별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포괄보조 확대를 실시하였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면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시장과 일자리(서비스 제공인력)를 창출하기 위해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강원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인력 일자리 창출(17년 1,741명) 및 이용자 수(17년 13,525명), 만족도(89.1점) 등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치매 어르신·가족의 안심생활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18개 시군)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3,500명) 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600명) 등, 치매 전문인력 및 지역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격차 없는 평등 의료서비스를 구현하였다. 이와 함께 주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17년 18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 및 실무자 역량강화와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강원대병원 위탁),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홍보와 중독문제 조기선별 등을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운영(3개소, 춘천·원주·강릉)하였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등의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을 통한 보육 서비스 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이 35개소(국공립 확충 4개소, 증·개축 3개소, 개·보수 20개소, 장비보강 8개소)에서 추진되었으며,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응급의료기관(15개소),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17개소),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전용헬기 1대)등이 구축되었다.

제11장 충청북도

제1절 충청북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충청북도의 인구는 2017년 기준 159만명으로 2014년 158만명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56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상회한 연평균 6.2% 성장하였다. 1인당 GRDP는 3,501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도 5.6%로 전국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수출액은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이어간 기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수출액 연평균 증가율도 12.1%로 전국 연평균 성장률 0.1%를 크게 상회하였다. 재정자립도는 38.1%로 2014년의 33.6%에 비해 1.5%p 높아졌으나,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를 하회하였다.

표 3-11-1 충청북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충북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	1,565,248	1,635,555	-	4.9	49,791	52,666	56,122	-	6.2
인구(천명)	51,328	51,529	51,686	51,779	0.3	1,579	1,584	1,592	1,594	0.3
1인당 GRDP (만원)	2,927	3,068	3,192	-	4.4	3,142	3,299	3,501	-	5.6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	526,757	495,426	573,694	0.1	14,196	15,210	16,004	20,001	12.1
취업자 (천명)	25,897	26,178	26,409	26,725	1.1	823	839	845	861	1.5
재정자립도 (%)	50.3	50.6	52.5	53.7	2.2	33.6	34.8	35.2	38.1	4.3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지역산업현황

충청북도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51.9%, 제조업 43.7%, 광업·농림어업 4.4%로 나타났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식료품’,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등이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식료품’이 15.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금속가공제품’ 등 순이었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가 각각 15.8%, 19.0%로 나타나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금속가공제품’ 등 업종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금속가공제품’, ‘식료품’ 등이 증가한 반면,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은 감소하였다. 종사자수는 ‘식료품’, ‘금속가공제품’ 등이 증가하였고, 생산액은 ‘전기장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증가한 반면,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3-11-2 충청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14.4	13.3	12.5	14.5	14.0	12.4	15.0	14.7	13.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8.0	7.0	8.7	7.7	6.4	9.1	7.6	7.0	10.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2.4	3.4	4.2	2.6	3.6	4.5	2.5	3.7	4.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2.8	9.7	7.2	12.7	10.5	6.8	12.3	9.9	6.7
비금속 광물제품	7.3	5.2	5.2	7.2	4.9	5.3	7.2	5.4	5.0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0.9	6.3	4.4	11.6	7.0	4.7	12.2	7.6	5.0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5.6	20.7	23.2	4.9	16.6	20.9	4.6	15.8	19.0
전기장비	6.8	7.9	8.7	6.6	10.6	10.4	6.3	9.6	12.2
자동차 및 트레일러	6.2	7.4	8.2	6.6	7.2	7.4	6.7	7.1	6.7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1.5%, 25.0%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 비중이 6~8%대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종사자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이 증가한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감소하였다. 매출액 기준은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증가한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은 감소하였다.

표 3-11-3 충청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5	2.9	9.1	1.2	2.0	5.3	1.3	2.6	7.2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	2.1	4.4	1.6	2.6	9.3	1.2	2.2	8.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9	9.3	15.7	10.2	6.2	10.2	12.4	8.5	16.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6.3	7.8	9.0	6.5	8.3	8.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8	16.9	11.4	4.7	12.5	8.5	5.4	15.7	10.7
교육 서비스업	16.1	10.4	7.9	15.0	25.0	23.8	14.3	8.8	6.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5	32.8	32.2	11.8	23.1	18.5	13.8	31.5	25.0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2.8	8.9	7.4	10.1	5.8	4.3	12.5	8.1	6.0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35.2	16.7	11.8	39.1	15.0	11.1	32.7	14.4	11.3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3. 혁신활동 현황

충청북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2.1조원, 연구개발인력 17,348명, 연구개발조직수 1,243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조직수 모두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연구개발인력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비는 연평균 29.6%의 높은 증가율로 2년 전에 비해 8.5천억 원이 증가하였다. 반면 연구개발인력은 같은 기간 동안 1,500여명이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는 크게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인력과 연구개발조직수는 감소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1.0%p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인력은 0.3%p, 연구개발조직수는 0.1%p 감소하여 각각 3.0%, 2.8%, 3.2%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3,498건이며, 등록은 1,670건으로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는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은 특허출원 및 등록 모두 2%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는 0.1%p, 등록건수 0.1%p 증가하여 각각 2.1%, 2.0%로 나타났다.

표 3-11-4 충청북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1,253,947 (2.0)	1,379,741 (2.1)	2,105,365 (3.0)	29.6
	연구개발인력	18,872 (3.1)	16,910 (2.7)	17,348 (2.8)	-4.1
	연구개발조직수	1,052 (3.3)	1,233 (3.3)	1,243 (3.2)	8.7
특허	출원	3,226 (2.0)	3,440 (2.1)	3,498 (2.1)	4.1
	등록	1,854 (1.9)	1,431 (1.9)	1,670 (2.0)	-5.1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충청북도의 실질경제성장률(2016년 기준)은 5.77%로 전국평균 2.83%에 비해 무려 2.94%가 높아 전국 2위를 기록하였고, 전국대비 충북경제는 2010년 3.12%에서 2016년 3.5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률(2018년 3월 기준)은 전국 평균 66.1%에 비해 2.7%가 높은 68.8%, 실업률(2018년 3월 기준)은 전국 평균 4.5%에 비해 1.5%가 낮은 3.0% 나타나고 있는 등 각 분야에서 전국대비 충북경제 4% 실현에 다가서고 있다.

충북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바이오산업, 태양광·에너지신산업, 신교통·항공산업 등의 6대 신성장산업과 관광·스포츠·무예산업,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등의 3대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성장거점을 바탕으로 연계성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국내 5대 공항으로 입지를 굳힌 청주국제공항 및 국내 주요 거점철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오송역의 발전으로 충북이 글로벌 신교통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청주국제공항 노선 다변화 대책 마련 및 세종, 대전, 충남 등 주변 도시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한 상생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의 전체 인구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청주시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2.0%(18년 1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청주권과 비청주권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생활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농촌생활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관광객수는 2014년 11,505천명에서 2017년 23,735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및 무예올림픽 창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 등을 추진하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도 충북을 명실상부한 세계무예의 성지로 키워나가고,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을 한중 교류의 교두보로 자리매김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충북의 합계 출산율은 1.36명(16년 기준)이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15.9%(18년 1월 기준)로 나타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지역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복지지출 부담 증가 및 지역경제 활력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발굴·추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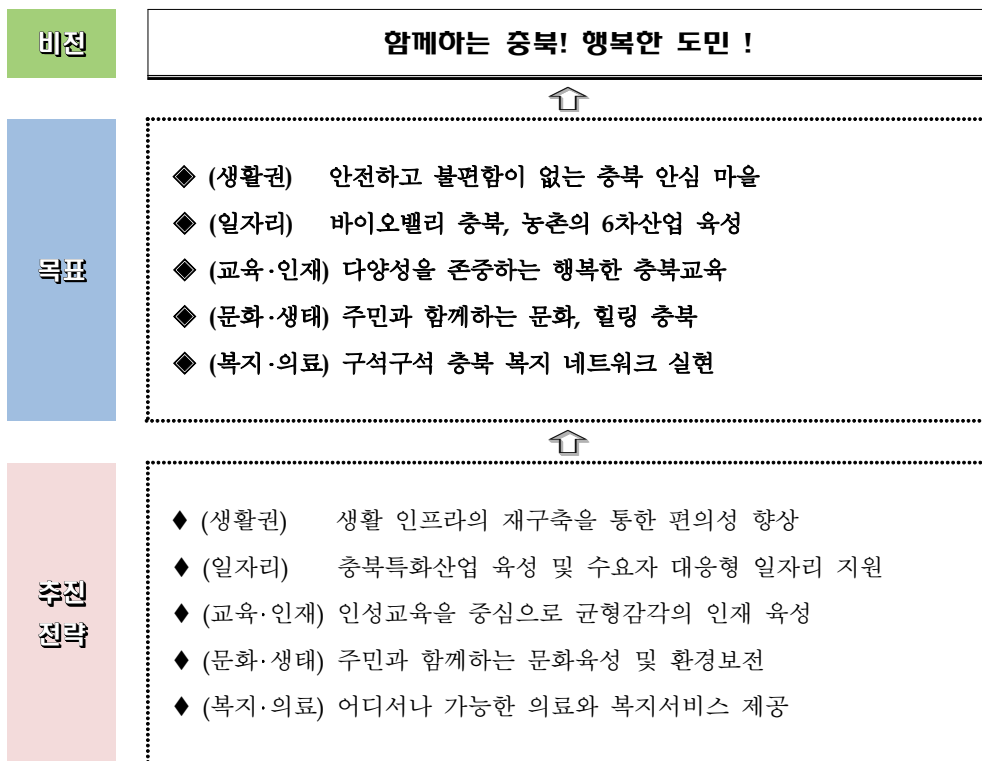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충청북도는 163만 도민(외국인 포함)과 함께하는 도정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최고의 가치인 도민행복시대를 실현해 나감은 물론, 신수도권시대, 영충호시대의 리더로서 충북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국민 화합시대를 충북이 선도하고자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발전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는 충북 안심 마을’, ‘바이오밸리 충북, 농촌의 6차 산업 육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힐링 충북’, ‘구석구석 충북 복지 네트워크 실현’이라는 5대 목표와 도정운영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림 3-11-1

충청북도의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충청북도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발전비전 및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생활 인프라의 재구축을 통한 편의성 향상’, ‘충북특화산업 육성 및 수요자 대응형 일자리 지원’,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균형감각의 인재 육성’,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육성 및 환경보전’, ‘어디서나 가능한 의료와 복지서비스 제공’의 5가지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고, ‘도민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충북경제 전국대비 4% 달성’을 2017년 성과목표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 전략인 ‘생활 인프라의 재구축을 통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세부 시책으로 ①지역 주도의 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 및 도시 활동의 역동성 제고, ②안전하고 균형 있는 생활 인프라 확충, ③국토교통망 X축 구축을 통한 신수도권 시대의 교통·물류 중심지 도약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는 충북 안심 마을을 조성하고자 한다.

두 번째 전략인 ‘충북특화산업 육성 및 수요자 대응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①세계적 바이오밸리 조성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충북 경제 4% 조기달성, ②농촌의 6차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의 증대기회 마련 등의 세부 시책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바이오밸리 충북, 농촌의 6차산업 육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세 번째 전략인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균형감각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세부시책으로 ①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대학 우수인재 양성, ②평생교육 도시 여건 마련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고자 한다.

네 번째 전략인 다함께 누리는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육성 및 환경 보전’을 위해 ①지역에 특화된 문화 자원을 이용한 문화·관광 기반 구축, ②지역 주민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③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세부시책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주민 생활 속의 문화·힐링 충북을 조성하고자 한다.

마지막 전략인 사각지대 없는 ‘어디서나 가능한 의료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시책으로 ①주민 맞춤형 복지 추진을 통한 모범적인 충북 건설, ②서비스 개선을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구석구석 충북 복지 네트워크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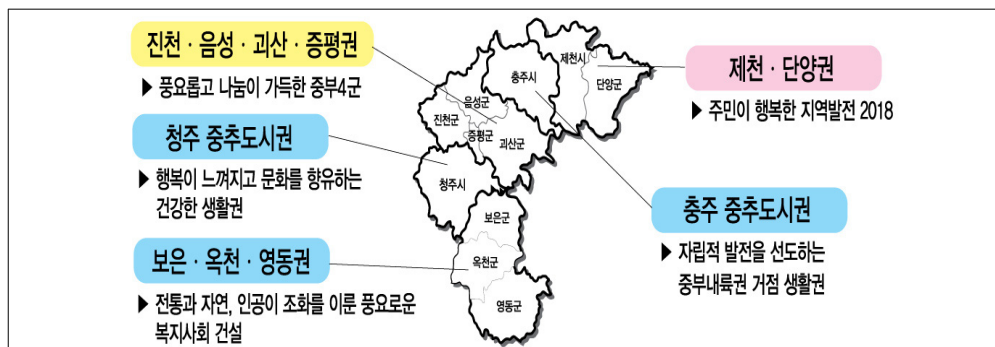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지역행복생활권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5+3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14년 2월 14일), 청주권 등 5개 생활권별 MOU 체결을 완료(‘14년 3월 11일)하고, 충청북도 발전계획 수립(‘14년 8월) 및 도내 5개 생활권별 시·군 발전계획 수립(‘14년 12월)을 완료하였다. 또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지역발전, 일자리, 교육·문화, 복지 등 8개 분야 민·관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충청북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14년 4월 7일)하여, 도의 발전 및 생활권 관련 협의·조정 기능 및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생활권협의체 공동협약식(‘15년 6월 25일)을 개최하였다.

그림 3-11-2 충청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선도사업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6건, 39,180백만원을 투입하여, 오감만족 새싹들의 체험교육(2,697백만원), 녹색치유 탐험챌린지 학교 운영(1,573백만원), 힐링 SONG 의료관광 연계프로젝트(146백만원) 등을 추진하

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새뜰마을 사업은 총 18건, 26,153백만원을 투입하여, 제천시 백운면 운학2리(1,070백만원), 보은군 산외면 어온리(936백만원), 옥천군 안내면 방하목리(1,184백만원),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1,628백만원) 마을에 슬레이트 지붕개량, 상수도 보급, 주택정비 등을 추진하였다.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해 추진하는 창조지역사업은 총 14건, 9,208백만원을 투입하여, 자전거 타고 자유학기교(954백만원), 300년 찬우물 소나무숲 자연치유 명소화 프로젝트(994백만원), 농촌 휴면공원 창조적 콘텐츠 재생사업(450백만원) 등을 추진하였다.

표 3-11-5 선도사업 연계·협력 프로젝트 현황 및 성과(2017 신규)

(단위 : 백만원)

권역	사업명	사업비	주요성과
중부권	오감만족 새싹들의 체험교육	2,697	새싹들의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교육장 조성
북부권	녹색치유 탐험챌린지 학교 운영	1,573	코리아 탐험·도전 아카데미 및 탐험챌린지 학교 조성 등
대전권	힐링 SONG 의료관광 연계프로젝트	146	의료관광 인프라, 힐링체험 관광체계 고도화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충청북도는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및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위해 귀농귀촌 지원 5개년 종합계획(‘17년~’21년)을 수립하였고, 상생대책 추진단을 운영하여, 귀농귀촌인 31,052명을 유치하였다. 또한 현장포럼 38개소, 충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 1개소 운영 등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한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를 수행하였고,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017년도 계속 35개, 신규 32개 지구 추진,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2017년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13,270회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주도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상수도 시설 확충,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6,399백만원을 투입하여 41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여 하수도 보급률 85.9%를 달성하였고,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을 통하여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2015년 59.8%에서 2017년 73.6%로 증가하였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사업으로 7,717동을 지원하였고, 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사업으로 신규 4건 포함하여 2015년부터 총 18건을 추진하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집수리 등 주민이 실 거주하는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었다.

아울러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150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75,821회를 운행하여 99,928명이 이용('16년)하였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저상버스 15대, 특별교통수단 8대를 추가 도입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를 증진하였다. 2017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12개소 등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21개소 추진, 위험도로 18개소('16~'17년) 구조개선을 통하여 교통사고 취약 지역의 근본적인 위험요인 개선으로 보행자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하였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였다.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부문에서는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수가 2014년 170만명에서 2017년 257만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운항편수 또한 15,825편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고속철도 오송역 이용객은 2014년 2,912천명에서 2017년 6,584천명으로 증가하는 등 신수도권 시대의 교통·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은 상해, 연길, 블라디보스토크 등 중국 5개, 러시아 2개 등 국제 정기노선을 7개 확대하였다. 일본, 대만 등 14개 노선을 개설하여 국제노선 다변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고속철도 오송역은 수서고속철도(SRT)가 개통됨에 따라 정차횟수가 66.1% 증가하였다. 앞으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중부고속도로 확장, 제천~영월(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 세종~청주(동서4축) 고속도로 건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천안~청주공항복선전철사업 등도 원활히 추진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망 X축 구축을 통한 신수도권 시대의 교통·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충청북도는 세계적인 바이오밸리 조성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충북 경제 전국대비 4% 구현 및 농촌의 6차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의 증대 기회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 대표 산업 육성 부문 관련해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주력산업육성) 사업으로 바이오의약, 반도체, 태양광, 전기전자부품, 동력기반기계부품 등을 5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하여, R&D형 과제 47개, 비R&D형 과제 19

개, 거점기관운영지원사업 5개 과제 등 총 71개의 과제를 추진하여 407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다. 경제협력권사업으로는 화장품뷰티, 이차전지, 의료기기 등 3개 협력분야에 비즈니스협력형 과제, 지역주도형 과제 등 총 40개 과제를 선정하여 153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는 2017년 836명, 취업률 136%를 나타냈고,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 106,51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오송화장품 뷰티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충북이 K-뷰티의 중심지임을 입증하였는데, 2017년에 참가기업 205개사, 바이어 1,238명, 수출계약 1,273억원을 창출하였다. 그 밖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일자리 454명, 사회적기업육성 사업으로 237명을 창출하였고, 그 중 취업률 68.4%를 나타냈다. 전국 최초 생산적 일자리사업으로 5,810개소에 131,27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은 2014년 31,810천원에서 2016년 33,172천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수출실적은 2014년 142억 달러에서 2017년 20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산업단지 고도화를 통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2016년 11개, 2017년 13개 산업단지에 진입도로를 추진하였고, 지역거점조성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산업단지 공업용수가동률은 2017년 62%, 산업단지 분양대상면적 대비 분양률은 96%를 나타냈다. 진천 산수 산업단지 등은 외국기업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25개사, 16,604억원)하였고, 115개소(72,333천㎡)에 투자유치 촉진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지역 확산 부문에서는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지원사업으로 정부부처 및 지역 유관기관, 전담기업(LG) 간의 유기적인 협업관계를 완성하는 등 창조적인 산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하였고, 취업박람회, 잡매칭데이, 청년 채용의 날 등의 기획을 통하여 315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청년 고용을 촉진하였다.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부문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으로 SB플라자는 건립 착공에 들어갔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우수 연구개발기관 7개 업체 유치 및 원형지 개발사업 준공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인프라 확충 노력을 추진하였다.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가의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48.3%가 증가하였고, 시군 특화품목의 생산, 가공·체험 상품개발 등 종합적인 융복합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는 2017년 D등급 저수지를 10개소로 감소시켜 재해위험도를 낮췄고, 농촌체험휴양마을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방문객수는 전년 대비 130%(876천명), 매출액은

전년 대비 31.1%(6,316백만원)가 증가하였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2017년 전체업체의 47%가 매출이 증가하였고,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으로 향토산업육성 1개소 및 친환경채소 가공식품산업과 사슴산업광역클러스터를 육성하였고, 이를 통하여 참여농가 농산물 매출은 전년대비 42%가 증가하였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의한 2017년 수산식품 생산량은 8,737톤, 판매액은 774억원, 어업기반 정비사업에 의한 2017년 내수면 생산량은 2,620톤, 소득액은 227억원을 나타내 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산림 관련해서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으로 방문객수가 2015년 15,894명, 2017년 15,954명을 나타냈고,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도시숲, 수목원 및 박물관, 생태숲, 숲길 조성 및 관리 등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수혜인원이 2017년 462천명에 이르렀다. 기본 임도밀도는 2015년 2.82m/ha에서 2017년 2.95m/ha로 증가하였고, 임도이용객 수는 2017년 52,000명으로 나타났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6개 시·군 116개소에 백두대간 지역 임산물 저장·생산시설 조성을 완료하였고, 산림 관련 사업을 통하여 산림복지공간 확충 및 산림자원을 통한 소득 증대 기회를 확대하였다.

한편 충북은 생산액 증가('20년 2조 2천억원), 화장품 산업 생산액 증가('20년 5조 3천억 원), 바이오 수출 선두 기업 육성(수출액 '20년 5,000억원), 글로벌 화장품기업 경쟁력 강화(수출액 '20년 1조 3,918억원)를 주요 목표로 세계적 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하여 도정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바이오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오송임상시험 센터를 건립('16~'19년)하고, 고위험병원체특수연구센터('15년 12월),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16년 4월) 등 바이오메디컬 시설을 건립하였다.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는 공정률 98%를 나타내고 있고, 바이오밸리 인력양성 산학융합지구는 2015년 3월 준공하였다. 오송 생명과학단지에는 61개 기업이 입주하여 본격 가동 중이고, 제2생명과학단지도 59개 업체가 입주 계약을 한 상태이다. 또한 오송은 국가 바이오 인프라의 심장부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소의 보건의료 국책기관, 국립인체자원은행 등 국가바이오메디컬 시설 등도 입지하고 있다.

‘세계적인 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해 충주는 당뇨바이오 특화도시를 선포('15년 5월)하였고 제천은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을 구축 중('14~'18년, 181억원)이고,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개최하여 110만명이 관람하였다. 옥천은 351,661㎡에 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새로운 100년 먹거리를 위하여 화장품 뷰티산업을 육성 중인데 해외 바이어 초청 화장품·뷰티 무역상담회를 개최(3회)하였고,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를 2016년 12월 완공하였다. 바이오코리아, 바이오페스티벌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화장품 수출 진흥을 목적으로 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그 밖에 유기농 특화도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는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15년 9월 108만명, 264개사 참여, 학술행사 19회 개최, 유기농 3.0 괴산 선언)하였고, 친환경농업지구(단지) 740개소(660억원)를 조성하고 유기가공업체 85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6,499호를 지원하였고, 충북 유기농업연구소 및 유기농생태체험관을 건립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학교기업 지원, 대학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특성화 사업단 기반 구축, 학사구조 개편, 정원 감축 등을 추진하였고,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을 위해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위, 비학위 통합교육과정 개발, 블록식 다학기제를 도입·운영하였다. 또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사업으로 3개 대학에 275백만원을 지원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과 대학 간 맞춤형 인재양성 7,116명, 기술지도 121건, 기술이전 121건을 추진하였다. 우수인재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현장실습 이수 학생비율은 40%를 나타냈고, 기업 맞춤형 창의인재양성을 통한 취업 연계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특성화교 26개교 중 2016년에는 학교기업 8교, 2017년에는 9교를 선정하였고, 2016년 학생 128명, 2017년 161명을 선정하여 산업인력수요 맞춤형 취·창업 역량 강화 및 창의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역 여건과 산업수요에 맞는 대학 체질을 개선하고 현장 적합성 높은 전문기술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선도모

델 발굴·확산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100세 시대 주민을 위한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대학 중심의 평생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016년에서 2017년까지 대학과 연계된 평생교육지원 6개교, 평생학습중심 대학 7개교 지원을 하였고, 639명 이수, 194명 자격취득, 6명 취업이라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시·군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 11개 시·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하였고, 1,703명 이수, 383명 자격 취득, 36명 취업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제2차 학습기회를 보장하였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지역에 특화된 문화·생태 자원을 이용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건강한 생태·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다. 문화역량 강화 및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영동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청주 문화도시 조성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청년학당, 별별하이틴, 문화 10만인 클럽, 시민문화네트워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2017년 체육시설 반경 5km 안에 107.3%의 주민이 시설을 이용하였고, 국제·국내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 이벤트 997건을 유치하였다. 또한 '장애인 먼저'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제 98회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에서는 각각 종합 2위 및 1위를 달성하는 등 성과를 나타냈다. 그 밖에 도립교향악단 시군순회 및 찾아가는 연주회 281회, 도 지정예술단 문화소외지역 순화공연 140회, 저소득층 예술공연 무료관람 지원 148천명, 찾아가는 문화 활동 319회 등을 실시하였다.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지역관광산업을 육성하였다.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충주 국제수변 레포츠단지 조성 등 다양한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통하여 관광객은 2014년 11,505천명에서 2017년 23,785천명으로 증가하였다. 2017년 9월 개최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K-Pop 공연, 한중 대학생가요제, 한중문화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페스티벌 기간 동안 3만 5천여 명이 참석하였고, 2016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는 17개 종목, 81개국, 1,940여 명

이 참가하였고, 2017년 11월,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가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았다. 그 밖에 충북 지정축제 6개를 선정·지원하여 2016년 최우수 축제로 음성품바 축제, 우수로 단양온달문화축제, 영동포도축제 등을 선정하였고, 청남대는 관람객 1,000만명을 돌파함으로써 세계적인 대통령 테마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다.

더불어 생태·자연환경 보존 및 활용을 위해 2016년도 6개소, 2017년도 3개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생태놀이터 2개소를 조성하였다. 충주 동수공원 및 청주에 자연마당을 조성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사업으로 옥천 자연생태공원 1개소 및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괴산 대제산업단지 완충녹지 2개소를 조성하였다. 2017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76,374백만원을 투입하여 29지구에 지방하천 수해상습지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하였고, 2,093백만원을 투입하여 미호천, 달천 등 국가하천 5개소에 310km에 대한 유지 관리를 수행하였다. 그 밖에 백두대간(정맥) 생태축 연결 복원사업으로 도로 개설로 훼손, 단절된 말티재 복원을 위한 사업 착공에 들어가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였고, 2017년에는 백두대간 정맥(말티재) 복원을 완료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구석구석 사각지대 없는 주민 맞춤형 복지·의료서비스 실시 및 출산에서 노후까지 모두가 행복한 감동 복지·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등을 통해 2017년 1,702명에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14,247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또한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만성화 예방을 실시하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111,966가구, 정신질환 사례관리 78,008명을 실시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일깨워 주었다. 11개 시·군 24명 신규 복지직 공무원을 충원하고, 시·군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수행 중인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단계적인 읍면동 이관을 시작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하였다. 여성 및 가족을 위해서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으로 '17년 40,880명에게 지원하였고, 가족친화 인증기관을 2017년 189개소로 확대·지원하였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을 통해 12개 센터에 언어발달지도사 14명, 이중언어지도사 8명을 배치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는 9988 행복나눔미 사업으로 2017년 56억원을 투입하여 행복나눔미 230명을 구성하였고, 경로당 3,443개소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와 중풍을 예방하였다. 장애인 대상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14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아동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2개소를 신설하고, 취약계층 아동 중 48.68%의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하여, 아동에 대한 문제 해결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청소년 대상으로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10개 시·군, 12개소에 1,838백만원을 지원하여 49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으로 청소년 지도사 19명을 고용하였고, 762,155명의 청소년이 시설을 이용하였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분만취약지역 4개 의료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13,996명의 산모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였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육성 사업을 통하여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의료기관 10개소에 지원을 하였고, 이를 통해 취약지역의 의료복지환경 향상에 기여하였다.

제12장 충청남도

제1절 충청남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충청남도의 인구는 연기군의 세종시 편입으로 감소하였다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 기준 212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117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상회한 연평균 5.6% 성장하였다. 1인당 GRDP는 4,987만원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울산광역시에 이은 두 번째로 높았으나, 연평균 성장률은 2.5%로 전국 성장률을 하회하였다. 수출액은 2016년 662억 달러로 직전해 보다 9억 달러 감소한 뒤 2017년 급증하여 79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39.3%로 2014년의 35.6%에 비해 3.7%p 높아졌으나,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를 하회하였다.

표 3-12-1 충청남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충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	1,565,248	1,635,555	-	4.9	105,002	111,265	117,127	-	5.6
인구(천명)	51,328	51,529	51,696	51,779	0.3	2,062	2,078	2,097	2,117	0.9
1인당 GRDP (만원)	2,927	3,068	3,192	-	4.4	4,744	4,873	4,987	-	2.5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	526,757	495,426	573,694	0.1	65,112	67,123	66,211	79,842	7.0
취업자 (천명)	25,897	26,178	26,409	26,725	1.1	1,163	1,199	1,226	1,140	-0.7
재정자립도 (%)	50.3	50.6	52.5	53.7	2.2	35.6	35.2	38.7	39.3	3.4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충청남도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45.3%, 제조업 50.3%, 광업·농림어업 4.4%로 나타나 17개 시·도 중 울산(63.1%)에 이어 두 번째로 제조업 비중이 높았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등이 지역 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수·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각각 14.7%, 17.4%로 가장 높았다.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가 21.4%로 높았다. 이 외에도 '기타 기계 및 장비', '식료품', '금속가공제품' 등 업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자동차 및 트레일러'는 사업체수·종사자수·생산액 모두 비중이 증가한 반면,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는 사업체수·종사자수 비중이 감소하였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가 다소 증가하였으며, 종사자수·생산액은 '기타 기계 및 장비'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컸으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차 금속'의 생산액은 감소하였다.

표 3-12-2 충청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11.7	7.4	4.5	12.2	7.8	5.0	11.8	7.7	5.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6.1	5.5	16.0	6.2	5.6	13.0	6.1	5.8	13.5
비금속 광물제품	6.7	4.3	2.6	6.8	4.6	2.9	6.3	4.8	3.0
1차 금속	4.8	6.5	10.2	4.9	6.9	9.8	4.8	6.7	9.8
금속가공제품(기계·기구 제외)	11.1	6.3	3.2	10.8	6.7	3.9	11.0	6.8	3.9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4.1	18.7	21.1	3.9	16.8	21.2	3.7	15.7	21.4
전기장비	5.2	7.1	5.1	5.1	7.2	5.3	5.5	6.5	4.7
기타 기계 및 장비	12.6	9.6	5.1	12.6	9.5	5.5	13.5	10.3	6.4
자동차 및 트레일러	13.5	16.5	12.7	13.9	17.0	13.9	14.7	17.4	14.1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3.0%, 28.5%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 비중이 6~8%대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증가한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매출액 기준은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증가한 반면,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감소하였다.

표 3-12-3 충청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3	3.0	9.0	1.0	2.0	4.2	1.2	2.8	7.1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	1.5	3.5	1.7	2.4	8.6	1.2	1.3	2.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9	8.6	16.4	11.0	5.6	9.9	13.3	8.0	12.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6.1	6.9	8.5	6.6	7.3	8.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6	16.2	12.7	4.6	12.5	8.4	5.4	14.9	11.7
교육 서비스업	14.3	10.3	6.8	14.1	25.5	25.9	13.1	9.1	7.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1	34.6	29.1	12.5	23.9	18.5	14.9	33.0	28.5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1.5	7.5	8.7	9.0	4.8	5.1	11.1	6.9	7.7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36.1	18.4	13.9	40.1	16.3	10.9	33.2	16.8	13.9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3. 혁신활동 현황

충청남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3.0조원, 연구개발인력 23,922명, 연구개발조직수 1,462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조직수는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특히 연구개발비는 대부분 광역시·도가 감소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연평균 13.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는 증가, 연구개발인력은 변화가 없었으며, 연구개발조직수는 감소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6%p 증가하여 4.3%가 되었으며, 연구개발인력은 3.8%, 연구개발조직수는 0.3%p 감소하여 3.7%로 나타났다. 광역도 중에서는 경북도, 경남도와 함께 높은 혁신활동 수준을 보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6,578건이며, 등록은 3,008건으로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는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은 특허출원 및 등록은 3.7~4%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 모두 전국대비 비중 변화가 없었다.

표 3-12-4 충청남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2,323,791 (3.7)	2,283,743 (3.5)	2,980,142 (4.3)	13.2
	연구개발인력	22,828 (3.8)	24,353 (3.9)	23,922 (3.8)	2.4
	연구개발조직수	1,288 (4.0)	1,470 (3.9)	1,462 (3.7)	6.5
특허	출원	6,473 (4.0)	6,309 (3.8)	6,578 (4.0)	0.8
	등록	3,598 (3.7)	2,996 (3.9)	3,008 (3.7)	-8.6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충청남도는 지리적, 산업적, 환경·문화적 관점에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먼저 지리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가 교통 네트워크의 중심지이며, 대산항·당진항·보령항 등 동아시아 및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동북아 경제권의 급성장과 중국과의 교역량 증가로 인해 서해안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환황해권 교류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다.

산업적 관점에서 충남은 세계 최대의 디스플레이 집적지이자, 국가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대산석유화학단지, 일관제철을 갖춘 철강산업집적지 등 국가 주요 기간산업이 집적화되어 있다. 환경·문화적 관점에서 백제문화, 기호문화, 내포문화 등의 풍부한 지역문화자원과 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태자원(습지, 사구, 갯벌 등)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서해안 관광자원이 풍부해 문화, 휴양 등 다양한 관광활동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관광의 중심지로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충남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리적 관점에서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떠오른 중국 등 신흥아시아국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시장 잠식 및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 등으로 지역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충남의 가장 큰 강점인 지리적 중심성을 살려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항만·내륙 교통체계를 연계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적 관점에서는 충남의 특화산업 및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창의적인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 및 산업근로자를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여 많은 우수한 인적 자원이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제조업 중심에서 R&D 중심의 기업으로 변화하여 IT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융복합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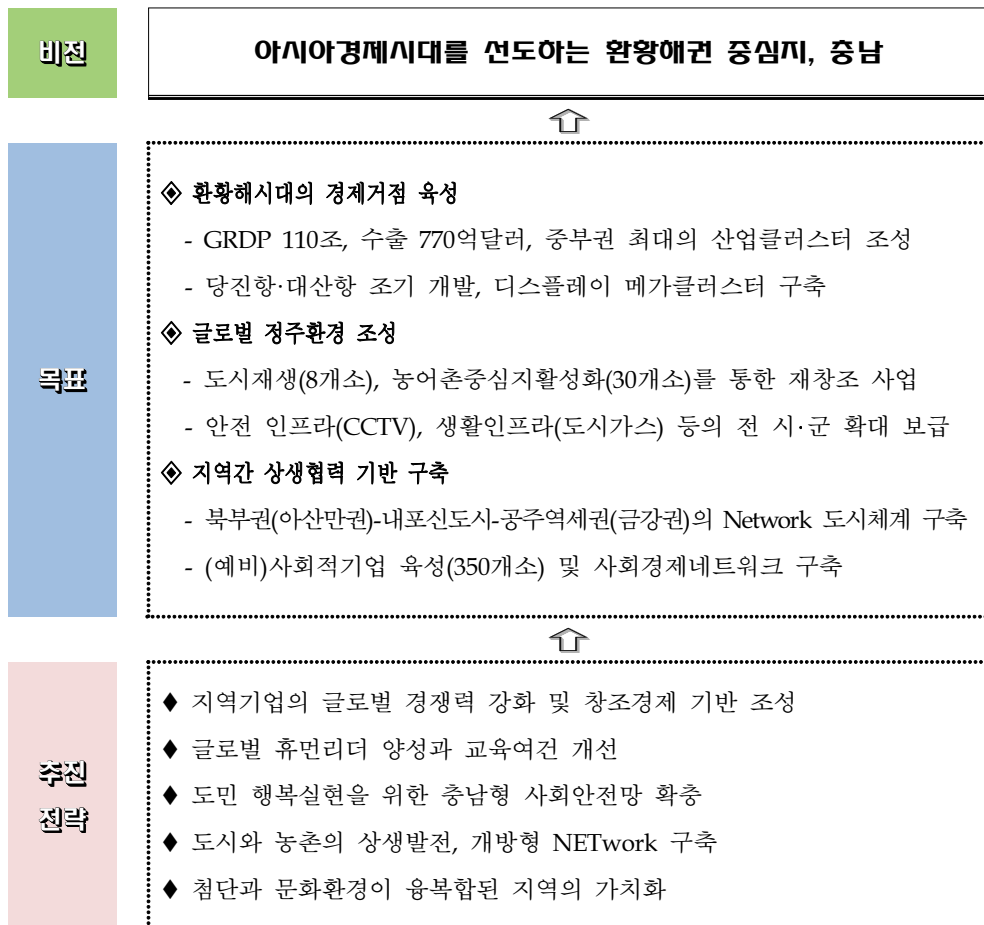
환경·문화적 관점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백제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충남'을 만들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남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관광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충청남도는 ‘아시아 경제시대를 선도하는 환항해권 중심지, 충남’으로 발전비전을 설정하였다. 발전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충남의 지리적 이점과 산업적인 이점을 고려하여 환항해시대의 경제 거점 육성,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지역간 상생협력 기반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림 3-12-1 충청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충청남도의 발전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창조경제 기반 조성’, ‘글로벌 휴먼리더 양성과 교육여건 개선’, ‘도민 행복실현을 위한 충남형 사회안전망 확충’,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개방형 NETwork 구축’, ‘첨단과 문화환경이 융복합된 지역의 가치화’ 등 5가지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신성장 동력 및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거점지역으로 충남을 자리매김하여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자원에 기반한 관광 및 문화유산 개발을 추진한다.

‘글로벌 휴먼리더 양성과 교육여건 개선’의 구체적인 세부전략은 지역여건에 맞는 산학협력 선도·특화산업 거점대학 육성 및 특성화를 지원하고, 지역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및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충남 소재 대학교육 역량강화를 통한 실용중심의 실력있는 인재를 배출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반 확대 및 다양한 평생교육 인프라를 확충한다.

‘도민 행복실현을 위한 충남형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마련한다. 또한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계층별 복지서비스 구축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의료부분에서는 지역거점 의료시설의 원격진료 시스템 확충 및 농촌시설간의 연계를 확대한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개방형 NETwork 구축’의 세부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생활권별 비전공유와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충남의 발전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지역주도의 생활기반형 사업을 통해 주민체감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권 내 또는 생활권 간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망을 확충한다.

‘첨단과 문화환경이 융복합된 지역의 가치화’ 부문에서의 세부전략은 지역문화관련 시설의 생활권 확충 및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 내 문화·생활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간 연계형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도 이 부문의 중요한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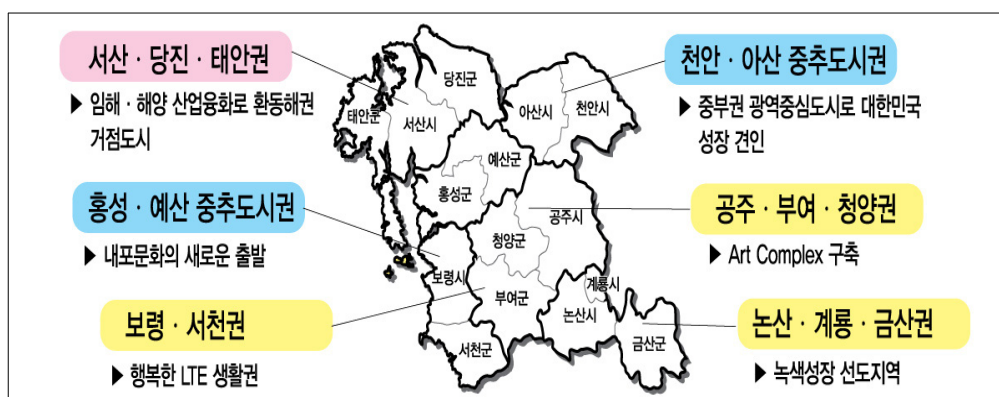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충청남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중추도시생활권으로 천안·아산과 홍성·예산, 도농연계생활권으로 서산·당진·태안, 농어촌생활권으로 공주·부여·청양, 논산·계룡·금산과 보령·서천의 6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남의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2014년 7월 구성된 ‘생활권발전협의회’는 2017년 12월까지 총 16회, 생활권 발전 및 활성화 관련하여 워크숍 11회, 회의 및 토론회 4회, 협의체협약식 2회 개최하였다.

그림 3-12-2 충청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지역행복생활권 주요 선도사업으로 천안·아산 생활권은 동반성장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사업, 천안아산 버스정보시스템 연계강화 구축을, 홍성·예산 생활권은 내포 창조관광 기반구축사업, 홍성·예산 통하는 생활가로 개선사업,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사업 등 생활권 내 연계협력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서산·당진·태안 생활권에서는 서해안안전센터 설치사업,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조성 운영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공주·부여·청양 생활권은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

사업을, 논산·계룡·금산 생활권은 발효미생물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령·서천 생활권은 FunFun와봐유 체험관광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두 지역을 연계하는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지역생활권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농어촌이라는 정체성에서는 홍성·예산 생활권을 중심으로 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프로그램을 9개소 운영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귀농·귀촌인 종합상담(13,476건)을 수행하였다. 마을 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촌인의 적응기간 동안 임시거주시설인 귀농인의 집(36개소, 96가구 이용)을 설치·운영하였다.

홍성·예산 생활권은 연계협력사업으로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사업’을 연계협력으로 수행하여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서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농업을 통해 삶의 철학과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치유농업의 선진지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 처리시설확충사업은 2017년에 소각시설설치를 3개소(부여·금산·태안) 설치하였고, 예산에 비위생 매립지를 정비하였고, 서산에는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 사업소를 설치하였다. 또한 소하천 정비(2017년 49지구 정비, 3조 6,044억원)로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였다.

국가물류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서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49면)를 2016년에 준공·완료하였고, 서천·장항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74면)를 2017년에 준공·완료하였으며, 아산시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완료 상태에 있다.

주차장환경개선지원사업은 홍성, 태안에 주차장 조성사업(홍성 86면 완료, 150면 추진 중; 태안 134면 추진 중)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은 총6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였으며, 2017년말 누계합계는 총 107대로 법정대수 131대비 도입률 81.7% 달성하였다. 위험도로개선사업은 6개소(총 123,200백만원)중 1지구 사업을 준공하였고, 5지구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교통사고 잦은곳,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도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2017년 20개소(준공 17개소, 공사중 1개소, 설계완료 2개소)에서 진행하였다.

고속국도·국도 등 국가기간도로망과 연계 도로망 확충 및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사업은 2017년에 총 5지구(54.48km, 357억원)사업을 수행하였고, 이중 1개 지구를 준공하였다.

지역행복생활권 중심의 활성화사업을 통한 성과는 시·군별 추진사업체계에서 벗어나 생활권협의체를 통하여 추진함으로써 협업 기능이 강화된 점과 일자리,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사업 선정으로 주민들에게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충청남도는 고부가·신성장 동력산업 중심 우량 외투기업 유치로 외자 확보 및 고도기술을 도입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민선6기('14년 7월~'18년 6월) 유치목표를 33개사로 잡았는데, 17년도에 13개사(221백만달러)을 유치하여 2017년 12월 현재 총 35개사(667백만달러)를 유치하여 목표를 조기 초과 달성하였다.

지역특성화 산업 육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경제 위기 극복 및 수출증진 기여(수출기업발굴수 66건), 충남 우수상품 중국 마케팅 지원, 한황해 지역 산업전략 포럼을 통한 도내 산업의 대 중국 수출경쟁력 확보, 주요 인삼소비지를 방문하여 홍보 판매하는 인삼특별전 개최로 금산인삼의 소비 촉진 및 유통 중심지로서의 위상 제고, 보령머드공장의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머드제품 생산·보관량 증대 및 비용절감의 성과를 거두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에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여 2017년 770개의 기업을 유치하였다. 이로 인해 2017년 5,100억원의 매출을 이루었고(성과목표 5,000억원), 신규 고용창출 3,100명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충남 서북권(천안, 아산, 당진, 서산)에 치우쳐 도내 균형발전방안이 절실하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을 통하여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기확충을 목표로 하여 2017년 지방산단 공업용수 가동률을 40%로 세웠으나 결과는

33.5%에 그쳤다. 이러한 이유를 분석해보면 경기침체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기업 가동을 저하로 목표를 미달성 하였고, 원단위에 기초한 계획량 대비 용수수요량 급감이 성과지표를 달성 하지 못한 한 이유가 되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으로 2017년 10개 지구 25.82km를 추진하였다. 산업단지 준공시기에 맞춰 진입도로를 개통하여 산업단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기업 물류비를 절감하여 많은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충남지역 산업단지 신청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충남은 민선 6기 역점추진사업으로 '3농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 행복한 농어업인'이라는 비전 달성하기 위한 15대 전략과제와 50개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품질의 과실 생산성 향상과 유통·물류비용 감소 기반 구축을 위해 과수 주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아산원예농협 APC 저온저장고의 시설보완)하였다. 또한, 지역의 향토자원 발굴을 통한 2·3차 산업이 융복합된 6차 산업화 전략으로 천안 배, 공주 베리류, 보령 고구마, 금산 약초 융복합, 금산 흑삼, 태안 소금의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식품부 평가에서 우수지구로 금산 약초음식과 흑삼이 선정되었다. 농식품가공 체험기술보급 사업(6차산업 수익모델 사업)은 가공상품화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구축(가공작업장 132㎡, 가공장비), 역량향상교육(9회, 229명), 상품개발(3건), GPA인증(3건), 지식재산권(1건), 참여농가 평균수익('16년 84,490백만원 → '17년 115,800백만원, 전년대비 37%증가), 일자리 창출(비상시 227명)의 지역사회 발전을 유도하였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으로 상품개발(91건), 체험·견학프로그램(14건), 품질인증(3건), 지적재산권(4건), 전년대비 소득증가율(21.3%), 일자리 창출(3,480명)성과를 보였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조미김을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여 생산인프라를 확충·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내수 및 수출확대를 도모하고(일자리수 118명, 수출증가율 73.5%) 천북 웰빙특화단지를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수산가공업 분야 선도분야인 조미김 사업의 포화로 새로운 고차가공 수산식품 발굴이 필요하다.

도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다소비·특별관리 품종 중점 검사 등 안전성 조사를 매년 120건 이상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수산물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산지 노후 위판장 시설 및 기능 개선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광과 연계한 복합공간으로 기능 확대하였고 유통 과정의 위해요소를 차단하여 위생적이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판매량 91,472톤)하였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고용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지역특색을 반영한 사업 발굴·추진하여 직접일자리 제공(592명)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였고, 수혜자만족도는 85.2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단순일자리 발굴로 사업종료 시 실업자 신분으로 복귀하는 점은 이 사업의 한계이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일자리제공형의 경우 50%이상) 요건 충족시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충남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은 133개이며, 수혜자들의 만족도는 64%로 높지는 않은 편이다. 이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은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으로 양질의 사회적일 자리를 창출하여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고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은 소수이고, 대다수 기업은 예산만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예비)사회적기업수·예산집행률 등의 단순 양적 성장보다 우수기업 육성·취약계층 등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질적 성장 노력이 필요하다.

산림경영자원 육성사업을 통해 임산물 수출업체의 수출장비 및 수출포장용기 지원으로 임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로 임산물 수출업체 수출(673.4만 달러)촉진 지원으로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가소득향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 지원사업의 임산물 수출업체 만족도는 93.8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으로 생활권 도시림 면적('16년 1,513ha→'17년 1,541ha(28ha 증가))을 확대하여 부족한 도심지 내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권녹색공간 확충에 기여하였다. 산림휴양시설을 활용한 산림교육 등 체험형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산림교육 수혜인원을 확대('16년 102천명→'17년 110천명(8천명 증가))하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도시녹화 운동 활성화, 쾌적한 등산로 정비를 통해 안전한 산행과 편의 도모,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등을 통해 만족도 87.3%로 목표치를 상회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충청남도의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BK21플러스 사업은 지방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학별 사업으로 양성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분야로 공주대의 차세대 IT 융합부품용 회소소재, 호서대는 디스플레이 장비부품, 단국대(천안)의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동물자원 및 글로벌 나노바이오 재생의과학, 운동의과학, 선문대의 제약·화장품산업 기능성 천연소재 및 아시아 문화 교류 융합디지털, 한국기술교육대의 창조형 감성기반융합전자기기 등이 있다.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사업설계 및 추진을 통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공주대, 상명대, 선문대, 순천향대, 중부대, 한서대, 호서대 등의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다. 공주대는 글로벌 소통 및 교육과정 연구와 학습동아리 및 자아발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에 있으며, 상명대는 산업수요중심교육을 추구하고, 창조적 예술감각과 융합기술력을 기르기 위해 NCS직무표준, 한류 콘텐츠, 스마트 미디어 교육을 바탕으로 한 첨단 무대 미술과 기술교육체계인 스마트 씨어터ART & Tech를 운영하여 4차 산업혁명에 기여하는 선도형 예술교육 모델제시와 창의인재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선문대는 제약산업 인력수요 전망과 연관성 분석을 통해 교과과정 체계를 구축, 다문화 통합사회 상담복지인재양성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산업과 연계된 산학협력 모델 창출 및 현장맞춤형 핵심연구 인력 배출을 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1개 대학(건양대, 공주대, 단국대, 백석대, 선문대, 순천향대, 신성대, 아주자동차대, 중부대, 한기대, 호서대)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대학-기업 간 산학협력을 통하여 대학교육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취업미스매치 해소 및 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견인하였다. 대표적으로 건양대의 경우 창의적 인재양성과 지역경제·사회발전 역량구축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배양을 목표로 가족회사 발굴 및 관리(15건),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18건, 2,209명), 지적재산권 획득(113건), Linc+ 참여학생 취업증가(1,297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공주대와 순천향대에서 선취업·후진학 평생교육지원사업 및 지역과 대학의 파트너십 프로젝트 등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된 취업 친화적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에서 자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5대 정책목표 19개 핵심과제를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기반 마련 및 사회적 선순환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기업지원사업은 연암대(실험동물센터, 화웨이가공센터), 남서울대(시각디자인 및 광고홍보대행), 신성대(학교 화장품 기업 신성 바이오)등을 통해 기업과 학교 학과를 연계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상품을 개발하며, 학생들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성대의 실적을 보면 기업적 성과로는 신제품 개발(셀하임 2종세트, 샴푸/린스/바디워시, 천연수제비누 3종), 현장실습(120명), 창업교육(150명), 창업실습(48명), 창업사업화 지원(교원 3건, 학생 3건), 특허출원(1건)이 있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충청남도는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을 위해 콘텐츠코리아랩 계획 및 운영사업 공모 선정, 지역특화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기반 대표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로 충남 문화산업 기반을 확충하였고, 지역문화예술지원을 통해 도민 향유 실적은 74만명을 넘어섰다. 문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아산 중앙도서관, 청수도서관 추진, 금산 공립박물관 추진, 금강자연비엔날레 지원(자연미술공원 조성), 생활문화센터(아산, 당진) 설계 완료, 공주 버스승강장 지붕 한식 개선, 작은도서관(공주, 예산) 및 작은영화관(예산, 태안, 금산, 청양) 조성 등을 추진하여 문화시설 이용자수 25,000명, 운영프로그램수 237개, 만족도 82%의 성과를 보였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은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확충하고, 지방체육 진흥과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하기 위해 2017년에 생활체육공원조성 1개소, 지방체육시설지원 14개소,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8개소,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4개소를 조성하였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운영프로그램수 17건)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률(55%), 만족도 (76.8%)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문화유산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기존의 문화재 원형보존 위주의 틀을 탈피하여 문화재를 적극 활용하고, 개발사업을 통해 문화유산 경관회복 및 경제적 가치 상승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한 볼거리를 증대하였다. 수행사업은 예산 내포보부상촌 조성, 백제 6대와 승모전 건립, 보서천 한산모시 문화유산 활성화, 예산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 사업 등이다. 한산모시관과

예산 수덕사를 사례로 성과를 분석하면 매출액(685백만원), 방문관광객수(728,890명)이며, 전체 사업의 만족도를 보면 83.5%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업의 대부분의 내역사업이 현상변경허가 관련 문화재위원회 심의 부결로 인해 지연되어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충남의 사계절 관광 및 관광자원 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기존의 관광지를 현재 관광트렌드 변화 및 지역 개발여건에 따라 재정비하고,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연계·활용한 한강해권의 관광거점을 육성하고자 삼교호 관광지(해안탐방로 및 풋살장), 만리포 해수욕장(운동오락시설 및 경관조명), 임해관광도로(산책로 및 쉼터) 등을 조성하고 있다.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계코스 개발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한독립만세길,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백제역사 너울 옛길, 매운고추체험나라, 예당호 착한 농촌 체험 세상 등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사업으로 최근 3년 조성 완료된 관광산업지의 연간 입장객수(38,149명), 만족도(84%) 제고를 달성하였다.

또한, 관광산업과 주민 삶의 질의 기반이 되는 생태자원 확충을 위하여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천안 성정천과 부여 왕포천 사업이 준공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생태학습장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숲길네트워크 구축, 황새고향서식지 환경 조성, 지방하천 정비(국토부 평가 2위 달성) 등이 추진되고 있다.

5.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지역특성과 수요에 따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및 심리지원,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등 지역수요에 맞는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이 사업은 2017년 전년대비 예산축소로 사업량이 감소하였다. 성과지표는 이용자 만족도(88.01점), 일자리수(2,261), 이용자수(18,282명)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주민정신

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정신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해 우울증 선별검사(172,822명) 및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5,915명) 등과 함께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1개소) 및 기초센터(1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인력,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읍면동 사례관리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은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 통합사례관리('15년 5,424명, '16년 4,319명, '17년 5,370명), 드림스타트간 멘토-멘티 워크숍 운영(매년 1회)을 추진하였다. 가정과 공교육을 보완하는 공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228개소) 및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15개소 '15년 590명, '16년 624명, '17년 654명)을 지원하였다. 청소년의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홍성, 예산 2개소의 청소년 문화의집을 개원하여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7년도 현재 국공립어린이집(84개소), 직장어린이집(45개소)을 운영 중에 있다.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통해 4,593명(국비지원 2,802명, 도비지원 1,791명)을 지원하였다.

분만 취약지역 부여군의 산부인과 운영지원 및 분만 취약지 해소를 위해 산부인과 외래 지원(건양대 부여병원 인건비 지원) 및 부여군 보건소 현지 점검 등을 추진하여 임산부를 위한 산전·후 진찰 서비스(연간 진료인원 3,580명)를 제공하였다. 시·군별 1개소 이상의 응급실 운영을 목표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비 지원(10개소) 및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도입하여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 및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진료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제13장 전라북도

제1절 전라북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전라북도의 인구는 2017년 기준 186만명으로 2014년 187만명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47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보다 낮은 연평균 2.9% 성장하였다. 1인당 GRDP는 전국 수준 보다 낮은 2,557만원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2.8%로 전국 성장률을 하회하였다. 수출액은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북도의 경우 2014년 86억 달러와 비교해 2017년은 63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수출액 연평균 증가율도 -9.7%로 전국 연평균 성장률 0.1%보다 하회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8.6%로 2014년의 27.0%에 비해 1.6%p 높아졌으나,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를 크게 하회하였다.

표 3-13-1 전라북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전북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	1,565,248	1,635,555	-	4.9	44,243	45,641	46,880	-	2.9
인구(천명)	51,328	51,529	51,696	51,779	0.3	1,872	1,870	1,865	1,855	-0.3
1인당 GRDP (만원)	2,927	3,068	3,192	-	4.4	2,418	2,487	2,557	-	2.8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	526,757	495,426	573,694	0.1	8,556	7,952	6,291	6,309	-9.7
취업자 (천명)	25,897	26,178	26,409	26,725	1.1	901	922	940	921	0.7
재정자립도 (%)	50.3	50.6	52.5	53.7	2.2	27.0	27.6	29.7	28.6	1.9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전라북도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64.3%, 제조업 27.4%, 광업·농림어업 8.3%로 나타나,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광업·농림어업 비중이 가장 높았고, 강원도, 제주도를 제외한 광역도 중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식료품’등이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식료품’이 17.7%로 가장 높았으며,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각각 23.7%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금속가공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등의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식료품’은 사업체수·종사자수·생산액 모두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는 사업체수·종사자수는 증가한 반면 생산액은 감소하였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다른 업종의 비중 변화는 크지 않았다. 종사자수 기준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생산액은 ‘식료품’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업종은 변화가 없거나 소폭 감소하였다.

표 3-13-2 전라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16.6	17.4	15.7	16.4	16.7	17.1	17.3	17.7	18.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6.3	8.6	16.3	6.7	9.9	14.3	7.0	9.5	15.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0.4	0.8	1.0	0.5	0.8	1.1	0.5	1.0	1.1
비금속 광물제품	8.7	4.9	3.6	8.9	5.1	3.5	8.7	5.0	3.5
1차 금속	4.1	5.5	10.8	4.0	5.8	9.5	4.2	5.2	9.0
금속가공제품(기계·기구 제외)	10.6	6.8	2.6	11.0	7.3	2.6	10.2	6.0	2.8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2.1	4.4	2.5	2.0	3.6	2.1	1.8	3.4	1.6
기타 기계 및 장비	7.8	7.2	6.7	7.7	7.1	6.5	7.3	6.7	6.5
자동차 및 트레일러	11.9	21.3	25.5	12.6	21.6	26.3	12.8	23.7	23.7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8.9%, 35.0%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는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 비중이 7%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증가한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 복원업' 등이 증가하였다.

표 3-13-3 전라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1	2.4	6.3	0.8	1.6	3.4	1.0	2.1	5.0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	2.2	4.4	1.7	2.9	7.9	1.3	1.9	3.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9	8.2	18.1	9.3	5.7	10.2	11.8	7.8	18.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6.1	6.7	8.8	6.8	6.9	7.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0	13.8	10.1	4.0	9.7	6.2	4.7	11.8	9.0
교육 서비스업	18.1	10.7	6.3	16.5	25.5	25.2	16.2	9.3	6.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6	39.3	37.8	12.9	27.7	23.5	15.6	38.9	35.0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0.3	7.1	6.1	7.7	4.9	4.3	9.9	6.7	6.0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35.9	16.3	11.0	40.8	15.2	10.4	32.9	14.6	10.0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3. 혁신활동 현황

전라북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9천억 원, 연구개발 인력 14,482명, 연구개발조직수 804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조직은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연구개발 인력은 2년 전에 비해 430명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조직수 모두 감소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1%p, 연구개발인력은 0.2%p, 연구개발조직수는 0.3%p 감소하여 2016년 기준 전국대비 각각 1.3%, 2.3%, 2.0%로 나타나 타 광역시·도에 비해 연구개발 혁신활동이 낮아졌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3,993건이며, 등록은 1,468건으로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는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0.3%p 증가하였으며, 등록건수는 변화 없이 각각 2.4%, 1.8%로 나타났다.

표 3-13-4 전라북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870,475 (1.4)	804,323 (1.2)	900,252 (1.3)	1.7
	연구개발인력	14,912 (2.5)	15,165 (2.5)	14,482 (2.3)	-1.5
	연구개발조직수	729 (2.3)	833 (2.2)	804 (2.0)	5.0
특허	출원	3,501 (2.1)	4,007 (2.4)	3,993 (2.4)	6.8
	등록	1,777 (1.8)	1,338 (1.8)	1,468 (1.8)	-9.1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전라북도는 지방 경제 전체의 글로벌화 전진기지로서 새만금 시대의 본격 개막이라는 획기적 기회요인을 갖추고 있으며, 동서 교통축의 대대적인 확충으로 한반도 허리경제의 서해안권 주역으로 급부상해 가고 있다.

또한, 한국적 장점을 살린 문화융성 및 문화 창조가 세계 속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현실에서, 전북이 비교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전통문화자원과 산업화 기반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농생명수도 및 한문화 창조거점 육성을 전북 발전의 구동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①주력산업 고도화와 문화가치의 사업화, ②성장산업의 육성과 지역 특화자원의 활용, ③신성장 산업 육성과 성장거점 마련, 그리고 ④인적자원 선순환 환경 마련과 글로벌 여건 조성 등을 적용 가능한 전략방향으로 설정하고 4차 산업혁명의 대한민국 프론티어, 미래의 글로벌 혁신 허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문화·생명 공간 육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발전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전북이 4차 산업혁명의 대한민국 프론티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조업, 서비스업(문화관광, 지식서비스), 농생명·바이오산업 등 성장주도 산업의 스마트 전문화, 산업 특성별 글로벌 프론티어 및 발전벨트 구축, 기업 유치, 창업 촉진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미래의 글로벌 혁신허브 형성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인재 양성, 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글로벌화 인프라 및 한반도 허리경제권 형성 기반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문화·생명 공간 형성을 위해 해양-산악-농업 자원 연계의 생태관광 활성화, 전통문화와 ICT 융복합, 지덕체 합일의 청정 공간 개발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① 새만금을 대중국 전진기지 및 창조경제의 요람으로 개발, ② 창조경제를 선도할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 ③ 농식품산업 기반을 활용한 농생명산업을 육성, ④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유산의 세계화, ⑤ 관광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추구하고 연계관광을 육성, ⑥ 안전 및 행복한 복지 구현의 실현 등을 통해 누구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전북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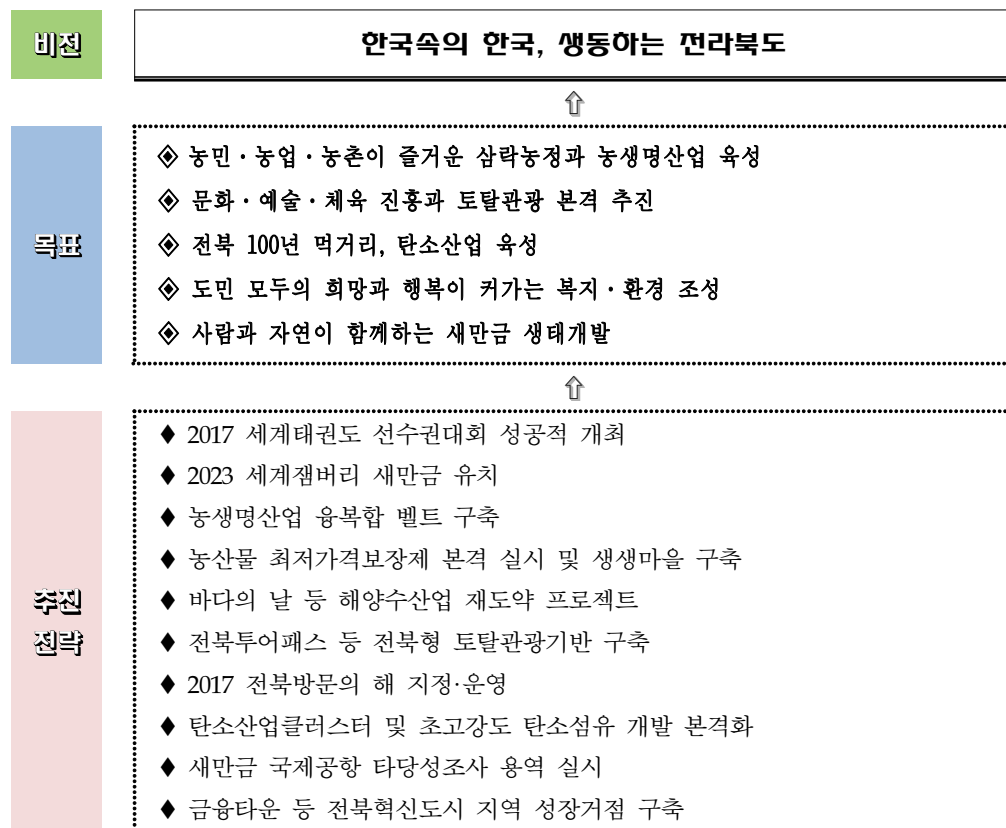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전라북도는 지역이 간직한 고유의 전통문화 자원과 청정 생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가장 한국적인 모습과 가치를 담은 ‘한국속의 한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21세기 새로운 전복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3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생동하는 전라북도’ 실현을 목표로 하여 대한민국 문화융성의 중심지와 국민행복 일번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7년도에는 핵심과제의 전복만의 차별화된 비전과 탄탄한 미래발전 기반을 만든 한 해였다.

그림 3-13-1 전라북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전라북도는 “한국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의 목표달성을 위해 5대 분야, 10개 추진전략을 충실히 실행하여 도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아가고 있다.

먼저, 지역생활권 활성화 분야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협력강화와 낙후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활력과 더불어 지역 간 편차를 줄여 나가고 있고, 전통시장 등 쇠퇴한 구도심 재생을 통해 도시기능 재생 및 농어촌 중심지의 육성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벽·오지마을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추진을 통해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교통·물류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주민생활 및 도 성장 동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둘째, 일자리 창출 분야는 지역의 내발적 발전역량과 미래 성장 동력인 ‘삼락농장’,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3대 핵심과제의 완성을 높여 전북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으며, 한편으로 고용창출효과가 큰 업종 중심으로 지역 특화산업을 개편하고 지역 주도의 산업기반을 활용한 지역대표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균형 있는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인프라 및 지역주민 밀착형 기반 구축을 달성하고, 산업단지의 혁신역량 강화와 혁신도시 중심의 산업클러스터 조성으로 창조경제의 거점지역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셋째,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분야는 취약한 지방 교육여건의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여건 개선과 지방대학 육성, 그리고 지역인재·기업 간 선순환 성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인재 유출을 최대한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평생 직업교육대학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추진하여 공교육 여건 개선 및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넷째, 지역 문화융성 및 생태복원 분야는 전통문화자원을 보유한 한문화 중심지로의 탄탄한 토대를 기초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문화유산 세계화 가치 창출을 확대하고, 아울러 맞춤형 ‘투어패스’ 시행을 도내 전역에 확대 추진하여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국내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섯째,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는 지역맞춤형 복지 구현 및 농어촌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통합화 및 농촌 통합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등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해 행복한 복지·의료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전라북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중추도시형 1개, 도농연계형 2개, 농어촌형 1개로 총 4개의 생활권이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의 역사성과 문화·지형의 유사성, 그리고 장래 시·군 간 협력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활권을 구성하였다. 주요 사업은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도시재생 사업, 취약지역의 상하수도 시설 확충, 의료서비스 개선, 마을기업육성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그림 3-13-2 전라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생활권 업무협약(MOU)이 2014년 1월에 완료된 후 생활권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규약을 제정하고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쳤다. 2015년 1월 13일 동북부 생활권을 끝으로 4개 생활권이 행정협의회 구성을 완료하였고 시·군 부서가 참여한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현안사항을 협의해 나갔다. 이후 행정협의회의 시작을 알리는 협의회 발대식이 2015년 6월 2일 남원시 스위트호텔에서 지역발전위원회와 전라북도가 공동 주관하여 지역발전위원장, 도지사, 지역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 발전을 위한 협력사항을 공동 대응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성과는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 연계협력(선도) 사업 19건, 새뜰마을사업 33건, 그리고 창조지역사업 12건이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어 생활권의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연계협력(선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먼저, 동북부권의 “무진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협력사업”으로 시군 산간·경계지역의 대중교통체계가 경제성이 없어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교통체계를 재구성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이보다 앞서 추진된 ‘진장 경계지역 오지마을 상수도 공급사업’은 진안군과 장수군의 중심지로부터 최외곽 경계지역의 3개 마을주민에게 상수도를 상호 공급하여 사업예산 절감과 함께 지역 칸막이를 허무는 모범사례로 지역발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업이기도 하다.

동남부권의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는 산부인과가 없어 출산이 어려운 문제 해소를 위해 거점 공공병원인 남원의료원에 산부인과를 개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6년 5월부터 영업을 개시하여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새뜰마을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일환으로 주거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도시 7건 및 농어촌 26건이 추진되고 있고, 이중 2015년 선정된 농어촌 8건의 사업이 2017년 말에 완료되어 마을의 생활인프라 및 마을경관 개선효과가 매우 큼에 따라 주민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전라북도의 지역생활권 활성화 사업은 주민주도형 지역경쟁력 강화, 생활인프라 구축, 일반농산어촌개발, 쇠퇴한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그리고 농촌 대중교통체계 개선 사업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 사업이다.

생생마을만들기는 농촌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 고유의 체험, 관광, 전통, 문화 자원 등 고유한 이야기 거리를 활용하여 출향인, 관광객, 귀농인이 찾아오는 활력과 생기가 넘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종류는 3단계로 구분하고, 기초단계에 최소한의 지원으로 주민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경관 개선, 공동체 문화 향유, 주민 복지 등을 중점 추진하고, 활성화단계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설, 기반 구축

을 지원하며, 사후관리단계는 각종 마을보조사업 이후 운영관리 활성화를 지원한다. 전북은 최근 5년간 국비 72억원을 포함하여 총 196억원을 투자하여 농촌 마을에 생생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인프라 투자 및 특화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사업종류는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마을단위 개발, 권역단위 종합개발 등), 시군 역량강화사업,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빈집정비, 농업 기반조성 등)이며, 사업내용은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그리고 지역역량강화 등이 있다.

전북은 최근 5년간 국비 5,082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경관 개선 및 소득증대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농촌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전북의 건의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수요응답형교통(DRT) 서비스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2015년 1월에 국내 최초로 전라북도 DRT 체계에 대한 시군의 공모를 추진하였다. 또한, 2015년도 지역발전위원회 연계협력사업 공모에 무진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는 등 DRT 교통체계가 주민민원의 개선효과를 인정받아 2015년 12월에 민원개선 행정의 우수사례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다.

소형승합차를 활용하여 예약에 의한 문전서비스로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버스DRT 차량이 최초 2대에서 9대로 확대하여 운행하였다. 버스 미 운행마을에 대해서는 택시를 활용한 교통서비스 등 농어촌 지역의 교통서비스 개선 노력으로 DRT 체계의 총 이용객이 연간 약 12만명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 접근성 및 편리성 향상에 따른 신규 이동량으로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시활력증진 개발을 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특색 있게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도내 6개시 동(洞)지역에 생활환경개선사업 60억원 이내, 지역역량강화사업 4억원 이내 예산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국비 50%, 지방비 50%)이다. 2017년까지 5개시(전주, 익산, 정읍, 남원, 김제) 10개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45억 원을 확보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시범 사업에 6개소에 688억원을 확보하여 낙후지역의 생활환경의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전라북도는 오랜 기간 주력산업으로 이루어온 농업을 1995년부터 제조업이 추월하면서 산업구조의 트렌드에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기업유치와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신 성장 동력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 결과이다. 자동차·조선·기계, 신재생에너지, 탄소, LED, 인쇄전자, 방사선융합기술, 그리고 식품·생명산업 등이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1) 지역특성화 산업육성

지역에 특화된 향토자원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6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순창군 발효식품, 완주군 소이푸드, 임실군 과수 등 지역 내 특화된 자원의 가공시설 운영, 농촌형 체험·휴양 기반 확대, 그리고 사업단 운영에 따라 최근 2년간 일자리 771명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였다.

(2) 지역공동체 일자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지역(마을)주민들이 협동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추진으로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마을기업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14개 시·군 일자리부서 주관으로 지난 5년간(‘13년~’17년) 국비·지방비(도비, 시·군비) 197억원을 투입하여 562개 사업을 진행하였고 3,804명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마을기업 사업’은 지난 5년간 70억원을 투입하여 107개 마을기업을 육성하였으며 5년간 475억원의 매출실적과 일자리 6,314명을 제공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마을기업 사업의 특성상 경영 및 상품개발을 돕기 위하여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을 중간지원조직으로 선정하고 양질의 컨설팅을 제공하여 그 성과를 이루었다.

(3) 기업유치 실적

기업유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시장을 확대할 뿐 아니라 산업구조를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전략산업의 기업유치는 미래 성장의 바로미터로서 나아가는 산업구조를 지방정부의 비전에 맞도록 탈바꿈하는 좋은 기회이다.

전북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717개 기업을 유치하여 매년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기업유치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 142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이들 기업의 예상 고용인원이 5,470명으로 지역 노동시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유치기업은 하림식품, 다원시스, 도드람협동조합, 솔베이, 일진제강, 한우물영농조합법인 등이고, 특히 글로벌 외투기업인 솔베이, 도레이, 삼양화인테크놀로지 등이 새만금산업단지 선도기업으로 터를 잡음으로써 기업유치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전북은 최근 3년간 산업부로부터 지방투자촉진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국비 5%를 추가 지원받았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체투자를 지원하여 인사혁신처로부터 적극 행정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4) 탄소벨리 구축

탄소벨리 구축사업('11년~'16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2016년 12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탄소 메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정립했다.

추진성과로는 탄소소재 산업의 초기 산업화 구조를 형성하였고, 효성의 T-700급 탄소섬유 공장 준공, GS 칼텍스의 피치계 탄소섬유 파일럿 시설 건설을 통한 시험 생산 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 분원에 탄소 성형·가공 및 시험·분석 연구개발 장비를 구축해 탄소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성형·가공장비 19종과 KIST 전북분원에 원천기술(시험·분석) 장비 23종이 구축되었고, 탄소벨리 사업을 통해 상용화기술센터 건립으로 탄소섬유부터 최종 완제품까지 기술, 제품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유치 기반이 마련되었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전라북도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더불어 급속한 노령화로 교육·사회적 여건이 취약한 실정에 있고, 지역발전의 주체인 지방대학이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과 열악한 교육여건, 일자리 등의 경쟁력 저하로 고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인프라 개선 및 역량강화’와 ‘창의적 인재 양성 및 기업의 선순환 성장체계 구축’ 등에 역점을 두어 총사업비 71,068백만원을 투입하여 22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1) 지역으뜸인재 육성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은 도내 중고 우수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인재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80억원을 투자하여 11개 시·군 158개교에 지원하여 서울소재 등 주요 대학에 지속적인 합격자를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내 중학교 우수학생들의 지역소재 고등학교 진학률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2) 글로벌 해외연수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은 도내 초·중·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연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영어권(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과 중국, 그리고 유럽 등의 현지체험을 통해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주요성과는 전라북도와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이 공동으로 해외 연수생 700명('17년 기준)을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다. 해외연수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1박 2일간 설명회를 갖고 현지 연수국 공립학교에서 4주 동안 ESL를 배우고, 2주 동안은 공립학교에서 현지 아이들과 똑같은 수업을 받았다.

해외연수생들에게 연수전후 영어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연수를 통해 실력이 향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연수에 대한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형성 및 창의력 향상 등 97%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계 구축

시군 및 기관의 지역특성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기초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문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 하였다. 평생교육진흥 및 도민의 평생교육 활성화, 도내·외 평생교육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정책연계 등 전라북도 평생학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2016년 8월 1일에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이 정식 출범하였다.

주요성과로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이 선정되어 국비 222백만원을 확보하여 평생학습 촉진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지역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도와 진흥원, 시군, 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평생학습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4) 청소년 시설확충 추진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 건립과 기존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2013년~2017년에 건립 7개소 8,000백만원 지원, 기능보강 10개소 2,504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청소년 시설의 실제 사용자인 지역청소년의 의견 반영을 위해 사업계획단계에서 설문조사 실시 및 건립심의위원회 구성에 참여시켜 운영함으로써 시설 수요자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향후에도 자유학기제, 주5일제 수업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청소년 여가시간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복원

전라북도는 한문화(韓文化) 수도로 불릴 만큼 한국적 전통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한문화 기반의 기본적인 지역발전의 토대 구축에 구심점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역문화 복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문화향유의 격차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대도시의 집중화를 피하고 외곽지역 주민들도 문화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권별 거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14개 시·군 대표관광지의 지속적인 육성과 전북투어패스를 연계한 융복합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한국체험 1번지로 만들어 가고 있다.

(1)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역의 거점 문화시설 조성을 위하여 혁신도시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과 문화체육 향유를 위한 공공도서관(전북혁신도서관) 1개소 건립, 문예회관(전주 덕진예술회관 증축) 1개소, 문학관(익산 가람문학관) 1개소 및 공공도서관과 원거리 지역에 소규모 독서 문화 공간인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남원 품안작은도서관, 완주 용꿈작은도서관) 2개소를 조성하여 지역 지식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도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은 물론 시·군 간 문화 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2) 문화특화지역 조성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고유의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특화 지역(문화도시·문화마을)을 육성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문화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201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북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하여 2014년부터 4개 시·군(남원, 군산, 진안, 익산)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남원은 문화도시 남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도시문화 경영 등 5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군산은 군산시민예술촌 운영 활성화 및 문화예술기획프로그램·예술인 창작 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안은 당산제각 등 시설조성 및 마을

지도 제작 등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였고, 익산은 고도익산 디지털라이브러리·시민 참여 커뮤니티 운영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남원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시민 참여형 사업으로 2015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타 시도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손꼽히고 있다.

(3)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옥정자, 카페·갤러리, 영화촬영지, 문화재 등 14가지 매력 아이টে를 더하고, 14개 시·군의 대표관광지별 특화된 매력을 곁하여 경쟁력 있고 특화된 거점관광지를 집중 육성하고자 시·군의 추천을 받아 대표관광지를 선정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연간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전북대표관광지 연평균 10% 증대를 목표로 관광시장의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관광소재 콘텐츠 개발과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내발적 발전전략을 통한 지속적인 관광 확대와 시군별 1명소 육성을 위한 핵심 관광지의 차별화된 매력 강화 등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확산으로 전북 토탈 관광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새로운 아이টে를 발굴하고 성과분석을 위해 기본계획 추진실태 평가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매년 9월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업 성취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였다.

(4) 전라북도 투어패스 운영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전북 만들기를 위해 민선 6기에 ‘토탈관광’의 일환으로 시작한 전북 투어패스 운영사업은 도내에 산재한 전통문화, 생태, 농산어촌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관광패스라인으로 연계하고,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과 방문지역 확대 방안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전북투어패스는 한 장의 카드로 도내 주요 유료 관광지, 시군 버스 및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과 맛집·숙박·공연(체험) 등 특별할인을 제공하는 자유이용권형 관광패스로 그간 타 지역이나 기관에서 시행했던 차감형 방식을 벗어나 전국 최초로 개발된 자유이용권형 패스이다.

전북은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미국의 뉴욕패스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도에 맞는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전북투어패스'를 실시하였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전주시, 완주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17년에는 14개 시·군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판매소, 유료관광지, 특별할인가매점, 주차장 등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패스 디자인 및 권종을 다양화하고 전북투어패스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판매, 정산 통계 시스템을 개발하고 가매점에 단말기 설치 및 교육을 실시하여 전 시·군으로의 확대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에는 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양질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농산어촌 지역은 시설의 효율성과 경제성 등의 논리에 밀려 외면되고 있어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농 간 복지인프라 불균형 및 소득계층 간 복지수혜 불균형, 복지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운영되고 있는 지역복지 자원 연계로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이 어디에서나 양질의 삶의 질을 누리도록 공공의료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1)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현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맞는 지역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해 2017년 말 기준으로 241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민관협력을 활성화 하고 있다.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사례관리 추진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191개 읍면동에 추진 중이며,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에 확산시킬 예정이다.

최근 5년간('13년~'17년) 사회복지직 신규인력 282명을 선발하여 배치 완료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적정수준의 복지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최근 5년간 989억 원을 투자하여 98,113명이 서비스 제공을 받았고, 2017년에는 247억원을 투자하여 22,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도내 응급의료 취약지는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포함되는 실정으로 인력수급이 어렵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의료취약도가 높아 열악한 응급의료 제공환경을 개선하여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응급의료기관 12개소에 131억 원을 투자하여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응급환자 진료·병상 및 전원정보 관리를 지원하였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 법적 기준 충족여부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2016년 평가결과 충족률이 80%로 도내 응급의료기관 21개소 중 16개소가 충족하였다. 이는 전국 도 순위 1위로 최상위권이다.

2017년에는 28.6억원을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로 지원하여 응급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3)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수당, 의료비, 등록진단비, 보조기구교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예산 28,109백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다.

장애인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장애수당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22,375명에게 27억원을 추가 지급하였고, 장애인연금 지급기준을 2013년부터 17만원을 지급하였고 2016년에 28만원으로 67.7% 인상하여 19,775명에게 7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7%로 전국평균의 67.3%를 훨씬 웃돌게 되어 2015년, 2016년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연속 '가' 등급을 획득하는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다.

제14장 전라남도

제1절 전라남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전라남도의 인구는 2016년 기준 190만명으로 2014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68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연평균 4.5%로 증가하였다. 1인당 GRDP는 전국 수준보다 높은 3,79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4.3%로 전국 성장률과 비슷하였다. 수출액은 전국 추세와 마찬가지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다 2017년 반등하여 31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수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전국 연평균 성장률 0.1%를 크게 하회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6.2%로 2014년의 22.2%에 비해 4.0%p 높아졌으나,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를 크게 하회하였다.

표 3-14-1 전라남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전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	1,565,248	1,635,555	-	4.9	62,457	65,454	68,209	-	4.5
인구(천명)	51,328	51,529	51,696	51,779	0.3	1,906	1,909	1,904	1,896	-0.2
1인당 GRDP (만원)	2,927	3,068	3,192	-	4.4	3,486	3,643	3,790	-	4.3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	526,757	495,426	573,694	0.1	39,112	30,494	27,880	31,054	-7.4
취업자 (천명)	25,897	26,178	26,409	26,725	1.1	945	962	964	957	0.4
재정자립도 (%)	50.3	50.6	52.5	53.7	2.2	22.2	22.8	23.8	26.2	5.7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전라남도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57.3%, 제조업 34.1%, 광업·농림어업 8.6%로 나타나, 17개 광역시·도 중 제주에 이어 광업·농림어업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식료품', '기타 운송장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이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수 기준으로 '식료품'이 21.7%, 종사자수 기준은 '기타 운송장비' 28.8%, 생산액 기준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6.2%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 외에는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금속가공제품'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차 금속' 등이 증가하였고, 종사자수는 '1차 금속', '기타 운송장비', 생산액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차 금속', '기타 운송장비' 등의 업종 비중이 증가하였다.

표 3-14-2 전라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22.5	11.3	2.4	22.2	11.2	3.0	21.7	11.9	3.4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0.3	2.0	32.0	0.6	2.2	23.6	0.6	2.3	25.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7.2	15.6	35.0	7.3	14.2	40.0	6.8	14.5	36.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5.4	5.2	1.9	5.8	4.7	1.8	6.1	5.3	2.0
비금속 광물제품	10.6	5.4	1.7	10.8	5.2	2.4	10.8	5.4	2.2
1차 금속	5.5	12.5	17.5	5.8	12.1	17.5	6.2	13.5	18.4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2.3	8.5	1.6	11.6	7.6	1.7	11.2	6.6	1.6
기타 기계 및 장비	5.2	3.5	0.9	5.4	3.2	1.3	5.7	3.8	1.0
기타 운송장비	17.8	27.9	5.4	16.6	31.8	6.6	16.8	28.8	7.1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9.0%, 34.8%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 비중이 6~7%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이 증가한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감소하였다. 종사자수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증가하였다. 매출액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이 증가하였다.

표 3-14-3 전라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5	3.3	9.5	1.2	2.2	4.4	1.4	2.8	6.2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	1.4	2.8	1.9	2.7	10.0	1.2	1.5	3.2
부동산업 및 임대업	8.3	6.5	10.0	6.5	4.5	7.9	8.6	6.2	12.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5.4	6.4	8.1	6.1	6.3	6.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9	11.6	12.0	3.8	8.8	7.7	4.9	11.9	11.4
교육 서비스업	15.2	8.3	4.9	14.9	23.7	22.4	13.8	7.1	4.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7	41.5	39.4	12.9	29.0	23.0	15.8	39.0	34.8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1.8	9.0	7.6	8.6	5.8	5.0	11.2	8.2	7.8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40.3	18.4	13.8	44.8	17.0	11.4	37.0	17.0	13.3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3. 혁신활동 현황

전라남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52백억 원, 연구개발인력 6,981명, 연구개발조직수 560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 모두 2014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연구개발조직수는 증가하였다. 특히 연구개발비는 연평균 -16.7% 증가하여 2년 전에 비해 23백억 원이나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조직수는 변화가 없었으며,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은 감소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5%p, 연구개발인력은 0.1%p 감소하여 각각 0.7%, 1.1%, 1.4%로 전국대비 비중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2,700건이며, 등록은 1,201건으로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는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은 1.5~1.7%수준으로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0.2%p 증가하였으며, 등록건수는 변화 없이 각각 1.7%, 1.5%로 나타났다.

표 3-14-4 전라남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748,547 (1.2)	573,946 (0.9)	519,846 (0.7)	-16.7
	연구개발인력	7,361 (1.2)	7,069 (1.1)	6,981 (1.1)	-2.6
	연구개발조직수	457 (1.4)	573 (1.5)	560 (1.4)	10.7
특허	출원	2,533 (1.5)	2,660 (1.6)	2,700 (1.7)	3.2
	등록	1,445 (1.5)	1,079 (1.4)	1,201 (1.5)	-8.8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전라남도는 비옥한 땅, 청정 바다, 아름다운 섬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 농업진흥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면적이 모두 전국 1위이며, 바다, 섬, 해안선의 전국 비중은 바다 37%, 섬 65%, 해안선 45%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오염되지 않은 땅과 바다를 보유한 전남은 친환경 농수산업 1번지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매년 4천만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 관광객이 뽑은 지역호감도 전국 2위, 여름휴가 종합만족도 전국 3위를 달성하였고, 여수 경도에 1조원대 투자 본계약 체결(17년 1월), 진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1,007실) 및 신안 압해 다솜리조트(245실) 건설 등 관광인프라도 확충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관광객과 대중국 교역의 증가, 서울-광주 송정 간 호남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전남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은 권역별로 본격적으로 육성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은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착공, GE빛가람에너지밸리 사무소 개소 등이 이루어졌다. 생물의약산업은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와 장흥 한약 비임상연구시설이 착수되고 통합의학센터가 개원되었다. 자동차산업은 영광 ‘e-모빌리티 부품평가 연구센터’개소, 영암 차부품 평가장비·연구지원동 가동이 이루어졌다.

전남이 발전과제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과 협력하여 6년간 기업 500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지역산업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해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생물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지역특성을 살린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속 지원하며,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에너지신산업·드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농수산업은 FTA 확대에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품질 유기농업 확산, ‘저비용 고소득’ 농어업 구조 정착, 수출망 확대 및 유통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관광 분야는 매력있는 관광 인프라 확충, 서비스 수준 향상 및 홍보 강화, 전남의 역사적 인물 및 전통 문화예술자원 등의 가치 재조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인구·취약계층 증가 등에 따른 맞춤형 복지를 위해 출산 친화형 환경 조성, 취약지역 생활복지 강화, 도민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 과제로는 「가고싶은 섬」가꾸기와 「숲속의 전남」만들기를 추진함으로써 섬의 생태·문화자원을 보전·정비하여 매력을 극대화 하고, 전남을 공원처럼 가꾸고 매력있는 경관숲과 돈이 되는 소득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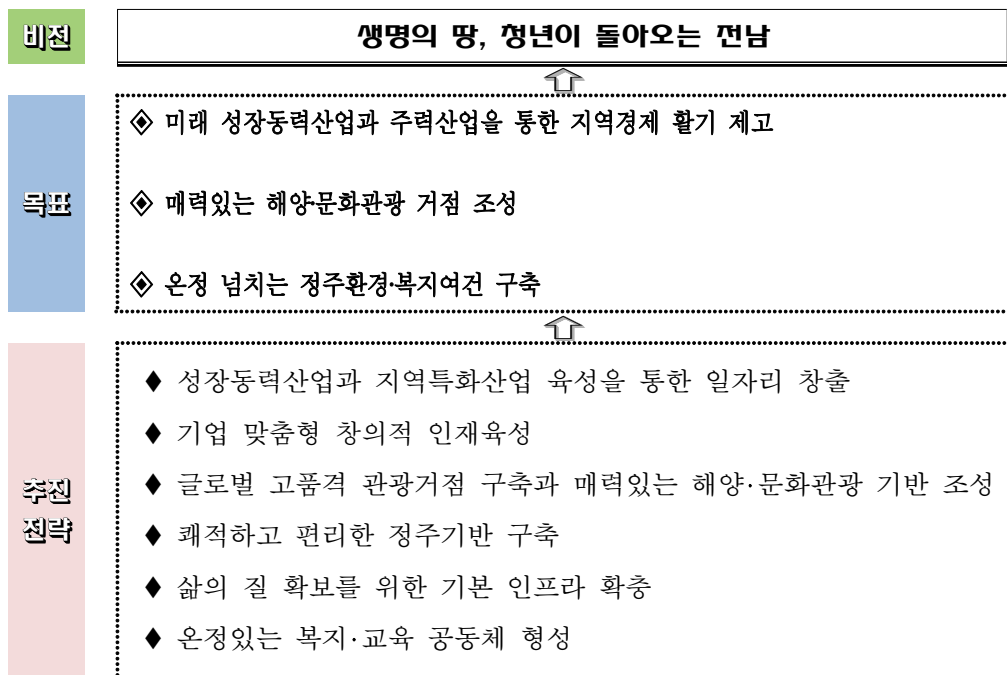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전라남도의 발전비전은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다.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전남 인구가 회복되도록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드는 것이다. 생명의 땅 전남은 ‘삶의 전 영역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매력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산업, 식량산업, 해양산업, 관광·문화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공공의료, 생활복지 내실화,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3-14-1

전라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전라남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목표는 ‘미래 성장동력산업과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기 제고’, ‘매력 있는 해양·문화관광 거점 조성’, ‘온정 넘치는 정주환경·복지여건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2. 추진전략

전라남도의 발전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해 6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활기’를 위해 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기업 맞춤형 창의적 인재 육성을 추진한다. ‘매력’을 위해 글로벌 고품격 관광거점 구축 및 매력있는 해양·문화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기반을 구축한다. ‘온정’을 위해 삶의 질 확보를 위한 기본인프라 확충과 온정 있는 복지·교육 공동체 형성을 추진한다.

추진전략별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성장동력 산업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의 과제는 기술혁신을 위한 신성장산업 동력화, 지역 연고산업 고도화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 지원·육성, 강소형·중견 기업 및 창조경제 거점 육성,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인적자원 중심 주력산업 육성, 지역자원과 연계한 행복한 농어촌일자리 창출 등이다. 또한 기업 맞춤형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실용중심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글로벌 고품격 관광거점 구축과 매력있는 해양·문화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해양관광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 해양관광 및 미래형 해양레저기반 구축, 남도 고유 전통 문화자원 및 관광자원 가치제고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기반 구축을 위해 활력있고 경쟁력 높은 지역 중심지를 재창조하고, 녹색생태환경 보존으로 정주여건을 강화하며, 유기적인 기능연계를 위한 생활권기반 개발 축을 설정한다.

삶의 질 확보를 위한 기본 인프라 확충의 세부과제는 삶터 복원을 위한 연계협력형 생활인프라 확충, 생활권 중심 문화기반 확충을 통한 도·농간 격차 해소,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정비, 행복실현을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등이다. 온정있는 복지·교육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수요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구축, 취약지역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보건·교육 거점인프라 조성, 생애주기형 창의교육기반 조성, 농산 어촌 교육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분야별 6대 추진전략과 함께 남북 3축과 동서 3축의 지역발전축을 설정하였다. 남북 방향에서 1축은 목포~무안~영광의 물류·에너지·생태문화관광축, 2축은 장성·담양~나주~장흥~완도의 역사·문화·신산업중심축, 3축은 구례~광양~순천~여수의 물류·신소재·관광산업축으로 구성된다. 동서 방향에서 1축은 영광~장성·담양~곡성~구례의 신산업·산림휴양관광축, 2축은 무안~나주~순천·광양의 물류·교육 동서교류축, 3축은 목포~완도~보성~여수의 남해안 해양관광축으로 조직한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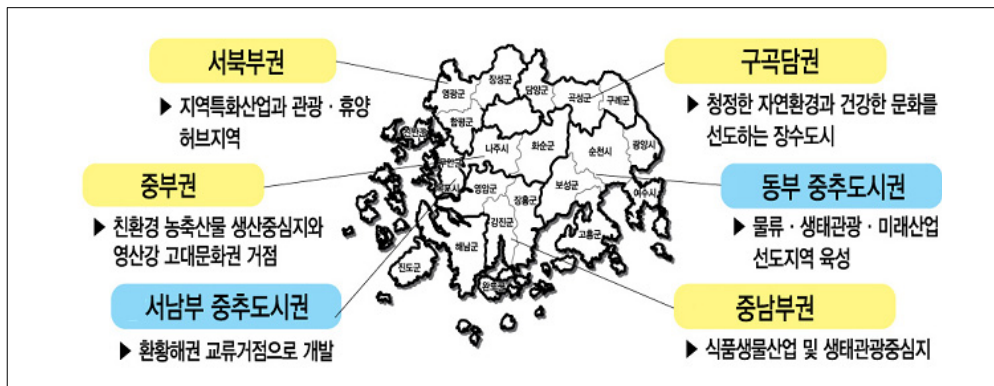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전라남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지리적 인접성과 기능적·역사적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중추도시생활권 2개, 농어촌생활권 4개 등 6개 권역으로 구성하였다.

생활권별 비전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중추도시권 가운데 서남부권(목포·해남·무안·진도·신안)은 환황해권 교류거점이고, 동부권(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은 물류·생태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 육성이다.

그림 3-14-2 전라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농어촌생활권의 경우 구곡담권(담양·곡성·구례)의 비전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문화를 선도하는 장수도시 조성, 중부권(나주·화순)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중심지와 영산강 고대문화권 거점, 서북부권(함평·영광·장성)은 지역특화산업과 관광·휴양 허브지역, 중남부권(장흥·강진·영암·완도)은 식품생물산업 및 생태관광 중심지 등이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2014년 8개, 2015년 6개, 2016년 4개, 2017년 5개 등 총 23개 사업이 선정되어 6개 생활권에서 추진되었다. 서남부권은 취약지역 청소년들이 한 시·군에서 여러 시·군의 박물관·미술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동전시를 하였고,

동부권은 편백림을 비롯한 숲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치유 프로그램 전문교육, 진료 봉사단 운영, 숲속 순회 음악회 등을 추진하였다. 광주에 인접한 중부권은 도시의 유희 인력과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연결시키는 도농 일자리 연계사업을 추진하였고, 구곡담권은 농촌지역에 특히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3개 지자체간 협력으로 진로 적성검사와 적성개발 캠프를 운영하였다. 서북부권은 장성에 생활권 치매거점병동을 건립하여 생활권내 모든 시·군의 중증환자들이 이용하도록 하였고, 중남부권은 농부 장터를 서울에서 공동으로 열었고, 하나의 시군에서 개최하기 어려운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지역생활권 관련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창조지역사업은 문화예술, 생태자원, 유희시설 등을 활용하여 '새로우면서 차별성이 있고 독특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2014년~2015년에 순천 철도문화 마을 만들기 등 7개 사업이 선정되어 48억원(국비 36, 지방비 12)을 들여 추진했고, 2016~2017년에 음악으로 하나되는 하모니 강진 등 7개 사업이 선정되어 59억원(국비 43, 지방비 16)의 사업을 추진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 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기초생활 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인 서비스 공급 기능 확대와 함께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7년까지 16시·군 80지구에 총사업비 8,010억원(국비 3,268억원, 도비 173억원, 시·군비 4,569억원)을 투입하여 농촌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농어촌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 생활 기반이 미흡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및 소득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했다. 2017년까지 632지구에 2,559억원 투입되었다.

새뜰마을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 마을과 도시 빈곤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선정된 새뜰마을사업

은 도시지역 2개소(여수, 순천), 농어촌지역 10개소(담양, 곡성, 보성, 화순, 장흥,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신안) 등 총 12개소에 3~4년간 394억원(국비 278억원, 지방비 116억원)을 지원했다. 2016년에는 도시지역 3개소(목포, 여수, 장성), 농어촌지역 8개소(광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해남, 함평, 완도)등 총 11개소가 선정됐고, 2017년에는 농어촌지역 8개소(여수, 곡성, 장흥, 강진, 해남, 무안, 완도, 신안)가 선정되어 2019년까지 350억원(국비 260억원, 지방비 9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 사업은 버스 이용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 현재 위치, 운행정보, 도착 예정시간을 버스정류장 안내기,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국토교통부 광역 BIS 구축 공모 사업에 5개 사업(목포~영암~무안~신안 구간 등)이 선정되어, 국비 1,868백만원을 지원받는 등 총 6,07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버스 운행노선 409km에 BIS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류장 안내기(BIT, 305식), 차량단말기(OBE, 173식)를 설치했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전라남도는 '좋은 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실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실국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과 일자리창출을 연계·관리하는 '일자리 창출 목표관리제'를 추진했다. 일자리창출 목표관리제는 도 재정을 투입한 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일자리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일자리창출을 함께 이행토록 함으로써, 재정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난 3년간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일자리창출을 최우선으로 고려,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고용유지에 크게 이바지 했다.

대학내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은 2016년부터 학교 교육 등을 마친 졸업자 위주의 일자리지원 정책을 학교 안으로 확대하여 재학생들에게 산업현장 중심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 취업을 통해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2016년 6개 대학·6개 과정에서 2017년 8개 대학·10개 과정으로 확대되었다. 대학별 교육과정은 순천대학교 2개 과정(청정바이오식품, 기능성 화학소재), 동신대학교 2개 과정(미래에너지, 문화관광), 목포대학교 1개 과정(조선해양),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1개 과정(플랜

트 엔지니어링), 목포해양대 1개 과정(해양레저), 순천제일대학교 1개 과정(안전설비), 청암대학교 1개 과정(보건의료서비스), 목포가톨릭대학교 1개 과정(휴먼서비스)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10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인적자원 개발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일자리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기관과 협약하여 사업을 제안하고 고용부가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전기에너지·에너지ICT 등 10개 사업에 총 509명이 취업했다.

청년 일자리의 산실인 빛가람 혁신도시는 에너지신산업 입주기업 공장 가동과 제품 생산, 연구기관 유치 등 기업유치가 가속화되고 있다. 2015년 1월에 한전, 한전KDN 등 전력공기업과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자치단체가 에너지밸리 조성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에너지밸리에 에너지 연관 기업 500개 유치, 일자리 3만개 창출을 목표로 투자유치에 매진했다. 2017년까지 250개 기업유치 목표를 뛰어넘어 누적 280개 기업과 에너지밸리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투자금액도 1조원(1조 1,836억원)을 돌파했고, 7,631명의 고용창출 목표도 달성했다.

SW융합클러스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W중심사회 실현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 전략산업에 SW를 접목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6년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유치했으며, 에너지신산업과 SW 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나주시, 한전, 한전KDN이 참여하여 2020년까지 320억 원을 투자한다. 주요성과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기술개발 27건, 기술 및 제품 상용화 95건, 시제품 제작 83건 지원 등을 통해 212명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SW관련 창업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24개의 창업을 지원하고 취업연계 및 SW 저변확대 교육 등으로 1,204명의 인력을 양성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역대표산업도 중점 육성되었다.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주력 산업 고도화로 새로운 활로가 모색되었다. 석유화학은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국고 확보('18년 115억원), 첨단고무소재상용화 지원센터 및 CO₂ 고부가가치사업화 지원센터 착공('17년 12월) 등이 이루어졌다. 철강산업은 뿌리산업기술지원센터 착

공('17년 8월),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부품단지 조성(대통령공약 반영, 3,000억원)과 수출형 기계부품 가공기반 구축(308억원)이 추진되었다. 조선산업은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기술개발 센터 실시설계('17년 7월),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지원센터 착공('17년 12월), 선박수리지원시스템 구축 국고 확보('18년 29억원) 등이 이루어졌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전라남도와 전남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어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해 이들이 '전남형 강소기업'을 거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구축해 주는 프로젝트다. 2017년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20개사)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총매출액은 1,372억원으로 전년대비 8.8%(110억원) 증가했고, 총 고용인원은 547명으로 9.2%(46명) 증가, 수출은 334억원으로 53%(115억원) 증가, R&D투자는 26.5억원으로 39.1%(7.4억원) 증가했으며, 지식재산권도 50건을 출원·등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급신장하는 기업 성장의 표준 모델이 됐다.

전남도는 2015년에 '2018년 관광객 5천만 시대 실현'을 목표로 한 「전남 관광발전 종합계획(2015~2018)」을 수립하고, 총 430개소('지정 관광(단)지' 33개소, '문화관광자원' 211개소, '생태녹색관광자원' 등 186개소)에 걸쳐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17년 전남을 방문한 관광객이 5,079만명을 기록, '2018년 관광객 5천만 시대 실현'이라는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했다.

전남도는 '해양관광(Blue Tourism) 시대를 선도'하고 '섬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해 2015년부터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첫 해인 2015년 선정한 「가고 싶은 섬」 낭도(여수)·연흥도(고흥)·가우도(강진)·소안도(완도)·관매도(진도)·반월박지도(신안) 등 6개 섬이 해양관광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통해 섬의 매력에 점차 선명해지면서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4년에 269,703명에 불과했던 관광객이 2017년에 1,066,534명을 기록, 무려 295%나 급증했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전남도는 각 대학의 자율성, 다양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수요 맞춤형 인

력양성을 통해 대학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2012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로 목포대, 동신대 2개 대학이 선정되어 321억원을 지원했다. 목포대는 156억원으로 해상풍력·신해양산업(바이오·수산·관광 등) 분야의 가족회사 지원(511개사), 기술지도(1,297건), 인력양성(4,712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동신대는 사업비 165억원으로 문화관광, 생명바이오, 에너지 환경산업 분야의 가족회사 지원(653개사), 기술지도(926건), 인력양성(4,851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단계 사업은 2017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로 동신대, 목포해양대, 순천제일대, 전남과학대 4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총 439억원을 지원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선취업후진학 과정은 중소기업의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 관련 희망·실제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지역 기업에 취업시킨 후 대학진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도와 목포대학교 및 참여기업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불산학융합지구 내 목포대학교 계약학과(조선시스템학과)를 개설·운영하고, 조선해양분야 기업과 공동으로 특성화고 졸업생을 선발·고용하여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이다. 2014년부터 운영한 조선시스템학과는 산업체 26개 기업, 특성화고 10여개 학교가 참여하여 특성화고 졸업생 90여명이 조선해양 관련기업에 취업했으며, 참여 학생들은 도와 기업에서 각각 대학등록금 50%, 25%를 지원받아 주간에는 일하고 야간 또는 휴일에 전공 관련 교육을 4년간 이수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지역 산업체의 훈련수요 조사를 통해 확보한 수요를 기반으로 재직자 능력향상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수요조사 및 교육훈련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공동 훈련센터 및 파트너 훈련기관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2017년에는 공동 훈련센터 3개소, 파트너 훈련기관 11개소에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해, 최종 2,343명(양성 519명, 향상 1,824명)의 훈련성적을 냈다.

대학 창업보육센터 사업은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신규 창업자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 기술, 마케팅을 지원하며,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순천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목포대학교, 동신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등 7개 대학

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전년도 운영성과에 따라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운영비를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억 8천 1백만원을 지원했다.

창업 선도대학 사업은 창업지원 인프라 및 성과 등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지원 거점 기관으로 육성하여 대학생 및 일반인의 기술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2015년 창업 선도대학에 공모를 통해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한 순천대학교는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우수 창업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청년창업자 육성을 위한 창업교육과 창업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업화에 성공한 창업기업에 마케팅과 자금 지원, 지정멘토 기술 지도, 지식 재산권 출원 지원, 전략분야 지원, 사후관리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창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17년 순천대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신규창업 24명, 지재권출원 32건, 매출액 21,936백만원, 신규고용 39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복원

전라남도도는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문화복지 향유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공립문화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했다. 2017년 말 현재 문예회관 24개소, 박물관 36개소, 미술관 7개소 건립하여 운영 중이다.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은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화관이 없는 시군에 소규모의 영화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 10월 장흥 ‘정남진 시네마’가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2016년 2월 ‘고흥 작은영화관’이 들어섰다. 2017년에는 진도 ‘아리랑 시네마’(7월), 완도 ‘빙그레 시네마’(9월), ‘곡성 작은영화관’(12월)이 차례로 문을 열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지역 역사·문화·관광 등 특색 있는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시 및 마을 자체가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2015년 여수 밤바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전남도내 7개소(문화도시 5개소, 문화마을 2개소)로 확대됐다.

문화산업 육성은 지역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로 추진되고 있다. 2016년 발굴한 고흥, 보성, 장흥군 설화를 이용해 동화

책 및 e-book 개발, 스탬프 투어 개발, 웹툰을 제작했다. 조선말 남계우 화백의 ‘화접도’를 기반으로 수목화를 주제로 한 VR콘텐츠를 개발하고, 2017년 국제수목프레비엔날레 기간 관람객들에게 콘텐츠를 선보였다. 또한 시군 전시관·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ICT 융복합 콘텐츠 개발하고 체험형 전시공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예향 남도의 우수한 문화예술 유산을 사회적·시대적 재조명함과 동시에 전남 성장동력의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남도문예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특히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전통정원 복원 및 연계, 종가문화 활성화, 국립마독박물관 건립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공적 산업화 모델로 발전시키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전남의 우수한 자연경관 가치를 극대화하고 소득·경관수종의 식재와 가꾸기로 공원 같은 「숲속의 전남」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아름다운 전남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자 자투리땅과 도로·철도역 주변, 학교, 관공서, 섬, 관광지, 도시공원, 가로변, 하천변 등을 ‘매력 있는 경관숲’으로 가꾸고 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3년 차인 2017년에 경관숲 452만 그루, 소득숲 705만 그루 등 1,157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2017년에 심은 꽃나무도 2015년 246만 그루와 2016년 700만 그루를 합한 것보다 많은 1,110만 그루를 심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심은 나무는 3,278만 그루, 꽃나무는 2,156만 그루에 이른다.

전남도는 지역특색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2016년부터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까지 서남해안 해안도로에 대한 대상지 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16년 시범사업으로 영광, 강진에 24억 원을 투입해 해안도로를 따라 17.4km의 가로수길을 조성했고, 2017년에는 여수, 장흥, 신안 등에 20km의 가로수길을 조성했다.

자연환경보·이용시설 설치 사업은 지역별로 우수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함으로써 주민에게 생태적 특성을 알게 하여 자연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목포 특정자생식물원과 해남 고천암 조류생태관, 함평 곤충생태관, 곡성 자연학습원 및 생태마을복원, 담양 하수처리장 생태공원 조성, 완도 꽃누리 생태공원 등 1998년부터 2017년까지 1,117억원(지특 531, 시군비 586)을 들여 37개 사업을 완료했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복지 서비스는 수요자에 따라 차별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고령화 되어 있는 농촌 주민에 대한 맞춤형 기초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면단위 공중목욕장 120개소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동, 목욕, 검진 및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였다. 공중목욕장 이용 주민은 761천명으로 해당 농어촌 지역 노인인구가 연 평균 약 3.5회를 이용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 사업은 마을의 어르신들이 주로 생활하는 경로당의 전기료 부담 경감을 위해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7억원을 투입하여 325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전라남도는 2017년부터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301네트워크’를 시행하고 있다. ‘301네트워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보건·의료·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게 One-Stop으로 보건·의료·복지 포괄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순천의료원에서는 전담사회복지사와 전담간호사 인력을 확보하여 2017년 205명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입원진료 기간 중 입원에 필요한 물품이 없는 경우는 입원 kit,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공동 간병실 등을 지원했고, 퇴원하여 사회복귀 시 방문간호, 기타 생활용품 등 실질적 맞춤서비스를 지원했다.

열악한 농어촌 출산환경 개선과 도시로의 원정출산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9월부터 해남군에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운영했고 2018년 5월 강진군에 공공산후조리원 2호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전남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실 10실, 신생아실, 프로그램실, 좌욕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민간산후조리원보다 저렴한 이용료로 최상의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인원은 2015~2017년 동안 637명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 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서비스 및 가정 친화적 주거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귀 촉진과 자활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2017년에 거주시설 총 36개소(법인 20, 개인운영 16), 이용시설 159개소를 운영 지원했다. 생활인원은 1,403명이며 종사자는 615명이다. 2017년에는 강진군과 곡성군에 생활시설을 신축하고, 담양

군, 곡성군 장흥군 영광군에는 이용시설을 신규 설치했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 8개소와 이용시설 8개소에 대해 개보수 및 장비보강사업을 추진했다.

전남은 다문화가족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인 가구가 53.3%로 전국평균 41.9%에 비해 많은 편이다. 따라서 전남도는 삼성전자와 협약을 통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억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다문화가정에 지원했다. 출산·양육지원(440명), 한국어 교육(211명), 한부모 중고생 자녀 장학금(66명), 초등학생 직업체험(1,095명), 다문화가정 직업교육(109명)도 다문화가정에 제공됐다. 2016년부터는 화순전남대병원과 협약을 통해 저소득 다문화가정 13명에게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전남은 2014년부터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100원 택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마을 주민들이 콜택시를 불러 100원만 내면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에 데려다주고 100원 이외의 차액은 지자체가 택시회사에 보전해 주는 제도다. 100원 택시사업은 오지마을 주민이 의료, 문화 등 공공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통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2014년에 73개 마을, 1,010명 주민이 이용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는 741개 마을, 21,622명 주민 이용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 100원 택시 사업은 주민참여를 통한 모범적인 복지사업으로 높게 평가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우수사례 공모에서 '사회혁신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제15장 경상북도

제1절 경상북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경상북도의 인구는 2017년 기준 270만명으로 2014년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었다. 지역 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99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보다 낮은 연평균 3.2% 성장하였다. 1인당 GRDP는 전국 수준보다 높은 3,679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연평균 성장률은 3.0%로 전국 성장률을 하회하였다. 수출액은 전국적 추세와 동일하게 2014년 515억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가 2017년 반등하여 44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32.7%로 2014년의 29.1%에 비해 3.6%p 높아졌으나,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를 크게 하회하였다.

표 3-15-1 경상북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경북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	1,565,248	1,635,555	-	4.9	92,697	94,988	98,815	-	3.2
인구(천명)	51,328	51,529	51,696	51,779	0.3	2,701	2,703	2,700	2,692	-0.1
1인당 GRDP (만원)	2,927	3,068	3,192	-	4.4	3,471	3,547	3,679	-	3.0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	526,757	495,426	573,694	0.1	51,476	43,458	38,518	44,870	-4.5
취업자 (천명)	25,897	26,178	26,409	26,725	1.1	1,441	1,433	1,443	1,447	0.1
재정자립도 (%)	50.3	50.6	52.5	53.7	2.2	29.1	30.0	33.3	32.7	4.0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경상북도의 산업별 비중은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48.5%, 제조업 45.8%, 광업·농림어업 5.7%로 나타나 17개 광역시·도 중 울산시, 충청도에 이어 세 번째로 제조업 비중이 높았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등이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금속가공제품’이 13.2%로 가장 높았으며,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가 각각 18.0%, 34.8%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1차 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의 비중이 높았다.

2014년 대비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이 증가한 반면,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종사자수는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이 증가하였고, 생산액은 ‘금속가공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3-15-2 경상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4.5	3.8	4.1	4.7	3.8	4.2	4.6	4.0	4.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9.1	7.9	4.4	9.3	7.9	4.6	9.6	8.1	4.6
비금속 광물제품	6.0	4.7	2.7	6.1	4.8	2.8	6.1	4.7	2.8
1차 금속	7.2	11.3	21.6	7.1	10.4	19.1	7.0	10.7	19.5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3.3	9.7	5.2	13.2	10.0	5.9	13.2	10.0	6.5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7.2	20.0	37.8	6.3	19.8	36.7	5.5	18.0	34.8
전기장비	4.6	5.2	4.0	4.4	5.5	4.5	4.5	6.1	4.6
기타 기계 및 장비	11.2	7.0	3.1	11.6	7.1	3.5	12.0	7.2	3.7
자동차 및 트레일러	11.0	12.1	7.4	11.3	12.8	8.1	12.4	14.8	9.8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4.8%, 28.6%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의 업종이 지역내 서비스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 6.1%, 종사자수 7.7%, 매출액 10.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기준은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등이 증가하였다.

표 3-15-3 경상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6	3.5	14.4	1.3	2.4	7.2	1.5	3.2	11.5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	1.8	4.0	1.8	2.6	7.7	1.3	1.8	3.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6	7.4	9.6	8.9	5.2	6.1	11.2	7.5	10.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5.7	7.2	15.1	6.1	7.7	10.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9	14.0	12.4	4.1	10.2	6.9	4.8	11.8	10.4
교육 서비스업	16.2	9.3	6.1	15.7	25.4	23.9	14.4	8.0	4.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6	35.5	31.6	11.7	24.5	18.2	13.8	34.8	28.6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1.8	8.8	8.3	8.9	5.8	5.4	11.1	8.1	8.5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38.9	19.7	13.6	41.9	16.8	9.6	35.8	17.2	12.1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3. 혁신활동 현황

경상북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2.4조원, 연구개발인력 24,660명, 연구개발조직수 1,420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는 2014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연구개발인력과 연구개발조직수는 증가하였다. 타 광역시·도와 마찬가지로 연구개발비는 감소추세인 반면 연구개발조직수는 증가하고 있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조직수 모두 감소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7%p, 연구개발인력은 0.1%p, 연구개발조직수는 0.2%p 감소하여 각각 3.5%, 3.9%, 3.6%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도 중에서는 연구개발 혁신활동이 높은 수준이지만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7,048건이며, 등록은 4,594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와 등록건수는 각각 연평균 -1.3%, -10.4%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가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의 경우 특허 출원건수는 0.1%p 감소, 등록건수는 0.3%p 감소하여 각각 4.3%, 5.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3-15-4 경상북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2,696,556 (4.2)	2,667,983 (4.0)	2,417,710 (3.5)	-5.3
	연구개발인력	24,393 (4.0)	25,341 (4.1)	24,660 (3.9)	0.5
	연구개발조직수	1,201 (3.8)	1,456 (3.9)	1,420 (3.6)	8.7
특허	출원	7,235 (4.4)	6,858 (4.1)	7,048 (4.3)	-1.3
	등록	5,723 (5.9)	4,491 (5.9)	4,594 (5.6)	-10.4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6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경상북도는 찬란한 신라 천년의 불교문화와 신비의 가야문화 그리고 선비정신의 유교문화 등 민족 문화의 본산지이자 한국 문화의 얼굴이다. 또한, 새마을운동과 자연보호운동 등 국민정신운동의 발상지이다.

이 밖에도 수려한 자연경관, 335km에 달하는 긴 해안선과 청정 동해 등 다양한 잠재력과 개발수요를 간직하고 있고, 세계적인 철강 섬유산업의 중심지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대학(38개)이 소재하여 풍부한 연구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풍부한 문화자원(전국 문화재의 20%)과 천혜의 관광자원, 지역의 높은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문화·관광중심지로 가꾸어 나가고 있다. 특히, 2016년 3월 이전한 경북도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남부경제권을 연결하는 ‘한반도 허리 경제권’을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사통발달의 강력한 ‘동서 성장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지역이 낙후지역으로서 균형발전이 필요하나 수도권 규제완화, 인력 및 기업의 역외 유출로 성장력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북은 지역민이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선도하여 지역생활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도청시대에 발맞추어 권역별 특화된 발전전략을 이끌어내야 한다. 따라서 북부권은 농생명산업벨트, 서부권은 스마트 융복합산업벨트, 동해안권은 해양신산업벨트, 남부권은 창의지식서비스벨트 구축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경북·포항 두 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주축으로 창조경제의 역량을 강화하고, ICT융복합·로봇·에너지·물융합·첨단의료 및 바이오 등 5대 주력산업 육성과 경북의 미래를 선도할 미래 신성장산업 및 ICT 전진기지 구축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신라, 유교, 가야 문화의 풍부한 전통 문화자원을 명품브랜드로 발전시키고, 이를 활용한 경북만의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 및 수용태세 개선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경북관광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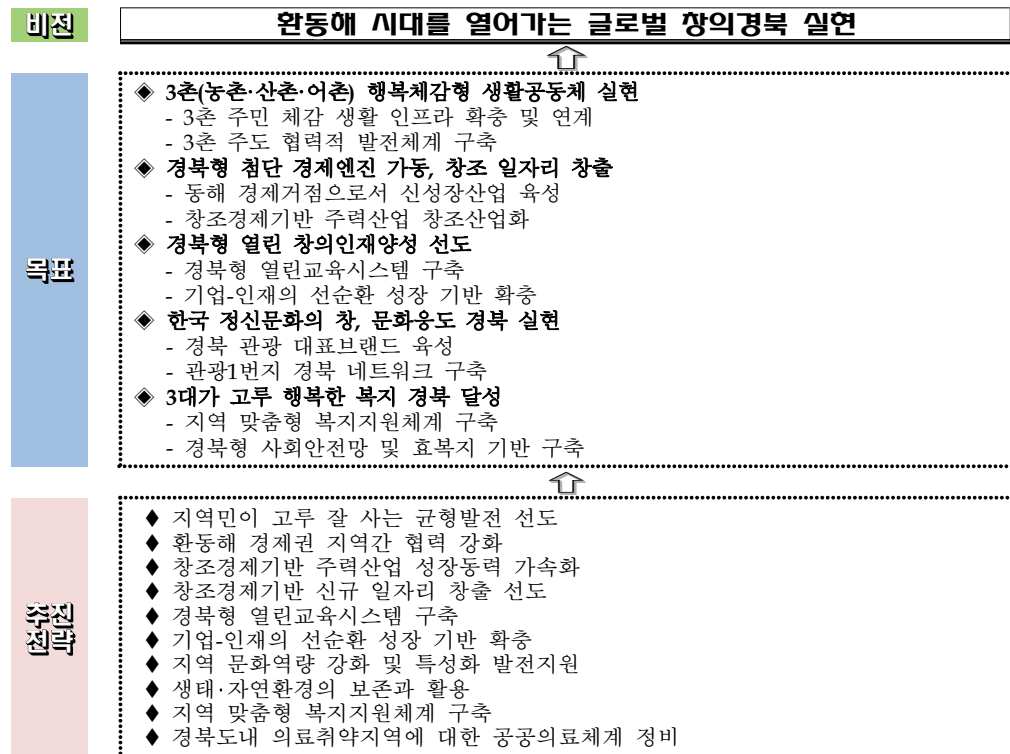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더불어 사는 경북을 위해 현장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강화, 자활사업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실현,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 기반 강화, 장애인 사회참여 환경 조성 등 취약계층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및 추진배경

경상북도는 유구한 역사, 문화, 우수 인적자원, 첨단과학·산업기반 구비 등 발전 잠재력이 풍부하다. 이러한 가능성을 기반으로 경북 발전계획의 최종목표는 ‘환동해 시대를 열어가는 글로벌 창의경북 실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환동해 경제권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해 경북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행복한 경북실현을 지향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주민체감형 행복 생활 공동체 실현’, ‘경북형 첨단 경제엔진가동, 창조일자리 창출’, ‘경북형 열린 창의인재양성 선도’, ‘한국 정신문화의 창, 문화융도 경북실현’, ‘3대가 고루 행복한 복지 경북 달성’등 5개 목표를 설정하였고, 5대 분야·21개 실천과제 추진을 통해 경북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3-15-1 경상북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경상북도는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안동·예천 도청이전 신도시 중심으로 인구 10만 거점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구미·김천권(지식경제 기반), 포항(과학), 경주(역사문화) 등과 연계하여 안동, 구미, 포항 3대 중추도시 생활권 중심 거점도시 조성 및 거점-중소도시 간 상생(Win-Win)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농연계 생활권 및 농어촌 생활권내 특화사업 발굴, 주민 실생활 밀착형 기초 인프라 확충 및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주민 체감형 행복 생활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자리는 창조경제에 기반을 둔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구미 IT융합산업 첨단화, 포항 철강 단일산업의 다변화 방안 모색, 그린에너지, IT융·복합산업 등을 통한 경북 미래첨단엔진 가동, FTA에 대응한 글로벌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IT융합 창조생태계기반인 바이오, 원자력,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경북형 창조산업 일자리 육성에 힘쓰고 있다. 도청 이전을 발전 모멘텀으로 활용하여 신성장 거점을 마련하고 권역별 특화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교육·인재양성은 경북형 열린 창의인재양성을 선도하기 위해 진로와 연계된 중등교육 정착, 특성화 교육 활성화, 지방대학 특성화 및 연구역량 강화, 지방대학과 중소기업 간 산학연관 선순환 시스템 구축, 평생교육으로 행복한 지역 경북 창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북 평생교육 인력, 인프라 기반 경북형 평생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대학 및 연구소, 기업 등이 상호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 및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경북이 보유한 유교문화와 생태자원의 가치 극대화를 통해 전통적 삶·문화·자연이 인간과 조화되어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신라의 역사와 정신을 간직한 천년고도와 천혜의 해양·산림자원을 연계한 재미있는 글로벌 관광브랜드와 경북만의 킬러 문화콘텐츠 개발로 경북관광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황해경제권 형성에 대응한 자원개발산업, 해양에너지산업, 해양융합산업, 해양레저 및 휴양산업 등을 중점 육성하여 신성장 동력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3대가 고루 행복한 복지 경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 장애인, 아동, 청소년, 저소득

층 스스로 역량을 키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상호 호혜적 공동체를 구축한다. 또한 지역사회구성원이 주도하여 지역기반 공동체를 형성하고, 각종 사회적 위험을 함께 예방하고 해결하는 선순환 복지사회 구현에 힘쓰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역량 제고, 취약계층 대상 고용-복지 연계, 공동체 형성 기반 마련, 주민 주도 복지친화도시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경북지역의 지역행복생활권은 13개 생활권으로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9개 생활권과 타시도 연계 4개 생활권으로 구성되었다. ‘꿈愛그린 도시 프로젝트’, ‘농촌 일손 부족해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업’, 농(農)-테크 상생 교육 프로젝트, ‘삶의 현장, 청년들의 행복한 JAB 만들기 사업’,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조성사업’, ‘ICT기반 마음톡톡(Talk Talk) 행복지원 프로젝트’, ‘산업단지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문화, 관광, 복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림 3-15-2 경상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경북은 도청이전 신도시를 중심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세부 추진계획은 ‘지역 중심지 활력 증대’,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확충’, ‘지역 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 ‘지역 교통·물류망 확충’이다.

첫 번째 ‘지역 중심지 활력 증대’의 목표는 중소도시 원도심 재활성화를 통한 도시의 종합적 기능 회복과 읍·면 중심지의 거점 기능 강화이다. 주요 사업인 ‘경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에서 주민 참여를 강화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사업내용을 전환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지구로 추진하였고, 읍·면 발전협의회, 추진위원회, 총괄 계획가가 참여하여 주민주도의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2014년 67개 읍면 → 2015년 72개 읍면 → 2016년 79개 읍면).

두 번째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확충’의 목표는 주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기초인프라 확충과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다. 주요 사업으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광역버스정보체계 구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 ‘비점오염저감사업’ 등이 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691세대가 도시가스 수준의 LPG를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여 연료비를 절감하였고, 가스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가스보급 사각지대인 농어촌 마을단위에 LPG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였다. 안동~영천, 경산~영천 간 광역BIS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청신도시 내 수요자 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으로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 대구와 연계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상생발전의 기대효과도 높였다. 비점오염원이 발생하여 수질오염 지역 대상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안동, 영천, 청송에 생태습지 녹지대를 조성하여(25억원) 생태복원과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였다.

세 번째 ‘지역 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의 목표는 지역 주민 주도 창조적 지역개발을 구현하여 지역공동체 기반 주민협력체계의 구축이다. 주요 사업인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은 귀농 가구 13년 전국 1위를 달성하였고(‘16년 귀농가구: 2,323가구(3,568명), ‘16년 귀촌가구: 37,261가구(52,042명 / ‘17년 6월 29일 통계청 발표 자료), 귀농인의 집 10개소(300백만원)를 조성하였다.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도 마을(권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주도형 마을발전과제 발굴 및 현안해결 등의 성과를 도출하여 농촌활성화지원센터 1개소, 현장포럼 6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네 번째 ‘지역 교통·물류망 확충’의 목표는 생활권 간 통행편의 제고를 위한 양질의 교통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이다. 주요사업인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위치: 울산~포항~삼척)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조 1,872억원이 투입되어 통일시대 대비 남북7축 국가간선망 구축, 관광자원 개발, 21세기 환동해양권 물류허브 강화, 지역균형개발의 촉진제가 될 것이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경북은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 특화, 연고 산업 육성, 경북형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및 투자유치 활성화, 산업단지 창조경제 거점화, 지역 과학기술 인프라 기반 창조경제 기반 구축, 경북 관광산업 활성화 및 대표브랜드 육성, 농어업·농어촌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 부여로 등의 일자리 창출 전략을 추진하였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의 생태축으로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방지를 위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한다. 2017년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임산물을 저장·건조·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태계 보존에 기여하였다. 목재문화체험장(봉화 외 6개소)을 운영하는 ‘산림경영자원육성사업’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홍보로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 세외수입도 증가하였다. 최근 2년간 세외수입 평균 증가율은 5%(2016년 44,688천원, 2017년 49,302천원)이다.

경상북도내 주요과수(사과, 포도, 복숭아, 뽕은감, 자두, 배, 체리) 도단위 통합마케팅을 시도하는‘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 경북연합 과실 취급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도단위 공동브랜드‘daily’사업의 추진체계가 구축되어, 경북연합마케팅추진단 목표 취급액 3,000억원의 91.2%인 2,735억원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포항, 김천, 안동, 영천, 영주, 상주, 의성, 영양, 예천, 봉화 등 10개 시·군 52개소에 과실전문생산단지 2,166ha를 조성하여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였다. 농산물 생산(1차), 가공(2차), 유통·외식·체험(3차) 기술이 융합된 농산물가공사업장 15개소와 체험장 1개소가 설치된 ‘농식품 가공체험기술보급사업’은 지역 대표 이미지 부각 가공제품 마케팅으로 농업·농촌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홍보 효과가 컸고, 가공사업 자녀 승계로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었다.

지역 산업환경과 특성에 맞는 유망 IT·SW 업체의 창업부터 판로 개척까지 육성하는 '지역 SW산업 성장지원 사업'은 (주)원소프트다임 외 28개사를 지원하여 경북내 유망 SW기업을 선도 기업으로 이끌어냈다.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투자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투자촉진사업'은 경북도내 투자유치기업 25개사(지방 신설 3, 지방증설 1, 수도권지방이전 1, 스마트공장 20)에 400억원을 투자하여 145명의 고용창출 실적을 거두었다.

이전공공기관과 인근지역의 연계방안 및 산학연클러스터 구축(2017년 3필지, 15,938㎡ 분양(52.8% 완료), 잔여 23필지, 145,113㎡),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사업 발굴·추진 등 지역 혁신 확산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였고(12개 기관, 5,561명), 유치원 3개(공립 1, 사립 2)와 초등학교 1개가 개교하여 정주여건 조성 추진에 박차를 가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경북은 '경북형 열린 창의인재교육시스템 구축'을 설정하고, 경북형 창조적 인재양성과 평생교육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창조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능력중심의 지역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추진전략을 세웠다. 주요사업으로 '경상북도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은 생애별·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주요 실적으로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대구대학교, 14개 사업),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지원(24개소, 6100명),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지원(23개소, 1700명),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11개 사업, 900명), 경북 평생학습박람회 개최(23개 시군 참여, 32만명), 평생교육 중심도시 구축 지원사업(9개 사업, 3200명), 찾아가는 도민 참여교육(20회, 6900명) 등이 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특색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여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문화 조성에 기여하였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정부는 문화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제시하였고, 경상북도는 풍부한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경북만의 '한국 정신문화의 창, 문화융도 경북실현' 전략을 추진하였다.

주요사업으로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육성사업'은 사업추진주체 고령군의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가야 핵심콘텐츠를 방문객이 즐길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고 인지도 개선홍보, 지역주민 참여사업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중점 추진내용은 가야금 콘텐츠 육성, 대가야 콘텐츠 개발 캠프 페스티벌 개최 등이 있다. 3대 문화권과 산수자원을 보유한 경북은 한국 최고의 문화·산수원형을 간직했으나 이를 활용한 산업화가 미흡해 수립한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은 경북의 유교·가야·신라의 역사문화 자원과 낙동강·백두대간권 친환경 녹색자원의 관광 자원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였다.

문화시설 확충과 지역특화 문화행사의 지원을 통해 주민 문화 향수권 확대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내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는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은 공공도서관, 공립박물관, 미술관, 지역문화회관 등 문화시설 건립·지원으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성장과 문화융성에 기여하였다. 경북도립 공공도서관·구미 양포도서관·청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경산시립박물관 전시시설 리모델링사업,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문경문화원건립, 포항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 경산생활문화센터조성, 향사 박귀회명창 기념관건립 등의 추진성과도 거두었다. 또한 '청송수석 꽃돌박물관'은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전문해설사를 배치하여 고용창출의 성과도 올렸다. 도내 영화관이 없는 시·군 대상 영화관람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은 영양, 고령에 이어 영천에 추가 건립되었다.

생활체육 참여인구를 확대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우선배치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 224명(일반지도자 117명, 어르신지도자 107명)을 배치하였고, 연인원 113만 여명이 참여(일반생활체육 58만여명, 어르신생활체육 55만여명)하였다. 지역실정에 맞는 계층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년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맞춘 생활체육 지도자를 적절히 배치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체육인재 육성과 건전한 스포츠 여가활동 증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도내 18개소(구미, 문경2, 경산, 군위2, 의성2, 성주, 상주, 청송, 영천, 영양2, 청도, 예천, 봉화, 울릉)에 지방체육시설,

2개소(구미, 경산)에 생활체육공원, 6개소(안동4, 청도, 예천)에 운동장생활체육시설, 5개소(구미, 고령2, 예천, 봉화)에 노인건강체육시설을 건립하였다. 건전한 체육·여가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고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양질의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체력 증진을 도모하였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목적은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자정능력이 저하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건강한 하천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13개 시·군(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청도, 고령, 성주, 울진, 칠곡) 18개 하천에 총 사업비 561억원(국비 301, 지방비 260)을 투입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천 오염정화, 생태습지 조성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확보하였고 생태 관찰·체험 시설 설치, 휴식 공간 조성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경북은 저출산·초고령 사회화,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일상생활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기본 충실형 복지모델을 지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복지 부문 목표를 ‘서민이 걱정 없는 복지 경북’으로 설정하였다. 주요사업으로 대상자(0~12세 아동 및 가족)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은 23개 시·군에 국비 6,515백만원으로 취약계층아동 12,167명, 사례관리 4,943명, 신규 대상자 1,698명을 발굴하여 사각지대의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였다.

‘방과후돌봄’사업도 23개 시군에 15,044백만원(국비 7,484도비 2,245 시군비 5,275)을 투입하여 학습 및 예체능, 문화, 체험활동으로 아동 육성을 도모하였고, 사업 점진 평가, 인센티브 지원, 컨설팅, 지원인력 교육으로 서비스 질을 높였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양질의 보육 환경 조성과 공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국공립시설을 신축하였고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였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시설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다(2017년도 어린이집 확충 7개소 달성(‘16년도 실적 2개소 대비 5개소 증가)). 또한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과 참여활동을 제고하여 건전 청소년을 양성하는 ‘청소년시설 확충’사업도 청소년의 체험활동 및 건전한 인격형성을 위한 활동 공간을 확보(2017년 9월 1개

소 준공)하였고, 노후시설 기능보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시설 환경을 조성하였다(청소년수련시설 건립(5개소) 및 기능보강(2개소)). 지역협의체 및 지역자원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체계 구축과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도 지역 청소년들의 요구조사를 기초로 자기개발활동과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였고,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 역량을 배양시켰다(대상 청소년 596명, 우수기관 4개소(경주, 김천, 안동2)).

20개 시군에서 자격요건에 맞는 언어발달 지도사 22명을 채용하여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 시행으로 아동의 건전 성장을 도모하는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19개 시군에서 21명을 채용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의 적합한 교육으로 아동의 원만한 발달을 촉진시켰다(채용률 95%(계획 22명, 21명 채용) 달성).

'주민 정신건강 지원 확대'사업의 목표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자살예방사업을 통해 도민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6년 11개소에서 2017년 4개소가 더 확충되었다. 또 게이트키퍼(6,961명), 생병사랑병원·약국(425개소), 생명사랑 마을, 농약안전보관함(10개 마을, 509가구)이 운영되었다. 자살 재시도 방지를 위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 100명을 양성하였고 협력응급의료기관 지정 30개소도 운영되고 있다.

제16장 경상남도

제1절 경상남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경상남도의 인구는 2017년 기준 338만명으로 2014년 335만명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108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성장률보다 낮은 3.3%로 증가하였다. 1인당 GRDP는 전국수준과 비슷한 3,221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연평균 성장률은 2.7%로 전국 성장률을 하회하였다.

수출액은 2014년 511억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가 크게 반등하여 2017년은 59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45.0%로 2014년의 42.4%에 비해 2.6%p 높아졌으나,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를 하회하였다.

표 3-16-1 경상남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경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	1,565,248	1,635,555	-	4.9	101,028	103,995	107,795	-	3.3
인구(천명)	51,328	51,529	51,696	51,779	0.3	3,350	3,365	3,374	3,380	0.3
1인당 GRDP (만원)	2,927	3,068	3,192	-	4.4	3,055	3,123	3,221	-	2.7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	526,757	495,426	573,694	0.1	51,142	47,020	45,274	59,474	5.2
취업자 (천명)	25,897	26,178	26,409	26,725	1.1	1,660	1,691	1,704	1,723	1.2
재정자립도 (%)	50.3	50.6	52.5	53.7	2.2	42.4	43.3	43.5	45.0	2.0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경상남도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53.6%, 제조업 42.8%, 광업·농림어업 3.7%로 나타났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기타 운송장비', '금속가공제품' 등이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가 19.3%로 가장 높았고, 종사자수·생산액은 '기타 운송장비'가 각각 22.2%, 26.6%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등 업종의 비중이 높았다.

2014년 대비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식료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차 금속' 등 경남도 내 제조업 비중이 낮은 업종들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등 경남 제조업에서 비중이 높은 업종들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등이 증가하였고, 생산액은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등이 증가하였다.

표 3-16-2 경상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5.5	4.5	4.4	5.8	4.7	4.6	6.1	4.9	4.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7.3	7.5	5.3	7.6	7.7	5.6	8.4	8.1	6.1
1차 금속	5.4	5.5	6.8	5.6	5.1	6.8	6.0	5.1	6.8
금속가공제품(기계·기구 제외)	18.7	13.6	10.9	18.4	14.0	12.6	18.5	14.6	11.5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1.7	2.0	1.2	1.7	2.0	1.1	1.6	1.8	1.2
전기장비	4.9	5.8	6.1	4.9	6.6	7.8	5.1	7.2	9.4
기타 기계 및 장비	19.8	16.7	16.9	19.5	14.6	15.8	19.3	14.9	1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8	11.0	10.8	11.0	11.3	11.8	10.4	11.3	11.7
기타 운송장비	10.3	23.3	29.0	9.3	24.3	24.7	8.6	22.2	26.6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은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종사자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2.6%, 24.2%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등의 업종이 지역내 서비스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 6.7%, 종사자수 9.3%, 매출액 9.6%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종사자수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등의 업종이 증가한 반면,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감소하였다. 매출액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증가하였다.

표 3-16-3 경상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3	2.8	7.4	1.1	1.9	4.2	1.1	2.3	4.6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	2.2	4.5	1.5	2.7	7.3	1.1	1.8	3.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9	9.4	17.8	11.8	7.0	24.1	14.2	9.5	32.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6.5	9.0	10.9	6.7	9.3	9.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5	13.1	12.2	3.7	10.1	6.4	4.2	12.5	8.3
교육 서비스업	18.3	11.6	6.1	17.0	23.8	17.4	16.3	9.5	4.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7	34.8	32.3	11.7	24.5	17.8	13.3	32.6	24.2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0.6	8.0	7.7	8.5	5.4	3.5	10.2	7.3	5.3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35.7	18.1	12.0	38.2	15.6	8.5	32.7	15.1	8.6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3. 혁신활동 현황

경상남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2.2조원, 연구개발인력 26,369명, 연구개발조직수 1,912개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조직수는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연구개발인력은 소폭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는 변동없이 3.2%를 차지하였으며, 연구개발인력은 0.2%p 감소하여 4.2%, 연구개발조직수는 0.2%p 증가하여 4.9%를 차지하였다. 경남은 광역도 지역 중에서는 연구개발 현황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6,625건이며, 등록은 3,538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와 등록건수는 각각 연평균 9.7%, 1.0%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가 증가하였다. 특허 대부분 광역시·도가 특허등록 건수가 감소한 반면 경남은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전국대비 비중의 경우 출원 및 등록의 전국대비 비중이 4% 수준으로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는 큰 폭(0.7%p)으로 증가하여 각각 4.1%, 4.3%로 나타났다.

표 3-16-4 경상남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2,062,025 (3.2)	2,094,806 (3.2)	2,193,717 (3.2)	3.1
	연구개발인력	26,507 (4.4)	27,718 (4.5)	26,369 (4.2)	-0.3
	연구개발조직수	1,500 (4.7)	1,782 (4.8)	1,912 (4.9)	12.9
특허	출원	5,502 (3.4)	5,548 (3.3)	6,625 (4.1)	9.7
	등록	3,465 (3.6)	2,840 (3.7)	3,538 (4.3)	1.0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지역별 잠재력 및 발전과제

경상남도는 환태평양 경제권의 경제, 물류의 중심지이면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신항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등과 인접해 있어 해외로부터 개방거점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역주력산업기반을 바탕으로 높은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의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세계적 산업지대로 발전해 왔으며, 굳건한 제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계, 조선, 로봇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이끌어 왔다. 이러한 기반산업은 해양플랜트, 항공우주산업, 나노융합산업과 항노화산업 등과 같은 미래 대응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있어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미래의 지역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남해의 수려한 해양자원과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영남알프스 등의 산악자원, 낙동강과 섬진강 등의 수환경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관광산업 및 해양산업을 개발중이며, 세계적인 역사문화자원인 대장경, 가야문화를 토대로 한 역사문화관광 등은 향후 문화관광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창원, 김해 등 경남의 동부지역에 편중된 산업단지에 비해 진주, 사천 등 서부지역은 경제적 성장의 기반이 취약하여 지역불균형의 성장을 이루어 왔다. 거제를 비롯한 경남의 남부 산업지역은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조선업이 침체되면서 지역경제의 성장이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방향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남도의 발전과제는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추어 기존의 기계, 조선, 항공 등의 제조업과 이를 바탕으로 한 IT, BT, CT와 같은 신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신항만과 경제자유구역 등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통해 항만·물류산업을 발전시켜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풍부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근간으로 한 관광산업의 구축과 함께 해양레저스포츠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건강과 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남 서북부지역은 항노화산업의 메카로서 체계적으로 개발·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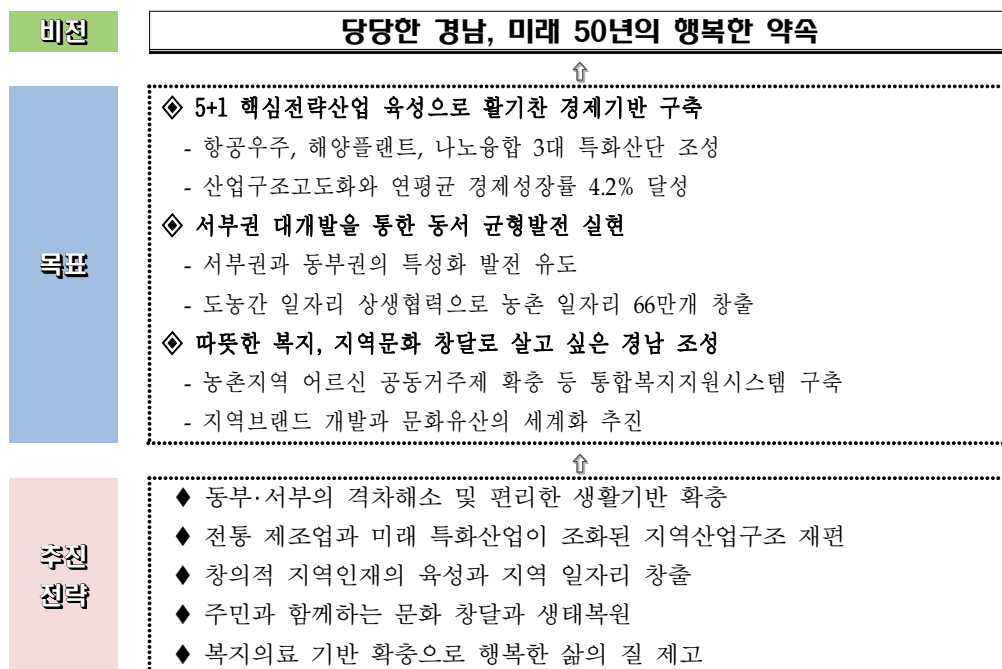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및 추진배경

경상남도는 '당당한 경남, 미래 50년의 행복한 약속'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별 신산업 육성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발전비전 달성을 위하여 '5+1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활기찬 경제기반 구축', '서부권 개발을 통한 동서 균형발전 실현', '따뜻한 복지, 지역문화 창달로 살고 싶은 경남 조성'의 3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온 산업지대로서 미래 산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기계, 조선 등 기반산업의 구조고도화를 비롯하여 미래 성장동력인 로봇·항공우주·해양플랜트·나노·항노화 등 첨단 제조업과 융복합산업의 창조적 혁신을 이루도록 새로운 산업 발전기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도내 균형발전을 통하여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림 3-16-1 경상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경남도의 발전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부와 서부지역의 격차 해소 및 편리한 생활기반 확충’, ‘전통 제조업과 미래 특화산업이 조화된 지역산업구조 재편’, ‘창의적 지역인재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창달과 생태복원’, ‘복지의료 기반 확충으로 행복한 삶의 질 제고’의 5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첫째, 경남도는 동부지역에 산업 및 행정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서부지역 농어촌 지역의 개발이 지체되어 동서지역간 발전격차가 심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서부지역 대개발의 추진과 함께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통해 경제·문화·생활 등 지역간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둘째, 그동안 경남 발전을 견인해 온 조선·기계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 대표산업의 다각화 등 산업구조의 재편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기계·조선 산업 등 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첨단산업과 융복합산업인 항공우주·해양플랜트·나노융합·항노화산업 등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셋째,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의 사회·경제를 이끌 수 있는 지역대학을 육성하여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지역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또한 적정규모의 경쟁력 있는 농산촌 학교 육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취약지역 학습환경을 개선하여 인재양성이 가능한 교육여건을 널리 구축하고자 한다.

넷째, 지역문화 융성을 위해 주민참여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유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며, 지역특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의 문화산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광역생태축, 광역녹지축 복원과 보전을 통해 도 전체의 환경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환경정책 참여 확대 등 환경보호의 광범위한 인식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다섯째, 지역별·이용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도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도록 하며, 생애주기별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구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전환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의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 거점 육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지역복지의료를 보급·확산시키고자 한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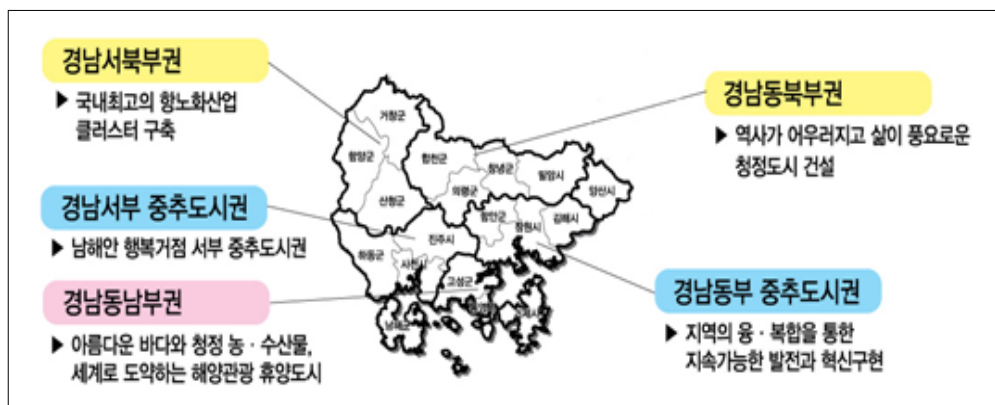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경상남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중추도시권 2개, 농어촌연계권 2개, 도농연계권 1개로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중추도시권은 경남 동부중추도시권(창원·김해·함안), 경남 서부중추도시권(진주·사천·남해·하동)이 있으며 농어촌연계권은 경남 서북부권(거창·함양·산청), 경남 동북부권(합천·밀양·창녕·의령)이 있다. 도농연계권의 경우 경남 동남부권(통영·거제·고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인접한 광역시의 생활권인 부산중추도시 생활권에는 김해·양산시, 울산중추도시생활권에 밀양·양산시가 각각 포함되어 있다.

2014~2017년까지 4년간 선정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연계협력)사업은 총 20개 사업으로 약 422억 원의 사업비(타시도제외) 중 약 319억원의 국비를 확보·진행 중에 있다. 2017년의 경우 거창·산청·함양·합천에서 추진 중인 웰니스관광 상생일자리 창출사업 등 총 5건(인접 중추도시권 2개 사업 포함)이 선정되어 2019년까지 약 105억원(국비 74억원 확보, 타 시도제외)의 예산으로 추진된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선도(연계협력)사업을 통해 시·군간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 활력증진 및 주민 삶의 질 보장,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림 3-16-2 경상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경상남도의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내용은 크게 지역중심지 활력증진,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확충, 지역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 지역 교통·물류망 확충 등 4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지역중심지 활력증진의 경우, 구 마산재생프로젝트(마산포 르네상스), 진주 등 10개 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을 통해 단순한 물리적 재개발이 아닌 사회·경제·문화 등 종합적 지역재생을 선도하는 도시재생 추진으로 도심활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32개 지구 정주환경 개선 등 배후지역 주민의 생활서비스 거점기능 회복에 힘쓰고 있으며 그 외에도 생활권 및 서부권 거점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및 서부권 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지속적 확충개량으로 송수관로·배수지·배수관로 설치 등 39개소의 농어촌생활용수를 개발하고 광역·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 식수원 등 207개소의 소규모수도시설을 개량하는 등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합하여 선도(연계협력)사업 13건, 취약지역 생활여건(새뜰마을)사업 25건(도시 7건, 농어촌 18건), 창조지역사업 2건 등 총 40개 사업에 약 29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웰니스관광 상생 일자리 사업의 경우 생활권 내 지역 생태·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웰니스 통합 관광 벨트를 구축하여 지역 연계 체류형(체험형)의 거점 관광산업 육성을 추진중이다. 웰니스 관광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운영, 브랜드 개발 등 총 30억원이 투입되어 치유·관광·체험 산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참여를 통해 생활권 내 자생적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 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지역 교통·물류망 확충 분야의 경우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사업, 광역도로 건설(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및 동김해 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 등 광역교통망 인프라 구축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또한 진주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의 경우 물류기반시설 확충과 원활한 산업 물류 수송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재 145면(대형 103면, 소형 42면)이 관리운영중이며 추후 약 450면까지 확보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경상남도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산업단지 고도화로 지역거점조성 지원’, ‘지역기반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의 항목을 마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2017년 기준 도내 990명을 선발(목표대비 104.9%)하여 직접일 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그 중 952명(목표대비 137.4%)의 취업 취약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등 도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적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였다.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창출) 사업은 2017년 기준 약 54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예비)사회적 기업 참여기업 월평균 62개, 참여인원 월평균 341명이 참여하였다. 사회적 기업 참여근로자의 경우 해당 지역 일반 및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여 매출증대, 생활안정,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적 어려움 해소, 고용창출, 좋은 일자리 증가 효과 등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을 지원하고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등 농촌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우수업체 지원 등 농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약 221억원을 투입하였고 3,76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농업기반 정비사업에는 약 310억원을 투입하여 밭작물 재배기반 조성 17개소(592ha), 노후수리 시설(저수지 등) 개보수로 재해발생 요인 사전제거 51개소 등 농업생산활동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확충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였다. 지역농촌지도 활성화 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 방문자가 전년대비 18% 증가하였으며 농가소득은 22%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농기계 농작업 안전 교육을 36회(644명) 실시하여 농작업 재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였으며, 농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을 39회 287명 실시하여 농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예방에 기여하였다.

어업분야에서는 수산물가공육성사업에 약 138억원을 투입하여 가공공장, 보관·포장시설, HACCP 시설 등 수산물산지가공시설 18개소와 냉동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수산물처리저장시설 2개소를 확충하였다. 해양 및 수자원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 및 해양관광시설 이용객 수는 '17년 기준 375,914명으로 나타났으며, 고성 당항포 해양마리나 해양레저스포츠학교는 방문객 수 5,241명, 일자리 창출 170명의 성과를 거두었다. 거제 근포해양마리나의 경우 요트계류장 운영에 따른 지역민 고용유발 효과 증대 및 인근 해상관광자원(체험마을, 해수욕장)으로의 접근성 개선으로 방문객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는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에는 '17년 기준 약 64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관련 일자리 창출 17명 이상 달성하고 어촌체험관광단지 방문객수가 전년대비 110%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산림분야의 경우 산림경영자원육성사업에서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과 나무은행 운영·조성을 추진하여 공무원 및 상근인력 연 7,656명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였다. 나무시계, 화분대, 책꽂이 만들기 등의 무료 체험프로그램이 연 96회 이루어졌고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192회, 20,501명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또한 목재문화체험장 8개소를 경상남도 전 지역에 안배·배분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눈높이에 맞는 체험공간을 확충함과 동시에 버려지는 수목의 재활용을 통하여 예산절감 기여 가능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였다.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사업에는 약 269억원이 투입되어 지자체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시설, 치유의 숲,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지역생태숲 조성 등 국민의 산림휴양 및 녹색공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산림휴양 시설을 확충하여 도민 생활·보건·휴양·치유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수목원 내 전문소원 조성 및 특성화사업, 야생화 및 분경전시회, 작은결혼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최로 관람객이 증대('16년 379,724명 → '17년 404,689명)하였으며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 등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를 통한 지역 내 상호 협력효과를 유도하였다.

지역거점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거점조성지원사업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시기에 맞추어 공업용수 보급 기반구축을 위한 관로매설, 배수지 설치 등을 추진하였다. 이에 시설용량 대비 일 최대 공급량은 67%로 목표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김해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양산 산막·덕계일반산업단지, 함안일반산업단지 등에서 총 8,814명의 고용효과를 보였다.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지역산업마케팅지원,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양방향노화힐링·서비스체험관 구축 등의 사업을 통해 참관객 약 15만명, 바이어 약 3만명, 상담액 6,129억원, 계약액 947억원 성과를 나타냈다. 공공기관, 수출유관기관, 기업체가 협업하는 마케팅을 통해 네트워크 강화 효과와 더불어 경제적·사회적 가치 향상으로 소통과 이해의 상생 효과를 견인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경상남도는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창조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능력중심의 지역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고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추진하였다.

초중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와 농산어촌 초·중학교 ICT 지원,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를 통합하여 현대화된 시설과 기숙사 등을 갖춘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고 기숙사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비, ICT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여 학습환경 개선 및 교육의 질을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전용교실 및 일반교실 등을 리모델링한 겸용교실 구축 및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중이며, 1군 1 우수 중학교에 학습 및 진로교육프로그램, 창의적 인재육성 사업 등 발판을 추진중이다. 경남형 기업트랙의 경우 지역대학과 산업체의 공동기술개발과 지원으로 지역·현장 맞춤형 고급 인력양성 및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도·대학·협약기업간 취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취업으로 인한 탈지역 현상을 줄이고 안정적 취업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하여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대학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평생 직업교육대학 육성 등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중이다.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평생학습 사회 구현하고 지역마다 학습네트워크를 조성하여 도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시·군 평생교육 특성화 사업, 평생교육정보망 운영, 평생교육정보매거진 발간 등 평생교육 진흥사업이 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진중이다.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 복원

경상남도는 '지역문화역량강화 및 특성화발전 지원',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지역관광산업육성',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의 중점 추진내용을 마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의 경우 226억원을 투입한 결과 문예회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공공문화시설 이용자 수가 196,009명으로 당해연도 계획치의 130%를 달성하였다. 또한 거제시립하청도서관 8명,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BTL사업 7명, 통영 시립도서관 BTL사업 8명, 사천시 사남초 어린이 영어도서관 BTL사업 12명 등 총 35명의 인력 창출 효과를 거두었다. 지역간 영상문화의 균형적 확산을 위해 극장 부재 지역 중심의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은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도·농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향유 불균형을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017년 기준 3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보물섬시네마, 합천시네마에 고용 18인, 매출 7억 8천만원, 관람객 수 138,085명의 지역경제 발전효과를 보였다.

관광수요의 양적증대 및 다양화와 질적 고급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자원 등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 육성을 위하여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총 790억원을 투입하였다. 2017년 기준 도내 유료 및 무료입장객 수는 약 3,700만명이며 지정관광지 및 국민여가캠핑장 이용료의 총 매출액은 약 34억원으로 목표 대비 128%를 달성하였다. 체육진흥시설지원 사업은 생활체육공원 조성, 지방체육시설 지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등의 분야에 약 527억원을 투입하여 지방체육 진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966개팀 51,940명, 연인원 562,479명의 동계훈련 유치실적과 전국규모 체육대회 48개, 85,720명이 참가 하는 실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67억원을 지원하여 8.49km를 복원하였다. 이를 통해 생태하천 생물종수가 전년도 대비 1개소당 평균 4개종이 증가하였으며 약 510개의 일자리 증가 효과도 창출하였다. 앞으로도 도시화 등으로 복개·훼손된 하천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9개소)하여 환경 훼손 및 교란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경상남도는 저출산·고령화, 다문화가족 등 가족구성변화에 따라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의 항목을 마련하여 복지·의료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 중이다. 금연, 절주, 비만, 치매관리 등 13개 세부 건강증진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포괄적 운영 중이며,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인식 개선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 의지 및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성이 미흡함에 따라 필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 이에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경남지역의 의료 취약지를 점검하여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취약지 보건기관의 시설개선, 의료장비 구축 및 현대화를 지원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을 통한 자립 및 가족부담을 경감시키고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자립 도모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응급안전서비스, 단기 및 주·야간보호서비스, 그룹홈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중이다.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는 약 173억원이 투입되었다. 2017년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299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516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776명으로 총 2,591명의 일자리 수를 창출하였다. 또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객 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016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712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4,683명 등 총 16,411명이 이용하여 목표치 대비 136.4%의 달성률을 나타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위한 청소년시설확충 사업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인프라 구축 격차를 해소하고 노후 수련시설의 개·보수를 통한 쾌적한 수련활동 환경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2017년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수는 46,492명으로 목표대비 107.1%를 달성하였으며 시설가동률은 72%(263일)로 목표대비 120%를 달성하였다.

제17장 제주특별자치도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는 2017년 기준 66만명으로 2014년 61만명에 비해 5만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17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연평균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연평균 9.6% 성장하였다. 1인당 GRDP은 전국 수준보다 낮은 2,734만원이나, 연평균 성장률은 6.4%로 전국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수출액은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이어간 기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은 1.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수출액 연평균 증가율도 5.2%로 전국 연평균 성장률 0.1%를 크게 상회하였다. 재정자립도는 39.6%로 2014년의 34.0%에 비해 5.6%p 높아져 재정자립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전국 재정자립도인 53.7%를 하회하였다.

표 3-17-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제주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1,485,505	1,565,248	1,635,555	-	4.9	14,087	15,366	16,911	-	9.6
인구(천명)	51,328	51,529	51,696	51,779	0.3	607	624	642	657	2.7
1인당 GRDP (만원)	2,927	3,068	3,192	-	4.4	2,415	2,564	2,734	-	6.4
수출액 (백만달러)	572,665	526,757	495,426	573,694	0.1	106	121	129	155	13.5
취업자 (천명)	25,897	26,178	26,409	26,725	1.1	322	339	355	374	5.1
재정자립도 (%)	50.3	50.6	52.5	53.7	2.2	34.0	36.4	38.2	39.6	5.2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이며, 2016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제주도의 산업별 비중은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84.5%, 제조업 3.2%, 광업·농림어업 12.3%로 나타났으며, 다른 시·도에 비해 광업·농림어업의 비중이 높고, 제조업의 비중은 낮았다. 특히 서비스업은 17개 시·도 중 서울시(93.7%)에 이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6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식료품', '비금속 광물제품' 등이 지역 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특히 '식료품'은 사업체수·종사자수·생산액 비중이 각각 42.3%, 45.2%, 36.0%로 타 업종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는 '음료 제조업' 업종의 비중이 높았으나, 그 외 다른 제조업의 비중은 미약한 수준이었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제주의 제조업 비중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식료품'의 사업체수·종사자수·생산액 비중은 감소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비금속 광물제품'은 모두 증가하였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등도 사업체수·종사자수·생산액 비중이 증가하였다.

표 3-17-2 제주특별자치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42.9	45.5	41.0	43.8	50.5	41.4	42.3	45.2	36.0
음료	5.4	13.6	19.9	5.3	14.0	19.0	4.7	13.7	18.5
목재 및 나무제품	0.5	0.0	0.0	0.5	0.0	0.0	0.5	0.0	0.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4.9	5.9	4.1	4.8	5.7	3.5	5.6	6.2	3.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5	0.7	0.2	1.0	0.0	0.0	2.3	1.7	0.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5.4	4.3	2.9	5.3	4.0	2.4	3.7	3.3	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6.3	4.8	4.0	5.8	4.8	3.9	6.5	5.3	4.4
비금속 광물제품	22.4	15.3	21.0	22.6	16.4	21.9	23.7	18.0	24.5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5	1.1	0.7	1.9	1.3	0.9	2.8	2.3	1.6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지역별 제조업 주요 업종(9개)의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2016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2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7.7%, 매출액 기준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20.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15년 이후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 비중이 7~8%대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 비중이 모두 증가하여 제주의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의 관광·레저 산업 활성화로 인해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표 3-17-3 제주특별자치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7	1.2	1.6	0.6	0.9	1.2	0.7	1.3	1.8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9	5.5	19.2	2.0	4.9	14.8	1.9	5.1	15.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6	6.8	15.6	11.2	5.8	12.3	14.6	8.1	20.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6.3	6.7	7.4	6.9	7.2	7.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5	13.5	7.2	7.8	11.4	9.1	8.5	14.3	10.8
교육 서비스업	17.6	9.9	4.5	16.4	22.2	17.6	15.3	8.3	4.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2	30.7	20.1	11.4	22.3	14.6	12.5	27.7	18.4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2.0	17.6	24.8	9.5	12.0	15.5	10.8	14.4	13.3
협회, 기타 개인 서비스업	32.6	14.6	6.9	34.8	13.9	7.5	28.8	13.8	7.4

주 1) 2015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이며, 2017년 자료없음.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5년부터 「전국서비스업조사」에 포함

3) 전국서비스업조사의 ‘교육 서비스업’은 학교기관을 제외한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만 포함(855~857)되며,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통신업(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업(70)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3. 혁신활동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16백억원, 연구개발인력 3,315명, 연구개발조직수 130개로 나타났다. 2013년과 비교할 때, 연구개발비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조직은 증가하였다. 특히 연구개발인력은 연평균 15.3% 증가하여 2년 사이에 822명이 늘어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14년에 비해 연구개발비·연구개발조직수는 소폭 감소한 반면 연구개발인력은 증가하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0.1%p 감소, 연구개발인력은 0.1%p 증가, 연구개발조직수는 0.1%p 감소하여 각각 0.2%, 0.5%, 0.3%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689건이며, 등록은 305건으로 2014년에 비해 특허 출원은 증가한 반면, 등록건수는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비중은 특허출원 및 등록 모두 0.4% 수준으로 타 광역시·도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 비해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없었다.

표 3-17-4 제주특별자치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160,882 (0.3)	131,968 (0.2)	155,459 (0.2)	-1.7
	연구개발인력	2,493 (0.4)	2,420 (0.4)	3,315 (0.5)	15.3
	연구개발조직수	122 (0.4)	114 (0.3)	130 (0.3)	3.2
특허	출원	574 (0.4)	630 (0.4)	689 (0.4)	9.6
	등록	413 (0.4)	290 (0.4)	305 (0.4)	-14.1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2017년 자료는 없음.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지역별 잠재력 및 발전과제

제주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거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제주도는 제주시 동권역, 서귀포시 동권역, 제주동부권역, 제주서부권역으로 구성된다.

제주인구는 상주인구의 지속적 유입 및 방문관광객의 증가로 2017년말 기준 678,772명으로 전년대비 2.7%, 최근 4년 간 평균 2.95% 각각 증가하였다. 아울러 최근 5년 간 제주도 전입인구는 평균 12.5%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방문관광객은 2011년 8,740천명에서 2017년에는 14,753천명으로 약 1.7배 증가하였다. 지역 내 귀농귀촌 인구는 ‘14년 8361명, ‘15년 11002명, ‘16년 12707명, ‘17년 14017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최근 4년 간 평균 5.65%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였고 그 경제규모는 작으나 성장률은 전국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지역에 인구가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그에 걸 맞는 지역균형발전 공공서비스 제공이 필요한바 금년부터 생활권을 4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말 기준 27,339천원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였고, 최근 4년 평균 4.8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는 1차산업 12.1%, 2차산업 18%, 3차산업 69.9%로 전국평균과 비교해서 1차 및 3차산업 비중이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들 산업 간의 융복합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형 6차 산업 제조지원 등 육성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주는 주요 성장거점, 인구 및 사회서비스가 제주시 동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를 4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공공서비스, 권역별 특화산업육성, 기간 인프라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제2공항건설, 제주신항건설, 서귀포크루즈항건설, 영어교육도시, 사회복지시설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는 청정한 환경과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라산과 꽃자왈, 오름에서 해양으로 자연지역이 연결되는 유일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는 해양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를 활용한 해양특화사업이 과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청정과 공존의 선도도시로서 동북아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탄소 없는 섬 제주구현’ 추진 등이 과

제가 되고 있다.

제주는 독특한 문화자원을 보유한 지역이다. 특히 여성해양문화(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독특한 해양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 문화의 섬 조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전체예산대비 문화예술 예산비중을 2014년 2.15%, 2015년 2.5%, 2016년 2.64%, 2017년 2.86% 등으로 매년 높이고 있다. 문화 인프라 구축,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국제문화교류 등은 문화예술분야 발전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녀문화마을조성, 해녀의 전당건립, 해양특화국립박물관건립 등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제주는 규모에 비해 풍부한 사회복지시설을 보유한 지역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총99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내 교육시설 현황은 총323개소로 균형적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경험률은 2014년 15.8%, 2015년 14.7%, 2016년 11.9%, 2017년 21.4%로 4년간 평균 약 16%를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위해 도민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운영과 협력적 교육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제주청년들을 위해 자립 및 활동지원, 지역 내 국립대학 육성을 위해 제주대학교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원 및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을 육성할 계획이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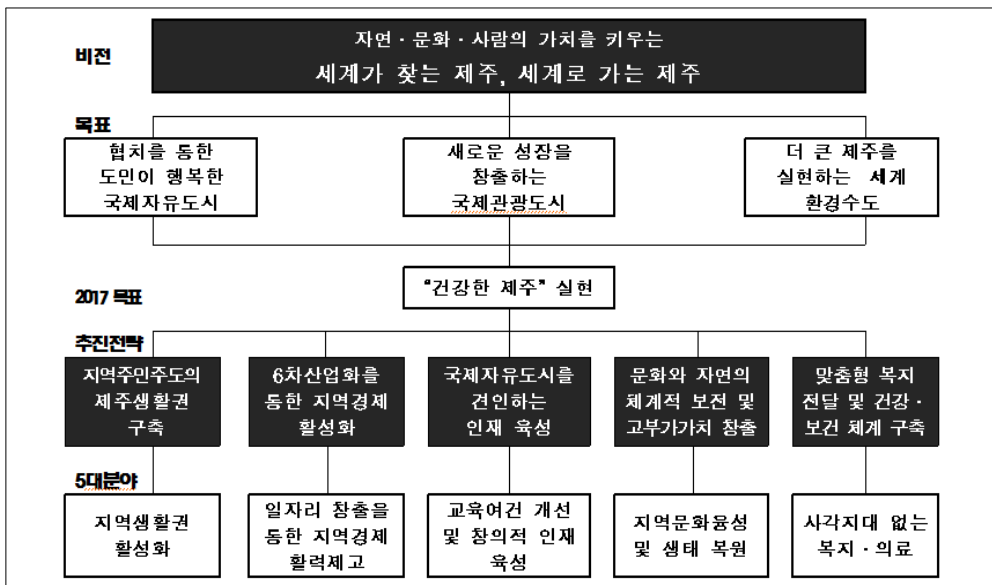
1. 발전비전 및 추진배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람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라는 비전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제주의 바람직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제자유도시, 국제관광도시 및 환경수도라는 3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건강한 제주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의 비전은 제주도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청정과 공존’이라는 핵심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청정’은 자연, 치유, 휴양, 건강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고, ‘공존’은 문화, 사람, 평화, 세계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의 비전은 내용적으로 국제자유도시, 친환경도시, 관광휴양도시 실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비전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지역발전과 통합적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그림 3-17-1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주민주도의 제주생활권 구축’, ‘6차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하는 인재육성’, ‘문화와 자연의 체계적 보전 및 고부가가치 창출’, ‘맞춤형 복지전달 및 건강·보전 체계구축’ 등 크게 5가지 추진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 추진전략에 따라 5대 분야를 설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5개년 발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생활권 5대 분야별 정책추진방향은 우선 제주생활권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주민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중심지 활력증진,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둘째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제주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정책은 일자리 창출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산업단지 고도화,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로 교육여건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은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육성,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넷째로 제주문화융성 및 생태복원을 위한 정책은 제주지역 문화역량강화 및 특성화 발전지원,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지역관광산업육성 및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 등을 위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의 실현을 위한 제주생활권 정책은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세부분야별 주요정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경제일자리분야는 고용의 질 상승, 안전 분야는 제주의 제1원칙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문화 분야는 제주의 문화정체성을 공유하는데 정책방향을 두고 있다. 복지는 평등과 가족 친화적 정책 및 취약계층지원제도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농정은 과학영농기반을 구축하는데 정책방향을 두고 있고, 생활 인프라는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관광정책은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데 그 방향을 두고 있다. 환경정책은 제주환경자산 보존과 관광문화 품격상승을 위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종합적으로는 일자리와 도민의 주도권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향상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2013년부터 2017년 12월말 현재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하는 제주권 1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총 7개 사업에 195.6억원(지방비 43억원 포함)을 투입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UNESCO 세계지질공원 인증 핵심 농어촌마을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 사업으로 6개의 유네스코 핵심 지질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질관광상품 도입과 지역특화상품에 대한 유네스코 브랜드를 통한 명품화를 추진하였다. 2015년에는 이 사업추진 성과로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심층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제주 올레길 주민행복사업’을 추진하여 제주올레브랜드와 지역문화·자연을 활용한 관광 상품개발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이 사업은 2017년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심층평가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그림 3-17-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활권 구성



2015년에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인 ‘주민행복 드림 Job프로젝트’를 유치하여 2017년까지 추진하였다. 이 사업추진을 통해

여 창업지원 14개소, 창직발굴 4건, 신규창업 4명, 일자리상담 168명, 창업·창직 교육 114명, 농촌융복합 상품개발 6건, 지역해설사 86명 양성 등의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2016년에는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및 지역교통물류망개선 등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특히 지역주도 협력사업인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2016년에는 지역마을 간 연계협력을 통해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밭담의 가치제고, 제주밭담의 브랜드와 및 농촌마을의 6차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해 ‘제주밭담을 활용한 농촌마을 6차 산업화사업’을 유치하였다.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은 932동을 철거 완료하여 목표대비 110%를 달성하였고, 농어촌상수도시설확충사업은 배수지 및 관로지 계획대비 100%의 실적을 이루어냈다.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삼양3수원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기본계획도 수립하였다. 해양환경 개선율은 177.4%를 달성하였다.

지역중심지 활력증진을 위해 추진한 2016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한림읍 올레길 정비, 금오를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을 완료하였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추 신촌 문화의집 신축공사, 조천리 지하수관정 개발공사, 애월읍 복지센터 조성공사 등을 완료하였다.

2016년 도시 활력증진사업으로는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다. 2017년에는 농어촌마을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신평리, 무릉좌기동, 동광리 및 우도면 등지에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기반시설확충과 도심지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구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아라-회천구간 79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섬속의 섬, 추자-마라 매력화 프로젝트’와 ‘제주서부권 수놓음 마을행복센터사업’을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민주도의 지역별 저발전 분야의 공공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예산(전액 지방비)으로 2015년부터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5~2017년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추진으로 25개 사업 64억원을

투입 및 현장컨설팅을 77회 실시하였고, 4개 지역 시범사업으로 12개 사업을 발굴하였다.

창조지역사업으로는 2014~2015년 최남단 글로벌 다문화 창조학교 운영(3.2억원), 2017년 큰고를 대정 제주돌담 다우멍 배우멍 사업(5.3억)을 각각 추진하였다. 특히 최남단 글로벌 다문화 창조학교 운영사업은 2015년 지역발전위원회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2013~2017년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마을단위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제주시 약 450억, 서귀포시 약 380억을 각각 투입하여 지역발전, 마을공동체회복 및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고 노력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행복마을 콘테스트에서는 제주시 지역의 선홍1리, 금악리, 와흘리, 청수리, 상가리 등이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다.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7개 지구 13개 마을의 사업을 추진·완료하였다.

계속사업으로 2013~2017년까지 5년 간 총34억원을 투입하여 도내 4개소(제주, 서귀포, 동부, 서부)에서 연 중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추진으로 5년 간 누적 농업인 27,257명, 31,277대, 50,437일의 임대실적이 나타났다.

2014~2017년 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주민주도마을만들기'사업에 제주시 1.2억원, 서귀포시 약 9천 7백만원을 각각 투입·추진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내실화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 사업에는 제주시 지역에서는 17개 마을이 참여하였고 이 중 한림3리는 2016년 농촌현장포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아울러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농촌현장포럼을 운영하여 성읍1리가 농촌현장포럼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2015년부터 추진한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으로 제주시 약 162억원, 서귀포시 약 251억원을 각각 투입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 사업으로 귀농 주택구입,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농업창업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귀농귀촌인 증가 등으로 타지역에서 제주도로의 순이동은 2014년 약1만1천명(이동률 1.9%), 2015년 약1만 4천명(이동률 2.3%), 2016년 약1만 4천6백명(이동률 2.3%)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15~’17년 3년 간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으로 약 66억원을 투입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제주권역은 근교농업 특성화사업으로 미니 과채류 등 새로운 소득작물 보급, 서귀포권역은 과수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으로 난방비 53% 절감, 동부권역은 밭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으로 양채류 파종 기계화율 100% 달성, 서부권역은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으로 양채류 파종 50%달성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지역중심지 활력증진을 위해 추진한 2016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한림읍 올레길 정비, 금오를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을 완료하였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추 신촌 문화의집 신축공사, 조천리 지하수관정 개발공사, 애월읍 복지센터 조성공사 등을 완료하였다. 2016년 도시 활력증진사업으로는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다.

2017년 도시 활력증진 신규사업으로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공동체 만들기’사업을 공모 및 선정 완료한 바 있다. 제주 구 국도건설을 위해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헬스케어타운과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등을 건설하였다. 2017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구축, 남원읍 해피맘만들기사업, 일도2동 온세대가 함께하는 문화여가 프로그램운영,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성산읍의 행복택시 운영사업은 도 전역으로 확대추진 예정이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차산업, 재래시장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정책으로 지역전략작목과 마을기업 육성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설현대화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창출지원, 중소기업경쟁력강화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3~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서귀포시에서는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7.9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행정안전부 주최의 전국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2015년 무릉외갓집 영농조합법인(우수상), 2016년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우수상), 2017년 온평모다들영 주식회사(장려상)가 각각 수상한바 있다.

지역전략작목의 부가가치 증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지역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에 2013~2017년까지 5년 간 약 96억원을 투입하였다.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사업으로 신품종 11종 출원·등록하였고, 지역전략작목 산학협력사업으로 2012~2014년까지 녹차산학협력단과 마늘산학협력단, 2015~2017년까지 제주키위산학협력단과 친환경감귤산학협력단을 각각 운영하였다. 2013~2017년까지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사업으로 녹차나물, 신품종 감자, 제주재래 단지무, 양배추 등의 작물 생산, 파종, 시비방법 등의 기술을 개발하였다. 지역전략 작목의 규모화·명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으로 약 405억원을 투입하였다. 사업추진결과 '13년 약1만 명 이었던 농업기술원 방문자 수가 2017년 말에는 약 30만 명으로 크게 증가, 농가소득향상 10%, 농업경영비 절감 15%, 생산량 증대 15% 등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 2016년에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추진으로 38개 과정 3,000명을 교육한 결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다.

2014~2017년까지 전통시장 및 중소물류기반 조성을 위해 약 386억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감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전통시장 시설물 신설 및 개보수로 2014년 20개 시장, 2015년 18개 시장, 2016년 19개 시장, 2017년 16개 시장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전년대비 매출 5%, 고객수 5.4%가 각각 증가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2014~2017년까지 ICT를 활용한 SW융복합 기술지원 및 인프라확대로 지역SW산업 육성을 위해 약93억을 투입하였다. 우선 '지역SW 융합과제 지원사업' 추진으로 고용창

출 134명, 매출증대 22억원, 지적재산권취득 91건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다음으로 ‘지역SW 성장지원사업’ 추진으로 사업화 14건, 전문인력양성 117명, 기업네트워킹지원 22건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2014~2017년까지 지역특성화산업육성을 위해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등 지원으로 약 13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년대비 기준 2014년 3%, 2015년 13.8%, 2016년 6.5%, 2017년 20.4% 각각의 수출증가율을 나타내었다.

2015년부터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에 약 4억원을 투입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식품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하였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농가형 소규모 사업장을 조성하여 45개소 농가소득 증대, 신규 농가 소득원 개발 11종, 전문가 육성 18개 과정 586명, 6차산업 상품개발 전문교육 75회 360명,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100회 등의 실적을 이루어 냈다. ‘16년에는 농산어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690ha),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150ha) 등을 추진하여 FTA체결에 따른 개방화에 대응하여 지역 과실경쟁력제고에 기여하였다. 농작물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제주 시 및 서귀포시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을 완료하였고, 순도 높은 우량종자(콩, 맥주보리)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2014~2017년까지 4년 간 어업기반정비사업으로 약 540억원을 투입하여 수산자원의 서식처제공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 사업으로 인공어초 시설사업으로 4년 간 총 3,128ha 시설, 어초어장관리사업으로 총195개소 시설상태조사, 해중립조성사업으로 64ha 조성, 패조류 투석사업으로 총 315ha투석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사업추진결과 최근 3년(‘15~’17년) 조사결과 단위노력 당 어획량은 비시설지에 비해 인공어초 어장에서 약 1.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소된 어업자원의 증강을 위하여 수산종묘관리에 약 86억원을 투입하여 2014~2017년까지 전복 등 총1248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그 결과 마을어업 총생산량 7,556톤, 생산금액 269억원, 일자리 약 1,300명을 창출하였다.

2017년부터는 산업단지 고도화로 지역 내 산업 선순환구조 조성을 위해 제주가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 약 240억이 투입되고 있다. 이 사업의 유치로 지역 내 연구개발-인재양성-고용창출의 선순환구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제주지역 내 교육여건개선과 교육역량강화를 위해 도민수요맞춤형 교육운영, 평생교육시설확충,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제주대학교 발전계획과 연계한 지원, 4차산업 교육기반강화, 제주협력연구센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제주청년 혁신, 자립 및 활동지원, 청년의 자립·성장지원, 사회맞춤형 대학육성, 창업선도대학육성, 특성화고 기술인력양성, 제주청년뉴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2017년까지 5년 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K) 육성사업으로 총 약 34억(지방비 10억포함)을 투입하여 대학교육의 채용연계성강화 및 청년일자리 문제해소에 노력하였다. 제주대학교는 2013~2016년까지 4년 연속 매우우수 등급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제주관광대학교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으로 2012~2015년까지 4년 연속 우수 또는 매우우수 등급에 선정된바 있다. 특히 제주관광대학교의 경우 산학협력 EXPO에서 2015년에는 산학협력 우수사례경진대회 최우수상, 2017년에는 현장실습 수기공모전 대상을 각각 수상한바 있으며, 2016년에는 모든 학과가 NCS기반 및 현장중심형 교육과정으로 100% 개편하였다.

2014~2017년까지 4년 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2014년에 20개 과제, 2015년 24개 과제, 2016년 24개 과제, 2017년 14개 과제에 총 약 83억원을 투입하여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제고 및 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2017년부터는 지역유망중소기업 4개 과제에 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인재·기업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마련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농어촌지역의 학교경쟁력향상을 위한 교두보 마련, 지역대학의 경쟁력 제고, 산학연 네트워킹 체계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16년에는 일과 학습병행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하여 행복학습센터 거점 2개소, 읍면 8개소, 프로그램 51개 과정 등을 운영하였다. 서귀포시 여성대학(24주 과정) 운영으로 만족도 88%, 수료율 73%를 각각 달성하였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지역문화융성을 위해 문화예산의 비중을 매년 높여가고 있다. 지역문화 발전사업으로 작은 도서관과 영화관 건립, 문화콘텐츠제작지원, 문화마을과 문화도시조성, 생활문화센터조성,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는 동북아 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생태복원으로 도일원 주요 마을 경관생태개선, 주요 생태탐방로 조성, 생태공원조성, 오름생태체험관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재창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2014년 제정된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 운영관리 조례 개정('14년 11월 12일)'에 근거하여 지역 내 유명 작가인 이중섭을 테마로 한 거리를 조성하고 아트마켓 연 100회 운영, 판매부스 24개소 운영, 기획공연 30회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연간 200만명 수준의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서 신화·설화 및 지역을 대표하는 자원을 활용한 애니메이션('제라진 탐라수호대 26부작' 외 시나리오 및 스토리 보드 등 제작) 및 체험형 콘텐츠(서북 미디어 파사드 및 semantic AR 전망대 등)를 기획·제작하여 제주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상대적으로 문화서비스 향유가 어려운 읍·면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격차해소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과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현재 작은도서관은 2013년부터 총 5개소가 조성되어 지역주민의 도서 이용 편의성을 높였고, 지역 내 문화예술인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17년 기준, 367개 사업 2,720백만원)하였다. 이와 함께 생활체육광장 프로그램 운영(68개 종목) 및 생활체육지도자(71명)를 배치하여 연간 24,000여회에 걸쳐 지도하고, 종합스포츠클럽 육성으로 9개 종목에 연간 1만명 수준의 지역주민이 다양한 스포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 간 양적 성장을 토대로 2016년부터는 관광의 질적 성장으로 체계를 전환하기 위하여 5개 지표 14개 중점과제를 포함한 질적 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현재까지 19,938백만원을 투자하여 지역 방문관광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주차장 조성 지원(599a), 도로포장(3.7km), 가로등시설(17개소), 오름 산책로 정비(0.65km) 등 인프라 개선사업과 관광자원개발사업 등이 시행

되었다.

제주의 생태와 자연환경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2016년에는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환경자산의 보전관리방안 마련, 제주의 자연가치보전과 관광문화 품격향상을 위한 기반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의 환경오염 현상 연구를 위해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으로 61개 과제를 수행하고 212개 업체를 지원하였다.

2015년에 지속적인 문화격차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사업 추진으로 관광극장 개관 및 기획공연(60회) 등을 실시하였다. 지역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기반조성사업으로 제주문화기반 캐릭터개발, 문화콘텐츠작품 제작 등을 추진하였다.

2016년에는 문화예술예산을 총예산의 3%로 확대 편성하였다. 지역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발전 지원을 위해 문화도시·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문화플랫폼 조성, 실용적인 콘텐츠 상품개발 사업으로 애니메이션 23편제작, 동화책 및 봉제인형 5종 등을 제작하였다. 특히 제주해녀문화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작가의 산책길은 방문객이 201만명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34%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2016년도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1개소 조성, 생활문화센터 3개소 조성하였다. 생활체육광장 프로그램 운영 10개소(41,205명)에서 실시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52명을 배치하여 23,593회에 걸쳐 지도하고 종합스포츠클럽 육성으로 9개 종목에 9,331명이 참가하는 실적을 이루어냈다.

2016년도 말 제주방문 관광객 수는 15,800천명으로 전년대비 15.6%가 증가하였다. 2017년도에는 관광의 질적 성장 및 지역관광산업을 육성의 일환으로 용머리관광지 매립공사 등을 착공하였고, 새별오름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제주의 생태와 자연환경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2016년에는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환경자산의 보전관리방안 마련, 제주의 자연가치보전과 관광문화 품격향상을 위한 기반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수자원보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수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였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체계를 개선하였다. 자연마당사업으로 쉼터 6개소, 가로수 생육환경조성 5개소(목표대비 137%달성)를 조성하였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으로 선홍1리 생태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회의를 5회 실시하였고, 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사업으로 12과제를 수행하였으며, 환경전문기술 인력양성으로 10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이며, 매년 210여명의 아동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40,000여명 수준인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사업으로써 아동 및 임산부, 부모로 구분하여 총 11종의 필수 서비스와 추가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약 1,700여명의 아동에게 급식비 지원, 방과 후 프로그램, 방학 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주민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제공, 동사무소를 복지 서비스 제공의 중심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 자율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다. 농촌고령자 위생여건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급식시설 지원, 복지·문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제주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에는 보육 인프라 확충으로 어린이집 신축·매입 2개소, 기자재구입, 장애아 장비구입 등을 추진하였다. 주민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제공, 동사무소를 복지 서비스 제공의 중심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 자율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다. 농촌고령자 위생여건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급식시설 지원, 복지·문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2016년에는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구축, 수혜자별 맞춤형 복지시책추진,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맞춤형 복지시책추진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9개소, 360명),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제공(953명),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상담지원(217명)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비 330백만원 지원, 가상복지관운영, 광역치매센터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도 2016년에 이루어낸 성과이다.

취약지 공공의료체계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는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구축, 수혜자별 맞춤형 복지시책추진,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비만 줄이기 사업을 통해 현재 18개 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걷기 시범학교

를 지정 운영 중이다. 튼튼 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3kg을 6개월 동안 감량 9개월 유지)에는 2015~2017년간 4,831명이 참가하여 717명이 성공하였다.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만들기를 통해서도 현재 38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으며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28개 코스(352.7km)를 조성하는 등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제10회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서귀포보건소 및 제주시 동부보건소 등이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조성하고 1,04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살위기관리시스템 운영(1,811건), 홍보(235회) 및 캠페인(20회) 운영, 43 생존자 및 유족사례관리(1,964건) 등과 함께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1개소,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건강한 지역 조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하 여백)

제4부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 효과

제1장 공공기관 이전 효과

제2장 부산 혁신도시

제3장 대구 혁신도시

제4장 광주/전남 혁신도시

제5장 울산 혁신도시

제6장 강원 혁신도시

제7장 충남 이전기관

제8장 충북 혁신도시

제9장 전북 혁신도시

제10장 경북 혁신도시

제11장 경남 혁신도시

제12장 제주 혁신도시

제1장 공공기관 이전 효과

제1절 개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정부에서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과소를 해결하고, 국토의 다핵구조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및 국민 삶의 질을 제고코자 추진하였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재원 이양과 권한의 지방분권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 역량을 제고하고, 중추관리기능의 지방 분산을 통하여 지역에 고급일자리를 확보하여 인재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추진 당시 민간 경제활동의 지방 이전 촉진, 지역의 혁신 역량 제고,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 고학력 취업기회의 확대로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유도, 국제교류 확대로 지역의 국제화에 기여, 지역 홍보 및 정체성 확보 등을 기대하였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건설교통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 2005년 4월). 특히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은 민간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할 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이전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국가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이전이 선행되어야만 기업 본사의 이전이 촉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건설교통부, 2005년 4월).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발표(‘05년 6월, 국무회의) 이후 혁신도시특별법 제정(‘07년 1월), 개발·실시계획 수립(‘07년 5월) 등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나갔다. 2018년 현재, 혁신도시 관련 부지조성 등은 거의 완료되고, 공공기관 이전도 본 계획에 돌입하여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115개, 세종시 내 이전 공공기관 20개, 개별 이전 공공기관 19개 등 총 154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었다. 그리고 충남은 혁신도시가 없으나, 경찰대학 등 8개 기관이 개별입지 형태로 이전하였다.

혁신도시 건설은 3단계로 추진되고 있는데, 1단계(2007~2014)는 혁신도시의 인프라 구축과 공공기관의 이전, 2단계(2015~2020)는 종사자 및 그 가족의 정착과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3단계(2021~2030)는 혁신 확산으로 설정하였다. 2018년 현재 혁신도시는

3단계 중 2단계로, 1단계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혁신도시 건설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토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에 따라, 이하에서는 기 이전한 공공기관과 종사자가 지역 경제에 미친 유·무형적 효과를 점검한다.

표 4-1-1 광역지자체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 및 직원 수

(단위: 개, 명)

지역명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	이전대상 직원 수	지역명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	이전대상 인원 수
세종특별자치시	20	3,854	전라북도	12	5,559
부산광역시	13	3,126	광주·전남	16	6,569
대구광역시	11	3,469	경상북도	12	5,447
울산광역시	9	3,142	경상남도	11	4,004
강원도	12	6,060	제주도	8	798
충청북도	11	3,116	개별 이전 (충남 포함)	19	5,447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2017.4), 『경남 혁신도시 관리카드』

제2절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효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유·무형적 지역발전효과는 크게 인구·고용 증대효과, 경제·산업적 성장효과, 국내외 교류촉진효과, 지역사회 기여효과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 첫째, 인구·고용 증대효과는 공공기관 직원의 현지 정착과, 지역의 고학력 인구 취업기회 확대(고용증가)로 볼 수 있다. 이전 공공기관뿐 아니라 혁신도시 주변 상업시설 유치에 따른 간접적인 인구증가도 중요한 요소이나 여기서는 전자에 국한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경제·산업적 성장효과는 이전할 공공기관이 납부할 지방세수 증가효과, 산학연 협력 및 지역산업육성 프로젝트 수행 등에 따른 지역산업육성 효과 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이전 공공기관과 대학과의 산학연계(교수·연구용역, 학생·인턴십, 취업 등),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과의 산·산연계(지식이전으로 인한 지역기업의 역량제고,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산업육성, 스핀오프 등), 지역의 산학연 클러스

터 및 지역혁신체제 구축 등이 이루어진다. 셋째, 국내외 교류촉진효과는 이전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반영한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해당 지역에서 개최하거나 국내외 산학연과의 교류·협력 등을 추진하는 데 따른 효과로, 지방에서의 해당 분야 전문성을 제고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역홍보, 정체성 확보 및 지역이미지 제고를 가져올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 기여효과는 이전기관이 공익성을 갖고 사회문화적으로 범위를 넓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봉사활동, 소외계층 지원, 축제 개최 등을 포함한다. 동 효과는 매우 많아 정량적으로 집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역별 주요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1. 인구·고용증대효과

(1) 인구증대효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직접적인 인구증가는 이전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로 파악할 수 있다. 2014년에 이전대상 근무자 수는 18,790명이었고, 그 중 현지 정착자 수가 3,891명으로 전체의 20.7%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7년 현재 그 비중이 38.8%로 급증하였다(2018년, 산업연구원 집계). 그러나 공공기관뿐 아니라 상가 건설 등에 따른 간접적인 인구증가를 포함할 경우, 10개 혁신도시에 계획목표(2030년 약 27만명) 대비 약 65%(174,880명)가 거주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7년 12월말 기준).

표 4-1-2 이전 공공기관 직원 수 및 현지 정착자 수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전 공공기관 직원 수(A)	18,790	28,657	33,580	36,996
이전 공공기관 직원 중 현지 정착자 수(B)	3,891	8,962	11,335	14,354
정착자 수 비중(B/A)	20.7	31.3	33.8	38.8

자료: 시도별 혁신도시추진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산업연구원에서 집계, 정리

주: 세종시 제외, 충남에 개별적으로 입지한 8개 공공기관 포함

지역별 공공기관 종사자 정착 비중을 보면, 최고 56.4%(부산)에서부터 최저 28.5%(대구)까지 분포하고 있다. 부산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종사자 정착 비중이 높은 것은 부산 혁신도시 소재지가 공공기관 종사자가 거주하기 유리한 도시내 지구형으로 이전하였고, 타 지역에 비해 건축·이전이 빨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산은 가족동반 이주율 및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의 경우도 각각 45.8%(전국평균 34.1%), 61.6%(전국평균 52.4%)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2) 고용증대효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관련 연구소, 관련 기업 등은 우수한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역 내 인재를 채용하고, 이를 통해 고급일자리를 창출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고학력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학사 이상의 고학력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규모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전기관 종사자의 현지 지역 내 채용에 따른 고용증대효과를 보면, 2017년 현재 정규직 신규채용이 1,599명, 비정규직 신규채용이 2,276명으로, 총 3,875명이 채용되었다. 그러나 매년 정규직 비중은 40% 초반 대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고, 학사와 석사 채용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박사 채용 수는 최근 4년간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의 현지 인력 채용자 수가 많은 지역은 광주전남으로 최근 4년간 2,714명에 달하며, 전북이 1,827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충북과 제주는 100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표 4-1-3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급별 현지 채용자 수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A)	589	792	1,040	1,599	4,021
학사	416	620	786	1,258	3,048
석사	45	75	119	135	374
박사	12	23	29	28	92
현지 비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B)	762	1,322	1,423	2,276	5,783

학사이하	527	862	947	1,213	3,549
석사	65	90	156	186	497
박사	17	22	28	52	119
총계(C)	1,351	2,114	2,463	3,875	9,804
정규직 비중(A/C)	43.6	37.5	42.2	41.3	41.0

자료: 시도별 혁신도시추진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산업연구원에서 집계, 정리

주: 세종시 제외, 충남에 개별적으로 입지한 8개 공공기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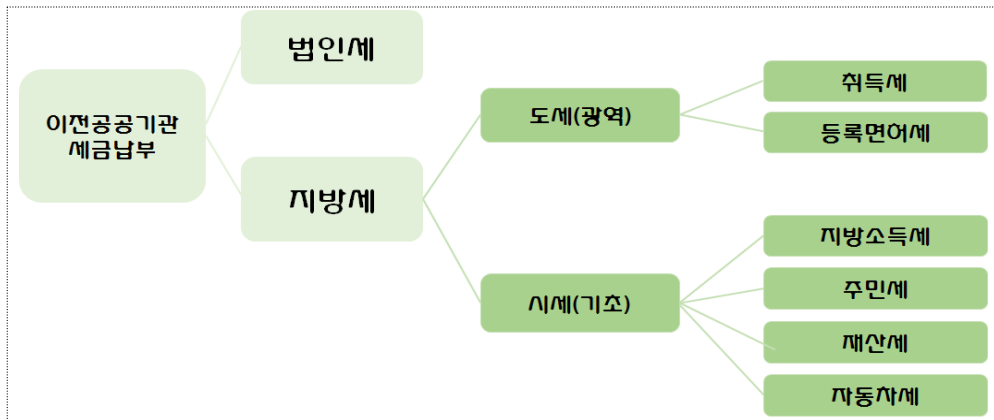
2. 산업 · 경제적 성장효과

(1) 세수증대효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로 법인세를 산정하여 5년 동안 감면 받을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혁신도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정하였다. 이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재정여건 등에 따라 탄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세금의 종류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이중 이전 공공기관과 주로 관련되는 세금은 지방세로, 다시 도세(광역시)와 시세(기초)로 구분 가능하다. 도세(광역시)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있으며(지자체마다 등록면허세를 하나의 세목으로 합친 곳도 있음), 시세(기초)에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그림 4-1-1 납부 대상 이전 공공기관의 세금 유형



이전 공공기관들은 국세인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으며 이전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상이한데, 예컨대 전남, 전북(완주), 경북, 충남 제주로의 이전기관들은 7년 100%, 3년 50% 감면 혜택을 받고,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전북(전주), 경남, 충북은 5년 100%, 2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들은 취득세는 100%감면, 재산세는 5년 100%, 3년 50% 감면된다.

최근 4년간 이전 공공기관의 시도별 지방세 납부액은 총 9,612억원에 달하고 있고, 금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납세실적을 보면, 경남이 2,117억원(22.0%)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1.1%), 경북(1.3%), 전북(1.7%) 등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대에 그쳤다.

표 4-1-4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별 지방세 납부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4~17 누계	
					금액	비중
부산	5,737	17,122	17,645	23,102	63,606	6.6
대구	6,178	6,387	12,185	15,648	40,398	4.2
광주·전남	2,558	13,070	13,895	23,117	52,640	5.5
울산	19,415	39,406	54,427	47,428	160,676	16.7
강원	1,207	2,733	79,562	86,085	169,587	17.6
충북	1,499	2,645	2,957	3,063	10,164	1.1
충남	7,493	24,105	70,099	71,980	173,677	18.1
전북	1,980	3,277	4,650	6,030	15,937	1.7
경북	385	1,841	5,649	4,269	12,144	1.3
경남	35,387	39,500	63,757	73,040	211,684	22.0
제주	5,009	14,180	15,151	16,357	50,697	5.3
지역별 계	86,848	164,266	339,977	370,119	961,210	100.0

자료: 시도별 혁신도시추진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산업연구원에서 집계, 정리

주: 세종시 제외, 충남에 개별적으로 입지한 8개 공공기관 포함

(2) 유관기관 유치 건수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용역발주, 위탁, 물품구매 등을 수행하는 유관기관이 해당 지역에 소재할 경우 더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정체성이 확보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의 계기가 되는 등 지역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유관기관이 지역 내에

유치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특화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 혁신클러스터의 완성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최근 4년간 전국 혁신도시의 유관기관 유치 건수는 총 429건으로, 그 중 기업이 388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연구소와 지원기관은 각각 8건, 33건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나 유관기관 유치 실적이 전무한 혁신도시가 5개(경북, 부산, 울산, 전북, 제주)나 되었다. 주요 지역의 추이를 보면, 광주전남의 유관기관 유치 실적이 가장 많았는데(345건),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경우만 보면 2017년도 말 기준으로 280개 기업을 유치하여 당초 목표인 200개 기업을 초과하였다. 그 다음으로 대구가 72건으로 2위를 차지했는데, 광주전남이 기업유치 중심이라면 대구는 기업(35건), 연구소(7건), 지원기관(30건)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기관을 유치하였다.

표 4-1-5 이전 공공기관의 유관기관 지역 내 유치 건수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총 건수	18	112	139	160	429
기업	7	100	130	151	388
연구소	2	2	2	2	8
지원기관	9	10	7	7	33

자료: 시도별 혁신도시추진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산업연구원에서 집계, 정리

주 : 세종시 제외, 충남에 개별적으로 입지한 8개 공공기관 포함

(3) 지역산업 육성

지역내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와 관계없이 산학연 협력연구사업, 교육훈련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도 있고, 산업부가 주관하는 지역산업육성사업, 과기부가 주관하는 지역사업,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지역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전 공공기관이 최근 4년간 가장 많이 수행한 지역산업 협력사업은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으로 총 5,799건에 달하며, 그 다음이 산학연 협력연구로 1,483건을 수행하였다. 그 외에도 지역문화관광사업 추진 건수가 833건, 지역산업육성사업이 519건, 지역 과학기술사업이 35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의 경우는 교육훈련 서비

스 제공 건수가 많아 전체 1위였으며, 제주의 경우는 문화관광 관련 사업 추진이 많아 2위를 기록했다.

표 4-1-6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산업 협력 건수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산학연 협력 연구 (지원) 건수	216	325	433	509	1,483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 건수	836	2,046	993	1,924	5,799
지역 산업발전 관 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78	125	149	167	519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22	27	38	45	132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	56	98	111	122	387
지역 과학기술 발 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3	4	5	23	35
지역 문화관광 발 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163	203	227	240	833

자료: 시도별 혁신도시추진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산업연구원에서 집계, 정리

주 : 1) 세종시 제외, 충남에 개별적으로 입지한 8개 공공기관 포함

2) 2년 이상 추진사업의 경우 연도별 중복 포함

3. 국내외 교류촉진효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교류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그 수단으로는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계약 체결 및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전 공공기관들은 다양한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업무 관련 외국인들의 내방이 잦은 편으로 이들을 통해 해당 지역의 국제적 홍보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4년간 이전 공공기관의 국내외 교류촉진효과를 보면, 국내외 기관, 기업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가 5,292건에 달하며, 협력계약 체결 건수는 4,584건,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건수는 2,475건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은 국내

외 기업 및 기관 간 협력사업 수행 건수가 많아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충북은 국내 외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전국 2위를 차지했다.

표 4-1-7 이전 공공기관의 국내외 교류사업 유형 및 성과

(단위: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 (기관 내부 회의 제외)	226	549	676	1,024	2,475
국제	72	115	147	121	455
국내	154	435	530	897	2,016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444	1,296	1,375	1,469	4,584
국외	123	573	674	682	2,052
국내	316	718	704	803	2,541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1,129	1,301	1,398	1,464	5,292
국외	684	770	774	773	3,001
국내	445	531	626	690	2,292

자료: 시도별 혁신도시추진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산업연구원에서 집계, 정리

주: 세종시 제외, 충남에 개별적으로 입지한 8개 공공기관 포함

4. 지역사회 기여효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제적 기여 및 사업이나 기술전수 등을 제외하고, 이전 기업의 정책이나 구성원들의 지역친화 및 적응을 목적으로 한 후원·성금 등 경제적 지원, 단순봉사활동, 전문봉사활동 및 기타 등으로 구성된다. 단순봉사는 기관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로 예컨대, 지역 환경정화를 위한 쓰레기 줍기, 지역주민들을 위한 배식활동, 지역농산물 구매 등이 해당한다. 전문봉사는 해당기관이나 구성원들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예컨대, 상담복지기관의 지역주민 대상 상담, 주택보증공사의 임차자금 지원 등 기관의 업무특성과 관련이 있는 봉사활동을 의미한다. 이런 유형의 지역사회 기여활동은 매우 많아 집계하기 어려우며,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강원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관광공사는 원주 심향영육아원, 사회복지관 등에 물품기증 및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창동

계올림픽 테스트경기, K-POP 공연 관람지원 등을 수행하였다. 경남혁신도시에 입주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사회공헌기금 기증, 중진공 음악회,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중진공 感 장학생 지원에 총 3천 770만원을 투입하여 모금, 콘서트 개최, 캠페인 실시, 멘토링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대구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주거형편이 어려운 주민의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의 일환인 ‘대구시 사랑의 집수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제3절 평가와 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제반 효과는 혁신도시건설정책 추진 당시 정부가 기대했던 예상과 현 단계에서의 효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정책의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인프라 건설이 완료단계에 와 있는 현 시점에서 전반적인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첫째, 지방에 정착하는 이전기관 종사자 수가 매년 증가하여 2017년 현재 1만 4천명을 넘어섰고, 최근 4년간 현지에서 채용하고 있는 학사급 이상 신규 채용자가 1만명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지방세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2017년에만 3,701억원이 납부되어 정부가 당초 기대한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셋째, 최근 4년 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가 총 429건에 달하고 있다. 다만, 이중 기업이 대다수로(388건), 추후 연구소나 지원기관 등 공공기관의 추가 유치가 필요하다. 이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간지원 등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2017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산학연 협력연구가 509건에 달하고, 지역산업발전 관련 사업 추진 건수가 519건에 달하여, 공공기관 입지로 지역의 혁신역량이 양적으로 확보되고 있고 향후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섯째, 해당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내에서 국내외 주요 회의 개최 건수가 연간 1천 건을 넘어섰고, 지역의 전문성 있는 협력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다. 다만, 혁신도시 중에는 중소도시에 입지한 경우도 있어, 국제회의를 개최할 만한 컨벤션 회의장 및 숙박 등 여건 조성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공공기관의 활동으로 매스컴에 공공기관의 명칭과 더불어 지역이 홍보되고, 정체성이 확보되어 가

고 있으며,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속하므로 지역내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일자리를 증가시켜 지역산업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향후 각 지역별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을 활용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 내 산학연과의 교류 촉진 및 시너지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각 혁신도시의 산업적 특화, 이전기관 종사자의 조기 정착 및 브랜드 네임 확보가 가능하고, 지역에서는 고학력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건설, 음식료·숙박업 등 관련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2장 부산 혁신도시

제1절 개관

부산 혁신도시는 동삼혁신지구(해양과 수산 관련 기관), 문현혁신지구(금융 관련 기관), 센텀혁신지구(영화 및 콘텐츠 관련 기관) 등 3개의 혁신지구가 조성되었다. 혁신지구별로 살펴보면 영도구 동삼동 일원(616만㎡)에 위치한 동삼혁신지구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남구 문현동 일원(102만㎡)에 위치한 문현혁신지구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남부발전, 그리고 해운대구 우동 일원(61천㎡)에 위치한 센텀혁신지구에는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이 2017년말 현재 이전을 완료하였다.

부산시는 이전 공공기관의 근무자 2,436명(이 중 현지 정착자는 1,375명)을 포함하여 2015년부터 관련 기업들의 동반 이전으로 인구유입효과가 가속화되어 2017년말 현재 7,8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방세 납부액의 증가분은 2014년 57.4억원에서 2017년 231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7년 31.7%로 전국평균 14.2%를 크게 상회하였고, 가족동반 이주를 및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의 경우도 각각 45.8%(전국평균 34.1%), 61.6%(전국평균 52.4%)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표 4-2-1 부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5,147	5,605	5,844	6,694	-
총 근무자 수	5,062	5,748	6,042	7,245	-
이전 근무자 수	1,402	1,759	1,774	2,436	-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	381	653	698	1,375	-
총예산(백만원)	9,488,115	7,114,939	5,774,131	7,073,241	-
지방세 납부액(백만원)	5,737	17,122	17,645	23,102	63,606

주 : 총 근무자수와 이전 근무자 수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한국남부발전(주)('17년 기준 총근무자 2,284명 중 이전 근무자 318명), 한국주택금융공사('17년 기준 총근무자 726명 중 이전 근무자 339명), 주택도시보증공사('17년 기준 총근무자 611명 중 이전 근무자 261명) 등과 같이 각 지역별로 근무자가 분포되어 있어 본부 근무자의 비중이 낮기 때문임.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 현황

부산 혁신도시의 이전 완료 13개 기관이 창출한 지역일자리(2017년 기준)는 총 384명(정규직 181명, 비정규직 203명)이며, 전체의 90.9%인 349명이 학사급 인력으로 채용되었으며, 석·박사급은 총 35명으로 9.1%수준이다. 2014년 92명에서 시작하여 연평균 61.0%씩 증가한 결과, 2017년의 채용 실적은 2014년 대비 4.2배에 달하는 성과를 실현하였다.

2. 특기사항

2017년 11월 부산지역 8개 공공기관이 5년간 50억원의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과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사회적기업지원 공동펀드」 MOU를 체결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7년 정규직 채용 결과, 부산 지역 인제는 75명 중 18명(24%)으로, 법정목표(15%)를 초과하고 2016년 실적(17%) 대비 대폭 상승하였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17년에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 중 총 23%를 부산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등 매년 지역 인재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이전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여 14명(원장, 보육교사, 조리사 등)의 민간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외에도 부산 소재 스타트업 대상 크라우드 펀딩 로드쇼 개최, 부산시와 부산지역 혁신도시 6개 공공기관 간 사회적기업 지원펀드(BEF) 조성,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 지원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의 경우는 할당제(20%), 가점제(5%) 등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우대 한 결과, 지역인재 채용률이 매년 증가('15년 27% → '16년 35% → '17년 47%)하고 있다. 또한 KOSPO N Dream Campus(발전직무 심화교육, 100명), 환경지킴이(지역인재 대상 단기 NCS 직무체험·세미나, 발전소 견학, 182명), 채용형 인턴(동·하계 현장 직무 체험 후 정규직 전환 지역인재 18명), 체험형 인턴(동·하계 현장 직무체험 지역인재 47명), 대학생 대상 태양광 벤처창업가 양성교육(지역인재 30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로 부산시 일자리창출 경진대회 우수상(부산시, '17년 7월), 지역산업진흥 유공 대

통령 표창 (산업부, '17년 11월), 지역인재 채용 유공 장관상 (국토부, '17년 12월) 등을 수상한 바 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이전 공공기관 중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본부에서 인재를 직접 채용), 법률에 의해 특정 업무를 위임 받아 운영되는 기타 공공기관 등의 경우는 자체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는 바, 다른 접근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표 4-2-2 부산 혁신도시 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62	79	86	181	408
학사	48	67	75	169	359
석사	10	11	7	7	35
박사	4	1	4	5	14
현지 비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30	224	258	203	715
학사	17	194	234	180	625
석사	12	22	22	21	77
박사	1	8	2	2	13

주 : 전문학사 및 고졸 채용자수 제외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1. 추진 현황

혁신도시 내 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등의 유치 실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7년 기준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는 90건,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는 109건 등으로 전년도 대비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역 산업발전과 관련한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는 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역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 건수는 1건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2. 특기사항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과학기술 기반의 해양 신산업 창출을 위해 2017년 8월

부산테크노파크와 창업·중소기업 지원 MOU를 체결하고, 11월에는 부산시와 해양과학기술 중심의 해양신산업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산대학교 산업수학센터(IMC)와 「산학공동 산업수학 문제해결 협약」을 체결하고, 동아대학교와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대학과의 공동연구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 상호간 발전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부산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2017년)」 등의 산학연 협력연구, 증권박물관 건립 추진(2019년 개관 예정) 등을 수행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시로부터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 유공 포상(2017년)」을 수상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활용하여 해양신산업 창업생태계인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 플랫폼(STEM Village)」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확보가 쉽지 않아 지역 신산업 발전을 위한 본 사업의 현실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표 4-2-3 부산 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유관기관 혁신도시내 유치 건수	-	-	-	-	-
기업	-	-	-	-	-
연구소	-	-	-	-	-
지원기관	-	-	-	-	-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	72	98	90	260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3	45	128	109	285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2	2	3	5	12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2	2	3	5	12
지역 과학기술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	-	-
지역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2	1	1	4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1. 추진 현황

부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수행한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회의 개최 건수는 2017년 59건으로 2016년 35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중 국제회의는 13건, 국내회의는 46건인데, 특히 국제회의 개최 건수는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 계약건수는 347건, 수행 중인 협력사업 수는 48건으로 집계되었다.

2. 특기사항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운-조선 일자리 창출 및 재도약 세미나, 제2차 해양클러스터 공동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여 부산지역 해운-조선산업 중장기 발전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 지역 5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주택금융 노하우를 전수하고 각국의 주택금융기관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부산의 국제 금융중심지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와 중국(칭다오)과의 금융 협력 및 교류를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시, 부산경제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중국사회과학원 및 중국 칭다오시가 참여하는 『한중 금융협력 포럼』을 중국 베이징(‘16년), 부산(‘17년)에서 개최하였고, 이러한 한중간 협력을 기반으로 공동 사모펀드 조성, 위안화표시채권 발행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표 4-2-4 부산 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	2	32	35	59	128
국제	1	10	4	13	28
국내	1	22	31	46	100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41	364	333	347	1,085
국외	23	35	33	35	126
국내	18	329	300	312	959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4	23	28	48	103
국외	2	9	5	4	20
국내	2	14	23	44	83

제5절 지역사회 기여 · 융화

1. 추진 현황

부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소통으로 상생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여·융화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이전 공공기관이 복지기관 연계 자원봉사, 불우이웃(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정기후원 등 지역 소외계층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희망이음 경제캠프(한국예탁결제원)', '낙후된 실내환경 및 생활편의시설 개선지원(한국주택금융공사)',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리모델링(주택도시보증공사)', '찾아가는 영화관 행사(영화진흥위원회)', '게임체험공간 마련(게임물관리위원회)' 등과 같이 기관별 여건·특성과 연계된 다양한 기여·융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2. 특기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는 'HF 드림하우스'를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 가구의 낙후된 실내환경(도배, 장판 등) 및 생활편의시설(지지붕, 화재경보기 등)을 개선하였고, 부산 내 낙후 지역의 노후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HF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부산시립해운대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주민 대상 경제독서모임을 개최(14회, 308명)하였고, 금융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역주민 대상의 릴레이특강을 2016년 4회, 2017년 3회를 개최하는 등 부산 시민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은 2014~2017년간 약 27억원의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사회복지기관 대상의 태양광발전설비 및 에너지드림카 친환경 전기차 및 충전소 지원, 동천강변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범시민 캠페인, 에너지빈곤층 대상의 친환경 난방텐트 및 맞춤형 난방 지원, 광열비 절감을 위한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미니태양광 후원 등을 수행하였다.

제6절 향후 추진계획

부산시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를 토대로 산업부·국토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하여 혁신도시 중심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 및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전 공공기관들도 의무 채용비율('18년 18% → '19년 21% → '22년 30%) 이상의 지역인재 채용, 「부산 사회적기업 지원 공동펀드(BEF)(8개 공공기관 참여)」를 통한 지역 민간일자리 창출에 기여, 주거·노인·지역복지 중심의 지역밀착형 공헌사업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제3장 대구 혁신도시

제1절 개관

대구혁신도시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등 9개(신서, 동내, 각산, 울암, 상매, 대림, 숙천, 괴정, 사북)의 동에 걸쳐 총 규모 4,216천㎡로 구성되어 있다. 총 사업기간은 2007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이전공공 기관은 크게 산업지원, 교육학술 지원, 기타 지원 기관으로 구분된다. 산업 지원 기관으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 신용보증기금(KODIT)이 있으며, 교육학술 지원기관은 한국장학재단(KOSAF), 한국사학진흥재단(KFPP), 중앙교육연수원(NETI),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있다. 기타 지원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KOGAS),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감정원(KAB), 중앙신체검사소가 있으며, 그 외 2014년 개별이전 한 중앙119구조본부를 포함하여 총 12개의 공공기관이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대구혁신도시 내에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가 함께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대구 혁신도시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신성장 동력 및 주력산업과의 높은 연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전 기관 정원도 2014년 8,201명에서 2017년에는 8,998명으로, 현지 정착자도 413명에서 90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지역의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지방세납부액도 62억에서 156억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구광역시는 지역산업의 구조 고도화, 혁신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전 공공기관과 유기적 관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표 4-3-1 대구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8,201	8,413	8,725	8,998	-
총 근무자 수	8,089	8,308	8,651	8,931	-
이전 근무자 수	2,156	3,054	3,147	3,159	-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	413	635	725	901	-
총예산(백만원)	61,241,867	55,884,514	41,490,019	40,100,325	-
지방세 납부액(백만원)	6,178	6,387	12,185	15,648	40,398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 현황

대구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지역일자리가 창출되기 시작했는데, 2014년에 현지 신규 채용이 187명(정규직 55명, 비정규직 132명)이었다. 계속 신규채용이 일어나면서 2017년에는 현지 신규 채용이 302명(정규직 122명, 비정규직 180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4년 동안 총 1,033명의 현지 신규채용이라는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2. 특기사항

일자리 창출 관련 특기사항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4년 대구 혁신도시 이전 후 4년 간 총 19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했으며, 지속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14년 9% → '17년 33%). 지역 청년인재의 역외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의 강소기업으로 취업을 유인하기 위해 스타기업 히어로 양성사업을 통해 지역 강소기업 97개사에 지역청년인재 228명을 매칭 시키고, 이중 129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 하반기 기준 지역인재채용대상 85명 중 26명(31%)을 신규 채용했다. 한국교육학술진흥원은 주요 사업(122개 사업)에 대한 아웃소싱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확대(428명)에도 기여했다. 한국감정원은 지역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상생펀드를 확대 운영('16년 1,000억원 → '17년 1,100억원)하여 총 1,063개의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1,419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전국에 지역본부(지사)가 분포하고 있어 이전지역인재를 채용하더라도 타 지역으로 배치가 불가피하다. 중앙신체검사소의 인력 구성은 정규 공무원과 대체 복무중인 의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 채용에 애로가 있다.

표 4-3-2 대구혁신도시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55	68.5	107	122.5	353.5
학사	41	43.5	76	91.5	252

석사	7	9.5	10	19	46
박사	0	2	0	1	3
현지 비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132	184	184	180	680
학사	73	104	93	104	374
석사	15	10	20	22	67
박사	2	2	1	2	7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1. 추진 현황

대구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되면서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혁신역량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에서 2017년까지 통계자료를 보면, 유관기관이 혁신도시 내에 유치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4년 동안 총 72개의 기관이 유치되었는데 특히 기업이 가장 많이 유치되었고 연구소도 35개로 혁신역량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 산업발전 관련 사업 추진 건수도 63건이고 산학연 협력연구 건수도 50건이다. 이 중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제공 건수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지역 과학기술 발전 관련 사업 추진 건수는 없고, 연구소의 유치도 7건으로 다소 미흡하다.

2. 특기사항

대구혁신도시에서 혁신역량 제고에 기여한 대표적 사례로는 한국감정원이 2014년부터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총 10회에 걸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통해 총 285명의 교육수료자를 배출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대구지역 산업발전을 위해 기술융합산업 등 산업단지 주요업종을 중심으로 4개의 산·학·연·관 협의체(미니 클러스터: MC)를 구성하여 553명의 회원이 참여·활동 중에 있으며, 주요기술·업종별 MC활동을 통해 산업·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17년 산단 공동R&D 10건(18억원), 기업애로해결 31건(5.4억원)). 한국가스공사는 <투데이에너지, “가스공, 제1회 KOGAS 아카데미 개최”(17년 4월 22일)> 외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지역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 후 개최되는 연수 참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대구혁신도시의 신규 대중교통 노선 개발 및 혁신도시 내 숙박업소(호텔) 증설 등이 필요하다. 신용보증기금 등 사례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대구·경북 소재 창업선도대학(금오공대, 경일대, 대구대)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업을 요청하였다.

표 4-3-3 대구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유관기관 혁신도시내 유치 건수	16	10	24	22	72
기업	5	-	15	15	35
연구소	2	2	2	1	7
지원기관	9	8	7	6	30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15	12	9	14	50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63	64	57	59	243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20	6	21	16	63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0	0	1	1	2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	20	6	20	15	61
지역 과학기술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	-	-
지역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4	-	-	4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1. 추진 현황

대구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면서 이들 기관이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의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외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 개최 건수를 보면 2014년 30건에서 2017년에는 527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중 대부분이 국내에서 개최된 세미나와 심포지엄이었다. 국내외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도 2014년 20건에서 2017년에는 30건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국내외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는 2014년에는 18건에서 2017년에는 12건으로 감소하였다.

2. 특기사항

관련 특기사항으로, 한국감정원은 2016년 15개국 400여명(내국인 300, 외국인 100)이 참석한 제8차 세계평가기구연합 총회(WAVO) 등 국제 세미나(3회) 및 대구경북 건설부동산 포럼(연 6회)과 같은 국내 세미나를 다수 개최함으로써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였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R&D 과제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이전 지역에서 개최(4년 누적 총 1,003건)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제5회 국제 학자금포럼 주

최를 통해 재단 및 이전 지역의 위상을 강화했다(연합뉴스 등 총 8개 매체에서 11회 언론 보도 등).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 국제가스연맹(IGU) 차기분과위원장회의 및 합동분과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가스컨퍼런스(APGC) 등 다수의 국제회의 개최 및 지역 산학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가스신문, “가스공사, 대구·경북 6개 대학과 협약체결(‘17년 9월 22일)”> 외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국내외 네트워크 플랫폼 역할에 대해 홍보하였다.

3. 애로 및 건의 사항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장소 및 교통편, 토론자 섭외 등의 사유로 현지에서 개최 어려움 등의 애로가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국제 포럼 등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를 추진해야 하는 국외업무 특성상 외빈 접근 편의성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접근성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표 4-3-4 대구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기관 내부 회의 제외)	30	239	252	527	1,048
국제	1	2	3	3	9
국내	29	237	249	524	1,039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20	16	15	30	81
국외	1	0	0	3	4
국내	19	16	15	27	77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18	13	13	12	56
국외	2	2	4	3	11
국내	16	11	9	9	45

제5절 지역사회 기여 · 융화

1. 추진 현황

대구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을 살려 대구 및 경북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협력 및 나눔 봉사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상생 협력 문화 구축하고 있다. 대구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은 서로 연계하여 '사회공헌협의체'를 조직하고 정례적으로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동절기 수요 맞춤형 지역사회 공헌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2. 특기사항

특기사항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역사회 기여로, 한국가스공사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중앙교육연수원은 자유학기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대입제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 안내, 한국장학재단은 재단 특성을 반영한 지역 아동·청소년 중심의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한국감정원은 2014년부터 'KAB 사랑 나눔의 집',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대구시 사랑의 집수리 사업'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3. 애로 및 건의 사항

이전 공공기관의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지역사회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 특성과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매칭해줄 컨트롤 타워를 요구하고 있다.

제6절 향후 추진계획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한국교육학술진흥원은 일자리 창출 로드맵 수립, 일자리 창출 전담 조직 구성 등 일자리 중심의 성과 관리 체제 고도화 및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발굴·확대 방안 마련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국가근로장학사업 및 인근 대학과의 연계성을 통해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픈 캠퍼스 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취업 준비생 및 대학생 역량강화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혁신역량 제고와 관련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혁신도시 및 타지역 MC 간 교류 확대를 통해 산업 간 융복합화를 촉진 및, 제조업 이외의 다양한 분야 MC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실무 활용성이 높은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부동산 관련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을 수행 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기여·융화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은 이전지역 내 대학과의 네트워킹 및 협업을 통한 이전 지역인재 육성으로 지역 사회와의 협력 강화 및 우수인재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SW인재 육성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초·중·고·주부 대상 SW교육을 추진하고,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및 노인·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4장 광주/전남 혁신도시

제1절 개관

광주/전남 혁신도시(빛가람 혁신도시)는 전남 나주시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 약 7,361천㎡에 계획인구 5만명이 계획되었다. 전체 사업비 1조 4,175억원을 투입하여 LH(43%), 광주도시공사(24%), 전남개발공사(33%)가 조성사업을 수행하였다. 2007년 11월 혁신도시 조성을 착공하여 2014년 12월 준공하였다.

빛가람혁신도시는 “물과 빛이 하나되는 상생의 녹색 생명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녹색전력(스마트그리드) 에너지산업, 태양광 시범도시, 인간 중심 미래형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광주/전남의 미래성장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특히 고용 및 혁신의 핵심 주역도시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5월말 현재 29,217명(주민등록 기준)이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성장하였으며, 혁신도시 클러스터와 인근 산업단지에 공공기관 연계기업들의 투자협약이 이어져 에너지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이전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하여 총 16개 기관이다. 이중 15개 기관의 이전이 완료되었고, 미이전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경기도 안양 소재)은 현재 청사 건립 중에 있어 2018년 12월 이전 예정이다. 혁신도시를 통해 기대하고 있는 지역 고용창출의 기반인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근무자 수는 2017년 현재 6,657명에 이르며 특히 이의 43.5%인 2,893명이 광주/전남지역에 정착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전기관의 총예산은 87조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중 한국전력공사의 예산이 68조 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전기관의 지방세 납부액은 2017년 약 231억원으로 지방재원 확충에도 기여하고 있다.

표 4-4-1 광주/전남 혁신활동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35,146	36,287	37,209	39,183	-
총 근무자 수	29,686	35,441	43,674	38,034	-
이전 근무자 수	5,355	5,672	5,942	6,657	-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	1,549	1,911	2,294	2,893	-
총예산(백만원)	86,119,990	90,949,292	87,389,875	87,765,982	-
지방세 납부액(백만원)	2,558	13,070	13,895	23,117	52,640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 현황

이전 공공기관에 기반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보면, 이전 완료한 15개 기관의 지역 현지고용 인원은 2017년 1,118명으로서 지난 2014년 402명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7년의 현지고용 중 정규직은 412명으로 전체의 36.8%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의 채용 특성에 따라 현지채용의 대부분은 학사 중심이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주요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력공사가 2017년 총 735명으로 전체의 65.7%나 차지하고 있다. 그 외는 한국KPS,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각각 56명, 52명 등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2. 특기사항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 인재의 채용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역대학 순회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이 주최하는 채용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왔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채용과정 중 서류전형에서 “지역인재 가점제”를 운영하였다.

또한 한전, 한전KPS, 한전KDN 등 전력 관련 기관들은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지원을 위하여 광주·전남지역 7개 대학과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전력에너지분야 공동 과제 발굴,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 및 채용기회 확대,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표 4-4-2 광주/전남 혁신활동도시 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146	324	236	412	1,118
학사	117	276	208	365	966
석사	2	14	7	19	42
박사	1	7	3	1	12
현지 비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256	309	325	706	1,596
학사	217	254	287	568	1,326
석사	13	5	5	7	30
박사	-	-	-	-	-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1. 추진 현황

빛가람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성과 또한 높은 수준으로 시현되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혁신도시를 글로벌 에너지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실현해 나아가고 있다. 2020년까지 50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금융지원, 판로지원, 채용지원 등 기업이 원하는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에너지밸리 특화형 상생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2017년도 말 기준으로 280개 기업을 유치하여 당초 목표인 200개 기업을 초과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7,630명의 고용창출과 1조 1,839억원의 투자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특기사항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 관련 기관들은 2017년 2월에 전력에너지분야에 특화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빛가람창조경제혁신터를 설립하였다. 아이디어 상품화에서 수출까지 체계적인 벤처창업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17년말까지 102개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였다. 아울러 동 기관들은 지역 내 에너지밸리 조성 및 중소기업, Start-up 지원을 위한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을 공동으로 건립하고 있다.

전력 관련 공공기관(한전, 한전KDN, 한전KPS 등)들은 광주·전남지역 청년인재 육성을 위해 2017년부터 '빛가람 학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5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후 수강생 및 연계대학의 좋은 반응을 받았으며,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지역발전 부문('17년 12월)에서 수상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에너지밸리 조성과 같은 지역 전략정책에 관한 관련법규 등을 특례화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의 융복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국

가계약법의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나 혁신도시법의 지역투자 유도 조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에 판로지원 반영 등의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혁신을 주도할 지방정부 중심의 혁신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표 4-4-3 광주/전남 혁신활동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유관기관 혁신도시내 유치 건수	1	99	112	133	345
기업	1	97	112	132	342
연구소	-	-	-	-	-
지원기관	-	2	-	1	3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67	80	125	121	393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13	21	23	74	131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25	29	31	53	138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18	20	22	24	84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	4	5	5	10	24
지역 과학기술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1	1	1	1	4
지역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14	14	14	16	58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1. 추진 현황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국내외 교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개최 건수는 2017년 42건으로 2014년 28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국내외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비교적 활발히 추진하여 2017년 각각 23건, 11건을 수행하였다. 특히 협력사업 건수는 2014년 150건에서 2017년 21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실적이다.

2. 특기사항

한전KDN은 2016년부터 국내외 ICT 분야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빛가람 에너지 밸리 ICT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글로벌 ICT환경과 선진 구축사례 등을 소개하여 왔다. 2017년도에는 오라클, 시스코 등 주요회사들을 포함한 국내외 ICT분야 업체가 참여하여 최신ICT트렌드를 접목한 각 사별 제품을 전시하고, 세미나를 통해 ICT기술동향

및 솔루션 등을 발표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의 주요 유관 기관인 아시아문화개발원, 나주시청 등 지역 기반 기관들과의 업무 협약 및 협력을 추진하였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내 기관과 OECD, 이탈리아 농업경제연구위원회, 독일튀넨연구소 등 해외 기관과 MOU 체결 및 교류·협력하였다.

표 4-4-4 광주/전남 혁신활동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기관 내부 회의 제외)	28	33	28	35	124
국제	18	19	15	10	62
국내	10	14	13	25	62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47	67	55	59	228
국외	6	13	9	14	42
국내	41	54	46	45	186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150	169	197	210	726
국외	10	13	12	12	47
국내	140	156	185	198	679

제5절 지역사회 기여 · 융화

1. 추진 현황

한전KPS는 전국적으로 산재한 한전KPS한마음봉사단을 통해 전문봉사 활동, 일반 봉사 활동, 기금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전문봉사 활동에는 5천여 엔지니어들이 보유한 다양한 정비기술을 활용한 프로보노 활동으로 전 기시설 및 기계설비 점검은 물론 재능기부까지 다양한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한전KDN은 2006년 한마음봉사단을 창설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봉사 및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기관역량(ICT)과 연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지역 보육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PC룸 기증과 함께 사회진출 예정 고교생의 PC활용 및 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인 “KDN IT움”을 운영하고 있다.

전력거대소는 금성원, 이화영아원과 같은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맺어 매 월 정기 기부를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연탄배달·김장·착한전 기나눔(노후 전등 교체봉사)·영아원 산타봉사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했다.

2. 특기사항

전력거래소는 문화 분야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직원 가족들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KPX 가족문화의 날 영화상영’, ‘KPX 인문학 콘서트’ 등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동시에 전력거래소에서 진행하는 사내 정기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를 이전 지역 내로 한정해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제6절 향후 추진계획

2007년 혁신도시 착공 이후, 빛가람 혁신도시는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물리적 이전에 기반한 도시 외형 확장만이 혁신도시 조성의 목적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도시 기능이 제자리를 잡아 각 기능이 순기능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또한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 유입, 소비 확대, 상권 조성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순환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부분은 기업유치일 것이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한국전력공사 등 타 혁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나 내용 면에서 양질의 혁신역량을 보유한 공공기관이 다수 이전하여 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연관기업은 물론 학교, 연구소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에 대한 유입 여건이 우수하다.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중앙부처 연계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스타트업 육성 지원 등 기업 유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삶의 질 만족도 향상, 신규 기업체 유치 등 창의적이고 지속 실행 가능한 중장기 계획을 점차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육성을 위해 행사 및 심포지엄을 적극적으로 개최해 나갈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기술원 인력을 활용한 재능 기부 모델 개발, 유라·도자기 체험활동 전개, 기술원 견학 프로그램 홍보 및 확대 시행 등 기술원 주력 사업에 맞는 사회공헌 모델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이전 공공기관들은 자체 국제교류 중심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향후 국제교류 역시 지역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역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제5장 울산 혁신도시

제1절 개관

쾌적한 정주환경을 구비한 울산혁신도시가 2007년 12월 17일 착공된 이후 9년간 사업을 시행하여 299만㎡의 부지조성을 마무리하고 2016년 12월 31일자로 준공되었다. 그동안 울산시는 이전지원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이전지원협의회, 워크숍,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이전기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주여건과 이전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이전 근무자는 2,675명이며 이중 현지에 정착한 근무자는 1,314명이다. 10개 이전기관 중 한국에너지공단을 제외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주), 에너지경제연구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등 9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이전한 9개 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지방세 납부액이 2014년 19,415백만원에서 2017년 47,428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4-5-1 울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12,262	12,462	12,755	13,530	-
총 근무자 수	10,874	11,083	11,405	12,107	-
이전 근무자 수	2,286	2,539	2,611	2,675	-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	585	1,025	1,141	1,314	-
총예산(백만원)	14,253,738	10,023,220	9,551,676	9,296,718	-
지방세 납부액(백만원)	19,415	39,406	54,427	47,428	160,676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 현황

울산혁신도시에 창출한 신규 일자리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2014년 79.5명, 2015년 39.75명, 2016년 60.25명, 2017년에는 75.75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7년 기간에 51,009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울산지역 내 만들어 냈다. 한편 비정규직 채용인원은 2014년 28명, 2015년 54명, 2016년 34명, 2017년에는 23명에 이르고 있다.

2. 특기사항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역인재 채용 및 기관홍보를 위해 매년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활용하여 청년 구직자들에게 채용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2014년 이후 공사 여건 상 경력직의 긴급 충원 이외에 신입직원 공채를 잠정 보류하였지만, 2018년도부터 신입직원을 공채할 예정이며, 이전지역인재 목표제 시행을 통해 울산지역의 인재를 확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지역 인재들이 NCS 기반 채용 대비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체험형 인터십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블라인드 채용 우수기관 경진대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통령의 2018년 설맞이 격려전화 국민 11명에 동서발전 신입직원이 선정되기도 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울산에는 대학 수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적고 이전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학과들이 부족하거나 전무한 경우가 있어 신입직원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은 연구원 특성상 연구직 채용의 비중이 높는데 울산지역에 4년제 종합대학교의 수가 적은 가운데 연구직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따라서 울산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이후 타 지역의 대학에 진학한 학생도 지역인재 범주에 포함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표 4-5-2 울산혁신도시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79.5	39.75	60.25	75.75	255
학사	77.5	36.75	52.25	73.75	240
석사	2	3	7	2	14
박사	-	-	1	-	1
현지 비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28	54	34	23	139
학사	28	46	24	12	110
석사	-	8	10	11	29
박사	-	-	-	-	-

제3절 지역혁신역량제고

1. 추진 현황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혁신역량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초기 단계에서는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추진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교육·훈련서비스 제공이 활발하게 전개('14년 11건, '17년 106건)되고 있다. 반면, 이전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산학연 협력연구와 지역산업발전 사업추진 건수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혁신도시의 혁신역량 제고 및 자립성 확보에 긴요한 이전기관의 유관기관의 혁신도시로의 유치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2. 특기사항

한국석유공사 등 일부 이전기관들은 개방형 혁신체계의 관점에서 울산혁신도시와 연결한 부산지역의 대학(해양대, 부경대) 및 연구기관(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개발연구원 등)과 공동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울산지역의 지진('16년 9월)에 대응한 원전시설 안전강화 연구 및 정부 정책제안을 통해 산업시설의 지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몇몇 이전기관들은 기관 속성상 설립 목적 이외의 지역혁신역량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도적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정관개선 등)이 필요하다.

표 4-5-3 울산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3	3	7	6	19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11	94	106	106	317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2	2	4	4	12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1	1	3	3	8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	1	1	1	1	4
지역 과학기술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1	1	1	19	22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1. 추진 현황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교류활동을 살펴보면, 2014년 이후 현지에서 개최한 국내외 세미나 건수,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약 체결 건수,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력사업 수행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지에서 개최한 국내외 세미나는 2014년 7건에서 2017년 34건으로,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약 체결은 2014년 2건에서 2017년 17건으로,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력사업 수행은 2014년 2건에서 2017년 15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 특기사항

울산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위해 울산시, 이전기관, 민간석유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이와 관련된 국내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한국동서발전은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프로그램을 통해 울산지역 창업벤처기업 60개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세계 에너지싱크탱크 평가(2017 Global Think Index, Univ. of Pennsylvania)에서 에너지·자원분야의 세계 4위를 기록하여 울산으로 이전한 이후 세계 에너지연구 허브기관으로 도약 중이다. 한국산업인력광단은 2016년 5월에 EPS Conference를 개최하였는데 고용허가제 송출국 중 11개국 대사 및 외교관 34명이 참석하였고 간담회, 현대중공업 등 견학, 울산시 주최 환영만찬 참석, 고래축제 참관 등을 통해 기관의 위상과 울산지역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재난안전기술을 해외에 보급하는 무상원조사업(ODA)을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태풍위원회에 대한 기여와 ODA 사업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UN으로부터 '킨타나상'을 수상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울산시에는 국제 컨벤션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 내에서 행사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은 소규모 국제행사부터 울산에서 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컨벤션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면서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

표 4-5-4 울산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기관 내부 회의 제외)	7	25	30	34	96
국제	2	20	9	9	40
국내	5	5	21	25	56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2	16	22	17	57
국제	1	6	4	5	16
국내	1	10	18	12	41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2	157	164	156	479
국제	1	9	16	12	38
국내	1	148	148	144	441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1. 추진 현황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기관 특성을 살린 다양한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수영장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개방(한국석유공사), 프로보노 KEEI 자원 봉사단 운영(에너지경제연구원), 전통시장과 자매결연(한국동서발전), 문화예술 행사지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랑나눔 헌혈캠페인(근로복지공단), 봉사단체 운영 및 범죄취약지역 순찰(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고용노동관련 무료 전화상담(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등이 전개되고 있다.

2. 특기사항

이전기관들은 태풍 차바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자발적인 복구활동 및 성금모금을 전개하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등은 태풍 차바의 피해복구를 위해 360명을 투입하였고, 음식물 제공, 상가와 주택 전기설비 복구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동서발전은 울산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장생포 고래마을 도시재생사업에도 참여하여 울산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사랑나눔 헌혈캠페인의 적극적 추진에 대한 공로로서 2017년 세계 헌혈의 날에 대한적십자사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제6절 향후 추진계획

한국석유공사는 울산시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면서, 울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과 연계하여 공사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오픈 캠퍼스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물류 부문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융·복합 연구 강화와 지역 유관기관 협력 연구사업 확대로 산·학·연 협력 연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역혁신역량제고를 위해 에너지산업 분야의 정책연구 강화, 교육·훈련 서비스 확대, 지역 에너지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동서발전은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동서발전 오픈캠퍼스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울산지역 마이스터고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무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2018년 하반기 동계계절학기 과정 개설을 위하여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및 대학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울산대학교 연계한 오픈캠퍼스(사업 대상은 울산대학교 공과대학 3, 4학년 25명이고, ‘18년 가을학기 정규과정)를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울산시, 사회복지협회, 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혜기관 및 지역주민이 소통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신규채용시 채용목표제 지속운영 및 지역인재 채용박람회에 참석하고 지자체 및 울산대학교와 공단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안전 및 노동관계법 교육을 연 4회 실시하고, 연중 사회적 경제기업을 위한 온라인 마켓 신규개설 및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역인재 육성에 있어 울산지역 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과 연계된 직무중심의 교육과정인 ‘오픈캠퍼스’를 운영하고, 7월부터 4주 과정으로 36시간, 주2회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도시 인근에 HRD콜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24명의 일자리 창출할 계획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UNESCAP/WMO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등과 국제세미나 개최를 통해 지역과 기관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역기관과 연계한 국내외 세미나를 개최하며, 재난안전이란 주제를 바탕으로 지역 기관과 연계하여 우수 연구사례 소개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제6장 강원 혁신도시

제1절 개관

강원혁신도시는 원주시 반곡동 일원(360만㎡)에 위치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주변 기업도시 및 농공·산업단지와 연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지역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 속의 생명·건강산업의 수도’라는 비전 아래 청정 환경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바이오, 신소재, 관광산업 등 4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건강·생명 관련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강원혁신도시는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공공기관(4,518명)의 이전을 목표로 수용인구(31,021명)의 혁신도시 개발사업(‘07년 1월~‘17년 12월)을 추진하였다. 또한 공공기관과 연관된 연구소, 기업, 업무시설 등을 유치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종합병원, 이전기업, 한전KPS, 지식산업센터 등을 유치하였다. 정주 현황은 주택 10,051세대 중 7,449세대가 입주완료(74%)하였으며, 학교(4개교), 주민센터, 지구대, 우체국, 소방서(‘18년 하반기), 교통(8개 노선 증설)등을 구축하였다.

이전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정착한 2016년부터 이전 근무자수와 예산합계, 지방세 납부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현재까지 이전한 12개 기관의 이전 근무자 수는 4,764명이며, 이 중 2,315명(전체 48.6%)이 강원도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기관의 총 예산은 67조 4,114억원이며, 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2.9조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1.0조원 등이 기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 납부액은 860억원 수준으로 2014년 12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표 4-6-1 강원 혁신활동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16,055	18,850	21,759	24,926	-
총 근무자 수	16,047	18,593	21,731	25,387	-
이전 근무자 수	1,076	1,901	4,259	4,764	-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	290	867	1,904	2,315	-
총예산(백만원)	58,382,234	60,476,612	61,310,764	67,411,445	-
지방세 납부액(백만원)	1,207	2,733	79,562	86,085	169,587

주 : 총 근무자수와 이전 근무자 수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17년 기준 총원 14,307명), 도로교통공단(‘17년 기준 총원 2,538명) 등과 같이 각 지역별로 근무자가 분포되어 있어 공단 본부의 총 근무자수는 일부에 불과함(국민건강보험공단 1,505명, 도로교통공단 263명).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 현황

이전 완료한 12개 기관의 지역 일자리 창출은 총 384명(정규직 223명, 비정규직 161명)이며, 전체의 67.2%인 258명이 학사급 인력으로 채용되었으며, 석·박사급은 총 26명으로 6.8%수준에 불과하였다. 2014년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전년도인 2016년 211명에 비해 173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으로 인해 정규직 신규채용이 중단된 것이 지역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2. 특기사항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도 15개 대학교와의 업무협약('17년 11월)을 통해 지역일자리 활성화 및 이전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였고, 지역 장애인고용공단과 공조하여 지역 장애인 청년인턴 고용을 확대하는 등과 같은 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17년 8월 23일).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강원도내 소속기관의 비정규직 11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하여 사회양극화 및 차별 해소에 본 공단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역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특강·실무실습 등의 교육과정 운영, 대학교 내 교과목 개설 운영, 빅데이터 실습교육 지원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도로교통공단 등은 지역 채용박람회 참여, 언론 홍보 활동 등을 수행했으며, 그 밖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등은 지역인재에 대한 가점 확대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수도권 중심으로 집약되어 있는 우수 인재들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도입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기관 및 지자체 주관 채용설명회는 특정기간(매년 10월~11월)에 중복 및 집중되는 관계로 일정 분산 및 불필요한 행사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표 4-6-2 강원 혁신활동도시 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59	67	174	223	523
학사	45	47	141	189	411
석사	1	4	11	12	28
박사	0	3	9	7	19
현지 비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2	17	37	161	217
학사	1	11	25	69	106
석사	1	3	5	6	15
박사	0	0	1	1	2

주 : 전체 채용자수와 학사·석사·박사의 합계가 맞지 않은 이유는 전문학사, 고졸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1. 추진 현황

혁신도시 내 유치한 기업의 수는 총 3개 기업으로 아직 이전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오래되지 않아 유치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2017년 기준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는 97건,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는 157건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지역 산업발전과 관련된 사업 또는 시책은 21건으로 이 중 개별기업 지원이 15건,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는 6건으로 나타났다.

2. 특기사항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는 평창올림픽 연계 지역 관광활성화 위한 관련 전문가 토론회(17년 12월 14일) 개최하였고,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도로교통공단은 차량 운행정시성 확보 및 3無(사망사고, 대형사고, 중상해사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강원도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매출액 향상(17,289백만원) 및 신규일자리 창출(25명)으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강원지역 광업계 기술협력 및 교류를 통한 지원강화로 국내 광업발전을 견인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경우, 법과학 분야와 학제 간 연구를 활성화하고,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와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기초 및 고등 교육환경의 구축, 강원도 내 산·학·연의 활발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대한석탄공사는 지역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옥 규모가 협소(본사 인력 100여명)하여 대상 인원을 확대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으로 교육과정 개발 담당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표 4-6-3 강원 혁신활동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유관기관 혁신도시내 유치 건수	-	-	-	3	3
기업	-	-	-	3	3
연구소	-	-	-	-	0
지원기관	-	-	-	-	0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5	22	30	97	154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9	16	58	157	240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5	16	15	21	57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	1	3	6	10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	5	15	12	15	47
지역 과학기술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	-	-
지역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2	0	1	2	5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1. 추진 현황

강원도 내에서 이전공공기관이 수행한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회의 개최 건수는 70건으로 2016년 59건에 비해 11건이 증가하였다. 이 중 국제회의는 18건, 국내 회의는 52건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 계약건수는 49건, 수행 중인 협력사업 수는 58건('17년 기준, 누적)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기관과 계약건수는 43건, 협력사업 수는 35건이며, 국외 기업, 기관과의 계약건수는 21건, 협력사업 수는 23건으로 국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의 비중도 국내 못지않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특기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시스템 바레인 수출은 국가 건강보험시스템을 타국에 수출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제54회 무역의 날에 300만달러 수출의 탑 및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이익 관련 국제활동 및 수출확대 가능성 높은 외교 사업으로 지정되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경우, 연구기자재 판매, 기술개발 전문 협력업체, 협력 연구기관 등 강원도 내 기술개발사업과 교류 허브역할을 위한 대상기관 및 인프라가 다소 부족하다.

표 4-6-4 강원 혁신활동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기관 내부 회의 제외)	28	37	59	70	194
국제	11	12	25	18	66
국내	17	25	34	52	128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38	41	42	49	170
국외	8	9	15	21	53
국내	25	27	30	43	125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26	24	41	58	149
국외	3	5	18	23	49
국내	23	19	23	35	100

주 : 매년 신규 건수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1. 추진 현황

이전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내 사회복지관, 육아원 등에 물품기증과 봉사활동 수행, 지역사회 소외아동 및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으로 체험학습 수행, 지역조직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원주 심향영육아원, 사회복지관 등에 물품기증 및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경기, K-POP 공연 관람지원 등을 수행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주시 삼송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농산물 판매 확대 및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도 나눔 활동, 헌혈 활동, 국제 경기대회 협력·지원 등 사회 봉사활동을 추진하였다.

2. 특기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회공헌 활동 노력을 인정받아 2016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최초로 원주시장 사회공헌 표창을 수상하였고, 2017년에는 제22회 원주사회복지대축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대한석탄공사는 공사 특성상 사회공헌 활동 예산 중 80% 정도를 연탄 지원에 사용하고 있어 신규 프로그램 발굴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또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지역사회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고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기에 협력구축을 통한 돌파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6절 향후 추진계획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는 강원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드라마틱 강원여행’ 테마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강원지역 전략산업인 강원관광 콘텐츠 사업 확충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사무직 공개채용 약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할 계획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강원도 소재 대학생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하여 맞춤형 멘토링 및 현장견학 실무체험 지원으로 지역 우수인재의 진로설정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지역혁신역량 제고와 관련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자원조사, 탐방이용행태 등의 분야에서 지역대학과 연구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의 협업을 통해 치료재료 보험등재 무료 컨설팅 등 지역사회 의료기기 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과 관련해서는 한국관광공사와 유관기관들은 평창올림픽 유산을 활용하여 사계절 관광목적지로서의 강원관광 홍보 및 관광상품개발, 대형 국제이벤트 유치 지원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기여·융화와 관련하여 이전공공기관들은 지속적인 지역 복지시설 후원 및 불우이웃 돕기를 수행하고, 지역내 복지지원센터와 나눔 협업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1사 1촌마을 지원, 사회공헌 협의체 공동 활동, 지역 군부대 지원 등 계속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 발굴할 계획이다.

제7장 충남 이전기관

제1절 개관

충남은 연기, 공주 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성됨에 따라 별도의 혁신도시가 조성되지는 않았다. 이에 2005년 10월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게 된 23개 정부소속기관과 20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외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외의 충남 지역에 8개 공공기관이 개별입지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전공공기관은 국립특수교육원(아산), 경찰교육원(아산), 경찰대학(아산), 경찰수사연수원(아산),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 한국서부발전(주)(태안), 국방대학교(논산), 한국중부발전(주)(보령)으로 전체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다만 충남의 경우 전체 이전기관 중 이전으로 인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교육원, 연수원 성격의 기관이 4개로 절반을 차지하며 경찰대학과 국방대학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이전이 완료되어 한국중부발전('15년 5월 이전)과 한국서부발전('15년 8월 이전)의 성과가 주를 차지한다. 2017년 기준 이전 근무자는 1,379명이며 이중 현지에 정착한 근무자는 626명이다. 이전한 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지방세 납부액은 2017년 71,980백만원이며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의 납부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4-7-1 충남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2,268	2,319	5,216	5,731	-
총 근무자 수	2,181	2,235	5,053	5,550	-
이전 근무자 수	118	401	1,011	1,379	-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	30	152	340	626	-
총예산(백만원)	7,831,784	5,785,992	10,119,356	11,393,217	-
지방세 납부액(백만원)	7,493	24,105	70,099	71,980	173,677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 현황

충남 이전공공기관이 창출한 신규 일자리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2014년 15명, 2015년 14명, 2016년 58명, 2017년에는 44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 채용인원은 2014년 35명, 2015년 17명, 2016년 33명, 2017년에는 55명에 이른다.

2. 특기사항

충남 보령시로 이전한 한국중부발전은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해 우대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 전담조직(국정과제기획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17년 8월)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발전소 주변지역의 농어촌 노인 대상 일자리 창출 MOU를 체결('17년 7월)하고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와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공동협력 MOU를 체결('17년 12월)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일자리 창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한국경영평가원 주관의 '18년 일하기 좋은 기업일자리 창출 부문 대상'을 수상('18년 4월)하였다. 충남 태안시 이전을 완료한 한국서부발전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내외 기반 구축을 위해 서부발전-지역대학-충남도 MOU, 서부발전-중앙대 벤처 및 창업분야 MOU 등을 체결하였고,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한 지역인재 채용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7 공공기관 일자리 콘테스트(민간일자리 부문) 최우수기관 선정'(12월 14일, 일자리위원회, 기획재정부), '2018 국가산업대상(고용친화부문) 수상(5월 17일, 산업정책연구원), '2017 대한상의·포브스 사회공헌대상(일자리창출 부문)'(9월 28일)을 수상한 바 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일부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입지한 기관의 경우 지리적 위치 및 업무 부하 등의 이유로 지역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지역인재 인정범위를 "대전 및 세종지역"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표 4-7-2 충남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15	14	58	44	131
학사	4	2	15	7	28
석사	11	12	43	37	103
현지 비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35	17	33	55	140
학사	35	17	33	55	140

제3절 지역혁신역량제고

1. 추진 현황

충남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혁신역량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초기 단계에서 추진이 용이한 교육·훈련서비스 제공이 활발하게 전개(2014년 14건, 2017년 41건)되고 있으며, 충남 소재 대학과의 산학연 협력 연구도 2014년 2건에서 2017년 9건으로 증가하여 지역혁신 역량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참여, 사업화 등 지역 산업발전 관련 사업 및 지역 문화관광 발전 관련 사업 추진 실적도 2017년 24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에 필수적인 유관기관 유치실적은 한국중부발전의 2016년 관련 기업 1건 유치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2. 특기사항

국립특수교육원 등 이전기관들은 은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공주대, 중부대, 건양대, 나사렛대, 한서대 등 지역대학과 함께 산학연 협력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중부발전 및 한국서부발전은 지역 산업발전, 문화관광 발전 및 특성화 등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과 산학연 협력연구를 진행중이다. 또한 한국중부발전은 지자체와 상생협력 모델 제시 및 탄소중립 사업 확산을 통해 '17년 환경부 자연환경대상 최우수상(2017년 11월) 및 충청남도 기후변화 우수상(2017년 11월)을 수상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경찰교육원, 경찰수사 연수원, 경찰대학, 국방대학 등 몇몇 이전기관들은 기관 속성상 전문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어 교육·연구분야 외에 지역혁신역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도적 한계가 있으며,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이전지역으로의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혜택(지방세 감면, 공단 토지 분양가 조정 등)이 필요함을 건의하였다.

표 4-7-3 충남 지역혁신역량 제고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유관기관 혁신도시내 유치 건수	-	-	1	-	1
기업	-	-	1	-	1
연구소	-	-	-	-	-
지원기관	-	-	-	-	-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2	5	8	9	24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14	13	26	41	94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5	6	11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	-	1	1	2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	-	-	4	5	9
지역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16	18	34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1. 추진 현황

충남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교류활동을 살펴보면, 2014년 이후 현지에서 개최한 국내외 세미나 건수,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약 체결 건수,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력사업 수행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지에서 개최한 국내외 세미나는 2014년 11건에서 2017년 17건으로,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약 체결은 2014년 5건에서 2017년 50건으로,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력사업 수행은 2014년 2건에서 2017년 44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 특기사항

천안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국내외 교류 역할 수행을 위해 국제교육팀을 한시조직으로 구성하여 국제교육을 통한 경제외교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WCO, GTI 등 국제기구 및 타국 지역훈련센터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국제교육 훈련기관으로 인증을 획득하였다. 또한, 국립특수교육원의 경우 매년 600명 이상의 특수교육 관련인이 참여하는 국제·국내 세미나 정기적 개최하는 등 교류 역할을 충실히 수행중이다. 한국중부발전 및 한국서부발전은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및 협력사업을 다수 추진하여 회사 핵심사업과 연계한 허브 역할을 수행중이다. 관련하여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중소기업과 해외 동반진출 성공적 추진 및 다방면으로

체계적인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추진의 성과로 2017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우수 기관에 선정('18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되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기관 이전 전 서울지역 학술·연구 교류활동에 비해 이전 후 지역적인 제한에 따라 국내 및 국제 교류행사 활동에 위축이 우려되어, 향후 이전지역의 교통, 생활편의시설 등 인프라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경우 개도국 세관직원을 위한 능력배양 세미나 수요는 증가하나,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한계가 있고, 새로운 관세행정 분야 국제훈련 교수요원 부족으로 특성화된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국제전문가 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4-7-4 충남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기관 내부 회의 제외)	11	11	12	17	51
국제	10	10	11	11	42
국내	1	1	1	6	9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5	13	43	50	111
국외	1	2	26	21	50
국내	4	11	17	29	61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2	2	19	44	67
국외	-	-	8	-	8
국내	2	2	11	44	59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1. 추진 현황

충남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기관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 소통(관세국경관리연수원), 사회복지시설 방문(국립특수교육원), 중, 고등학교 학생 대상 CSI 견학 프로그램 운영(경찰수사연수원), 교통안전 체험교육(경찰대학), 에너지 소외계층 전기 가스설비 점검 및 교체, 난방기 지원(한국중부발전), 지역 영세농가 연계 온실가스 감축사업 개발(한국서부발전) 등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경제활성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특기사항

한국중부발전은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통합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17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17년 10월) 및 대한적십자사 적십자 회원 유공자 금장(17년 10월)을 수상하였다.

제6절 향후 추진계획

관세국경 관리연수원은 연수원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민간개방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기업경쟁력 강화, 지역의 민간 관세행정파트너 대상 맞춤형 교육 모델을 수립하여 교육효과 극대화를 통해 지역 혁신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며, 직원의 국제협력업무 관심 고취시키기 위해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특수교육원의 경우 정규직은 대부분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어 비정규직에 한하여 인력 소요 발생 시 지역 인재를 적극 채용할 계획이며, 국방대학교도 기관정원 외 민간계약 근로자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대학은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해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APTA)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해외 교육기관과의 학술교류사업 확대,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다양화 등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국중부발전은 중부발전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내 일자리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계획이며, 지역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혁신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혁신운동」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K-장보고 프로젝트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 판로구축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한국서부발전은 지역인재 채용 우대정책과 함께 다문화가정 '지역상생 교육모델' 구축을 위한 「하모니 위피스쿨 클래스」를 시행하여 다문화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기관은 지역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 지역경제 성장 및 경쟁력 강화 사업(위피소셜플라워 사업, 가로림만어초시설 및 전복양식장 조성사업),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지역사회 나눔가게 설립 사업, 시니어 동고동락 사업), 지역사회 복지인프라 개선 사업(해피위피스쿨클래스 사업,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발전소 온배수 활용 지역 특성화 사업(온배수 활용 원예단지 조성사업, 온배수 활용 양식장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8장 충북 혁신도시

제1절 개관

충북혁신도시는 2006년 최종입지 선정을 통하여 2008년 부지조성공사가 착공되었으며, 2011년 이전대상 11개 기관 이전승인을 완료하고 2013년 12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이전을 기점으로 2018. 4월 총 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충북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용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11개 이전기관은 크게 IT·문화 기능군, 과학기술·공공서비스 기능군, 인력개발·교육 기능군으로 구분된다. 이전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지방세 납부액이 2014년 1,499백만원에서 2017년 3,063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4-8-1 충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2,755	3,451	3,586	3,663	-
총 근무자 수	2,618	3,268	3,397	3,965	-
이전 근무자 수	1,028	1,709	1,893	2,385	-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	294	408	434	770	-
총예산(백만원)	501,243	911,321	931,348	1,019,458	-
지방세 납부액(백만원)	1,499	2,645	2,957	3,063	10,164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현황

충북혁신도시에 창출한 신규 일자리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2014년 11명, 2015년 12명, 2016년 14명, 2017년에는 12명 등 총 49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 채용인원은 2014년 21명, 2015년 7명, 2016년 18명, 2017년에는 16명으

로 총 62명에 이르고 있다.

표 4-2-2 충북혁신도시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11	12	14	12	49
학사	8	8	9	10	35
석사	-	3	4	2	9
박사	-	-	-	-	-
현지 비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21	7	18	16	62
학사	15	7	16	7	45
석사	6	-	2	5	13
박사	-	-	-	-	-

2. 특기사항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인재 가점(서류전형에 3점 가산)을 신설하여, 채용확대 노력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지방이전 후 현재까지 지역인재 22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 위촉연구원(비정규직)으로 지역인재 10명이 신규 채용되어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다. 더불어 최근 2년(2016년~2017년)간 충북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합동 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우수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애로 및 향후 계획

한국소비자원은 이전지역 인재 채용목표제를 운영('18년 18%이상)하여 이전지역인재 채용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자 한다. 또한 이전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① 지역대학 연계 인재양성 관련 협약 체결, ② 지역 고등학교·대학교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③ 산·학 협력 현장실습제 운영, ④ 청년인턴제도 운영, ⑤ 그 외 이전 공공기관·교육기관 합동 NCS 교육 및 블라인드 채용 관련 설명회 실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1. 추진 현황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혁신역량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초기 단계에서 추진이 용이한 교육·훈련서비스 제공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매년 20~40여건이 수행되고 있고, 산학연 협력연구와 지역산업발전 사업추진 건수도 매년 5건 내외가 수행되고 있다. 혁신도시의 혁신역량 제고 및 자립성에 긴요한 유관기관의 혁신도시 유치도 미약하지만 2건이 이루어졌다.

표 4-8-3 충북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2	4	5	5	16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21	44	29	44	138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4	7	4	15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	1	2	1	4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	-	3	5	3	11
유관기관 혁신도시내 유치 건수	1	-	1	-	2

2. 특기사항

충북혁신도시에 입지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기술지원(이전) 사업으로서 스마트 안전사업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역기업에 공사가 보유한 기술(특허) 8건을 이전하였으며, 기업의 기술개발 6건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중 1건을 상용화 하였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이전지역 기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 기업 대상 CCM 인증제도 홍보 및 인증기업 교육 활동 등을 추진하여, 충북 소재 기업 6개社가 CCM 인증을 획득하였다.

3. 애로 및 향후 계획

충북혁신도시에 입지한 한국고용정보원은 지역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업체인 충북 기업 물품 구매 및 용역을 우선 구매하고 취약계층 진로지도서비스제공, 지역사회 창업·창직 교육지원, 미래직업체험 VR(가상현실) 부스운영을 통한 체험프로그램과 직업관련 특강실시를 확대하여 충북 지역 주민의 취업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1. 추진 현황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교류활동을 살펴보면, 2014년 이후 현지에서 개최한 국내외 세미나 건수,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약 체결 건수,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력사업 수행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지에서 개최한 국내외 세미나는 2014년 38건에서 2017년 66건으로,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약 체결은 2014년 58건에서 2017년 548건으로 증가하였고,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력사업 수행도 매년 200건 내외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4-8-4 충북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기관 내부 회의 제외)	38	87	61	66	252
국제	15	20	20	17	72
국내	23	67	41	49	180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58	499	569	548	1,674
국외	36	473	548	534	1,591
국내	22	26	21	14	83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218	148	195	214	775
국외	4	29	20	45	98
국내	214	119	175	169	677

2. 특기사항

한국소비자원은 국제 행사로는 개발도상국 소비자 정책 선진화 지원을 위한 개도국 소비자업무 담당 공무원 연수 일부 프로그램을 '15년 이후 매년 충북 본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농어촌 삶의 질 정책 발전을 위해 유관연구기관 간 '농어촌 삶의 질 정책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농업발전 및 농산물 판로확대 추진을 위한 생겨진천 농·특산물 소비촉진에도 협력하였다.

3. 애로 및 건의 사항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이전지역에서의 세미나, 심포지엄 유치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대중교통, 회의장(컨벤션센터), 숙박시설 등 인프라 확충 필요하다. 또한 충북혁신도시로 오는 시내버스의 체계가 미흡하고 시외버스 노선도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등 지역 접근성이 떨어져 현지 세미나 개최 시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참가자들이 우리원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1. 추진 현황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및 융화를 위해 사회봉사 활동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ICT 진흥기관 및 혁신도시 거점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원내에 ICT신기술 체험관을 구축하고, 이전지역(충북혁신도시) 내 초·중등학교 대상 교육 및 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으로 구성된 IT 나누미봉사단 활동을 통해 이전지역 사회복지기관 등을 대상으로 환경미화 등 봉사활동(10회)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2. 특기사항

한국소비자원은 충북혁신도시 이전 이후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사회 재정·물품 후원, 지역사회 자활근로사업 지원 등 지역사회 기여·융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

고 있다. 특히 지역 자활기업 카페 공사비 지원 등 지역 내 사회적 기업 활성화 지원 활동 등을 실시하였고, 이전지역 지자체(음성군)에서 사회적 취약기업 우수지원 사례로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제6절 향후 추진계획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이전기관과 지역대학이 함께하는 ‘오픈캠퍼스’를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오픈캠퍼스는 이전기관과 지역대학이 기관특성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지역대학의 학부생, 대학원생 대상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지역인재 양성사업이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 정부의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에 따라 공사는 2018년에는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18% 이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그 비율을 확대하여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으로 채용 비율을 확대하고자 한다.

지역혁신역량 제고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은 이전지역 기업 대상 CCM 인증제도 교육 및 인증 확대, 이전지역 기업 대상 교육(제품안전 기준, 소비자관련 법령 등) 강화 등 이전지역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기업 역량제고 지역산업 육성화 노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농산물 직거래 장터 시설 대여, 부서별 구매계약·용역 신청시 지역기업 우선이용 등 지역 물품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ICT전문기관으로써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ICT 신산업 육성, 콘텐츠 융합 신시장 창출, 산업의 SW융합 촉진 등 추진하고, 글로벌형 ICT 창업 지원, ICT 해외진출 확대, ICT 글로벌 국내외 거점 강화 등 ICT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기여·융화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는 충북혁신도시 내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시행, 공무원 대상 학습플랫폼인 나라배움터의 콘텐츠를 지역주민에게 공개, 우리원 시설의 일부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제9장

전북 혁신도시

제1절 개관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한 전북혁신도시는 2007년 4월 착공한 이후 10년간 사업을 시행하여 985만㎡의 부지조성을 마무리하고 2016년 12월 준공되었다. 2017년 기준으로 이전 근무자는 3,753명이며 이중 현지에 정착한 근무자는 2,037명이다. 2013년 7월에 이전을 시작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비롯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모두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별도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익산으로 이전하였다. 이전한 12개 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지방세 납부액은 2014년 1,980백만원에서 2017년에는 6,030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4-9-1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13,056	13,749	14,584	15,057	-
총 근무자 수	13,056	13,671	14,553	15,107	-
이전 근무자 수	2,509	3,233	3,442	3,753	-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 ¹⁾	-	1,761	1,818	2,037	-
총예산(백만원)	16,271,840	19,397,104	21,143,876	22,324,483	-
지방세 납부액(백만원)	1,980	3,277	4,650	6,030	15,937

주 : 통계집계가 어려운 일부기관(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외한 수치임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 현황

전북혁신도시에서 창출한 신규 일자리를 살펴보면, 현지 정규직 신규 채용인원은 2014년 79명, 2015년 83명, 2016년 108명, 2017년에는 191명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한

편 현지 비정규직 신규 채용인원은 2014년 147명, 2015년 301명, 2016년 248명, 2017년에는 670명에 이르고 있다²⁵⁾.

2. 특기사항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라북도가 주최하는 ‘잡영챌린지 공개오디션’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의 통로로 활용(2015년 1명, 2016년 2명, 2017년 2명)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 및 4개 소속기관(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과학융합인재 양성 교육(R&E), 중고등학생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자격증 실기 무료지도와 함께 지역대학의 관련학과에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채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지속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강조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농촌진흥청,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은 행정기관의 특성 상 특정 지역의 인재를 우대할 수 없어 현지 신규채용에 다소 한계가 있다.

표 4-9-2 전북혁신도시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79	83	108	191	461
학사	21	62	72	118	273
석사	6	7	7	9	29
박사	2	3	3	8	16
현지 비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147	301	248	670	1,366
학사	42	55	41	39	177
석사	2	4	2	43	51
박사	4	6	12	44	66

주: 일부 학력사항 파악이 어려운 경우 학력별 집계에서는 제외됨에 따라 총 신규 채용자와 학력별 채용자 총합 간 상이함에 유의

25)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채용 적용을 받는 전북 이전공공기관은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6개 기관이며, 2018년부터는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시행되어 채용규모가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제3절 지역혁신역량제고

1. 추진 현황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혁신역량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교육·훈련서비스 제공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2017년 기준 1,122건)되고 있으며,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도 2017년 기준 126건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반면, 지역의 산업, 과학기술 및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며, 혁신도시의 혁신역량 제고 및 자립성에 긴요한 유관기관의 혁신도시 유치는 현재로서는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2. 특기사항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읍에 구축한 전기안전 복합연구단지를 바탕으로 지역대학 및 기업 등과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전기안전 청년창업 센터를 통해 청년창업과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농촌진흥청은 2017년 전북대 등 22개 기관과 전북농생명연구협의체를 구성, 농생명 혁신기관 간 공동 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교류를 통해 3건의 국책사업을 기획하였다. 또한 한국농수산대학은 ‘스마트농업 융합기술 인력양성 1차년도’ 사업에서 최우수평가(A등급) 및 2차년도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라북도와 공간빅데이터 등 공간정보 관련 기술 공유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16년 공간정보 융복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행정 및 정책 사례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전북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국가차원의 업무인식이 강해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혁신사업 발굴에 일부 한계가 있으며, 지역발전사업을 위한 예산부족으로 인해 추진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표 4-9-3 전북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유관기관 혁신도시내 유치 건수	-	-	-	-	-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120	111	120	126	477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542	1575	387	1,122	3,626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1	1	2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	-	1	1	2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	-	-	-	-	-
지역 과학기술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	-	-
지역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	1	1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1. 추진 현황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교류활동을 살펴보면, 2014년 이후 현지에서 개최한 국내외 세미나 건수,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약 체결 건수,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력사업 수행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지에서 개최한 국내외 세미나는 2014년 55건에서 2017년 88건으로,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약 체결은 2014년 131건에서 2017년 215건으로, 국내외 기업·기관들과 협력사업 수행은 2014년 196건에서 2017년 204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 특기사항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추진해 온 개발도상국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2017년에는 남미, 중동지역까지 연수 대상국을 확대하는 등 국내외 교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 및 소속 4개 기관은 대륙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 KAFACI, KoLFACI)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농업 공동 현안 해소를 위한 다자간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4-9-4 전북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기관 내부 회의 제외)	55	50	59	88	252
국제	7	6	28	23	64
국내	48	45	32	66	191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131	162	183	215	691
국외	33	14	15	24	86
국내	98	148	168	191	605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196	216	211	204	827
국외	174	193	186	187	740
국내	22	23	27	19	91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1. 추진 현황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지역봉사에서부터 기관의 기능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저소득층 전기요금 채납세대에 대한 지정기부 및 노후 전기설비 개선(한국전기안전공사), 농업과학관 및 도서관 운영(농촌진흥청 및 4개 소속기관), 장애인단체·사회복지시설 내 실습장 생산물 후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한국농수산대학), 소외계층 복지 증진 프로그램 운영(국민연금관리공단), 북 콘서트 개최(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외계층 지원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개최(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 재화·서비스(용역) 우선구매(한국식품연구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특기사항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국민연금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 간 사회공헌 협업을 통해 연탄 및 김장 등 전북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제6절 향후 추진계획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기관 특성 상 인사 권한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차원에서 창출 가능한 지역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채용카페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북혁신 도시 내 대학·기관과 연계하여 정규 학점제 인정 과정을 개설하고, 전북도청 ↔ 전기안전교육원 ↔ 전북대 등 6개 학교의 산·학·관 협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및 4개 소속기관은 60여 개국에서 참여하는 제9회 세계농촌지도 포럼 개최(18년)를 통해 대륙별 농촌지도사업 협의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농촌지도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한국농수산대학에서는 교육기관·금융기관·산업기관 등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과 조속한 영농영어 정착의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연금제도 도입 및 확대를 준비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 운영노하우와 경험전파를 통해 연금정책의 한류 선도와 함께 공단위상 제고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지역 대학 졸업 인력채용 비율 의무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 출판·독서문화 활성화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협약 체결(17년 12월 28일)을 통해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전북지역 농어촌 및 농어업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과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은 미국농업연구청(ERRC) 등 해외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학술 교류 행사를 통해 지역과 기관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제10장 경북 혁신도시

제1절 개관

경북드림밸리로 불리는 경북혁신도시는 2005년 김천시로 입지가 선정된 이후 2015년말 기반 조성공사가 마무리되었다. 2013년 4개 기관(우정사업조달센터, 기상청 기상통신소, 조달품질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4년 4개 기관(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립종자원), 2015년 1개 기관(한국전력기술(주)), 2016년 3개 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이전함으로써 총 12개 공공기관이 경북혁신도시 내 이전을 완료하였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가 수반되었으며,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사업 발굴·추진, 지역 인재개발 장학금 기부,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마을 자매결연 일손 돕기, 복지시설 위문, 지역특산물 구매, 자원봉사활동과 지역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경북혁신도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인구유입 및 방문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1만 500개, 경제효과 1조원 및 지방세수 증대 100억원 등으로 예상되는 등 경북의 새로운 도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이전 공공기관은 지속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이전 공공기관별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전기관과 지자체 협업을 통한 기업과 대학교 유치를 촉진하는 등 이전기관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표 4-10-1 경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10,880	13,486	13,628	13,663	-
총 근무자 수	11,170	13,698	13,960	14,032	-
이전 근무자 수	1,649	4,580	5,441	5,520	-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	195	521	673	736	-
총예산(백만원)	10,973,569	13,481,733	12,511,144	12,032,044	-
지방세 납부액(백만원)	385	1,841	5,649	4,269	12,144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 현황

경북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이후 2014~2017년 간 총 948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다. 이전한 공공기관 수요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채용할당제 및 채용목표제를 통해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순차적인 공공기관의 이전과 채용할당 비율 등의 상향 조정에 따라 2014년 89명에 불과하였던 지역인재 채용은 2017년 현재 지역인재 398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었다.

2. 특기사항

이전한 2014년 공개경쟁 채용시험부터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전형단계별 가점을 부여하고 대구·경북지역 이전기관 합동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채용정보 제공에 노력하는 등 지역 인재 채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한국도로공사)하기도 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일부 공공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우 전국 단위에서 일괄 채용 후 전국에 배치하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전기관의 채용 특성 및 인재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인재 채용 기준의 하향 조정 및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주요 채용분야에 지역 내 양성 인력이 부족하여 관련 학과의 개설이 필요하다.

표 4-10-2 경북혁신도시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20	51	106	201	378
학사	16	40	77	167	300
석사	1	6	18	25	50
박사	3	6	8	4	21
현지 비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69	95	210	197	571
학사	69	93	151	136	449
석사	9	8	66	60	143
박사	8	6	12	2	28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1. 추진 현황

이전공공기관은 주로 지역 주민들의 교육·훈련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2014년 2건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서비스는 기관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2017년 18건까지 늘어났다. 지역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현장시설 견학 및 실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창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 추진(국립종자원),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통한 대학생 교육과 도로관리분야 토목직 공무원 및 업체 834명 대상 교육(한국건설관리공사), 중소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한 전문 교육훈련 지원(한국전력기술), 김천대와 교육훈련 공동 진행(한국도로공사), 중·고교 견학 및 진로체험 운영(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인재 교육 이외에 경북혁신도시 주요 공공기관과 김천시, 동반성장위원회, 김천상공회의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과 지역 미래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김천상생드림벨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별 미래 사업을 융합, 지역 신성장산업 육성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지역의 혁신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표 4-10-3 경북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제고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유관기관 혁신도시내 유치 건수	-	-	-	-	-
기업	-	-	-	-	-
연구소	-	-	-	-	-
지원기관	-	-	-	-	-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	-	-	-	-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2	5	12	18	37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	-	-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	-	-	-	-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	-	-	-	-	-
지역 과학기술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	-	-
지역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	-	-

2. 특기사항

교육·훈련서비스를 통해 기관 업무 소개 및 현장체험으로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

려 향후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시-동반성장위원회 상생협약 체결지원, 경북김천 공공기관 합동 동반성장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김천시로부터 동반성장 기여를 인정,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하였다. 경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 동반성장 포럼 개최, 산학연관'김천상생드림밸리'업무협약 체결 등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1. 추진 현황

UPOV 회원국 간 화훼작물과 산림작물의 국제심사기준 제·개정 논의를 위한 실무 기술회의 개최(국립종자원) 등 2017년 한 해 동안 52건의 현지 국내외 세미나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또한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 체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54건의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및 사업을 체결하였다.

표 4-10-4 경북혁신도시 국내외 교류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기관 내부 회의 제외)	-	-	52	52	104
국제	-	-	7	4	11
국내	-	-	45	48	93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21	16	28	53	118
국외	4	1	6	7	18
국내	17	15	22	47	101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4	3	1	1	9
국외	-	-	-	-	-
국내	4	3	1	1	9

2. 특기사항

국제 교류 과정에서 품종보호기관 간 협력을 통한 한국의 품종보호제도 운영 홍보에 기여하였다(국립종자원). 특히 김천구미 KTX역 인근의 경북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외 참석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

역 중소기업과의 기술·사업개발 협력으로 신재생분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기여하였다(한국전력기술).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1. 추진 현황

이전 공공기관은 매년 지역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봉사, 자매결연을 통한 농촌 가꾸기 및 일손 돕기 등의 지역 밀착형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매년 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 위문, 사랑의 연탄나눔, 김천 행복나눔 사랑의 후원금 전달(한국건설관리공사), Ex-사랑기금(한국도로공사)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을 후원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 마을 가꾸기 행사 참여, 1사1촌 자매결연마을 농촌일손 돕기 등 지역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편 기관 방문의 날을 지정하고 견학 및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기관 알리기를 통한 지역 내 융화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기타 지역 특산물 구매, 재능 기부, 법률상담 서비스, 인재양성재단 장학금 기탁 등 지역사회 기여 활동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 특기사항

소외된 이웃에 대한 도움의 손길과 함께 기관 도서관 개방, 인문학 강연 개최, 작은 음악회 개최 등 지역민의 교양·문화 증진에도 기여하였다.

제6절 향후 추진계획

이전 공공기관은 향후에도 채용 시 지역인재 부여 가점 상향조정 및 할당제, 지역밀착 채용설명회 개최, 지역대학 연계·협력 강화,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脫스펙 블라인드 채용 실시 등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 인재개발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기여할 것이다.

전문 교육기관 건립을 통한 실무 인력배출,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과 관련

지역혁신사업 추진, 지역 창업선도대학 창업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활동 강화를 통해 지역혁신역량 제고에도 노력할 것이다. 신산업육성, 일자리창출, 사회공헌, 열린 혁신, 중소기업지원 등 분야별 분과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활동 강화할 것이며, 공공기관 연계사업을 통해 지역 내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현장실무 교육 등을 지원할 것이다.

세계 각국과의 업무협약, 공공기관 주관 세미나 및 워크숍의 김천 개최하도록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다양한 국내외 선진 문화 전파에 기여할 것이다. 김천 상생드림밸리 구성 및 동반성장 업무협약 체결 등 국내외 교류 허브역할을 수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다양한 국내외 선진 문화 전파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전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다. 공공기관 시설 개방 및 지역 주민 초대 행사 개최, 소외 계층에 대한 후원 및 봉사, 지역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산물의 우선 구매 등 다방면에 걸쳐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한다.

제11장 경남 혁신도시

제1절 개관

경남 혁신도시는 진주시 충무공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 약 4,078천㎡에 2030년 계획인구 38,000명으로 계획되었다. 용지비 4,261억원, 조성비 6,316억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약 1조 577억원으로 사업시행은 LH(49%), 경남개발공사(43.8%), 진주시(7.2%)가 집행하였다. 2013년까지 상·하수도 시설을 완공하고 김시민대교(‘10년 2월), 진주IC~혁신도시 연결도로(‘14년 12월), 국도 2호선 연결도로(‘17년 9월) 등 주요 진입도로 개설과 함께 2015년 12월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경남도는 진주 혁신도시를 통해 정주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정착과 도시 안정화, 혁신도시 중심의 산학연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신지역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경남 전체가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11개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수·인구·취업 등 서부경남의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함에 있어 이전 공공기관의 균형발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전공공기관은 2013년 1월 중앙관세분석소를 시작으로 2016년 7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까지 이전 근무자수와 예산합계, 지방세 납부액이 증가하였다. 현재까지 이전한 11개 기관의 이전 근무자 수는 3,333명이며, 이 중 1,032명이 경남도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기관의 총 예산은 16조 9,428억원이며, 이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이 9.9조원, 한국남동발전이 6.3조원 등이 기관 예산의 비중이 높다. 지방세 납부액은 730억원 수준으로 2014년 354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표 4-11-1 경남 혁신활동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12,696	12,796	14,117	14,794	-
총 근무자 수	13,076	13,139	14,655	15,395	-
이전 근무자 수	1,023	3,117	3,366	3,333	-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	102	807	1,008	1,032	-
총예산(백만원)	15,703,665	14,786,544	15,225,856	16,942,891	-
지방세 납부액(백만원)	35,387	39,500	63,757	73,040	211,684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 현황

이전 완료한 11개 기관의 지역 일자리 창출은 총 186명(정규직 132명, 비정규직 54명)이며, 전체의 47.5%인 63명이 학사급 인력으로 채용되었으며, 석·박사급은 총 16명으로 8.6%수준에 불과하였다. 일자리 창출 인원은 2014년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전년도인 2016년 143명에 비해 43명에 증가하는 수준을 보였다. 즉, 초기 이전 시기에는 증가한 반면, 그 이후에는 기관별 정원 등의 제약으로 인원 증가는 다소 정체를 보이고 있다.

2. 특기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년부터 총 채용 인원 중 이전지역 인재를 10% 이상 채용하였으며 경남도 내 8개 대학과 지역우수 인재 양성 협약 2017년 12월 체결하였다. 한국남동발전은 지역인재 정규직 채용의 경우 2014년 이전지역인재 채용할당제(10%)를 실시하여 2018년에는 20%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매년 일자리콘서트를 시행하여 지역인재 채용에 힘쓰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2014년 이후 총 64명을 임용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역인재 채용(19명)과 이전지역 대상 채용박람회, 캠퍼스 리쿠르팅 및 멘토링 등을 실시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를 위하여 경남지역 인재를 89명 채용하고, 진주 지역 창업보육센터 개설('15년) 및 창업 초기 세라믹 기업 12개사 대상 기술지원을 통하여 총 41명의 신규 고용 창출 등 창업기업을 지원하며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 대상으로 현장 및 장비실습 위주 훈련과정 운영 등을 통하여 2015년 이후 370명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268명 취업을 달성하였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5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 준정부기관 중 지역인재 채용 실적 전체 3위를 달성하였으며, 이와 관련 2017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지역일자리 창출부문에 있어 할당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지역의 제한된 인재 풀 내에서 우수인재 유치가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2018년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18% 준수에 어려움 있다. 또한 기관의 특성상 전문성을 요구하는 석사학위 이상의 연구직이 임용에 어려움이 있기에 기관이 소재한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표 4-11-2 경남 혁신활동도시 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57	49	85	132	323
학사	33	33	55	63	184
석사	5	5	5	3	18
박사	2	1	1	2	6
현지 비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14	66	58	54	192
학사	7	34	28	33	102
석사	4	29	21	11	65
박사	0	0	0	0	0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1. 추진 현황

혁신도시 내 유치한 기업의 수는 총 2개 기업으로 아직 이전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오래되지 않아 유치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2017년 기준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는 41건,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는 23건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지역 산업발전과 관련된 사업 또는 시책은 76건으로 이 중 개별기업 지원이 73건, 지역 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는 3건으로 나타났다.

2. 특기사항

한국남동발전은 발전산업 육성·지원 공동협력협약체결('14년 6월 2일) 등을 통하여 이전기관, 공공기관, 지역대학 등 13개 기관이 발전 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2016년에는 지역산업 진흥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16년 9월 28일)하였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지역산업 육성사업 등 지역 소재 기관·기업과 협업을 통해 2016년 대한민국 방산부품·장비대전에서는 부품국산화 5개 우수업체 기품원장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K21변속기 핵심부품 6종 국산화 성공(경남일보, 2015년 4월 30일), 24개 방산 유관기관·업체 부품국산화 협업 결의(세계일보, 2015년 10년 28일), 2016

대한민국 방산부품·장비대전 개최(한경, 2016년 6월 1일) 등 다양한 성과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2017년 혁신도시투자유치설명회에서 혁신도시 기업 유치 우수사례로 홍보되었으며 악셀, 에코파워텍 등 유치기업의 경우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 에코파워텍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국방기술품질원은 부품국산화,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경남지역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기술원의 사업구조 상 대부분의 과제를 경쟁입찰을 통하여 수주함에 따라 경남지역 소재 산학연 협력 연구 및 기업지원사업 등의 추가 수주에 다소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표 4-11-3 경남 혁신활동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유관기관 혁신도시내 유치 건수	-	3	1	2	6
기업	-	3	1	1	5
연구소	-	-	-	1	1
지원기관	-	-	-	-	-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2	16	31	41	90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9	14	15	23	61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27	70	66	76	239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1	2	2	3	8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	26	68	64	73	231
지역 과학기술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	-	-
지역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1	2	3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 수행

1. 추진 현황

경남도 내에서 이전공공기관이 수행한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회의 개최 건수는 45건으로 2016년 56건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나 2014년 2건보다는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중 국제회의는 7건, 국내회의는 38건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 계약건수는 98건, 수행 중인 협력사업 수는 513건으로 나타났다.

2. 특기사항

한국세라믹기술원은 경남 소재 핵심 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연구협력 추진 및 민간수탁, 공동연구사업으로의 확대 추진('17년 4월, 언론 보도)하였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진주시와의 협업으로 국가항공산단과 연계한 기업지원 수행을 위하여 「우주부품시험센터(271억원)」 및 「항공전자기 기술센터(252억원)」를 유치하였고, 산업단지공단과 협업으로 제조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사무소 개소를 추진 중이며,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MoU('17년 7월 19일), 삼성창원병원과 MoU('17년 9월 27일) 등 의료산업 관련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하였다.

표 4-11-4 경남 혁신활동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기관 내부 회의 제외)	2	13	56	45	116
국제	-	8	14	7	29
국내	2	5	32	38	77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70	97	80	98	345
국외	9	20	18	18	65
국내	61	77	62	80	280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508	545	528	513	2,094
국외	488	510	505	487	1,990
국내	20	35	23	26	104

주 : 매년 신규 건수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1. 추진 현황

이전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내 사회복지관, 육아원 등에 물품기증과 봉사활동 수행, 지역사회 소외아동 및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으로 연탄나눔, 김장한마당 등 지역조직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에너지빈곤층 건물효율 개선, 전기미공급가구 태양광발전기 공급,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및 환경개선과 행복홀씨 입양사업 Project(환경공헌사업), 경남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 드림job 프로젝트, 진주시 문화예술 지원(오페라, 영화상영, 벚꽃시장, 축

제지원) 등의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중증장애인 복지관인 행복한 남촌마을에 김장김치 나눔행사, 봉사활동 및 기부 등을 통해 매년 꾸준한 지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명절사랑나눔활동, 재사용물품 나눔활동, 한부모가정 자녀를 위한 교복지원금 전달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 특기사항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사회공헌기금 기증, 중진공 음악회,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중진공感 장학생 지원에 총 3천 770만원을 투입하여 모금, 콘서트 개최, 캠페인 실시, 멘토링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세라믹기술원 내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 참여인력은 2015년 223명에서 2017년 25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총 봉사활동 시간 또한 2015년 1,430시간에서 2017년 1,492시간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017년 12월 14일 농림수산물식품부로부터 농촌사회 공헌인증을 획득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자체확보 예산비중이 높은 소규모 기관으로 오픈캠퍼스 등 시간·예산이 대량 투입되는 사회공헌사업 추진에 애로점이 발생한다. 이에 기관별 예산 및 규모를 고려하여 사회공헌체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제6절 향후 추진계획

2018년도 모집인원의 18%에서 2022년도 이후 30%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정책을 준수하여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삶의 질 만족도 향상, 신규 기업체 유치 등 경남만의 창의적이고 지속 실행 가능한 중장기 계획을 점차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지역이 산업육성을 위해 행사 및 심포지엄을 적극적으로 개최해 나갈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기술원 인력을 활용한 재능 기부 모델 개발, 유리·도자기 체험활동 전개, 기술원 견학 프로그램 홍보 및 확대 시행 등 기술원 주력 사업에 맞는 사회공헌 모델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사회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농촌과 상생을 위한 마을 지원 및 농번기 일손돕기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자 한다.

제12장 제주 혁신도시

제1절 개관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강력한 동력과 함께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주요 기능인 국제교류와 교육·연수 기능을 기회로 교육과 관광이 어우러진 국제교류의 중심이자 교육연수의 메카로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혁신도시는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면적은 1,135천㎡에 달하며 계획인구는 약 5,100명, 조성사업비는 2,939억원이다.

제주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9개 기관으로 현재 공무원연금공단 등 7개 기관의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은 청사 관계로 2018년 7월 이전을 시작하여 2018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원 수('17년 총원 548명, 이전인원 272명)나 예산('17년 22조 5,389억원) 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국립기상과학원이 그 다음이다. 파악된 이전공공기관의 총 지방세납부액은 2014년~2017년간 507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에는 5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의 납세액이 급증하여 2017년에는 약 164억원을 기록하였다.

표 4-11-1 제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기관 정원	851	966	974	943	-
총 근무자 수	977	1,125	1,133	1,066	-
이전 근무자 수	188	692	694	935	-
이전 근무자 중 현지 정착자 수	52	222	300	355	-
총예산(백만원)	18,309,437	19,935,252	20,692,474	22,598,730	-
지방세 납부액(백만원)	5,009	14,180	15,151	16,357	50,697

주 : 2018년 말 이전 완료 예정인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은 제외한 수치임.

제2절 지역일자리 창출

1. 추진 현황

총 9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7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은 총 126명으로 이 중 비정규직이 10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국립기상과학원 10명(박사급 3, 석사급 7)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채용한 116명의 인력이 학사이하(전문학사 및 고졸포함)로 파악되고 있다.

2. 특기사항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인턴채용을 통해 전환심사 후 정규직으로 3명과 체험형 인턴으로 1명을 채용하였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사무보조원, 시설관리원 등 21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제주 이전 이후 시설관리직원 등 45명을 비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였다.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제주지역 인재를 정규직으로 1명 채용한 바 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시설, 미화 등 직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37명까지 지역주민으로 채용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제주지역인재로 정규직 18명 포함 총 19명을 채용하였고, 국세상담센터는 정규직으로 현지인재를 1명 채용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지역인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비율이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비율보다 극히 낮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지역인재 확대 채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4-11-2 제주 혁신활동도시 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5	5	6	5	21
학사	5	5	6	5	21
석사	-	-	-	-	-
박사	-	-	-	-	-
현지 비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	28	48	18	11	105
학사이하	23	47	15	10	95
석사	3	1	3	-	7
박사	2	-	-	1	3

제3절 지역혁신역량 제고

1. 추진 현황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역혁신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연구, 지역산업 특성화 등에 노력하였다. 사업내용으로는 제주지역 ICT 중소기업대상 국제협력사업 설명회개최, 이전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선도대학육성 시범사업 유치, 미래지능정보화사회 소양교육 등을 추진하였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매주 수요일마다 지역관광지 현장학습을 기획·추진하였고, JDC 및 KCTV와 합동으로 글로벌 아카데미를 운영하였다. 국제공무원교육원은 ‘국제교류 교육연수 폴리스’라는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의 개발목표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지역호텔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의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내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제주지역 기상기후 응용서비스 강화를 위한 융합워크숍 개최, 제주관광레저 기상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 항공기상예측정보 산출 등을 통해 지역에 친화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여 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역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상담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2. 특기사항

지역 내 이전 공공기관들은 특강 개방 및 횡수 증대, 지역기업의 활용 및 협력, 지역사회와의 소통의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대주민 서비스 제공 및 지역에 대한 이해도 증진 등을 통해 지역친화적인 기관으로 정착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일부 이전기관은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기관의 역량을 지역 내에서 발휘할 기회가 적은 편이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경우 분원이 제주로 이전하여 기관의 특성 상 제주지역에 핵심역량을 집중하여 발휘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경우 핵심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운영기관이지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

육프로그래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또한 세금과 관련한 교육을 개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지역의 특성으로 주민수요가 많지 않아 개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표 4-11-3 제주 혁신도시 지역혁신역량 제고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유관기관 혁신도시내 유치 건수	-	-	-	-	-
기업	-	-	-	-	-
연구소	-	-	-	-	-
지원기관	-	-	-	-	-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건수	-	-	-	-	-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건수	149	155	152	171	627
지역 산업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	-	-	-	-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	-	-	-	-
사업화 등 개별기업 지원	-	-	-	-	-
지역 과학기술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1	2	3	3	9
지역 문화관광 발전 관련 시책(사업) 추진 건수	147	183	194	200	724

제4절 국내외 교류 허브 역할수행

1. 추진 현황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제교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대학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ICT 및 전자정부분야 국제회의 개최, ITU교육센터 유치 신청 등을 추진하였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지역의 관광산업과 1차 산업의 진흥을 위해 지역 내 기관들 및 기업들과의 협력에 노력해 왔으며, 주변 숙박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국립기상과학원은 다양한 국내회의, 국제회의 및 워크숍 유치를 통해 기상분야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국내외 워크숍 추진으로 제주지역을 국내외 교류도시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애로 및 건의사항

국제회의 개최 시 중앙부처와의 절충 및 제주지역의 특성으로 접근성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경우 연간 시설물 가동률이 높아 지역주민들에게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고, 육지부로부터의 접근성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는 편이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서귀포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중 유일한 연구기관으로 나머지 이전공공기관과의 업무성격이 상이하여 협업에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전공공기관들이 다양한 국내외 행사를 서귀포로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표 4-11-4 제주 혁신도시 국내외 교류허브 역할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현지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건수(기관 내부 회의 제외)	25	22	42	24	113
국제	7	8	11	6	32
국내	18	14	31	18	81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계약 체결 건수	11	5	5	3	24
국외	1	0	0	0	1
국내	10	5	5	3	23
국내외 기업, 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건수	1	1	1	1	4
국외	0	0	0	0	0
국내	1	1	1	1	4

제5절 지역사회 기여·융화

1. 추진 현황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서귀포 지역 중학생 30여명 대상 미래지능정보화사회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서귀포 지역 초중학생 10여명 대상 진로체험 “꿈길”을 운영하였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모범납세자 등에게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개방하고 있으며, 제주도 인재개발원과 인재개발 분야의 상호발전과 교육관련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서귀포시 청소년 진로멘토단 활동을 실시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역사회 시너지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지역학계 등과의 협업네트워크 구축으로 제주 이전기관 및 지역대학 합동 지역인재 채용확대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인근 숙박업소(호텔)와의 MOU 체결, 직업체험 등 자유학기제, 평생교육 등을 다수 실시하였다.

2. 특기사항

공무원연금공단은 정부권장정책 등의 준수를 통한 지역인재 채용,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장학금 기부 및 봉사활동 등에 주력하였고, 채용 목표 달성 및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 올레 등에서 선정한 우수 봉사기관 선정, 정부권장정책 만점 획득 등 소기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3. 애로 및 건의사항

공무원연금공단은 재화 등 우선 구매 및 지역 산업 육성 등에 있어서는 비율상 큰 수치를 획득하지 못하였고, 국제교류형 혁신도시의 특성상 지역산업과의 연계성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적인 역할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6절 향후 추진계획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역선도대학육성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지자체 및 대학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지원을 할 예정이며, ICT 및 전자정부 분야 국제회의 개최, ITU 최고위교육센터(CoE) 유치를 추진하고자 한다. 국제공무원교육원은 지역별 납세자세법교실 및 찾아가는 세법교실을 확대할 예정이며, 제주도 내 직능단체 및 상인연합회 등이 세법교실 개설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한국기상과학원은 박사 후 과정, 객원·초빙·방문연구원 도입을 통한 지역 연구원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인재 연구인력 확보 및 학계와의 협력증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제주도를 세계적인 대기과학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제주지역 글로벌 인지도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8년에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인재 6명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제주 도내에서 인사혁신처 합동 주관 국제 연금컨퍼런스를 개최(18.9월)할 예정이며, 유관기관 간 협력사업으로 이전공공기관 간 시설공유, 지역 내 숙박업소 이용, 유관기관 협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